

翰林科學院叢書 123

ARCTIC OCEAN

한반도의 격동 1세기 반

권력, 이데올로기, 민족, 국제관계의 교착

(下)

梁 好 民 지음

DERATION

One and a half Centuries
Conflict in the Korean Peninsula:
Interaction of Power, Ideology, Nation and International Relations

Ho-min Yang

CHINA

EAST SEA



한림대학교 출판부

한반도의 격동 1세기 반

권력, 이데올로기, 민족, 국제관계의 교착

(下)

獻辭： 남편의 연구생활에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아내의 영전에
이 책을 바친다.

한반도의 격동 1세기 반

권력, 이데올로기, 민족, 국제관계의 교착

(下)

梁 好 民 지음

One and a half Centuries

Conflict in the Korean Peninsula:

Interaction of Power, Ideology, Nation and International Relations

Ho-min Yang



한림대학교 출판부

| 저자의 말 |

우리는 지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나날이 높아져가는 핵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다. 핵전쟁하면 우리와는 무관한 다른 나라 일로만 알고 있던 터에 민족의 일대 위기의 그림자가 엄엄한 현실로써 한반도에 드리우게 되었다. 1945년 8월 이 나라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그 해방의 결과가 이런 것이 되리라고 예측했던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실로 몽상조차 하지 못했던 비극이다. 위기의 평화적 해결은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예의 모색하고 있지만 낙관적 예측보다도 비관적 우려가 앞선다.

사태가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원인은 남-북의 분단, 6·25남침전쟁, 북한의 ‘남조선해방’ 전략과 전술의 일관된 고수, 북한체제의 가장 가혹한 군사적 전체주의화(化), 국제적으로 핵(核)국가의 지위를 차지하려는 김일성-김정일의 야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북한정치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저자는 8·15해방 이후 60여년에 이르는 북한 공산주의의 행태를 논구(論究)하는 계획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 공산주의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의 뿌리가 되어있는 국제공산주의(코민테른) 특히 스탈린주의를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3·1운동 전후하여 한인공산주의자들의 주요한 활동무대가 되었던 시베리아, 만주(뒤에는 연안)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에 도달했다. 그리하여 집필의 계획을 확대하여 이 부분의 연구를 간단하게나마 중점적으로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한국 민족운동에서 두 개의 기둥을 형성하고 있던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의 관계, 그리고 민주주의(특히 해방 후 북한이 주장하는 것)의 이론과 실천문제에 관해서도 적지 않게 논급했다.

이렇게 계획을 수정하다보니, 연구의 공간은 북한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까지 논급하게 되었고 이론적 고찰의 테마는 정치에서의 전략, 권력, 이데올로기, 민족의 제(諸) 문제 및 국제 관계까지를 포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저서의 분량이 예상외로 많이 늘

어나 하는 수 없이 초고 중에서 많은 부분을 삭제하고 중점적으로 간추려 서술했다. 이에 덧붙여 일언하고자 하는 것은 해방 후의 한국의 민족문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6·25사변’ 즉 ‘한국전쟁’이다. ‘한국전쟁’은 휴전 후 근 60여년의 세월이 흘러갔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계속 이어져 논저들이 출판되고 있다. 그것은 “한국전쟁”이 국제정치에서 중대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본서에서는 이 문제의 서술은 생략했다. 그 까닭은 이미 저자는 방일영 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아 2004년 『38선에서 휴전선으로』(총 503페이지)라는 제하의 한국전쟁 연구서의 일단을 내놓은바 있어, 중복되지 않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끝으로 밝혀둘 것은 장기 계획 하에 약 5~6년에 걸쳐 이 책을 완결해보려는 것이 필자 본래의 계획이었다. 그 사이에 부분적으로 끝낸 집필부분은 비매품이며 한정판인 북한 전문연구지인 『北韓學報』에 그때그때 축소하여 실렸었다. 물론 거기에 실린 논문들은 그간 집필 중인 저서의 한 부분을 압축한 것임을 밝혔고 본 저서는 그 후 초고는 많이 수정하고 보완했다. 그런데 저자는 이전부터 앓고 있던 만성적 척추협착증이 악화되어 일을 하기가 아주 어렵도록 심대한 타격을 받아왔다. 이 밖에도 여러 질환으로 인해 가끔 입원생활도 해야 했다. 근년 초 언제부터인가 푹푹 앉지만 왼쪽 눈의 시력이 갑자기 떨어져 책이나 잡지를 보기가 아주 힘들어졌고, 게다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망증이 겹쳐 본인이 쓴 원고도 어디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때가 비일비재하였다. 원고는 1996년경부터 집필에 착수하여 몇 년 동안에 걸쳐 간신히 약 절반을 끝냈었다. 그 후 건강상의 악조건과의 악전고투 끝에 마감 날짜를 10년 가까이 지연시켜 이제 겨우 연구계획을 끝내고 보니 심신의 해방감을 만끽하게 된다.

본서는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의 연구비 지급의 결실로써 이루어진 점을 밝히면서, 그 동안 본인을 성의껏 후원해주신 한림과학원에 마음으로부터의 감사를 드려

마지않는다. 현승중 전 원장 때부터 현 김용구 원장에 이르기까지 관계 교수, 직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도움이 없었더라면 본서는 햇빛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김용구 원장은 너무나 오랫동안 본서의 탈고 지연을 양해해주시었고 비호해
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진정으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바이다.

끝으로 본 저서가 한반도의 정치사 특히 격동하는 한반도의 근대-현대의 동태를
연구하려는 후학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2010년 2월

梁 好 民

| 차례 | (下)

저자의 말 • iv

제9편 국제공산주의에서의 인민민주주의

제1장 인민민주주의의 전기(前期) 이론.....	721
제1절 “특수한 형태”의 민주주의 • 721	
제2절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로 가는 길 • 729	
제2장 인민민주주의의 후기(後期) 이론.....	736
제1절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 선언 • 736	
제2절 소련의 경험을 모델로 • 742	
제3절 흐루시초프—브레즈네프 시대의 공산권 내 동요 • 749	
제4절 국제적 격동 속에서 공식화(公式化)된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이론 • 755	
제3장 모택동의 신민주주의론.....	761
제1절 “새로운”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 • 761	
제2절 ‘민족자본가 계급’의 “2중성”과 “이용” 가치 • 767	
제4장 인민민주주의를 둘러싼 중 - 소의 대립.....	774
제1절 ‘모택동사상’에 대한 스탈린의 견제 • 774	
제2절 사회주의적 개조의 방법 : 설득이나 강제냐 • 781	
제3절 “사회주의에로의 이행(移行)” 시기의 통일전선 문제 • 788	
제4절 긴장, 타협, 대립의 교착(交錯) • 798	
제5장 북한에 미친 중 - 소 논쟁의 여파.....	808
제1절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론에 대한 입장 • 808	
제2절 “사회주의적 개조”와 통일전선의 전술 • 813	
제3절 사활(死活)을 건 “반당 종파 분자들”과의 투쟁 • 818	
제4절 “사회주의 건설” 노선의 선언 • 822	

제10편 중-소의 대립(對立)과 북한의 곡예(曲藝)

들어가는 말 : 중-소 논쟁의 발단과 결말	831
제1장 대전 후의 중-소 밀월(蜜月)	836
제1절 “소련을 배우자!”	836
제2절 중-소 동맹의 안팎	840
제2장 중-소 대립의 저류(底流)	845
제1절 스탈린의 모택동 불신(不信)	845
제2절 코민테른의 실패	849
제3장 중-소 논쟁의 전개(展開)	853
제1절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이 물고 온 파란	853
제2절 중-소의 혁명전략 상의 대립	857
제4장 북한의 대(對) 중-소 관계에서의 특수성(特殊性)	862
제1절 한반도의 전략상의 위치	862
제2절 중-소의 북한 공산주의에 대한 기여(寄與)	864
제5장 중-소 환경 속의 북한	868
제1절 한국전쟁 개입 후의 중공의 영향	868
제2절 휴전 후 중-소의 원조 경쟁	870
제3절 스탈린 격하(格下) 운동과 김일성정권의 위기	874
제6장 중-소 분쟁이 북한에 준 충격	879
제1절 자주노선(自主路線)의 모색	879
제2절 김일성의 양다리 걸치기 외교	882
제7장 중-소의 파경(破鏡)과 북한	888
제1절 소련의 대중(對中) 원자탄 기술제공 거부	888
제2절 김일성의 고뇌(苦惱)	891
제3절 소련공산당 제22차 대회	894
제8장 김일성의 친(親) 북경으로의 급선회(急旋回)	898
제1절 기점(起点) : 중-인(中-印) 국경분쟁과 쿠바 위기	898

제2절 소련의 대(對)북한 원조내막 폭로(暴露) • 903	
제9장 후루시초프의 실각 이후의 정세변화..... 907	
제1절 소련공산당 새 지도부의 대북 접근 • 907	
제2절 중국 대륙: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 910	
제10장 결론 : 주체사상의 본성(本性)..... 916	

제11편 북한에서의 개인숭배(個人崇拜)

제1장 개인숭배란 무엇인가? 923	
제1절 “수령 없는” 독재체제의 출범 • 923	
제2절 원형(原型) : 스탈린 개인숭배 공격 - 후루시초프의 “비밀연설” • 929	
제3절 모택동(毛澤東) 개인숭배의 비판 - 등소평의 “역사결의” 방식 • 934	
제2장 개인숭배 공방(攻防)속의 소용돌이	
- 모스크바와 북경(北京)의 대 숙청극 - 941	
제1절 해빙과 결빙 • 941	
제3장 평양의 우상화(偶像化) 선풍(旋風) : 그 목표·구도(構圖)·전술..... 950	
제1절 모스크바 방식을 추종 • 950	
제2절 이데올로기의 위치 설정 • 955	
제3절 우상화의 상승과 확대 • 960	
제4장 계속 부는 평양의 우상화 선풍..... 967	
제1절 스탈린의 “괴뢰”에서 “민족의 태양”으로 • 967	
제2절 대(大) 숙청과 지도자의 신격화(神格化) • 972	
제3절 권력에 만취(滿醉) • 978	
제5장 장년기의 “수령”에 대한 신격화(神格化)..... 983	
제1절 인민민주주의의 “세계적 선구자(先驅者)” • 983	
제2절 “사회주의 대건설”과 전체주의 폭주(暴走) • 987	
제6장 개인숭배의 세습화(世襲化)..... 994	

제1절 출생의 수수께끼	• 994
제2절 김정일 우상화의 취약성(脆弱性)	• 1000
맺는 말 : 강성대국(强盛大國) - 군사적 강국 건설	 1005

제12편 ‘자주적’ 대외정책의 노선(上)

들어가는 말	 1011
제1장 “3대혁명”이란 무엇인가	 1014
제1절 김일성의 정의(定義)	• 1014
제2절 확대되는 “혁명”의 개념	• 1018
제2장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	 1021
제1절 “계속혁명”론의 논리	• 1021
제2절 모택동의 신기축(新機軸) - “사회주의의 총 노선”	• 1023
제3절 ‘대약진’ 운동의 질풍 속에서	• 1026
제3장 ‘대약진운동’과 ‘천리마운동’의 공통특징	 1030
제1절 강제된 정신주의	• 1030
제2절 “정치선행”과 “군중노선”에 의한 총동원체제	• 1035
제3절 “기술 신비주의”에 대한 공격	• 1038
제4장 김일성의 “공산주의”관	 1042
제1절 “두개의 요새”론	• 1042
제2절 공산주의로 가는 지름길 - ‘인민공사’의 이상과 환상	• 1044
제3절 스탈린과 모택동 사이에서	• 1047
제5장 ‘3대혁명소조(三大革命小組)’의 발기(發起)	 1051
제1절 “소조”의 은밀한 조직	• 1051
제2절 확장하는 조직망	• 1054
제3절 간부정책(幹部政策)의 딜레마	• 1057
제6장 ‘3대혁명소조’에 대한 평가	 1059

- 제1절 '위로부터의' 비판 • 1059
- 제2절 드러난 북한농촌의 빈곤상 • 1061
- 제3절 다그치는 "속도전"(速度戰)－마지막 탈출구 • 1064
- 제4절 맺는 말 : '3대혁명 소조운동'이 남겨 놓은 것 • 1066

제13편 '자주적' 대외정책의 노선(下)

제1장 해소되지 않은 한반도의 냉전

- 전사(前史)의 간략한 회고 - 1071

- 제1절 세계는 변하고 있는데 • 1071
- 제2절 질정을 달리는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과 정치공세 • 1075
- 제3절 대남정책의 2중 구조 • 1077

제2장 '자주적 대외정책' 노선의 원점(原點) : '주체사상' 1082

- 제1절 '주체사상'의 정의(定義)와 위상 • 1082
- 제2절 위성국에서 '자주노선'의 선언으로 • 1086
- 제3절 '자주노선'의 이념설정 • 1092

제3장 대외정책의 기본원칙 1097

- 제1절 출발점 : "조선혁명의 이익" • 1097
- 제2절 목표 : '남조선혁명'과 '남조선해방' • 1099
- 제3절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견지 • 1102
- 제4절 초(超)반미주의의 고수 • 1106
- 제5절 동요하는 중-소의 대미정책 이용 • 1108

제4장 대외정책 범주(範疇)의 확대 1112

- 제1절 "일본 군국주의 재생"(再生)에 대한 투쟁 • 1112
- 제2절 '북방 3각 관계'의 불협화(不協和) 활용 • 1115
- 제3절 비(非)동맹운동에 대한 지지 성원 • 1118
- 제4절 "지배주의"(支配主義) 단호 반대 • 1123
- 맺는말 : 벽에 부딪힌 "지배주의 반대" 원칙 • 1126

제14편 핵(核)무기의 어두운 그림자

- 다가오는 파멸의 위기의식 속에서

들어가는 말.....	1133
제1장 김일성의 야망.....	1135
제1절 소련으로부터의 핵기술 지원 • 1135	
제2절 김일성의 집념(執念) • 1139	
제3절 사찰 금제(禁制)의 성역(聖域) • 1143	
제2장 버랑 끝으로 향하는 핵외교(核外交).....	1147
제1절 개방 · 교류에 대한 공포 • 1147	
제2절 강경 · 온건 정책의 사이클 • 1151	
제3절 「제네바 합의」의 성립과 무산-상실한 평화의 기회 • 1155	
제3장 햇볕정책과 김정일의 대응.....	1158
제1절 김대중정권의 출발 • 1158	
제2절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 • 1161	
제3절 김정일의 신(新) 군사파시즘과 부시의 강경책 • 1166	
제4절 대북 유화정책(宥和政策)의 평가 • 1169	
제4장 핵위기(核危機)의 증폭.....	1174
제1절 켈리 특사의 평양 방문 • 1174	
제2절 고농축(高濃縮)우라늄 계획 공방(攻防) • 1179	
제3절 제2차 핵 위기의 진감(震撼) • 1183	
제4절 미국 대통령에 대한 내외의 견제 • 1187	
제5장 '6자회담'으로 가는 길.....	1193
들어가는 말-요약된 회고 • 1193	
제1절 전기침(錢其琛)의 은밀한 방북(2003.3.8) • 1195	
제2절 전(錢)-김(金) 대화의 중심문제 • 1197	
제3절 '3자회담'의 난항 • 1198	
제4절 '3자회담'의 미봉적 타협 • 1201	
제6장 '6자회담'의 명암(明暗).....	1204

제1절 회담의 개막	• 1204
제2절 북한대표의 좌충우돌	• 1205
제3절 반(反) 외교적 안하무인의 행동	• 1207
제4절 청천벽력의 '2·10선언'(2005년)	• 1209
제7장 출구(出口) 안 보이는 북핵(北核)의 미로(迷路)	 1212
제1절 "미국과는 전쟁상태에 있다"	• 1212
제2절 「9·19 공동성명」의 무지개	• 1213
제3절 '원조제공'(미)과 '핵무기 포기'(북), 어느 것이 먼저인가	• 1215
제4절 6자회담의 새로운 장애	• 1217
제8장 머나먼 비핵화(非核化)의 길	 1220
제1절 북한의 핵실험이 몰고온 충격파	• 1220
제2절 '2·13합의'에서 '10·3합의'으로	• 1222
제3절 비핵화는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 1224

제15편 남·북한의 만성적 대결상태는 언제까지

—50년 냉전에서 얼어붙은 빙벽의 체제

제1장 스탈린 사후에 제시된 김일성(金日成)의 민족-계급정책	 1229
제1절 역사적 전반기(轉變期)의 정책 전환인가	• 1229
제2절 "부르조야 민족주의"냐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냐	• 1235
제2장 민족이론의 새로운 포장(包裝)	
-“전사회의 혁명화”, “전 사회의 로동계급화”란	 1243
제1절 사람의 개조(人間改造) : “공산주의의 새 인간”으로	• 1243
제2절 “주체적 민족관”(主體的 民族觀)의 제창	• 1249
제3장 햇볕정책에 대한 북의 맹공격	 1256
들어가는 말—「남-북공동선언」의 함정	• 1256
제1절 “개혁-개방” 정책에 대한 사상적-군사적 도전	• 1259
제2절 군사 절대 우선주의의 천명(闡明)	• 1263

제3절 김대중정권에 대한 “혁명적 사상공세”	• 1270
제4절 “부르조아 사상 문화의 침투를 철저히 막아내”	• 1275
제4장 “우리민족끼리” 함께 미궁(迷宮)으로 가는 길	 1278
제1절 3개 신문 「공동사설」이 지향하는 것	• 1278
제2절 “남조선 보수대연합을 짓부수자”	• 1283
제5장 “남조선해방” 전략의 불변성(不變性), 전술의 다양성(多樣性)	 1287
들어가는 말	• 1287
제1절 일관된 투쟁노선	• 1289
제2절 “우리민족끼리”의 허상(虛像)	• 1296
제16편 자유와 평화에 대한 근본적 장애:	
북의 ‘미제국주의론’—그 구조와 목표	
들어가는 말	 1301
제1장 레닌의 영향 : 제국주의의 도식화(圖式化)	 1303
제1절 독점자본주의란 무엇인가	• 1303
제2절 전쟁과 평화공존의 문제	• 1306
제3절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타당성 재고(再考)	• 1312
제2장 김일성-김정일의 반미원리주의(反美原理主義)	 1318
제3장 김정일의 “미 제국주의론”의 자체수정	 1325
제4장 민족의 평화적 통합(統合)은 가능한가?	 1332
제1절 재고 : 민족이란 무엇인가?	• 1332
제2절 김정일정권 하의 민족통합이 뜻하는 것	• 1339
제5장 북한의 변화에 대하여	 1342
제1절 역사의 드라마	• 1342
제2절 세습독재정권에 대한 지원(支援)의 함정	
—불변의 대남 초강경정책을 꺾어오면서	• 1347

제3절 '강성대국(强盛大國)'의 논리 • 1352

찾아보기..... 1357

• 일러두기

1. 본서의 내용은 모두 16편으로, 한 편을 여러 장으로 나누었다. 독자의 편의를 고려 책의 내용을 ‘장’, ‘절’ 등으로 세분했으며,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문보다 큰 활자로 표시했다.
2. 참고문헌 중 단행본은 『 』 안에 신문, 잡지, 팸플릿, 방송사 등의 이름은 < > 안에 넣었다. 그리고 논문 또는 논설, 연설문, 성명서, 결정서, 조약명, 비망록, 결의문, 격문, 담화, 선언서, 법령, 포고문 등은 「 」 안에 삽입했다.
3. 기관(단체)명, 신생국가명, 정당, 사회단체, 군사조직, 회담, 동맹체 등의 고유명사는 고딕체로 표시하였다.
4. 필자가 어떤 사건, 상황, 인물 등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간단히 보충한 부분은 [] 안에 삽입하였다.
5. 외국의 출판물, 인명, 고유명사(칭) 등과 외국에서 유입된 말이 순 한글로 표기된 것은 눈에 띄기 쉽도록 이탤릭체로 처리하였다. 외국인 인명 표기는 그 나라 원음을 가급적 따르려 하였으나, 영어 발음으로 보편화된 것은 그것을 따랐다. 예 : 스탈린, 소비에트, 트루먼 등
6. 중국, 일본의 한자로 된 지명, 인명 등의 고유명사는, 중국어의 경우는 종래대로 한국어 원음으로 표기하였다. 아직 중국어 원음은 우리에게 생소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인명, 지명 등은 일본 발음에 따라 표기하였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7. 인용문은 “ ”로 표시하되, 인용문 속에 들어 있는 인용문(또는 낱말)은 ‘ ’ 안에 넣었다.
8. 자칭, 타칭 또는 세칭 등 사실 여부가 확실치 않은 사항은 “ ”로 표시하였다.

제9 편

국제공산주의에서의 인민민주주의

제1장 • 인민민주주의의 전기(前期) 이론

제2장 • 인민민주주의의 후기(後期) 이론

제3장 • 모택동의 신민주주의론

제4장 • 인민민주주의를 둘러싼 중-소의 대립

제5장 • 북한에 미친 중-소 논쟁의 여파

제1장

인민민주주의의 전기(前期) 이론

인민민주주의의 전기(前期) 이론

제1절 “특수한 형태”의 민주주의

국제공산주의운동에 있어서는 모든 정치권력의 성격을 *맑스-레닌주의*의 사회발전 이론에 의하여 설명하고, 계급투쟁의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규정하는 것이 일관한 전통으로 되어왔다. 그러므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반제-반봉건적 민주개혁을 수행했다는 인민정권)에 관해서도 엄밀한 *맑스-레닌주의적* 성격규정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이 과도적(過渡的) 정권의 성격에 대해 *맑스-레닌주의적* 규정을 내린 것은 이 ‘위원회’가 조직된 지 10년이 지난 후, 즉 1956년 6월에 열린 제3차노동당대회 때의 일이었다. 이 대회에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민주개혁이 실시된 결과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인민민주주의 제도가 확립되고 조국통일의 기초가 될 민주기지가 창건되었으며 사회주의의 기틀을 건설하기 위한 조건이 마련되었다.1409)

김일성의 이 말에 의하면 북조선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민주개혁을 위한 제반 법령을 공포 시행되기 시작했던 1946년 3월부터 이미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혁명단계에 들어선 것이 된다. 그렇지만 그 당시 김일성 자신이나 당(黨) 이론가들은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를 “인민민주주의” 정권으로 규정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북조선 인민위원회’로, 이것이 다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그 명칭을 바꾸어 나가는 동안에도 그들은 이것들의 특징을 일괄적으로 “민주정권”이니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니 또는 “새 형태의 인민 정권”이니 하는 등의 표현으로 정의했을 따름이다.

1409) 『김일성선집』 4, 1961년 판, p. 446.

1948년에 이르러 비로소 동(東)유럽과 관련하여 “인민적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김일성의 문언(文言)에 간혹 오르내렸으나¹⁴¹⁰⁾ 이것조차도 소련이나 동(東)유럽에서 수입한 용어의 생경(生硬)한 번역이라는 어감을 풍기고 있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이 말에다 *맑스-레닌주의적* 내용을 부여하거나 또는 독자적 이론을 전개할 만한 지적능력도 *이데올로기* 진술의 자유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1952년 2월 1일에 이르러 김일성이 도-시-군 인민위원장 및 당(黨) 지도일꾼 연석회의(連席會議)에서 인민민주주의의 성격에 관해 언급했을 때도 자기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모택동(毛澤東)의 논문에 기대어 설명했다.

모택동 동지가 『인민민주주의 독재』에 관한 자기의 저서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민정권은 반동적 친일파 및 기타 제국주의 주구 민족 반역자들과 또한 제국주의 세력을 부식하려는 지주 및 예속 자본가들에게 한해서는 독재를 실시하며 인민 자체에 한하여서는 민주제도를 실시한다.¹⁴¹¹⁾

인민민주주의 이론의 생성, 발전이란 면에서 볼 때 북한의 지적(知的) 토양은 불모지(不毛地)였다. 사상-이론-정책 제시에 있어서 북한은 당시 소련의 엄격한 사상적 통제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들(김일성을 포함)의 *맑스-레닌주의* 이론에 대한 교양이 극히 미숙했던 때문에 인민민주주의에 관한 자기 자신의 해석을 시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들은 이론의 도입, *이데올로기*의 해석 면에서 완전히 *모스크바*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중국 연안(延安)에서 들어온 모택동의 이론이 부분적으로 소개되고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북한의 특수한 조건에 겹쳐 소련과 동(東)유럽에서도 1948년 말까지는 인민민주주의에 관한 체계적 이론이 나오지 못했고, 공산당의 최고 간부나 학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속출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의거할 만한 단일적 공용(公用) 이론을 찾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소련권(蘇聯圈)에서 인민민주주의 통일된 이론이 정립된 것은 1948년 12월 5일

1410) 『김일성선집』 2, 1954년 판 p. 66, p. 154, p. 204 참조.

1411) 『김일성선집』 4, 1954년 판, p. 45. 1967년에 출간된 『김일성저작선집』 1, P. 334에서는 모택동의 이름은 削除되고 이상의 말을 자기 자신의 생각인 양 改作했다.

‘불가리아노동자당’ 제5차 대회에서 진술한 *디미트로프*(Georgy Dimitrov)의 연설이 있는 뒤의 일이었다. 스탈린의 위성국(衛星國) 체제의 확립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인민민주주의의 이론은 소련에서 전-후 두 기(期)를 거쳐 전개된 후 단일적인 관용 이론으로써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즉 전기는 1945년부터 1948년 말까지이며, 후기는 1949년 이후의 시기이다. 이제 저자는 북한을 떠나 소련 내에서 이 이론이 전개된 과정을 개관(概觀)하기로 한다.

국외자로서 관찰할 때, 인민민주주의 이론은 간단한 내용을 번잡하고도 격식에 매인 *레닌-스탈린*의 개념으로 분장(扮裝)하여 설명한 당략적(黨略的) *이데올로기*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이론의 전개과정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전변(轉變)하는 혁명 전략으로 관철되어 왔다. 따라서 당시의 북한의 정치 체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전 공산권 내에 나타났던 인민민주주의 이론과 실천과정을, 지루하지만 분석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연합국들 간에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나치* 독일군의 점령 하에 있던 동(東)유럽 일대는 독일군이 패망하자 붉은 군대의 점령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결과로 이 지역 여러 나라에는 1944~1945년에 걸쳐 새 정권들이 수립되었다. *모스크바*의 지배하에 있던 이 정권들의 성격은 얼마 후 그 대변인들에 의하여 흔히 “신민주주의”, 때로는 “인민민주주의”라고 규정되었다. 인민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것은, 익살맞게도 1948년 여름 *코민포름*(Cominform)에 의하여 인민민주주의의 적으로 낙인을 찍힌 *유고슬라비아*의 *티토*(Broz J. Tito)가 1945년 ‘*유고슬라비아 조국전선*’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의 일이었다.¹⁴¹²⁾

초기에는 인민민주주의라는 용어보다는 이미 1930년대에 모택동이 정식화(定式化)했던 “신민주주의(新民主主義)”라는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1948년에 들어서면서 ‘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이렇다 할 공적 설명이 없는 채 대부분 “인민민주주의”라는 용어로 바뀌었고, 그 후 동(東)유럽과 아시아의 공산당 정권들은 인민민주주의를 공용 명칭으로 확정했다. 그런데 동(東)유럽의 공산주의자들이 “신민주주의”란 용어를 모택동으로부터 차용했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당시 그들은 중국 공산주의 운동에 관한 자세한 지식이 없었고, 설사 있었다고 해도 아직 연안(延

1412) Z. K. Brzezinski, *The Soviet Block-Unity and Conflict*, Harvard University Press, 1967, p. 25.

安)에 집거하고 있던 모택동의 권위를 빌리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¹⁴¹³⁾

동(東)유럽의 새 정권들에 있어서는 1917년의 러시아와는 상이한 조건과 역사적 배경에서 진행되고 있던 자국의 혁명적 변혁을 맑스-레닌주의의 국가-사회 이론의 테두리 안에서 설명하여야 하는 것이 당면한 이데올로기적 과제였다. 그 당시 맑스-레닌주의 이론의 최고 권위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스탈린 자신이 새 정권들의 성격에 관해 확실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모호하게 동(東)유럽의 “민주화”란 말만을 강조하고 있었다. 모스크바로부터 명확한 지시가 없었던 때문에 동(東)유럽의 공산주의자들도 공산당 및 비(非)공산주의 정당의 연립정권에 의해 운영되고 있던 새로운 국가형태에 대해 통일적인 맑스-레닌주의적 규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소련군의 진주(進駐)를 배경으로 하여 연립정권(聯立政權)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디미트로프(불가리아), 비에루트 및 고물카(폴란드), 라코시 및 레바이(헝가리), 고트발트(체코슬로바키아) 등 각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와 연관시켜 새 정권의 본질을 설명하려고 시도는 했었으나 그들의 설명은 단편적(斷片的)이었고 이론적 명확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헝가리 공산당’의 지도적 이론가로 지목되고 있던 레바이(Josef Revai)가 후에 와서 당(黨) 간부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한대로, 초기에 “당은 인민민주주의의 성격과 그 미래의 발전에 관해 통일적이며, 명석하고 정밀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¹⁴¹⁴⁾ 그 주요한 이유는 맑스-레닌주의에 있어서의 이른바 “과도기(過渡期)”에 관한 불분명한 해석과, 미-영 등 서방측과의 특수한 국제관계에서 오는 제약(制約) 때문에 스탈린이 그의 위성국들에 대한 명확한 성격 규정을 보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와의 중간에는 하나의 “과도기”가 가로놓여 있으며 이 과도기

1413)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은 ‘소련공산당’의 東유럽 공산당정권들에 대한 호칭이다. 1947년 11월 주다노브(Andrei. Zhdanov)는 코민포름 기관지에 기고한 자기의 논설에서 “신민주주의”(New Democracy)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말렌코프(Georgy M. Malenkov)도 그해 12월 같은 말을 사용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슬란스까(R. Slanski)는 “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People's Democracy)란 용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었다. A. Zhdanov, 「The International Situation」, 《For a Lasting Peace, For a People's Democracy》誌 1947년 11월 10일호 참조. 동지 12월 1일호의 Georgy M. Malenkov, 「Activities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B)」 참조.

1414) Jozsef Revai, 「The Character of People's Democracy」, 《Foreign Affairs》誌, 1946년 10월호 p. 147.

정권의 본질이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라는 규정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 이론에서는 언제나 핵심적 명제(命題)로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주장의 연원은 맑스에 있었다. 즉 그는 1875년 『고타 강령비판(綱領批判)』에서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와의 사이에는 전자의 후자(後者)로의 혁명적 전화(轉化)의 시기가 가로놓여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시기는 정치상의 과도기에 해당하여, 그 국가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에 지나지 않는다”¹⁴¹⁵⁾고 간단하지만 유명한 공식을 제시했던 것이다.¹⁴¹⁶⁾ 그 후 맑스의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론은 러시아의 레닌과 스탈린에 의하여 부르주아지에 대한 폭력적 억압의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해석되었다.

레닌은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에는 다양한 정치형태가 나타날 것이지만 “그 본질은 오직 하나, 즉 프롤레타리아트(노동자계급)의 독재일 것이다”라고 단언하고, 독재는 부르주아지(자본가계급)를 억압하기 위한 폭력 조직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맑스주의를 단순히 계급투쟁의 이론에다 국한시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계급투쟁의 시인을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의 시인(是認)에까지 확장하는 사람만을 맑스주의자”라고 인정했다.¹⁴¹⁷⁾ 레닌은 10월혁명 후 러시아에 수립된 소비에트 제도를, 맑스가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의 전형(典型)으로 보았던 ‘빠리 꿈’과 동일시했다.¹⁴¹⁸⁾ 그 이후로 빠리 꿈=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소비에트 제도라는 등식이 공산주의자들 사이에 널리 인정되었고 이것은 스탈린에 의하여 계승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동(東)유럽 각국에 수립된 정권들의 성격을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라고 규정할 수는 없었다. 첫째로는 이 지역에 수립된 정권들은 히틀러의 침략에 반대하여 항쟁한 사회민주당, 농민당 등 비(非)공산주의 정치세력과 공산당과의 연립정권이었던 때문이다. 공산당은 유고슬라비아를 제외하고는 어디서

1415) Karl Marx, *Kritik des Gothaer Programms* Dietz Verlag(Berlin), 1972, p. 33.

1416) 맑스가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것은 1850년에 나온 논문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에서였다. 2년 후 와이데마이어(Weydemeier)에게 보낸 서신에서 다시 이 말을 사용했지만, 1875년의 『고타 綱領批判』을 집필할 때까지 20여년 동안이나 이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 개념이 뜻하는 바는 명석치 않았다. 맑스의 사후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라는 개념의 해석을 둘러싸고 레닌과 카우츠키를 비롯한 맑스주의자들은 세기적 논쟁을 일으켰고 맑스진영의 대 분열을 일으켰다.

1417) V. I. Lenin, *Collected Works*, Vol. 25, p. 413 및 p. 444.

1418) V. I. Lenin, *Collected Works*, Vol. 33, p. 54.

나 소수파였다. 그렇지만 이들은 소련군의 지원하에 연립정권 내에서 거의 모든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자본가들도 한동안 연립정권 내에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노동계급의 대다수는 사회민주당의 조직 하에 있었으며(*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등) 농민들은 반공적(反共的)인 농민당(農民黨)들을 지지하고 있었던 것이 실상이었다(*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등).¹⁴¹⁹⁾

그리하여 대전 후의 특수한 정세 하에서 수립된 이 독특한 형태의 새 정권들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개념화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맑스-레닌주의의 *이데올로기*가 해결해야 할 이론적 과제가 되었다. 여기서 *모스크바*와 동(東)유럽의 공산주의자들이 새로이 내세운 개념이 곧 “인민민주주의”였다.

인민민주주의에 관한 초기 이론의 공통점은, 첫째로 인민민주주의 제도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도 *부르주아* 독재도 아닌 “제3의 형” 내지는 “새로운 형”의 정권 형태이며, “*소비에트* 제도”와는 서로 다르다는 점에 있었다. 이를테면 *디미트로프*는 1946년에 언명하기를, “*불가리아*는 *소비에트* 공화국이 되지 않고 인민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는 정부의 기능은 광범한 인민의 대다수-노동자, 농민, 직인(職人), 그리고 인민의 지식분자들에 의해 수행될 것이다. 이 공화국에서는 어떠한 독재도 없을 것이다”¹⁴²⁰⁾라고 주장했다. *폴란드*의 *비에루트*는 “이 특수한 제도는 어떤 기성의 *모델*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소비에트* 사회주의제도와 유사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서방의 고전적(古典的) 경제제도(자본주의)와 유사한 것도 아니다”¹⁴²¹⁾라고 쓴바 있다.

둘째로, 이들은 인민민주주의 제도를, 사회주의로 이행하는데서 나타나는 하나의 과도기적 정권형태라는 것을 시인하고는 있었다. 그러나 인민민주주의 제도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를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에 넘어가는 독특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디미트로프*의 말을 다시 빌리면 *불가리아*의 “사회구조, 그리고 그의 국내적, 국제적 정세에 관한 과학적 분석에 의하면 *불가리아*는 독자적인 길을 따라, 즉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 없이도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빈번히 증명했고 그 기

1419) 이에 관해서는 H. 씨튼-와트슨, 『소련공산주의 역사-레닌에서 흐루시초프까지』(梁好民, 朴浚圭 譯, 中央文化社, 1960년, pp. 234~235.

1420) 《For a Lasting Peace, For a People's Democracy》, 誌, No.3에 실린 Chervenko의 논문에서 引用.

1421) Brzezinski, 앞의 책, p. 16에서 引用

초를 마련했다”¹⁴²²⁾고 했다. 이에 관해 보다 명확한 설명을 시도한 공산주의자는 쾰물까였는데 그는 인민민주주의에 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었다.

사회주의로 발전하는 폴란드의 길…… 이 개념은 폴란드의 발전에서 폭력적 혁명적 봉기는 필요치 않고, 가장 곤란한 과도기의 정치 형태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의 필요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바로 우리의 경제 제도가 사회주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의 많은 특성을 가지는 것처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많은 요소와 함께 자유주의적 *부르윌라 민주주의*의 많은 요소를 갖추고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 형태 및 우리의 사회 제도를 우리는 “인민민주주의”라고 부른다.¹⁴²³⁾

폭력혁명과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 없이도 사회주의로 이행(移行)할 수 있다는 이상의 일련의 관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정통적 혁명이론에 배치되는 것이었다. 동(東)유럽의 공산주의자들은 그 논거를 소련의 후원(지시)을 받고 있는 통일전선 산하의 연립정부들은 “계급의 적(敵)”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평화적으로 사회주의의 토대를 닦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찾고 있었다. 한편 인민민주주의를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라고 규정하지 못한데는 몇 개의 정치적 고려가 감추어져 있었다.

첫째는 인민민주주의 제도를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체제로 규정한다면, 소련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발전 법칙상 객관적 조건이 아직 미숙한 소련의 위성국들을 *프롤레타리아트*독재의 국가인 소련과 동위(同位)의 수준에다 놓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선진적 소련의 권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숨어 있었다. 둘째 이유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는 결국 공산당독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동(東)유럽 제국의 민족주의적 정감(情感)과, 특히 통일전선 내에서의 비(非)공산주의자들의 협력을 손상하게 된다는 우려(憂慮)였을 것이다.

셋째는, 스탈린의 지배를 원치 않는 일부 동(東)유럽 공산주의자들은 대(對) 파시스트 전쟁 시기에 형성한 민족통일전선을 기반으로 하여 인민민주주의 정권이 수립되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그들은 소련군이 해방전쟁에서 수행한 역할과

1422) *Saturday Evening Post*, 1947년 7월 26일자.

1423) ゴムルカ, 「人民民主主義—ポランドの平和的發展の道について」, 『東歐における人民民主主義の諸形態』, pp. 57~58.

인민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는데서 소련이 제공한 전후(戰後) 지원을 부차적인 것으로 시인은 하면서도 표면상 과대하게 평가하지는 않았다. 그 까닭은 동(東)유럽의 전후 변혁은 동(東)유럽 각국의 민주주의 정당들이 어디까지나 전쟁 중의 우의와 단결을 토대로 하여 “자발적(自發的)”으로 조직한 연립정부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는 필요지 않다는 인식을 내외에 퍼뜨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관해서는 곧 뒤에 재론하기로 한다.

인민민주주의 제도에 관하여 누구의 것보다도 권위 있는 설명은 당연히 소련의 학자들로부터 나와야 했다. 소련에서 인민민주주의의 이론적 해명을 처음 시도한 사람은 *바르가*(Evgenii S. Varga), *프라이닌*(I. P. Trainin), *레온체프*(Andrei Leontiev) 등 당대(當代) 제1급의 이론가들이었다.¹⁴²⁴⁾ *바르가*는 인민민주주의를 “새로운 형의 민주주의”라고 부르면서 그 범주를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알바니아*에 국한시키고 그 특징을 *맑스-레닌주의적 사회 경제이론의 배경에서* 설명하였다. 그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⁴²⁵⁾

(1) 사회 경제제도 : 이 나라들에서 봉건적 잔재(殘滓), 즉 대토지 사유제(私有制)는 청산되었다.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는 아직 존속하고 있지만, 공업-운수-신용 등의 대기업은 국유화되었다. 이 나라들은 일반적 의미의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다.

(2) 정권의 성격 : 국가의 권력(강압 기구)은 “독점적 부르주아지의 이익이 아니라

1424) 헝가리 출생의 *바르가*는 소련 경제학계의 泰斗로써 ‘世界政治經濟研究所’ 所長의 지위에 있었으며, *프라이닌*은 ‘科學アカ데미 法律研究所’ 所長이었고, *레온체프*는 저명한 경제학자였다. 이들은 1947년 거의 같은 시기에 東유럽에 출현한 새 정권들에 관한 논문을 *소바에트* 학술지에다 발표했다. *바르가*는 자기의 논문의 제목 그대로 이 새 정권들을 “새로운 형의 민주주의”(Democracy of a New Type)라고 불렀고, *프라이닌*은 “특수한 형태의 민주주의”(Democracy of a Special Type)이라고 규정했다. *바르가*와 *프라이닌*의 논문은 Samuel L. Sharp의 논문 ‘New Democracy: A Soviet Interpretation’, 《American Perspective》誌 Vol. I, No. 6(November, 1947), pp. 369-77에 요약되어 있고, 특히 *바르가*의 논문의 英譯은 *The Labour Monthly*, August-September, 1947에 게재되어 있다. 이하의 설명은 이상의 자료들에 의거했다. *프라이닌*의 논문 ‘특별한 형태의 민주주의’는 1947년 뒤늦게 旬刊 《北朝鮮通信》(명양)에 3회에 걸쳐 全文이 翻譯 연재되었고, 北朝鮮通信社 出版部에서 單行本으로 발행되었다.

1425) 1424)에서 소개한 *바르가*의 논문 참조.

도시와 농촌의 근로 인민들의 이익에 봉사한다.” 이 나라들의 사회 조직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도 *부르조아* 독재도 아닌 “인류의 역사상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3) 토지개혁의 중요성 : 대지주들의 토지를 국가가 몰수하여 토지 없는 농민 또는 토지를 적게 가진 농민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이들은 “새 정권의 충실한 지지자가 되었다.”

(4) 계급투쟁 : 계급투쟁에 있어서도 이 나라들과 자본주의 나라들 사이에는 “원칙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낡은 *부르조아* 국가에서는 관료-재판관-경찰-상비군(常備軍)은 자본가계급의 손 안에 들어있는 지배의 도구이지만 이 나라들에서는 반대로 국가의 권력 기관이 노동계급의 편에 서 있다.

(5) 의회민주주의 : 공산당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인식은 노동계급의 정치적 지배는 소련에서와 같이 “오직 *소비에트* 권력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새로운 형(型)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출현함에 따라 노동계급은 “의회민주주의의 외형(外形)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지배를 확립할 수 있다.

(6) 소련과의 우호관계 : 이 나라들은 소련과의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것은 이 나라들이 비단 소련군의 승리에 의하여 독일 점령군으로부터 해방되었던 때문도 아니며, 이 나라들이 *슬라브* 국가인 때문도 아니다. 주요한 이유는 “그 현 사회제도가 이 나라들을 소련에 접근시키고 있으며”, 강대국 중 오직 소련만이 이 나라들의 사회제도와 현 정권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관심이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반동적 공격에 대해 외교적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절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로 가는 길

이상에서 요약한 *바르가*의 해석의 핵심은, 동(東)유럽의 인민민주주의 제도가 *맑스-레닌주의*에서 규정한 *부르조아* 민주주의(=“*부르조아* 독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인민민주주의 제도가 *소비에트*제도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을 비교분석한데 있었다. 공산주의자

로써의 *바르가*의 이론적 구명(究明)이 비(非)공산주의적 사회주의자를 포함한 서구 민주주의자들의 견해와 상이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의 설명은 확실히 *맑스-레닌주의*의 정통적(正統的) *이데올로기*로부터의 편향(偏向, 이탈)이었다. 이러한 편향이 *모스크바*에 의하여 허용되었던 것은 동(東)유럽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아직 단독으로 정권을 획득할 만큼 그 힘이 성장하지 못했었고, 따라서 비(非)공산주의자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통일전선을 당분간 이용해야 한다는 정치적 요청 때문이었다.

한편 *프라이닌*은 여러 면에서 *바르가*의 이론을 답습은 했지만, *바르가*와는 강조점을 달리했고 *바르가*의 설명을 보충하면서 자기의 독자적 이론을 전개했다. *프라이닌*은 인민민주주의의 국가 범주(範疇)를 확대하여 *헝가리*와 *루마니아*를 이에 첨가시켰다. 또한 그는 참으로 유일한 “새로운” 민주주의는 *소비에트* 민주주의 밖에 없다는 뜻에서 “새로운 형(型)”이란 말의 사용을 보류하고 이것을 “특별한 형태”, 내지는 “인민(人民)”이란 말과 바꾸었다. 그는 *바르가* 보다는 새 정권들의 개념을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라는 개념에 더욱 접근시켜 설명했던 것이다.¹⁴²⁶⁾

1426) *프라이닌*의 설명에서 *바르가*와 상이한 점만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인민민주주의의 기원 : “특별한 형태”의 민주주의는 그 기원을 *스페인* 인민전선(1935~ 38)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936년 8월의 ‘*스페인공산당*’ 강령은 허다한 사회적 경제적 개혁을 제시하면서도 *소비에트*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기 직전에 머물렀다.

(2) 새 政權의 特性 : *유고슬라비아*와 *불가리아*의 경우 혁명적 변혁이 가능했던 것은 “관료적 군사적 기구의 파괴는 한 나라의 혁명에 선행하는 필요조건”이라는 *레닌주의* 원칙을 고수했던 때문이다. 이 두 나라는 “*파시스트* 및 親 *파시스트* 분자들”을 권력기관에서 축출했었다.

(3) 經濟政策 : 사적(私的) 소유는 존속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장려하는 것은 아니다. *부르조아*는 정치 경제에서 지도적 역할을 상실하고 있으며, 어떤 사기업(私企業)적 창발성도 경제의 최고 고지를 장악한 정부의 통제에 복종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부르조아* 분자가 반드시 다 *파시스트*는 아니므로 노동계급의 정책은 급진적 *부르조아* 분자들을 반동분자들과의 투쟁에 이용하는데 있다.

(4) 階級鬭爭 : 통일전선의 조직은 노동계급이 계급투쟁 없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영도권은 전 민족적 노력이 근로 대중의 이익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담보다.

(5) 蘇聯과의 差異 : 10월혁명 후의 *소비에트* 정권과 동유럽 새 정권들과의 차이는 공산주의자들이 강조점을 바꾼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이론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역사적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주주의의 성과를 광범한 민족적 기반 뒤에서 수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새 정권들이 공산당의 은폐된 독재에 불과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악질적 流言”이요, “중상”이다.

(6) 革命의 成功要因 : 비교적 소수의 *프롤레타리아트*를 가진 이 나라들에서 혁명이 성공한 요인은 ㉠

위에서 간취(看取)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인민민주주의 제도에 관한 소비에트 학자들의 초기 이론에는 그 명칭, 기원, 성격 규정 및 내용 분석에 관해 통일성이 없었다. 스탈린과 그의 위성국 공산당 간부들이 새 정권의 본질을 설명함에 있어서 통일된 이론을 정립(定立)하지 못하고 있었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위성국들 사이의 정치상황에는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해방 직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등의 경우는 사회민주당 또는 농민당, 공산당으로 구성된 명실상부(名實相符)한, 아니면 절름발이 연립정부가 1948년까지 존속하여온 반면,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에서는 공산당의 일당 독재체제가 완성되었던 것이다. 그밖에 사회민주주의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는 나라들(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등)이 있는가 하면 허수아비였지만 아직 왕정(王政)이 보존되고 있는 나라(루마니아)까지 있었다.

한편 사회 발전 면에서도 체코슬로바키아는 선진 공업국의 수준에 도달해 있었으며, 공산당은 상당한 수의 조직 노동자를 장악하고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불가리아 같은 나라는 봉건적 잔재가 남아있는 농업국이었고, 다수파인 농민당은 강한 반(反)공산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난 다양하고 복잡한 동(東)유럽 제국의 상태를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나 “노동자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나 하는 기성의 소비에트 맑스주의의 과도기 이론에다 일률적으로 맞추기는 어려웠다. 그리하여 새로운 정권들을 설명하는데 인민민주주의에 관한 이론상의 문제들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둘째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국제관계였다. 대(對) 파시스트 전쟁 중에 미-소 등 연합국들이 서명한 갖가지 협정이나 각국의 최고 지도자가 단독으로 발표한 일련의 성명, 선언 등은 대전 후의 동(東)유럽 제국들을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었다. “민주주의”란 막연한 정치적 개념을 루즈벨트와 처칠은 구미식 대의(代議)민주주의로 해석했고, 반대로 스탈린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로 생각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1944~1947년 동안에 소련 점령 하의 동(東)유럽에서 공고화(鞏固化)되어 가고 있던 새 정권들의 실태를 소련 측은 그의 전시 동맹국들로부터 은폐하려고 애썼다.

改良主義의(右派) 사회주의 집단의 취약성과 ⑤ 공산주의자들의 “영도적 지위”(一黨지배) 획득 및 이들의 기를 있는 조직에서 찾을 수 있었지만 ⑥ 결정적 요인은 “소련의 존재”라는 사실에 있다.

만일 공산주의자들이 새 정권들을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 또는 그것을 지향하는 정권이라고 선언했다면, 그것은 종전 직후에는 국제적 분쟁을 일으킬 위험성마저 있었으며, 각국 공산당은 소련군의 총검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 정권의 성격을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와 관련시켜 규정한다면 그것은 비(非)공산주의자들을 “민주주의”라는 희망과 기대에다 붙들어 매어두고 이들을 이용한다는 전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비(非)공산주의 정당들의 거세, 토지개혁의 강행, 대(大)산업의 국유화 등 공산당의 권력 기반을 굳혀가는 과정에서는 *스탈린*은 이것들을 “사회주의”나 “*프롤레타리아혁명*”이니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을 삼갔다. *모스크바*가 특히 유의한 것은 각 위성국 공산당들로 하여금 비(非)공산주의자들의 경계심을 해(解)토록 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최저강령(最低綱領)”만을 제시케 한 전술이었다.¹⁴²⁷⁾ 이때에 *맑스-레닌주의*의 “최고강령”(즉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실현)을 공언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좌경적 편향(偏向)”이라고 해서 비판을 받았다. 이것이 이른바 “공산주의자들의 전술적 위장(僞裝)”으로 불리우는 술책이었다.¹⁴²⁸⁾ 북한과 위장의 방법이 너무나 흡사했다. *레바이*는 뒤에 와서 ‘*헝가리공산당*’의 위장전술을 회고하면서 이 시기의 투쟁에서 “우리들의 속셈을 보여주지 않은 것은 옳았다”(It was correct not to show our cards)¹⁴²⁹⁾고 고백했다. 요컨대 이 시기는 공산주의자들에 있어서는 최종 목표를 숨긴 *이데올로기*의 전술적 금욕시대(禁慾時代)였다.

셋째 이유는 경제이론상의 고려였다. 새 정권들은 대산업과 금융 기관들을 국유화

1427) *헝가리*의 경우를 *레바이*는 사후에 다음과 같이 실토하였다. “대자본과의 투쟁에 있어서 우리는 이 투쟁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옮기려는 것이 아니다. 대자본을 반대하기 위해 취하는 제반 조치는 동시에 *소사유재산*의 보호를 의미한다고 우리들이 강조한 것은 옳았다”고 했다. *스탈린*은 *동유럽* 공산당들로 하여금 전술상 이러한 *最低綱領*에 부합되는 노선만을 견지케 하고 있었던 것이다. Jozsef Revai, 앞의 논문, 같은 책, pp. 147~148.

1428) Samuel L. Sharp, *New Constitution in the Soviet Sphere*, Foundation for Foreign Affairs, 1950, p. 10. *샤프*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스탈린주의자 고트발트*가 1947년 6월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사회주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아니다”라고 말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들의 경험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거치지 않고 *체코슬로바키아*의 독자적 방법으로 사회주의의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의 발언을 선전하였다.

1429) Jozsef Revai, 앞의 논문, p. 148.

함으로써 경제의 소위 “사회주의적 부문”을 창설했다. 동시에 소기업의 사영(私營)을 존속시키고 토지개혁을 통하여 지주의 토지는 몰수하되 자작농의 토지사용을 당분간 허용함으로써 “사회주의적” 소유와 “자본주의적” 소유가 혼합 공존하는 경제제도를 만들었다. 이런 제도를 소련의 학자들은 대전 후의 특유한 현상으로 보고, 이것을 *부르조아 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 중 어느 한 범주에다 집어넣지를 못하고 있었다. 외부의 일부 소박한 관측자들은 소련 세력권 내에서 출현한 일시적 혼합경제 체제를 마치 소련과 서방측과의 타협을 가능케 하는 해답인 양 착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새 경제제도야말로 말로 집산주의(集産主義) 경제와 개인적 자유의 이상을 결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와 촉망 속에서” 바라보았던 것이다.¹⁴³⁰⁾

*바르가*와 *프라이닌*으로 대표되는 *소비에트* 학자들의 인민민주주의 이론에 있어서의 일치점은, 이 제도가 사회주의에 이행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지녔다는 것을 인정한 대목이었다. 그들은 “노동자”나 “노동계급”이니 하는 위장된 이름으로 불리우는 공산당이 연립정부에서 권력의 핵심부(경찰, 선전부서 등)를 차지하고 있던 사실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동(東)유럽 공산주의자들의 대(對)파시스트 전쟁에서 수행한 탁월한 업적을 내세웠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의 저항 업적이 특출한 나라도 있었지만(*유고슬라비아*), 보잘것없는 나라가 대부분이었다. 동(東)유럽 제국의 연립정권에서 공산당이 차지했던 권력의 증추는 결정적으로 소련군의 진주라는 조건에 의하여 얻은 것이었다. 이 점은 북조선의 사정과 마찬가지로였다. 그러나 *소비에트*의 이론가들은 소련의 무력을 배경으로 하여 *소비에트화*(化)의 토대를 닦고 있던 동(東)유럽 제국의 현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소련군의 진주라는 외부적 조건보다는 오히려 각국 공산당의 주체적 조건 즉 대(對)파시스트 전쟁에서 발휘한 저항을 더 많이 강조했다.

한편, 소련의 이론가들이 얼마 뒤부터는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에 이행하는 과도기적 정권이라고 인식은 하면서도, 이것을 *부르조아* 독재도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도 아닌 “새로운”, “특수한” 또는 “제3의 정권형태”라고 규정했던 점은 *맑스-레닌주의*의 과도기 이론에다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르가*와 *프라이닌*은 다 같이 인민민주주의 제도의 발생과 현황 분석에만 중점을 두었을

1430) Sumuel L. Sharp, 「New Democracy: A Soviet Interpretation」, 《*American Perspective*》, Vol. I, No. 6, p. 377.

뿐, 이것이 어떻게 성장하여 사회주의로 이행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설명이 모호했다. 따라서 동(東)유럽의 공산당들, 특히 자주적 성향을 가진 당(黨)간부들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데 있어서 소비에트의 길과는 별개의, 자국의 “독자적인 길”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소련의 위성국이 되는 운명을 피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비에트의 길과는 다른 자국의 독자적인 길을 걸어 사회주의에 도달한다는 것은 결국 맑스-레닌주의에 관한 소련의 이론과 정책으로부터의 “편향(偏向)”의 자유를 요구하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그러한 편향은 소련의 “지도”를 거부하며, 소련으로부터의 이탈 현상을 일으킬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1947년 9월의 코민포름 창설은 그러한 “편향”과 위험성을 제거하여 동(東)유럽 제국을 스탈린주의에 따라 획일화하여 일사분란(一絲不亂)하게 소련에 종속시키려는 획기적 조치였다. 세계정치의 시야에서 볼 때 코민포름의 창설은 세계가 양대(兩大) 진영으로 분열되어 냉전이 격화하고 있던 사실을 공공연히 선언한 대 사건이었다. 코민테른이 창설됨에 따라 대전 직후까지 존속되었던 소련과 서방(英-미)간의 전시 동맹국으로서의 일시적 우의는 급속히 사라지고, 소비에트 사회주의와 구미(歐美) 자본주의 사이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역설하는 소리가 갑자기 높아갔다.

이미 1946년 2월 9일 스탈린은 최고 소비에트 대의원 선거연설에서 대전이 발생한 원인을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에 따라 “현대 독점(獨占)자본주의”에다 돌리고, “소비에트 사회제도는 어떤 비(非)소비에트 사회제도보다도 우월한 조직형태며 사회”¹⁴³¹⁾라고 재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리스에서의 공산주의자들의 게릴라전과 소련군 점령지역의 소비에트화(化) 강행 등 일련의 팽창주의 정책에 직면하여 처칠은 1946년 3월 미국 홀튼(Fulton)에서 소련이 “철의 장막”을 치고 있다고 공격하면서 미-영의 제휴를 호소하는 유명한 연설을 했다. 그 후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과 “마샬 플랜”으로 소련의 팽창주의에 대항했고 소련은 영-미에 대해 치열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전개하면서 그 세력권 내에서의 “인민봉기(人民蜂起)”를 선동했다. 그리하여 국제적 냉전은 가열화 되어갔다.

이러한 와중(渦中)에서 소련의 이론가들은 세계를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1431) Stalin, 「Pre-Election Speech of February 9, 1946」, R. Daniels(ed), *A Documentary History of Communism*, vol. 1,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1984, p. 295 및 Vol. 2, p. 138.

진영”과 “소련을 선두로 하는 민주주의 진영”으로 양 대분(兩大分)하여 국제관계를 분석하고, 동(東)유럽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소비에트화(化), 즉 소위 “민주주의 진영”(소련세력권)의 공고화 정책으로 돌진하게 된 것이다. 이 대업(大業)을 해내기 위한 강력한 소련의 세계기구가 바로 코민포름이었다.

서방측에 대해 이미 이데올로기 전쟁, 정치 전쟁을 공공연히 선포한 이상 소련은 더 이상 주저할 것이 없었다. 인민민주주의 제도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도 아니요 부르주아 독재도 아닌 “제3의 정치형태”라고 하는 기회주의적(機會主義的) 해석은 이제 필요치 않게 되었다. 여기서 동(東)유럽의 공산당들에서는 인민민주주의에 관한 새로운 해석이 등장하게 되었다. 즉 소련과 그 위성국들 사이의 발전상(發展上)의 차이, 각 위성국의 특수성, 사회주의로 가는 “독자적인 길” 등에 대한 강조는 급속히 약화되고, 소련과 동(東)유럽 간의 “본질적 동일성”을 강조하는 인민민주주의의 후기 이론이 성행하게 되었다.

제2장

XXXXXXXXXXXXXXXXXXXX

인민민주주의의 후기(後期) 이론

제1절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 선언

인민민주주의에 관한 후기 이론이 공식적으로 제창된 계기는 1948년 *티토의 유고슬라비아*가 “민족주의적 편향(偏向)”으로 몰려 그해 6월 *코민포름*에서 추방된 데서 나타났다. *코민포름*의 「결정서」는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의 “반(反)소적 태도”를 공박하면서 동 당의 노선을 철저한 *스탈린주의*의 관점(觀點)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국내 정책에서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지도자들은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이탈하고 있고, 계급 및 계급투쟁에 관한 *맑스주의* 이론과 결별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 나라 안에서 자본주의적 요소가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촌에서 계급투쟁이 첨예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려고 한다. 이러한 부정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는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는 바와는 달리 계급투쟁이 더욱 첨예화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은 소멸한다고 한다. [그들 *유고공산당*의 지도자들]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평화적 성장이론을 전개했던 *부하린*(Nikolai I. Bukharin)형 기회주의자들의 주장에서 취할 것인데, *맑스-레닌주의*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것은 무산(霧散)되고 말 것이다. …그들은 “농민은 *유고슬라비아* 국가에 가장 견고한 기초다”라고 떠벌임으로써 노동계급의 지도적 역할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이론으로부터 이탈하여 *나로드니끼적*, 부농적(富農的) 정당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¹⁴³²⁾

이상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코민포름*의 비판은 소련권 내에서 온건하게 내세웠던 인민민주주의 초기 이론을 뒤집어엎은 것이었다. 동(東)유럽의 인민민주주의를 부르조아 독재도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도 아닌 “새로운 형의 민주주의” 또는 “제3의 길”

1432) Robert Bass and Elizabeth Marbury(ed), *The Soviet-Yugoslav Controversy, 1948-1958: A Documentary Record*, Prospect Books (New York), 1959, p. 42.

이라는 이론을 이 「결정서」는 부인한 것이다. 「결정서」는 티토파가 계급투쟁의 소멸을 주장하고 사회주의에로의 “평화적 성장론”을 내세웠다고 비판하고 있었지만 이런 비판은 인민민주주의 초기이론에서는 오히려 억제되고 있었다. 또한 「결정서」는 티토의 유고슬라비아가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과 당의 독자성을 수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당은 국가에서 주되는 향도(嚮導) 및 지도세력이고, 자기의 독자적 강령을 가지고 있으며 비(非)당적 세력 속에 해소될 수 없는 세력”이라는 맑스-레닌주의 이론에도 불구하고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은 당(黨)에 관한 이러한 맑스-레닌주의 교훈을 수정(修正)하고 있다”¹⁴³³⁾는 것이었다.

그런 대(對) 유고슬라비아 비판은 인민민주주의 초기에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다. 사실에 있어서 이상과 같은 코민테른의 비판은 유고슬라비아의 실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동(東)유럽 공산당들 중에서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은 그 적대계급(敵對階級)에 대한 투쟁과 억압에 있어서 가장 심한 편이었고, 객관적으로 볼 때 당시의 유고슬라비아의 정치권력은 동(東)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이 공산당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소련식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권력과 실제로 다를 바가 없었다. 그 위에 유고슬라비아 연방헌법은 소련방헌법과 가장 유사했다. 여하튼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전면적 공격은 동(東)유럽에서 인민민주주의의 새로운 사태의 출현을 예고하는 신호였다.

스탈린이 유고슬라비아를 코민포름에서 파문(破門)한 근본적 이유는, 스탈린의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민족적 모욕(侮辱)과 국가적 지배책동에 대하여 티토가 반기를 들고 대결한데 있었다. 티토가 “계급투쟁”과 “당의 지도적 역할”을 무시했다는 코민포름의 비판 내용은 스탈린의 대국주의(大國主義)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상의 조작이었다. 스탈린-티토의 분열은 그 후의 사태 발전이 입증했듯이 모스크바를 단일중심으로 했던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대분열의 시발점이 되었다.

유고슬라비아가 코민포름에서 추방되면서 동(東)유럽의 공산당들 안에서는 자주적 공산주의자들을 “우익 민족주의적 편향”, “티토주의”로 몰아 숙청하는 돌풍이 불어 닥쳤다. 이들은 비단 이데올로기적 편향(偏向)뿐만 아니라 때로는 “국가 반역죄(反逆罪)”를 뒤집어썼다. 그리고 이 숙청의 돌풍에 편승하여 각국 당 내에서는 치열

1433) 같은 책, p. 43.

한 권력 투쟁이 유발되었다. 음모와 날조에 의하여 “우익 민족주의”와는 무관한 많은 당 간부들이 처형을 당했다. 이와 같은 “티토주의자”의 숙청은 1936~38년에 있었던 소련 내의 대 숙청과 흡사하여 결국은 누가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수라장을 연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¹⁴³⁴⁾

이러한 혼돈 속에서 헝가리의 전 내무상 라이크(L. Raik), 불가리아의 전 부수상 코스토프(T. Kostov), 체코슬로바키아의 전 외상 클레멘티스(V. Clementis)와 전 부수상 슬란스끼(R. Slansky), 루마니아의 전 당 정치국원 파우케르(A. Pauker)와 파트라스카누(L. Patrascanu), 동독의 전 당 정치국원 매크케르(P. Merker), 폴란드의 전 당서기장 고물카(W. Gomulka), 알바니아의 당 정치국원 호쥬(Koci Xoxhe) 등 기라성(綺羅星) 같았던 허다한 당(黨) 최고위 간부들이 사형, 투옥, 축출의 비운에 봉착하게 되었다.¹⁴³⁵⁾ 그들 중 교수형(絞首刑)을 받은 라이크, 코스토프, 슬란스끼, 클레멘티스 등의 시체에는 스탈린 사후, “명예 회복”이라는 광영(光榮)이 주어졌고, “제국주의의 도구” 고물카는 재기의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많은 희생자들은 그 후에도 오랫동안 그대로 “죄인”의 낙인을 찍힌 채로 남아 있었다. 김일성은 이 스탈린의 숙청을 극구 옹호했다.¹⁴³⁶⁾

이와 같이 동(東)유럽에서 “티토주의자들”이 소탕되고 스탈린의 지배체제가 강행되고 있던 정치정세를 반영하여 인민민주주의 이론은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1) 소련의 역사적 경험, (2) 소련의 국제적 공헌, 각국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 계급투쟁의 주

1434) 3~4년에 걸친 이 혼란이 얼마나 심했든가는 다음에 표시된 각국 공산당의 숙청의 규모에서 감지할 수 있다.

폴 란 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 가 리	동 독	불가리아
370,000명	550,000명	200,000명	200,000명	300,000명	90,000명

이것은 평균으로 보아 매 당원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숫자였다. Zbigniew K. Brzezinski, *The Soviet Block-Unity and Conflict*, Harvard University Press, 1967, p. 97에 수록된 조사.

1435) 같은 책, pp. 91~97

1436) 金日成은 1949년 12월 15일 이를 東유럽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스탈린의 斷罪와 숙청을 숭선하여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다페스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라이크, 브라코프에 대한 공판 행정과 불가리아에서 진행된 트라이코 코스토브, 이완 스테파노 등 국제 반동의 앞잡이인 티토-파소 노당들에 대한 공판은 영-미 제국주의자들이 인민민주주의 제 국가와 소련을 반대하여, 평화와 민주를 반대하여 어떻게 새 전쟁 도발 음모를 감행하고 있는가 하는데 대한 명백한 실례로 됩니다” 『김일성선집』 2, 1954년 판, p. 447. 그런데 교수형을 받았던 라이크, 코스토브 등의 무죄가 판명되어 명예회복이 된 후, 1960년대의 『김일성선집』 신판에서는 위와 같은 김일성의 스탈린 맹종의 발언은 모두 삭제되었다.

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정되기 시작했다. 인민민주주의의 이 후기 이론에다 새로운 좌표(座標)를 설정했던 이론가는 *디미트로프*였다. 즉 그는 1948년 12월 그는 *불가리아* 노동당 제5차대회를 계기로 종래의 이론의 미비점과 오류를 비판하고 새로운 이론 체계의 정립을 시도했다. 자세히 말한다면 그는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성격을 다음 몇 가지 내용에 의하여 새로 규정하였다.¹⁴³⁷⁾

(1) 소련의 공헌 : 인민민주주의 국가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소련의 역사적 승리와 독일 *파시스트* 세력의 패망의 결과로, 그리고 노동계급의 지도하에서 발전한 민족적 자유와 독립을 위한 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탄생했다. 이렇게 하여 동(東)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제국주의 체제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2)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4대 특징

a) 인민민주주의 국가는 노동계급의 지도하에 있는, 노동하는 압도적 다수 인민들의 국가다.

b) 인민민주주의 국가는 과도기의 국가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발전하도록 보장을 받은 국가다. 오직 사회주의를 따라 확고하게 발전함으로써만 인민민주주의 국가는 공고화되고 그 역사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c) 인민민주주의 국가는 소련과 친선하고 협력함으로써 발전한다. 소련과의 친선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경향도 우리나라 인민민주주의의 존립의 기반 자체를 깨뜨리는 것이다.

d) 인민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주의적 반(反)제국주의 진영에 속한다. 위대한 *소비에트* 국가를 선두로 하는, 통일된 민주적 반(反)제국주의 진영에 참가함으로써만, 각 인민민주주의 국가는 침략과 제국주의 세력에 대해 자체의 독립, 주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3) 소련에 의존하여 사회주의로 이행 : *파시스트* 침략국의 패망,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 소련의 힘의 성장 등 일련의 조건에 의하여 인민민주주의 국가는 소련과 그밖의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에 의존함으로써 *소비에트* 정권을 형성하지 않고도 자

1437) 《Pravda》紙, 1948년 12월 21일자. *Current Digest of the Soviet Press*, Vol. I, No. I, pp. 32~34에서 인용

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있다.

(4)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의 기능 : 인민민주주의 정권은 노동계급의 지도하에 자본주의적 요소를 청산하고 사회주의 경제를 조직하고 있는 역사의 현 단계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5) 당의 임무 : 인민민주주의 국가는 이미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섰다. 그리고 내외의 적과 싸우면서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조건들을 창설하는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바로 이것은 노동계급, 그리고 이들을 지도하는 공산당의 주요한 임무다.

(6) 민족주의에 대한 투쟁 : 인민민주주의는 국제주의를 지지한다. 민족주의는 국제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우리 당은 위대한 *스탈린*을 선두로 하는 국제주의에서 우리나라 독립의 보장과 번영과 사회주의에로의 전진을 직시한다. 우리는 민족주의를, 그것이 어떤 가면을 쓰던 간에 공산주의의 적으로 생각한다. 왜 그런가는 *유고슬라비아* 내의 *티토* 민족주의 집단의 반(反)공산주의적 실천이 역력히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므로 민족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공산주의자들의 제1의 임무가 되는 것이다.

위에서 요약 인용한 *디미트로프*의 이론은 동(東)유럽 제국 내에서의 공산당의 일당 독재, 소련의 우위, 소련의 통제, *스탈린*식 사회주의제도 수립, 민족적 자주성 말살 등을 변호한 역사적 선언이었다. *디미트로프*는 자기의 주장을 제시할 때 소련공산당과 “무엇보다도 *스탈린* 동지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시기적절하고 극히 귀중한 조언에 감사한다.”¹⁴³⁸⁾는 말을 덧붙였다. *디미트로프*의 연설을 전후해서부터 사회주의로 가는 “독자적 길”이란 말은 동(東)유럽에서 사라졌고 “소련의 역사적 경험을 배워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져갔다. 이상 *디미트로프*의 연설은 동(東)유럽의 소련 위성국화를 위한 기초 작업의 완성, *스탈린*주의의 국제화애로의 돌진 신호였다. 이러한 정세 변화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각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부랴부랴 인민민주주의의 이론적 통일을 시도하는 글을 발표하게 되었다.

*디미트로프*의 연설은 결코 돌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에 앞서 1948년 8월 폴란드의 당 정치국원이었던 *민츠*(Hilary Minc)는 *코민포름* 기관지(機關誌)에다 「인민민주주의 폴란드에서 사회주의 폴란드에로」라는 논문을 기고했다. 여기서 그는

1438) 같은 책, p. 32.

자본주의와의 타협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의 길”이니 “제3의 길”이니 하는 것을 추구한 공산주의자들을 맹렬히 공격하면서 그들이 찾는 길은 “제3의 길”이 아니라 바로 “제1의 길”, 즉 “자본주의의 길”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사회주의에 관한 소비에트의 경험은 “세계사적 의의를 가지며 사회주의의 길을 택한 모든 민족들의 전례가 된다”¹⁴³⁹⁾고 스탈린주의를 찬양했다.

한편 헝가리의 라코시도 농업 집단화를 강조하면서 “만일 우리의 농업이 그대로 자본주의적 길을 따라가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의 인민민주주의의 모든 목표에 대한 위협으로 될 것이다”라고 쓰면서 사회주의 건설이 진전되면 그때는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특색을 적용할 수 있다”¹⁴⁴⁰⁾고 스탈린주의화를 역설했다. 디미트로프의 연설이 동(東)유럽 각국 공산당의 호응을 불러일으킨 것은 이미 정해진 코스를 따라 간데 불과했다. 즉 스탈린의 정책전환에 따라 어용이론 조차도 바뀌어갔던 것이다.

디미트로프의 연설을 기점으로 하여 소련에서는 그가 제시한 이론적 방향을 따라 만콥스끼(B. S. Mankovski), 유진(P. F. Yudin), 파르베로프(N. P. Farberov) 등의 학자들이 인민민주주의의 새로운 교설(敎說)을 정식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¹⁴⁴¹⁾ 소련은 그 위성국 체제으로써의 인민민주주의 제도에 관한 이론 확립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¹⁴⁴²⁾ 인민민주주의에 관한 관용이론(官用理論) 확립의 첫 시도는 파르베로프의 저서에서 볼 수 있다.¹⁴⁴³⁾ 그의 저서는 동(東)유럽의 인민민주주의 국

1439) *For a Lasting Peace, for a People's Democracy*, August 1, 1948.

1440) *For a Lasting Peace, for a People's Democracy*, December 15, 1948.

1441) 과학 아카데미 경제학연구소에는 파구르노프(P. K. Figurnov) 교수 밑에 인민민주주의 연구부를, 그리고 법률연구소에는 만콥스끼 교수 밑에 상호 연구부를 신설하고 학자들을 동원하여 토론회를 조직했다. Gordon Skilling, 'People's Democracy in Soviet Theory', *Soviet Studies*, Nos. 6~7, pp. 19~20.

1442) 이 시기 (1948~1950)에 소련 학자들은 스탈린의 의도에 부합되도록 많은 논문을 발표했다. 그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만콥스끼: -「인민민주주의국가의 계급적 본질」, 「인민민주주의공화국-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정치형태」, 「사회주의 형 국가로써의 인민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단계」, 「사회주의 국가와 유럽 인민민주주의 제국에 대한 스탈린 동지의 교설」

파르베로프: 「인민민주주의의 사회정치제도」, 「인민민주주의발전에 있어서의 새로운 특징」, 「중유럽 및 동남유럽의 인민민주주의에 있어서의 계급과 정당」

유진: -「인민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길에 관하여」 등등.

1443) 파르베로프의 저서 『人民民主主義에서의 公法(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Право Стран Народной Democratii-Public Law in People's Democracy)』(Moscow, 1949)이 소련방 법률연구소에서 출판되었고, 고등교육省은 이것을 대학 법률연구소 학생들의 교과서로 승인정했다. Skilling의 앞의 책, p. 16 참조.

가들의 분석에 치중하여 구성되었고, 몽고 인민공화국에 관해서는 그 특수성과 상이한 역사적 조건에 유의하면서 별개의 장에서 취급했다.¹⁴⁴⁴⁾

소련 학자들은 새로운 인민민주주의 이론을 구성하기 위하여 *맑스, 레닌, 스탈린*을 무수히 인용하면서 토론을 거듭했다. 이러한 토론에서 그들은 “인민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정권”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었는데, 이것은 소련 위성국들 안에서 이미 공산당이 지배권을 확립했던 현실을 *이데올로기적(的)*으로 입증한 것이었다. 소련 과학아카데미 법률연구소에서의 토론에서 만콥스끼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계급적 본질은 무엇인가? 인민민주주의 국가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의 새로운 형태이다.……인민민주주의 국가와 소련의 차이점은 국가 체제의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표시하는 정치 형태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¹⁴⁴⁵⁾

제2절 소련의 경험을 모델로

인민민주주의에 관한 소련의 초기 이론에서는 공산당의 우위를 솔직하게 시인하지는 않았다. 반면 후기 이론에서는 예외 없이 노동계급과 그 전위(前衛)인 공산당이 혁명투쟁 과정에서, 그 후의 사회주의 건설기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강조하였다. 물

1444) *파르베로프*에 의하면 인민민주주의 국가인 몽고 인민공화국은 封建制度에서 자본주의 단계를 뛰어넘어 곧 사회주의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의 사회발전 법칙에 부합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하지는 것이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사회발전 법칙의 보편타당성을 부인한 것과 다름이 없었다. 한편 *유고슬라비아* 정권의 성격에 관해서는 “사회주의적이요 민주주의적인 인민의 권력과는 하등의 공통점이 없으며……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스페인*의 *프랑코*, 그리고 *그리스의 팔라다시로스* 정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파시스트적 비밀경찰 정권*”이라고 혹평함으로써 *스탈린*의 입장을 지지했다.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해서는 집필 당시의 자료 부족 때문에 생략했다는 말로써 북한은 소련의 학자들의 큰 관심꺼리가 아니었음을 시사했던 것이다. 같은 책, pp. 22~23.

1445) ‘소련 과학 아카데미 법률연구소’는 『인민민주주의 제국에 있어서의 국가와 법률의 제 문제』라는 주제하의 토론회를 열었고, 1949년 5월 5일 그 토론 내용을 발표했다. 그리고 *만콥스끼*의 보고는 이 토론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다. 이 토론내용은 *Current Digest of the Soviet Press*, Vol. I, No. 33에 수록되어 있다.

론 이때 공산당에 대해서는 통일전선에 입각한 연립정부의 구성원들 내에서의 “지도적 세력”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초기 이론을 수정하는 과정에서는 ‘붉은 군대’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수행한 “해방의 역할”이 점점 높이 평가되었으며, 반면 미-영군의 역할은 무시당했을 뿐만 아니라, 대전 후에는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고 설명을 붙였다. 만쾰스끼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인민민주주의 혁명은 소련이 파시스트 독일과 그 위성국들을 격파한 공로로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소련의 위대한 역할은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소련군은 중(中)유럽 및 동서(東西)유럽 제국에서 영-미의 내정 간섭을 사전에 방지했으며 또한 내란도 사전에 방지했다.¹⁴⁴⁶⁾

소련의 학자들은 소련의 위성국들이 소련이 택했던 “사회주의의 길”과는 별도의 길을 택했다는 주장을 논박하기 위하여 “소련의 경험의 국제적 의의”와 이른바 “사회주의로의 이행기의 기본법칙”이란 것을 강조했다. 만쾰스끼의 설명을 들어보자.

소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은 인민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 한 나라의 공업화와 농업집단화 그리고 계급으로서의 부농의 제거 및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의 제거의 경험은 중유럽, 동남유럽 나라들에게는 각별히 중요하다. 물론 이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건설은 수다한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급투쟁의 법칙을 포함한 기본 법칙, 발전의 일반적 준거가 영향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¹⁴⁴⁷⁾

이와 같이 “소련의 경험”을 오류가 없는 보편적(普遍的) 모델로 강조하는 소련의 학자들도 레닌이 했던 말은 무시할 수 없어서 “각국의 발전상의 특수성”이란 것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말이었다. 파르메로프는 보다 솔직하게 “나라의 수효만큼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 많다”고 하는 주장은 부정확하며, “이러한 주장은 소련의 경험의 국제적 의의와 과도기에 관한 기본 법칙의 부정을 뜻하는 것”이라고 반박(反駁)함으로써 각국의 “특수성”을 무시해버렸다. 그는 “인민민주주의 제

1446) 위와 같음.

1447) 위와 같음.

국은 소련이 사회주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걸어온 길과는 구별되는 어떤 새로운 길을 따라 진전하는 것은 아니다”¹⁴⁴⁸⁾라고 말함으로써 인민민주주의 정권의 노선이 바로 소비에트 정권 노선의 모사판임을 시인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스탈린주의의 모델을 과도기의 보편적 모델로 정해놓고 소련의 경험을 따라야 한다는 방향제시에 의하여 인민민주주의의 이론이 수정되자, 위성국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소련의 경험을 배우자는 것보다는 소련에 맹종하자는 뜻의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소련의 방식을 최대한 그대로 적용하고 자국의 특수성은 최소한으로 국한시키는 이론적 경쟁을 벌였다. 여기서 스탈린의 과거의 저서들은 현대의 고전(古典)으로 숭앙되었고 공산당 독재의 강화와 함께 스탈린의 공업화 방식, 농촌의 강제적 집단화, 중앙집권적 경제계획 기구, 교회에 대한 통제 등이 절대적 정책기준으로 채택되었다. 소련에의 종속을 정당화하는 인민민주주의 이와 같은 이론적 수정과 획일적 실천에 의하여 동(東)유럽 제국의 모습은 소련의 모습과 꼭 같이 닮아갔고 이 나라들은 소련에 맹종하는 괴뢰국(傀儡國)으로 전락했다.

인민민주주의의 후기 이론이 이 시기에 출현한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소련군 점령하의 나라들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지배를 강행하려는 소련의 목적에 맞춰 기성 이데올로기를 수정해야 할 시대적 요청 때문이었다. 즉, 코민포름이 창설되고 티토가 여기서 축출되기까지의 기간 중에 각국 공산당 내의 스탈린 추종자들은 반대파들을 완전히 거세했고 자기들의 권력을 확립해 갔다. 인민민주주의의 전기 이론이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제1단계에서의 전략적 이론이었다면 그 후기 이론은 다음 단계, 즉 “사회주의”의 건설단계에서의 전략적 이론이었다. 제1 단계를 통과하는 동안 동(東)유럽 여러 나라들 사이의 차이는 소멸되었고 그 대신 동일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동(東)유럽 공산당들은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광범한 민족통일전선 위에 수립된 인민의 정권”이라고 더 이상 겸양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당당하게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 즉 공산당의 일당 독재를 공포할 때가 왔던 것이다.

이제 동(東)유럽에서는 인민민주주의 이론의 책략성과 공산당의 과거 전술을 솔직하게 공개해도 무방하게 되었다. 이것을 가장 대담하게, 그리고 명석하게 공표한 스탈린주의자는 헝가리 공산당의 지도적 이론가요, 정부의 인민 문화상이었던 요세

1448) 이 Farberov의 말은 Brzezinski의 앞의 책, p. 76에서 인용.

프 레바이(Joseph Revai)였다. 그는 당 이론지 《타르사들미 쟈물레》(Tarsadlmi Szemle)지(誌) 1949년 3~4월호에다 당 간부들에 대한 행동 지침으로써 「우리의 인민민주주의의 성격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했다.¹⁴⁴⁹⁾ 인민민주주의의 “음모(陰謀)”를 밝힌 고전적 문헌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 중요한 논문은 동(東)유럽 제국이 스탈린주의화(化) 과정에서 구사한 공산당의 독재권력 수립 방법과 기만전술을 사후에 와서 솔직하게 공개하였다. 여기서 레바이는 “반동적” 비(非)공산주의자들이 꾸며낸 “허위”며 “악선전”이라고 종래에 비방해왔던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을 틀림없는 사실이였다고 놀랍게도 재확인, 입증해주었다.

첫째로 레바이는 우선 제2차 대전 후 헝가리의 공산화 과정에서 소련과 소비에트 군대가 헝가리공산당을 지원함으로써 “우리의 힘, 즉 우리 당과 노동계급의 힘은 커졌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우리가 강조해야할 사실은 우리가 미래의 길을 명확하게 택할 수 있도록 ‘소련공산당’(볼셰비끼 당)으로부터, 그리고 스탈린 동지의 가르침으로부터 결정적 고무와 후원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그의 이 말은 동(東)유럽 제국의 내정에 소련은 한 번도 간섭한 바가 없었다던 공산주의자들의 종래의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자진하여 폭로한 것이었다.

레바이는 1947년 가을과 1948년 여름에 열린 두 차례의 코민포름 회의로부터 ‘헝가리공산당’은 노선상의 지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즉, 첫 회의는 “인민민주주의가 자본주의 분자들을 말살하는 바로 최종단계에서 정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지시했고, 둘째 회의에는 “사회주의적 개조는 도시에만 국한될 것[산업의 국유화]이 아니라 농촌 지역에까지 확대농촌의 집단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쳤다고 했다. 또한 헝가리를 사회주의 국가로 개조하는데서 “소련은 우리의 모델이며, 인민민주주의의 길은 외면적(外面的) 형태에 있어서는 소련의 길과 다르지만 본질적(本質的)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그는 회고했다.

둘째로, 레바이는 공산당 지도자들이 비(非)공산주의 정당들과 진심으로 “협동”하고 동맹을 맺을 생각은 전혀 해본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는 1947년까지 존속한 통일전선 노선이 하나의 기만전술이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공산당이 처

1449) 이 유명한 論文은 앞에서 引用한바 대로 「The Character of People's Democracy」로 영역되어 《Foreign Affairs》誌 1949년 10월호에 掲載. 이하는 이 영역에 따라 설명하기로 한다.

음에 “부르조아 정당”과 제휴했던 것은 “봉건제”와 “대자본”을 숙청하기 위해서였지만 다음의 목표는 “자본주의의 잔재”와 “부농”, “부르조아 정당” 그 자체를 청산하는데 있었다는 것이다.

셋째로, 레바이는 농촌 집단화를 선언했다. 그에 의하면 토지개혁에 의하여 “부르조아 혁명의 임무”는 완수했지만 그것은 최종목표가 아니었다. 당(黨) 강령에서는 오직 “위장한 형태로 표현되고 그 진짜 명칭이 언급되지 않은 농촌의 사회주의적 발전, 즉 농촌의 집단화”를 명시하기 위하여 이제는 강령을 개정해야겠다고 언명했다.

넷째로, 레바이는 공산당 1당에 의한 권력 독점을 공공연히 주장했다. 인민민주주의 정권이 소농당(小農黨), 농민당 등과 공산당과의 연립정권이라고 해서 권력을 공산당이 여타의 정당들과 공동으로 행사한다든가, 또는 권력을 노동계급과 근로 농민들 사이에서 분할한다는 것은 결코 진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그는 ‘인민민주주의 국가’가 노동자와 농민의 국가요, 이 국가가 노동계급과 농민들의 동맹의 기초 위에서 건설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가리는 노동계급만에 의하여 통치되고 있다”면서 이 나라가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공산당 1당 독재)하에 있다는 사실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그는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는 노동계급과 농민계급의 동맹을 기초로 하여 건설되고 있으나 양자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형식적으로는 권력을 지도세력들 사이에서 분할한 요소는 있지만, 사실에 있어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노동계급뿐이며, 사실에 있어서 국가 기구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우리당뿐이다. 농민계급과 권력 행사를 같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 반(半)은 사유 재산제를, 半은 협동화(집단화)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밑줄은 저자)

요컨대 농민계급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서 동요하는 분자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으며, 따라서 권력 행사를 같이 할 수 없다는 그의 논리는 “인민민주주의 정권은 노동자 농민의 정권”이라는 공산주의자들의 일관된 선전을 스스로 공공연히 부인한 것이며, 노동계급과 농민의 동맹이 하나의 허구였다는 점을 정직하게 공언한 것이었다.

끝으로 레바이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의 제1의 기능은 사회주의 경제, 문화를

건설하는 과업에 집약된다고 주장했다. 이 건설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소련에 의지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내란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소비에트 군대의 역할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는 한편, 필요할 때는 “강압과 폭력”의 수법을 사용하는 일을 무시해서는 안 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민민주주의를 그는 *디미트로프*의 규정에 따라 “소비에트 형태를 취하지 않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라고 정의했다. 레바이는 인민민주주의의 전기(前期) 이론과 후기 이론과의 차이를 염두에 두면서 인민민주주의는 처음부터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는 아니었지만 “처절한 계급투쟁을 통하여 당(黨) 강령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가 되었다”고 공산당이 비(非)공산주의 정당들을 폭압적으로 제거한 사실을 숨김없이 공개했다. 인민민주주의의 “음모성”에 관한 이상 레바이의 실토를 들고 있노라면 마치 그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착각을 일으킬 정도다. 동(東)유럽과 북한에서 각국 공산당이 농(弄)한 인민민주주의 기만과 모략의 방법은 놀랄 만큼 일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동(東)유럽에서의 스탈린주의 체제의 확립을 위한 인민민주주의의 후기 이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을 당한 자는 동(東)유럽의 소비에트 화(化)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인민민주주의를 해석했던 초기 이론의 제창자들이었다.¹⁴⁵⁰⁾ 스탈린은 이론상의 오류를 범할 수 없는 “전지전능한 천재”였으므로 모든 과오의 책임은 의례히 다른 인물에게로 전가될 수밖에 없었다. 이때에 세계의 주목을 받은 희생자는 소련의 석학(碩學) 바르가였다. 바르가에 대한 비판은 1946년 초에 발간한 그의 저서 『제2차 대전 후의 자본주의 경제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었다.

이 저서에서 바르가는 전후의 자본주의 발전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고 해서 1947년 5월 당 노선을 대변하는 학자들로부터 맹렬한 비판을 받고 그가 차지했던 직위의 대부분으로부터 추방되었다. 결국 권력의 압력에 굴복한 그는 1949년 3월 《프라우다》지에다 공개서한(公開書翰)을 발표했다. 이 서한에서 그는 새로운 세계 대전을 사주(使囑)하고 있는 “서방 제국주의자들이 자기의 저서를 이용하여” 소련에 대한

1450) 소련에서는 1947년 말경부터 라주킨(E. A. Lazukin), 코로빈(E. A. Korovin), 오스트로비쯔노프(E. V. Ostrovityanov) 등의 새로운 학자들이 바르가와 프라이닌 등의 이론을 매장하는 운동을 시작했고, 영예로운 과학 아카데미 경제연구소 소장 직은 바르가에서 오스트로비쯔노프에게로, 그리고 법률연구소 소장 직은 프라이닌에서 코로빈으로 넘어갔다. Skilling, 앞의 책, pp. 18~19.

“어리석은 선전”을 일삼고 있다고 서방측을 비난했다.¹⁴⁵¹⁾ 결국 1953년에 와서 그는 자기의 초기 이론을 스탈린주의의 방향으로 수정한 후 책명을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제국주의 경제 및 정치의 기본문제』로 바꿔 개정판을 내놓아야 했다.¹⁴⁵²⁾ 당적(黨的) 비판에 굴복한 바르그는 1949년 「제국주의에 관한 저작에서의 개량주의적 경향」이라는 글을 《경제학잡지》(Voprosy Ekonomiki, No. 3, 1949)에 발표하고 굴욕적(屈辱的)인 자기비판을 공개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자기에 대한 비판은 필요하고도 정확했으며, 자기의 과오는 이러한 비판의 정확성을 즉각 시인하지 않은 점에 있다”느니, 자신의 이론상의 “오류는 개량주의적 오류의 전 체계를 형성하였다”느니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인식상의 오류”, “방법론의 오류”를 스스로 지적하는 수모(受侮)를 겪어야 했다.¹⁴⁵³⁾ 바르그와 달리 프라이만이 이러한 모욕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행히도 곧 사망했던 때문이다.

이상에서 분석한 학자들 간의 일련의 정치적, 이론적 투쟁 경로를 통하여 스탈린주의자들이 정립했던 인민민주주의의 후기 이론을 간명하게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1) 인민민주주의 제도는 “영웅적인 소비에트군대가 국제 파시즘을 격파한 결과로

1451) 『Prava』, 1949년 3월 15일. *Current Digest of the Soviet Press*, Vol. I, No. 10, p. 44.

1452) E. Varga, *Grundlagen der Ökonomik und Politik des Imperialismus(nach dem zweiten Weltkrieg)*, Diez Verlag Berlin, 1955. 이에 앞서 知的 탄압이 시작되고 있던 1948년 10월, 과학아카데미 경제연구소의 학자들은 토론회를 조직하여 「경제학에 있어서의 연구 사업의 결합과 임무」라는 논제를 걸고 바르그에 대한 이론투쟁을 벌였다. 새 소장 오스트로바짜노프는 보고를 통해 “바르그 동지의 오류는 이미 소비에트 신문들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그의 오류는 인민민주주의 나라들을, 국가 자본주의의 요소가 우세하다는 점을 들어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일부로 特徵지운데 있다”고 선입자를 비판했다. 오스트로바짜노프의 보고를 토대로 란트바르뜨(M. V. Rantbart), 루빈슈타인(M. I. Rubinstein) 등의 이론가들이 계속 바르그 공격에 합세하여 나섰다. 란트바르뜨는 바르그가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를 논하지 않았고, “계급과 당의 입장에서 문제를 연구하지 않았으며 식민지와 그 모국 간에 첨예화하고 있는 모순”을 분석하지 않았다고 공박을 가했다. 한편 루빈슈타인은 바르그가 “맑스-레닌주의를 개량주의적으로 왜곡했다”느니, 자본주의는 “국가적 역할”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느니 하는 비난을 퍼부었다. 이들의 바르그 비판은 그의 이른바 “부르조아 객관주의”, “코스모폴리타니즘”(세계주의)으로 집중되었다.

Voprosy Ekonomiki, No. 8, 1948. *Current Digest of Soviet Press*, Vol. I, No. 10, p. 6 및 같은 책, p. 44, pp. 4-5 참조. 요컨대 스탈린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바르그는 黨性을 결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1453) *Current Digest of the Soviet Press*, Vol. I, No. 19, pp. 3-9.

서” 출현하였다.

(2) 인민민주주의는 소비에트제도와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의 한 형태다. 이것은 소비에트 제도와는 형식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하며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은 소련의 “경험”을 모델로 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하며, 이것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길”을 택한다는 것은 이단이다.

(4) 소련이 치열한 계급투쟁을 통하여 “부르조아 분자들”과 “부농”을 폭력으로서 말살하면서 사회주의를 건설했던 것처럼, 인민민주주의 국가들도 사회주의의 낙원에 도달하자면 국내의 “계급의 적(敵)”들과 “제국주의의 앞잡이”들에 대해 가열(苛烈)한 계급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5)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함에 있어서 소련의 “지도”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제3절 흐루시초프 - 브레즈네프 시대의 공산권 내 동요

1953년 3월 스탈린이 사망한 후 소련 세력권 내의 정치권력 구조에는 중대한 변동이 일어났다. 크렘린 안에서는 스탈린의 권력을 계승하기 위한 치열한 투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베리아, 말렌코프, 몰로토프, 까카노비치, 불가닌 등 당 원로들이 권좌에서 쫓겨나고 강등되면서 흐루시초프 시대가 출현했다. 1956년의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흐루시초프가 죽은 독재자 스탈린의 개인숭배 작풍을 공격하고 스탈린이 저지른 일련의 전율할 범죄행위를 공공연히 폭로하자 스탈린은 신(神)의 지위에서 일거에 폭군(暴君)의 지위로 전락했다. 불멸의 진리로 숭앙되어 온 그의 이론들은 자기의 후계자들로부터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았고, 그에 의하여 처형됐던 무고한 희생자들의 적어도 일부는 사후에나마 “명예회복(名譽回復)”이란 이름에서 무죄 심판을 받았다. 그밖에 많은 옥중의 죄수와 강제 노동수용소 안의 생존자들이 석방되었다.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운동(格下運動)은 소련의 위성국들을 세차게 흔들어 놓

았다. 스탈린과 그 대행자들에 의하여 가혹한 경제적 수탈을 당하고 무자비하게 탄압을 받아온 위성국 인민들은 새로운 정치적 변동에서 재 해방(再解放)의 길을 찾고자 투쟁했다. 그리하여 1956년 10월에는 폴란드의 공업도시 포즈난에서 노동자들의 폭동이 일어났고, 11월에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반(反)스탈린적 혁명이 폭발했다. 이 격동의 와중에서 각국 공산당 내의 제1급의 스탈린주의자들은 모두 권좌로부터 축출되었다. 스탈린주의자들에 의하여 추방되었던 고물카, 게오르규·데지(Gheorghe Gheorguiu-Dej) 등 당(黨) 간부들이 국가의 최고 권력자로 등장했다.

폴란드 사태는 소련과 폴란드 두 나라 지도자들의 타협과 무마 공작에 의하여 유혈사태 없이 진정되었다. 그러나 헝가리의 봉기는 거센 반(反)소 혁명으로 확대되어 드디어는 소련군의 출동으로 처참하게 진압되었다. 흐루시초프가 점화(點火)한 스탈린 격하운동은 소련 내에서는 공산당의 전체주의적 통제를 완화하는 내정 개혁의 의미를 지닐 수 있었다. 그렇지만 소련의 위성국 인민들에 있어서는 스탈린의 격하(格下)는 내정개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련으로부터의 해방이란 욕구로 발전하는 정치논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때에 ‘소련공산당’의 새 지도층은 소련 세력권의 와해(瓦解)를 의미하는 그러한 욕구를 수락하려 하지 않았다. 흐루시초프도 국제문제에 있어서는 스탈린주의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었다.

스탈린 사후에 발생한 위성국들의 동요, 폭동 또는 유혈의 참극은 지금까지의 관용 인민민주주의 이론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허구였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흐루시초프의 등장 이후 소련과 일부 위성국 안에서 일어난 “자유화”, “해빙(解氷)”이란 이름의 정치적 변화에 따라 위성국들에 대한 모스크바의 지배 양식은 완화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인민민주주의’ 이론 자체는 별로 수정되지 않았다. 흐루시초프 시대의 인민민주주의 이론은 기본적으로는 스탈린 시대에 정립된 그 후기 이론, 즉 앞에서 분석한 디미트로프의 설명을 답습하면서 정밀화되고 체계화되었다.

단지 어떤 중대한 이론상의 변화가 있었다면, 스탈린 시대에는 “자본주의에로의 복귀”, “파시스트”니, “제국주의의 주구”니 하는 등의 비난을 받아온 티토의 유고슬라비아 국가 권력이 노동계급에 속(屬)해 있고,……제국주의 세력의 음모에도 불구하고……민족적 독립을 유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¹⁴⁵⁴⁾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1454) 앞의 *Manuel d'Économie politique*, 1955, p. 631.

복권 현상이었다.¹⁴⁵⁵⁾ 흐루시초프는 티토에게 면직부를 주어 더 이상 그를 적으로 삼으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흐루시초프 시대의 관용 이론은 ‘소련 과학아카데미 경제연구소’가 당시에 새로 발행한 『경제학 교정(教程)』에 잘 천명(闡明)되어 있다.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출현을 논하는 대목에서 이 책은 무엇보다도 대 독전(對獨戰)에서의 소련군의 “승리의 투쟁”, 동(東)유럽의 “해방”을 강조하였다.¹⁴⁵⁶⁾ 그 이론은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두 단계로 구분하고 제1 단계를 “반(反)제국주의 반(反)봉건혁명”으로, 제2단계를 “사회주의 혁명”으로 규정했다. 그 제1단계라는 것은 공산당, 비(非)공산주의 정당으로 형성한 민족통일전선 위에 연립정부가 수립되고 생산수단의 제한된 사유가 용인되었던 1945~1948년의 기간에 해당하며, 제2단계는 공산당의 1당 독재가 확립되고 산업의 국유화와 농업 집단화가 급속히 강행되었던 1948년 이후의 시기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백했다.¹⁴⁵⁷⁾

그러나 이 관용서는 “새로운 형”의 부르쾰라 민주주의 혁명을 보통의 부르쾰라 민주주의 혁명과 엄격히 구별했다. 즉 이 혁명의 특징은 “세계 제국주의 체제 전체를 약화시키고, 그 근저를 뒤흔들고 있다”는 점과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환하는데 가장 유리한 조건들을 조성한다”는 점에 있다고 설명했다.¹⁴⁵⁸⁾ 요컨대, 인민민주주의의 제1단계의 의의를 정치적으로는 반(反)제국주의적이며, 사회 경제적으로는 반(反)봉건적 혁명이라는 점에서 찾고 있었다. 이 혁명을 특히 “부르쾰라 혁명”이라고 규정한 것은, 봉건적 토지 소유제(지주제)를 청산하고 토지를 농민에게 분배하여 일시 그들의 사적 소유로 만든 토지개혁 때문이었다. 이러한 토지개혁을 “부르쾰라 민주주의 혁명의 임무”라고 간주해온 점에서는 스탈린시대의 인민민주주의 전기이론과 다를 바가 없었다.

한편 동(東)유럽에서 중요한 것은 토지개혁(토지혁명)이었다. 토지개혁의 목적은

1455) 흐루시초프는 유고슬라비아를 사회주의국가로 인정은 했지만, 티토가 고수하고 있던 동-서간에서의 중립적 정책 때문에 “社會主義 陣營”의 일원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유고슬라비아를 蘇聯 세력권 内の “人民民主主義 國家”들과는 구별하여 별도로 취급했던 것이다.

1456) 앞의 Institut d'Economie, *Manuel d'Economie Politique*, 1955, p. 626.

1457) 같은 책, p. 627.

1458) 같은 책, p. 627.

농민들에 의한 토지의 개인 소유제를 영속화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 빈농(貧農)과 중농(中農)을 공산당의 일시적 동조 세력으로 만들고, 공산당의 권력이 공고화되고 나면 농민들에게 분배했던 토지를 몰수하여 집단화하는데 그 참된 목표가 있었다. 그 술책을 『경제학 교정』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토지가 적은 농민이나 토지를 가지지 못한 고용농에게 토지를 분여함으로써 그들을 인민정권의 편에 끌어들었다. 토지개혁은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의 임무를 완성하는 것인 동시에 사회주의 건설에로 이행하기 위한 조건의 하나다.¹⁴⁵⁹⁾

이러한 주장도 소련의 인민민주주의 전기 이론과 마찬가지로였다. 그런데 모스크바는 반제-반봉건적 민주혁명, 즉 “새로운 형의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의 승리를 이룩한 국가권력을 스탈린 시대와는 달리 규정했다. 즉 *레닌*이 1905년의 *러시아* 혁명 때에 제안했던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와 동일한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하였다. 그것은 스탈린보다 *레닌*의 이론적 독창성을 위에도 놓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로동계급이 지도한 반(反)제국주의, 반(反)봉건혁명의 승리는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의 명적 민주주의 독재가 수립되었던 것을 의미한다. 이 독재는 혁명을 밀고나가 혁명의 제2단계,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혁명으로 곧장 이행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反)제국주의, 반(反)봉건혁명과 사회주의 혁명과는 하나의 사슬에서의 두 개의 고리며, 단일 혁명 과정에서의 두 단계다.¹⁴⁶⁰⁾(밑줄은 저자)

여기서 내세운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란 개념은 *레닌*의 독특한 이론으로서,¹⁴⁶¹⁾ 앞에서 소개한 *디미트로프*의 연설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흐루시초프 시대에도 스탈린 시대의 후기 이론과 마찬가지로 혁명이 제1 단계에서 제2 단계으로 이행되고 있을 때에는 “로동계급”(공산당)과 “반(反)혁명적 *부르조*

1459) 같은 책, p. 628.

1460) 같은 책, p. 627.

1461) *레닌*의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에 관해서는 제3편 제4장 참조.

야지”(비 공산주의세력 전부를 지칭)사이에서 격렬한 “계급투쟁”(공산당에 의한 숙청)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국가 안에서의 “노동계급의 지도적 역할”(공산당의 지배)이 최종적으로 굳어지고, 따라서 “인민민주주의의 국가 제도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되었고, 인민민주주의 정권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 정권과 동일한 형태가 되었다”¹⁴⁶²⁾는 것이다. 이 관용이론은 공산당의 1당(黨)독재 확립의 과정을 간명하게 공식화(公式化)했다.

그 성격으로 보아 부르조아 민주주의적인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성장 전화해가는 과정, 인민민주주의의 현 단계에서 다른 단계, 즉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민민주주의로 점차로 넘어가는 과정이 나타났다.¹⁴⁶³⁾

소련의 이론가들은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소련이 배운 혜택을 과시한 점도 스탈린 시대의 후기 이론과 마찬가지로였다. 즉 “인민민주주의 제국은 ……소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아주 풍부한 경험으로부터 크게 이익을 보았다”¹⁴⁶⁴⁾“소련의 결정적 지원에 의하여 유럽의 인민민주주의 제국에 대한 제국주의의 간섭 계획은 실패했다”¹⁴⁶⁴⁾“또는 “더할 나위 없이 국제주의적인 소련의 사회주의 문화는 인민민주주의 제국의 민족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¹⁴⁶⁴⁾ 주장들을 내세워 동(東)유럽의 스탈린주의화(化)를 극력 옹호하였다. 그러나 스탈린 사후 전개된 동(東)유럽 내의 자유화 운동, 소련과의 대립, 국제공산주의의 다원화(多元化) 경향 등 일련의 역사적 변동들은 그곳의 공산주의자들까지도 실제로는 소련의 그러한 “혜택(惠澤)”에 결코 감사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1964년 10월 흐루시초프가 크렘린의 권력무대에서 실각하자 브레즈네프-코시긴의 시대가 출현하였다. 이 시대에는 그때의 현실에 맞도록 맑스-레닌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또다시 재해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인민민주주의 이론에 관한 한, 흐루시초프 시대의 이론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것을 “맑스-레닌주의의 기초의 탁월한 과학적 설명”이라고 자부하는 흐루시초프 시대의 소련의 관정(官

1462) 앞의 *Manuel d'Economie Politique*, 1955, p. 629.

1463) 같은 책, p. 630.

1464) 같은 책, p. 635, p. 642.

定) 교과서 『맑스-레닌주의의 기초』(제2 수정판, 모스크바, 1963년)가 흐루시초프 이후에도 계속 통용되고 있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책의 기술에 의하면 인민민주주의 국가는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시기의 “중간적, 과도적 형태의 국가”다. …… “노동계급과 그 정당들이 민주주의 켈릭(통일전선 내에서 완전한 지도권을 장악한) 후에는 인민주주의 국가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인민주주의를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특수한 형태의 민주주의”¹⁴⁶⁵⁾라고 공인했던 것이다.

브레즈네프-코시긴 시대에 와서 당(黨)이 표명하고 있던 인민주주의 이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즉 “사회주의적 개조”가 계급투쟁 없이 “목가적(牧歌的) 분위기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주의로 전진함에 따라 계급투쟁은 점점 더 침체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스탈린의 태제는 소련과 인민주주의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결코 사실이 아니다”¹⁴⁶⁶⁾라고 스탈린을 비판한 점이다. 이것은 중대한 이론상의 수정이었다. 그러나 스탈린의 태제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하여 동(東)유럽의 반(反)스탈린 운동이 옳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모스크바의 이론가들은 어떤 나라에서, 어떤 경우에는, 사회주의로 이행 하는 과도기에 계급투쟁이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인했다. 그렇지만 대립하고 있는 사회세력, 즉 자본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간의 투쟁을 결코 경시하지는 않았다.

그 단적인 예가 1956년 10월의 헝가리 혁명에 대한 해석이었다. 브레즈네프 일파는 이 혁명을 “공공연한 반혁명적 반란”으로 단죄하는 한편, 1956~57년의 폴란드에서 일어난 반(反)스탈린주의적 자유화 운동은 “신부들과 수정주의 분자들의 활동”이라고 비방하면서 이 사건들을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세력”에 대한 “낡은 부르조아 사회세력”의 투쟁이라고 주장했다.¹⁴⁶⁷⁾ 이러한 비난들은 소련의 동(東)유럽 제국에 대한 지배를 끝까지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의도에서 가한 것이었다. 이런 식의 이데올로기적 자기정당화는 1968년 8월 소련군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했을 때

1465) *Fundamentals of Marxism-Leninism*, Moscow, 1963, pp. 533-534.

1466) 같은 책, pp. 535-536

1467) 같은 책, p. 535.

는 세칭 “브레즈네프·독트린”에로까지 타락하여 소련의 대국주의적 현상유지 정책을 옹호하는 데에서 활용되고 있었다.

제4절 국제적 격동 속에서 공식화(公式化)된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이론

위에서 저자는 소련 및 동(東)유럽 제국에서 인민민주주의 이론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를 중점적으로 고찰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이론의 불모지대였으므로 자기의 독자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었다. 김일성의 연설과 당 이론가들의 문언에서 단편적으로 표명된 인민민주주의의 설명은 소련의 학자들이나 모택동의 이론을 뒤늦게 복창한 것에 불과했다. 그리하여 소련과 동(東)유럽에서 인민민주주의의 초기 이론이 나오고 있던 1945~47년경에 북한은 이에 뒤따라 “반제-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을 제창했고, 동(東)유럽에서 인민민주주의의 후기 이론이 정립되고 있던 1948년 이후에는—정확히는 그 훨씬 뒤에 와서—이 이론에다 짜 맞춰 “인민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의 동일성(同一性)을 내세웠다.

1968년 9월 김일성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20주년 경축대회 때에 행한 연설에서 북한의 “인민 정권”의 발전을 3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다. 즉, 그 제1 단계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동 동맹에 기초하여 광범한 반제 반봉건 민주역량을 망라하고 있는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에 의거한 인민정권으로서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수행했다”¹⁴⁶⁸⁾는 것이다. 제2 단계인 ‘북조선 인민위원회’는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북조선에 탄생된 “첫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이었다고 한다.¹⁴⁶⁹⁾ 그리고 제3단계인 “공화국 정권은 첫 날부터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기능을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노동당의 영도하에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¹⁴⁷⁰⁾고 주장했다. 요약하면 “인민의 정권”은 인민

1468) 《근로자》 1968년 9월호 p. 7.

1469) 같은 책, p. 9.

1470) 같은 책, p. 10.

민주주의 독재→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강화된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해왔다는 것이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북조선 인민위원회’ 그리고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에 대한 그의 위와 같은 성격 규정은, 이 권력 기구들이 조직되었던 그 당시에는 한 번도 시도한 일이 없었다. 1948년 12월의 *디미트로프* 연설을 기점으로 인민민주주의 이론이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 “사회주의 혁명”에다 초점을 맞추면서 재구성—정식화된 후 이 스탈린주의적 관정(官定) 이론에 따라, 노동당의 이론가들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련의 정치적 변화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재 해석, 이론화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이 작업이 시작된 것은 휴전 이후의 일이었다. 소련과 동(東)유럽이 인민민주주의의 초기 이론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 북한은 인민민주주의에 관한 자체의 주장을 내세우기는커녕 그런 용어조차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북한에는 독자적으로 인민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를 개발할 정도의 이론가도 자유포도 없었던 것이 확실하다. 그 위에서 남북통일에 관한 대남 선전의 전술상 소련 당국은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비공산주의자들의 공포를 자아내면서까지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정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김일성에게 허용치 않았을 수도 있다. 여하튼 북한에서는 오랫동안 “반제—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이란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고, 특히 이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한다는 말은 엄격한 금기로 되어왔다. 김일성은 구미형의 의회민주주의를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단정하고 “조선 실정에 부합되는 새로운 진보적인 민주주의 제도”를 누누이 제창해 왔지만 이것이 “사회주의” 제도로의 이행, 또는 “공산주의” 사회의 미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체 숨기고 있었다.

김일성은 “인민의 정권기관”이라고 하는 ‘인민위원회’마저도 소련이나 공산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사람들을 우롱하였다.¹⁴⁷¹⁾ 그는 1948년 4월 29일 「남조선 신문기자단과의 담화」에서 공산당계 기자들이 “북조선의 인민적 민주주의 정권의 형태를 남조선에서는 공산주의라고 하는데”라고 질문한데 대해 아래와 같이 대답했다.

…이러한 환상을 꾸며낸 것은 단지 그들의 사회 문제에 대한 천치성(天癡性)을 표현

1471) 『김일성선집』 1, 1954년 판, pp. 422~423.

한 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이러한 환상을 만들어낸 것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국주의자들과 각종 반동분자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어떠한 정권 형태를 물론하고 다 《공산주의》라고 떠들어대는 것은 오늘 일종의 버릇으로 되었습니다.… 인민정권 형태인 인민위원회는…농민, 노동자, 사무원, *인텔리*, 상업가, 기업가, 종교가, 전(前) 지주 등 인민 각계각층의 대표들로 구성되었습니다.¹⁴⁷²⁾

김일성은 “민주개혁” 또는 “인민적 민주주의”에 관해 논할 때는 이것이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설득하는 대신, 그러한 의미의 논평을 하는 사람을 “친일파” 또는 “민족 반역자”라고 비방하면서 “인민정권”의 본질과 이것이 지향하는 바를 숨기려 했던 점이다. 통일전선 산하의 비(非)공산주의자들을 당분간 기만하면서 이용하자는 이러한 정치술책(政治術策)은 초기의 동(東)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48년까지에 동(東)유럽의 인민민주주의 나라들은 소련의 철저한 위성국으로 전락했고, *크레믈린*의 이익을 대변하는 *스탈린*주의자들의 독재 하에서 민족적 자주성과 자유를 일체 상실하고 있었다는 것은 앞에서 논한 바와 같다. 1948년 2월에 소련의 당 이론가 유진(P. F. Yudin)은 “*러시아*의 노동계급은 국제 노동계급 안에서 지도적 지위를 쟁취했다는 것과 위대한 지도자 *레닌*과 *스탈린*을 선두로 하는 소련공산당은 국제공산주의의 전위당(前衛黨)이 되었다”고 언명했다. 이런 주장을 다름 아닌 *코민포름* 기관지에다 실림으로써¹⁴⁷³⁾ 인민민주주의 나라들에 대한 소련의 지배를 뜻하지 않게 공인했던 것이다.

김일성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를 설명할 때와 마찬가지로 동(東)유럽의 인민민주주의 나라들에 관해 말할 때에도 이 나라들이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었다던가, 그 궁극적 목표는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는데 있다던가 하는 말은 일체 회피했다. 1947년 8·15해방 2주년 경축대회에서 그는 해방된 동(東)유럽과 동남(東南)유럽들에서 실시되고 있는 “위대한 민주개혁”, 즉 “산업 국유화법령”과 “토지개혁” 등을 극구 찬양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들의 정권을 “민주 역량의 통일로 결속된 민주주의 통일전선을 기초로 한 정부”나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니 하는 찬사로써 그 존재 의의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이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부러

1472) 『김일성선집』 2, 1953년 판, pp. 154~155.

1473) 《For a Lasting Peace, for a People's Democracy》誌 1948년 2월 15일호.

밝히지 않았다.

동시에 김일성은 이 나라들에서 자행되고 있던 자주적, 민주주의적 비(非)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모든 숙청 재판들을 일괄하여 “민족 반역자들과 전쟁 범죄자들을 공판하는 인민적 재판”¹⁴⁷⁴⁾이라고 단정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1948년 여름 티토를 코민포름에서 추방한 사건을 시점으로 하여 동(東)유럽의 인민민주주의 나라들은 스탈린의 무자비한 숙청과 철통같은 통제에 의하여 전전공공 소련의 가련한 괴뢰국(傀儡國)으로 전락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김일성은 1949년 봄에 “위대한 소련의 정책은 민족자결을 준수하는 정책이며, 타 민족의 독립과 자유와 자주권을 존중하는 정책이며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 정책”¹⁴⁷⁵⁾이라고 절찬함으로써 인민민주주의 나라들의 소련에 대한 예속관계(隸屬關係)를 은폐하려하고 있었다.

소련 및 동유럽에서 인민민주주의 후기이론이 확립된 것은 앞에서 분석한 대로 1948년 이후의 일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당 이론가들이 이 수정된 소련의 이론에 짜 맞추고자, 이른바 “보다 과학성을 갖추기 위하여”라는 이유를 들어 그들의 역사를 다시 쓰고 김일성의 문언들을 개작한 것은 대체로 제3차 당 대회(1956. 4) 이후의 일이었다. 6·25의 전란과 휴전에 뒤이은 당내에서는 생사를 건 권력 투쟁, 즉 박헌영의 남로당계 숙청과 “연안파”의 “반당-반혁명분자” 유혈 소탕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 이수라장 속에서 체계적인 이론 확립의 작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1956년 4월 이후 ‘과학원 역사연구소’가 발행한 『조선통사』(전3권)는 한국의 현대사를 김일성 개인숭배를 주축으로 하여 재구성했고, 해방 이후의 북한의 실태를 모스크바의 인민민주주의 후기이론에 맞추어 재해석했다.¹⁴⁷⁶⁾ 이 『조선통사』(하)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정권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1474) 앞의 『김일성선집』 1, 1954년 판, pp. 415~416.

1475) 앞의 『김일성선집』 2, 1953년 판, p. 355.

1476) 1958년 9월에 발행된 『조선통사』(하) 서문은 “최창의 등 반당 반혁명 분자들이...우리 학계에 끼쳐놓은 악독한 사상 여독과의 투쟁”이 치열했음을 명시하는 동시에, 제3차 당 대회가 “특히 강조한바 우리나라 민족해방투쟁사의 자료의 수집 정리 사업”, 즉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사』의 확대 심화에 관해 언급했다. 끝으로 같은 책(하)(해방 이후 편)의 원고를 “보아주시고 동지적 비판을 주신-소련 과학원 동방학연구소 동지들에게 사의를 표명한다”고 말하면서 현대사 서술의 새로운 방향과 입장을 시사했던 것이다.

(1)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1946년 2월) :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는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민주의 민족통일전선에 입각한 인민 정권으로서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권이였다”¹⁴⁷⁷⁾ (밑줄은 저자)

(2) 북조선 인민위원회(1947년 2월) : “북조선 인민들은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북조선 인민위원회의 지도하에…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길에 들어섰다.”¹⁴⁷⁸⁾ (밑줄은 저자)

이 공식에 의하면 ‘인민민주주의 독재 정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해방 후 6개월 만에 평양에 출현했고, 이것은 그 후 1년 만에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정권’(북조선 인민위원회)으로 발전한 것으로 된다. 결국 해방 1년 6개월 후에 북한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라는 이름의 공산당의 1당(黨) 독재체제 하에 들어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있다. 모스크바의 관정 이론에 의하면 인민민주주의의 제1 단계는 레닌의 이른바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에 해당한다. 그런데 김일성은 뒤에 와서 모택동의 용어를 빌어 이것을 “인민민주주의 독재”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에 대한 중공당의 이데올로기적 영향의 중요한 측면을 명시한 것이었다.

‘인민민주주의’에 관한 모스크바와 북경(北京) 간의 차이와 이것이 북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뒤에 간단히 논하게 될 것이다. 우선 북한의 경우 “인민민주주의 독재”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단계적으로 구별한 것은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무의미한 형식론이었다. 왜냐하면 “인민민주주의 독재정권”이라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던 1946년 2월에는 이미 공산당의 독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당시 ‘조선민주당’의 조만식 당수는 이미 소련군 당국에 의하여 감금되어 있었고 당의 자주적 간부들은 대거 피신하였으며 공산주의자 최용건(崔庸健)이 당의 이름을 바꾸어 ‘북조선민주당’의 당수직을 차지했던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연립정부”나 “통일전선”이니 하는 것은 민주주의로 위장한 독재정치의 속임수에 불과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북한의 일련의 문언들이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프롤레타리아

1477) 앞의 『조선통사』(하). 1958년, 평양, pp. 26~27.

1478) 같은 책, p. 71.

트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민정권으로 규정한 것은 소련과 동(東)유럽에서 획일화(劃一化)된 인민민주주의의 후기 이론에 짜 맞추어 발표한 것이었다. 이제 인민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천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를 원칙으로 하여 통일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북한에서 이상과 같은 이론을 제시하고 있던 1958년까지에는 이미 중-소의 이데올로기 분쟁이 표면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것은 모든 나라의 공산당들을 견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몰아넣고 드디어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분열시킨 이른바 다원화(多元化) 현상을 초래했다. 인민민주주의 이론의 본질을 좀 더 구명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관한 중-소간의 주장의 차이점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10.9.9.9. 2006-2007 年度預算案

제1절 “새로운” 부르쥔아 민주주의 혁명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스탈린은 1948~49년에 수정된 인민민주주의 이론을 통하여 인민민주주의=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라는 공식(公式)을 만들고, 이 통일된 정의에 의하여 그의 동-남유럽 위성국들에 대한 이데올로기와 조직상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었다. 이 무렵 공교롭게도 중국 대륙에서는 ‘중국공산당’의 “인민혁명”이 승리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이른바 “모택동사상”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아연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모택동은 당면한 정치 정세의 변동과 이에 따라서 요구되는 그때그때의 혁명 전략에 맞춰 자기의 국가이론을 빈번히 바꿨다.¹⁴⁷⁹⁾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이론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 이념으로 된 것은 “신민주주의 국가”론이었다.

모택동은 1937년 9월에 실현된 제2차 국-공합작을 토대로 광범한 “항일 민족통일

1479) 1931년 11월 '중국공산당'이 江西省의 혁명근거지 瑞金에서 '中華소비에트共和國 임시중앙정부'의 성립을 선포했을 때 이 정권의 기본 성격을 1905년의 래닌의 공식을 그대로 따라 "農民主專政"(노동자와 농민의 민주주의 독재)라고 규정했다. 국가의 최고 정권 기관은 "全國勞農兵 소비에트 代表大會"였다.(헌법 제1조, 제2조) 그러나 이 벽지에는 공업 노동자란 거의 없었다. 그런데 日帝의 대륙 침공이 감행되자 항일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민족통일전선의 전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1935년 12월 11일, 이 미 모택동의 장악 하에 들어간 黨 중앙정치국은 종래의 속칭 '農勞소비에트共和國(中華소비에트共和國)'을 "노동자와 농민 외에도 모든 小부르조야 계급, 민족 부르조야 계급, (즉 지식분자, 자유직업인, 전문가, 소상인, 공업인 등)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는 "소비에트 인민공화국"으로 정권의 이름을 바꿀 방침을 결정했다. 그리고 국-공합작으로 항일 민족통일전선의 범위를 보다 더 넓힐 필요가 있었을 때는 "진정한 삼민주의"(孫文의 삼민주의의 새 해석)를 기본 정책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을 제창했다. 그 후 1940년 1월에 와서 모택동은 자기의 논문 『新民主主義論』에서 당시의 중국혁명을 "신민주주의 혁명"이라고 새로이 규정하고, 이 혁명을 통하여 수립될 과도적 국가를 "신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렀으며 이것은 "프롤레타리아트 지도하의 혁명적 제 계급에 의한 통일전선 독재" 하의 공화국이라고 설명했다. 毛澤東의 국가 이론은 이렇게 그의 혁명 전략에 부합되도록 편의적으로 변천해 갔던 것이다.

전선"을 형성함으로써 대일(對日) 전쟁을 수행할 것을 역설했다. 이와 동시에 '중국공산당' 자체의 통치 지역인 "해방구"를 확대하고 있던 1939년 12월, 그는 중국 혁명의 기본 성격을 "신민주주의 혁명"이라고 재 강조했고, 한 달 후인 1940년 1월에는 이것을 체계화하여 『신민주주의론(新民主主義論)』을 발표했다. 일-독의 패망과 항일 전쟁에서의 승리가 명확해진 1945년 4월 그는 『신민주주의론』을 보다 구체화하여 『연합정부론(聯合政府論)』을 발표하고 전후의 국내 국제 정세에 대처할 새로운 중국공산당의 혁명 전략을 제시했다. 그리고 1949년 6월에는 중국공산당 28주년을 기념하여 그는 새로이 『인민민주 독재론(人民民主獨裁論)』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중국 대륙의 장악이 목전에 박두한 상황에서, 머지않아 수립될 공산당 정권의 성격과 임무를 이론화하기 위하여 제창한 것이었다.

이상 일련의 모택동 논저들은 "인민민주주의" 또는 "신민주주의"국가로써 수립될 '중국공산당'의 새 정권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1949년 당시 중국공산당에서 통용되고 있던 "인민민주주의"(모택동은 이 용어를 "신민주주의"와 동의어로 사용했다)의 해명(解明)은 1948년 이전 소련에서 바르가, 프라이닌 등이 발표한 인민민주주의의 전기 이론과 내용이 대체로 유사했다. 소련과 그 동-남유럽 위성국들에서 인민민주주의의 후기 이론이 공식화 되면서 초기 이론이 매장되고 있을 무렵, 중국대륙에서는 모택동의 그런 초기 이론이 널리 보급하고 있었던 사실은 '소련공산당'과 '중국공산당'간에 사상적 긴장상태를 조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스크바-북경 사이에 동지적 밀월(蜜月)의 분위기가 한창 고조되고 있던 때라 이러한 긴장이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각자의 이론 전개에 저류(底流)에는 상호 대립의 찬 물결이 흐르고 있었다.

특히 티토틀 "민족주의적" 편향을 범했다고 하여 코민포름에서 추방한 상황에서 크레물린은 어떠한 이데올로기상의 이설(異說)도 용납하려 하지 않았다. 이설의 발단 논거가 되었던 이른바 사회주의로 가는 각국의 "독자적인 길"을 스탈린은 억제하고 있었다. 따라서 크레물린은 모택동의 신민주주의론 즉, 인민민주주의 이론도 소비에트의 이론가들이 설정한 개념의 한계 안에서 설명할 것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모택동의 이론은 소련의 이론보다 훨씬 이전에, 장기간의 혁명운동을 거쳐 구성된 것이었다. 따라서 그 내용은 인민민주주의를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와 동일시하는 소비에트의 후기 이론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제 간단히 모택동의 『신민주주의

론』의 요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939년 12월 모택동은 중국 사회의 성격을 *광스-레닌주의*의 분류 기준에 따라 분석했다. 그에 의하면 중국은 과거 3천년 간 봉건 사회로 남아 있었으나 1840년의 아편전쟁 이래로 외국 자본주의가 침입했기 때문에 봉건 사회 내부에는 큰 변동이 일어나서 “중국은 차츰 식민지적-반(半)식민지적-반(半)봉건적 사회로 바뀌었다”¹⁴⁸⁰⁾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혁명에서의 타도의 대상은 “봉건주의와 제국주의, 즉 제국주의 나라의 부르조아와 자국의 지주계급”으로 된다고 했다. 따라서 혁명의 임무는 “주로 이 두 개의 적에게 타격을 주는 투쟁, 즉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의 압박을 전복하는 민족혁명이고, 대내적으로는 봉건 지주의 압박을 전복하는 민주주의 혁명”¹⁴⁸¹⁾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반제-반봉건적 민주주의혁명”을 그는 “신민주주의 혁명”이라고 불렀다. 그의 신민주주의혁명은 표면상으로는 손문(孫文)의 “3민주의혁명”과 다를 바가 없었으며, 모택동 자신이 이러한 자기의 신민주주의 혁명은 1914년 손문이 주장한 3민주의혁명과 “기본적으로 일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⁴⁸²⁾ 그는 “3민주의 혁명”의 임무가 민족적 독립을 쟁취하고 봉건적 사회 제도(지주제 신분제)를 일소하는 것이었다고 하면서 “현 단계의 중국혁명의 성격”을 명료하게 설명했다.

현 단계의 중국혁명은 결국 어떤 성격의 혁명이 될 것인가? 부르조아 민주주의혁명일까, 그렇지 않으면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혁명일까? 명백히 후자가 아니라 전자다. 중국사회가 아직 식민지적-반(半)식민지적-반(半)봉건적인 사회인 이상 중국 혁명의 적이 아직은 주로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세력인 이상, 중국 혁명의 임무가 두 개의 주요한 적을 타도하는 민족혁명인 이상, 그리고 때로는 부르조아 계급이 이 혁명에 참가하는 이상, 비록 대(大)부르조아 계급이 혁명을 배반하고 혁명의 적으로 되었다고 해도, 혁명의 예봉은 역시 일반적으로는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적 사유재산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에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 단계의 중국 혁명의 성격은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부르조아 민주주의적인 것이다.¹⁴⁸³⁾

1480) 『中國革命과 中國共產黨』, 『毛澤東選集』(中文單卷本), 人民出版社(北京), 1964년, p. 589.

1481) 같은 책, p. 600.

1482) 같은 책, p. 611.

1483) 같은 책, pp. 609~610.

모택동은 1905년 무렵의 *러시아의 레닌*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의 발전이 미숙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성장이 취약한 후진적 중국에서 성급히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한다는 것은 *맑스주의적* 사회 발전법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한편 모택동은 당시의 중국 혁명의 제1 단계를 “*부르췌아 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하였지만 이것을 *부르췌아*가 지도하는 “*낡은 부르췌아 민주주의 혁명*”과 결코 동일시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권력의 의지와 욕구가 강렬한 공산주의자로서의 모택동은 *프롤레타리아트* (공산당)가 “지도(지배)하는 “*새로운 부르췌아 민주주의 혁명*”을 제창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장의 정당성을 그는 세계사적 조건의 변화에서 파악하려 했다.

그에 의하면 “제1차 제국주의 세계전쟁과, 그리고 최초로 승리한 *러시아의 사회주의 10월혁명*은 전 세계의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고 했다. 그리하여 그 이전에는 “*낡은 부르췌아 민주주의 세계혁명*”의 범주에 속해있던 중국의 *부르췌아 민주주의 혁명*은 그 뒤에는 “*새로운 혁명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바뀌어, 혁명의 진영에서 말한다면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의 세계 혁명의 한 부분이 되었다*”¹⁴⁸⁴⁾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세계의 자본주의 전선이 지구의 일각(이 일각은 전 세계의 6분의 1을 차지)에서 붕괴하고, 사회주의 국가가 이미 수립되고, 그 위에 이것이 모든 식민지-반식민지의 해방 운동을 도와 싸울 것을 표명하고 있는 시대, 자본주의 각국의 *프롤레타리아트*가 하루 또 하루.....식민지 반(半)식민지의 해방을 지원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시대, 이러한 시대에는 어떤 식민지, 반(半)식민지이건 그곳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 즉 국제 자본주의와 싸우는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이미 낡은 세계 *부르췌아 민주주의 혁명*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고 새로운 범주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그 새로운 범주는 이미 낡은 *부르췌아* 계급적인, 또는 자본주의적인 세계 혁명의 일부분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혁명의 일부분, 즉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세계 혁명*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다.¹⁴⁸⁵⁾

그런데 모택동은 과거 중국의 *부르췌아 민주주의 혁명*을 말할 때, 근본적인 이론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즉 (1) “*낡은 부르췌아 민주주의 세계 혁명*”이 마치 하나

1484) 『新 民主主義論』, 같은 책, p. 628.

1485) 같은 책, pp. 628-629.

의 통일체(統一體)로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처럼 잘못 전제하고 있었던 점 (2) 이런 전제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세계 혁명의 범주(範疇)를 논하고 있었던 점, (3) 식민지-반(半)식민지의 반제(反帝) 민족운동을 통틀어 세계 공산주의혁명 운동의 일부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점등이다. 그는 *러시아* 10월혁명 이후 조성된 새로운 국제정치적 조건에 의하여 “새로운”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의 역사적 필연성을 찾고 있었지만 그의 “새로운”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이론은 1905년 제정 *러시아* 때 *레닌*이 제창한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론*, 즉 “노동 동맹을 토대로 하고 *프롤레타리아트*가 지도하는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의 이론”을 약간 수정 계승한 것이었다.¹⁴⁸⁶⁾ 이러한 “새로운 특수한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 즉 “신민주주의 혁명”의 목표는 낡은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동시에 그것이 *부르조아* 혁명의 성격을 띠고 있는 한, 사회주의 국가로도 될 수도 없었다.¹⁴⁸⁷⁾

모택동의 “신민주주의”에 관한 설명에서 기본적인 초석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중국 혁명에 당면한 성격이다. 즉 (1) *부르조아*가 지도하는 낡은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이 아니다. (2) 그렇다고 사회주의 혁명도 아니다. 그것은 *프롤레타리아트*가

1486) 여기서 “修正”이라는 뜻은, 1905년의 *레닌*은 *러시아*의 “자유주의적 *부르조아*”를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 세력으로부터 배제한데 반해 1939년 이후의 모택동은 중국의 “민족 *부르조아*”를 명확하게 혁명 세력에다 포함시켰던 차이점을 말하는 것이다.

1487) 모택동은 자기의 ‘신민주주의’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현재의 중국의 *부르조아 민주주의혁명*은 이미 낡은 일반적 *부르조아 민주주의혁명*-이와 같은 혁명은 벌써 과거의 일이다-이 아니라, 새로운, 특수한 *부르조아 민주주의혁명*이다..... 우리는 이러한 혁명을 신민주주의혁명이라고 부른다. 이 신민주주의혁명은 세계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의 한 부분이며, 이것은 제국주의, 즉 국제 자본주의에 단호히 반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제국주의자와 ‘민족 반역자’, 반동분자에 대해서 행하는 몇 개의 혁명 계급의 연합독재이며 중국사회를 *부르조아 독재*의 사회로 바꾸는데 반대한다. 이것은 경제적으로는 제국주의자와 민족 반역자, 반동분자의 대자본 대기업을 몰수하여 국가 경영으로 남기고, 지주 계급의 토지를 분배하여 농민의 소유로 만들며, 동시에 일반의 사적 자본주의 기업을 그대로 두며 부농 경제를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은 한편에서는 자본주의를 위한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주의를 위한 전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중국의 현재의 혁명 단계는 식민지적, 半식민지적, 半봉건적인 사회의 終結 및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에 이르기까지의 하나의 과도 단계며 신민주주의혁명의 과정이다..... 이른바 신민주주의 혁명이란 *프롤레타리아트*가 지도하는 인민 대중의 반제-반봉건적 혁명이다. 중국사회는 이 혁명을 경과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사회주의의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신민주주의 혁명은 구미 제국의 역사에서의 민주주의 혁명과는 크게 다르다. 이것은 *부르조아 독재*를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도하에서 혁명적 계급의 통일전선의 독재를 수립한다.” 같은 책, pp. 609-610.

지도하는 “새로운, 특수한 부르쥔아 민주주의 혁명”이다. (3) 그 정치적 내용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도하에 있는 몇 개의 혁명계급의 “연합독재”다. (4) 신민주주의의 경제적 특징은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사회주의를 위한 전제를 만든다고 하는 주장이었다.¹⁴⁸⁸⁾

모택동은 혁명의 제1 단계에서 수립될 신민주주의 정권을 제2 단계의 사회주의 정권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과도적 국가형태”로 규정하였다.¹⁴⁸⁹⁾ 나아가서는 세계의 다양한 국가 체제를 권력의 계급적 성격을 기준으로 하여 (1) 부르쥔아 독재의 공화국, 즉 “넓은 민주주의 국가” (2) 프롤레타리아계급 독재의 공화국(소비에트공화국) (3) 몇 개의 혁명적 계급들에 의한 연합독재의 공화국(식민지, 반(半)식민지나라들에서 혁명을 통하여 수립하려는 과도적 국가)으로 분류하면서 그중 “신민주주의 공화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하였다.

……신민주주의 공화국은 한편으로는 넓은 형태의 구미식(歐美式) 부르쥔아 독재의 자본주의적 공화국과 구별된다. 자본주의적 공화국은 넓은 민주주의의 공화국이요 이러한 공화국은 이미 과거의 것으로 되었다. 신민주주의 공화국은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에트 연방 식의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의 사회주의 공화국과도 구별 된다……. 모든 식민지, 반(半)식민지 나라의 혁명이 일정한 역사적 시기에 취할 수 있는 국가형태로서는 오직 제3의 형태밖에는 없다. 이것을 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다.¹⁴⁹⁰⁾

모택동의 이러한 국가 분류의 방법에 의한다면, 예컨대 미국이나 스위스나 스웨덴이나 히틀러의 독일은 모두 자본주의 국가요, 따라서 부르쥔아 독재의 공화국의 범주에 속하는 동일한 국가 체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세 나라가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의 사회주의 공화국도 신민주주의의 공화국도 아니라고 해서 이 나라들의

1488) 毛澤東은 『中國革命과 中國共產黨』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공산당원은 누구나 다 다음의 사실을 알아야한다. 즉 ‘중국공산당’이 지도하는 전체 중국 혁명은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의 두 단계를 포함하는 혁명운동 전체이며, 이것은 성격을 달리하는 두 개의 혁명의 과정이며, 앞의 혁명의 과정을 달성하고서야 비로소 뒤의 혁명의 과정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新민주주의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의 필요한 준비이며, 사회주의 혁명은 민주주의 혁명의 필연적인 추세다…….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의 구별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동시에 이 두 혁명의 연결성을 확실하게 이해함으로써만 비로소 중국 혁명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가 있다. 같은 책, p.614.

1489) 같은 책, p.636.

1490) 위와 같음.

국가체제를 동일하다고 일반화한 것은 현실에 대한 독단적이며 본질적인 왜곡이었다. 국가체제에 있어서 미국은 나치스의 “제3제국(帝國)”과는 판이하며, 또한 이 독일의 “제3제국”은 스위스의 국가체제와도 하등의 공통성이 없었다.

레닌, 스탈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모택동에 있어서도 사유재산 제도의 존재가 용인되고, 정부가 비(非)공산주의 정당에 의하여 운영되는 한, 모든 국가체제를 일괄하여 “부르조아 독재의 공화국”이라고 획일화하는 절대적 오류를 범했다. 그러나 한 국을 포함하여 세계의 수백만 지식인들이 한때 이 명백한 오류를 진리로 착각하고 모택동을 맹종했던 사실은 실로 기이(奇異)한 현상이었다. 이런 오류는 정치를 경제 제도 즉 하부구조의 반영(反映)으로써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고찰하는 유물사관(唯物史觀) 자체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마스-레닌주의에서는 계급주의적 사회학은 있으나 정치학의 독자적 영역은 철저히 무시되어왔던 것이다.

제2절 ‘민족자본가 계급’의 “2중성”과 “이용” 가치

모택동은 『중국혁명과 중국공산당』에서 계급주의적 사회 분석에 따라 중국의 신민주주의 혁명 세력을 노동계급, 농민계급, 소(小)부르조아지(지식인, 소상공인, 수공업자 및 자유직업자) 및 민족 부르조아지(민족자본가계급)로 분류했다.¹⁴⁹¹⁾ 그리고 신민주주의 정권을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이상 “몇 개의 혁명계급들의 연합독재”¹⁴⁹²⁾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그는 장차 적대 세력이 될 수 있는 “민족 부르조아지”의 혁명성(革命性)을 크게 강조하지는 않았다. 민족 부르조아지는 제국주의의 압박을 받고 봉건주의에 다분히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상 혁명 세력의 하나로 될 수 있음을 시인했다. 동시에, 그는 그들이 경제적 정치적 취약성(脆弱性) 때문에 “매판적(買辦的) 대(大)부르조아지”를 추종하여 반(反)혁명의 조수(助手)가 될 위험성”을 지적했다. “민족 부르조아지”의 이러한 “이중성(二重性)”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신중

1491) 같은 책, pp. 603~608에서 상세하게 분석.

1492) 1949년, 北京정권이 수립되기 이전에는 몇 개의 혁명계급 이외에도 “몇 개의 혁명적 정당의 연합독재”를 역설했었으나, 1949년 이후 이 구절은 삭제되었다.

한 정책”을 채택할 절대적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¹⁴⁹³⁾

모택동은 민족 부르쵸아지 문제에 관하여 예민한 관심을 가지고 그 성격과 이용 가치를 분석한 최초의 공산주의자였다고 할 수 있다. 그 까닭은 공업 노동자의 수효가 미약했던 후진적 중국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에서, 자본가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절실한 문제였던 때문이다. 그가 민족 부르쵸아지를 “연합독재” 세력인 여러 계급중의 하나로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하게 설명한 것은 1949년 7월 북경정부 수립 직전에 발표한 『인민민주 독재론』에서였다. 여기서 그는 공산당 세력의 기반인 “인민”의 계급적 구성을 간단명료하게 분석하면서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인민이란 무엇인가? 중국에서는, 그리고 현 단계에서는, 노동자 계급, 농민 계급, 도시의 소(小)부르쵸아 계급 및 민족자본가 계급이다. 이 계급들이 노동자 계급과 공산당의 지도하에 단결하고 자기들의 국가를 만들고 자기들의 정부를 선출하고 제국주의의 앞잡이들 즉, 지주계급과 관료 부르쵸아 계급 및 이 계급들을 대표하는 국민당 반동파(國民黨 反動派)와 그 공범자들에 대해서는 전제(專制)를 실행하고 독재를 실행하여 이도당들을 억압하고…인민 내부에서는 민주주의 제도를 실행하고 인민에게는 언론, 집회, 결사 등의 자유와 권리를 준다……. 이 두 개의 측면, 즉 인민 내부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란 면과 반동분자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면을 서로 결합시킨 것이 곧 인민민주주의 독재다.¹⁴⁹⁴⁾

여기서 “공산당의 지도하에 단결”한다는 통일전선형성의 조건은 “인민”과 “반동분자”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민족 자본가”(민족 부르쵸아지)가 지배계급으로서의 “인민”속에 한 몫 끼우기 위해서는 공산당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그 지도를 거부할 경우 “민족 자본가”는 “매판자본가(買辦資本家)” 또는 “관료자본가”로 낙인을 찍히게 된다. 한편 “인민”안에 포섭된 민족 부르쵸아지는 공산당의 지배 체제를 강화하는 일시적 보조 장치의 역할을 하는데 불과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역량이 아직도

1493) 같은 책, p. 603. 모택동은 『新民主主義論』(1940)에서도 이상과 같은 관점을 견지하고 있었지만 “중국의 민족 부르쵸아지는 식민지의 부르쵸아지요, 제국주의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록 제국주의 시대에 처해있다고 해도 어떤 기간, 어느 정도는…혁명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들과 統一戰線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책, p. 634.

1494) 같은 책, p. 1364.

미약한 후진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지도하에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며 여러 혁명적 계급의 연합독재를 실시한다는 정치 전략은 모택동의 독창은 아니었다. 그러나 모택동은 *레닌*의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론과 이것을 토대로 한 *스탈린*의 중국 혁명론¹⁴⁹⁵⁾을 계승하면서도 *레닌*과 *스탈린*이 무시했던 민족 자본가를 혁명적 계급들 안에 포함시켰던 것이다.¹⁴⁹⁶⁾

*레닌*이 제정 러시아에서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을 구상했을 때(1905) *부르조아*를 혁명 세력에서 배제했던 정책을 모택동은 자기의 신민주주의 혁명의 구상에서는 채택하지 않았다. 그는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구 러시아 제국(帝國)은 이미 군사적 봉건적 제국주의며 타국을 침략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거기서는 러시아의 *부르조아* 계급은 아무런 혁명성도 없었다. 그곳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임무는 *부르조아* 계급과 투쟁하는 것이지 그것과 제휴하는 것이 아니었다. 중국에서는 이 나라가 식민지요 반(半)식민지이며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민족자본가 계급은 아직 어떤 시기에는 어느 정도 혁명성을 지니고 있다. 그곳에서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임무는 민족자본가 계급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혁명성을 무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제국주의 및 반(半)관료 군벌 정부를 반대하는 통일전선을 수립하는데 있다.¹⁴⁹⁷⁾

1495) *스탈린*은 1926년 11월 30일 *코민테른* 執行委員會 中國委員會에서 진술한 「중국혁명의 전망에 대하여」란 연설에서 중국의 제1차적 혁명의 특성을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인 동시에 *反제국주의적 민족해방 혁명*”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민족 *부르조아지*의 세력은 극도로 취약하고 뒤떨어져 있음으로, 이것을 혁명 세력으로는 간주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중국혁명의 계창자요 지도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중국 농민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아무래도 중국의 *프롤레타리아트*와 그들의 당의 수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스타リソ全集*』 第八卷, 大月書店版 pp. 404~405. 이에 관해서는 다시 후술할 것이다.

1496) 1920년 7~8월 *코민테른* 제2차 대회에서 *레닌*은 식민지 또는 후진국의 혁명 운동이 *부르조아 민주주의* 운동이라기보다는 *反제국주의적 민족혁명* 운동이라는 점을 시인하면서 이 나라들의 *부르조아지*는 민족운동을 지지하는 동시에, 대부분의 경우 착취국의 *부르조아 계급*과 결탁하고 있다고 하여 민족 자본가를 불신하였다. 그리하여 공산주의자들은 “식민지의 *부르조아 해방운동*이 진정으로 혁명적인 때,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농민과 피착취 대중을 혁명 정신으로 교육하고 조직하는 것을 그 운동의 대표자들이 방해하지 않는 때에만 그들을 지지할 것”이고, “이러한 조건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이 나라들의 공산주의자들은 개량주의적 *부르조아지*와 싸울 것”이라는 전략을 제시했다. 즉, *레닌*은 후진국의 민족 자본가들이 혁명적이며 동시에 용공적인 한 공산주의자들은 이들의 *부르조아* 해방 운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그렇게 민족 자본가들의 혁명성을 극히 소극적으로밖에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Lenin, *Selected Works*, Vol.3, Moscow, 1967, pp. 457~458.

1497) 앞의 『*毛澤東選集*』(一卷本), p. 634.

그렇다고 하여 혁명의 주도권을 서(西)유럽의 부르쥔아 민주주의 혁명 때에서와 같이 부르쥔아자에게 맡기자는 것도 아니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도하에 부르쥔아 혁명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택동의 신민주주의 혁명론은 레닌의 부르쥔아 민주주의 혁명 이론과 일치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이름에서 공산당의 독재 권력을 전력을 기울여서 추구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부르쥔아 민주주의 혁명의 주도권을 자기들의 기본적 적대 계급인 부르쥔아자에게 맡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했다. 그리하여 제시한 것이 부르쥔아 민주주의 혁명을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지도하에” 수행하여야 한다는 기묘한 강변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의 권력에 대한 의지를 객관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하여 모택동은 한편으로는 중국 민족 부르쥔아지의 사회적 취약성과 정치적 “이중성”을 비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정치적 각성과 혁명적 철저성을 줄곧 강조해 왔다. 그는 『인민민주 독재론』에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인민민주 독재에서는 노동자 계급의 지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노동자 계급만이 가장 원대한 식견을 가지고 있으며 대공 무사(大公無私)하며, 가장 풍부하게 혁명적 철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혁명의 전 역사는 노동자 계급의 지도가 없이는 혁명이 실패하고 노동자 계급의 지도가 있으면 혁명이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중국의 소(小)자본가 계급 및 민족자본가 계급은 여러 번 혁명을 지도했지만 언제나 실패했다.…민족자본가 계급은 현 단계에서는 대단히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중국은 나라의 경제, 인민의 생활에 해롭지 않고 유리한 도시와 농촌의 자본주의적 요소를 모두 이용하며, 민족자본가 계급과 단결하여 공동으로 분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들의 현재의 방침은 자본주의를 제한하는 것이며 자본주의를 일소(一掃)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민족자본가 계급은 혁명의 지도자로는 될 수 없으며, 국가 권력 안에서 주요한 지위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민족자본가 계급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그들의 연약성(軟弱性)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들은 장래에 대한 원대한 식견이 없으며, 충분한 용기가 없으며, 게다가 그중의 많은 사람들이 민중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⁴⁹⁸⁾

모택동의 ‘신민주주의’ 이론 구성은 1948년 이전 바르키와 프라인 등 소련 학자들이 제창했던 인민민주주의의 전기 이론과 상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유사

1498) 같은 책, p. 1368.

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모택동의 신민주주의 이론은 소련 및 동(東)유럽 제국의 인민민주주의 전기 이론보다는 6~7년이나 앞서 제시되었다. 위의 소련 이론가들이 모택동의 신민주주의 이론의 영향을 받고 자기들의 이론을 전개했던 것인지 아닌지를 밝힐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바르가*가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의 실행이 가능한 원형으로써 외(外)몽고의 경험에 관해 언급하면서도 ‘중국공산당’의 화북(華北) 내 “해방구”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¹⁴⁹⁹⁾ 그는 모택동의 신민주주의 이론이나 실천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중국의 반제-반봉건적 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요구되는 통일전선 전술은 모택동의 독창이 아니었다. 그것은 1920년 *코민테른* 제2차 대회에서 채택된 방침이었음으로서¹⁵⁰⁰⁾ 소련의 이론가들은 이에 관해서는 아마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1930~40년대에 와서는 *모스크바*와의 연락이 거의 두절된 상태에 있던 중국의 “해방구”에서 모택동이 주장한 신민주주의 이론을 소련 이론가들은 잘 알지도 못했고, 알았다고 해도 자기들의 권위 의식 때문에 이것을 경시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하튼 모택동은 자기가 주장하는 신민주주의 제도는 어디까지나 중국 역사의 “특수성”에서 나온 것이며, 소련식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체제와는 다르다는 점을 1945년 4월 ‘중국공산당’ 제7차 전국대표자대회에서의 「정치보고」(『연합정부론』)에서 다음과

1499) Benjamin I. Schwartz, *Communism and China Ideology in Flux*,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p.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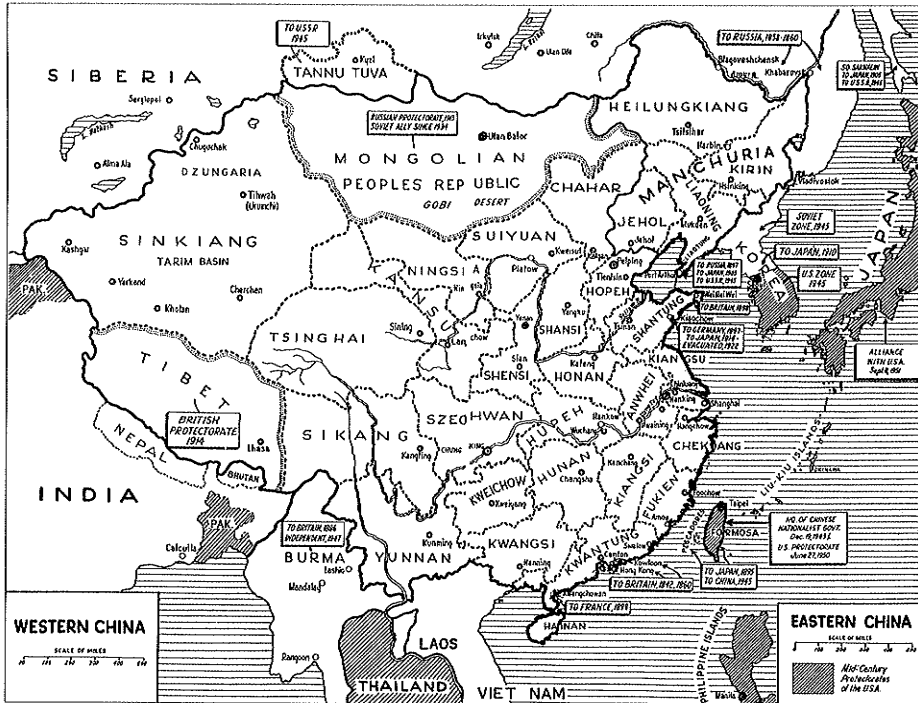
1500) 식민지-반(半)식민지적인 나라에서 *프롤레타리아트*는 반제-반봉건적 민족혁명 운동(부르조아 민주주의자 포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이른바 「민족 문제와 식민지 문제에 관한 *테제*」는 1920년 7~8월 *코민테른* 제2차 대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테제*」에 따라 ‘중국공산당’은 민족 부르조아지의 혁명성을 인정하고 이것을 이용해야 한다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었다. 그리고 1922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1차 ‘극동 근로자대회’에서는 이 「*테제*」에 구현된 전술을 ‘중국공산당’이 실행하는 문제에 관해 상세한 토론이 전개되었다. 이 대회에 뒤이어 1922년 5월 ‘중국공산당’은 杭州에서 제2차 대표대회를 열고 당의 선언을 발표하는 한편 당의 최고강령과 최저강령을 작성하였다. 최저강령은 당이 제국주의와 군벌을 반대하는 “민주주의혁명”을 지원하고 “노동자, 반농 및 小부르조아지의 민주주의적 통일전선”을 조직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전술을 토대로 하여 제1차 국-공합작(1923~27)이 시도되었던 것이다. 이때의 통일전선전술은 *코민테른*이 구상한 것이었으며 반드시 모택동의 독창은 아니었다. 그는 항일전쟁 때 이 전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민족 부르조아지」를 포함하는 혁명적 계급의 “연합독재”의 신민주주의 이론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C. Brandt, B. Schwartz and J. K. Fairbank, Section I and II, *A Documentary History of Chinese Communism*, George Allen & Unwin Ltd., 1952 및 Franklin W. Houn, *A Short History of Chinese Communism*, Prentice-Hall, Inc. 1967. pp. 21~34 참조.

같이 천명했다.

일부에서는 공산당이 득세하면 러시아를 본받아 노동자 계급의 독재와 1당 제도를 취하지 않을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러시아의 역사가 러시아의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거기에서는……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정당들은 인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사람들은 오직 볼셰비끼 당만을 지지했다. 그 때문에 러시아의 그러한 상태가 만들어졌다……. 중국의 현 단계의 역사는 중국의 현 단계의 제도를 만들어 낼 것이다. 장기간에 걸쳐 우리들에게 아주 필요한, 아주 합리적이며 동시에 러시아의 제도와는 구별되는 특수한 형태, 즉 몇 개의 민주적 계급이 동맹한 신민주주의의 국가형태와 정권 형태를 만들어 낼 것이다.¹⁵⁰¹⁾

중국의 현 단계의 역사를 이렇게 제정(帝政) 러시아 말기의 그것과 구별하면서 “러

WESTERN CHINA- EASTERN CHINA



出典, F. L. Schuman *International Politics*, McGraw-Hill Book, Company, 1969, p.540~541

1501) 앞의 『毛澤東選集』(中文 一卷本), p. 963.

시/의 제도와는 구별되는 특수한 형태”의 정권의 창출을 강조한 모택동의 혁명노선은 ‘중국공산당’의 세력이 협소한 연안(延安) 지방에 국한되어 있었을 때는 스탈린에게 중대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모택동이 혁명전쟁을 통하여 중국 본토를 정복하고 북경(北京)정부를 수립하게 되자 크레믈린은 그것을 표면상 크게 환영하면서도 ‘중국공산당’의 독자적 노선이 제창되지 않을까 하고 예민한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모택동이 중국적 “특수성”을 지나치게 내세울 때는 필연적(必然的)으로 사회주의에로의 “중국의 길”, 즉 소련을 선두로 하는 단일적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노선으로부터 이탈(離脱)하여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러한 사태가 1956년 이래의 중-소 분쟁의 양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제4장

인민민주주의를 둘러싼 중-소의 대립

제1절 ‘모택동사상’에 대한 스탈린의 견제

1949년 9월 29일, 즉 모택동이 중국 대륙을 장악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기 직전, ‘중국인민 정치협상회의’는 신 정권의 잠정 헌법으로써 「중국인민 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을 채택했다. 이 「공동강령」의 제1조는 인민공화국의 국가 권력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신(新)민주주의 즉 인민민주주의의 국가이며, 노동계급이 영도하고, 노농동맹을 기초로 한 민주적 제 계급과 국내의 제 민족을 집결하여 인민민주 독재를 실행하며, 제국주의 봉건주의 및 관료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중국의 독립, 평화, 통일, 부강을 위하여 투쟁한다.¹⁵⁰²⁾ (밑줄은 저자)

여기서 모택동은 *모스크바*로부터 나온 “인민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자기의 “신민주주의”의 그것과 동일시했다. 그러나 그는 “인민민주주의” 개념에서는 동(東)유럽 및 소련의 해석을 수용한 일 없이, 자기의 독자적 이론체계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었다. 즉, 중국에서는 “인민민주 독재”를 소련과 동(東)유럽의 후기 이론에서 엄격하게 규정되었던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 영도하의 몇 개의 “민주적 제 계급”-*프롤레타리아트*, 농민, *소부르쵸아지* 및 민족 *부르쵸아지*-의 “연합독재”라고 했다. 모택동은 이러한 “연합독재”를 1949년 7월에 『인민민주 독재론』을 발표한 이후에는 “인민 민주독재”라는 자기의 새로운 용어로 표현했던 것이다.

그러나 소련의 정치가와 이론가들은 신 중국의 정치권력을 규정할 때, “인민민주

1502) 日本國際問題研究. 中國部分編, 『新中國資料集成』, 第一卷, 1964년에 수록된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共同綱領」에서 인용.

독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조차 애써 피하고 있었다.¹⁵⁰³⁾ 이와는 반대로 ‘중국공산당’의 이론가들은 모택동이 “인민민주 독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전개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의 국가이론을 더욱 발전시켰다”고 하면서 그의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이론상의 공헌을 강조했던 것이다.¹⁵⁰⁴⁾ 동시에 모택동이 “민족부르조아지”를 혁명 세력의 하나로 간주하고, 그들을 지배 계급의 하나로 신 정권 내에다 참가시켰다는 것을 ‘중국공산당’은 모택동의 독창이라고 선전하고 있었다.

회고컨대 코민테른의 이론가들은 벌써 모택동 이전에 중국 사회를 *맑스-레닌주의*의 척도를 가지고 분석하면서, 반(半)식민지적 상태와 반(半)봉건적 사회에 머물러 있었던 후진적 중국에서는 제1단계의 혁명은 반(反)제국주의적, 반(反)봉건적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정식화(定式化) 했던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형”의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은 구형의 *부르조아 독제*를 확립하며,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 아니라 비(非)자본주의적, 즉 사회주의적인 길을 걷게 한다는 것이었다. 중국 혁명에 관한 이러한 1920년대의 전략은 *크레믈린*의 혁명 문건에서는 하나의 상식이었다.

1926년 11월 30일 *스탈린*은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안의 중국위원회에서 행한 「중국 혁명의 전망」이란 제하의 연설에서 중국 혁명의 기본적 특성을 세 가지로 규정하였다. 즉, (1) 중국 혁명은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인 동시에 *반제국주의적 민족해방* 혁명이며 (2) 중국의 이러한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은 중국의 민족 *부르조아지*가 취약하고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트*가 지도해야 하며, (3) 소련의 존재 및 그의 혁명적 경험과 원조는 제국주의 및 봉건적 잔재에 대한 중국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¹⁵⁰⁵⁾ 이러한 전제에서 *스탈린*은 장차

1503) 소련의 지도자가 중공당의 “인민 민주독제”를 공인하는 말을 처음으로 한 것은 1956년 늦가을의 일이었다.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反蘇抗爭이 일어나고 있을 때, *호루시초프*는 모택동의 지원을 얻기 위하여 그해 11월 26일 *모스크바*의 중국대사관을 방문했다. 여기서 그는 중국이 “인민민주 독제” 형태의 국가를 수립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한다. 이때까지는 북경 정권의 성격을 “人民民主” 또는 “人民의 支配”라고 설명함으로써, 중국의 국가형태가 소련 위성국인 *동유럽*의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을 따름이다. Arthur A. Cohen, *The Communism of Mao Tse-tung*,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p. 100.

1504) 같은 책, p. 77.

1505) 『スターリン全集』, 第八卷, 大月書店版, pp. 404~405.

수립될 중국의 혁명정권의 “과도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예견하고 있었다.

나의 생각으로는 중국에서의 장차의 혁명 권력은 그 성격으로 보아 1905년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던 것 같은 권력, 즉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민주주의적 독재와 유사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권력은 주로 반(反)제국주의적 권력이 되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것은 중국의 비(非)자본주의적 발전,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사회주의적 발전에로의 과도적 권력이 될 것이다. 중국의 나아갈 방향은 여기에 있다.¹⁵⁰⁶⁾ (밑줄은 저자)

1927년까지에 정착된 이러한 스탈린의 중국혁명 이론은 그의 정적인 *프로츠카*에 의하여 세찬 도전을 받은 일이 있지만¹⁵⁰⁷⁾ 그의 이론은 그가 사망할 때까지 소련의 공식 혁명이론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리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을 때 소련의 이론가들은 이 정권의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서 1920년대에 스탈린이 전망했던 *이데올로기적* 시야 안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들은 중국의 혁명정권이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정권이 될 수 있다는 스탈린의 논점을 고수했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견해로써 *코민포름* 기관지 「항구적 평화를 위하여, 인민민주주의를 위하여」는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1주년을 기념하는 사설에서 모택동의 주장 그대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중국의 국가 권력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가 아니다. 이 점에서 그것은 유럽의 인민민주주의 제국의 국가 권력과 다르다. 유럽의 인민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인민민주주의의 독재 권력은 노동자 계급, 농민, 소(小)*부르조아지*, 민족 *부르조아지* 및 그 밖의 민주적 분자들이 참가한 인민민주주의적 통일전선의 국가권력이요, 이러한 통일전선은 노동자와 농민의 동맹을 기초로 하고, 노동자 계급에 의하여 지도되고 있다.¹⁵⁰⁸⁾ (밑줄은 저자)

중국의 인민민주주의가 현 단계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가 될 수 없다는 조

1506) 같은 책, pp. 411~412.

1507) *프로츠카*의 중국혁명관에 관해서는 「중국 혁명에서의 계급 관계」(1927년 4월), 「중국 혁명과 스탈린 동지의 *태제*」(1927년 5월) 등의 논문 참조(『*트로츠키 選集*』現代思潮社版, 第六卷에 收録). 그리고 간명한 설명은 Benjamin I. Schwartz, *Chinese Communism and the Rise of Mao*, Harvard University Press, 1951의 여러 곳에서 論及되고 있다.

1508) *For a Lasting Peace, for a People's Democracy*, September 29, 1950자, 社説.

건을 이 사실은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중국에서의 인민민주주의 국가권력의 성격은 최근까지 식민지였던 이 나라의 제 조건에 의하여 규정된다. 현재 중국의 근로 인민들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를 수단으로 하는 사회주의건설이라는 임무에 직접 당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¹⁵⁰⁹⁾

*모스크바*의 견해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던 *코민포름* 기관지의 위와 같은 사실은 모택동의 이론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두 개의 주장을 침부함으로써, 북경정권을 소련의 정치적 권위와 *이데올로기* 통제 하에 두려는 의도를 명백하게 표시했다. 즉, 첫째로는 중국 혁명의 승리는 소련의 역할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요,¹⁵¹⁰⁾ 둘째로는 ‘중국공산당의 *맑스-레닌주의*의 이론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미숙하다는 것이었다.’¹⁵¹¹⁾

이와 같은 주장 안에 숨어있던 뜻은, 중국공산당의 승리는 바로 소련의 덕분 때문에 달성되었다는 것, 앞으로는 소련으로부터 *맑스-레닌주의*의 올바른 이론을 더욱 습득함으로써만 비로소 ‘중국공산당’은 정확한 당 노선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 소련이 지도하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 등이었다. 이와 함께 *스탈린*은 동(東)유럽에 대해 억압적 조치와 강제적 획일화를 단행했던 것과는 달리, 중국공산당에 대해서는 그들의 자존심을 손상시켜 반발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전례 없는 관용과 인내의 태도로 임했다. 그러면서도 *스탈린*은 중국공산당에 대한 소련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상의 우위와 정치적 지도를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아울러 *스탈린*은 중국의 사회, 경제적 “특수성” 때문에 중국의 인민민주주의(=인민민주독재)와 보다 선진적인 동(東)유럽 제국의 인민민주주의(=*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간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은 하면서도 ‘중국공산당’이 그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

1509) 위와 같음.

1510) 위의 사실은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중국 혁명의 승리는 소련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의하여 가능했다. 중국 혁명의 승리는 *하틀러*의 *파시즘*과 일본 제국주의를 *소비에트* 군대가 절멸시킨 결과다.” 위와 같음.

1511) 이 사실의 설명은 다음과 같았다.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이론의 보다 깊은 인식을 터득해야 한다는 것을 자기들의 가장 긴급한 임무라고 간주한다. 이 임무를 완성하게 될 때는 정확한 지도, 인민들과의 긴밀한 유대, 보다 큰 혁명적 경각심,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한 충실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음.

조함으로써 장차 사회주의에로의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 경계하고 있었다.¹⁵¹²⁾ 스탈린의 생각은 분명했다. 즉 중국의 현 단계의 인민민주주의는 동(東)유럽 제국의 전기 단계(1944~1948)의 인민민주주의와 흡사하며 후기 단계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도 인민민주주의의 후기의 발전 단계에서는 모든 인민민주주의가 거쳐 간 유일한 길, 즉 소련식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다.¹⁵¹³⁾ 요컨대 스탈린은 중국의 장차의 발전이 소련의 모델로부터 이탈하지 못하도록 이데올로기상의 굴레를 씌우려 했던 것이다.

한편 모택동은 새 정부수립을 전후한 어려운 상황에서 소련의 지지와 원조를 획득할 필요가 있었고 소련공산당의 선구적 경험을 배우지 않을 수 없었다. 모택동, 유소기(劉少奇) 등 당의 최고위 지도층은 소련에 대하여 과대하게 예찬하고, 스탈린의 문언을 빈번하게 인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유소기는 모택동을 심지어 “맑스-엥겔스-레닌-스탈린의 제자”¹⁵¹⁴⁾라고까지 불렀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에 대한 소련의 이데올로기적 지배만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중국적 “특수성”에 맞는 중국적 공산주의 이론을 확립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공산당’이 이데올로기의 독립성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나선 것은 제2차 세계 대전 말기 때부터였다. 유소기는 1945년 5월 14일 연안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제7차 전국대회’ 때에 진술한 ‘보고’에서 처음으로 “모택동사상”이란 용어를 내세우고 이것이야말로 “중국에 적용되면서 발전하고 있고, 완성되고 있는 중국화 된 맑스주의이며, 중국 인민의 혁명과 건국의 완전한 이론”¹⁵¹⁵⁾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모택동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이론과 중국 혁명의 실천과를 통일한 사상이며, 중국의 공산주의요, 중국의 맑스주의”¹⁵¹⁶⁾였다. 또한 유소기는 맑스주의를 “중국화”하고, “맑스주의를 유럽적 형태로부터 중국적 형태로 바꾸는…그 어려운 사업을 성공적으

1512) 당시 주코프(E. Zhukov)와 같은 소련의 이론가는 아시아와 유럽에 있어서는 “사회 발전의 속도와 구체적 형태상의 차이만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시아의 인민민주주의는 그 기본적인 성격에 있어서는 유럽의 인민민주주의와의 사이에 하등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세웠던 것이다. ジュコフ, 「第二次世界大戦後の民族的 植民地 人民に関する諸問題」, 《新時代》, 第六號 p. 2.

1513) Benjamin Schwartz의 앞의 책, *Communism in China: Ideology in Flux*, pp. 56~57.

1514) 『劉少奇選集』, 上卷(中文), 人民出版社(北京), 1981년, p. 335.

1515) 위와 같음.

1516) 같은 책, p. 333.

로 수행한” 모택동이야말로 “단지 중국 유사 이래의 최대의 혁명가요 최대의정치가 일 뿐만 아니라, 또한 중국 유사(有史) 이래의 최대의 이론가, 과학자”¹⁵¹⁷⁾라는 최고 절찬을 서슴치 않았다.

이러한 “모택동사상” 찬양은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에 대하여 소련이 간섭할 여지를 봉쇄하자는 것이었다. 유소기의 말과 같이 모택동이 중국공산주의 운동에 관한 한, “최대의 혁명가, 이론가”라면 스탈린은 이론이나 실천에 있어서 중국공산당을 감히 지도할 권리를 가질 수가 없었다. 유소기는 더 나아가서 그렇듯이 위대한 모택동사상이야말로 “중국의 프롤레타리아트와 전 근로인민이 그것에 의하여 자기를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정확한 이론이요 정책”이며, 중국공산당의 “유일한 옳은 지도사상”¹⁵¹⁸⁾이라고까지 단정했다. 그렇다면 모택동사상 이외에 다른 어떤 이론이나 지도사상이 모스크바로부터 간섭해 들어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모스크바로서는 북경의 이러한 모택동사상의 절대화(絶對化)를 달가워할 까닭이 없었다. 그러므로 모스크바는 “모택동사상”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일이 한 번도 없었으며,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유소기는 심지어 모택동사상은 비단 “중국의 공산주의” 일뿐만 아니라 “각국 인민의 해방 운동, 특히 동양에 있어서의 제 민족의 해방 운동에 대해서도 중요하고 유익한 공헌을 하게 될 것”¹⁵¹⁹⁾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러한 주장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식민지 또는 반(半)식민지, 반(半)봉건사회라는 점에서 중국과 마찬가지로 혁명적 임무를 지니고 있다는 이론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것은 물론이다. 동시에 이러한 주장에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 후진 지역의 반제-반봉건적 혁명은 선구적인 “모택동사상”을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즉 ‘중국공산당’이 후진지역의 혁명 지도권을 가져야한다는 요구가 암시(暗示)되고 있었다. 1946년 초 유소기는 미국의 언론인 *안나 루이스 스트롱*(Anna Louise Strong)여사와의 면담에서 이러한 견해를 보다 구체적으로, 대담하게 진술했다.

... 맑스와 레닌은 유럽인이었다. 그들은 유럽의 역사와 문제들을 유럽어로 썼고 아시

1517) 같은 책, p. 335~337.

1518) 같은 책, p. 334.

1519) 같은 책, p. 335.

이나 중국에 관해서는 좀처럼 논하지 않았다. 마스주의의 기본 원칙은 모든 나라들에 적용될 수 있지만, 그의 일반적 진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혁명적 실천에 적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과제다. 모택동은 중국인이다. 그는 중국문제를 분석하고 중국인민을 그들의 투쟁에서 승리로 이끌고 있다. 그는 마스-레닌주의의 원칙을 활용하여 중국의 역사와 실천적 제 문제를 해명하고 있다. 그는 그러한 일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모택동은 중국적 또는 아시아적 형태의 마스주의를 창조했다.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사정은 [중국과] 유사하다. 중국이 택한 길은 이 나라들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¹⁵²⁰(밀줄은 저자)

마스주의에 대한 모택동의 독창적 공헌을 대담하게 강조한 유소기의 이러한 주장에 스탈린은 결코 동의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스탈린은 이미 동(東)유럽의 몇 나라에서 인쇄 중에 있었던 모택동에 관한 스트롱의 저서를 소련에서는 출판하지 못하도록 간섭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던 것이다.¹⁵²¹ 이런 일이 있은 후 1949년 11월 북경에서 열렸던 '아시아 태평양제국 노동조합회의'에서 유소기는 대언장담했다. "제국주의를 격파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하는데 중국인민이 걸어온 길은 많은 식민지 및 반(半)식민지 나라들의 인민들이 자기들의 민족적 독립과 인민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걸어야 할 길이며, 이 길은 모택동의 길이다"¹⁵²²라고.

이런 말은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공산주의 혁명의 지도권은 당연히 중국공산당이 장악해야한다는 의도를 강하게 암시한 것이었다. 물론 모스크바의 대변인들은 이러한 모택동의 "독창적인 길"을 좀처럼 시인하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 혁명을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서의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위한 일종의 기준으로 보는 것은 위험한 일"¹⁵²³이라고까지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스탈린의 중국공산당에 대한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규제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산당은 독자적 주

1520) Anna Louise Strong, 'The Thought of Mao Tse-tung', *Amerasia*, XI, No.6, June, 1947.

1521) Stuart Schram, *Mao Tse-tung*, Penguin Books, 1967, p. 254.

1522) 《文匯報》(上海), 1949년 11월 2일호, A. Doak Barnett(ed), *Communist Strategy in Asia*, 1963, p. 17에서 재인용

1523) 이것은 예·쭈코프(E. Zhukov)가 1951년 11월에 열렸던 '소련 과학아카데미 동방연구소'의 과학자 회의에 제출한 논문에서 진술한 말이다. 이 말이 있은 후 아시아의 공산주의 혁명의 지침으로써의 劉少奇的 이른바 "모택동의 길"이란 개념은 모스크바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중공당의 간행물에서는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Arthur A. Cohen, 앞의 *The Communism of Mao Tse-tung*, p. 91.

장을 포기하지 않았다.

‘중국공산당’은 전술한 바와 같이 소련식 용어인 “인민민주주의”라는 말을 모택동의 조어(造語)인 “신민주주의”라는 말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은 했지만, 인민민주주의라는 말보다는 “신민주주의”란 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했다. 그렇게 했던 저의는 단순했다. 즉 모택동의 ‘신민주주의’ 이론이 소련식 ‘인민민주주의’ 이론보다 시기적으로 몇 년을 앞서 나왔음으로, ‘중국공산당’이 “신민주주의, 즉 인민민주주의”라는 모택동식의 표현을 사용할 때는 암암리에 모택동을 이 면에서의 이론적 선구자로 추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었다. 나아가서 이와 같이 모택동이 인민민주주의의 이론적 선구자(先驅者)라면 동(東)유럽의 인민민주주의의 발전까지도 모택동이 해석하는 신민주주의의 개념 안에다 포함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2절 사회주의적 개조의 방법 : 설득이나 강제나

중국공산당이 자국의 국가권력 성격을 모택동의 독자적 용어인 “인민민주 독재”로 규정하여 소련이 해석하는 인민민주주의와는 확연하게 구별하려 했다. 이 사실은, 비록 소련의 이론가들이 중국의 특수성을 소극적으로 시인했다고 해도 *모스크바*에 대한 모택동의 일종의 도전이 아닐 수 없었다. 요컨대 소련의 이론가들은 중국의 특수성을 시인은 하면서도 *이데올로기*상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모택동의 “창조적” 능력은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한편 중국의 이론가들은 이에 대해 중국의 특수성을 극력 강조하는 동시에 모택동의 “창조적” 능력을 찬양했던 것이다.

모택동의 “인민민주독재” 이론이 소련식(스탈린식) 혁명 이론과 정면으로 대립했던 면은 모택동이 “민주적 방법”에 의한 사회주의 실현을 주장한 데 있었다. 즉, 모택동은 일단 “인민들”(노동계급, 농민 계급, 소시민 계급 및 민족 자본가계급)이 강력한 국가 권력을 수립하고 난 후에는 강제적 방법이 아니라 민주적 방법, 즉 “설득(說得)”에 의하여, 다시 말하면 당연히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프롤레타리아트* 이외의 인민들의 교육과 개조를 통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하였다.¹⁵²⁴ 모택동은 “인민민주 독재”의 국가에 있어서 반동계급에 대해서는 “강제적으

로” 개조하는 활동을 벌여야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인민의 일부인 ‘민족 부르조아지’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하여 개조(改造)할 수 있다는 방법을 내세웠다.¹⁵²⁵⁾

이상 모택동의 견해는 스탈린이 해석한 정통적 맑스-레닌주의 이론과는 두 가지 점에서 대립되고 있었다. 첫째로 모택동은 중국의 “인민민주의 독재”체제 하에서는 민족 부르조아지까지를 포함한 모든 비(非)프롤레타리아적 인민들을 강제적 방법이 아니라 민주적 방법에 의하여 사회주의적으로 교육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주장은 스탈린의 관점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스탈린은 “계급들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격렬한 투쟁에 의하여 폐지된다는 것이 레닌의 공식”¹⁵²⁶⁾이라고 강조하면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계급투쟁의 첨예화는 피할 수 없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었다.¹⁵²⁷⁾

1524) 毛澤東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人民의 국가가 있고서야 비로소 人民은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체적 규모로 민주적 방법에 의하여 자신을 교육하고 자신을 改造하여 국내외의 反動派의 영향(그 영향은 현재로서는 아직 대단히 크고 또한 오랫동안 존재하며 아주 급속하게 절멸할 수는 없을 것이다)으로부터 이탈하여 인민 자신이 舊 사회로부터 지녀온 나쁜 습관과 사상을 개조하고, 인민 자신을 반동파가 끌어들이려는 그릇된 길을 밟지 않게 하는 동시에 계속 전진시키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를 향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이 이 면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민주적 방법, 즉 설득이라는 방법이며, 강제의 방법은 아니다. 인민이 法을 어기면 역시 처벌받고, 감옥에도 들어가야 하고, 사형도 받아야한다. 그러나 이것은 몇 개의 특수한 경우요, 반동 계급에 대한 하나의 계급으로써의 독재와는 원칙적으로 구별된다.” 앞의 『毛澤東選集』(中文一卷本), p. 1365.

1525) 모택동은 아래와 같이 썼다 “...나머지는 민족 부르조아지 인데, 현재의 단계에서도 그들 중의 다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적절한 교육 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 장차 사회주의를 실시하는 경우, 즉 私營 기업을 國有化하는 경우에는 그들에 대해 교육과 개조를 더욱더 추진한다. 인민의 수중에는 강대한 국가 기관이 있다. 따라서 민족 부르조아지의 배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같은 책, p. 1266. 그런데 非프롤레타리아의 小부르조아 諸階級을 “교육”하여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은 모택동의 독창적 발상은 아니었다. 스탈린도 1924년 4월 그의 『레닌주의의 기초』에서 레닌의 글을 인용하면서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 하에서는 “사회주의적 생산의 조직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小부르조아 諸階層을 재교육하고 개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앞의 The Essential STALIN, p. 124. 스탈린은 이런 방법이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데 대해 모택동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가 아닌 “인민민주의 독재”에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1526) 「全 聯邦共產黨 (불셰비끼)내의 右傾에 대하여」라는 1929년 4월의 연설. 앞의 Joseph V. Stalin, Selected Works, p. 255.

1527) 스탈린은 위의 演說에서 사회주의에로의 이행기에는 첫째로 프롤레타리아트와 자본주의적 分子들 간에는 생사를 건 “최후의 결전”이 전개된다는 것. 둘째로는 이 시기에는 자본주의의 분자들은 “자기들의 생존의 마지막 날이 닥쳐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에 더욱 대항하며, 역사의 무대에서 자발적으로 물러가려하지 않고 “자신의 생존을 고수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다 사용 한다”는 분석을 근

둘째로 모택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부르조아지*와 농민들에 대한 사회주의적 “교육”과 “개조”의 가능성만을 강조하는데 그치고, 이들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모택동의 견해는 “사회주의를 조직하기 위하여, 계급을 말살(抹殺)하기 위하여, 계급 없는 사회, 사회주의 사회, 국가 없는 사회로 이행하기 위하여서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배(獨裁)를 실시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본 *스탈린*의 관점¹⁵²⁸⁾을 묵살하는 것이었다.

1950년 초(아직 *스탈린*은 생존) 소련의 공식 이론에 따르면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면 먼저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를 확립하고, 도시의 *부르조아지*와 농촌의 부농(富農)들에 대한 가차없는 계급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의 보편적 법칙으로 인정해 왔던 것이다. 소련이 1948년 말 동-남유럽 제국의 인민민주주의 정권의 성격을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권력으로 엄격히 규정했던 것은 이 나라들이 이미 사회주의 건설의 단계로 이행하고 있는 새로운 현실을 정통적 이론에 부합시키려 했던 때문이다.

그러나 모택동은 인민민주주의 국가권력은 곧 “인민민주 독재”라는 공식을 고수하면서,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가 아니라 인민민주 독재에 의해서도 사회주의를 평화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처럼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로 향하는 중국적인 길은 소련 또는 동(東)유럽의 길과는 다르다는 것을 계속 시사하고 있었다. 유소기는 1949년 9월의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소(小)*부르조아지*와 민족 *부르조아지*(“각 민주당파”, “각 인민단체”, 그 밖의 “애국인사”등)를 모두 포함하는 “전국 인민의 혁명적 대단결은 오늘 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장차 사회주의를 실시할 때도 마찬가지로…필요하다”¹⁵²⁹⁾고 역설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하에서만 사회주의 건설은 가능하다는 소련의 정통적 이론을 은근히 무시했던 것이다.

‘중국공산당’의 최고위 지도자들이 이상과 같은 주장을 내세웠을 때 그것을 옹호 부연하는 이론가들의 논문들이 의례히 뒤를 따랐다.¹⁵³⁰⁾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프롤*

거로 하여 계급투쟁은 첨예화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책, p. 257.

1528) 같은 책, p. 153.

1529) 앞의 『劉少奇選集』(中文版) 第上卷, p. 435.

1530) 대표적인 예로써 중국의 경제학자 沈志遠은 그의 『신 경제학 대강』(1950년)에서 “혁명의 귀추에 관해 말한다면, 중국과 東유럽에 있어서의 신민주주의의 승리는 각기 평화적으로 사회주의로 전화하는

레타리아트의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는 1949년에서 1956년까지 모스크바와 북경 간의 중대한 이데올로기 상의 논쟁점으로 잠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양극화(兩極化)되어 있던 국제정세와 중-소 단결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양측은 모두 상호간의 이데올로기적 차이를 공개적 논쟁으로 발전시키지 않고, 그 차이를 동지적 입장에서 원만하게 조정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모택동을 비롯한 중국의 지도자들이 노동계급 이외의 인민들을 강제적 방법이 아니라 “민주적 방법”, 즉 설득에 의하여 사회주의적으로 “교육”하고 “개조”한다고 강조한 것은 그들이 모든 인민에게 유교적 인정(仁政)을 실시하는¹⁵³¹⁾ 도화자였던 때문도, 또는 온건한 수정주의적 공산주의자였던 때문도 아니었다. 모택동은 중국 대륙에서 정치적 지배권을 장악은 했다. 그러나 아직은 비(非)공산주의자들을 최대한으로 포섭하여 그들과의 통일전선의 토대 위에서 당의 지배권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그에게는 절대로 필요했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이 그로 하여금 인민의 “단결”과 “개조”와 “교육”이라는 평화적, 비폭력적 방법을 강조케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모택동의 “인민민주 독재”의 정치 노선이 중국 사회에 현실적으로 적용되었을 때는, 이것은 사실상 공산당의 1당 독재를 의미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모택동은 그의 『인민민주 독재론』에서 중국공산당의 경험을 총괄한 것이라고 하여 “노동자 계급이 (공산당을 통하여) 지도하고 노동 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독재”¹⁵³²⁾라는 개념을 제시했고,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강령」(1949년 9월 29일)의 전문(前文)에다는 이것을 보다 명확하게 천명했다. 즉,

길을 열어준다. 신민주주의의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사회주의에로의 길로 이행한다. 이것은 억압 받아온 근로대중이 사회주의에로 향하는 아주 새로운 방식이며, 러시아의 10월 혁명의 방식과도 다른 것이다”(『신민주주의경제론』(日譯), 青木文庫, p. 21)참조. 이러한 말은 인민민주주의에 관한 스탈린 시대의 소련의 해석을 공공연히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東유럽의 인민민주주의까지도 중국식 신민주주의와 동일하게 평화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중국의 발전방식이 마치 東유럽의 발전의 모델인 것 같이 기술했던 것이다.

1531) 毛澤東은 “우리들은 반동파와 반동계급의 반동 행위에 대해서는 절단코 仁政을 베풀지 않는다”고 하는 반면, “인민 내부에서만은 인정(仁政)을 베풀다”고 언약했었다. 앞의 『毛澤東選集』(中文 一卷本), p. 1365.

1532) 같은 책, p. 1369.

…중국의 인민민주 독재는 중국의 노동자 계급, 농민 계급, 소(小)부르조아지, 민족 부르조아지 및 그 밖의 애국적 민주분자의 인민민주 통일전선의 정권이며, 노동 동맹을 기초로 하고 노동자 계급을 지도자로 한다.¹⁵³³⁾ (밑줄은 저자)

이상에서 정식화(定式化)된 바 “노동자 계급이(공산당을 통하여) 지도한다”느니 또는 “노동자 계급을 지도자로 한다”느니 하는 그 “지도”는 폭력을 배경으로 하는 물리적 지배라는 의미에서 “독재”와 사실상 동일한 것이었다.¹⁵³⁴⁾ 4대 계급의 동맹체라는 중국의 “인민민주 통일전선”에서 정치적 실권을 전단적(專斷的)으로 행사하고 있던 세력은 4대 계급 중에서 노동자 계급, 즉 그의 전위(前衛)라고 하는 공산당뿐이었다. 공산당의 동맹자라고 불리 우는 소위 “민주적 제 당파”는 공산당 노선을 전적으로 추종하고, 공산당의 구호를 기계적으로 따라 외치는 괴뢰적 존재에 불과했다.

연립정부의 형식으로 조직된 신 정권의 각 권력기관—‘전국 인민대표회의’, ‘정부원’(내각), ‘최고 인민법원’, ‘최고 인민검찰서’, ‘인민 군사혁명위원회’—등에서 ‘민주동맹’, ‘농공 민주당’(農工 民主黨), ‘국민당 혁명위원회’, 또는 무당파 “민주인사”들이 요직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신정권은 마치 광범한 비 공산주의 세력과 권력을 공유 하는 듯한 인상을 자아냈다. 그러나 이들은 무력한 일시적 이용물이었다. 북경의 “인민민주 독재 정권”은 그 선전과는 달리 공산주의자들, 그중에서도 모택동을 선두로 하는 당(黨) 중앙정치국의 극소수자들이 지배하는 사실상의 전제주의적 정권이었다. 다만 그 진상을 변잡하고 달콤한 *이데올로기*의 선전으로 감추고 있었을 따름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지 8개월 뒤인 1950년 6월부터 모택동은 “토지개혁 운동”을 강행했다. 50년 10월 한국전쟁에 파병하고 11월에는 “항미원조(抗美援朝)운동”

1533) 앞의 『新 中國資料集成』, 第二卷(1964년), p. 589.

1534) 공산당이 非공산주의 정당들과의 統一戰線을 형성할 때, 자기 세력이 아직도 취약한 단계에서는 통일전선에 참가한 非공산주의자들의 불안감을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도”라는 온건한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공산당의 권력이 강화되어 1당 독재체제가 완전히 수립되면 그때에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를 공공연히 선언한다. 소련에서는 이론상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도”를 인민민주주의의 제1 단계에 부합하는 정치권력으로 규정했었다. 그리고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의 임무를 지니는 인민민주주의의 제1 단계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의 임무를 지닌 인민민주주의의 제2 단계 혁명으로 “성장 전회”함에 따라,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도”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로 전화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었다. 앞의 책, pp. 626-631. 그러나 이때의 “지도”라는 것과 “독재”와는 그 내용에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는 “노동자 계급에 의한 사회의 지도”(같은 책, p. 349)라는 말에서 明示하고 있었다.

을, 1951년 2월부터는 “반혁명 진압 운동”을 일으켰다. 이 “3대 운동”에서의 숙청대상은 “봉건 지주”, “매판 자본가”, “관료 자본가”, “반 혁명분자”, 구미(歐美)와 관계가 있거나 그 영향을 받은 “제국주의의 주구들”이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적대적 계급”이며, “인민의 적”이었던 때문에 개조의 대상이 아니라 무자비한 계급투쟁에 의하여 말살되어야 할 “계급의 적”이었다.¹⁵³⁵⁾ 이러한 혁명투쟁의 과정에서 “인민의 적”(반동분자)과 “인민”을 구별하는 실제적 기준에서는 어떤 사람의 사회계급적 성분보다도 그가 장개석(蔣介石)의 ‘중국민당’을 반대하고 공산당을 지지하느냐 않느냐의 정치적 입장이 중시되었다.

토지개혁-반혁명 진압-항미원조라는 “3대 운동”이 빚어낸 전국적 공포분위기를 이용하여 소위 “3반(反)-5반(反) 운동”이 무서운 기세로 전개되었다. 이때의 투쟁 대상은 아직도 “부르조아적 반동사상”을 일소하지 못하고 있는 “인민”들, 특히 지식 분자, 민족 자본가, 관료, 당 간부 계층이었다. “3반”은 당·군·정부·인민단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오직(汚職), 낭비, 관료주의를 소탕한다는 운동이었다. 이에 대해 “5반”은 상공업자의 뇌물 수수, 탈세, 국가 자재의 절취, 가공재료의 횡령, 국가경제에 관한 정보의 누설 등 부르조아 계급의 “5독(毒)” 행위를 숙청한다는 운동이었다. “3반”은 그 대상이 주로 당-정 간부였지만 “5반”은 주로 민족 자본가들이었다. “3반 5반 운동”의 목적은 이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운동은 전국 인민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상개조운동”의 강렬한 돌풍을 일으켰고 이 돌풍은 1952년 3~4월경에 절정에 올랐다.

비(非)프롤레타리아적(的) 인민들, 즉 노동계급 이외의 인민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강제적 방법이 아니라 “교육”과 “설득”의 방법, 즉 “민주적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 모택동의 선전용 주장이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중국식 인민민주 독재를 가혹한 스탈린식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로부터 구별하

1535) 적대 계급의 소탕을 목적으로 한 이 “3대 운동”은 극히 무자비한 폭력적 숙청 운동이었다. 토지개혁에서 “악질 지주”로써 피살된 수만도 80만명에 이른다고 하며, 일반 지주로서 공민권을 박탈당했거나, 반혁명 분자로 적발되어 소탕당한 사람의 수는 1952년 말까지의 3년 동안에 2백만명 이상이었다고 한다. (大久保泰, 『中國共產黨史』, 下卷, 原書房, 1971년, pp. 343~344). 일설에는 이 운동에서 1천 1백만戸의 지주와 부농이 무참한 숙청을 당했고 그중 약 2천만명이 처형, 감금, 또는 추방되었다는 끔찍한 당시의 기록도 있다. 鄭竹園 『中國共產黨の十年』, 日本外政學會發行, 1959, p. 344.

는 중요한 특징인 것 같은 인상을 대외적으로 퍼뜨려 일부 순진한 국내외 인사들의 공포감을 덜어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인민의 사상개조에서 모택동이 사용한 방법, 즉 “민주적 방법”이 실제에 있어서는 전율할 만큼 폭력적, 굴욕적, 전제적 방법이라는 것을 “3반-5반 운동”은 입증했다.

사상개조 운동은 중국대륙에 광풍을 몰아왔다. 인간의 인격적 독립성과 존엄성은 강제 자백, 강요된 자기비판과 군중비판 앞에서 여지없이 파괴당하고, 정신적 학대와 참기 어려운 심리적 억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거나 또는 처형되었다.¹⁵³⁶⁾ “3반-5반 운동”의 표적이 된 부정(不正) 현상의 원인은 구 지배자가 남기고 간 악습을 위시하여 공산당 간부들의 낭비와 오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소탕하는 일이 당연하다는 당의 주장에는 당(黨) 노선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던 국외자(局外者)들까지도 일시 공감할 수 있었었다.¹⁵³⁷⁾ 그러나 “5반 운동”을 일으킨 공산당의 진의는 다른 곳에 있었다. 모택동은 자기의 본래의 주장인 “공사겸공(公私兼顧)”(공기업과 사기업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민족 자본가들을 포섭했었지만 이제는 이들이 커지지 못하도록 수탈하고,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 때가 왔던 것이다.

“5반 운동”은 민족 자본가 계급을 어떻게 “교육”하고 “개조”했는가를 보여준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그 방법은 “민주적”이 아니라 철저히 전체주의적이었다. 기업가, 상공인들은 공산당이 “타호대(打虎隊)”라는 이름에서 조직 동원된 군중 단체에 의하여 포박된 후 무참한 학대에 못 견뎌 “범죄”의 자백(自白)을 강요당했고, 자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안 경찰에 의하여 체포 투옥되었다. 이들은 최상의 경우래야 파산에 그쳤으며, 30만명 이상이 “노동 개조영”(改造營)(정치범 수용소)에 송치되었으며 대도시에서는 매일같이 자살 소동이 일어났다.¹⁵³⁸⁾ 중국 당국이 이들 상공업자들로부터 몰수한 재산은 당시의 미화로 2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한다.¹⁵³⁹⁾ 모택동이 죽

1536) 中國 당국의 한 公式發表에 의하면 3반 운동에서 處刑된 사람의 수는 국가 각기관원의 4.5%를 차지했고, 5반 운동에서 적발된 상공업자는 45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大久保泰, 앞의 책, p. 34.

1537) 民主同盟의 간부로서 “3반 운동”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던 周鯨文이 그런 인사였지만 그는 그 狂暴性을 보고 곧 절망에 빠졌다. 周鯨文 『共產政權下の 中國』(上), 思想文庫(金俊煥 譯), p. 172. 중국의 “반동계급”을 숙청하기 위한 “3대 운동”과 인민의 사상개조를 위한 “3반 5반 운동” 및 “사상개조 운동”의 양상의 全貌는 그 목격자인 이 책의 저자에 의하여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1538) 같은 책, pp. 182~187 참조.

고 등소평(鄧小平)이 집권하고 난후 이런 악몽의 세대는 끝났지만 광신적(狂信的) 독재자의 독선이 몰고 온 희생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민족 부르조아지’에 대한 “교육”과 “개조”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계급으로써의 민족 부르조아지의 거세를 위한 격렬한 계급투쟁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중국형 인민민주 독재는 소비에트 형 또는 동(東)유럽 형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와 그 실천에 있어서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모택동과 당(黨) 이론가들은 중국공산당이 민족 부르조아지의 존재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동(東)유럽의 인민민주주의와의 “차이”라고 줄곧 역설함으로써¹⁵⁴⁰⁾ 모택동을 독창적인 마스-레닌주의자로 부각시키려 했다. 따라서 북경과 모스크바의 이데올로기적 긴장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제3절 “사회주의에로의 이행(移行)” 시기의 통일전선 문제

‘중국공산당’은 1953년 가을 소련에 대하여 또 하나의 중대한 정치적 충격을 주었다. 즉 1953년 9월 25일, ‘국가계획위원회’ 주임 이부춘(李富春)을 통하여 “중국 인민은 혁명의 승리(공산당의 정권장악)를 쟁취하자 곧 새로운 시기, 즉 사회주의에로 점차로 이행하는 시기에 들어섰다”¹⁵⁴¹⁾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했던 것이다. 이 말을 부연하면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 더불어 ‘신민주주의 혁명’의 단계를 완결 짓고 사회주의 혁명의 단계로 들어섰다는 것을 공언한 것이었다. 다시 그해 10월에는 이러한 입장을 재천명, 이른바 “과도기의 총노선”-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시기의 당의 전반적 방침-이 중국공산당 통일전선 책임자 이유한(李維漢)에 의하여 발표되었다. 그는 1953년 10월 27일 “과도기의 총노선”이 모택동의 지시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539) 鄭竹園, 앞의 책, p. 191.

1540) 胡喬木, 『中國共產黨의三十年』(日譯), 國民文庫 p. 83, 이 책은 1951년 이후 오랫동안 중국공산당의 官用 小黨史로써 공인되어 왔음으로, 당시의 中共黨 최고지도자들의 생각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었다.

1541) 「중화인민공화국은 어떻게 공업건설을 발전시키고 있는가」라는 李富春의 논문. 毛澤東 他著 『社會主義への移行』, 國民文庫, pp. 100~108.

과도기의 총노선에 대하여 모택동주석은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리고 있다. “중화인민 공화국의 성립으로부터 사회주의적 개조가 기본적으로 달성될 때까지는 하나의 과도기다. 이 과도기에 있어서의 전반적 방침과 전반적 임무는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나라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점차로 실현하는 일이다. 이 전반적 방침은 우리들의 각종 활동을 비침주는 등대요, 어떤 활동도 여기서 떠나면 우익적 또는 극좌적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다”¹⁵⁴²⁾

이유한은 이렇게 모택동의 「지시」를 공개하고, 이어 그는 2단계의 혁명론을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혁명의 과도기가 끝나면 이것을 제2 단계로 발전시켜 “중국의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¹⁵⁴³⁾이 그 임무라는 것이었다. 그는 모택동이 『신민주주의론』(1940년)에서 제시한 도식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당의 목표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즉 “이 과도기의 특징은 사회주의 요소가 점차로 발전하고, 비(非)사회주의 요소가 점차로 개조되어,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점차로 실현해가는 것을 토대로 하여 중국을 위대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데 있다. 이 기간을 과도기라고 하는 것이다.”¹⁵⁴⁴⁾라고...

“과도기의 총노선”에 관한 이유한의 위의 설명은 모택동의 숨겨두었던 과도기의 총노선을 공식적으로는 처음 밝힌 것이었다. 과도기에 관한 모택동의 이 새로운 정의는 신민주주의를 아직도 부르짖아 혁명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국혁명의 제1 단계로 보고, 사회주의 혁명은 장래의 과제라고 생각했던 여타 공산주의자들, 특히 소련 공산주의자들에게는 큰 놀라움이 아닐 수 없었다. 왜냐하면 모택동이나 유소기 자신이 이 과도기의 총노선을 선언하기 이전에는 사회주의 혁명이 북경(北京)정부의 수립과 더불어 시작되었다는 견해를 피력한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상건을 눈앞에 두고 있던 1949년 9월 21일 유소기는 ‘중국인민 정치협상회’ 제1회 전체회의에서 ‘공동 강령’의 토론 중 당의 ‘최고강령’(사회주의 미래)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최저강령’(당면한 정책)만을 거론했던 이유를 밝혔다.

1542) 日本國際問題研究. 中國部分編, 『新 中國資料集成』, 第四卷, 1970년, p. 130. 1953년 8월에 내린 모택동의 이 「지시」는 당시는 공표되지 않고 있다가 1977년에 처음 간행된 『毛澤東選集』 第五卷(中文版), p. 89에 실림으로써 그 정확한 원문이 비로소 공개되었다.

1543) 같은 책, p. 116.

1544) 앞의 『新 中國資料集成』 第四卷, p. 131.

공동 강령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표들은 '사회주의적 미래를 공동강령에 써 넣자' 제의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아직 먼 후일의 일이며... 공동강령에다 이 목표를 삽입하면 [당이] 오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나가고 싶어 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판단을 아주 쉽사리 헛갈리게 만들 수 있었다.¹⁵⁴⁵⁾

모택동도 1950년 6월 6일 '중국공산당' 제7기 중앙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의 「보고」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앞당겨서 절멸시키고 사회주의를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우리나라의 정세에 맞지 않는 것이다"¹⁵⁴⁶⁾라고 경고한 바 있었다. 그해 6월 23일 모택동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 전국위원회 제2차 회의의 폐회사에서도 사영(私營)공업의 국유화와 농업의 사회화를 실행하는 시기는 "아직도 아주 먼 장래의 일"이라고 확인했던 것이다.¹⁵⁴⁷⁾

이상 만으로 보면 모택동은 사람들에게 "현실주의자"요, "합리적 혁명가"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중국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들이 당시 사회주의의 건설을 먼 장래의 임무라고 주장한 것은 통일전선내의 비(非)공산주의자들을 최대한으로 포섭하여 공산당의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자는 정치적 전략에서였음은 물론이었다. 그런데 1953년 10월에 이르러 모택동은 지금까지의 온당했던 공언을 돌연히 뒤집어엮고,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성립과 더불어 이미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들어갔다고 선포했다. 추측컨대 그 까닭은 모택동이 사회주의 건설에 초조해졌거나 또는 그동안에 공산당의 독재 권력이 강고하게 구축되어 통일전선내의 비(非)공산주의 정파 또는 "민주인사"들의 안색을 살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모택동은 1953년부터 본격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제1차 5개년 계획에 착수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건설의 출발점을 북경정부의 성립과 일치시킨 것은 소련에서 볼 때 *이때올로지* 상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한 것이었다.

1545) 앞의 『劉少奇選集』(中文版), 上第, p. 435.

1546) 앞의 『毛澤東選集』 第五卷, p. 19.

1547) 이때 毛澤東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이 착실하게 진전하고 있다. 즉, [혁명]전쟁을 거쳤고 신민주주의의 개혁을 거치고 있으며, 장차 국가의 경제 사업과 문화 사업이 크게 번영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지고, 전국 인민의 생각이 성숙해지고 모두가 동의한 후에는 여유있게 그리고 적절하게 사회주의의 새로운 시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점을 똑똑히 말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같은 책, p. 27.

만일 북경정권의 성립과 더불어 중국에서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이란 의미의 '신민주주의 혁명'이 완성되고 사회주의 혁명이 시작되었다면, 그 신민주주의 혁명을 어디서 언제 완성했다는 것인가. 이에 대한 중공당의 해명은 모호했다. 1956년 9월 15일 유소기는 중국공산당 제8차대회 때 중앙위원회에서 진술한 「정치보고」에서 중국의 인민민주독재는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의 두 시기를 경과했다고 말하고,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이 전국적으로 승리하기 이전에 혁명의 근거지에서는 이미 인민민주의 독재가 수립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으며 “이 독재는 부르조아 혁명의 임무를 해결하는 것이었다”¹⁵⁴⁸⁾고 했다.

유소기의 이런 말은 신민주주의 혁명의 제1단계는 서금(瑞金), 연안(延安) 등의 혁명 근거지와 그 밖의 여러 “해방구(解放區)”에서 이미 종결되었다는 식의 주장이었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이후에는, 인민민주 독재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에 이행하는 임무, 즉 부르조아지와 소(小)생산자의 생산수단의 사유제(私有制)를 사회주의적 공유제(公有制)로 바꾸며 사람이 사람을 착취(擄取)하는 제도를 절멸하는 임무를 지니게 되었다”¹⁵⁴⁹⁾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후 설명은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을 “면 장래”의 일이라고 했던 그들의 초기의 말과는 전적으로 모순되는 것이었다.

유소기는 이로부터 3년 후, 이 불투명했던 이론적 변호를 보충하기 위해 북경정권 성립 후 수년 동안에 단행한 토지개혁 등은 북경(北京)정권 성립 이전의 “민주주의 혁명단계에 남아있었던 임무”를 해결한데 불과했다는 괴로운 견해를 피력해야 했다. 그리고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은 실제로는 벌써 1949년에 시작되었다”¹⁵⁵⁰⁾고 북경 정권의 성립과 사회주의의 개시는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는 주장을 관철시켰다. 중국에서 인민민주주의의 제1 단계는 사회주의 건설의 단계가 아니며 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후진성 때문에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들어서기까지는 상당히 긴 기간이 필요하다는 ‘중국공산당’의 종래의 언명을 믿어왔던 소련으로서는 북경정권의 수립과 동시에 사회주의에로 이행했다는 이상 유소기의 이론은 수락할 수가 없었다.

“과도기의 총노선”이란 용어가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1953년 10월 1일자《인민일

1548) 『劉少奇選集』(中文版), 下卷, 人民出版社, p. 242.

1549) 위와 같음.

1550) 「中國에서의 맑스-레닌주의의 勝利」 『劉少奇著作集』(日譯) 第四卷, 三一書房版, pp. 197~198. 이 중요한 論文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앞의 『劉少奇選集』(中文), 下卷, 1985年 版에는 들어있지 않다.

보》에서였다. 그러나 이것이 ‘중국공산당’ 내에서 언제 제안되고 책정되었는지가 명백하지 않았다. 유소기는 당이 이 노선을 결정한 것은 1952년 말이라고도 했고,¹⁵⁵¹⁾ 1953년이라고도 했다.¹⁵⁵²⁾ 한편 이부춘에 의하면 이것은 1952년 당 중앙위원회에서 제안했다는 것이다.¹⁵⁵³⁾ 일반적으로 과도기의 규정문제는 공산주의 혁명 이론에서는 열띤 논쟁의 대상으로 되어왔고, 이러한 논쟁이 당내의 권력 투쟁으로 발전하는 것이 관례였다. 중국에서도 과도기의 총노선 문제는 당내에서 상당한 이론적 혼란을 야기한 것 같다.¹⁵⁵⁴⁾

중국공산당이 제시한 과도기의 총노선이 소련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에 대하여 중요한 문제로 된 점은 “인민민주 독재”와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와의 관계였다. ‘중공

1551) 위의 논문에서 유소기는 이렇게 썼다. “1952년 말, 국민경제의 부흥 및 봉건적 잔재를 일소하는 임무가 일단 완성되었을 때, 모택동 동지를 선두로 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과도기의 기본방침, 즉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동시에 병행하여 실행하는 기본방침을 제기하고, 전국적 규모에서 농업, 수공업 및 자본주의 상공업에 대한 사회주의 개조를 점차로 실현하고,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의 임무를 점차로 실현하는 임무를 규정했다.” 같은 책, p. 198.

1552) 1954년 2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7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中全會)에서 행한 劉少奇的 보고에 의하면 “1953년부터 계획적 경제 건설의 시기에 들어가서 제1차 5개년 계획이 실시되었다. 이때 중앙정착국은 모택동 동지의 제의에 따라 당의 과도기의 총노선을 결정했는데 이것은 필요하고 시의에 맞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中國共產黨 第七期 四中全會 公報’에 들어있는 유소기의 발언. 앞의 『新中國資料集成』, 第四卷, p. 176. “과도기의 총노선”은 뒤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1953년 8월 전국제정·경제활동회의 때 모택동이 내린 ‘지시’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어서부터 사회주의적 개조가 기본적으로 완수될 때까지가 하나의 과도기다. 이 과도기에 있어서의 당의 총노선과 총 임무는 상당히 긴 기간에 국가의 공업화와 농업, 수공업, 자본주의적 공 상업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이 총노선은 우리의 여러 활동을 밝게 비추주는 등대로 되어야 한다. 어떠한 활동에서나 이 총노선을 떠나면 우경적 또는 「左」정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 모택동에 의하면 이 ‘과도기의 총노선’의 여러 방침과 정책은 이미 1949년 3월(北京 정부 선포이전) 黨 2中全會의 결의에 의하여 제기되었고 또 거기서 원칙적인 해결을 보았다는 것이다. 앞의 『毛澤東選集』 第五卷, p. 89.

1553) 제1차 5개년계획의 내용은 1955년 7월 5~6일 이부춘이 제1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2차회의에서 행한 「국민경제발전 제1차 5개년계획에 관한 보고」에서 비로소 공표되었다. 이 「보고」에서 그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은 중국 혁명의 제1 단계의 기본적 완성과 제2 단계의 개시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중국혁명의 제2단계의 임무란, 즉 중국에 사회주의를 세우는 것, 그것이다”고 밝히고, “모택동 동지를 선두로 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1952년 당의 과도기의 총노선을 제기했고”, 이 총노선은 “1954년 제1기 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되었다”고 말했다. 앞의 『新中國資料集成』, 第四卷, p. 411.

1554) 당시 당 이론가 王惠德, 季雲, 劉光弟 등이 中國革命的段階 규정에 관해서 각각 異說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관해서는 日本慶應大學 發行 『法學研究』(39卷, 5月號)에 게재된 平松茂雄(히라마쓰 시게오)의 논문, 「中共の人民民主主義論」(二), 제4장, 제2절에서 간명하게 예증되어 있다.

당 측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 더불어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들어섰다는 것, 즉 사회주의의 혁명과 건설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선언하면서도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에 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고, 여전히 인민 민주독재만을 내세웠던 것이다. 정통적 *맑스-레닌주의*에 의하면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은 반드시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 권력에 의해서만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의 선포 없이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시작했다는 북경의 ‘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의 주장은 *모스크바*로서는 중대한 이단으로 보았다.

1954년 9월 20일 ‘중국공산당’은 이 “과도기의 총노선”에 입각하여 “사회주의” 헌법으로 공포했다. 그 헌법 전문(前文)은 “중화 인민공화국에서부터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완수할 때까지는 하나의 과도기”라고 규정하고, 이 과도기의 국가 임무는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점차로 실현하고, 농업, 수공업, 자본주의적 상공업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를 점차로 완성하는 것”이라고 명기하였다.¹⁵⁵⁵⁾ 그리고 ‘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는 국가 권력의 성격에 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이 지도하고, 노동동맹을 기초로 한 인민민주주의의 국가”¹⁵⁵⁶⁾라고 정의했다. 이 ‘헌법’에서는 1949년의 중국 인민 정치협상회의의 「공동강령」에 명시되었던 농민, 소(小) *부르쥬아지*, 민족 *부르쥬아지*가 노동자계급과 권력을 공유한다는 구절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이 계급들이 “인민민주 통일전선”에서 수행할 지속적 역할은 그대로 그 전문(前文)에서 강조했다.¹⁵⁵⁷⁾

유소기는 1954년 9월 15일 제1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초안’에 관한 보고를 통하여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문제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여기서 그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한 후, 우리나라는 이미 사회주의의 길을 걸어왔다”고 다시 밝히고, “1953년부터 우리나라는 이미 사회주의에로의 목표에 따라 계획적인 경제건설의 시기에 들어섰다”¹⁵⁵⁸⁾고 설명했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에 관해서는 그 장문의 연설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유소기는 민족 *부르쥬아지*를 포함한 ‘인민민주주의 통일전선’이 사회주의 건설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인민민주 통일전선은 노

1555) 앞의 『新中國資料集成』, 第四卷, pp. 237~250에 수록된 “中華人民共和國 憲法”에서 인용.

1556) 위와 같음

1557) 위와 같음

1558) 앞의 『劉少奇選集』(中文版), 下卷, p. 114.

노동맹(勞農同盟)을 기초로 한, 그러면서도 노농동맹보다 더 광범한 동맹, 즉 근로 인민과 이들에 협력할 수 있는 비(非)근로 인민과의 사이의 일종의 동맹”¹⁵⁵⁹⁾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비(非) 근로인민”, 즉 소(小)부르조아지 및 민족부르조아지가 사회주의 건설의 역군(役軍)이 될 수 있음을 명백히 했다. 이렇게 부르조아 세력이 사회주의 건설에 참여한다는 이론도 역시 정통적 맑스-레닌주의에서는 이단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어 다음과 같은 말로써 노농동맹을 토대로 한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만이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는 소련의 과도기 이론의 공식을 은근히 배격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이상, 이러한 동맹인민민주통일전선은 존재할 수 없으며, 존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¹⁵⁶⁰⁾ (밑줄은 저자)

유소기는 중국이 종래에 외국 제국주의의 압박을 받아왔다는 “특수한 역사적 조건 때문에 노동자 계급과 민족 부르조아지와와의 사이에는 투쟁만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동맹 관계가 일찍이 존재했고 현재도 존재한다”¹⁵⁶¹⁾는 논거에서 민족부르조아지도 사회주의 건설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들을 옹호했다. 이것은 모택동의 신민주주의 이론을 새로운 상황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었다. 유소기는 사회주의 건설의 과도기에도 민족 부르조아지는 생산 확대, 기업 관리, 생산 기술의 개선, 기능공과 기술자의 양성 또는 훈련 등의 역할을 통하여 국가에 대해 “일정한 공헌”을 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¹⁵⁶²⁾ 이런 주장의 맥락(脈絡) 속에서 1954년 헌법의 전문(前文)은 중국의 인민민주주의, 즉 신민주주의는 중국이 “평화적인 길을 거쳐……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한다”¹⁵⁶³⁾고 규정하였던 것이다.

소련의 경험에 의하면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 정권하에서도 레닌 시대의 “신경제

1559) 같은 책, pp. 147~148.

1560) 같은 책, p. 148.

1561) 위와 같음.

1562) 같은 책, p. 148.

1563) 앞의 『新中國資料集成』에 들어있는 「中華人民共和國 憲法」

정책”(NEP)에서는 자본가와 농민들에게 제한된 경제 활동의 자유를 주어 생산의욕을 자극하고, “전시 공산주의” 시대에 파탄되었던 국가 경제를 회복할 수가 있었다.¹⁵⁶⁴⁾ 그러나 스탈린은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들어서자 계급으로써의 자본가, 부농, 상인 등을 전체적으로 말살하는 가혹한 탄압 정책을 단행하였다. “사회주의로의 평화적 이행”의 길이란 스탈린에 있어서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원칙상 단호하게 배격되었던 것이다.¹⁵⁶⁵⁾ 스탈린의 사회주의 건설방법이 절대적 준거로 되어 있던 당시에,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이 평화적인 길을 거쳐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관점을 명문화한 것을 보고 많은 중국의 당원들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유소기는, 중국의 인민민주주의 제도가 노동자 계급의 지도하에 있다는 점, 여기서는 사회주의적 국영 경제가 나날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국민경제 전체의 지도력으로 되었다는 점, 자본주의 경제는 이미 지배적 지위를 상실했다는 점, 그리고 노동자 계급과 민족 부르주아지는 동맹 관계에 있다는 점 등, 자

1564) “新經濟政策”은 1921년 소련공산당 제10차 대회에서 채택되었다. “신경제정책”에 따라 소비에트 당국은 농민들에 대한 전시공산주의시대의 식량 할당 징발제를 폐지하고 현물세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농민들은 잉여 식량의 일부를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자유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이러한 농민에 대한 완화정책이란 레닌으로서,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동맹”을 강화하여 수백만의 농민을 사회주의 건설에 끌어들이자는 방법이었다. 현물세의 실시 결과로 사영(私營) 상업의 자유, 사적 소기업의 부활, 부농의 성장이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레닌에 의하면 농업과 공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잠시 동안의 전술적 “퇴각”이요, 자본주의의 요세에 대한 “장기적 포위공격 전략”이었다. *History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Moscow, 1960, pp. 351~354 참조. ‘중국 공산당’은 “과도기의 총노선”을 선언한 후 소련의 “신경제정책”을 학습할 것을 특히 장려하고 있었다.

1565) 1926년 스탈린은 그의 논문 「레닌주의의 제 문제」에서 “독재의 強力的 측면이 특히 눈에 띄었던 내전의 시기...와는 반대로 사회주의 건설의 시기에는 독재의 평화적인, 조직적인, 문화적인 활동이나 혁명적 適法性 등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특히 강조한 것이 아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건설의 시기에는 독재의 強力的 측면이 없어졌다든가, 없어질 수 있다든가 하는 것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다”고 경계하는 한편, “억압의 제 기관, 군대, 그리고 그 밖의 제 조직은 지금의 건설의 시기에도 내전의 시기에서와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의 Joseph V. Stalin, *Selected Works*, p. 154.

스탈린은 1928년 10월 부하(下)가 부르주아지는 사회주의어로 계급투쟁 없이 평화적으로 “變生”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제창하고 있다고 혹독하게 비난하면서, 골라ZZ(부농)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자, 스탈린은 종래의 “부농을 억제하는 정책”을 1930년 1월에 단행했다. 요컨대 스탈린時代에는 사회주의로의 “平和的 移行”이란 사실상 右傾的 偏向으로 지목되었던 것이다. Stalin, 같은 책, p. 313, pp. 417~421.

본주의 국가에서와는 상이한 정치, 경제적 조건을 들어 중국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은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와도 다르다”고 해명하면서 점진적이며, 평화적인 사회주의적 개조의 가능성을 재확인했다.¹⁵⁶⁶⁾

유소기는 그렇다고 하여 중국에서는 “이미 계급투쟁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 같은 사고방식은 전혀 잘못된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자본주의적 착취의 제한으로부터 자본주의적 착취의 멸절(絶滅)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복잡한 투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 즉 그는 자본가 계급의 반항에 대한 계급투쟁의 필요를 잊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면서도 그는 “자본가들이 잘 알아차리고, 법을 위반하지만 않는다면…그들은 국가의 배료를 받고…정치적 권리를 박탈(剝奪)당하지는 않는다”¹⁵⁶⁷⁾고 유화책(宥和策)을 약속했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유소기는 국가 행정기관의 관리, 국영 경제의 지도 및 노동자 대중의 감독이라는 방책을 통하여, “평화적인 투쟁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¹⁵⁶⁸⁾는 말로 사회주의로 가는 “평화적인 길”을 계속 주장하였다. 이러한 당 노선을 옹호하기 위하여 중국의 한 이론가는 『철학연구』(1955년 6월 제1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노동자 계급[공산당]이 권력을 장악한 나라에서는 일정한 사회적 역사적 조건하에 자본가들을 사회주의적 지침에 따라 근본적으로 개조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모택동 동지는 *맑스-레닌주의의 보고(寶庫)*에 또 하나의 빛나는 공헌을 했다. 이러한 이론은 *맑스-레닌주의의 고전적 저작*에 지금까지 한 번도 나타난 일이 없으며, 세계의 어떤 나라도 이러한 경험을 거친 일이 없다. 소련과 동(東)유럽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본가 계급을 제거하기 위하여 난폭하고 강제적인 몰수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중국의 구체적 조건에서는 자본가 계급의 제거라는 동일한 목표를 평화적 개조의 길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¹⁵⁶⁹⁾

*맑스-레닌주의의 기성이론*을 대담하게 거부하는 이러한 ‘중국공산당’의 주장에 대해 ‘소련공산당’ 이론가 *두비나(K. Dubina)*는 누구라고 지명은 하지 않았지만 강경

1566) 앞의 『劉少奇選集』, 下卷, p. 151.

1567) 같은 책, p. 152.

1568) 위와 같음.

1569) Arthur A. Cohen의 앞의 책, p. 127에서 인용.

한 반박문을 공개했다. 즉, 그는 '소련공산당' 기관지 《*꿈무니스프*》 1955년 10월호에 기고(寄稿)한 「사회주의 혁명에 관한 *레닌*주의 이론」이라는 논문에서 *스탈린*의 입장을 단호한 어조로 옹호(擁護)했다.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에서의 사회주의 건설 경험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시해왔다. 즉, 자기의 나라들은 말하자면 원칙에 있어서 새로우며, 계급투쟁을 배제하는 어떤 특수한 길을 따라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평화적인 성장의 길을 따라서 사회주의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민족주의적, 기회주의적 분자들의 짓거리대는 소리는 전혀 무근거하다는 사실을.....¹⁵⁷⁰⁾

전지전능한 *스탈린*의 오류와 폭정을 공공연히 비판한 1956년 2월의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를 준비하고 있던 이 무렵, *스탈린*주의적 교조(敎條)의 타당성을 재강조한 이와 같은 논조가 어떻게 해서 당(黨) 기관지에 나타나게 되었는지는 기이한 일이었다. 여하튼, 이 논문이 “민족주의적, 기회주의적 분자들의 짓거리대는 소리”라고 혹평한 대상은 그 내용으로 보아 바로 모택동의 과도기 이론이었던 것이 틀림없다.

이상과 같이 *모스크바*의 *스탈린*주의자들에 의하여 “민족주의적, 기회주의적 분자들의” 망언이라고 규탄 받은 사회주의에로의 “특수한 길”, “평화적인 길”을 중국의 모택동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보고(寶庫)에 대한 “빛나는 공헌”이라고 찬양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자의 *이데올로기*의 대립에 있어서 어느 편에 보다 많은 진리와 진실성이 있는가를 판별하려는 노력은 무의미한 것이었다. 모택동은 중국에서는 “선택”과 “교육”을 통하여 자본가들을 개조한다고 했지만 자본가들은 권력을 독점한 공산당의 정치적 포로의 처지에로 전락해 있었고, 공산당이 내세우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도”가 *소비에트*식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와 실제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었음은 앞에서 누누이 지적한 바와 같다.

1570) 앞의 Benjamin L. Schwartz, *Communism in China : Ideology in Flux*, p. 90에서 인용.

제4절 긴장, 타협, 대립의 교착(交錯)

소련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 하에서만 사회주의 건설이 가능하다는 명제를 보편적 진리로 내세워 '중국공산당'이 모스크바가 해석하는 *맑스-레닌주의*의 이론의 율타리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려고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단일적 정치적 지배를 공고히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중국의 특수한 조건에 부합되는 특수한 혁명 노선이 모택동에 의하여 창조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따라서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방법은 소련 및 그 영향 하의 동(東)유럽 인민민주주의 나라들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강조함으로써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 모택동의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독자성을 견지하려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서는 중국과는 사회 정치 조건이 유사하다고 보는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여러 지역 "인민"들에 대해 이 지역에서는 소련이 아니라 중국의 혁명의 *모델*이 타당하다는 것을 의식적(意識的)으로 주장하고 있었다.

양자 간의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권력의 대립성(對立性)은 스탈린의 생존 시에는 아직 공개적 정치논쟁으로 폭발하지는 않았다. 모택동을 선두로 중국공산당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독자적 사회주의 건설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소련의 "선진적 경험"을 배우자고 외쳤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하여 서방측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봉쇄하자 모택동은 "대소일변도(對蘇一邊倒)" 정책을 선언하면서 소련의 원조를 얻어 자국의 공업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곤경에 빠져있었다. 중국은 1950년 3월 소련과 「중-소 우호동맹조약」을 체결했을 때 소련으로부터 3억 달러의 차관과 50개 항목에 걸친 경제 원조를 약속받았다. 1953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제1차 5개년계획은 소련과의 협의 하에, 소련의 원조를 기초로 하여 입안하고 착수했던 것이다.

소련으로부터의 경제 기술원조는 북경(北京)정부로서는 사활이 달린 문제요, 사회주의 건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었다. 그러므로 모택동은 스탈린-말렌코프-호루시초프(그 전반기)시대의 3대에 걸쳐 소련의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중국은 자체의 *이데올로기적* 주체성을 우회적으로 표시하면서도 소련과의 적극적인 우호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1953년 9월 15일 이부춘은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제26차 회의에서 진술한 「보고」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건

설에 대해 소련이 제공했고, 또 제공하려하고 있는 원조는 사회주의 국가의 위대한 국제주의 정신을 표시하고 있다”¹⁵⁷¹⁾고 찬양했다. 다시 그해 10월 1일에는 소련의 경험을 배우는 것이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¹⁵⁷²⁾이라고까지 소련의 비위를 맞췄다.

중국이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사회주의 이론을 견지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과 같이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하면서 소련을 예찬한 2중 플레어는 당시의 북경정부의 고뇌를 반영한 것이었다. 모택동으로서는 미국과의 대결에 있어서 “소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진영”¹⁵⁷³⁾의 결속과 강화를 통하여 자체의 안전을 기하고 중국의 독립성을 훼손당하지 않으면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싶은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

한편 소련으로서도 공산주의의 잠재적 거국인 중국을 “사회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써 강화시키는 것이 “제국주의 진영”과의 대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소련은 중국이 독자적인 사회주의 노선을 주장하는 나머지 모스크바의 이데올로기적 통제를 벗어나 세계 공산주의 운동에다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 몹시 심려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국과의 사상적-이론적 간격이 확대되어 그 결과로 이것이 정치적 대립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조심스레 자제하였다. 그리하여 인민민주주의를 둘러싼 양국 간의 긴장은 1956년까지는 공개적 이론 투쟁-정치투쟁으로 발전하지는 않고 있었다.

‘중국공산당’이 ‘과도기의 총노선’을 선포한 것은 스탈린이 사망한지 7~8개월 후의 일이었다. 스탈린의 사망으로 중국-소련 두 당 간의 이데올로기적 간격을 좁힐 수

1571) 「ソ連の經濟援助に關する對ソ交渉についての李富春報告」(概要), 앞의 『新中國資料集成』, 第四卷, p. 120.

1572) 1953년 9월 25일 李富春은 다음과 같은 대소 일변도의 발언을 했다.

“경제활동에 대한 黨의 지도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제1차 5개년건설계획의 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국공산당원은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理論, 스탈린의 이론을 학습하고 있으며 소련공산당을 배우고, 소련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도 방법 및 과학적인 기초 위에 세워진 선진적 노동 방법을 학습하고 있다. 소련을 진지하게 학습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들의 위대한 조국이 새로운 생활을 건설하고 옳은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毛澤東 他著, 『社會主義への移行』, 國民文庫, p. 108.

1573) 모택동은 스탈린 死後, 즉 그의 사망에 즈음한 追悼辭에서도 이것을 인정했다. 그 후에도 한동안 ‘중국공산당’은 소련의 권위를 認定하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해왔던 것이다.

있는 큰 계기가 마련되었다. 말렌코프, 흐루시초프 등 스탈린의 후계자(後繼者)들은 각각 정치적 입장은 달랐지만, 스탈린이 사망한 직후부터 그의 무오류(無誤謬)의 권위를 서서히 파괴하고 있었고, 스탈린 시대의 폭정의 하수인이었던 베리아(비밀경찰의 두목)를 체포하여 처단하는데서 서로 제휴했다. 그 방법으로 크레믈린 내의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집단지도체제(集團指導體制)를 형성하고 각파의 권력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배후에서는 앞으로의 권력독점을 위한 준비태세를 가다듬고 있었다. 따라서 크레믈린의 지도체계 내의 불안정 때문에 모택동에 대한 이데올로기 통제를 가하기에는 힘이 미치지 못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에서의 모택동의 권위와 위치는 왕년의 소련에서의 스탈린의 그것에 못지않았다. 중국은 모택동의 통치하에서 대내적으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택동사상'은 중국의 국가 이데올로기로 승격되어 절대적인 권위를 획득해 있었다. 또한 중국은 한국전쟁에 참가하여 막대한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그 대가로 국제공산주의 세력권 내에서 정치적 발언권을 한층 높일 수가 있었다. 더욱이 스탈린의 권위가 그의 사후 소련에서 점점 소멸하고 있던 조건에서 그가 정립(定立)했던 사회주의 혁명의 이론을 중국에다 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

게다가 이미 스탈린이 없는 세계 공산권 내에서는 혁명투쟁의 경력으로 보나, 나라와 인구 크기로 보나, 이론적 권위로 보나 모택동에 비견할 수 있는 지도자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조건에서 소련의 새 지도층은 모택동에 대하여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전례 없는 경의를 표함으로써 "사회주의 진영"의 수호를 위하여 '중국공산당'의 존재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그 위신을 이용하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기간은 길지 않았다.

사회주의에로의 이행방법을 둘러싸고 일어난 북경(北京)과 모스크바간의 이론상의 긴장상태(緊張狀態)를 결정적으로 완화시킨 사건은 1956년 2월에 열린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였다. 당(黨)의 정상에 오른 흐루시초프는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한 그의 「보고 연설」에서 스탈린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스탈린에 대한 "개인숭배"의 문제와 "각양한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에로의 이행형태"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을 당내 토론에 부쳐 스탈린 시대에 피의 숙청에 의하여 정립되었던

맑스-레닌주의의 정통이론을 단호히 거부했다. 전 세계는 크게 놀랐다. 제20차 당(黨) 대회에서는 지금까지 절대 진리로 신봉되어 왔던 스탈린의 이론적 명제의 오류 및 실천상의 왜곡을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현상은 스탈린에 대한 개인숭배 작품(作風)에서 나왔다고 가차없이 비판하는 단안을 내렸다.

개인숭배의 작품 하에서 스탈린이 난폭하게 파괴한 “사회주의적 법질서”와 여태까지 침해당한 “소비에트 시민의 민주적 권리”가 거론되고, 이와 관련된 허다한 사건들이 흐루시초프의 비밀연설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폭로되자, 결국 스탈린은 공적으로 매장당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스탈린의 깨진 권위에 의거하여 모택동 사상의 주체성을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소멸되고 말았다. 나아가 흐루시초프는 모든 나라는 그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사회주의에 이행하는 형태가 각각 다를 수 있고,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방법도 다양하다는 것을 레닌의 권위에 의거하여 적극적으로 인정하였다. 흐루시초프 시대에 새로 편찬된 『소련공산당사』(1959)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세계의 노동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의 경험, 소련과 인민민주주의 제국의 경험을 총괄하여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는 나라가 다르다는데 따라 사회주의에 이행하는 형태도 각양(各樣)하며, 사회주의 혁명이 평화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하는 레닌의 명제를 발전시키고 심화시켰다.……레닌은 혁명의 평화적 발전의 가능성을 극히 드문 예외라고 설명하고 있었지만, 오늘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발전의 가능성은 확대되고 있다. 1574)

이상과 같은 해석은 소련이 사회주의로 가는 중국공산당의 “평화적인 길”과 함께 모택동의 특유한 인민민주 독재의 형태는 타당한 것으로 인정한 셈이다. 흐루시초프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근본적인 정치적-경제적 개조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나머지, 중국이 주장해온 한계를 넘는 말을 했다. 즉 프롤레타리아트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통하여 의회기구를 장악함으로써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평화적인 길이 가능해졌다고 인정해버렸던 것이다. 흐루시초프는 “자본가 계급의 지배 도구”인 의회주의적 정치제도를 분쇄하는 것을 사회주의 혁명의 첫 과제라고 주장했던

1574) 앞의 *History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p. 666.

레닌과는 달리, 노동자계급은 “대다수의 국민의 지지에 의거하여…반동적 반(反)인민적 세력이다 패배를 안겨주고, 의회 내에서 안정된 다수를 획득함으로써 의회를 부르조아 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는 기관으로부터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참된 도구, 즉 근로 인민에 봉사하는 도구로 바꿀 수 있다”¹⁵⁷⁵⁾는 비현실적 공상론(空想論)을 폈다.

호루시초프는 이런 자기의 주장에다 물론 노동자 계급의 지도하에 국민의 대다수(근로 농민, 인텔리겐차 및 모든 애국세력)가 “통일”되고, 그 위에 노동자계급의 선두에는 그의 전위 부대인 공산당이 나서야 한다는 조건을 첨부했다.¹⁵⁷⁶⁾ 그리고 그는 자기의 주장을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를 부인하고 의회주의를 고수하는 “개량주의자”의 견해와 엄격히 구별하기 위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즉,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구체적인 형태는 다양하지만, 사회주의 건설이 성공할 수 있는 불가결의 조건은 공산당을 선두로 하는 노동자 계급의 정치 적 지배, 즉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다”¹⁵⁷⁷⁾라고….

이상 호루시초프의 견해를 모스크바의 이데올로그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이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뚜렷한 모범”¹⁵⁷⁸⁾이라고 까지 추켜세웠다. 그렇다면 호루시초프의 통일전선에 입각한 인민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중국은 평화적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한 모택동의 주장을 옳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하여 모스크바와 북경사이의 이데올로기의 간격은 좁아졌다. 결국 모스크바는 사회주의로 가는 “각국의 다양한 길”과 “특수성”의 원칙을 공인했던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록 모택동이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았더라도, 그가 독자적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는 권리와 따라서 “사회주의 진영”내에서의 중국공산당의 자치권(自治權)을 용인(容認)한 셈이 된다. 이것은 중국에 대한 소련의 획기적 양보였다고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스크바의 양보에 대하여 북경도 표면상 타협적 태도로 응했다. 소련공산당 제20차대회가 끝난 지 한 달 후인 1956년 4월 5일 《인민일보》는 「프롤레타리

1575) 위와 같음

1576) 위와 같음

1577) 같은 책, pp. 966-967.

1578) 같은 책, p. 751.

아트'의 독재의 역사적 경험에 관하여」라는 사설을 게재하고, 여기서 “중국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는 노동자 계급에 의하여 지도되는 인민민주 독재”라고 언명함으로써 인민민주주의에 관한 소련이 후기 이론을 뒤늦게나마 수락했다. 이 사설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진행한 토론을 기초로 하여 썼던 것이므로써 당(黨)의 최고 지도기관이 이제 인민민주 독재=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라는 것을 공인한 것에 틀림이 없었다. 개별적 이론가가 아니라 당의 최고지도부가 토론을 통하여 인민민주 독재를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와 동일한 개념으로 규정한 것은 중국에서는 최초의 일이었다.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가 끝난 지 반년이 지난 후인 1956년 9월 15일부터 중국공산당 제8차 대회가 열렸다. 유소기는 대회에서 진술한 중앙위원회의 「정치보고」를 통해 중국의 인민민주 독재란 곧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천명(闡明)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한 후 노동자 계급이……전국적 지배 권력을 확립하고,……중국공산당이 전국의 권력을 지도하는 정당이 됨으로써, 인민 민주독재는 실질적으로 이미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의 한 형태가 되었다. 그리하여 부르조아 민주주의의 성격을 띤 우리나라의 혁명은, 평화적인 길을 거쳐 직접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의 성격을 띤 혁명으로 전화되었다.¹⁵⁷⁹⁾(밑줄은 저자)

이상 유소기의 진술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도”하에 있다고 여태까지 설명해 왔던 중국의 인민민주주의 정권이 사실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정권이었음은 실토한 것이었다. 즉 그에 있어서 “지도”란 곧 “독재”였다. 그리하여 중국의 “인민민주 독재”정권은 공산당의 1당 독재정권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계급의 연합독재정권, 즉 진정한 연립정권인 것처럼 위장해온 당(黨)의 선전이 하나의 기만전술(欺瞞戰術)이었음을 스스로 폭로했던 것이다.

중국공산당의 이와 같은 이론의 수정에 의하여 인민민주주의의 해석을 둘러싼 중-소간의 긴장은 해소될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중국공산당이 인민민주 독재를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라고 인정한 참된 의도는 -그 후에 밝혀진 바

1579) 앞의 『劉少奇選集』, 下卷, p. 205.

이지만-소련과 *이데올로기* 면에서 화해하자는 것이 아니라,¹⁵⁸⁰⁾ 반대로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도전을 기도하려는데 있었던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흐루시초프가 ‘소련 공산당’ 제20차대회에서 강조한 “개인숭배 반대”, 의회를 통한 사회주의에로의 “평화적 이행”, 소련과 미국(및 서방 제국)과의 “평화공존” 및 “평화경쟁” 등 일련의 정책을 흐루시초프 일파의 “수정주의”노선으로 단정하고, 처음에는 소련에 대해 암시적인 사상 공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두 당간의 공개적인 논쟁으로 악화되어 역사적인 중-소의 당 대 당, 국가 대 국가의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63년 9월 6일 <인민일보>와 <홍기>는 「소련공산당 지도부와 우리들 간의 차이와 유래와 발전」이란 논문을 발표하고 중-소 분쟁의 원인과 경위를 전 세계에 공개했다. 이 논문에 의하면 “소련공산당 제20차대회는 소련공산당 지도부가 수정주의의 길을 걷기 시작한 제1보”¹⁵⁸¹⁾라는 것이었다. 중국공산당은 “소련공산당 제20차대회의 그릇된 논점을 완곡히 그러나 또한 아주 뚜렷이 비판”하기 위하여 1956년 4월 5일에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의 역사적 경험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그해 12월 29일에는 「다시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의 역사적 경험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했다.¹⁵⁸²⁾ 흐루시초프의 “수정주의” 노선에 대해 모택동이 격분한 이면에는 흐루시초프가 중국이 최악의 구적(仇敵)으로 규탄하고 있던 “미(美) 제국주의자들”과 긴장완화(緊張緩和)를 추진하고 있던데 대한 공포가 숨어 있었다.

소련은 흐루시초프의 “수정주의”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잠재적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민민주주의 이론의 해석에 있어서 그들이 모스크바의 관점에 접근해오고 있던 데에 아마 일시는 안도했을 것이다. 그 증거는 중국공산당 제8차대회에서 소련공산당 대표로 축하 연설에 나섰던 미코얀(Anastas I. Mikoyan)이 모택동의 사회주의혁명 방식은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에 대해 “위대한 공헌”을 했다고 격찬했던 데서 찾을 수 있다.

1580) 흐루시초프가 蘇聯共產黨 제20차 대회에서 한 보고에 이어, 중국공산당이 인민민주 독재=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를 언명했을 때 많은 국외자들은 성급하게도 中-蘇의 두 黨이 *이데올로기*적 和解에 도달한 것으로 해석했던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었다.

1581) 「蘇共領導同我們分歧的由來和發展」. 이 論文의 全文은 『中蘇論戰文獻(「九評」及其他)』, 文化資料社(香港), 1977년에 수록되어 있다. 이 부분은 pp. 63-64.

1582) 같은 책, p. 71.

……중국공산당과 그 중앙위원회,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 모택동 동지는 맑스-레닌주의에 대하여 위대한 공헌을 했다. 중국의 공산당원들은 맑스·레닌주의 이론의 기본 원칙에서 출발하여 중국의 구체적 조건하에서 독창적으로 운영하고, 자국의 실정에 가장 알맞는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형식 또는 방법을 훌륭하게 찾아냈다. 그중의 어떤 형식이나 방법은 다른 나라에서는 시도된 적이 없었던 일이지만 중국의 대지위에서 훌륭히 열매를 맺었다.¹⁵⁸³⁾ (밑줄은 저자)

그러면서도 미코얀은 이상의 격찬과 함께 “중국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며, 그것은 이미 레닌이 말했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리고 소련공산당은 “가장 일찍이 위대한 사회주의 국가를 창건하였기 때문에……큰 곤란과 희생을 무릅쓰고 터득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 경험을 중국 인민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¹⁵⁸⁴⁾고 소련의 선진성과 대중(對中) 원조의 혜택을 내세웠다. 위에서 고찰(考察)한 양자 간의 전술적 복선이 깔린 이데올로기의 타협을 위한 노력은 피상적으로는 상호간의 차이점을 해소시킨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모스크바는 북경이 강조하는 “중국의 특수성(特殊性)”의 정치적 의미가 필경은 소련의 통제를 받지 않겠는데 있었다고 후일에 와서 소련의 저명한 이론가를 통하여 신랄(辛辣)하게 공격했다.

그 대표적 예로 소련 과학아카데미 부총재 루뮈안쎄프(A.M. Rumyantsev)는 자기의 논문에서, 1938년 이래로¹⁵⁸⁵⁾ 모택동은 “중국의 특수성”을 방패(防脚)로 내세움으로써 코민테른의 통제를 막는 방벽(防壁)을 쌓고, 세계공산주의 운동의 지도적 지위에 있는 간부의 비판을 피하려고 했다”¹⁵⁸⁶⁾고 쓴바 있다. 루뮈안쎄프는 계속하여, 모파(毛派)가 1948년~1949년 대륙(大陸)을 정복한 직후에는 “중국화(化)된 맑스주의의 승리 운운”하고 있었는데, 이 말의 배후에는 “민족주의적(民族主義的), 대한민족적(大漢民族的) 경향”이 숨어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모파(毛派)가 분수에 맞지 않게 중

1583) 大久保泰, 앞의 책, p. 700에서 인용.

1584) 위와 같음.

1585) 그에 의하면 벌써 毛澤東은 1938년 10월, 중국공산당 중앙위 제6차 총회에서 “맑스주의의 中國化”를 내세웠지만, 北京政權 수립이후의 『毛澤東選集』의 改訂版에서는 이 命題는 다른 말로 바뀌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ア・エム・ルミヤンツエフ著 『現代社會科學の諸問題』, 協同産業KK出版部(東京), 1970年, pp. 169~171.

1586) 같은 책, p. 175.

국의 경험이 모든 식민지 및 종속제국(從屬諸國)의 범례(範例)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라게 되면서 부터, “모택동주의(主義)는 ‘중국화(化)된 맑스주의’로부터 ‘식민지 및 반(半)식민지의 세계를 위한 맑스주의’로 전화(轉化)했다”고 비꼬았다.

이어 루뮈안제프는 이러한 “모택동주의”에로의 전화(轉化)는 중국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해계모니를 잡으려는 정초작업(定礎作業)으로써 이바지했다”¹⁵⁸⁷⁾고 모택동의 정치적 야심을 공격했다. 이어 그는 중국형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의 고전(古典)으로 떠받드는 모택동의 신민주주의(新民主主義)를 논박했다. 루뮈안제프에 의하면 여기에 나타난 이론과 그 “중국적”인 실천투쟁(實踐鬭爭)도 그 작풍(作風)에 있어서는 “한정(限定)된 농민적 이데올로기[편파적 이론가]의 의식(意識)과 대(大)한민족적 배외주의(排外主義)의 방법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그리고 그런 의식은 봉기, 정복, 지배에 관한 장광설(長廣舌)임과 동시에 수천만 인민들의 「나사못」과 같은 맹종(盲從)을 필수조건(必須條件)으로 하고 있다. 그들의 사상은 수령의 신격화(神格化)를 수반(隨伴)하는, 거꾸로 선 소(小)부르조아주의 의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과장(誇張)도 없이 말할 수 있다”¹⁵⁸⁸⁾고 가차 없는 혹평(酷評)을 가했다.

루뮈안제프는 이렇게 모택동주의의 저변(底邊)에는 “소(小)부르조아적(的) 심리”와 “대 한민족(大 漢民族)적 배외주의”가 깔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승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중국혁명의 승리를 거꾸로 모택동사상에 “반하여” 거둔 중국인민의 승리”에로 돌리는 한편, “서방에 있어서의 히틀러 파시즘의 괴멸(壞滅)과, 중국 영내(領內)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돌격대였던 관동군(關東軍)의 무기(武器)를 [대전 후] 중국의 혁명적 대중에 인도(引渡)한 소비에트 인민의 형제적 원조(援助), 소련의 군사적 지원(支援)”등의 요인을 과소평가(過小評價)할 수 없다고 소련의 역할을 크게 자랑했다.¹⁵⁸⁹⁾ 이렇게 중국의 인민민주주의 혁명에서 수행한 소련의 역할은 모택동의 권위를 추락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치공세 속에서 강조되었다.

1587) 같은 책, p. 177.

1588) 같은 책, p. 175.

1589) 같은 책, pp. 176~177.

모택동에 대한 이러한 극한적(極限的)인 비난은 인민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에서 중-소의 간격(間隔)을 좁히기 위하여 가설(架設)되었던 타협의 교량(橋梁)을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불태워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제5장

북한에 미친 중-소 논쟁의 여파

제1절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론에 대한 입장

북한에서 인민민주주의의 이론을 정립(定立)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이 끝난 후의 일이었다. 그때까지 당(黨) 문서와 출판물들은 *맑스*, *엔겔스*, *레닌*, *스탈린*, 모택동의 말들을 빈번히 인용하는데 그쳤고 인민민주주의에 관한 명확한 정의(定義)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김일성은 1954년부터 사회주의 건설을 본격적으로 다그쳐 왔음으로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정권은 *맑스-레닌주의*의 이론에 따라 당연히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정권*이라고 규정되었어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1956년 3차 당(黨)대회 때까지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를 공개적(公開的)으로 발설(發舌)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제도의 발전단계를 경제발전 단계에 부합되도록 설명을 시도한 것은 제3차 당(黨) 대회 이후의 일이었다. 그는 *모스크바*와 북경이 공식화한 개념들을 빌려다가 편의적으로 사용하는데 불과했으며 인민민주주의 이론의 “창조적” 발전이란 면에서는 북한은 아무것도 기여한 바가 없다. 본 절에서는 인민민주주의의 주요한 명제들에 대한 북한의 관점과 표현이 *모스크바* 또는 북경(北京)의 그것들과 어떻게 같고 또 달랐는지만을 간결하게 요약 정리하기로 한다.

(1)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문제 : - 이미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호루시/초프* 시대에 정립된 소련의 이론이나, 이에 훨씬 앞서 모택동이 『신민주주의론』 및 『인민민주 독재론』에서 제시한 이론은 앞의 제2장에서 논급한 대로 그들은 모두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두 단계로 구분하고, 그 제1단계를 *부르조아* 혁명의 성격을 띤 “반제국주의적 반봉건적”혁명으로, 제2단계를 “사회주의혁명”으로 규정했던 것이다. 그리고 제1단계의 혁명에서의 정권형태는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는, 노동계급과 농민의 “동

맹”을 기초로 하고, 통일전선에 입각한 정권이며, 그의 주요한 임무는 토지개혁을 비롯한 그 밖의 “민주주의적 개혁”을 수행하는데 있다고 주장한 점에서 중-소의 이론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통일전선 형성의 문제에 있어서 ‘소련공산당’은 도시의 소(小)시민과 일부의 중소(中小)부르조아지가 참가하는 것을 부인은 하지 않았지만 그 의의를 무시하려고 한데 대해, 중국공산당은 통일전선에서의 민족 부르조아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던 것이다. 그리고 소련은 이 정권의 본질을, 레닌이 1905년의 러시아 혁명 때 제시했던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적 독재”라고 규정한데 대해, 모택동은 “인민민주 독재”라는 새로운 독자적 개념을 만들어냈던 것도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김일성은 1946년 2월에 조직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과업이 반제-반봉건적 혁명의 수행에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공언해 왔다. 그런데 그는 “민주개혁”을 실시한 이 “인민 정권”의 성격을 모택동의 조어(造語)인 “인민 민주주의독재”라는 개념에 따라 규정했다. 김일성은 1956년 4월 제3차 당(黨)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는 노동계급이 령도하는 노동 동맹에 기초하여 국내의 광범한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력량을 망라하고 있는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에 입각한 인민 정권으로서 인민 민주주의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¹⁵⁹⁰⁾ (밑줄은 저자)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내용에 관한 김일성의 위의 말은 앞에서 인용한 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의 ‘공동강령’(1949년 9월 29일)의 제1조, 즉 “중화인민공화국은… 인민민주주의 국가로서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고 노동 동맹을 기초로 하고, 인민 민주독재를 수행하며 제국주의, 봉건주의 및 관료 자본주의에 반대하여…” 운운의 복사판이라는 것을 누구도 식별할 수 있다. 북한의 당(黨) 문서들은 김일성이 *플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원칙들을 조선의 구체적 조건에다 “창조적으로 적용”해 왔다는 공적을 부단히 찬양해 왔지만, 그와 그의 산하 이론가들은 그러한 지적능력이 없었음으로 모택동의 “인민민주 독재”에 관한 이론을 슬며시 수입 해다가 사용하는데 만족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판단이 된다.

1590) 『김일성선집』 4, 1960년 판, 평양, p. 445.

동(東)유럽과 중국의 공산당들은 대전 후 소련에의 예속을 벗어나기 위해 각각 “사회주의에로의 독자적인 길”을 내세웠다. 그러나 김일성 일파는 1958년 현재까지도 “사회주의에로의 독자적인 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제국주의자의 잠꼬대에 맞장구를 치는” 소위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추악한 소행”¹⁵⁹¹⁾이라고 규탄하면서 소련에 대한 찬양과 옹호의 발언을 되풀이했다. 그런데도 김일성이 무엇 때문에 *모스크바*가 그렇게도 기피해온 모택동의 “인민민주 독재”란 개념에 따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성격을 규정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확실한 것은 김일성이 심정적으로 이 시기에 ‘중국공산당’의 노선으로 차츰 기울어지고 있었다는 사실뿐이다.

(2)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 : -김일성은 제3차 당 대회에서, 노동당의 “령도하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 의하여 “민주개혁이 실시된 결과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인민민주주의 제도가 확립되었고 조국통일의 기초가 될 민주기지가 창설되었으며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한 물질적 조건이 이루어졌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북조선 인민위원회’는 이미 이룩된 그러한 물질적 조건 위에서 “점차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과업을 수행하기 시작했다”¹⁵⁹²⁾고 부연(敷衍)했다. 따라서 김일성의 이같은 사후 해명에 의하면 북한 사회가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점차로 들어서게 된 것은 민주개혁의 과업이 수행된 직후부터의 일이었다.¹⁵⁹³⁾

그런데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정권이란 *맑스-레닌주의*의 공식에 의하면 본질상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정권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 과도기의 임무를 수행했던 ‘북조선 인민위원회’의 성격에 관해서 김일성은 처음으로 “1947년 2월에 창설된 ‘북조선 인민위원회’는 우리나라에 탄생한 첫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¹⁵⁹⁴⁾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그는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라는

1591) 「大10月 사회주의혁명 41주년기념 평양시경축대회」에서 당시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자리에 있던 金昌滿(그 후 숙청)의 「보고 연설」, 《新しい朝鮮》, 1958년 26號, 別冊附錄(1).

1592) 『김일성선집』 4, 1960년 판, pp. 446-447.

1593) ‘조선 노동당’의 교제는 뒤에 와서 과거를 재정리하면서 북한에서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가 시작된 정확한 시기에 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과도기는 우리 당의 영도 밑에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이 승리하고 계속 사회주의 혁명으로 발전한 결과에 시작되었다. 즉, 1947년 초에 북조선 인민위원회의 수립으로써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가 시작되었다”고 했다. 『정치경제학』 (하), 1962년 판, 평양, p. 14.

1594) 『김일성저작선집』 5, 1972년 판, p. 142.

것을 이것이 창립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일체 말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전쟁 이전에는 물론, 1956년까지에도 김일성은 그런 규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를테면 1956년 4월에 열린 제3차 당(黨) 대회에서 행한 보고연설에서도 그는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기능을 수행한” 정권기관, 또는 “더욱 강화 발전된 인민민주주의 정권기관”¹⁵⁹⁵⁾이라고만 했었지, 이것이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하는 말은 기피했다. 그가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를 선언하지 않고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을 주장했다고 해도, 그것은 이예다가 “노동계급의 령도”라는 조건을 부쳐온 이상, 이론과 실천 사이의 큰 모순으로는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북한에서 확립되었다고 하는 “노동계급의 령도”는 실제로는 노동당의 독재라는 의미의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였던 때문이다.

그렇지만 김일성이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를 선언함이 없이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을 공언한 점에 있어서는 모택동과 마찬가지로였다. 즉 김일성은 모택동의 설명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북조선 인민위원회’의 수립과 더불어 북한에서는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이 완수되고,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김일성이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를 유달리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연안파”와 “소련파”의 잔당을 숙청하고 있던 1958년 봄부터였다. 그해 3월 6일 김일성은 조선노동당 제1차 대표자회의에서 이미 정치적 시체가 된 “국내파”, “연안파”, “소련파”를 준엄하게 단죄했다. 이 회의석상에서 비로소 그는 북조선의 “인민정권”, 즉 인민민주정권은 바로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정권이라는 것을 공포가 서리는 어조로 공언했다.

…우리 당은 조선에서 계급투쟁과 혁명을 영도하는 유일한 당입니다. 우리 당의 영도를 거부하는 것은 곧 혁명을 거부하는 것이며 자본주의에 대한 투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인민주권은 통일전선에 기초하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견해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민주권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범주에 속하는 주권입니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는 공화국 북반부에서…사회주의 혁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까.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사회주의 혁명에 적대되는 일체 반혁명적 요소를 철저히 진압하며 근로 인민의 이익과 혁명의 이익을

1595) 『김일성선집』 4, 1960년 판, 평양, pp. 446~447.

옹호하는 노동계급의 강력한 무기입니다.¹⁵⁹⁶⁾ (밑줄은 저자)

이상 김일성의 주장은 당의 영도 [노동당 독재] 반대=프롤레타리아트 독재 반대=사회주의 혁명반대라는 논리적 등식으로 집약된다. 그러한 “반대”는 곧 죽음에 해당되는 엄중한 “반혁명적” 죄목이었다. 그는 자기의 전횡적(專橫的) 지배에 비판적이거나 반기를 들었던 당내의 반대세력들을 소탕하는 무자비한 투쟁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라는 것을 강력한 무기로 사용해 왔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김일성의 뜻을 받들어 1958년 9월에 출판된 『조선통사(하)』는 비로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북조선 인민위원회”¹⁵⁹⁷⁾라는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수립되면서 북조선은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들어섰다고 선언했을 때와 동시에 나왔어야 당연했다. 그렇지만 김일성은 이것을 엄폐하고 발설하지 않았다.

(3) 계급투쟁의 첨예화 :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특징을 논할 때, 김일성은 이 시기에는 치열한 계급투쟁이 불가피적으로 수반된다고 강조한 점에서는 소련 (1956년 2월의 스탈린비판 때까지)의 입장에 동조했으며, 평화적 이행을 강조하고 있던 당시의 모택동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았다. 한편 이 과도기에 “민족 부르주아지”를 포함하는 민족통일전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에 있어서는 완전히 모택동의 입장을 추종했고 소련의 입장을 무시했다.

이미 앞에서 논급한 바와 같이 ‘중국공산당’은 이 과도기에 계급투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평화적인 투쟁방법”에 의하여 즉 “평화적인 길을 통하여”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가능케 하는 여러 가지 중국 자체의 조건을 내세웠던 것이다. 그 조건이란 노동자계급, 당(黨), 농민동맹 등에 의한 국가의 지도권 행사, 국민경제에서의 사회주의 경제의 지도적 지위, 국내의 통일전선, 그리고 유리한 국제적 조건 등이었다. 북조선에서도 “민주개혁” 이후 이러한 조건들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김일성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다. 그러나 그는 북조선에서 이러한 조건들에 의거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고 말한 일은 없었다. 휴전 이후에

1596) 『김일성선집』 5, 1960년 판, pp. 390~391.

1597) 앞의 『조선통사』 (하), p. 71.

와서는 오히려 “치열한 계급투쟁”을 유달리 강조했다.

김일성은 1955년 4월 1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때부터 34년전인 1928년 10월 19일 스탈린이 모스크바 당(黨) 위원회에서 한 말을 새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으로 이행하는 역사적 행정(行程)은 치열한 계급투쟁을 동반합니다. 스탈린이 말한 바와 같이 죽어가는 계급이 자발적으로 역사 무대에서 물러나간 일은 일찍이 없으며, 죽어가는 부르조아지가 자체의 생존을 고수하기 위하여 마지막 발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아직도 역사에 있어 본 일이 없습니다.¹⁵⁹⁸⁾

이어서 김일성은 “민주개혁” 이후에도 북한 사회에는 사회주의에 대한 반대세력이 소멸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래와 같이 경고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실시된 민주개혁의 결과 청산된 지주계급과 예속 자본가, 친일분자, 민족반역자 기타 반동분자들은 과거의 자기 처지를 회복하려는 망상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자기의 착취적 본성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걸쳐 부식된 낡은 사회의 사상 잔재, 습관, 전통들은 우리 인민 대중의 머리에서 아직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사회주의 건설에 지장을 주는 것들이며, 그것은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분야에서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¹⁵⁹⁹⁾

제2절 “사회주의적 개조”와 통일전선의 전술

김일성의 사고(思考)가 이러했던 만큼 이상의 일체 “반동분자들”에 대한 숙청 작업은 휴전 이후에도 “계급투쟁”의 이름에서 계속 진행되었고, “낡은 사회의 사상적 잔재”를 뿌리 뽑기 위한 소위 “계급교양 사업”, 즉 사상개조 사업은 당 내외에서 맹렬한 기세로 강화되어갔다. 김일성은 그 힘이 극히 미약했던 개인 기업이나 수공업

1598) 같은 책, p. 219.

1599) 위와 같음.

의 말살 정책의 후과(後果)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 삼지는 않았다.

그러나 북한 인구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에서의 농업 집단화 문제에는 지대한 관심과 아울러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빈곤했던 북한 농민들을 기계적으로 “빈농”, “중농”, “부농”으로 구분하고, *프롤레타리아*트 성분의 “빈농”은 농업 집단화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자, 소(小)*부르조아지* 성분의 “중농”은 집단화를 설복할 수 있는 자, *부르조아지* 성분의 “부농”은 집단화를 반대하는 자라고 획일적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김일성은 농업 집단화는 강제가 아니라 모든 계층들에게 “자원성(自願性)의 원칙”을 적용하여 실시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회주의적 개조(改造)를 접수하고 성실하게 일하려는 부농들은 모두 협동경리(協同經理=집단농장)에 받아 들였으며 협동화 운동을 방해하려는 극소수 분자들에 대하여서는 응당한 제재를 가하였다”¹⁶⁰⁰⁾고 뒤에 와서 실토하였다. “응당한 제재”(숙청, 추방 등)란 말은 그가 선전해온 “자원성의 원칙”이 사실은 강제성의 원칙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의 분류가 예상했던 것과는 반대로 “부농”은 물론, “자작 농민들”과 “빈농”까지를 포함하여 농민들은 거의가 농업 집단화를 반대했다는 사실은 모든 공산주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었다.

스탈린은 농업 집단화를 반대하는 각 계층의 농민들을 일괄하여 “부농”으로 낙인찍고 “계급으로써의 부농을 박멸”하는 정책을 강행하면서, 이것을 농촌에 있어서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했었다. 김일성도 북한에서 농업 집단화를 시작했을 때 비록 미약하기는 했지만 농민들의 저항에 부딪쳤다. 1955년 4월 농업 집단화의 강행을 앞두고 그는 부농들이 “자진하여” 협동조합에 망라되도록 할 것이며 점차로 근로 농민(집단농장원)으로 개조되도록 할 것이라는 정책을 내세웠다. 동시에 “농촌에서 아무런 계급투쟁도 없이 순조롭게 [집단화]가 실현될 수는 없으며 일정한 저항과의 투쟁 속에서 진행될 것”¹⁶⁰¹⁾을 예고했다. 농업 집단화가 모두 끝난 1959년 1월 그는 집단화가 이에 반대하는 “계급적 원수들”, 즉 “반(反)혁명분자들”과의 “계급투쟁”을 통하여 실현되었다고 자부하면서 “이것은 우리나라 농촌에서 일어난 위대한 혁명”¹⁶⁰²⁾이라

1600) 『김일성저작선집』 3, 1968년 판, p. 65.

1601) 『김일성선집』 4, 1960년 판, 평양, p. 204.

고 선언했던 것이다.

모택동이 “사회주의에로의 평화적 이행”을 강조한데 대해 김일성이 “계급투쟁의 첨예화(尖銳化)”를 주장했다고 해서, 중국에서의 계급투쟁이 북한에서의 그것에 비하여 덜 가혹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중국에서는 개인 상공업자들의 세력이 북한에 비하여 훨씬 더 컸으며, 따라서 그들의 기업 운영의 재능을 더 오래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모택동정권은 이들을 포섭하는 전술로써 “평화적 이행”의 길을 역설했을 따름이었다. 또한 농촌 집단화에 있어서 중국과 북한은 비슷한 시기에 출발하여 비슷한 시기에 끝났으며 그 방법도 거의 동일했다. 그런데 김일성이 휴전 후, “과도기에 있어서의 계급투쟁”을 유달리 강조한데는 스탈린주의적 사고 이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한국전쟁 때 북한에 진주한 한국군과 유엔군에 대해 북한의 도시 근로대중과 농민들은 김일성의 기대와는 반대로 놀랍게도 이들을 환영하고 이들에게 협력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또한 김일성은 수십만의 북한 주민들이 가족들을 동반할 겨를도 없이 유엔군이 후퇴할 때 그들의 뒤를 따라 필사적으로 남하했다는 사실, 그리고 남하를 못한 그 가족들의 대부분이 그대로 북한에 잔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위협시켰다. 더욱이 남한 대중의 물질생활이 북한에 비하면 그런대로 풍족했고, 일상 생활상 자유의 폭이 넓었던 “미제(美帝)의 식민지” ‘대한민국’의 존재가 계속 북한 인민들에게 사상적 정치적으로 극히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은 휴전 후 김일성으로 하여금 계속 “계급투쟁”을 부르짖게 했다.¹⁶⁰³⁾ 그리고 그가 남한 내의 계급투쟁을 강조할 때는 언제나 대한민국의 붕괴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선동과 연계시켰다.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개조’는 통일전선의 전술과 표리관계에 있다.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는 통일전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한 점에서 김일성은 ‘중국공산당’의 전술을 그대로 답습했다. 사회주의 건설 단계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 기반을 확대 공고하기 위하여 노농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레닌 이래의 공식이었다. 그렇지만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정권이 민족 부르주아지까

1602) 『김일성선집』 6, 1960년 판, 평양, p. 173.

1603) 김일성은 「당원들의 계급 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한데 대하여」라는 1955년 4월 1일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보고에서, 남조선을 맹렬하게 비난했을 때 이점을 무의식중에 시인하고 있었다. 『김일성선집』 4, 1960년 판, 평양, pp. 217~237.

지를 포함하는 통일전선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전술적 명제는 ‘중국공산당’과 ‘조선로동당’을 제외한다면 선례가 없었다. 중국이나 북한에서 민족 부르조아/자를 통일전선에 끌어 들인다는 정책은 물론 그들의 사상개조(思想改造)를 전제로 한 것이었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중국공산당’의 경우에는 최대한 다수의 자본가들을 과도적으로 포섭(包攝)함으로써 ‘중국 국민당’의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조선로동당’의 경우에는, 남한의 개인 기업가들을 통일전선에 유인함으로써 이들을 대한민국으로부터 이탈시켜 남한의 사회-정치적 토대를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마비시키고자 하는 전술적 목표가 있었다. 이 목표에 대한 집념을 김일성은 사망하는 날까지도 고수(固守)하고 있었다. 이러한 김일성의 통일전선전술이 남북통일의 전략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 자신은 빈번히 밝혀왔다. 그의 통일전선 전술은 후계자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한편 개인기업, 자작농, 수공업이 모두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되고 있던 1956년 이후의 북한에서는 필연적으로 민족자본가와 소(小)자산계급 등 자본주의 요소는 깡그리 소멸되었다. 그러므로 김일성으로서는 그 후 이들과 편 통일전선은 명목일 뿐, 사실은 그것을 중요시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가 북조선의 민족통일전선을 논할 때는 언제나 이것을 대남 선전과 결부시켜 왔다. 즉, 그는 북한의 개인 상공업자, 수공업자, 자작농들이 모두 자기의 당(黨) 노선을 지지하며 당의 지도 밑에 “사회주의 낙원”을 건설하고 있다고 남한의 소 자산계급, 민족 자본가, 자작 농민들에게 허위선전을 해왔다. 이와 함께 이들은 모두 꺾기하여 자기들을 억압, 착취하고 있는 남한의 “지주”, “예속 자본가”, “친일 친미파”, “민족 반역자”들을 타도하고 “반제 반봉건적 혁명”을 수행하여 조국을 통일하자는 열렬한 선동 속에서 남한에서의 통일전선 조직 확장을 집요하게 시도해 왔다.¹⁶⁰⁴⁾

1956년에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 사회주의 건설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내외의 적”과의 투쟁에서 전국 인민을 동원, 결집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노동자계급이 영도하는” 통일전선의 계속적인 역할을 명문화했던 것은 앞

1604) 『김일성선집』 4, 1960년 판, pp. 199~201 참조.

에서 언급하였다. 김일성은 모택동의 정치전술을 뒤따라갔다. 1956년 4월 제3차 당(黨) 대회에서 그는 통일전선을 재삼 들고 나섰다.

당은 우선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제국주의자들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노동계급의 지도 밑에 모든 애국적 력량이 단합되어 있는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은 반제 반봉건적 민주혁명의 과업 수행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에서도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¹⁶⁰⁵⁾ (밑줄은 저자)

김일성은 이미 몰락의 최후 단계에 들어서고 있던 북한의 비(非)공산주의 세력을 끝까지 포섭하여 그들을 “방조(幫助)”[사실은 이용]하기 위한 정책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하였다.

또한 우리는 우당(友黨) 당원들과 종교인, 중소 상공업자, 자유직업자 등 광범한 계층과의 단결을 도모하며 그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방조하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¹⁶⁰⁶⁾

여기서 김일성이 이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방조하는 사업”이란, 이들을 먼저 각종 협동조합 [개인기업은 이미 모두 소멸] 조직에 묶어놓고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만든 뒤에 이들의 물질 문화생활 수준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통일전선을 강화한다는 정책이었다.

…특히 그들은 농업 협동조합, 생산 및 수산 협동조합 등에 참가시켜 점차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개조하며 그들의 물질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통일전선을 강화하는 중요한 담보로 되는 것입니다.¹⁶⁰⁷⁾ (밑줄은 저자)

이렇게 하여 북한의 통일전선 조직은 인민들을 프롤레타리아계급(사실은 노동당)의 독재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 조직으로 끌어들이고, 당(黨)의 보살핌 없이

1605) 같은 책, p. 509.

1606) 위와 같음

1607) 위와 같음

는 물질적으로 생존할 수 없도록 만들자는 전제주의적(專制主義的) 통제의 성격을 더욱 강화해 갔다. 이렇게 하여 북한의 어떤 정당 또는 개인도 통일전선 내에서 노동당의 “사회주의 건설” 정책에 불복(不服)할 수 없었을 뿐더러 이것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다.

제3절 사활(死活)을 건 “반당 종파 분자들”과의 투쟁

김일성에 의하면 북한에서 농업 집단화가 완성된 것은 1958년 8월말이요 개인 공업과 수공업은 이와 거의 동시에 생산 협동조합으로 편성되었다. 이로써 농촌과 도시의 자본주의적 요소는 모두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되었다.¹⁶⁰⁸⁾ 이렇게 “사회주의의 기초 건설”을 불과 4~5년 내에 완성할 수 있었을 만큼 이미 1당 독재가 강화된 상황에서 그는 통일전선 산하의 비(非)공산주의자들에게 인민민주주의의 본질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더욱이 1956년의 “8월 종파사건”에서 정적들을 숙청하여 위기를 넘긴 후 그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라는 것을 최대한으로 강조했다.

“8월의 종파사건”이란 흐루시초프의 비(非)스탈린화(化) 운동의 물결을 타고, 김일성 개인숭배 작품, 그가 강행하고 있던 성급한 농업 집단화정책, 그리고 전후(戰後)의 그지없이 어려운 민생(民生)을 무시한 중공업 치중의 제1차5개년계획(1957~1960)을 반대하는 “연안파”, “소련파” 및 일부 국내파의 연합세력과 김일성과 간에 일어난 격렬한 당내 권력투쟁이었다. 이 투쟁은 1956년 8월 30일의 당(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절정에 달했으나 그 결과는 반(反)김일성 연합세력의 참패로 끝났다. 이들 패자는 그 후 “종파주의자”, “반당 반혁명분자” 또는 “수정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혀 모두 숙청되었다.¹⁶⁰⁹⁾ “8월 종파사건” 이후 김일성은 대규모의 숙당(肅黨)투쟁을 단행하면서 인민민주주의 독재이론을 김일성의 1인 독재체제를 공고화하는 방향으로 전개했다.

1608) 『김일성선집』 6, 1960년 판, pp. 171~72. 《근로자》, 1969년 9월호 p.16.

1609) 이에 관해서는 제10편 이하에서 재론할 것이다.

1958년 3월, 즉 김두봉(金斗奉)을 정점으로 하는 “8월 종파사건”의 주모자들의 숙청을 종결할 겸 열렸던 노동당 제1차 대표자회에서 김일성은 김두봉, 최창익, 김 웅(金 雄), 한 빈(韓 斌), 유축운(柳丑運), 오기섭, 서 휘, 김을규, 박의완 등을 지명하여 이들의 죄과를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라고 규탄하였다. 그에 의하면, “지방주의, 가족주의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역시 종파주의”요, 이러한 “종파주의는 자본주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내세웠다. 그리고 이들 “반당 분자”는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고 있는 수정주의를 북한에다 “밀수입”하여 퍼뜨리면서 이용했다는 것이다.¹⁶¹⁰⁾ 또한 그에 의하면 북조선에서 “수정주의는 당(黨)의 영도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거부하는 것”이며, 즉 “노동계급(당)의 지배권을 부인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그는 다음 몇 가지 사실들을 들어 공격했다.

(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두봉은 동 상임위원회가 당보다 높다고 말하면서 당의 영도를 거부했다.

(2) 직업동맹위원장인 서 휘는 말하기를 “당이 직맹(직업동맹)을 영도할 수 없다. 당원보다 직맹원 수가 많으니까 직맹이 당보다 큰 조직이다. 당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직맹원들이기 때문에 직맹의 영도를 받아야 한다. 직맹은 당의 시집살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직업동맹에 대한 당의 영도를 거부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3) 인민군 총 정치국 부국장이었던 김을규(金乙圭)는 인민군대는 당의 군대가 아니고 통일전선의 군대라고 하면서 당의 영도를 거부했다.

(4) 일부 성(省)과 인민위원회에서는 행정 사업에 대한 당의 지도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기술이 천하에 제일이라는 기술 지상주의를 내걸고 당의 영도를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옳지 않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5) 사법기관에서는 “인권을 옹호한다”는 구실 밑에 당과 혁명을 반대하는 적대분자들을 석방하였고, 적대 행위를 한 많은 수감자들을 석방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문란케하였다. 사법 기관에 나타난 이러한 경향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반대하는 수정주의적 경향”이다.¹⁶¹¹⁾

1610) 『김일성선집』 5, 1960년 판, pp. 383-389.

이상의 공격들은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김일성이 패배한 자들에 대하여 내린 일방적 단죄였음으로 결코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 김일성독재에 대한 반발이 각 기관 내에서 얼마나 심각했던가의 일면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서 김일성은 “당의 영도”, 즉 자기의 1인 지배를 거부하는 “수정주의”에 대하여 “무자비하게 투쟁해야 할 것”을 명령하면서 소위 “인민주권”에 관하여 비로소 다음과 같이 본심을 들어낸 설명을 부쳤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인민주권은 통일전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독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견해입니다. 우리의 인민주권은 *프롤레타리아* 독제의 범주에 속하는 주권입니다.……*프롤레타리아* 독제는 사회주의 혁명에 적대되는 온갖 반혁명 요소를 철저히 진압하며 근로인민의 이익과 혁명의 이익을 옹호하는 노동계급의 강력한 무기입니다.¹⁶¹²⁾

1958년 4월 29일 김일성은 전(全) 북한의 ‘사법, 검찰 일군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 그는 사법부문 내에 “잠입”했던 “반당 종파분자들”이 소위 “국제 사조(思潮)”라는 “반소반공(反蘇反共)” 운동을 계기로 수정주의사상을 퍼뜨렸다는 것을 엄중하게 힐책(詰責)했다. 그리고는 북한의 사법 일군들이 “당성(黨性)”을 높여 “반혁명 분자들”과의 투쟁을 강화하라고 훈시(訓示)했다. 이 훈시는 앞의 당(黨) 제1차 대표자회에서 한 그의 훈시의 연장이었다. 그는 당이 인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만민에게 공평해야 한다”느니 “인권을 옹호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당(黨)의 사법정책을 공격한 것은 법의 “계급적 입장”과 “인민 정권의 *프롤레타리아* 독제의 기능”을 떠나 지주들과 자본가를 옹호하자는 “반동 이론”이라고 단정했다.

그 위에 김일성은 이 “반당 종파분자들”에 맹종하는 사법일군들이 “인도주의”다 “민주주의”다 하고 떠드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납은 사상 잔재”라고 마구잡이로 규탄했다.¹⁶¹³⁾ 그는 “인권(人權)”을 옹호함으로써 북한에다 “자본가, 지주들의 제도를 다시 복구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하는 “수정주의자들”을 통렬히 비난하면서 자기

1611) 같은 책, pp. 389~391.

1612) 같은 책, p. 390.

1613) 같은 책, p. 143.

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을 옹호했다. 그는 레닌의 구분법에 따라 현 시대에는 두 가지 독재가 있는 바, 하나는 “부르췌아 독재”요, 다른 하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전제하고, 모택동이 『인민민주 독재론』(1949년)에서 한 말을 빌려다가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부르췌아 독재는 지주,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기타 근로 인민의 이익을 억제하며 그들의 자유를 빼앗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췌아 독재는 노동자, 농민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하며 지주 자본가들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합니다. 이와 같은 부르췌아 독재와는 정반대로…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노동자, 농민들의 이익을 옹호하며 지주, 자본가들의 이익을 거부합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지주, 자본가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하며,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 인민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실시합니다. 자본주의 제도를 위해서는 부르췌아 독재가 필요하며 사회주의 제도를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합니다.¹⁶¹⁴⁾

이 놀랄 만큼 단순화되고, 공식적이지요, 독단적(獨斷的)인 양분법(兩分法)은 현대 의회민주주의 나라들에서 근로 대중이 누리는 광범한 자유의 실태를 북한 인민들이 알지 못하도록 가리우는 동시에 북한 노동계급에 대한 자기의 전체주의적(全體主義的) 독재체제를 “민주주의”로 역전시켜 보자는데 그 본의가 있었던 것은 물론이다. 동시에 그는 북한의 통일전선의 성격에 관해서는 과거에 자기가 해온 주장이 기만이었음을 스스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정권이 근로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 대중의 통일전선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통일전선은 본질상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인민 대중의 통일전선입니다. 오늘 우리는 청우당이나 민주당을 비롯한 우당들과 통일전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당(友黨)들이 다 사회주의를 찬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북반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반대하며 방해하는 자들과는 절대로 통일전선을 할 수 없습니다.¹⁶¹⁵⁾(밑줄은 저자).

비(非)공산주의 정당들을 공산당의 위성(衛星) 정당으로 만들려는 것은 인민민주

1614) 같은 책, p. 135.

1615) 같은 책, p. 136.

주의에서 통일전선의 기본전략이었다. 그러나 김일성이 위와 같은 말들을 했던 1958년 당시에는 이미 “우당(友黨)”(실제로는 공산당을 추종하는 비(非)공산주의 정당)이란 것은 간판뿐이요 독자적 조직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보다 8개월 전, 즉 1957년 8월에 시행된 제2기 ‘최고인민회의’대의원 선거에서는 선출된 215명의 대의원 중 ‘청우당’(靑友黨)과 ‘민주당’(民主黨)은 각각 11명에 불과했고, 노동당이 178명(82.8%)을 차지한데 불과했다.¹⁶¹⁶⁾ 선거가 사실상의 임명을 뜻했던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출에서 보여준 이러한 비율은 인민민주주의의 허식적인 형식성마저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공산당의 1당 1인지배체제가 완성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이제야 김일성은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다음과 같이 당당하게 주저하지 않고 설명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인민민주주의의 독재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아니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부르조아* 독재의 중간에 있는 어떤 중간 독재인 듯이 생각하고 있으며, 혹은 우리 정부가 통일전선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여 마치 인민 정권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 같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민민주주의 정권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에 속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정권이 본질상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¹⁶¹⁷⁾ (밑줄은 저자).

제4절 “사회주의 건설” 노선의 선언

노동당 제3차 대회를 1년 앞둔 1955년 4월 김일성은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우리 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테제*—」를 발표했다. 여기서 그는 전후(戰後) 시기에 노동당이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정치노선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8·15 해방 직후에 수립된 북한의 “인민정권”이 “반제—반봉건적 민주혁명의 과업”을 수행한 후, “북반부 인민들은 사회주의에 이 행하는 과도기에 점차적으로 들어서게 되었다”¹⁶¹⁸⁾고 언명했다. 그리고 그는 이때

1616) 『北韓總鑑』(1945~68), 共產圈問題研究所(서울), 1968年, p. 125.

1617) 『김일성 저작선집』 2, 1968년 판, p. 136.

1618) 『김일성 저작선집』 4, 1960년 판, 평양, pp. 197~198.

사회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이 3년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장을 받았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앞으로 있을 사회주의 건설의 임무에 관한 방침을 제시했다.

김일성의 이른바 “사회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 또는 “사회주의 건설”이, 인민민주주의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앞에서 설명한 바 소련 및 ‘중국공산당’이 내세웠던 인민민주주의의 이론 앞에서 설명과 비교하면서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그는 1953년 8월 5일 전후(戰後) 인민경제의 복구(復舊) 발전 사업의 계획을 제창했을 때, 이 계획은 세 개의 기본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첫 단계는 복구건설의 준비 단계로서 그 기간을 반년 내지 1년으로 잡았고, 둘째 단계는 인민경제 복구발전 3개년 계획을 수행했던 시기로서, 이 기간에 각 경제 부문을 전쟁 전 수준에까지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다. 셋째 단계는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築城)하기 위한 5개년계획을 작성하여 그것을 달성함으로써 북한의 공업화의 제1단계를 완성해야겠다는 것이었다.¹⁶¹⁹⁾

그는 스스로가 도발한 전쟁에 의하여 북한의 도시와 공업이 폐허가 되고 농촌이 황폐해진 조건을 오히려 중공업 우선주의의 원칙에 따라 사회주의 건설을 강행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다. 그 후 그는 제3차 당(黨) 대회(1956. 4)에서 위의 둘째 단계에서 당(黨)이 내세웠던 3개년계획을 “경제발전의 총노선”이라고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3개년 계획에 예견된 전후 인민 경제복구 발전의 주요 과업은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된 우리 인민 경제를 단순히 원상태로 복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여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長成)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는데 있었습니
다.¹⁶²⁰⁾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복구 발전시킨다”는 것은 하나의 수사(修辭)로써는 듣기 좋은 말이었다. 그러나 자본이 빈약한 현실에 있어서는 이 말은 중공업 건설을 위하여 근로대중과 농민의 소비생활을 희생

1619) 같은 책, pp. 8~9.

1620) 같은 책, p. 459.

시킨다는 것을 뜻했다. 김일성은 바로 스탈린의 방식으로 사회주의 공업화의 토대인 중공업의 발전을 위해 주민들에게 물질 생활면에서의 극심한 고통을 강요하면서 그들의 노력을 총동원했던 것이다. 3개년 계획을 수행하고 있던 중반기간에 열린 제3차 당 대회(1956. 4. 23)에서 그는 “사회주의의 기초건설”을 위하여 1957년부터 시작될 방대한 제1차 5개년 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¹⁶²¹⁾

김일성은 중공업을 북한 경제에서 “가장 큰 밑천”으로 보고 이에 주력하며, 이에 의거하여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닦는 일이다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했다. 그는 이것을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초건설에서의 “기본 과업”이라고 규정했다.¹⁶²²⁾ 이와 함께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여 “사회주의 제도”를 전면적으로 수립하는 일은 5개년계획 기간에 수행하여야 할 사회주의 기초건설에서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었다고 후일에 와서 설명했다.¹⁶²³⁾

개인 상공업의 국영화, 수공업의 협동화, 농업의 집단화 모두를 뜻하는 이 “사회주의적 개조”는 전쟁 직후부터 급속도로 강행되어 5개년계획이 아직 실시도상에 있던 1958년에 이르러 모두가 거의 동시에 끝났다. 김일성은 북한에서 4~5년이란 짧은 기간에 빠른 속도로 “사회주의적 개조”가 끝난 것을 큰 업적으로 자부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주장해 온 바와 같이 “자원적(自願的) 원칙”에 의하여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수행한 것이 결코 아니라, 1당 독재의 강력한 권력에 의하여 강제로 단행된 것은 스탈린 시대의 소련, 또는 모택동 지배하의 중국에서와 다를 바가 없었다.

5개년계획 시기에는 사회주의 제도를 수립했을 뿐만 아니라 이 기간을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닦기 위한 “기술적 개선의 첫 단계”로 규정했다.¹⁶²⁴⁾ 공산권으로부터 비록 “형제적 인민들의” 원조가 있었다고는 해도, 뒤떨어진 북한의 기술로는, -아무리 노동 대중에게 채찍질하고, 굶주리고 고역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동요와 반항심

1621) 제1차 5개년계획에 관해 김일성은 제3차 당 대회(1956. 4. 23)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3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우리는……경제, 문화건설에서 좀 더 장기적인 계획, 즉 제1차 5개년 인민경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년부터 실천에 옮겨질 제1차 5개년 기간에는 전후에 달성한 모든 성과들에 근거하여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상당한 진전을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김일성선집』 4, 1960년 판, 평양, p. 475.

1622) 『김일성저작선집』 3 1968년 판, 평양 p. 62.

1623) 《근로자》, 1968년, 9월호, p. 14.

1624) 『김일성저작선집』 3, 1968년 판, p. 75.

을 억제하기 위해 사상 교양사업을 강화해 보았자—계획 목표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달성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하여 기술개선을 절박한 현실적 과제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5개년계획이 끝나자 1961년부터는 7개년계획이 시작되었다. 여기에서는 이미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에 의거하여 계속 중공업 우선주의를 견지하면서 기술개선을 이룩하는 것을 “기본 과업”의 하나로 내세웠다.

김일성에 있어서 기술혁명=뒤떨어진 “우리나라를 현대적 공업과 발전된 농업을 가진 사회주의적 공업국가”로 만드는 방안이었다.¹⁶²⁵⁾ 그러나 북한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임무는 김일성의 가혹한 동원 체제 하에서도 용이하게 수행될 수 없었다는 것은 7개년계획이 3년을 더 연장하여 명목상 10개년계획으로 끝났다는 사실에 의하여 입증되었다.

인민 대중들의 물질생활을 기아(飢饉)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강행된 김일성의 중공업 우선정책과 성급한 농촌 집단화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선의의 비판마저도 용인되지 않았다. 당(黨)의 최고위층 내에서도 김일성의 정책노선에 대해 사소한 회의나 불만을 품는 자는 “반당 종파주의자”라고 하여 숙청했다. 그에 의하면 “종파주의는 자본주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며 또한 이것은 “당의 통일과 단결”을 해치는 무서운 해독이었다.¹⁶²⁶⁾ 그는 종파분자들이야말로 수정주의자이며, “수정주의는 당(黨)의 영도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¹⁶²⁷⁾ 그의 경제정책에 대한 당내의 불만과 반발은 1956년 8월 30~31일 소집되었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드디어 폭발했다. 이 사건은 김일성의 독재 권력을 심각하게 위협한 당내의 중대한 권력 투쟁이었다.

이들의 반(反)김일성 권력투쟁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후 당내에는 일대 숙당 소동이 일어났다. 김일성은 1956년 말에서 1957년 초에 걸쳐 당중(黨證) 교환 사업을 벌여 각급 당(黨) 조직에서 “반혁명”추종분자들을 파악하는 한편, 1957년 2월부터 10개월 동안 “당중앙 지도검열사업”을 강행하였다.¹⁶²⁸⁾ 이 “사업”은 최창익—박창옥 계의 “반당 반혁명분자”들을 소탕하기 위한 전국적 숙당운동으로서 온 북한 사

1625) 같은 책, p. 108.

1626) 『김일성선집』 5, 1960년 판, 평양, pp. 383~388.

1627) 같은 책, p. 389.

1628) 같은 책, p. 240.

회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이 숙당사업의 행동 책임자는 자기의 동생 김영주(金英柱)였다. 1958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지주와 부르주아지의 이익을 옹호 한다”는 이유로 이들 “반당분자(反黨分子)”, “반혁명분자(反革命分子)”에 대한 공격이 “계급투쟁”의 명분에서 더욱 격렬해졌고, 김일성의 1인 독재체제의 강화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 강화와 동일시되었다.

북한사회를 아비규환의 수라장으로 만든 이 건곤일척(乾坤一擲)의 권력투쟁은 스탈린이 꾸며냈던 1930년대의 ‘소련공산당’ 내의 권력투쟁과 너무나 흡사했다. 1인 독재체제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김일성은 반대파의 잔존세력을 쓸어버리는 한편, 반대파가 다시는 싹들 수 없도록 그 소지를 사전에 뭉개버렸다. 그 수단으로써 “계급교양사업” 또는 “사상교양사업”을 동시에 밀고 나갔다.¹⁶²⁹⁾ 그가 지금이야말로 “당의 유일한 사상과 의지”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 대중을 묶어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을 때¹⁶³⁰⁾ 그것은 “당”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사상”과 “의지”를 의미했음은 물론이다. 그리하여 북한의 황량한 정치적 동토지대(凍土地帶)에서 활짝 꽃핀 것은 오직 김일성의 개인숭배사상(個人崇拜思想) 뿐이었다.

‘사회주의의 과도기’ 문제를 고찰할 때 모택동과 김일성은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현저한 동일성을 보이고 있다. 즉 양자는 다 같이 사회주의 건설단계에 있어서의 민족자본가들의 존재 의의와 그들의 역할을 인정했다. 이것은 정통적 공산주의 이론에 대한 부정이었다. 모택동 지도하의 ‘중국공산당’은 중국 사회의 특수성에 의하여 중국의 민족 자본가의 이중적 성격 즉, 정치적 “동요성”과 동시에 “혁명성”을 지니고 있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건설 단계에 있어서도 민주주의 혁명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수중에 있는 개인 상공업의 “적극적인” 기능은 이용하고, “소극적인” 기능은 제한하면서 이것들에 대해 점차적으로 사회주의적 개조를 실현하는 정책을 택했던 것이다.¹⁶³¹⁾

1629) 이에 관해서는 김일성의 연설 「조선인민군은 항일 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1958년 2월 8일) 「제1차 5개년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1958년 3월 6일), 「우리 당 사법 정책의 관철을 위하여」(1958년 4월 29일) 등에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다.

1630) 『김일성선집』 5, 1960년 판, 평양, p. 240.

1631) 李維漢, 「中華全國工商聯合會會員代表大會での講演」, 앞의 『新中國資料集成』, 第二卷, p. 134 및 p. 142.

김일성은 북한의 민족 자본가의 “혁명성”을 인정한 일이란 거의 없고, 그들의 “동요성”만을 유달리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모택동의 정치전략에 따라 “민족적 양심을 가진 민족자본가”(즉 공산당을 추종하는 상공업자)들을 민족통일전선에 끌어들이는 정책을 해방직후부터 일관하게 주장해왔다. 그의 이 정책에는 두 개의 고려가 깔려 있었다. 첫째는 북조선의 자본가들을 정권에 참여시킴으로써 이들을 남한의 영향으로부터 격리시키자는 정치적 고려였다. 둘째는 김일성 정권의 초창기에는 북한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이용”¹⁶³²⁾한다는 경제적 고려였다. 북한의 한 당 교재는 이것을 뒤늦게 다음처럼 해명했다.

우리나라에서 중요산업 국유화는 일부 제국주의와 예속 자본주의들의 소유를 수탈할 목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민족 자본가들의 개인정리를 다치지 않았으며 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실시되었다.¹⁶³³⁾

북한에서 개인 상공업이 “사회주의적 개조”라는 이름에서 전면적으로 말살된 것은 1956년 말부터 1957년 초에 이르는 기간의 일이었다. 이러한 개인상공업의 “개조”는 농업의 집단화와 함께 1958년 8월에 완성되었다. 일부의 개인 상공업과 수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정책은 이미 북조선 인민위원회의 수립과 더불어 실시되기 시작하였었으나, 당시는 국영기업(“사회주의적 경제형태”)을 창설하는데다 중점을 두고 있었다. 기존의 개인기업과 수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열렬히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의 일이었다. 김일성은 1955년 4월 「우리 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태~~제」에서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의 지배적 지위를 더욱 높이며… 생산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적에서 “사회주의적 개조”의 방침을 역설했다.

수공업과 개인 소 상업은 협동정리를 통하여 점차 사회적으로 개조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에 아직 남아 있는 자본주의적 요소들은 제한, 리용하며 점차적 방법에 의하여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야 할 것이다.¹⁶³⁴⁾

1632) 『조선통사』(하), 1959년, 평양, p. 75.

1633) 앞의 『정치경제학』(하), 1962년, 평양, p. 28.

1634) 『김일성선집』 4, 1960년 판, 평양, p. 206.

이렇게 하여 휴전 직후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었던 개인 기업과 수공업은 자작농과 더불어 급속히 말살되었고¹⁶³⁵⁾ 공산당에 의하여 “민족 자본가”, “소(小)자산가”(수공업자와 자작농)라고 불렸던 사회적 계층은 모두가 “영광스러운 사회주의적 근로자”(노동자 또는 협동조합원)로 바뀌었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개조”를 설명할 때 김일성은 그것이 강제가 아니라 스탈린이나 모택동처럼 그들(수공업자와 자작농)의 “자원(自願)”에 따라 “실현”되었다는 거짓 설명을 붙이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았다.

1635) 김일성이 1954년 11월 3일 黨中央委員會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의 전체 공업 생산에서 국영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 이상이며, 나머지 10%중 7~8%는 협동경리가 차지하고, 개인 경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3%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같은 책, p.177.

제10 편

중-소의 대립(對立)과 북한의 곡예(曲藝)

들어가는 말 · 중-소 논쟁의 발단과 결말

제1장 · 대전 후의 중-소 밀월(蜜月)

제2장 · 중-소 대립의 저류(底流)

제3장 · 중-소 논쟁의 전개(展開)

제4장 · 북한의 대(對) 중-소 관계에서의 특수성(特殊性)

제5장 · 중-소 환경 속의 북한

제6장 · 중-소 분쟁이 북한에 준 충격

제7장 · 중-소의 파경(破鏡)과 북한

제8장 · 김일성의 친(親) 북경으로의 급선회(急旋回)

제9장 · 후루시/쇼프의 실각 이후의 정세변화

제10장 · 결론 : 주체사상의 본성(本性)

들어가는 말 : 중-소 논쟁의 발단과 결말

1956년 2월 니키타 흐루시초프(Nikita S. Khrushchev) 소련공산당 서기장의 스탈린 비판을 계기로 하여 발단한 중-소의 이데올로기 논쟁은 그 후 근 3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중-소 분쟁 또는 중-소 대립으로도 불려온 이 사건은 양국 공산당 사이에서 맑스-레닌주의를 둘러싼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시작하였지만 이것은 곧 정부간, 국가 간의 대립으로 발전하였다. 논쟁은 드디어 국경 분쟁으로 비화하여 아슬아슬한 군사 대결의 위기까지 치닫고 있었다. 아울러 이 두 공산주의 거국(巨國)간의 투쟁은 인접한 북한에 엄청난 경악과 충격을 주게 되었다.

그 9년 후인 1964년 10월 소련에서는 흐루시초프가 실각했으며 이어, 브레즈네프(Leonid I. Brezhnev) - 안드로포프(Yuri V. Andropov) - 철크렌코(Konstatin U. Chernenko)의 시대를 거쳐 1985년 3월 젊은 고르바초프(Mikhail S. Gorbachev)가 혜성처럼 등장하였다. 그는 내정에서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재건)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신사고외교(新思考外交)”에 따라 국제관계를 대결과 긴장 격화로부터 군비 축소, 긴장 완화, 국가 간의 상호 의존과 협력, 평화공존의 방향으로 대담한 전환을 추진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1976년의 9월 모택동(毛澤東) 사망 후 4인방(四人幫)의 몰락, 화국봉(華國鋒)의 집권을 거쳐 등소평(鄧小平)이 재(再) 복권되면서 권좌에 올랐다. 등소평은 “개혁”, “개방”으로의 노선 전환에 의하여 중국은 대담한 탈(脫) 모택동 시대를 열었다.¹⁶³⁶⁾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라고 할 중-소 두 공산당의 대내외 정책노선의 획기적인 변동은 드디어 1989년 5월 고르바초프의 방중(訪中)을 가능케 하여 중-소의 국가관계를 완전히 정상화시키기에 이르렀다.¹⁶³⁷⁾ 고르바초프의 방중은 소련의 수뇌로

1636) 鄧小平 등장 후 중국공산당의 脫 毛澤東 정책에 관한 분석은 필자의 논문 「中國에서의 非毛澤東化 過程」 참조. 건국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中國研究》, Vol. VIII, 1988년 8월호, pp. 5-74.

1637) 兩國 頂上會談의 성과로써 발표된 「中-蘇 共同커뮤니케(中-蘇聯合公報)에 의하면 합의점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 전문은 《朝日新聞》, 1989년 5월 19일자에 게재.

(1) 평화공존 5원칙이라는 국가 간의 보편적 원칙을 기초로 상호 관계를 발전시킨다.

서는 실로 30년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이데올로기적(的)* 타협 또는 일치를 보면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입각(立脚)한 1950년대의 혁명적 동지(同志) 시대로의 복귀는 결코 아니었다. 중-소의 새 시대는 탈(脫) *이데올로기적(的)*인, 즉 일반 자본주의국가들의 관계와 다를 바 없는 관계를 수립하면서 개막되었다.

1989년 5월 양국(兩國) 관계의 정상화로 30년 동안이나 계속된 중-소 대립은 막을 내렸다. 그 후 곧 사태는 급변해갔다. 1989년 여름 이래로 동(東)유럽을 휩쓴 민주화의 파도에 의하여 그 지역 공산당정권이 모두 붕괴되고 있던 무렵인 1991년 12월에는 소련 자체가 소멸함으로써 국제공산주의 운동은 사실상 세계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 분쟁은 더 이상 존속할 조건을 상실했다. 그러면 중-소분쟁의 역사는 이미 흘러간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는가. 그렇지 않다. 크로체(Benedetto Croce)는 갈파(喝破)하기를 “역사라는 것은 현재의 눈에 비추어 과거를 보는데서 성립되는 것이며, 역사가의 주(主)된 일은 기록(記錄)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評價)하는 것이다”¹⁶³⁸⁾라고 했다. 한편 콜링우드(Collingwood)는 “어떤 역사가가 연구하는 과거는 죽은 과거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에도 살아있는 과거다”라고 설파(說破)했다.¹⁶³⁹⁾ 여기서서 중-소 분쟁에서 드러났던 한반도의 국제관계를 죽은 과거가 아니라 아직 현재에도 살아있고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과거라는 문제의식을 염두(念頭)에 두면서 중-소분쟁 30년의 경과와 이에 대응해 온 북한의 정책을 고찰(考察)하고자 한다.

중-소간의 정치 분쟁은 *맑스-레닌주의의 이데올로기* 논쟁의 형태를 취하면서 출현했으나 여기에는 두 나라의 국가이익 상의 충돌과 민족의식(民族意識)(漢민족과 슬라브족) 상의 대립 및 정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교착(交錯)되어 있었다. 오늘

(2) 양국 간의 문제해결은 무력이 아니라 평화적 교섭에 의한다.

(3) 중-소 국경지대의 군사력은 쌍방이 최저 수준까지 삭감한다.

(4) 양국 간의 경제, 무역 그 밖의 여러 문제의 계획적 발전과 인적교류를 증진한다.

(5) 양당 간의 접촉과 교류를 심화시킨다.

중-소 정상회담은 양국 간의 완전한 화해의 길을 열었고 1990년 4월에는 「경제, 기술협력, 장기 계획협정」, 「국경 지대에서 병력 삭감 및 신뢰 조성협정」, 「우주 연구 및 그 평화 이용 협정」등의 서명을 가져왔다.

1638) E. H. Carr, *What is History*, A Vintage Book, 1961, p. 22.

1639) 같은 책, p. 23

공산주의 중국과 소련의 후신인 민주주의 러시아 간의 관계는 정상적이며 논쟁도 투쟁도 없다. 이데올로기 분쟁시기의 두 나라의 관계는 서로 맑스-레닌주의 정통을 다투면서 이단(異端)에서 이교도(異教徒)의 관계로 바뀌어 간 것이 특징이었다. 이제 시대는 달라졌다. 앞으로 중-러 간에 새로운 분쟁이 일어날 때는 그 분쟁은 이데올로기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 이를테면 양국의 이해(利害)의 대립 또는 국제정치에서의 패권(霸權)다툼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1960년대에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4분(分) 5열(裂)의 상태로 몰아넣었고, 1970년대에는 굴절(屈折)은 있었지만 국제관계를 양극화(兩極化, bipolarization)에서 다극화(多極化, polycentrism)의 추세로 바꾸어 놓은 중-소 논쟁(또는 중-소 분쟁)은 대전 후의 세계사에 큰 변동을 일으킨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국제관계의 다극화(多極化)현상을 초래한 요인은 비단 중-소 논쟁뿐만이 아니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인류를 전멸의 위기까지 이르게 했던 핵무기 체계의 놀라운 발달과 그 확산, 나토(NATO) 진영 내(특히 미국과 프랑스)의 분규, 일본 서독 등 패전국(敗戰國)들의 경제대국으로의 성장, 비(非)동맹국들의 대두와 그 발언권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국제관계의 구조적 변화는 중-소 논쟁, 중-소 결렬(決裂)과 직접 간접으로 깊은 내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중-소 논쟁의 발단은 국제공산주의 운동 내에서無比(無比)의 드높은 권위를 자랑하던 스탈린이 1953년 3월에 사망한 지 3년 후에 비롯했다. 즉, 그의 의발(衣鉢)을 계승한 흐루시초프가 1956년 2월에 열린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진술한 「비밀 보고연설」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 「보고」에서 스탈린의 과거 폭정(暴政)을 폭로하고 그에 대한 개인숭배작풍을 가차 없이 공격함으로써 그를 신(神)의 지위에서 급전직하 폭군(暴君)의 지위로 끌어내렸다.¹⁶⁴⁰⁾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은 여태까지

1640) 이 「秘密演說」은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들 앞에서만 한 것이며 그 내용은 고르바초프의 집권 때까지 소련을 포함한 공산주의 나라들에서도公表되지 않고 있었다. 연설문은 어떤 경로를 통하여 미국으로 흘러들어와 英譯을 통해 1956년 6월 4일 세계에 공개되었다. 그 英文譯은 「The Crimes of the Stalin Era-Special Reports to the 20th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by Nikita S. Khrushchev란 題下로 되어 있으며 《The New Leader》誌(Section Two, July 16, 1956)가 발행하였다. 이 「비밀연설」의 초기 한글 번역은 『 흐루시초프秘錄』(2) (李雄熙 譯), 語文閣, 1971년, pp. 342-427에 실려 있다.

스탈린의 추종자들이 쌓아올린 그의 신비성(神秘性)을 파괴하는 폭탄선언이었다. 스탈린의 충실한 심복(心腹)이었던 장본인 자신에 의한 그의 죄상(罪狀) 폭로는 소련을 위시한 각국 공산주의자들에 엄청난 경악과 혼란을 가져왔고 여태까지 간직해 온 스탈린에 대한 신앙체계를 무산(霧散)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스탈린 사망 후 그의 후계자들은 소위 “사회주의적 법질서”를 유린하고 국내외에서 공포와 테러 정책으로 군림해 온 스탈린 개인의 전체주의적 독재를 일정한 한계 안에서 청산하는 일에 착수했다. 그리하여 비밀경찰의 축소, 강제노동 수용소의 점차적 폐쇄, 사상-문화에 대한 통제의 완화, 여행의 부분적 자유 허용, 소비재(消費財) 생산의 주력 등 일련의 “자유화” 조치를 취하고 대(對)서방외교로 냉전(冷戰)을 해빙(解氷)으로 유도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동(東)유럽 나라들에 대해서는 소련의 국력상의 우위와 소련공산당의 권위를 유지하는 조건 하에서 위성국가들과 주종(主從)-명령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려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공동체”안에서 소련의 지도권을 유지하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소련 내에서의 공산당 일당(一黨) 지배체제와 스탈린이 건설한 거대한 세계 제국(帝國), 즉 “사회주의진영”을 더 이상 지탱(支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스탈린의 후계자들은 감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공산당’ 지도부의 스탈린 비판은 거꾸로 스탈린이 구축(構築)한 당(黨)의 절대적 위신을 추락시켰고,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중심적 권위의 진공상태(眞空狀態)를 초래했다. 이것이 전(全) 세계적으로 형성되었던 공산주의 조직과 단일적 지도 체계 및 이데올로기의 통일성 해체를 촉진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호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은 그의 낙관적 예견과는 달리 우선 동(東)유럽 제국(諸國)을 동요케 했다. 1956년 6월에 일어난 포즈난 폭동은 폴란드에 심각한 정치위기를 조성했고, 다시 10월에는 헝가리에서 무장혁명이 뒤따랐다. 이러한 사건들은 각국의 공산당과 일반 국민들이 여태까지 소련의 철권적(鐵拳的) 지배에 대해 품어온 반감이 표면적으로 폭발한 것이었다. 호루시초프는 헝가리의 무장혁명을 군사력으로 진압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소련의 대외적 이미지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지 않을 수 없었다. 동(東)유럽의 반소(反蘇) 항거에 의하여 소련을 계급적 차별이 철폐된 평등의 나라, 결코 약소국을 침략치 않는 정의의 나라, 제국주의와 투쟁하는 해방의 나라라고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이 만들어 온 여태까지의 소비에트 신화(神話)는 깨져버리고 말았다.

제1장

제1장

대전 후의 중-소 밀월(蜜月)

제1절 “소련을 배우자!”

돌이켜 보건대 1949년 10월 모택동의 ‘중화인민공화국’ 선포는 서방 진영을 크게 위협하는 국제공산주의의 놀라운 세력팽창이었다. 한편 이것은 전 세계 공산당들 사이에서 유일 최고의 권위를 독점하고 있던 ‘소련공산당’의 지위에 잠재적(潛在的) 도전이었다. ‘중국공산당’은 오랫동안 스탈린을 예찬해 왔었지만 1945년 5월 과감하게 ‘모택동사상(毛澤東思想)’을 “*맑스주의의 민족화(民族化)*의 뛰어난 전형(典型)”이며, “중국의 *프롤레타리아트와 전(全)* 근로인민이 이에 의하여 자기를 해방할 수 있는 유일의 옳은 이론이요 정책”이며, ‘중국공산당’의 “유일의 정확한 지도사상(指導思想)”이라고 숭양하기 시작했다.¹⁶⁴¹⁾ 이러한 “모택동사상”의 절대화(絶代化)는, 그의 권위로서 중국의 공산주의혁명에 대한 *모스크바*의 간섭을 막자는 의도가 숨어있었다는 것은 그 후의 사태가 입증했다.

1946년 초 유소기(劉少奇)는 모택동이 “중국적 또는 *아시아적* 형태의 *맑스주의*를 창조했다”고 강조하고, 나아가서는 동남(東南)아세아의 사정은 중국과 유사하므로 “중국이 택한 길은 이 나라들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¹⁶⁴²⁾이라고 공언하면서 *아시아* 공산주의 혁명운동에서의 지도권을 암시적(暗示的)으로 요구했다. 그리고 모택동정권 수립 직후에(1949년 11월) 북경에서 열렸던 ‘아세아-태평양제국 근로조합회의’에

1641) 『劉少奇選集』上卷(中文版), 1981년, 北京, p. 334.

1642) 劉少奇가 美國의 좌익계 여자자 *안나 루이스 스트롱*과의 面談 등에 진술한 말. Anna Louis Strong, 「The Thought of Mao Tse-tung」, *Amerasia*, XI, No. 6, June, 1947. 그런데 이때 *스탈린*은 東유럽 몇몇 나라에서 인쇄 중이던 모택동에 관한 *스트롱* 여사의 저작을 소련에서 출판하지 못하도록 개인적으로 간섭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에 관해서는 Stuart Scharn, *Mao Tse-tung*, 1967, p. 254 참조.

서 유소기는 “제국주의를 격파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함에 있어서 중국 인민이 걸어 온 길은, 많은 식민지 및 반(半)식민지 나라들의 인민들이 그들의 민족적 독립과 인민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걸어야 할 길이며……이 길은 모택동의 길이다”¹⁶⁴³⁾라고 언명함으로써 아세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중국공산당’의 혁명 영도권을 거의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같이 북경정권(北京政權)의 등장으로 국제공산주의의 일원적(一元的) 체제 안에는 사실상 두 개의 우두머리가 경쟁하고 있었던 것이다.

스탈린은 일면에서는 모택동을 의심 경계하면서도 다른 일면에서는 그의 위엄과 중국인들의 민족적 자존심을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중국만은 동(東)유럽 제국이나 북한과는 달리 신중하게 취급했다. 한편 모택동으로서도 스탈린의 중국정책에는 많은 불만과 의혹이 있었지만 사회주의의 선구자(先驅者),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아성(牙城)으로써의 소련을 높이 추켜세우고 스탈린을 예찬했던 것이다. 모든 역사 기술(記述)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소 분쟁의 역사에도 정사(正史)와 비사(秘史)가 있다. 공산주의 정당들의 경우, 정사는 당(黨)이 편찬한 공식의 역사며, 그때그때 당이 내세운 정책노선을 선전, 옹호하는 목적의식에서 기술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 당시의 주인공들의 진심이나 사건의 진상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비사(秘史)는 정치적 고려에서 세상에 당장 공표되지 않은 이면사(裏面史)이며, 이것은 주인공들의 진심이나 어떤 사건의 진상을 비교적 정직하게 전하는 것이 통례다.

모택동은 ‘중화인민공화국’ 선포 3개월 전인 1949년 6월 30일, 앞으로 중국은 “대(對)소 일변도”로 나갈 것을 선언했다. 즉 “과거 다년간의 경험이 가르친 바에 의해 중국 사람들은 제국주의 편으로 기울어지지 않으면 사회주의 편으로 기울어지게 되며 예외는 절대로 없다. 제3노선은 없다. 우리는 제국주의 쪽으로 기울어진 장개석(蔣介石) 반동파를 반대하며, 제3노선의 환상도 반대 한다”고 소련과의 단결의사를 명백히 했다. 그리고 나서는 “소련공산당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훌륭한 선생이다. 우리는 그들을 따라 배워야한다”¹⁶⁴⁴⁾고 공언했던 것이다.

1643) 《文匯報》(上海) 1949년 11월 25일. A. Doak Barnett(ed), *Communist Strategy in Asia*, 1963, p. 17에서 인용.

1644) 『毛澤東選集』(中文一卷本), 북경, 1969년, pp. 1362~1370.

모택동이 스탈린과의 허다한 내면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대소 일변도” 정책을 선언한 것은, 첫째로는, 스탈린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이미 신격화(神格化)된 존재로 숭앙을 받고 있었으며 그가 지도하는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승국(戰勝國)으로써 위신이 절정에 오르고 있었던 때문이다. 둘째로는, 앞으로 중국의 공산당정권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자본주의 제국으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들에게 장차 경제, 기술, 군사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는 소련밖에 없다고 판단했던 때문이다. 셋째로는, 세계가 “제국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양 대분(兩 大分)되고 있었고, 미국이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중화민국)를 지지하고 있던 불안한 상태에서 모택동은 장차 공산주의 중국의 안전보장(安全保障)과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서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명분)에 의거하여 소련의 지원을 받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때문이다.

모택동이 대소(對蘇) 일변도 정책을 선언한 후의 시기는 바로 유고슬라비아의 티토가 모스크바의 지배를 거부하면서 스탈린과 사활을 건 투쟁을 하고 있던 때였다. 모택동의 ‘중국공산당’은 유고슬라비아를 제명 처분한 1948년 6월의 코민포름(cominform ‘공산주의 정보국’) 결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¹⁶⁴⁵⁾ 유소기는 1948년 11월 10일에 발표한 「국제주의와 민족주의」라는 논문에서 티토(Josip Broz Tito)를 “프롤레타리아트의 반역자”, “반소적(反蘇的)”이며, “부르조아 민족주의”라고 규탄했다. 그는 이어서 러시아 10월혁명 후 레닌-스탈린은 “제정(帝政) 러시아 시대에 중국 및 그 밖의 나라들과 맺고 있던 불평등조약을 폐기하였고 국내 제(諸) 민족의 일률적인 완전평등을 선언했다”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이것이야 말로 “위대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의 올바른 적용”¹⁶⁴⁶⁾이라고 소련을 찬양했다.

유소기는 계속 “미(美)제국주의”를 공격하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國際主義)”를 찬양하면서 다음과 같이 소비에트 제국주의를 옹호했다.

1645) 「中共中央委員會 關於南共問題的 決議」, 《人民日報》 1948년 7월 14일자. 이 「決議」에서 중국공산당은 티토를 다음과 같이 공격했다. -“티토 집단은 맑스-레닌주의에 반대되는 내외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즉 反蘇的 입장을 취하고 당내 비판을 억압하고 -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내외에서 나온 정확한 의견을 계속 억제하고 국제 공산주의를 적대시함으로써 유고슬라비아 인민의 사업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또한 유고슬라비아의 敵을 환호케 했다”라고….

1646) 『劉少奇著作集』(日譯), 第二卷, p. 197. 이 논문은 1985년 北京에서 새로 편집 출판한 『劉少奇選集』(앞의 中文版)에서는 전부 削除되어있다.

……“소련은 적색(赤色) 제국주의자다”, “소련은 중국, 조선 및 그 밖의 민족을 침략한다”, “소련은 팽창주의를 실행하고 있다”는 등등의 언사는 제국주의 부르쥬아지가 아무 근거도 없이 멋대로 하고 있는 선전이며, 악의에 찬 증상이다……모든 민족에 있어서 제국주의의 압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찾고, 민족의 독립을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소비에트 연방과 세계 프롤레타리아트 및 공산당원의 원조를 받는 것이 승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¹⁶⁴⁷⁾

유소기는 1949년 10월에 행한 「중-소 우호협회의 강화(講話)」에서 1920년대에 손문(孫文)이 그의 『삼민주의』(三民主義)에서 ‘연아(聯俄)’, ‘용공(容共)’ 정책을 제시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중국에 대한 소련의 원조를 애원하다시피 간청했다. 그는 오늘의 중국인민들의 주요한 임무는 경제를 복구 발전시켜 공업화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만일 소련인민과 소련정부의 완전한 원조가 없다면 그것은 아주 곤란한 일이다.……그러므로 소련의 중국인민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우호적 원조는 중국경제를 복구 발전시키는 유리한 조건의 하나다”¹⁶⁴⁸⁾라고 인정했다. 그리고 중-소 두 나라 인민의 우호와 협력을 중시하고 존중하는 데는 경제원조 이외에도 “소련인민은 위대한 레닌과 스탈린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양성된 인민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¹⁶⁴⁹⁾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중-소 양국의 우호 협력을 존중하는 또 다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소련 인민이 걸어온 길만이 바로 중국 인민이 걷고자하는 길이며, 소련 인민의 국가건설의 경험만이 우리들 중국인이 크게 배우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중국 인민의 혁명은 과거에는 소련을 배우고 “소련을 스승으로 삼는다”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며, 금후 우리들이 국가를 건설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로 “소련을 스승으로 삼고” 소련 인민의 국가 건설의 경험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¹⁶⁵⁰⁾

유소기는 이 「강화」를 끝맺으면서 “세계 근로인민 혁명의 위대한 영도자 스탈린

1647) 같은 책, p. 202.

1648) 같은 책, p. 241. 이 「講話」도 앞의 『劉少奇選集』(中文版)에서는 전부 脱落되어 있다.

1649) 같은 책, p. 242.

1650) 같은 책, p. 244.

원수 만세!”를 외쳤다. 자존심이 유달리 강했던 ‘중국공산당’의 지도자로서는 실로 도를 지나친 대(對)소 아첨이었다.

제2절 중 - 소 동맹의 안팎

이상 모택동과 유소기의 문언(文言)은 ‘중국공산당’의 당시의 정사(正史)였다. 이러한 중국의 대소(對蘇) 우호의 추파(秋波) 속에서 1950년 2월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편의상 「신 조약」으로 부름)이 체결되었다. 이 신조약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기 하루 전인 1945년 8월 14일, 소련이 ‘중화민국’ 정부와 체결했던 「중-소 우호동맹조약」(편의상 「구 조약」으로 부름)의 개정판이었다.

「구 조약」은 미-소-영의 수뇌들이 장개석도 모르게 체결했던 「알타협정」(Yalta Agreement)¹⁶⁵¹⁾을 그대로 따른, 중국에게는 굴욕적(屈辱的)인 것이었다. 이 협정에

1651) 알타 협정은 1945년 2월 11일 스탈린, 루즈벨트, 처칠이 서명한 秘密協定(密約)으로서 그 정식 명칭은 「일본과의 전쟁에 소련이 참가하는데 관한 협정」(Agreement Regarding Entry of the Soviet Union into the War Against Japan)이었다. 이 협정은 체결 후 1년이 지난 1946년 2월 11일에야 공포되어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 내용은 독일이 항복하고 유럽에서 전쟁이 종결된 후 2개월~3개월 안에 소련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對日 전쟁에 참가한다는 협약이었다.

- (1) 外蒙古(=몽고인민공화국)의 현상을 유지한다.
- (2) 1904년 일본에 의하여 침해를 받은 (제정) 러시아의 舊 권리는 회복된다. 즉
 - a) 사할린의 남반부 및 주변의 섬들은 소련에 반환한다.
 - b) 商港인 大連은 국제화하고, 이곳에서의 소련의 우선적(preeminent) 이익을 보장하며, 소련의 해군 기지로써의 旅順항의 조차권을 회복한다.
 - c) 소련의 이익이 보장되며, 중화민국은 만주에서의 완전한 주권을 보유한다는 양해 하에, 東清鐵道 및 출구를 大連에다 갖는 남만주 철도는 중소 合辦會社의 설립에 의하여 공동 운영한다.
- (3) 千島列道(쿠릴 열도)는 소련에 인도한다. 이상 외몽고 및 항만, 철도에 관한 협정은 장개석 총통의 동의를 얻는다. 미국 대통령은 스탈린의 건의에 따라 그의 동의를 얻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소련은 중국을 일본의 질곡으로부터 해방할 목적에서 자신의 군사력으로 중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 우호 동맹조약을 체결할 의의가 있다는 것 등이다. 알타 협정의 영어 원문은 「U. 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이하 FRUS) : The Conference at Malta and Yalta, 1945, Washington, p. 984에 수록. 알타 회담에서 미국이 중국의 주권을 크게 침해하면서까지 소련에 제정 러시아 시대의 만주 이권을 모두 회복시켜준 주요한 이유는 언제 끝날지 모를 대일 전쟁에 소련을 참가시켜 전쟁을 빨리 종식시킴으로써 미국의 인명 희생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군사적 고려에서였다. 소련은 미국의 그런 약점을 이용하여 對日戰 참가 조건의 흥정에서 값을 올린 것이다.

서 소련정부는 장개석의 국민정부를 “중국의 중앙정부”라고 공식 승인했다. 「구 조약」은 일본을 가상(假想)의 적(敵)으로 삼고, 대일(對日) 전쟁이 끝난 후 일본이 침략을 반복하며 평화를 유린하는 일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고 쓰고 있었다. 그리고 조약 체결국의 일방이 일본의 공격을 받고 전쟁에 끌려들어갈 때는 다른 조약 체결국은 그 나라에 대해 “즉각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써 군사상, 그 밖의 원조 및 지원을 한다”(제3조)고 했다.¹⁶⁵²⁾

소련과 ‘중화민국’은 원자탄의 공격을 받고 백기를 들고 나온 일본 군국주의가 언젠가는 재생하지 않을까하고 다 같이 우려했다. 중화민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소련의 동맹국이 됨으로써 장차 있을 수 있는 일본의 재침략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가 있었다.

또한 「구 조약」은 소련정부가 중화민국에 대한 “도덕적”인 지지와 아울러 “군수물자와 그 밖의 물질적 원조를 제공하는 데에 동의한다”고 쓰고, “이 원조는 모두 중국의 중앙 정부인 국민정부에게 보내는 것으로 한다”(「교환 공문」, 1항)¹⁶⁵³⁾고 규정했다. 이 규정은 대일 전쟁 때 자체의 강대한 군대를 가지고 방대한 여러 번구(邊區) = “해방구(解放區)”를 통치하고 있던 모택동이 전 중국을 정복하는 데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것을 간접적으로 약속한 것이었다. 이러한 약속에 대해 ‘중화민국’ 정부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¹⁶⁵⁴⁾ 대일 항전에서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약화될 대로 약화된 중화민국정부는 그런 불평등 조건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1950년 2월의 「신 조약」은 취지에 있어서 「구 조약」과 거의 동일한 것이었

1652) 「中蘇友好同盟條約, 交換公文および 附屬協定」, 一九四五年 八月十四日. 『新中國資料集成』第3卷, 日本國際問題研究所 中國部會編, 1971年, pp. 102~1003.

1653) 같은 책, p. 104.

1654) 이것은 「新 條約」에 明文化되었다. 즉

첫째는 중국의 주권을 주장해오던 소련의 식민지 외몽고의 “독립”을 공약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소련의 지배권을 법적으로 승인했다.

둘째는 舊 南滿洲鐵道を “中國長春鐵道”로 명칭을 바꾸어 30년간 중-소가 공동 관리한다고 했다.

셋째는 大連을 “자유항”으로 개방하여 30년간 소련에 조차하며, 旅順의 해군기지도 30년간 소련이 중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한다고 했다. 이것은 모두가 日-日 전쟁 후 일본에 빼앗겼던 제국주의 帝政 利權의 만주 利權을 사회주의 소련이 되찾은 것이었다. 이 조약은 전형적인 불평등조약이었다. 조약全文은 같은 책, pp. 105~110.

다. 다만 미-소의 대립을 격화시키고 있던 냉전을 반영하여 가상 적국을 일본에서 미국까지 확대시킨 점이 달랐다. 「신 조약」제1조는 “양 체결국은 일본 또는 침략 행위에 있어서 직접 간접으로 일본과 결탁하는 그 밖의 나라의 침략 및 평화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보장한다.”¹⁶⁵⁵⁾ 고 쓰고 있다. 또한 「신 조약」과 함께 중국 장춘(長春)철도, 여순(旅順) 해군기지 및 대련(大連)에 관한 협정도 체결했다.¹⁶⁵⁶⁾

「신 조약」은 「구 조약」과 비교하면 중국에 훨씬 유리했지만 결코 평등조약은 아니었다. 그러나 모택동은 소련과의 동맹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장개석을 돕고 있던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일단 안전을 기할 수가 있었다. 소련이 여순과 대련을 북경정부에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것¹⁶⁵⁷⁾은 동북지방 내의 자국 이권에 끝까지 연연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었다. 여순 해군기지가 중국에 최종적으로 반환된 것은 모택동의 군대가 참전하여 막대한 희생을 치렀던 한국전쟁이 끝난 1955년 5월의 일이었다.

「신 조약」의 체결에 대해 중국 내에서는 일본 제국주의가 이미 패망하여 재기불능(再起不能)인데 무엇 때문에 조약까지 체결하여 새로운 침략에 공동방위(共同防衛)를 할 필요가 있느냐고 상당한 불만이 있었다.¹⁶⁵⁸⁾ 그러나 「신 조약」체결 후 3년 동안에 중-소 무역은 확대해 나갔고 소련의 많은 기술자, 전문가들이 중국에 파견되어 공장의 신설, 개축, 확장을 도왔다. 양국 간의 “우호와 협력”의 기운은 팽배해갔다. 양국 간에는 많은 대표단의 교류가 있었고, 수 천 종의 소련 서적이 중국에서 번역 출판되었으며 수백 명의 중국 학생들이 소련에 파견되었고 소련의 많은 교수들이

1655) 「中-蘇 友好同盟 相互援助 條約」, 1950년 2월 14일. 같은 책, p. 54.

1656) 이 協定에서는 大連을 자유항으로 만들어 蘇聯에다 30년 기한으로 조차한다는 「舊 條約」의 조항은 사라지고 소련이 賃借에 의하여 관리를 대행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는 재산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이 접수한다고 되어있다(제3조). 그리고 중국 장춘철도와 여순항의 반환을 「구 조약」의 30년에서 「新 條約」은 1952년 말까지로 앞당겨졌다.(제1조, 제2조) 「中國長春鐵道, 旅順口および 大連に關する 中-蘇協定」, 같은 책, p. 56 및 p. 57.

1657) 반환하지 않는 대가로 中華人民共和國는 5년 동안에 年利 1%라는 저리로 3억 달러의 차관을 받았고 新疆지방의 석유와 有色金屬 개발에 관한 협정을 체결, 중-소 합판회사를 설립했다. 여기서 소련은 持株의 51%를 차지함으로써 지배권을 장악했던 것이다. 「ソ連から 中華人民共和國への 借款供與に關する 中ソ協定」, (第1條), 같은 책, p. 58.

1658) 앞의 『劉少奇著作集』(日譯) 第2卷, pp. 261~262.

중국의 대학, 전문학교에서 가르쳤다.¹⁶⁵⁹⁾ 중-소 밀월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모택동은 1953년 2월 7일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우리는 위대한 국가건설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활동에는 곤란이 있으며 우리에게는 경험도 부족하다. 따라서 소련의 선진적 경험을 진지하게 학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산당 안에서도 당 밖에서도 노 간부든 신 간부든, 기술자든, 지식인이든 또한 노동 대중이든 농민 대중이든 모두 성심성의 소련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맑스-엥겔스-레닌-스탈린*에게 배울 뿐만 아니라 소련의 선진적 과학 기술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전국적 규모로 소련을 배우는 고조(高潮)를 일으켜서 우리의 국가를 건설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¹⁶⁶⁰⁾

중-소 밀월시대의 북경 측 정사(正史)는 이상과 같았다. 그러나 후일 발표된 이면사는 달랐다. 소련과의 「우호동맹 호상원조 조약」을 교섭하기 위하여 모택동은 신생 정부의 수도를 비어둔 채 1949년 12월 16일 *모스크바*를 방문, 50여일이나 체류했다. 제정 *러시아* 때 획득한 만주의 이권을 집요하게 유지하려는 *스탈린*과 이것을 되찾으려는 모택동 사이에는 끈질긴 협상이 진행되었다. 1957년 1월에 와서 모택동은 “우리들로서는 *스탈린*과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우리는 중-소 우호동맹 호상원조 조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그는 조인하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중국 장춘 철도를 요구했지만 그는 그것을 돌려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호랑이가 물고 있는 고기 덩어리라고 해도 역시 빼내는 방법은 있다.”¹⁶⁶¹⁾고 팽팽히 맞섰던 협상과정의 일단을 밝혔다. 1958년 3월 모택동은 조약체결에서 구사한 자기의 끈덕진 협상방법의 일단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1950년 나는 *스탈린*과 *모스크바*에서 2개월 동안 다투었다. ‘상호원조 동맹조약’, 중국 장춘철도, 합판(合辦)회사, 국경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서는, 한편으로는 저쪽이 제기한 것에 이쪽이 동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다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쪽이 어

1659) 같은 책, pp. 266-267.

1660) 『中國人民 政治協商會議 第1期 全國委員會 第4回會議における 毛澤東主席の 指示』(1953. 2. 7), 앞의 『新中國資料集成』, 第四卷, 1972年, pp. 18-19. 소련을 배우라는 이 모택동 「指示」는 중-소 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었던 1977년 ‘중국공산당’이 편집 출판한 『毛澤東選集』 第5卷에서는 모두 빼버렸다.

1661) 『毛澤東思想萬歲』(上), 東京大學近代中國史研究會譯, 1974年, p. 122.

땡게 해서라도 견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쪽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 같은 식이었다. 이것은 사회주의 전체의 이익을 고려했던 때문이다. 그 위에 아직 두 개의 “식민지” 즉 동북(만주)과 신강이 남아있었으며 그곳에는 제3국인 [중국-소련 이외의 사람이 거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었다. 현재에는 그런 제한은 철폐되었다.¹⁶⁶²⁾

1662) 같은 책, p. 223.

제2장

중-소 대립의 저류(底流)

제1절 스탈린의 모택동 불신(不信)

북정정부 수립 후 미국의 정치가들은 중-소의 국가적 이해관계의 대립을 바라보면서 두 나라의 내면적 대립(對立)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탐색하고 “모택동의 티토화(化)”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모택동의 티토화”는 당시 국제정치 무대에서 큰 관심꺼리가 되어있었다. 한편 스탈린으로서는 1945년 일어난 국-공 내전에서 모택동이 중국혁명의 전략과 내전 종식에 대한 자기의 권고를 무시하면서, 소련의 지원 없이 장개석(蔣介石) 군대를 격파하고 혁명전쟁에서 승리하자 그가 티토화 하거나 않을까 하고 경계해왔다. 이런 의심은 모택동이 연 100만 대군을 한국전쟁에 투입하여 미국과의 혈전을 치른 후에야 비로소 사라졌다. 이 과정을 모택동은 1962년 9월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스탈린은 중국이 혁명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그것은 1945년의 일이었는데 스탈린은 중국혁명을 저지하기 위하여, 내전을 하면 안 된다, 장개석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국민족은 망한다고 했다. 당시 우리는 [그의 지시를] 수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혁명은 승리했다. 혁명이 승리한 후 [스탈린은] 이번에는 중국이 유고슬라비아화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티토화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했다. 그 후 [내가] 모스크바에 가서 「중-소 동맹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이것 역시 일장의 투쟁을 거쳐 나온 것이다. 그는 이 조약에 조인하는 것을 바라지 않아서 2개월의 교섭을 거쳐 겨우 조인했다. 스탈린이 우리를 믿게 된 것은 언제쯤일까. [조선전쟁이 일어나] 항미원조(抗美援朝)가 시작되면서부터이며 1950년 겨울부터 우리가 티토가 아니요, 유고슬라비아가 아니라는 것을 믿게끔 되었다.¹⁶⁶³⁾

1663) 앞의 『毛澤東思想萬歲』(下), pp. 52-53.

회고컨대 1931년 9월 일본 관동군은 봉천 근교 유조호(柳條湖)에서 9·18사변(“만주사변”)을 일으켜 중국의 전 동북(東北) 지방을 장악한 후 1937년 7월에는 다시 노구교(盧溝橋)사건을 일으킴으로써 중-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일본 침략군에 공동으로 대항하기 위한 제2차 국-공 합작이 우여곡절(迂餘曲折) 끝에 성립되었다(1937년 9월). 스탈린은 일본군의 있을 수 있는 침공으로부터 소련을 방위한다는 자국의 안전보장(安全保障)을 위하여 중국민족의 항일전쟁을 지원했다. 그는 ‘중국공산당’의 주적(主敵)을 국민당 군대에서 일본군으로 바꾸도록 하기 위하여 제2차 국-공 합작(國共合作)을 추진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대(對)중 지원을 모택동이 아니라 장개석을 통하여 제공했고, 장개석의 지도를 통하여 항일전쟁을 수행케 하는 계획을 세웠다.

국민당과 공산당의 두 당(黨)은 제2차 국-공합작(항일민족통일전선)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모택동의 유격대들을 장개석 지휘 하의 ‘국민혁명군’ 제8로군과 신4군(新四軍)으로 편성하는데 합의했다. 당시 스탈린은 “중국의 공산당과 노동계급은 반(反) 침략전쟁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아직은 너무나 취약하다”는 생각에서 공산당은 국민당에 의지하여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는 1937년 12월 코민테른 주재 중국대표 왕 명(王 明)을 모스크바로부터 연안(延安)에 파견하였다. 왕 명은 스탈린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지당하다고 믿고 추종하면서 1930년대 전반에는 “좌경모험주의(左傾冒險主義)의 과오(過誤)” (모택동의 비판)를 범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8로군’과 ‘신4군’은 국민당 군대 하에 “통일적 지휘”, “통일적 편성”, “통일적 무장”, “통일적 규율”, “통일적 작전계획”, “통일적 공급”, “통일적 작전행동”을 실행하도록 중국공산당에 요구했다.

이런 스탈린의 요구는 홍군(紅軍)을 국민당 군대에다 완전히 통합시킨다는 것을 의미했다. 요컨대 그의 요구는 통일전선 안에서 공산당은 반드시 자기의 독자성, 즉 “독립 자주”의 원칙을 견지(堅持)하여야 한다는 전술과, 항일전쟁에서 공산당은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행위였다. 당(黨) 내에서는 왕 명 등, 즉 스탈린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택동은 왕 명의 이러한 “우경투항주의적(右傾投降主義的) 과오”를 단호히 반대하고 “자주의 입장”에서 장개석의 군령(軍令)을 거역하면서 유격전으로 해방구(解放區)를 확대해 갔다.¹⁶⁶⁴⁾

국-공합작 후 두 당의 군대가 공동으로 항일전쟁을 치르는 동안, 양 당은 각기 자기 세력권을 확대하려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군사적 충돌이 도처에서 일어났다. 스탈린은 모택동이 항일전쟁 보다는 국민당 군대와와의 내전에 더 적극적이라는데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 더욱이 전시(戰時) 연합국이었던 미-영이 장개석을 지원하여 중국을 통일하려는 계획에 대해 스탈린도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일본군이 격파되어야 한다는 전략상의 고려에서 미-영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다.

1945년 4월 15일 소련을 방문한 주중(駐中) 미국 대사 헐리(Patrick Hurley)는 스탈린과의 면담에서 미-영은 "중국에 통일되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정부를 세우며 모든 군대를 통합하고자 하는 중국인의 소망을 인정"하고,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개석 지도하의 '중국 국민정부'를 지지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자 스탈린은 솔직하게 미-영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중국의(두 당) 군대를 통합하려는 영-미와 기꺼이 협력 하겠다"는 말을 첨부했다.¹⁶⁶⁵⁾ 이 자리에서 스탈린은 장개석을 "호의적"으로 말하고, 중국 관리 안의 일부는 부패하였지만 장개석은 "사심(私心)이 없으며", "애국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소련정부는 과거에도 여러 번 그를 도와주었다고 말했다고 한다.¹⁶⁶⁶⁾ 실로 놀라운 일이었다.

1945년 5월말 트루먼 대통령의 요청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했던 홉킨스(Hurry Hopkins) 특사의 증언에 의하면¹⁶⁶⁷⁾ 스탈린은 말하기를 "장개석 대원수는 중국의 통일을 떠맡을 자격 있는 중국의 유일한 지도자다. [한편] 중국공산당의 지도자들은

1664) 이상의 설명은 주로 劉吉主 編, 『中國共產黨七十年(1921~1991)』, 上海人民出版社, 1991年, pp. 310~315 및 앞의 胡喬木 著, 『中國共產黨的三十年』, pp. 40~43에 의거.

호루시초프의 『回顧錄』에 의하면 모택동은 抗日戰爭 때 코민테른이 자기에게 권고하기를 "장개석과 접촉하고, 항일에 힘을 합치기 위해 蔣介石에게 싸움을 걸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서 '중국공산당'에 대하여 "온갖 파괴활동의 자행"을 지시한 스탈린을 비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호루시초프는 "침략자를 섬멸하기 위해서는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협력해야 했다"고 스탈린의 견해를 옹호했지만 毛澤東은 이 말에는 대답이 없었고 "스탈린은 중국혁명에 큰 손해를 끼쳤으며 중국의 혁명세력을 억제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Khrushchev Remembers, The Glasnost Tapes*, Little, Brown and Company, 1990, p.150.

1665) *The China White Paper*, August 1949, Sanford University Press, 1967, p. 95 참조.

1666) 위와 같음.

1667) 같은 책, p. 115.

중국 통일의 임무를 떠맡을 훌륭한 또는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중국 공산주의자들을 혹평한 것은 외상 몰로토프(Vyacheslav Molotov)였다. *헨리* 대사는 자기와 스탈린과의 면담에 배석했던 몰로토프가 한 말을 그대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사실은 전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획득하는 것이요, 중국 내부의 개혁뿐이다. 소련은 중국 공산주의자들을 지원하고 있지 않고 있다. 소련은 중국 내부의 대립이나 내전을 바라지 않는다.¹⁶⁶⁸⁾

이상 스탈린과 몰로토프의 모택동에 관한 놀랄만한 부정적 평가들은 미국을 속여서 안심시키기 위한 허위의 험담이었을까. 또는 단지 외교적 제스처로 한 말이었을까. 그렇지 않으면 사실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일까. 그들의 진의(眞意)가 무엇이었든 *모스크바*는 전시 중 모택동에 대해 극히 비판적이었고¹⁶⁶⁹⁾ 장개석에 대하여 호의적이었던 것은 틀림없다. 스탈린-모택동 사이에 잠시 밀월관계가 성립된 것은 모택동의 군대가 일본 패망 후 재발한 국-공 내전에서 중국 대륙을 정복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이후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 직전까지 당시의 주중 소련 대사는 대만으로 후퇴하고 있던 국민정부를 대륙의 마지막 거점인 광둥(廣東)까지 따라가면서 그 정통성을 인정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소련의 대(對)중 정책에서 모택동이 소련을 근본적으로 불신하게 되었다는 점은 그 후의 중-소분쟁의 주요한 원인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1668) 같은 책, p. 94. 흐루시초프의 證言에 의하면 스탈린도 毛澤東에 대해 “*마가린* 맑스주의자”(peschany markist, 가짜 공산주의자)라는 별명을 붙여 부르곤 했다는 것이다. *Khrushchev Remembers*, Little Brown and Company, 1970, p. 462.

1669) 피오토르. 우라지미로프 『延安日記』上-下, 사이マル出版會, 1975年 참조. 이 책의 저자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코민테른* 연락관으로서 延安에 파견되어 <파스통신>의 軍 보도반원을 겸임, 1945년 11월 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이때에 쓴 일기 『延安日記』를 통하여 그는 모택동의 정책, 언행을 냉담하게 비판했는데, 그의 이러한 모택동 관은 당연히 *모스크바*에 전달되어 스탈린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제2절 코민테른의 실패

스탈린이 모택동의 “티토화(化)”에 대하여 의혹을 품은 것은 모택동이 중국 대륙을 제패한 이후의 일이었다. 그러나 양자 간의 상호 불신과 대립의 원인은 20년대 중반에서 1940년대 말까지로 소급된다. 이제 그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공산당’은 1921년 7월 코민테른 지도하에 코민테른의 중국지부로써 창립되었다. 그 후 ‘중국군민당’과 두 차례의 합작(1924. 1~27. 7 및 1937. 9~45. 8)과 두 차례의 내전(1927. 8~37. 7 및 1946. 6~49. 10)을 거치면서 전 중국의 공산주의화(化)를 위한 투쟁을 벌였다. 1935년 1월 모택동이 모스크바의 지원 없이 자력으로 당(黨)의 군사권과 실권을 장악할 때까지 스탈린=코민테른은 자기들을 맹종하고 있던 당(黨) 중앙(지도부)을 통하여 ‘국민당’과의 합작을 집요하게 추진했다. 그리고 합작에 실패하면 곧 모험주의적인 무장봉기(武裝蜂起)를 일으키도록 몇 차례나 지시하곤 했다.

그리고 무장봉기가 참패로 돌아가면 스탈린=코민테른은 그 책임을 일체 ‘중국공산당’의 지도부에 전가(轉嫁)하고, 당(黨) 책임자를 그때마다 교체했다. 그리하여 진독수(陳獨秀)는 “우경 기회주의(機會主義)”로, 구추백(瞿秋白)은 “극좌 맹동주의(盲動主義)”로, 이립삼(李立三)은 “극좌 기회주의”로 몰려 쫓겨났다. 이들은 코민테른이 설정한 이론과 전략을 그대로 따랐거나 그 구도(構圖) 안에서 행동한데 불과했다. 그렇지만 이들 모두는 스탈린=코민테른의 절대 무오류성(無謬謬性)을 보이기 위하여 무장봉기를 감행했다가 실패하여 희생된 속죄양(贖罪羊)들에 불과했다.

다시 말하면 ‘중국공산당’은 코민테른의 정책에 따라 1924년 1월부터 중국군민당과 합작했고 1926년 7월에는 장개석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국민혁명군’의 북방군벌(北方軍閥) 토벌전쟁(討伐戰爭)에 참가했다. 그런데 1927년 4월 공산당원들을 불신하고 있던 장개석의 반공(反共) 쿠데타에 의하여 장개석정권과 공산당의 합작은 깨지게 되었다. 여기서 공산당은 국민당 좌파인 왕정위(汪精衛)의 무한(武漢)정부(1925년 7월 1일 광둥에서 수립)와 국-공합작을 유지하면서 자기들의 무력을 배경으로 하여 무한정부(武漢政府)의 실권을 장악하려다가 도리어 역습을 당하고 괴멸 상태에 빠졌다. 이로써 제1차 국-공합작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여기서 스탈린은 추락된 자기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코민테른이 새로 파견한 로미나제(Besso Rominadze)

와 노이만(Heinz Neumann)이라는 두 청년의 계획하에 1927년 8월 1일 남창(南昌)에서 무장반란을 일으켰으나 곧 진압되고 말았다.

남창 ‘무장폭동’의 참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스탈린은 1927년 8월 7일 ‘중국공산당 긴급회의’(8·7회의)를 소집케 하고, 가을 추수기를 이용하여 여러 성(省)에서 무장 봉기를 일으키도록 다시 지시했다. 이것이 1927년 9월 호남-강서-호북-광둥 등 4개성에서 일어났던 유명한 “4성(省) 추수폭동(秋收暴動)”이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국민당 군대에 의하여 신속하게 진압되었다. ‘당(黨)중앙’의 지시에 따라 호남성에서 추수폭동에 참가하고 있던 모택동의 군대도 참패하였다. 모택동은 겨우 1천명의 패잔병(敗殘兵)을 이끌고 호남성-강서성에 걸쳐있는 난공불락(難攻不落)의 요새인 정강산(井岡山)으로 퇴각했다. 1927년 10월의 일이었다.

모택동은 당(黨) 중앙위원이었지만 스탈린의 안중에서 벗어난 인물이었다. 그는 정강산을 중심으로 하여 최초의 혁명근거지를 창설하고 홍색정권(紅色政權=赤色政權), 즉 “노농(勞農)소비엣정권”을 수립한 후 이것을 확대해 나갔다. 이 혁명근거지를 지탱한 기둥의 하나는 농민들로 조직된 홍군(紅軍)이요, 다른 하나는 홍군의 원천지인 농촌에서 단행한 토지혁명이었다. 토지 혁명은 농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절대적 조건이라는 것을 모택동은 자기의 추수 폭동 때의 체험을 통하여 절감하고 있었다.

모택동은, 농업국 중국에서는 승산이 전무한 스탈린 식(式)의 도시 중점주의적 프롤레타리아혁명 전략을 포기하고 “혁명적 농촌으로 도시를 포위 한다”¹⁶⁷⁰⁾는 새롭고도 독특한 혁명 전략을 구상하고 실천해 나갔다. 그의 이러한 혁명 전략은 1931년 11월 강서성 서금(瑞金)에서 그를 주석으로 하는 ‘중화소비엣 공화국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농촌에다 혁명근거지를 수립하고 그것을 강화하여 ‘국민당’ 정부에 대항한다는 모

1670) 이 毛澤東 노선을 胡喬木은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요약하고 있다.

“모택동 동지는 중국혁명이 도시에서 강대한 적에 격파되어, 도시에서는 당분간은 승리를 획득할 방법이 없는 그러한 조건에서 존재할 수 있는 유일의 옳은 발전법칙, 즉 무장한 혁명의 농촌으로써 反혁명이 점거한 도시를 포위하고 또한 최후에는 이것을 빼앗아버린다는 방법을 찾아냈던 것이다. 중국혁명의 그 후 20년간의 발전은 모택동 동지의 이 예견이 옳았음을 완전히 실증하였다.” 앞의 胡喬木 著, 『中國共產黨의三十年』, p. 24 (선은 인용자).

택동의 혁명 전략은 기본적으로 스탈린의 그것과는 어긋나는 것이었다. 대 도시에서 군대와 노동자가 감행한 무장 봉기가 모두 괴멸하여 도시에 대한 당의 영향력이 감퇴하게 되었다. 여기서 스탈린과 그의 대리 기관인 '중국공산당' 중앙(中央)은 혁명의 원천지(源泉地)가 당장에는 농촌, 혁명의 추진세력은 농민일 수밖에 없다고 인식을 바꾸어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은 기본적으로는 도시의 프롤레타리아트를 주축으로 하며 농민을 그 보조수단으로 한다는 혁명 노선의 도식(圖式)에 집착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탈린은 농촌을 혁명근거지로 하고 농민을 주력부대로 하여 유격전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쟁취한다는 모택동의 군사 전략을 근본적으로 불신하고 있었다. 당시 당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립삼(李立三)도 또한 그런 공산주의자였다.

세칭 "이립삼노선(李立三路線)"의 핵심은 한 개 성(省) 또는 수 개 성의 중심 도시에서 먼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승리하게 되면, 이것이 전국적 승리를 유발하여 온 중국을 통하여 혁명정권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¹⁶⁷¹⁾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28년 여름 이래로 당권을 장악한 이립삼은 1930년 7월, 전국적 무장 봉기로 중심적 대도시들을 점령하라는 무모(無謀)한 공격명령을 내렸다. 홍군의 여러 부대들은 그해 9월까지 무한(武漢), 남창(南昌), 장사(長沙) 등 3대 도시로 진격했으나 막대한 병력 손실을 내면서 대패했다. 모택동은 "이립삼 노선"에 내심으로는 극히 비판적이었지만¹⁶⁷²⁾ 당의 총서기인 그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 남창 공격에 출동은 했지만 승산이 없다는 판단에서 공격을 중지했다. 그 후 장사(長沙) 탈환의 명령을 받고 공격해 보았으나 역시 실패하여 강성성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이 참담한 실패에 대해 당 내에서 비판이 일어나게 되자 모스크바는 왕 명(=진소우 陳紹禹)과 박 고(博古=진방권 秦邦憲), 낙 보(洛甫=장문천 張聞天) 등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28명의 불세비끼", 즉 "소련 유학생파"로 하여금 1931년 6월 이립삼을 타도, 당권을 장악케 했다. 왕 명은 당 총서기가 되었지만 1931년 9월 모스크바로 소환되어 코민테른 중국 대표로써 활동하게 되었다. 그 후 당권(黨權)은 박 고, 낙 보에로 계승되어 모택동과 치열한 권력투쟁을 벌였다. 그 사이에 왕 명은 모스크바에

1671) 《紅旗》社説(李立三), 「一省また 數省で」の政權存敗の勝利の條件をどのように準備するか, 日本國際問題研究所『中國共產黨史資料集』4, 1971年, p. 596 참조.

1672) Edgar Snow, *Red Star Over China*, An Evergreen Black Cat Book, 1961, p. 181 참조.

서 당을 원격조정하고 있었다. 그 후 1935년 1월까지 중국공산당은 이들 “소련 유학 생파”의 지배하에 있었다.

서금의 홍군은 1934년 10월 정부군 즉 국민당군의 포위망을 뚫고 이 지역을 탈출, 섬서성(陝西省)을 향하여 퇴각했다. 그 유명한 “장정(長征)”의 막이 오른 것이다. 퇴각 도중의 모택동은 1935년 1월 귀주성(貴州省) 준의(遵義)에서 전격적으로 군사권(실질적으로는 당권)을 장악했다. 왕 명은 이립삼의 정적인 동시에 모택동의 최강의 적수이기도 했다. 후일 모택동에 의하여 “좌경 모험주의”라는 규탄을 받은 “왕 명 노선”은 사실상 “이립삼 노선”의 연장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왕 명 노선”은 모택동의 “농촌에 의한 도시의 포위”라는 모택동의 전략 및 유격전 전술과는 대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중국공산당’ 창립 이후 당의 최고 책임자는 모두 모스크바에 있던 스탈린=코민테른에 의하여 임명되고 교체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모스크바의 지지를 배경으로 하지 않고 당권을 장악한 예로는 모택동이 처음이었다. 이것만으로도 모택동의 스탈린에 대한 불만 불신이 얼마나 깊었으리라는 것은 가히 추측할 수가 있다. 그러나 스탈린이 사망한 후 사정은 크게 달라져 모택동의 입장은 거꾸로 스탈린을 극력 옹호해야 하는 기묘한 방향으로 역전하게 되었다. 이 모든 사태는 결국 자신의 권력유지 때문이었다.

제3장

朝鮮勞動黨中央委員會宣傳部

중-소 논쟁의 전개(展開)

제1절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이 몰고 온 파란

흐루시초프는 1956년 2월 돌연히 스탈린 개인숭배(개인 우상화)의 해독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때 ‘중국공산당’ 안에서도 처음에는 흐루시초프에 호응하는 간부들이 없지 않았다.¹⁶⁷³⁾ 그러나 당시 모택동은 스탈린 비판의 여파가 ‘중국공산당’에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침묵할 수가 없었다.¹⁶⁷⁴⁾ 스탈린 시대에는 당 최고 권력자에 대한 개인숭배가 비단 소련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공산당 국가에서 보편적(普遍的)인 풍조로 되어있었다. 그런데다가 국-공 내전에서 승리한 모택동의 권위와 명성이 널리 선전되고 있던 중국내의 상황에서 모택동 개인숭배는 중국공산당 안에서도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1673) 毛澤東은 “소련에서 지난날 스탈린을 1만(萬)길 하늘높이 떠받들던 사람이 오늘은 9천길 땅속으로 쓸어들고 있다”고 흐루시초프를 비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를] 뒤따라가는 사람이 있다”고 야유조로 지적했다. 『毛澤東選集』(中文版), 第5卷, 北京, 1977년 p. 286.

1674) 1956년 4월 5일 《人民日報》는 논문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역사적 경험에 대하여」에서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에 어느 정도 동조하고, 스탈린의 “중대한 과오”를 인정하는 한편 “스탈린의 위대한 공적”을 옹호하면서 흐루시초프의 지나친 공격을 완곡하게 경고했다. 그리고 그해 12월 29일에도 ‘다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역사적 경험에 대해서’라는 《人民日報》 논문을 통해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가 스탈린의 개인숭배를 타파하고 그의 과오의 중대성을 폭로하여 그것을 시정하는 면에서 “큰 결의와 용기를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서방의 부르조야지, 우익 사회민주주의자,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등이 “이 기회에 편승하여 스탈린의 옳은 면을 말살하며 공산주의 대열 안에다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기 위하여 소위 스탈린주의” 반대 투쟁을 계속하였다고 그들의 “악의”를 공격했다. 이 논문은 특히 “일부 공산주의자들이 스탈린에 대하여 일체를 부정하는, 그릇된 구호를 내걸었기 때문에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수정주의 사조의 발전을 조장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은 教條主義와 더불어 수정주의에도 “단호히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 했다. 이와 동시에 스탈린의 소련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각국 인민의 투쟁”과, “사회주의진영”의 발전을 원조한 점을 강조하면서 스탈린을 설득력 있게 옹호하는 논법을 택했다.

모택동은 적어도 초기에는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개인숭배 비판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고 다만 스탈린의 “공적(功績)”까지 부인하는 그의 불균형(不均衡)한 방법에 대하여 온전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다. 그는 스탈린의 과오는 3, 공적은 7로 평가하는 것이 “비교적 적절하다”고 하면서 총체적으로 볼 때 스탈린을 여전히 “위대한 맑스주의자”라고 인정했다.¹⁶⁷⁵⁾ 그는 흐루시초프의 비(非)스탈린화(化) 운동과 이에 뒤따른 “유화(宥和)” 정책에 호응하여 단기간이었지만 “백화제방(百花齊放)”, “백가쟁명(百家爭鳴)”운동(약칭 “방명 放鳴 운동”)을 벌였다.¹⁶⁷⁶⁾ 그런데 소련 신문들은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중국공산당의 책략성(策略性)을 간과하고 이것을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중-소는 상호간에 *이데올로기*상의 근본적인 대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의 차이를 조정하려는 노력을 시도했다. 1957년 11월 모택동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각국 공산당 노동자당 대표회의’에 중국대표단을 인솔하고 참석했다. 회의에서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공동강령으로 「모스크바 선언」이 채택되어 *이데올로기* 분규는 일단 수습되는 듯싶었다. 그러나 이 「선언」은 중-소의 미봉적 타협의 산물이었으며, ‘중국공산당’은 무엇보다도 흐루시초프가 강조하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평화적 이행”에 대해 “불만족”했지만 소련의 체면을 고려해서 “양보한 것”이라고 뒤에 와서 밝혔다.¹⁶⁷⁷⁾

1675) 위와 같음.

1676) “放鳴”의 슬로건은 1956년 1월 모택동이 소련의 ‘자유화’ 정책에 호응한다는 의미에서 제창했고 5월에는 중앙당 선전부장 陸定一이 이것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하여 국내외의 주목을 끌었다. 1956년 9월 중국 八全大會 석상에서 유소기는 소련의 개인숭배 비판, 평화공존과 국제협력, 긴장 완화정책에 공명하고, ‘중국공산당’ 내에서의 집단지도 원칙의 고수를 강조했다. 앞의 『劉少奇選集』第2卷(中文版), 1985년, p. 257 및 271. 또한 ‘8全 대회’에서 새로 채택된 당 규약에서는 모택동 개인숭배를 뜻하는 “모택동사상”이라는 말까지 빼버렸던 것이다. 그런데 “방명운동”이 시작된 후 3개월 동안에 언론의 상대적 자유를 이용하여 예상 밖에도 공공연하게 ‘중국공산당’ 비판, 공산주의 자체의 비판이 일어났다. 이에 모택동은 “방명운동”을 중지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 흐루시초프가 인용한 기록에 의하면 약 30만 명의 “우파 분자들”이 죄를 자백하고 노동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또는 농장으로 추방되어 거기서 일을 했고, 또는 자기의 소속 단체에서 해고 강등되었다는 것이다. 앞의 *Khrushchev Remembers, The Glasnost Tapes*, p. 153, 주11) 참조.

1677) 1963년 9월 6일자 《人民日報》論評, 「소련공산당 지도부와 우리들 사이의 차이의 유래와 발전」(蘇共領導同我們分歧的由來和發展). 이 논평의 全文은 『中蘇論戰文獻(「九評」及其他)』, (文化資料社, 香港, 1977年)에 수록되어 있다. 이 부분은 같은 책, p. 78.

모택동은 *이데올로기* 문제에 관해서는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취했지만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과 소련의 지도적 역할만은 극력 옹호했다. 즉 이 해 11월 16일 모택동은 ‘소련 최고소비에트’에서 행한 연설에서 “소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진영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은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의 신성한 국제적 의무로 생각한다”¹⁶⁷⁸⁾고 언명했다. 다시 18일에는 ‘각국 당 대표자회의’에서 중국의 속담을 인용하면서 “나는 당면한 정세의 특징은 동풍(東風)이 서풍을 압도하고 있다고, 즉 사회주의의 힘이 제국주의의 힘에 대해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¹⁶⁷⁹⁾는 유명한 강화(講話)를 했다.

모택동의 이런 소련 예찬은 소련과의 국제적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미국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국제정치상의 전략과, 소련의 경제-기술-군사 원조에 의하여 취약한 중국을 발전시킨다는 국가건설상의 요청에 기인한 것이었다. *모스크바* 회의 한 달 전인 1957년 10월 15일 중-소간에는 비밀리에 이미 「국방 신기술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었다.¹⁶⁸⁰⁾ 이 「협정」의 체결은 소련이 *스푸트니크(sputnik)* 인공위성(人工衛星) 1호 발사에 성공한(10월 3일) 직후의 일이었다. *스푸트니크* 발사 성공은 소련이 *로켓* 무기의 개발에서 미국을 앞지른 것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했다. 모택동은 소련으로부터 신예(新銳)의 군사기술의 원조를 받는 암묵의 대가로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모스크바*의 지도적 지위를 인정한 것이 틀림없었다.

*흐루시초프*도 자기의 과격한 *스탈린* 비판이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사태를 염려하며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온당한 논조를 유지하는 전술을 택했다. *흐루시초프* 시대 『소련공산당사』에 의하면 개인숭배란 “*뽀스-레닌주의*와는 인연이 없는” 문제라고 보고, *스탈린* 개인숭배는 소련의 “특정한 구체적인 역사적 조건에서 발생했다”고 했다. 즉 “후진국인 농업국, 제국주의 전쟁과 내전에서 황폐화되고 적대적 자본주의국가에 의하여 포위된 신생 소비에트 국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강철의 규율이 요구되었고 민주주의를 일시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불가

1678) 『毛澤東戰後著作集』(日譯), 三書房, 1959年, p. 222. 모택동의 이 연설은 『毛澤東選集』 제5권(북경, 1977년)에서는 전면 삭제되어 있다.

1679) 같은 책, p. 253

1680) 1963년 8월 15일의 중국정부 「聲明」, Griffith(analysed and documented), *The Sino-Soviet Rift*, China Quarterly, (1964)에 수록된 Document 7 참조. 이 부분은 p. 351

피했다”¹⁶⁸¹⁾고 인정했다.

호루시/초프는 이 시기에 공적을 이룩했던 스탈린의 권위와 인기가 높아졌다고 인정했다. 그런데 “시일이 지나감에 따라 당의 지도하에 소비에트 국가가 쟁취한 모든 승리는 스탈린의 공적으로 돌아갔고, 점차로 스탈린에 대한 개인숭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소련의 환경 조건에서 스탈린 개인숭배의 기원을 찾았다.¹⁶⁸²⁾ 다음으로 들고 있는 것이 스탈린의 “부정적인 개인적 기질”, 즉 그의 좋지 못한 개성이다. 스탈린은 “자기의 역할과 공적을 엄청나게 과대평가하여 자기는 과오를 범하지 않는 인간으로 믿어버리고 자기에 대한 찬양을 장려하기 시작했고…그의 만년에는 당의 지도사업과 국가의 지도사업에 특히 중대한 손실을 가져왔다.”¹⁶⁸³⁾는 것이다.

이러한 온건한 비판은 모택동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배려에서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호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과 이것을 기점(起點)으로 전개한 스탈린 격하운동(格下運動)은 동(東)유럽 전체와 세계에 계속 파문(波紋)을 확대하여 드디어는 모스크바와 북경(北京) 사이의 논쟁을 더욱 확대 악화시키고 말았다.

중-소 관계가 이미 파국에 이른 1963년 9월 6일 ‘중국공산당’은 『인민일보』의 논평에서 호루시/초프가 소위 “개인숭배 반대라는 구실에서 스탈린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과오를 신랄하게 공박하고 중-소간의 분열의 발단이 스탈린에 대한 양자 간의 평가의 차이에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논평은 “스탈린이 그 생애에서 어느 정도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시인은 하면서도 그의 잘못은 “그의 위대한 공적에 비교한다면 2차적인 것”이라고 스탈린을 옹호했다.¹⁶⁸⁴⁾

또한 이 《인민일보》 논평은 스탈린이 “역사상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 그가 ‘소련공산당’의 다른 지도자들과 더불어 소비에트 국가의 공업화와 농업 집단화에 관한 레닌의 노선을 수호했기 때문”이라는 종래부터의 주장을 재 강조했다. 《인민일보》는 계속하여 호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은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반혁명 폭동 사건”을 유발하여 “제국주의, 반동파 및 모든 공산주의의 적들에게 이 기회를 이용하여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극히 중대하고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¹⁶⁸⁵⁾고 비난했다.¹⁶⁸⁶⁾

1681) *History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Moscow, 1960. 같은 책, p. 670.

1682) 같은 책, p. 671.

1683) 위와 같음.

1684) 앞의 『中蘇論戰文獻(「九評」及其他)』, p. 64.

이상 《인민일보》의 논평은 나아가서 흐루시초프가 스탈린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를 부정하는 것이며, 곧 스탈린이 고수하고 발전시킨 맑스-레닌주의의 기본적인 원리를 부정하는 것”¹⁶⁸⁷⁾이라고 까지 단언하면서 흐루시초프의 비(非)스탈린화(化) 운동은 요컨대 “반(反)레닌주의적”인 것이라고 거침없이 공격했다.

제2절 중-소의 혁명전략 상의 대립

당시 흐루시초프가 추구하고 있던 구미(歐美) 자본주의 제국들과의 “평화공존”, “평화전쟁”, 그리고 사회주의로의 “평화적 이행”등 일련의 정책 노선을 북경은 일괄하여 “수정주의 노선”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흐루시초프는 제20차 당(黨) 대회 이후 “스탈린과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이상과 같은 “수정주의의 길”로 들어섰다고 주장했다.¹⁶⁸⁸⁾ 이러한 체계적인 흐루시초프 공격은 중-미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당시의 국제적 환경에서 나온 것이었다. 모택동의 흐루시초프 비판은 간고(艱苦)한 대내외적 사회조건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당독재(一黨獨裁)의 공고화가 필요했으며 극한적 대미(對美) 강경노선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모택동의 인식을 기초로 했을 것이다.

중-소 이데올로기 논쟁의 파문은 단지 스탈린 문제에 국한하여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극히 중요한 것으로는 (1) 세계혁명의 전략의 문제, (2) 제국주의 나라(미국)와의 전쟁이나 평화공존이나의 문제, (3) 사회주의로의 이행(移行) 방법, 즉 평화적 방법이나 폭력혁명이나의 문제, (4) 사회 발전 단계에 부합되는 사회주의 건설의 방법, 즉 중국의 대약진(大躍進)과 인민공사 운동의 평가문제, (5)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 문제, (6) 수정주의나 교조주의나 의 이론문제 등이 각각 논쟁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었다.

1685) 위와 같음.

1686) 같은 책, pp. 73~74.

1687) 같은 책, p. 66.

1688) 같은 책, pp. 98~99.

이러한 혁명의 원칙 문제들을 놓고 두 당 간에 벌어진 논쟁은, 추상적 논쟁으로 그치지 않았다. 이 논쟁은 (7) 소련-서방 제국 간의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 체결(1962. 2), (8) 쿠바의 위기(危機)와 중-인(中-印) 국경분쟁(1959. 10 ~ 1967. 10), (9) 알바니아와 유고슬라비아의 대립(1956. 2~), (10) 소련의 대(對)중 군사-기술 원조 중단(1956. 6), (11) 제3 세계의 민족해방 투쟁에 대한 지원, (12) 헝가리에 대한 소련의 무력 개입(1956. 9), (13) 모택동이 발동시킨 중국내의 문화대혁명(1966. 5 ~ 1976. 10), (14)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브레즈네프의 침공(1968. 8), (15) 중-소의 국경 충돌(1959. 8~) 등 잇달아 일어나고 있던 구체적 사건들, 둘러싼 분쟁들은 정책상의 대결로 확대되어갔다.

이상의 정책논쟁과 대결 속에서 중-소는 서로 상대방을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배신자(背信者)”라고 규탄하는 공방전을 벌이면서 각자는 이 쟁점들으로써 자기들의 입장을 정당화(正當化) 하는 논리적 체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여기서 중-소의 두 공산당은 각각 *맑스-레닌주의*의 명제(命題)들을 총동원하고 허다한 *레토릭*, 왜곡(歪曲), 변명, 궤변(詭辯) 등으로 자기의 관점을 수호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외자로서는 어느 편이 옳거나 그르다고 단정(斷定)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중-소 논쟁은 처음에는 동지적인 *이데올로기* 토론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윽고 두 공산주의 대국 간의 비타협적 *해결모니* 투쟁으로 악화되어 갔다.

두 당(黨) 간의 변쇄(煩瑣)한 논쟁(scholasticism)의 심층 심리에는 각자의 국가의 식, 자국 이익의 절대옹호, 자국 당내(黨內)에 언제나 잠재하고 있는 반대파로부터 자신의 권력을 수호하려는 동기, 그리고 두 당 간의 격렬한 감정적 대립 등이 숨겨져 있었다. 논쟁에서 *모스크바*와 북경은 각각 *이데올로기*의 특징인 철저한 주관주의(主觀主義)와 당파성(partinost)을 고수하고 있었다. 세계의 어떤 공산당에서도 당내의 *이데올로기* 대립은 곧 당권 투쟁으로 발전해온 것처럼, 중-소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곧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주도권 쟁탈전으로 확대되어 갔다. 그러면 단일의 “사회주의진영”에 대분열을 초래한 중-소 *이데올로기*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었던가. 여기서는 두 개의 논쟁점만을 들어 간단하게 그 요점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a) 세계혁명의 전략문제 : *흐루시초프*는 세계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는 힘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나라들의 국력과 그 밖의 지역에서의 “평화세력”(특히 비(非)공산주의 나라 안의 공산당 정치조직)이라는 전제에서 혁명 전략을 세워왔다. 그에 의하면 핵무기가 출현하여 인류를 절멸(絶滅)의 위기로 몰아 넣고 있는 상황에서, 공산주의자의 임무는 사회제도를 달리하는 나라들과의 평화공존(平和共存)¹⁶⁸⁹⁾ 정책으로 제국주의자들의 핵전쟁 책동을 저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있으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전쟁 가피론(可避論)이다. 이러한 주장은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전쟁은 결국 불가피하다는 레닌의 전망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흐루시초프는 현 시대는 레닌이 살아있던 시대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인식을 기초로 하여 전쟁은 숙명적으로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내세웠다.¹⁶⁹⁰⁾

이에 대해 모택동은 레닌의 이론적 권위를 내세우면서 “전쟁은 착취제도의 필연적 산물이며 현대 전쟁의 근원은 제국주의 제도”라는 전제에서 “제국주의 제도와 착취계급이 사멸할 때까지는…전쟁은 역시 일어날 것”¹⁶⁹¹⁾이라는 전쟁불가피론을 주장했다. 그리고는 제국주의가 전쟁을 일으킬 때에는 “정의의 전쟁에 의하여 제국주의의 부정의(不正義)의 전쟁을 끝장내기 위한 각오가 필요하다”¹⁶⁹²⁾고 강경론(強硬論)

1689) 소련이 주장하는 平和共存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부르조아지와 이데올로기와의 조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두 사회체제 사이의 조금도 늦추지 않는 사상, 정치, 경제 면에서의 투쟁을 전제로 하고 자본주의 체제의 나라들의 근로자가 행하는 계급투쟁-여기는 인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의 무력 투쟁이 포함 된다-을 전제로 하여 끊임없이 발전하는 식민지 및 종속국 인민들의 민족 해방운동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었다. 1963년 3월 30일자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에 보낸 서한」, W. Griffith의 앞의 책에 수록된 Document 1의 영역 전문. 이 부분은 p. 247. 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론은 말하자면 국제적인 측면에서의 계급투쟁이었다.

1690) 흐루시초프는 ‘소련공산당’ 20차 대회에서 제2차 대전 이래로 세계정세는 “획기적으로 변화했다”는 근거에서 전쟁 불가피론을 주장했다. 그 정세 변화로서 첫째로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회주의 진영”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 둘째로는 전쟁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수억 인구의 많은 나라들(중립국)이 존재 한다”는 것, 셋째로는 자본주의 나라들 안에서 노동운동이 “엄청난 세력”이 되어있다는 것, 그리고 넷째로는 “국제적 평화운동이 강력한 요인으로 출현하여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Khurschchev's Twentieth Congress Speech」, *The Sino-Soviet Dispute*, Documented and Analysed by G. F. Handson and others, *The China Quarterly*, 1961, p. 44.

1691) 「레닌주의 만세-레닌 탄생 90주년을 기념하여」, 《紅旗》, 1960년 제8기. 日本國際問題研究所-現代中國研究會 編 『中國大躍進政策の展開-資料と解説』 下卷, 1974年版에 수록된 日譯 全文. 이 부분은 p. 321에서 인용.

1692) 같은 책, p. 332.

을 내세웠다. 그도 평화공존정책을 전략상 반드시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맑스-레닌주의자는 절대로 부르조아지의 평화주의의 늪 속에 빠져 들어가는 안 된다”¹⁶⁹³⁾고 경고했다. 그에 의하면 제국주의자들이 핵전쟁을 일으킨다면 당장 괴멸할 자는 그들 자신이며 “승리한 인민들은 제국주의가 사멸한 폐허 위에 아주 빠른 속도로 자본주의 제도보다도 몇 백, 몇 천배 높은 문명을 창조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행복한 장래를 창조할 것”¹⁶⁹⁴⁾이라고 극히 위험하고도 몽상가적인 핵전쟁 불사론(不辭論)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일종의 업포로서 그가 핵전쟁을 불사할 단호한 각오를 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었다.

(b) “평화이행”이나 “폭력혁명”이냐의 문제 : 흐루시초프는 폭력적 방법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9억 인구를 가지고 있는 (당시의)사회주의 진영의 힘이 성장하고 있고, 사회주의가 모든 나라의 노동자-농민-지식인들을 끌어당기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는, 즉 사회주의 진영이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자본주의 세력이 약화되는 이런 때에는 사회주의 혁명의 방식도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이 흐루시초프의 논리였다.¹⁶⁹⁵⁾ 따라서 사회주의 이행방식(移行方式)은 반드시 폭력혁명이나 내전과 결부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 요컨대 평화로운 방법에 의한 사회주의 실현, 즉 의회를 통한 “평화적 이행”의 가능성을 제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주장할 당시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설득력(說得力)이 없었다.

이에 대해 모택동은 대외적인 평화공존정책과 자본주의국가 내부의 인민혁명은 별개의 일이라고 구별하고 전쟁을 회피한다는 구실에서 각국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경시 또는 억압해서는 안 되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리하여 그는 세계의 갖가지 모순이 집중되어 있는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제(反帝) 민족해방 투쟁을 성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⁶⁹⁶⁾ 그도 일정한 조건

1693) 같은 책, p. 331~332.

1694) 같은 책, p. 326~327.

1695) 앞의 *The Sino-Soviet Dispute*, pp. 45~46.

1696) 1963년 6월 14일자 中共中央의 對蘇 書翰,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총노선에 관한 건의」(關於國際共產主義運動總路線的建議), 앞의 『中蘇論戰文獻(「九評」及其他)』, pp. 13~14.

에서는 평화혁명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레닌*의 말을 시인하면서도 “지금까지 세계 역사에서 [사회제도개]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평화적으로 이행한 전례는 아직 없다”¹⁶⁹⁷⁾고 강조했다. 그는 “폭력혁명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보편적 원칙”이라는 명제를 내세우고, *호루시초프*의 주장처럼 *프롤레타리아트*가 “의회의 길”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절대로 배격했다.¹⁶⁹⁸⁾ 모택동의 주장은 현실적이었다.

이와 같이 논쟁은 제국주의국가들과의 평화공존이나 전쟁이냐로 부터 사회주의로 이행(移行)을 평화적인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냐로 확대되어 나갔던 것이다.

1697) 같은 책, p. 21.

1698)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호루시초프* 修正主義」, 《北京周報》, 1963년 4월 7일호, p. 8 및 pp. 17~18.

제4장

북한의 대(對) 중-소 관계에서의 특수성(特殊性)

제1절 한반도의 전략상의 위치

냉전시대의 한반도의 국제관계는 남(南)에서는 한국-미국-일본의 삼각관계와 북(北)에서는 북한-소련-중국의 삼각동맹관계, 그리고 한반도 외곽에서 세계적으로 형성된 미국-일본-소련-중국의 복잡한 4각 관계를 기축으로 하고 있었다. 남한과 북한 내의 이러한 삼각관계는 각각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으며 그 어느 하나도 여타의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미-소-중 등의 한반도 전체 내의 삼각관계였다.

미-중-소는 세계의 3대 핵보유국이며 국토와 인구의 규모면에서 대국(大國)일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에서 각각 초강대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3대 핵보유국들은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도 한반도에 직접 군사적으로 개입되어 있었다. 즉 미국은 1953년 10월에 정식으로 조인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국의 군사동맹국이 되어 있었고, 소련과 중국은 1961년 7월 각각 북한과 체결한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이란 이름의 군사 조약에 의해 북한의 군사 동맹관계에 있었다.

이와 같이 미-소-중의 3 핵(核) 거국(巨國)들이 정식 군사 조약에 의해 다 같이 깊숙이 관련되어 있던 지역으로서의 한반도가 세계에서 유일한 곳이었다. 한편 공산주의 국가들의 상호 관계에서 중-소의 양국과 동시에 군사 조약을 체결하고 있던 나라는 오직 북한 하나뿐이었다. 이것이 북한의 첫 번째 특수성이었다.

중-소 관계에서 한반도가 지니고 있는 또 다른 특수성은 그의 지리적 위치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은 중국 대륙 및 동북지방(만주)과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1천 3백km의 국경선에서 접해 있고, 소련(지금은 러시아 연방)의 경우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연해주(沿海州)와 16.5km의 국경선에서 접해 있다. 소련의 위성국가나 다름

바 없었던 ‘몽고인민공화국’(즉 외몽고)을 제외한다면 북한은 공산권 안에서는 중-소의 두 거국과 접경하고 있는 유일한 공산국이었다. 따라서 지금도 한반도는 중국의 만주(동북지방) 및 러시아의 연해주, 그리고 일본과의 교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무릇 나라와 나라 사이의 지리적 관계는 고대로부터 밀접한 정치 관계를 형성해 왔다는 것은 국제 정치의 고전적 법칙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은 지난 수 세기 동안 이웃 나라들 사이에서 복잡한 관계를 맺게 했다. 조선왕조(朝鮮王朝)가 국제적 권력정치에 끌려 들어간 19세기 말엽 이후로 이 나라는 극동의 요충으로 인식되어 온 사실은 오늘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극히 주목할 만한 현상이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동북아시아의 3대 강국 사이에서 벌어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모두 한반도의 영해와 영토를 주요 무대로 하여 치러진 국제 전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서전(緒戰)이었던 중-일 전쟁에서도 일본제국주의는 한반도를 병참기지(兵站基地)로 하여 중국 대륙을 침략했고, 대전의 종결 기에 소련군과 미군이 다같이, 거의 동시에 한반도에 진주하여 일본군을 굴복시켰다. 이것은 그만큼 한반도가 극동에서 중요한 군사적 전략 기지임을 뜻하는 것이었다. 몇 나라가 한 지역과 접경해 있거나 또는 인근(隣近)의 위치에 있는 조건에서는 그 개개의 나라들은 모두 제1차적으로는 자국의 안전보장 또는 절실한 지역적 이해관계라는 관점에서 그 지역을 중요시 하게 된다는 데는 국제정치에서 거의 예외가 없다. 1945년 이후로 분단된 한반도가 미-소간 냉전에 아시아적(的) 초점이 되면서 소련과 중국, 그리고 뒤에 와서는 일본은 자국의 안전보장 문제를 한반도와의 관련에서 예민하게 의식해 왔다. 1946년 3월 20일 ‘미-소공동위원회’의 개회 석상에서 소련 측 대표 스티코프 장군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소련은 장차 조선이 소련을 공격하는 하나의 기지가 되지 않도록 조선인이 소련에 대해 우호적인 진정한 민주주의 독립국가로 되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¹⁶⁹⁹⁾

1699) 스티코프중장의 위의 인사말의 영문 번역은 「Text of Statement of Colonel General Shitikov, Head of Soviet Delegation」,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FRUS), 1946, Vol. VIII, p. 465.

“소련에 우호적인 진정한 민주주의 독립국가”란 스탈린에 있어서는 결국 소련의 영향 하에 있는 나라라는 정치적 함축성(含蓄性)이 숨어 있었음을 간과(看過)해서는 안 된다. 한편 북경(北京)도 김일성-스탈린-모택동이 모의하여 일으킨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이유를 자국의 안전보장과의 관련에서 정당화 했던 것이다. 1950년 11월 4일에 발표된 「중국 각 민주당파의 항미원조(抗美援朝)에 관한 연합성명」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조선은 비교적 작은 나라지만 그 전략적 지위는 극히 중요하다. 미(美)제국주의의 조선 침략의 목적은 주로 조선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자들이 과거 실행했던 것처럼 중국을 침략하는데 있다. 역사적 사실은 조선의 존망(存亡)이 중국의安危(安危)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찍부터 가르쳐 주고 있다.¹⁷⁰⁰⁾ (밑줄은 저자)

동북(東北)아시아의 국제관계가 일대 전환기에 들어선 탈냉전기(脫冷戰期) 이후에도 중-러는 한반도에 관하여 이상의 관점을 포기했다는 증좌(證左)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제2절 중-소의 북한 공산주의에 대한 기여(寄與)

중-소 관계에서 북한이 지니는 셋째 특수성은 ‘조선노동당’과 소련 및 중국공산당과의 역사적 관계에서 볼 수 있다. 1945년 8월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했을 때 모스크바는 상당수의 조선인계의 소련 공민, 세칭 “고려인”들을 당 조직 요원, 행정 요원, 군사 전문가, 기술자, 교육 간부, 문화선전요원 등으로써 북한에 파견했다.¹⁷⁰¹⁾ 이

1700) 日本國際問題研究所 中國部會 編, 『新中國資料集成』 第三卷, 1969年, p. 184.

1701) 당시의 韓人系 소련 공민의 수는 지금까지 극비에 붙여져 있어서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들은 대개가 유년기에 소련으로 이주했거나 또는 소련에서 출생해서 소련의 공민권을 얻고, 그곳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고, 각종 직업을 가지고 살아온 소련의 공민들이다. 이들은 1941년 이후에 소련으로 월경해서 잠시 그곳에서 정치 군사훈련을 받다가 해방과 더불어 소련군을 뒤따라 귀국한 김일성과 그 유격대원들, 즉 金策, 崔庸健, 金一, 安吉, 吳振宇 등 세칭 “甲山派” 즉, ‘동북 빨치산派’와는 별개의 집단이다. 韓人系 소련 公民으로 널리 알려진 자들로서는 許哥諒, 南日, 金宰旭, 方學世, 奇石福, 朴昌玉, 朴義玩,

정치 간부들은 북한의 스탈린주의화(化)를 강행하는 임무를 수행했고 그들 중의 지도적 인물들은 노동당과 공화국 정부안에서 세칭 “소련파”를 형성했던 것이다.

한편 중국의 연안파, 그리고 그 밖의 지역에 망명하고 있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도 1945년 11월경부터 속속 북한으로 귀환했다. 광대한 중국 대륙은 일제의 구한국 강점을 전후하여 조선인 혁명가들(민족주의자나 공산주의자를 막론하고)에게 오랫동안 투쟁의 무대를 제공해 왔다. 그리고 중-일 전쟁 당시 화북(華北)에서 분산하여 항일투쟁을 하고 있던 조선인 혁명단체들 중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은 일부는 1938년 10월 ‘조선의용군’을 조직했다가¹⁷⁰²⁾ 모택동의 혁명근거지인 연안으로 집결하여 ‘조선독립동맹’의 무력 부대가 되었다.¹⁷⁰³⁾ 이 ‘조선독립동맹’계 공산주의자들, 즉 김두봉(金斗奉)(독립동맹 주석), 최창익(崔昌益)(독립동맹 부주석), 한 빈(韓 斌)(같은 부주석), 무 정(武 亭)(조선의용군 총사령관), 박효삼(朴孝三)(부사령관), 박일우(朴一禹)(같은 부사령관) 등은 1945년 가을 입북해서 ‘조선신민당’을 결성했다가 뒤에는 공산당과 통합, ‘북조선노동당’을 창건하고 당과 정부안에서 세칭 “연안파”를 형성하

金承化, 金烈, 朴世昌, 韓一武, 陳潘秀, 太成守, 朴昌柱, 林海, 朴英彬 등이었다. 이들의 인맥과 입북에 관해서는 林 隱, 『金日成正傳』, 沃村文化社, 1989년, pp. 176~179 참조. 이들 중 거의 전부는 1956년 김일성과의 권력투쟁에서 제거된 후 소련으로 귀환했다. 해방 직후 한인계 소련 공민들과 ‘동북빨치산파’는 일괄적으로 “소련파”라고 불리었다. 그들 중 김일성을 포함한 간부들로 세칭 “43인조”를 조직해서 소련 군정을 집행하는 임무를 맡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소련공산당 당원증을 가진 자들이었다고 한다. “43인조”에 관해서는 金昌順, 『北韓15年史』 1961년, 서울, p. 54 참조.

黨과 政府 내에서 소련파는 당 부위원장 또는 내각 부수상급에 4명, 당 중앙위원회 부장 또는 내각 상급 4명, 당 중앙위원 또는 내각 부 상급 12명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밖에도 상당수가 내각, 학계, 외교부 내에서 요직을 맡고 있었다. 이들 소련파의 러시아적 배경과 북한 내에서의 초기 경력에 관해서는 Chong-sik Lee and Ki-Wan Oh, 『The Russian Faction in North Korea』, Asian Survey, Vol. III, No. 4에 상세히 분석되어 있다.

1702) 崔昌益의 手記 「延安時代의 獨立同盟 1」, 《獨立申報》 1946년 5월 21일.

1703) 그리고 中國共產黨 산하의 八路軍과 新4軍의 활동 지역 내의 전선 각지에서 항일 투쟁에 참가했던 조선인 청년들은 1941년 1월 조선청년연련합회를 조직했었으나 1942년 7월 이것을 발전적으로 해체하면서 조선독립동맹을 결성했다는 것이며 맹원의 수는 해체 직전 2만명이었다고 한다. 조선역사편찬위원회 편 『朝鮮民族解放闘爭史』, 1949(日譯), 1952년, pp. 326~328 참조. 최창익의 또 다른 설명으로는 (앞의 註 1703) 延安系의 ‘조선의용군’과 ‘조선독립동맹’의 항일 무력투쟁에 관한 기록은 노동당 내의 연안파의 숙청과 김일성 승배의 作風 속에서 북한에서는 모두 말살되어버렸다는 것이다. 崔昌益의 설명에 의하면 ‘조선의용군’은 1938년 武漢에서 조선민족혁명당, 조선청년전위동맹, 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 등이 ‘조선민족연합전선의 명의로 항일무장 투쟁을 할 목적에서 결성한 것이었다. 그 후 重慶과 낙湯 방면에서 모여든 청년들을 포섭하여 1941년 7월 다시 조선 의용군의 발족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최창익의 手記」 2 및 3. 《獨立新報》 1946년 5월 22일~23일자 참조.

고 있었다.

이와 같이 소련과 중국은 각각 자국의 영역 안에서 자국의 당(黨) 조직에 의하여 훈련을 받은 정치 집단을 해방된 북조선에 파송하였다. 이들은 국내파 공산주의자들과 더불어 '조선노동당'의 창건자로 된 것이다. 세계의 어떤 공산당도 북조선처럼 *모스크바* 및 북경과 동시에 이렇게 깊은 원천적 관계를 맺고 있던 실례는 없다. 이점에 있어서도 북한은 중-소 관계에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대(對)중-소 관계에서의 북한이 보여주는 넷째 특수성은 김일성의 이중적(二重的) 입장이다. 북의 당(黨) 출판물들에 의하면 그는 이미 1931년 만주에서 "공산당"에 입당한 것으로 되어있다. 비록 그가 소속했던 공산당의 국명은 아직까지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그것은 '중국공산당'이었다. 왜냐하면 1930년 5월 이후 만주 지방에는 '조선공산당'이라는 조직체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중국공산당당원'의 일원으로써 중국공산당의 제1만 유격대였던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에 가담했다.

일본 관동군(關東軍)의 토벌작전이 강화되자 김일성은 1940년 11월 이후 생존한 대원 약간 명을 거느리고 *시베리아*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¹⁷⁰⁴⁾ 이들은 *하바로프스크* 근처의 *비야츠코*에서 '소련 극동전국독립 제88여단'(약칭 '88여단')으로 편성되어 소련 극동총사령부 관할 하에 있었다. 여단장은 중국인 주보중(周保中)이었으며 김일성은 여단 내의 제1대대장이었다.¹⁷⁰⁵⁾ 여단의 임무는 만주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에 대해 비밀정찰을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의 '중국공산당'과의 지난날의 관계와

1704) 金日成의 入蘇 일자는 자료마다 다르며, 그 자신은 절대로 이것을 발표하지 않고 있었다. 劉文新-李毓鄉의 『周保中傳』(중국 흑룡강 인민출판사, 1986년 발행), p. 269의 기록에 의하면 김일성이 1940년 11월~12월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警衛旅團과 제2, 3方面軍員의 각각 일부 대원 200여명을 인솔하고 琿春, 汪清 일대에서 나뉘어 소련으로 들어간 것으로 되어있다. 이 날자는 신빙성이 있지만 대원의 수는 과장인 듯하다. '동북항일연군'의 *시베리아*에서의 이동과 *부야츠코*의 野營에서의 조선인 부대원들의 상황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和田春樹, 『金日成と滿洲抗日戰爭』, 平凡社, 東京, 1992年, pp. 282~335 참조.

1705) 앞의 林 隱의 책, p. 141 김일성이 88여단 내에서 제1대 대장이었다는 것은 근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中央日報》기자가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문서보관서로부터 입수한 김일성에 관한 인사 기록철에 의하면, 그의 성명은 중국 발음에 따라 '전자첵'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계급은 대위, 직책은 제2극동군 제88보병여단, 제1지대장으로 되어 있었으며, 소련군 입대 날짜는 1942년 7월 17일로 되어있다. 《中央日報》 1992년 3월 13일.

입소(入蘇) 사실을 북한의 출판문들은 아직까지 일체 공포하지 않고 있다. 그는 중국 공산당에 입당하고 소련 군대에서 '88여단'의 장교로 훈련을 받았다는 과거의 경력에 의하여 모스크바와 북경에 대해 이중적으로 전우(戰友) 관계를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세계의 어떤 공산당 국가에서도 김일성처럼 중-소 두 공산당과 이중적 관계를 맺었던 당(黨) 지도자란 김일성 1인 밖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섯째로 김일성 정권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중-소 두 나라와는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다. 북한은 소련 군대에 의해서 해방되었고 당과 정부도 소련군의 지도하에 창립되었다. 스탈린의 절대적 비호(庇護)가 없었더라면 김일성이 북한에서 권력의 정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를 수령으로 하는 공산당정권은 한국전쟁 중 '중국인민지원군'의 막대한 인적, 물질적 희생에 의해 절멸의 위기로부터 구출되었다. 따라서 김일성은 "주체사상(主體思想)"이 아니라 중-소의 힘에 의해 40년이나 권좌(權座)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국제적 정치공작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련군은 3년 동안(1945~48년)을, 중국군은 8년 동안(1950~58년)을 북한에 주둔해 있었다. 중-소와 그런 원천적 관계를 가졌던 그런 나라도 북조선밖에는 없었다.

여섯째로 중-소 두 나라는 북한의 전후 복구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해 다액의 군사 경제원조를 제공해 왔다. 그리고 유엔(UN)과 그 밖의 국제 정치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적대시(敵對視)하는 북조선의 정책을 공동으로 지지해 왔다. 바로 이상과 같은 일련의 이유들 때문에 중-소 두 나라는 다 같이 북한과 전(全) 한반도의 현재 및 장래의 문제에 강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주어졌던 것이다.

세계의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 중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중-소에 대해 북한처럼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한반도처럼 중-소와 착잡하게 얽힌 지역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므로 중-소 분쟁의 추이(推移) 여하에 따라 김일성은 불안, 안도 또는 위기 등 예측키 어려운 파급 작용을 겪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제5장

중-소 환경 속의 북한

제1절 한국전쟁 개입 후의 중공의 영향

이러한 지정학적, 군사적, 경제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소련-중국-북한의 삼각관계는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 간의 상호 관계보다 다각적(多角的)이고 훨씬 복잡했다. 따라서 중-소분쟁은 필연적으로 북조선에다 심대한 충격을 주어왔고, 김일성은 이 분쟁 속에서 극히 유동적이며, *마키아벨리적*(的)인 대응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스탈린 사망 후 그는 조심성 있게 “주체적”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소련공산당’ 제21차 대회가 개최되었던 1959년 11월까지의 대(對)중-소 관계에서 공적으로는 친중-친소(親中-親蘇) 노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양국의 분규 속에서 1959년 11월부터 1966년 8월까지 그는 자기의 정책을 친중-친소에서 중립으로, 중립에서 친 중으로, 친 중에서 “자주”로 무려 4차례나 바꾸었다.

1966년 8월 12일자 「자주성을 옹호하자」는 《로동신문》사설은 공산권 내부의 관계에서의 북조선의 자주노선을 대외적으로 선언한 획기적인 출발점으로 된 것이다. 그 후에도 김일성은 “자주노선”의 범위 안에서 김일성은 모스크바와 북경(北京)에 대하여 때로는 친근하고 때로는 소원(疏遠)하는 외교적 곡예를 연출하여 중-소-북한의 삼각관계는 실로 착잡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의 ‘자주노선’은 중-소 분쟁이 빚어낸 냉혹한 정세에 부딪혀 생사를 건 투쟁의 과정에서 책정(策定)한 생존전략(生存戰略)이었다.

1945년 8월 이래로 소련군의 점령기를 통해 북조선에서는 모스크바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던 것은 당연했다. 중국 대륙은 아직 ‘국민당’의 장악하에 있었으며, ‘중국공산당’ 연안(延安)에서 북한에 직접 정치적 영향을 미치기에는 거리는 멀고 그 힘도 취약(脆弱)했다. 소련군은 진주하자 북한의 각급 인민위원회에 지체 없이 모든 권력

을 넘겼다는 *모스크바* 측의 일관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소련군 사령부는 권력의 절대적 중심이었다. 소련의 *스탈린주의형(型)* 정치, 경제, 사회제도는 자유와 정의와 민주주의의 표준으로 격찬되었다. *스탈린*에 의하여 재해석, 재구성된 *맑스-레닌주의*의 *이데올로기*는 모든 진리의 구국적 원천으로 김일성을 위시한 공산주의자들의 숭앙 대상이 되었다. 북한을 압도하고 있던 소련의 영향력과 위신은 *스탈린*이 사망한 얼마 후에도 지속되고 있었다.

대전 후 소련 진주군의 발자취를 따라서 소련과 중국에 망명했던 공산주의자들이 입국함에 따라 북조선은 대별하여 소련파, 연안파, 국내파의 3파(派)가 각자의 세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처음부터 분파투쟁을 벌인 것은 주지되어있는 사실이다. 또한 소련 군정당국은 남한의 미국 진주군과 국내 민족주의자들에 대항하기 위해 이 분산된 3파를 결속시켜 통일된 당(黨)을 조직하는데 강력한 역할을 했다. 그리하여 이상 3파의 지도자들은 그 후 노동당의 창건자가 된 것이다.

노동당 내 3파는 권력의 파벌적 균형 위에서 한국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표면상 단결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표면상의 단결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권력투쟁이 은밀히 전개되고 있었다. *모스크바*의 절대적 지원을 받는 김일성은 당(黨)과 정부의 정상을 차지하고 권력을 공고화 해 나갔다. 당내 권력투쟁에서 그의 승리는 각 계열의 반대파들에게 패배는 기정사실(既定事實)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의 “주체사상”은 “반당 종파분자”라는 규탄을 받은 이들 반대파에 대한 권력투쟁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발동되었다는 또 하나의 측면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북조선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면에서 전적으로 *크렘린*에 종속한 전형적 위성국(衛星國)이었다. ‘중국공산당’이 북한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중국이 한국전쟁에 파병한 이후의 일이었다. 북경(北京)은 임 표(林彪)와 팡덕희(彭德懷) 같은 역전(歷戰)의 맹장들을 사령관으로 한국전선에 파견했고, 중국의 “인민지원군”은 인해전술(人海戰術)로 싸우면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 국제정치에서는 어떤 타국을 위해 희생을 한 자가 그 나라 문제에 관해 강한 발언권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다. 북경정권은 한국전쟁에 참전함으로써 북한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휴전회담(休戰會談)의 한 당사자로서 유엔군 사령관과 대좌하게 되었으며, 제네바(Genève) 회의와 유엔 총회가 열릴 때는 한국문제 토의

에서 당당한 발언권을 행사했다. 요컨대 한국전쟁의 참전을 계기로 중국은 국제정치에서 보다 높은 지위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북한의 동지들에게 친선의 손길을 뻗치기 시작하였다. 1950년 8월 15일 곽말약(郭沫若)을 단장으로 하는 최초의 중국 대표단이 다량의 구호물자를 싣고 평양을 방문했고, 그 후에도 이러한 각종의 친선방문이 계속되었다. 김일성은 이제 북경을 *모스크바* 다음으로 격찬하기에 이르렀다. “위대한 중국 인민과 그의英勇적 인민 지원군 부대의 조선에 대한 원조는…… 민주진영 인민의 형제적 단결의 뚜렷한 표시”¹⁷⁰⁶⁾라고…….

그렇지만 김일성의 최대의 예찬은 역시 *스탈린*과 소련으로 향했다. 그는 *스탈린*의 철권(鐵拳) 정책에 의하여 형성된 *소비에트* 위성국(衛星國)들의 내부 관계를 “상호 존중과 형제적 협력을 기초로 한 민주진영의 국가 간의 관계”¹⁷⁰⁷⁾라고 규정했고, 그것은 “과거의 역사에서 보지 못했던 국제 관계의 새로운 형태—즉, 공산주의적 미래의 국제 관계의 원형”¹⁷⁰⁸⁾이라고까지 *모스크바* 중심의 일원적(一元的) 지배체제를 찬양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인류 혁명사상(革命史上) 처음으로 창시했다는 그 후의 주장에 비추어 이 말을 회상할 때 그는 당시의 자기를 어떻게 변명할 수 있었을까. 중국이 북한에 제공한 희생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정권은 아직 *스탈린*의 철저한 위성정권이었다.

제2절 휴전 후 중 - 소의 원조 경쟁

한편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은 극히 신중했다. 북경은 1950년 10월 북한에 “지원군”을 파병한 후부터 1958년 11월까지 8년 동안이나 그 병력을 북한 전역에 주둔시키고 있었다. ‘인민지원군’이 보여준 군기(軍紀)와 도덕적 품성과 사업 작풍은 해방 직후의 소련 점령군의 그것과 비교해서 높이 평가될 만 했다. 가난한 북한 농민들의

1706) 『金日成選集』Ⅱ, (日譯) 京都, 1952年, p. 246. 이러한 구절들은 “主體”를 강조하면서부터는 김일성의 저서에서는 모두 削除되었다.

1707) 같은 책, p. 243.

1708) 위와 같음.

인심을 살 수 있도록 정치 훈련을 받은 중국 군인들은 북한의 농촌에서 행동을 몹시 조심했다. 중공의 군인들은 휴전 후 파괴된 북한의 대도시와 철도, 교량, 발전소의 복구 사업에 동원되었고, 이것을 통하여 중국 군대의 이미지는 악명 높았던 소련 군대의 그것과는 아주 다른 것으로 비치었다. 모택동은 중국 공산주의의 그러한 *이미지*를 북한에 퍼뜨리면서 *모스크바*에 대한 소리 없는 선전전(宣傳戰)에 승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휴전 후 김일성은 두 개의 긴급한 과제에 직면했다. 첫째는 전쟁 중 자기의 독재에 불만을 품고 당(黨) 지도권에 도전했던 “반당 종파분자”들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권력 하에 당의 “통일”을 이룩하는 일이었다. 이때의 제1차적인 목표는 박헌영(朴憲永)을 중심으로 한 남노당(南勞黨)계였다. 이들은 휴전 2주일 후인 1953년 7월 체포되어 특별재판에서 “미제(美帝)의 고용간첩”이란 죄를 뒤집어쓰고 극형(極刑)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1955년 12월 박헌영의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김일성은 당내 최강의 반대파를 소탕하여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화할 수가 있었다. 스탈린 사망 직후의 ‘소련공산당’은 자체 내의 권력투쟁에 골몰하였기 때문에 김일성의 횡포를 저지할 수가 없었다.

김일성의 두 번째 과업은 북한의 경제와 군사력을 전쟁의 파괴로부터 재건하고 발전시키는 일이었다. 이 어려운 일을 위하여 그는 외국 원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1953년과 1961년 사이에 그는 *모스크바*를 무려 5차례나, 그리고 북경을 4차례나 방문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하여 북경과 평양의 관계는 현저하게 심화되어 갔다. ‘중국공산당’이 “형제적” 원조를 통하여 대(對) 북한 유대를 강화했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심는데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이것은 소련에서 볼 때 자기의 기득권이 위협 받는 불안한 사태였다. 그러나 당시 *모스크바* 또는 북경 어느 측의 공식 문서에서도 북한을 놓고 경쟁의식이 존재했다는 것을 시사(示唆)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다. 중-소 양국은 정략적 밀월(蜜月) 관계에서 한결같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의한 단결을 과시하고 있었다.

한편 김일성으로서는 ‘전후 복구사업’에서 중-소를 필두로 하여 모든 “형제국들”로부터 원조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한 나라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했다. 중-소 중 어떤 강대국이 단독으로 경제 원조를 통해 북한에 개입해 들어

왔더라면 그것은 국제적 권력정치 논리(論理)로 보아 상당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는 모스크바와 북경(北京) 간의 대북 원조의 균형을 기초로 한 정치적 균형 속에서 자주를 추구하고 도리어 원조 획득을 위해 중-소 양국 사이에 경쟁을 붙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다.

김일성이 정부 대표단을 인솔하고 휴전 후 처음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은 1953년 9월 19일이었다. 그는 이 방문에서 소련정부와 「경제-기술 원조 협정」을 체결하고, 전후 복구건설을 위한 10억 루블의 무상원조와 1949년 소련으로부터 얻은 차관 액의 반절을 삭감한다는 약속을 받았다.¹⁷⁰⁹⁾ 그 후 그는 1957년 11월, 1959년 2월, 1961년 6월과 10월 네 차례나 더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이것은 모두 모스크바로부터 경제-기술-군사 원조를 획득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 사이에 북한의 경제사절단, 군사 사절단은 빈번히 모스크바를 왕래하면서 각종 의정서(議定書)에 서명했다.¹⁷¹⁰⁾

한편 북경(北京)이 휴전 후 북한에 접근한 것은 1953년 10월 21일에서 비롯된다. 이때 하 용(賀龍)이 인솔하는 무려 825명으로 구성된 대규모의 “위문대”가 평양을 방문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770명으로 조직된 중국의 건설단이 북한으로 들어왔다.¹⁷¹¹⁾ 김일성도 1953년 11월 정부 대표단을 인솔하고 북경을 방문하여 10년간 유효한 「경제-문화협조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서 북경 측은 한국전쟁 기간 중 북한에 제공한 물자의 대금을 전부 무상원조로 청산(清算)했고, 그 위에 1954년~57년에 걸쳐 80만억원(3억 2천 달러)의 무상원조를 공여할 것을 약속했다.¹⁷¹²⁾ 하 용의 평양 방문에 뒤이어 유소기(劉少奇), 주은래(周恩來), 나서경(羅瑞卿), 주덕(朱德) 등 ‘중국공산당’의 최고위급 지도자들이 갖가지 이름의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다녀갔다. 이들의 지위로 판단할 때 북경이 북한에 대해 얼마나 높은 정치적 비중을 두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1709) 『김일성선집』 4, 1960년, pp. 61~64.

1710) 1960년 2월 소련은 8,500만 달러의 無償援助를 제공하는 「상품 납입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했고, 10월에는 과거 소련이 제공한 총액 7억 6천만 루블의 차관 상환을 면제하는 의정서에도 서명했다. 그러나 그 후 中-蘇 분쟁에서 김일성이 북경 편에 돌아서게 되자 소련의 원조는 거의 중단되고 말았다. 『北韓總鑑(1946~68)』, 共產圈問題研究所, 1968년, p. 243.

1711) 같은 책, 서울, p. 246.

1712) 앞의 『김일성선집』 4, p. 67.

북한이 '전후복구 3개년계획'(1954~56)을 실시하고 있을 때 중국은 자체의 '5개년 계획'(1953~57)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5개년계획을 위하여 중국은 소련의 경제-기술 원조에 크게 의존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 것처럼 다액(당시의 기준)의 무상원조를 제공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가난했던 당시 중국의 원조는 북한을 감동시켜 결과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소련의 강력한 영향력을 상쇄(相殺)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1956년 2월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 연설이 알려졌을 때까지 북한에서 소련의 권위는 여전히 우세했다.

흐루시초프의 비(非)스탈린화(化) 운동은 북한에서도 큰 파란을 일으켰다. 무엇보다 조선의 스탈린이었던 김일성은 이 운동에 의하여 위협을 받았고, 한편 그의 오만한 독재 하에서 억눌려 있던 수다한 당(黨) 고위 간부들은 이 운동에서 격려를 받았다. 그것은 북한의 김일성 체제는 흐루시초프가 단죄한 소련의 포악한 스탈린주의 체제의 복사판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체제는 개인숭배사상을 조장하여 1인 독재의 권력기구를 강화하고 있던 점에서도, 사회주의건설을 대중생활(大衆生活)의 희생 위에서 급속도로 강행한 점에서도 스탈린주의를 맹종하고 있었다. 전쟁에 의하여 폐허가 된 북한 땅에서 김일성은 급박한 민생문제를 부차적(副次的)으로 돌리고 중공업 우선정책(優先政策)과 군사력의 강화, 성급한 농업집단화를 기틀로 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기 위하고자 전 인민의 노동력을 총동원 했던 것이다.

김일성의 사회주의 건설의 이데올로기 방법, 그리고 그 추진과정은 1928년 이래 스탈린이 집권한 소련에서 "일국사회주의(一國社會主義)" 건설을 강행하고 있던 때의 실상과 너무나 흡사했다. 왜냐하면 당시의 소련은 사회주의를 건설한 유일한 모델이 있기 때문이다. 스탈린이 세계 혁명의 기지(基地)로서의 소련에서 일국사회주의의 건설을 가혹한 방법으로 서둘렀던 것처럼 김일성은 조선혁명의 기지, 즉 "민주기지"로 북한에서 초(超)스탈린주의적 방법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던 것이다.

제3절 스탈린 격하(格下) 운동과 김일성정권의 위기

스탈린의 사망 후,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신격화(神格化)된 중심이 사라진 1955년~56년 당시 ‘소련공산당’내에서 스탈린의 1인 독재체제는 그 후계자들에 의하여 집단지도체제(集團指導體制)로 바뀌게 되었다. 이것은 동(東)유럽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공산당 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운동과 “자유화(自由化)정책”으로 각국 공산당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일성은 자기의 권력 체제가 언제 붕괴할지 모를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반면 그의 당내 반대파들은 그를 타도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의 원조를 필요로 했던 김일성은 흐루시초프의 정책노선에 감히 도전할 수가 없었다.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 2개월 후에 열린 ‘조선노동당’ 제3차 대회에서 김일성은 표면상으로는 ‘소련공산당’의 노선을 지지하고 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정책과 핵무기 생산 및 사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대미(對美) 군비축소 제안을 극구 찬양했다.¹⁷¹³⁾ 그러면서도 그는 흐루시초프가 제기한 개인숭배 문제에 관해서만은 동조하기를 꺼렸다. 오히려 그는 북한에서 개인숭배 풍조를 펴뜨린 것은 자기가 아니라 당내의 “종파분자들”이라고 동판지 같이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면서 “종파주의와 비타협적 투쟁”을 벌이고, 개인숭배 사상을 철저히 청산하여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¹⁷¹⁴⁾ 말하자면 그는 공산권 안에 파급되고 있던 개인숭배 반대운동을 역이용(逆利用)하여 반대파를 타도함으로써 자신의 독재 권력을 더욱 공고화 하려는 절묘한 전술을 생각해 냈던 것이다.

한편 소련에서는 흐루시초프 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서방 측과의 평화공존 정책은 기복(起伏)은 있었으나 현실화되어 갔고, 스탈린 개인숭배는 당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맹렬한 비판을 받았다. 스탈린이 과거에 저지른 가공할 숙청사건들의 내막이 부분적으로나마 폭로되고, 비밀경찰의 조직과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집단지도가 찬양되고, 문화적 통제가 완화되고, 인민의 복지에 중점을 둔 경제개혁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일대 변화였다. 소련으로부터 불어오는 이 “자유화”의 선풍에

1713) 앞의 『김일성선집』 4, p. 433~434.

1714) 같은 책, p. 540.

정신적 고무를 받으면서 북한에서는 김일성 반대파들이 그를 제거하는 투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김일성 일파(그의 '동북항일연군' 시절의 직계들이 중심)와 박창옥(朴昌玉)을 선두로 하는 "소련파" 및 그들과 합한 연안파(延安派)(최창익이 대표) 사이에 드디어 권력투쟁이 표면화되었다. 이 투쟁은 *이데올로기* 상으로는 북한에서 스탈린주의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는 자와 그것을 전복하려는 자와의 투쟁이었다. 이 투쟁은 1956년 8월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생결단(死生決斷)의 투쟁으로 노정되었으나 그 결과는 김일성 반대파들의 참패로 끝났다.¹⁷¹⁵⁾

그 후 "소련파" 및 "연안파", 이들에 접근해 있던 당원들에게 대 숙청이 벌어졌고 이것은 1958년 5월부터 1960년 말까지 7천명의 지도요원을 동원하여 개시한 소위 "당중앙집중지도사업(黨中央集中指導事業)"으로 확대되면서 "반당-반혁명 분자" 색출 운동은 전 북한 사회를 엄청난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 당시 중국에서는 모택동이 "반(反)우파투쟁"이란 이름으로 당(黨) 내외에서 수 10만명을 숙청하고 있었다. "당중앙 집중지도사업"은 1930년대의 스탈린의 대규모 유혈 숙청을 방불케 했다. 이것을 통하여 김일성이 자랑하는 이른바 "조선 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실현하는 역사적 위업"¹⁷¹⁶⁾이 그의 1인 체제 하에 완수되었다. 그리하여 소련과 동 유럽 제국에서는 스탈린주의가 퇴조하고 있던 추세에 역행하여 북한에서는 스탈린주의가 만조의 기세를 떨치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의 세칭 "8월 종파사건"은 노동당 내의 권력투쟁으로는 '남조선노동당'파와의 투쟁 이상으로 큰 것이었다. 또한 이 사건은 북한의 대(對)중-소관계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1957년 12월 5일 김일성은 "이들 종파분자들"이 "외부로부터 침습한 국제수정주의사상의 영향에 사로잡혔다"¹⁷¹⁷⁾라고 흐루시초프를 간접적으로 비난하다가 소련의 "수정주의자" 흐루시초프가 실각한 얼마 후인 1965년 4월 14일에 이 사건이 자기의 지도권을 전복하려는 국제적 음모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공개 규탄했다.

1715) 이에 관하여는 앞의 金昌順, 『북한15년사』, 서울, 1961년, pp. 151~158 및 Robert A. Scalapino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art I, 1972, pp. 510~524. 참조.

1716) 『김일성저작선집』 3, 평양, 1968년 판 p.154.

1717) 『김일성선집』 5, 평양, 1960년 판 p. 241.

당 안에서는 또한 반당 수정주의 분자들이 복잡한 정세의 틈을 타서 밖의 세력을 등에 업고 당을 공격하고 나섰다. 당 안의 반당분자들과 다른 나라의 그 지지자들인 수정주의자들, 대국주의자들은 우리 당을 반대하는데서 한 짝이 되어 우리 당과 정부의 지도부를 뒤집어엎기 위한 음모를 감행하였다.(밑줄은 저자)¹⁷¹⁸⁾

여기서 “밖의 세력”이란 확실히 호루시/초프를 두고 한 말이었다. 이 말이 나온 65년 4월 당시의 김일성은 친(親)모택동 노선으로 선회하고 있었다. 김일성의 발언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 호루시/초프는 자기의 비(非)스탈린화(化) 정책을 북한에서도 실시하도록 권고했으며 이것이 거부되자 김일성의 독재 체제를 전복하려고 기도했을 가능성은 부인할 수 없다. 호루시/초프가 비(非)스탈린화 정책을 북한에 요구했다면 그 근거는, 호루시/초프 자신의 권력 구축의 필요성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비(非)스탈린화(化)운동에 따라 소련 내의 스탈린주의자들은 몰락하고 있었고 동(東)유럽 내에서는 스탈린주의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정권교체의 전야에 있었다. 반면에 호루시/초프의 노선에 대한 스탈린주의자들의 반향도 소련 내부와 외부에서 집요하게 지속되고 있었다. 호루시/초프는 정치적 운명을 걸고 단행한 자기의 비(非)스탈린화(化)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공산권 여러 나라에 손을 뻗쳐야 했다.

호루시/초프는 북한의 전형적 스탈린주의 체제에 호의를 가질 수 없었다. 이것을 감지하고 있었을 김일성은 외교적 연사에서는 소련을 지지했지만 실제로는 호루시/초프의 일련의 정책들을 거의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었다. 김일성은, 호루시/초프 노선에 동조하는 척하면서 자기에 대항하는 “소련파”, “연안파” 등의 반대세력이 당(黨) 지도부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현실에 김일성은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더욱이 소련파는 아직도 “사회주의 조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당당한 소련 공민들이었다.

김일성이 스탈린 개인숭배 반대운동에 처음부터 완강히 저항할 수밖에 없던 것은 이 운동의 귀추에 자기의 운명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뒤 북한이 중-소 논쟁에서 북경 측으로 선회한 이후에 나온 《로동신문》의 사설은 호루시/초프의 개인숭배 반대운동을 중공식으로 “개인 미신 반대운동”이라고 부르면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공격했다.

1718) 『김일성저작선집』 4, 평양, 1968년 판, p. 200.

소위 《개인 미신 반대》(個人迷信反對) 운동을 다른 당들에 내리 먹이려 하며 그것을 간판으로 하여 형제 당 형제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이 나라들의 당 지도부를 전복하기 위한 활동을 감행하는 것은 절대로 용허될 수 없다. 바로 《개인 미신 반대》의 소동으로 하여 수많은 형제 당들이 공연히 《열병》을 겪었으며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커다란 손실을 입혔던 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일부 사람들에게 의하여 《개인 미신 반대》의 소동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¹⁷¹⁹⁾

다음으로 고찰할 것은 사회주의 경제의 건설방법 문제다. 노동당 내의 “소련파”와 “연안파”는 김일성의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 건설방법에 반대하고 이것을 근거로 하여 권력투쟁의 정당성을 찾았던 것이다. 김일성 자신의 말에 따르면, 이 “반당 종파분자”들은 자기의 중공업 우선정책을 비현실적이라고 해서 시비하고 당장의 인민생활을 고려할 것과 시기상조(時機尙早)인 농업 집단화와 개인상공업의 말살(翦滅)화) 정책을 포기할 것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당 내외에서 상당한 공감을 사고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¹⁷²⁰⁾ 이 “반당 종파분자”들의 비판을 소련공산당이 지지했던 사실을 후일 《로동신문》은 아래와 같이 폭로했다.

지난 시기 일부 동지들은 우리당의 사회주의건설 정책에 대하여도 옹당한 이해와 지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의 《5개년계획은 환상》이라느니 《기계 제작 공업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느니 《농업 협동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느니 《농기계가 없으면 어떻게 농촌경제를 협동화할 수 있겠는가》하는 등 남의 실정도 모르면서 여러 가지 시비를 하였다. 물론 우리는 자신의 결심대로 독자적으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큰 손실을 받은 것은 없었다.……¹⁷²¹⁾

이와 같이 스탈린 사망 후(1953. 3) ‘소련공산당’이 채택하고 실천엔 옮긴 “현대 수정주의” 노선의 압력 하에서, 그리고 이에 편승한 당내의 “반당 종파분자”들의 반항에 직면하여, 김일성은 사활을 걸고 당의 지도권을 수호해야만 했다. 스탈린의 사망에 뒤따라 온 국제 공산주의의 분열 속에서 갑자기 그가 “자기의 것”, “제 나라 역

1719) 「사회주의진영을 옹호하자」, 《로동신문》, 1963년 10월 28일자 사설.

1720) 『김일성선집』 6, p. 123~124.

1721) 위의 《로동신문》, 1963년 10월 28일자 사설.

사", *이데올로기*에 있어서의 “주체”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국내외의 도전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정책 노선과 권력을 옹호하기 위해서였다. 북한이 휴전 후 경제복구와 군사력 재건에서 압도적으로 *모스크바*와 동시에 북경에 의존하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김일성 자신의 “주체 확립”을 강조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다.

소련의 종주적(宗主的) 지위가 지속되고 있었고 중국공산당의 영향력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김일성이 *모스크바* 지향적인 당내의 “소련파”와 모택동파 인연이 깊었던 “연안파”와의 사이에서 자신의 당 지도권을 유지하고 그것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입장을 과시하는 것이 현명했다. 한편 “민족적”, “자주적” 입장의 강조는 *스탈린* 사망 후 소련의 지배를 벗어나려는 동(東)유럽 제국에서 대세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민족주의를 절대로 내세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적 편향”의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 자기의 입장을 언제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란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원칙으로 합리화하려고 애썼다.

제6장

중-소 분쟁이 북한에 준 충격

중-소 분쟁이 북한에 준 충격

제1절 자주노선(自主路線)의 모색

김일성이 “주체”의 확립 문제를 중-소의 대립 속에서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은 1955년 12월 28일의 일이었다. 이날 그는 당(黨) 선전선동 일꾼들 앞에서 행한 긴 연설에서 “주체(主體)”를 세우지 못하고 “남의 것을 베껴다가 외기만 하는” 당내의 “소련파”와 “연안파”, 특히 “소련파”에 대하여 허다한 사례를 들어 비난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선혁명을……옳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상사업(黨思想事業)에서 “주체”를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¹⁷²²⁾ 김일성의 “주체” 강조는 스탈린 사후 국제공산주의에 대한 모스크바의 이태올로기통제가 급속히 약화되고 있던 상황에서 한 말이다. 세계 각국의 공산당들이 반드시 소련의 지시를 받을 필요 없이 독자적인 당(黨) 노선을 추구하고 있던 당시의 일반적 상황에서 김일성도 모스크바 또는 북경의 정치적 지배를 받고 싶지 않다는 자아의식(自我意識)을 완곡히 표현할 수가 있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주체의 확립”이라는 사상적 명분을 자기의 당 지도권에 도전하는 당내의 일체 반대세력을 공격하는 파벌 투쟁의 무기로 삼았다는 전략적 측면이다.

김일성의 논리에 따르면 맑스-레닌주의의 진리를 터득한 것은 자기뿐이요, 자기의 반대파는 “남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형식주의자(形式主義者)와 교조주의자(敎條主義者)들이었다.¹⁷²³⁾ 그는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과오를 범하지

1722) 金日成의 설명은 다음과 같았다. “黨 사업에서 혁명적 진리, 맑스-레닌주의적 진리를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진리를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소련식과 같이 해야만 한다는 원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련식이 좋으니, 중국식이 좋으니 하지만 이제는 우리 식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는가? …… 맑스-레닌주의의 진리를 배우지 않고 남의 형식만 따르는 것은 백해무익합니다. …… 우리나라의 역사도 우리 인민의 전통도 무시하고 우리의 현실과 우리 인민의 각오 정도도 고려함이 없이 남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敎條主義의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며 혁명 사업에 큰 손실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김일성전집』 4, pp. 336-337.

않도록 *맑스-레닌주의*를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맑스-레닌주의*는 교조(敎條)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며 창조적 학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맑스-레닌주의*는 매개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될 때 비로소 그 불패(不敗)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 당의 경험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 당들의 경험을 연구하고 그 본질을 파악하고 그것을 우리 현실에 옹계 적용하여야 그 경험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통째로 받아들여 일을 망쳐버린다면 우리 사업에 해를 줄 뿐만 아니라 형제 당들의 고귀한 경험까지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¹⁷²⁴⁾

*맑스주의자*를 “창조적 *맑스주의자*”와 “교조주의적 *맑스주의자*”로 처음 구별한 공산주의자는 다름 아닌 1917년의 스탈린이었다.¹⁷²⁵⁾ 그 후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원칙을 그 나라의 구체적 상황에 “창조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는 하나의 공식으로 되어왔다. 최고 지도자는 적어도 권력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한, 모두 스스로를 가장 “창조적”인 *맑스주의자*로 자인해 왔으며 또 그런 것으로써 당의 공인을 받아왔다. 반대로 당내의 권력투쟁에서 패배한 반대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창조적”이 못되며, “수정주의”, “교조주의”, “형식주의”, “좌경적” 또는 “우경적” 오류를 범했다고 비난을 가하는 것이 상투적인 투쟁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위의 김일성의 발언의 진의도 당내의 파벌투쟁과 직결되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정책노선이 반대파들의 그것과는 어떻게 다르며 객관적으로 보아 “창조적”이냐, 아니냐를 판정하려는 노력은 무의미한 일이었다. 진리의 기준은 전략이었다.

김일성은 조선의 *스탈린*으로 그는 *스탈린* 사후 흐루시초프의 긴장완화 정책을 위협시하고 그 영향으로부터 북한을 방어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표명하고 있었다. 그는 위의 연설에서 소련을 다녀 온 박영빈(朴英彬)(당시 당 선동선전부장)이 소련에서는

1723) 김일성이 黨 내의 “形式主義”와 “敎條主義”를 체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한 것은 “主體”를 공개적으로 부르짖기 이전부터 즉, 1955년 4월 1일부터였다. 같은 책, pp. 230-237 참조. 이것은 벌써부터 당내의 권력투쟁이 은밀히 진행되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1724) 같은 책, p. 337.

1725) 『스타ーリン全集』 第三卷, 大月書店版, p. 29.

국제적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택하고 있으므로 북조선도 “미(美)제국주의”를 반대한다는 구호를 없애버려야겠다고 한 말을 반박했다. 그는 박영빈의 그런 주장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 각성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미(美)제국주의자들은 천추에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원썩”라고 규정하면서 철저한 반미투쟁을 재 강조했다.¹⁷²⁶⁾ 그의 강경한 반미노선은, 후일 평화공존을 역설하는 *모스크바*와 전쟁불가피론을 주장하는 북경과의 *이때올로기* 논쟁에서 그가 북경(北京) 측으로 선회한 결정적 요인이었다.

김일성의 소련에 대한 태도 변화에 불만을 품은 *호루시초프*는 그의 당 사업에 대해 강력한 통제를 가하려고 기도했을 것이다. 이런 사실은 1963년 10월 《로동신문》 사설의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그 일단을 짐작할 수 있다.

…… 그런데 남의 내정에 간섭하는데 습관이 된 일부 사람들은 …… 언제나 형제 당들을 의심하며 형제 당들이 자기의 혼시대로 움직이는가. 자기의 경험을 그대로 옮겨 놓고 있는가, 앓는가에 대해서만 눈을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형제나라 출판물들과 방송들에서 어느 한 당의 역사를 어떻게 연구하고, 어느 한 나라의 언어를 어떻게 학습하는가 하는데 대하여서까지 감독하려 하며 심지어는 어느 한 나라의 영화를 잘 보는가, 보지 않는가 하는 것까지도 따지며 간섭하려 한다. 여기서는 벌써 평등과 상호 존중의 정신이란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은 대국 배타주의(大國排他主義)의 표현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¹⁷²⁷⁾

김일성은 이 말을 소련의 간섭이 가장 심했던 *스탈린* 시대에 했어야 했지만 그때 그는 소련의 북한에 대한 “내정 불간섭”을 구구절절 찬양하고 있었다. *호루시초프* 시대에 들어와서야 그는 비로소 자주적 입장을 선전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대(對)중-소 관계에서 한동안 본심을 숨기고 소련에 대한 충성과 중국에 대한 우호를 계속 강조했다. 그는 이 두 인접 대국들의 간섭을 받지 않기를 바라면 바랄수록, 쌍방에 대해 높은 경의를 표명하여 안심시켜야 했다. 이 강 대국들과 북한과의 제휴와 협력은 시급한 경제건설과 그리고 장차 한반도의 공산주의 통일을 위하여서는 절대적인 힘이 될 것이라고 그는 기대하고 있었다.

1726) 같은 책, p. 333.

1727) 《로동신문》 1963년 10월 28일자 사설.

두 나라 중에서는 소련이 사회주의의 선구적 국가라는 점과 그 세력이나 권위가 막강하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소련을 중국 위에 두었다. 그리하여 그는 공산주의 “세계적인 연대성” 또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강조할 때는 반드시 “소련을 선두로 한” 또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이라는 찬사를 첨가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소련을 상위(上位)에 놓는 것은 당시 모택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관찰할 때 북한과 모스크바 사이에는 하등 심각한 마찰이 없는 듯이 보였다. 그런데 중-소관계는 1958~59년 동안에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김일성을 당혹하게 했다.

제2절 김일성의 양다리 걸치기 외교

모택동은 중국의 사회주의건설을 급속하게 밀고나감으로써 최단 시일 내에 공산주의 단계에 돌입한다는 야망에 사로잡혀 1958년 5월 돌연 ‘사회주의건설의 총노선’을 내세우고 그해 여름부터 인민공사의 조직을 강행했다. 이것은 중-소관계를 악화시킨 또 하나의 중대한 요인이 되었다. ‘사회주의건설의 총노선’이란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의 정치적 지표요 방향이었다. 이 총노선(總路線)에 따라 1958년 6월경부터 중국 대륙에서는 공산주의 사회로 돌입하기 위한 열광적인 “대약진 운동”이 시작되었고 8월경부터는 “공산주의 사회의 맹아(萌芽) 형태”라고 자부하는 ‘농촌 인민공사’의 건립이 소련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강행되었다. 중국 당국은, 인민들의 “창의성”과 “적극성”에 의거하여 출발했다는 “총노선”, “대약진” 및 “인민공사”를 하나로 묶어서 “삼면홍기(三面紅旗)”라고 불렀다.

공산주의로의 이행(移行)을 점진적인 목표로 내세우고 있던 흐루시초프는 소련식 사회주의의 궤를 이탈한 “대약진”과 “인민공사” 운동에 대하여 극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는 이 “위험한 실험”에 의문을 품고 1958년 모택동에게 “동지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했지만 모택동은 듣지 않았다고 한다.¹⁷²⁸⁾ 그해 12월 1일 흐루시초

1728) 1963년 9월 21일자 「소련정부 성명」. 앞의 Griffith의 책에 수록되어 있는 Document 12의 영역 전문. 이 부분은 같은 책, p. 436. 흐루시초프는 당시 모택동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경제를 파멸시킬 것이 명백했기 때문에 너무 늦기 전에 대약진 운동을 중지시키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해 보았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모택동은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했다. 칼 맑스와 레닌이 둘 다 무덤 속

프는 험프리 미국 상원의원에게 인민공사 운동을 비난했다. 이때부터 중-소논쟁은 단순한 *이데올로기* 논쟁에서 구체적인 사회주의의 형태문제를 둘러싼 대립으로 그 내용을 확대해 나갔다.

여기서 모택동은 소련 일변도(一邊倒)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사회주의건설을 밀고 나가기 위해 "자력갱생"의 길을 탐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중-소 간의 통일은 아직 형식적으로는 유지되고 있었다. '소련공산당' 제21차 대회(59년 2월)에서 북경이 흐루시초프의 공적을 찬양하는가 하면 소련은 중국의 독자적 방법에 의한 국내 건설을 인정하고 50억 루블로 평가되는 대(對)중 차관을 약속까지 했다.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을 앞에 두고 일으키는 공공연한 분열을 양국은 피차 피하려고 했다. 이것은 대회 석상에서 한 *미코얀* 소련 부수상의 연설¹⁷²⁹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스포트니크로 상징되는 소련의 신에 최첨단 군사기술을 대미 강경책으로 이용하려던 모택동과, 소련은 미국보다 한 걸음 앞선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국에 대한 정치-군사적 모험을 감행하지 않으려는 흐루시초프 사이에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었다. 흐루시초프는 계속 미국과의 평화공존 정책을 추구하면서 중국을 무시하고 드디어 1959년 9월 친선 방미(訪美)의 길을 떠나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 별장에서 아이젠하워와 일련의 회담을 갖고 국제적 긴장상태의 완화를 논의했다.

이 어려운 사태에 직면하여 북한은 두 강대국과 동시에 우호적 유대를 계속 유지하는데 고민했다. 1959년 1월 '소련공산당' 제21차 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김일성은

에 있었으므로 모택동은 지구상에서 자기에 필적할 자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비꼬아 말했다. 앞의 *Khrushchev Remmebers*, The Glasnost Tapes, p. 153. 한편 중국 측의 말에 의하면 흐루시초프는 당시 毛澤東의 정책 노선에 대해 사회주의 건설의 "단계를 뛰어 넘었다"느니 가난의 "평균 공산주의"라느니 비방하고, 인민공사는 "본질적으로 반동적인 것"이라고 공격했다는 것이다. 1963년 9월 6일자 《人民日報》 앞의 논평. 앞의 『中蘇論戰文獻(「九評」及其他)』, p. 83 참조.

1729) *미코얀*의 연설은 다음과 같았다. "미국에서 나는 중-소 관계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았다……나는 대답하기를, 질문하는 미국 신사들이 중-소의 사회주의 진영 안에다 魔術의 불화를 일으킬 수 있으리라는 달콤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중-소의 우의는 맑스-레닌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부동한 기초 위에, 공산주의라는 공동목표 위에, 두 나라 인민들의 형제적 상호원조 위에, 그리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투쟁 위에 놓여있는 것이다(박수).……우리들의 우의는 신성한 것이다. 이것을 더럽히려는 자들의 불결한 손을 뻗치지 못하게 하자!(박수)." 1959년 2월 1일자 《쁘라우다》지. *Problems of Communism*, March-April Issue, 1964, p. 7에 轉載되어 있는 부분에서 인용.

당(黨) 중앙위원회에서 진술한 자기의 「보고」(報告)에서 소련공산당 내에서 반대파를 추방하고 확립한 흐루시초프의 지도체제를 전적으로 옹호했고, 그가 타도한 일련의 정적(政敵)들 즉 말렌코프, 까가노비치, 몰로토프, 불가닌 등을 “반당파(反黨派)”라고 불렀다.¹⁷³⁰⁾ 승자에게 서러는 것이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김일성은 1955년 이후 당(黨) 간부들에게 교시해 온 “주체적”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모스크바에 대해 과잉(過剩) 아첨을 보였다. 즉 “소련공산당은 항상 우리의 모범으로 되고 있으며 그의 성과와 풍부한 경험은 우리의 사업에서 지침으로 되고 있다”¹⁷³¹⁾고... 더 나아가 “레닌이 창건한 소련공산당은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노동운동의 중심이며 항상 전 세계 맑스-레닌주의 당(黨)들의 모범으로 되고 있다”¹⁷³²⁾고 그가 이렇게 모스크바를 옹호했을 때, 북경은 패색하다는 생각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김일성의 크레믈린에 대한 이런 아첨은 몇 가지 상황 변화에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957년 11월 12개 ‘사회주의국 공산당 회의’에서 채택한 「모스크바 선언」의 “현대 수정주의 반대”, “내정 불간섭” 원칙에 의거하여 김일성은 자기의 지도권을 보장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였다. 둘째는 소련이 1957년 가을 미국에 앞서 인공위성(sputniks)과 대륙간 유도탄(誘導彈) 발사의 성공으로 미국의 기세가 꺾인 데 대해 그는 큰 고무를 받았던 점이다.¹⁷³³⁾ 그러나 그는 북경에 대해서도 동시에 찬사를 보내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1958년 2월 14일~21일 주은래(周恩來)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정부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그의 방문의 직접적 목적은 북한에 주둔하고 있는 중국 군대의 철수 결정을 양국 정부가 재확인하는 동시에, 이 새로운 상황에서 양국 간의 “친선 및 협조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친선 단결

1730) 『김일성선집』 6, p. 224.

1731) 같은 책, p. 245.

1732) 같은 책, p. 224.

1733) 김일성은 10월 혁명 41주년을 기념하여 한 「祝賀演說」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소련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하였으며 대륙 간 탄도 로켓 탄을 완성함으로써 과학 기술에 있어서 미국을 앞서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 인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성한 기대한 성과들은 평화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전 세계 근로인민들을 무한히 기쁘게 하며 그들의 투쟁을 승리로 고무하여 주는 거대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로동신문》, 1958년 11월 8일.

을 강화”하는 문제를 협의하는데 있었다.¹⁷³⁴⁾ 주은래 일행을 환영하는 2월 14일의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김일성은 전쟁 전 후의 시기를 통하여 중국이 제공한 “물심양면의 막대한 원조”에 대하여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두 나라 인민 간의 친선 단결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 장구한 공동 투쟁에서 맺어졌으며 간고한 시련을 통하여 검열(檢閱)된 우리 두 나라 인민 간의 친선은 확고부동하며 불패(不敗)의 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중국 인민과의 친선 단결을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의 가일층의 발전 강화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어떠한 힘도 조-중(朝-中) 양국 인민의 이 친선과 단결을 파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¹⁷³⁵⁾

한편 김일성은 흐루시초프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기 위하여 사회주의나라 안에서 소련의 위신을 높여 주는 이른바, “위대한 소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진영의 불패의 통일 만세!”라는 구절을 연설 끝에 첨부하였다.¹⁷³⁶⁾

중국 군대의 철수는 북한 측이 1958년 2월 5일 「정부 성명」에서 먼저 제의했고 중국 측은 2월 7일 정부 성명에서 이 제의를 전적으로 찬동한다는 형식으로 합의한 것이다. 이 북한 측의 제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라는 명분에서 “미군과 또한 ‘중국 인민지원군’을 포함한 기타 일체 외국 군대가 남북 조선으로부터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그의 대남 평화공세(對南平和攻勢)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다.¹⁷³⁷⁾

김일성은 주은래(周恩來)의 평양 방문에 대한 답례로 1958년 11월 북경을 방문했을 때, “공산주의로 가는 도상에서 인민공사(人民公社)가 노는 주요한 역할”을 강조

1734)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 공화국 정부의 공동성명」(1958. 2. 19), 『朝鮮中央年鑑』, 1959년, p. 56.

1735) 『김일성전집』 5, 1960년 판, p. 352.

1736) 같은 책, p. 358.

1737) 이 「政府聲明」은 남-북한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가 철수한 후에는 “중립국 기구의 감시 하에” 일정한 기간 내에 “전 조선 자유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남한에서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의 정치 활동의 자유와 언론,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법적(法的) 보장, 남북협상, 남-북간의 서신거래, 남-북 주민들의 자유왕래, 경제교류, 문화교류, 남-북의 병력삭감 등 자기들은 절대로 실행할 수 없는 일련의 상투적인 요구를 내세웠던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朝鮮中央年鑑』, 1959년 p. 56.

하면서 “「붉은 기」 인민공사가 금년에 전례 없는 풍작을 거둔데 대하여 축하”¹⁷³⁸⁾ 하였다. 그리고 당시 중국 내 많은 지방에서 인민공사들이 조직되고 있는 것을 보고 중국의 “광범한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 의식이 높아가고 있었다”¹⁷³⁹⁾고 찬동을 표명했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소련의 불쾌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김일성의 북경 방문의 목적은 1958년 11월 8일자 그와 주은래와의 「공동 커뮤니케」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양자는 “소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을 강화한다는 구절을 첨부하기는 했지만, 동시에 *광스-레닌주의*를 배반하고 제국주의에 복무하는 “현대 수정주의(現代修正主義)”에 대하여 “비타협적 투쟁”을 계속한다는 데 합의함으로써¹⁷⁴⁰⁾ 김일성은 북경에의 *모스크바*에 대하여 결행하는 반(反)수정주의 투쟁에 동조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런데 이 「공동 성명」은 수정주의와 교조주의를 동시에 반대하고 “소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외교 예의상 강조함으로써 수정주의 소련을 정면의 적(敵)으로 삼는 것을 회피하려는 외교전술을 구사했던 것이다.

다시 다음 해 9월 26일 북경정부 수립 10주년 기념을 앞두고 김일성은 《인민일보》에 「조-중 인민(朝中人民)의 전투적 우의」란 글을 게재하고 한국전쟁 때 중국이 제공한 군사적 지원과 전쟁 후의 경제원조를 대서특필하는 한편, 과거로 소급하여 1930년대 “조선공산주의자들”(자기 일파)이 ‘중국공산당 휘하의 “항일연군(抗日聯軍)”에 가담하여 반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다는 사실을 중국에 삼삼 상기시켰다. 그리고는 “조-중 양국 인민들은 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양국 인민의 운명은 서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체험하였다”¹⁷⁴¹⁾고 두 나라 공산당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 위에 소련의 중국에 대한 비판,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던 “대약진운동”과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을 높이 평가했던 것이다.¹⁷⁴²⁾

이렇게 북경에 대한 찬사는 곧 *모스크바*에 대한 보다 높은 예찬으로 연결되었다. 김일성은 조-중(朝中) 양국 인민이 거둔 모든 “빛나는 과업”은 “소련의 끊임없는 원

1738) 《로동신문》 1958년 11월 27일.

1739) 《로동신문》 1958년 11월 24일.

1740) 《로동신문》 1958년 1월 9일.

1741) 『김일성선집』 6, p. 442.

1742) 같은 책, p. 451.

조와 소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진영 국가 인민들의 단결과 긴밀한 상호협조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¹⁷⁴³⁾고 *모스크바*의 권위에 자신과 북경을 종속시켰던 것이다. 이에 앞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1958년 2월 19일 *호루시/초프*의 국제적 긴장상태의 완화정책을 “전적으로 지지 찬동한다”는 결정¹⁷⁴⁴⁾을 채택함으로써 내심은 어떠했든 겉으로는 *호루시/초프*의 평화공존 정책을 지지했다.

그런데 미-소의 합의에 따라 *호루시/초프*가 방미하여 1959년 9월 *아이젠하워*와 「*캠프 데이비드*」 Camp David 회담을 열게 되자 중-소는 결정적으로 결렬되었다. 당시 북경은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거듭 반대했지만” *호루시/초프*가 들으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에 와서 폭로하면서 그의 대미 화해정책(對美和解政策)을 맹렬히 비난했다.¹⁷⁴⁵⁾ 그런데도 당시 김일성은 미-소 수뇌들의 상대국 상호 방문을 지지했다. 이것은 그가 북경의 입장을 무시하고 *모스크바* 편에 섰던 것을 의미한다. 김일성의 반미적 입장은 모택동의 그것과 전혀 다를 바 없었지만, 김일성은 *호루시/초프*의 국제적 긴장완화 정책을 겉으로는 지지함으로써 원조를 얻어내는 한편, 소련의 국제적 긴장완화 정책을 이용하여 주한 미군의 철수를 실현시켜 보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을 것이다.

1743) 같은 책, p. 454.

1744) 「국제긴장상태를 완화하며 세계평화를 유지 강화한데 대한 소련 최고 소비에트의 결정 및 소련정부 제안들과 관련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東亞日報社 발행 『安保統一問題基本資料集』北韓編, 1972년, pp. 445~446.

1745) 《人民日報》, 1963년 9월 6일자 앞의 논평. 앞의 『中蘇論戰文獻(「九評」及其他)』, pp. 82-83.

제7장

XXXXXXXXXXXXXXXXXXXX

중-소의 파경(破鏡)과 북한

제1절 소련의 대중(對中) 원자탄 기술제공 거부

호루시초프는 방미(訪美) 석 달 전인 1959년 6월 20일 중-소 사이에서 체결되었던 「국방 신기술(國防新技術)에 관한 협정(協定)」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면서 중국에 원자폭탄(原子爆彈) 견본과 원자기술(原子技術)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것은 모택동을 격분시켰다. 때를 같이하여 그해 6월에 발생한 제1차 중-인국경분쟁(中印 國境紛爭)에서 호루시초프는 중립적 성명을 발표하고 적어도 중국을 지지하지는 않았다. 중국은 이러한 호루시초프의 대외 정책을 “미(美)제국주의”에 대한 “아침”이며 국제공산주의의 이익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했다. 이에 대해 호루시초프는 중국의 극좌노선(極左路線)이 도리어 “제국주의 진영”의 단결을 공고케 하고 새로운 대전(大戰)의 위협을 촉진한다는 이유를 들어 평화공존 정책을 더욱 더 강조했다.

드디어 공개적인 논쟁이 폭발했다. 1960년 4월 16일 ‘중국공산당’의 이론자인 『홍기』(紅旗)는 려닌 탄생 90주년에 즈음하여 「려닌주의 만세」라는 장문의 논문을 발표하여 현 국제정세 성격분석, 제국주의의 본질, 제국주의와 대결방법, 계급투쟁, 핵전쟁 문제 등에 관한 “현대 수정주의”의 관점을 날날이 공격했다. 이 「논문」은 중-소 분쟁을 세계에 폭로한 최초의 공개 문서였다. 그러나 중국은 “당시 대국(大局)을 고려해서” 호루시초프에 대한 직접 비판은 피하고 유고슬라비아의 “수정주의자” 티토의 이름을 들어 그를 간접적으로 공박하는 방식을 택했다.¹⁷⁴⁶⁾

논문 「려닌주의 만세」는 즉각 ‘소련공산당’의 반격을 불러 일으켰다. 4월 22일 당 원로(黨元老)이며 당 중앙위 간부회의 회원인 오토 쿠시넨(Otto Kuusinen)은 북경의 “뒤떨어진 교조주의(敎條主義)의 입장”을 비난하면서 호루시초프의 평화공존정책

1746) 1963년 9월 6일자 《人民日報》, 앞의 논평. 앞의 『中蘇論戰文獻(「九評」及其他)』, p. 83.

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¹⁷⁴⁷⁾ 이와 같이 레닌 탄생일을 북경과 모스크바는 맑스-레닌주의의 상반되는 해석을 들고 나와 싸우면서 기념했다.

그 후 쌍방은 계속 논문-성명-연설을 통해 서로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데올로기 투쟁을 전개했다. 이런 투쟁은 중국이 극력 반대하는 ‘빠리 4개국 정상 회담’(1960년 5월)과 미국 정찰기 ‘U2기’가 소련 상공에서 격추된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상회담의 유산을 둘러싸고 더 한층 불을 뿜었다. 그리고 이 논쟁은 그해 6월 북경에서 개최된 ‘세계노련평의회’(世界勞聯評議會)로 번져가, 여기서도 두 나라 대표들은 제국주의의 본성과 전쟁 및 평화공존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¹⁷⁴⁸⁾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본-월맹-인도네시아-버마-실론-소말리아-수단-아르헨티나 등의 아-아(亞阿)와 라틴-아메리카의 대표들이 중국 편을 지지했다는 사실이다. 이 회의는 국제무대에서 중-소 논쟁으로는 최초였다.

대미(對美)정책을 둘러싼 모스크바-북경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김일성의 양다리 걸치기 외교는 계속되었다. 북한은 1959년 4월 이주연(李周淵)이 이끄는 경제사절단을 북경에 파견하여 「경제기술협정」(經濟技術協定)을 체결함으로써 4억 2천만 루블의 장기차관을 얻어냈다. 한편 10월 23일에는 북경으로부터 하-용(賀龍)과 나서경(羅瑞卿) 등의 거목들로 구성된 군사사절단이 평양을 찾아왔다. 이에 앞서 북한과 소련 사이에는 동년 9월 7일 「원자력 평화이용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었다. 이 협정의 체결은 소련이 중국과 맺은 「신 국방기술 협정」(新國防技術協定)을 파기하고 원자폭탄 제조의 기술자료의 제공을 거부한지 3개월 후의 일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무대에서의 다음 논쟁은 1960년 4월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각국 공산당 회의’에서 일어났다. 여기서도 쟁점은 마찬가지였다. 흐루시초프는 “오직 미치광이만이 새 전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중국을 비방하면서, 소련은 핵전쟁의 회피를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사회주의진영과 세계의 평화 세력은 핵전쟁을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국공산당’ 대표 팡 진(彭眞)은 “미(美)제국주의는 모든 방법으로 평화를 침략과 새 전쟁준비에 대한 위장(僞裝)으로 이

1747) 「Kuusinen's Speech at the Lenin Anniversary Meeting」, 앞의 G. F. Hudson and Others, *The Sino-Soviet Dispute*, pp. 116-122. 참조

1748) 이 총회에서 周恩來와 劉長勝은 신랄한 對蘇 공격 연설을 했다. 이 연설들에 관해서는 David Floyd, *Mao Against Khrushchev*, 1963, pp. 274-275에 수록된 영역 참조

용해 왔다”고 규탄하고 “제국주의의 악한 본성에 대해 비(非)현실적 환상”을 품지 말도록 경계하면서 “현대 수정주의에 대한 투쟁을 끝까지 전개할 것”을 선언했다.¹⁷⁴⁹⁾ 부쿠레슈티 회의에서 동(東)유럽의 공산당들은 소련에 가담했지만 알바니아만은 중국 편을 들었다. 이로써 중-소분쟁은 동-서가 뒤섞여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일대 분열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증좌(證左)가 뚜렷해진 것이었다.

흐루시초프는 드디어 결단을 내렸다. 그는 1960년 7월 16일 중국에 파견했던 1,300명의 소련 기술자와 전문가들을 한 달 안에 소환하며, 중국과 체결했던 수백건의 협정 또는 계약들을 모두 파기한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중국에 통고해버렸다.¹⁷⁵⁰⁾ 이 조치는 중국의 경제 건설에 중대한 타격을 주었음은 물론 중국인의 민족적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을 느끼게 했다. 이제 중국이 소련의 원조를 더 이상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었다. 이때 이후로 “자력갱생(自力更生)”의 구호가 전 중국 대륙을 뒤덮게 되었다. 이에 뒤 따라 중국은 흐루시초프의 그런 압력이 “중-소 두 당 간의 이해(利益)를 국가 관계의 영역에까지 확대시켰다”고 비방했다.¹⁷⁵¹⁾

그러던 와중에서도 중-소는 정치적 고려와 논쟁의 타결 책으로 1960년 11월 ‘모스크바회의’를 열었다. 여기에는 81개국 공산당 대표들이 참가했다. 이 ‘회의’는 비밀리에 3주 동안이나 계속된 후 그 결과 모호하고 미봉적인 합의가 일단 성립되어 12월 6일에는 「모스크바 성명」이 발표되었다.¹⁷⁵²⁾ 이로써 논쟁은 일단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얼마 안가서 두 당은 서로 상대방이 「성명」을 위배 또는 그 진의(眞意)를 왜곡했다고 비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양자의 관점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되어 갔다. 이 「성명」에서 중국이 거둔 수확은 “유고슬라비아 수정주의”를 비방하는 구절을 삽입한 것이었다. 이것은 후에 모택동이 흐루시초프와 티토와의 관계(關係)개선을 공격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했다. 그러나 「성명」은 동시에 북경의 노선에 대한 비판을 암시하는 “종파주의(宗派主義)”와 “교조주의(敎條主義)”의 위험성도 침부했던

1749) Khrushchev's Bucharest Speech와 Peng Chen's Rally, G. F. Hudson and Others, 앞의 책, pp. 132~139 및 pp. 39~140 참조

1750) 1963년 9월 6일자, 《人民日報》 앞의 論評. 앞의 『中蘇論戰文獻(「九評」及其他)』, p. 88.

1751) 위와 같음.

1752) 『The 1960 Moscow Statement』, 앞의 G. F. Hudson and Others의 책, pp. 177~205 참조

것이다.

호루시초프가 1948년 스탈린에 의하여 코민테른에서 추방되었던 유고슬라비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은 스탈린이 사망한 지 1년 후인 1954년 5월부터였다. 중국이 티토의 “수정주의”를 계속 공격하자 호루시초프는 적(敵)의 적(敵)인 티토(Tito) 편으로 더욱 접근해 갔다. 당시 알바니아의 엔베르 호자(Enver Hoxha)는 스탈린주의를 완강하게 고수하면서 호루시초프 노선에 반기를 드는 한편, 티토와는 당(黨) 노선 외에도 영토권(領土權) 문제를 놓고 서로 적대시하고 있었다. 이런 사정이 알바니아로 하여금 북경 쪽으로 전신(轉身)케 했던 것이다. ‘모스크바 회의’에서 중국이 티토의 “수정주의”를 공격했을 때 그 진짜 표적은 호루시초프 노선이었으며, 소련이 알바니아의 “교조주의”를 비방할 때 그 진짜 과녁은 모택동 노선이었다. 이 대리(代理) 공격 현상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제2절 김일성의 고뇌(苦惱)

이상과 같이 중-소간의 분쟁이 국제적으로까지 공공연하게 격화되고 있는 동안 두 나라 사이에는 북한을 각각 제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암묵의 경쟁이 진행되고 있었다. 여기서 김일성은 대립하는 두 편과 동시에 친선하는 외교적 술책으로 자기의 활로를 개척하고 있었다. 그 술책이 절정에 달한 것은 1961년 5월 남한에서 일어난 박정희(朴正熙) 장군의 쿠데타를 기회로 김일성이 중-소 양국과 동시에 군사 동맹을 맺은 때였다. 이 동맹은 한-미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한편 결과적으로는 중-소 중 어떤 나라도 북한에 군사개입을 못하게 만들었다.

김일성의 중-소 양국에 대한 이러한 양다리 걸치기의 기회주의적 대응책은 이미 사라져버린 단일적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란 헛된 명분에서 시도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추구한 것은 극히 위험한 싸움판인 중-소분쟁 속에 끌려들지 않으려는 회피정책(回避政策)이었다. 아울러 그는 ‘사회주의진영’의 일사불란한 통일과 굳은 단결에 의거하여 정신적으로도, 경제-군사적으로도 양 대국의 지원을 동시에 받기를 열망하고 있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남한에 미국의 힘이 견제해 있고, 그 당시

의 유엔 기구가 남한을 압도적으로 성원하고 있었다는 조건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그러므로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대(大) 분열을 뜻하는 중-소의 대립은 그에게는 극히 괴로운 상황이었다. 모스크바와 북경으로부터 다 같이 원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는 어느 한 편에 스스로를 위탁함으로써 다른 편의 적의(敵意)를 사면 안 되었다. 그는 소련을 “사회주의 진영의 중심”이라고 그 권위와 지도권을 존중하면서도 당의 이데올로기와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자기와 거의 동일한 중국 편에 크게 공감하고 있었다.

1961년 9월에 개최된 ‘노동당’ 제4차 대회 때까지 김일성의 1인 독재 체제는 확립되었다. 대회는 북한을 이미 이룩한 “사회주의 공업-농업국가”로부터 “발전된 사회주의적 공업국가”로 만들기 위해¹⁷⁵³⁾ 힘에 겨운 7개년 계획(1961~67)을 발표했다. 김일성은 이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중-소로부터 더 많은 원조를 절실히 필요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두 나라의 호의를 동시에 사야 했다. 그러나 중-소분쟁이 감정적 차원으로까지 악화(惡化)되고 있던 상태에서는 어느 한 편과 친선하는 일은 불가피하게 다른 편을 소원케 하여 양자를 같이 만족시킬 수 없는 논리적 당착(論理的 撞着)에 김일성은 봉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黨) 대회에서 행한 자기의 「보고」(報告)를 통하여 모스크바와 북경을 동시에 다 같이 만족시키기 위하여 양자에 모두 괴로운 격찬의 말을 늘어놓아야 했다.

김일성은 이 당 대회에서 후일 북경이 “맑스-레닌주의의 기본적 원리에 위반되며”, “프롤레타리아혁명에 반대하고”, “자본주의를 옹호하고 부활시키는” 철두철미 “수정주의의 강령”¹⁷⁵⁴⁾이라고 혹평한 ‘소련공산당’의 「신 강령초안」(1961)을 “공산주의 사회의 휘황한 전망을 펼쳐 놓았으며”, “전 세계 진보적 인류를 무한히 고무하는” 강령¹⁷⁵⁵⁾이라고 극구 찬양했다. 그리고 흐루시초프의 대서방(對西方) 긴장 완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과 모든 합리적 방안들”, 즉 평화공존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¹⁷⁵⁶⁾ 이러한 그의 친 소적(親蘇的) 발언이 북경 측을 격노케 했을 것임은 물론

1753) 『김일성저작선집』 3, p. 92, 108.

1754) 《人民日報》 1963년 9월 6일 앞의 논평. 앞의 『美蘇論爭文獻(「九評」及其他)』 pp. 97~98.

1755) 제4차 노동당대회에서 한 김일성의 「사업보고」, 『김일성선집(단권판)』 東方社, 1965년, pp. 488~489.

이 부분은 1968년 판 『김일성저작선집』 3에서는 전면 削除되었다.

1756) 앞의 책, p. 492. 이것도 위의 『김일성선집』 3에서는 표현이 약화되어 있다.

이다.

이와 동시에 김일성은 북경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하여 수정주의를 “부르조아 사상의 반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북경이 *모스크바*를 공격할 때 대리자(代理者)로 사용하고 있던 *유고슬라비아*의 예를 들어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정신을 거세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적 투쟁을 마비시키며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책동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와 그 반동정책을 비호하여 나르고 있다”¹⁷⁵⁷⁾고 *호루시초프*를 간접으로 비난했다. 그러면서 소련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던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¹⁷⁵⁸⁾고 찬양했다.

중-소 두 나라 당들 사이의 *이데올로기* 논쟁이 이상과 같이 국가적 대립으로까지 악화되고 있는데도 김일성은 위의 4차 당(黨)대회에서 동판지 같이 “오늘 사회주의 나라들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 밑에 하나의 대 가정(大家庭)에 굳게 단합되어 있으며, 서로 지지하며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¹⁷⁵⁹⁾고 사태를 정반대로 묘사하면서 중-소 양국의 북한에 대한 지난날의 지원을 극구 예찬했다. 이어서 그는 두 나라와 “친선과 단결”을 크게 강조하고, 1961년 7월 중-소 두 나라와 다 같이 맺은 군사동맹 관계(「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의 의의(意義)를 과시(誇示)했다.¹⁷⁶⁰⁾ 또한 그는 “수정주의”와 “교조주의”의 해독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역설하고, 노동당은 “수정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두 전선(戰線)에서의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¹⁷⁶¹⁾이라고 *이데올로기*적 비판의 균형을 유지하려 했다.

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두 공산주의 거국(巨國) 사이에서 이들에 대한 기회주의적인 찬양 또는 비판의 균형으로써 논쟁 불개입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안전을 기하려던 김일성의 외교적 곡예(曲藝)는 오래 갈 수 없었다. 그가 결국 어느 한 편에 가담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오직 시간문제로 되었다.

1757) 같은 책, p. 496.

1758) 같은 책, p. 489.

1759) 같은 책, p. 493.

1760) 같은 책, p. 194.

1761) 같은 책, p. 199.

제3절 소련공산당 제22차 대회

중-소의 대결이 전 세계에 다시 극적으로 공개된 것은 1961년 10월 7월에 열린 '소련공산당' 제22차 대회에서였다. 이때까지 흐루시초프는 미국에 새로 발족한 *케네디* 행정부와도 과거 *아이젠하워*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 공존과 협력을 추구하고 *유고슬라비아*와의 관계도 적극적으로 호전시키고 있었다.¹⁷⁶²⁾ 그렇기 때문에 대회 벽두부터 중-소의 논전은 재연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회장에서 흐루시초프는 예상 밖에도 *스탈린* 개인숭배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와 비(非)*스탈린화*(化)의 필요성에 대한 선전을 재개했고, (북경 편에 서있던 *알바니아* 노동당의 지도부가 소련공산당의 정책 노선을 반대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공격했다. 그리고 소련공산당에서 이미 추방된 "반당-종파주의 집단"(*몰로토프, 카가노비치, 말렌코프* 등)의 "반당 행위"를 세삼 비난했다. 그는 이들을 명시적으로 "교조주의자들"이라고 규정하면서 암시적으로는 중국공산당의 지도자들도 그런 자들이라고 비판했던 것이다.¹⁷⁶³⁾

이에 맞서 중국 대표 주은래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에게 드린다"는 헌사(獻辭)가 붙은 화환을 유리관 속에 누워 있는 *스탈린*의 *미이라* 앞에 바쳤다. 이에 대해 흐루시초프는 10월 17일과 27일, *알바니아*가 견고 있는 *스탈린*주의 노선을 비방하고 *엔베르 호자* 1파의 폭정을 날날이 공격하면서 그들의 타도를 외쳤다.¹⁷⁶⁴⁾ 이런 공격은 *알바니아*를 지원하고 있던 중국을 겨냥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19일 외국 대표로서는 처음 연단에 오른 주은래는 흐루시초프의 태도는 "성실한 *맑스-레닌주의자*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중국의 군자(君子) 식으로 점잖게 타이르고, 사회주의 나라들은 "독립과 완전한 평등"을 상호 존중하여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¹⁷⁶⁵⁾

1762) 1961년 3월 소련-유고슬라비아 간에는 8억 달러의 물자 교류를 내용으로 하는 무역 협정이 성립되었다. 그리고 9월에 흐루시초프는 미국 기자들에게 모택동과는 정반대로 "우리는 물론 유고슬라비아를 사회주의 국가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1763) Nikita Khrushchev, 「Report of the Central Committee to the XXII Congress of the CPSU, October 17, 1961」, Alexander Dallin(ed), *Diversity in International Communism : A Documentary Record, 1961-1963*, 1963, pp. 1-44. 참조.

1764) 위와 같음.

1765) Chou En-Lai, 「Speech at the XXII CPSU Congress, October 19, 1961」, Alexandor Dallin(ed), 같은 책, p. 51

주은래(周恩來)는 의례상으로 소련을 찬양했지만 논쟁을 불러올 것이 틀림없는 스탈린의 개인숭배나, 소련의 “반당-종파주의 집단”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고, 흐루시초프가 접근하고 있던 미국 케네디 정부의 평화 정책만을 통박했다. 알바니아 문제에 관해서 그는 “한 형제 당에 대해 공공연히 일방적인 비난을 가하는 것은 단결에 이롭지 못하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¹⁷⁶⁶⁾는 훈시조의 말을 남기고 대회 도중 귀국해버렸는데 이것은 사실상의 퇴장이었다. 흐루시초프의 연설에 대해서는 각국 당 대표들의 찬동, 맹종, 침묵 또는 노골적인 반발 등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다.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종래와 같이 모스크바의 다룰 수 없는 우위의 시대는 이제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소련공산당 제22차 대회를 계기로 중-소간에 또 하나의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앞에서 언급한 소련공산당의 「신강령」(新綱領)과 그리고 「당 규약」(黨規約)이었다. 흐루시초프는 사회주의 소련에는 이미 계급적 모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분석을 근거로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란 용어를 「신강령」에서 삭제해버리고 이에다 “전 인민의 국가”-“전 인민의 당”이란 용어를 대치(代置)시켰다. 그리고 1980년까지(당시로부터 20년 뒤까지) 소련은 공산주의의 문턱에 도달한다는 사회주의 건설의 허황한 청사진과 이정표를 제시했다.¹⁷⁶⁷⁾ 흐루시초프는 대회로 하여금 「신 강령」을 “신 공산당선언(新共產黨宣言)”이라고 하여 채택케 했다. 그는 소련공산당의 새 노선(자기의 노선)을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기본 노선으로 삼아, 소련의 지도권을 확립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북경이 그런 것을 인정할 까닭이 없었다.

북경(北京)은 사회주의사회란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에 이르는 장기간의 과도적인 역사적 단계요, 그런 사회주의 사회에도 계급적 모순과 계급투쟁은 존재하며 사회주의 사회에서 수정주의가 범람하게 되면 이것은 필경 자본주의 사회로 역전(逆轉)할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를 기본적 관점으로 고수하고 있었다.¹⁷⁶⁸⁾ 이런 관점에서 북경의 당(黨) 이론가(黨理論家)들은 소련공산당의 「신 강령」이 소련의 당(黨) 및

1766) 위와 같음.

1767) Boris Meissner, *Das Parteiprogramm der KPdSU 1903 bis 1961*, 1962, p. 69 및 pp. 103~105.

1768) 위의 1963년 6월 14일자 중국공산당의 「關於國際共產主義運動總路線的 建議」提案, 앞의 『中蘇論戰文獻(「九評」及其他)』, pp. 35~40 참조. 이 제안은 흐루시초프의 “전 인민의 국가”, “전 인민의 당”에 관한 이론을 신랄히 공격하고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철저히 옹호했다.

국가적 성격으로 규정한 “전 인민의 국가”에서 “전 인민의 당”이 하는 개념은 *맑스* 및 *레닌의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와 *레닌의 프롤레타리아 전위당(前衛黨)*에 관한 이론의 수정이며 왜곡이라고 가차 없이 논박했다. 요컨대 북경에 의하면 소련공산당의 「신 강령」안에는 소련공산당 지도부의 수정주의가 “체제화 되어있다”는 것이다.¹⁷⁶⁹⁾

김일성은 이때까지 중-소분쟁 문제를 당내에서 논의하는 것을 막아왔지만 사회주의 진영 내의 이 중대한 문제를 더 이상 덮어 둘 수만은 없었다. 곤혹스러웠던 소련공산당 제22차 대회에 참가하고 돌아 온 그는 그 해 11월 26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全員會議)를 소집하고 「사업보고」를 했다. 여기서 그는 “스탈린에 대해서는 소련공산당원들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소련에서 그의 활동과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문제는 소련공산당의 내부 문제에 속한다”¹⁷⁷⁰⁾고 하면서 분쟁에 직접 끌려들지 않으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일성은 “어떠한 당도 형제당들의 내부생활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면서¹⁷⁷¹⁾ 자기 자신의 운명과 유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었던 스탈린 개인숭배 문제를 위시하여, 흐루시초프가 비난한 소련공산당 내의 “반당 종파주의자들”에 대해서도 자기 입장의 표명을 회피하려고 했다. 그의 이러한 회피적 태도는 중-소 대립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면서 사실은 흐루시초프에 추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알바니아 문제에 있어서도 김일성은 표면상 중립을 지키려 하면서, 흐루시초프를 적대시하는 ‘*알바니아* 노동당’의 지도부를 비방하지 않았다. 도리어 그는 *알바니아* 해방 17주년기념일(1961년 11월 28일)을 맞이하여 축하까지 보내고 여태까지의 “*알바니아* 노동당의 정확한 지도”¹⁷⁷²⁾를 치하하면서 *알바니아*를 옹호했다. 이 사실은 북한이 의심의 여지없이 북경 측으로 경사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일성이 아직도 중-소분쟁 속에서 양다리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알바니아* 노동당’에 보낸 축하에 다음과 같이 소련을 허위적으로 찬양하는 어이없는

1769) 위의 1963년 9월 6일자 《人民日報》論評. 앞의 책, pp. 97-98 참조.

1770) 《로동신문》, 1961년 11월 28일.

1771) 위와 같음.

1772) Kim Il-Sung and Choi Yong Kun, ‘Message of Greetings to Enver Hoxha, Haxhi Lleshi, and Mehmet Shehu’, *Radio Pyongyang*, November 28, 1961, Alexander Dallin(ed), 앞의 책, p. 394.

구절을 첨가한데서 찾아볼 수 있다. -“조선 인민과 *알바니아* 인민은 소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대 가정 안에서 친선의 유대로 긴밀하게 맺어져 있다”¹⁷⁷³⁾고, 그 후 수개월 동안 북한은 중국의 입장을 더욱 더 지지하고는 있었지만, 명시적(明示的)으로 중국 편에 가세하지는 않고 있었다.

소련공산당 제22차 대회가 끝난 지 반년만인 1962년 4~5월 사이에 중-소 간에는 대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측 주장에 의하면 이때 중국 신강(新疆) 지방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의 기관과 요원들은 *위그르* 지역에서 대규모의 파괴 활동을 자행, 수만 명의 중국국민(中國公民)을 유인 또는 위협하여 소련 국경 안으로 도주케 했으며, 중국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이들을 중국 측에 송환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한다.¹⁷⁷⁴⁾ 한편 소련 측 성명에 의하면 중국의 군(軍) 관계자와 민간인들이 1960년 이래로 소련 국경을 계획적으로 침범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1962년만도 중국 측에 의한 소련 국경의 침범 사건은 5천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소련 영토의 여기저기를 슬쩍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마저 자행하고 있었다고 공개 비방했다.¹⁷⁷⁵⁾ 이로써 중-소 논쟁은 드디어 국경분쟁의 차원으로 확장되게 되었다. 그런데 김일성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일체 거론하지 않았다.

1773) 같은 책, p. 395.

1774) 앞의 《人民日報》 1963년 9월 6일자 논평. 앞의 『中蘇論戰文獻(「九評」及其他)』, pp. 101~102.

1775) 1963년 9월 21일자, 중국에 대한 「소련정부성명」전문, Griffith의 앞의 책, p. 449.

제8장

김일성의 친(親) 북경으로의 급선회(急旋回)

제1절 기점(起点) : 중-인(中-印) 국경분쟁과 쿠바 위기

북한으로 하여금 반소(反蘇)-친중국(親中國) 노선을 취하게 한 중요한 사건은 1962년 10월경부터 더욱 격화된 제2차 중-인 국경분쟁(中-印 國境紛爭)이었다. 이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쿠바에서 소련 미사일 장치를 철거한 사건이 발생했다. 1959년부터 조금씩 표면화 되었던 중-인 국경분쟁에서 소련은 처음에는 중립을 지켜오다가 제2차 분쟁에 이르러서는 인도(印度) 편을 지원하게 되자 중-소 논쟁은 심각해졌다. 제2차 중-인국경 충돌에서 소련이 인도를 지원한 데 대해 중국은 이것을 사회주의 중국에 대한 ‘소련공산당’과 “인도 반동파(印度反動派)”와의 결탁이요, 네루(Jawaharlal Nehru)와의 “반동동맹(反動同盟)”을 체결한 것이라고 격렬하게 비방했다.

중국 측에 의하면 소련이 인도에 제공한 경제원조 중 3분의 2는 “인도 반동파(印度反動派)”가 중-인 국경충돌을 일으킨 후에 준 것이며, 1962년 중-인 국경에서 대규모의 충돌이 있는 뒤에도 소련은 이들 “반동파”에게 군사 원조를 제공했다는 것이다.¹⁷⁷⁶⁾ 이에 대해 소련은, 중국이 아시아의 반(反)제국주의 전선의 단결에 큰 손해를 끼치면서 한 신생 중립국(인도)과의 군사 분쟁으로 들어가 “군사적 우의를 이용함으로써 영토의 일부를 자국에 유리하게 해결하려했던 사실을 모든 나라 인민들은 당혹과 비통의 심정으로 바라보았다”¹⁷⁷⁷⁾ 고 반격했다.

김일성은 인도(印度)를 지원한 소련에 크게 실망하고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 그의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볼 때 한 사회주의 나라가 어떤 자본주의국가와 분쟁 상태로

1776) 앞의 《人民日報》 1963년 9월 6일자 論評. 앞의 『中蘇論戰文獻(「九評」及其他)』, p. 102.

1777) 1963년 9월 21일자 「소련정부성명」전문. 英譯 전문은 Griffith, 앞의 책, 이 부분은 p. 447.

돌입했을 경우, 사회주의 진영 내의 어떤 나라도 중립을 지키거나, 자본주의 국가를 후원한다는 것은 배신적(背信的) 행위가 아닐 수 없었다. 여기서 김일성은 북경 편으로 돌아섰다. 그는 1962년 11월 15일자 주은래(周恩來) 서한(書翰)에 호응하여 발표한 《로동신문》의 사실과 11월 23일자 「정부성명」을 통하여 중국 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¹⁷⁷⁸⁾

같은 때 쿠바에서는 미-소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위기가 발생했다. 미국의 바로 문 앞에 소련의 미사일을 배치했던 사건은 미국의 안전에 큰 위협이었다. 케네디의 극적(劇的)이요, 강경한 요구에 의하여 흐루시초프가 1962년 10월 28일 쿠바로부터 소련의 미사일 장치를 철거하겠다고 미국에 통고하자 김일성은 또다시 충격과 격노를 금치 못했다.

중-소 국경분규에 뒤따라 일어난 쿠바 사태(事態)와 제2차 중-인 국경충돌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양국 간의 논쟁은 더욱 격화되었고 내용도 광범해졌다. 흐루시초프가 케네디의 요구를 수락했을 때 중국은 이것을 “미제의 핵(核) 공갈”에 대한 굴복이며, 그 원인은 바로 흐루시초프의 수정주의와 평화공존 정책에 있다고 비판했다.¹⁷⁷⁹⁾ 소련은 카리브해에 경솔하게 로켓 무기를 끌어들이므로써 핵전쟁의 위험을 조성하는 “위험주의(冒險主義)”의 과오를 범했으며 뒤에 가서는 이것을 굴욕적으로 철거하고 쿠바에 대한 미국의 “국제사찰(國際查察)”을 수락함으로써 “항복주의(降伏主義)”의 과오를 범했다는 것¹⁷⁸⁰⁾이 중국의 소련에 대한 공격이었다. 이에 대해 소련정부는 쿠바혁명의 성과를 수호하기 위해서 로켓 핵전력을 배치했다가 “미(美) 제국주의의 침략 계획”을 저지시킨 뒤에는 이것을 철수시켰다고 변명했다. 그리고는 케네디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또는 그 동맹국이 쿠바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흐루시초프의 조치를 찬하면서 대중(對中) 반격을 전개했다.¹⁷⁸¹⁾

1962년 11월 17일자 『로동신문』 사실은 북경에 장단을 맞추면서 “미(美) 제국주의자들”의 카리브해(海)에서 자행한 “가장 파렴치한 강도적(強盜的) 침략행위”를 규탄하고, 쿠바를 지원한다는 단호한 결의를 표명하는 동시에 “티토 도당(徒黨)”의 이름

1778) 《로동신문》 1962년 11월 22일 사실. 「정부성명」 전문은 《로동신문》 11월 24일자.

1779) 앞의 《人民日報》 1963년 9월 6일자 논평. 앞의 『中蘇論戰文獻(「九評」及其他)』, p. 102.

1780) 1963년 9월 1일자 「중국 정부성명」 전문, Griffith, 앞의 책, 이 부분은 pp. 383~385 참조.

1781) 1963년 9월 21일자 「소련정부성명」 전문. Griffith, 앞의 책, 이 부분은 p. 450 참조.

을 빌려 흐루시초프의 “수정주의(修正主義)” 노선을 다시 간접적으로 공격했다.¹⁷⁸²⁾ 이어서 사회주의 나라들 사이에서는 “표리부동한 행동이 있을 수 없다”고 소련의 조처를 가차없이 비난하기에 이른 것이다.¹⁷⁸³⁾ 비(非) 타협적인 반미투쟁 노선을 고수 해온 김일성으로서는 북경의 모택동과 마찬가지로 흐루시초프의 쿠바 미사일 기지(基地) 철거를 “투항주의(投降主義)”적 처사로 판단했고 환멸의 비애를 느꼈었음이 명백하다. 이제 그는 흐루시초프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배신자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다.

김일성은 중-인 국경분쟁(中印國境紛爭)과 쿠바 사태 등에서 흐루시초프가 취한 정책을 북한의 안전보장과 자기의 반미(反美)적 남-북 통일전략과의 관련에서 관찰했으리라는 점은 물을 필요조차 없다. 이 사건들은 그가 모스크바를 불신하고 드디어 북경 측으로 전신(轉身)하는 결정적 전기(轉機)가 되었던 것이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모스크바의 안색을 살피야 할 필요가 없었다. 1962년 12월 북한은 모스크바를 공개적으로 규탄하는 포문(砲門)을 열었다. 그간의 경위는 다음과 같았다.

‘체코슬로바키아공산당’ 제12차 대회(1962. 11)에서 북한의 당 대표단을 인솔하고 갔던 사람은 이주연(李周淵)이었다. 그는 대회 석상에서 중국에 대해 소련 측이 던지는 비난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일부 동지들”이 국제공산당회의도 아닌 한 나라의 당 대회에서 중국공산당과 중국 인민들에 대해 “일방적인 비난을 가하는 것은 우리의 단결을 약화시키며 국제 노동계급(國際勞動階級)의 공동의 위업에 큰 손실을 끼치지 않을 수 없는 일”¹⁷⁸⁴⁾이라고 소련의 처사를 공박했다. 그런데 가장 극적인 광경은 1963년 1월 동독(東獨)에서 벌어졌다.

‘독일사회주의통일당(社會主義統一黨=共產黨)’ 제6차 대회(1963. 1)에서는 중국을 옹호하는 북한대표의 발언을 미리 봉쇄하기 위하여 동독 측은 일본만을 제외하고는 여타 아세아제국(亞細亞諸國) 대표들에게는 연설할 기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유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다. 북한의 당 대표단 단장 이효순(李孝淳)은 연단에도 오르지 못했으며, 소련 측이 꾸민 이 굴욕적 처사에 분노하여 연설문을 대회 집행부에 제출

1782) 《로동신문》 1962년 11월 17일자 사설 「맑스-레닌주의의 가치를 더욱 높이 들자」 참조.

1783) 위와 같음.

1784) 1962년 12월 6일 李周淵의 축하연설문. 内外問題研究所 編, 『中蘇論爭文獻集』, 1963年, pp. 477~480 참조.

했다. 그 연설문은 1963년 1월 30일 평양과 북경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¹⁷⁸⁵⁾ 여기서 그는 이주연과 마찬가지로 “중국공산당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우호적이며 동지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소련의 태도를 비난했다.¹⁷⁸⁶⁾ 《로동신문》의 이 날짜의 사설은 그러한 일방적 중국 비난 행위는 “적들의 반중국(反中國) 합창”에 가세하는 일이라¹⁷⁸⁷⁾고 공박했다.

이 무렵부터 북한은 “소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진영”이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명분상으로는 중-소의 불가능해진 “통일과 단결”을 호소하고 있지만 김일성은 이미 소련을 반대하여 중국 측에 서 있었던 것이다. *모스크바*에 대한 평양의 전면적 이요, 결정적인 공격은 1963년 10월 28일에 취해졌다. 이날 《로동신문》은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자」는 장문(長文)의 사설을 게재했는데 이것은 *모스크바*에 대한 *이데올로기* 전선에서의 선전 포고나 다름이 없었다. 이 사설은 *호루시초프*가 김일성에 대해 시도한 갖가지 강압 책들을 최초로 폭로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1963년 7월 25일 소련이 미-영과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체결¹⁷⁸⁸⁾함으로써 그동안에 다시 열리고 있던 중-소 회담이 최종적으로 결

1785) William E. Griffith, 앞의 책, p. 102.

1786) 이때에 준비되었던 李孝淳의 연설문, 앞의 내외문제연구소 편, 『中蘇論戰文獻집』, 서울, 1963년, pp. 481-485 참조.

1787) 《로동신문》 1963년 1월 30일자 사설.

1788) 최종적 결렬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즉 중-소 양국 관계가 계속 악화일로로 상승하고 있던 가운데, 소련공산당은 1963년 3월 30일 중국공산당에 보낸 서신에서 양 당 대표자의 회의를 열자면서 5개 항목으로 된 문제의 토의를 제의했다(그 내용은 앞의 『中蘇論戰文獻(「九評」及其他)』, pp. 559-561에 수록되어 있음). 이에 대한 회답으로서 중국은 1963년 6월 14일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총노선에 관한 건의」(같은 책, pp. 4-53)를 공표하고 25개 항목에 이르는 자기들의 원칙적 입장을 천명했다. 이상 소련의 제의나 중국의 회답은 대립점의 조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각각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선전 문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에서 7월 5일 중-소 회담이 열렸다. 회담 도중 거듭하는 중국의 항의를 무시하고 소련이 미-영과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을 체결할 것이 확실해지자 회담은 중단되고 논쟁과 대립은 결정적 단계로 들어갔다. 1963년 7월 25일 미-영-소는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에 서명했다. 중국은 격분해서 이것을 소련 인민, 사회주의 나라들의 인민, 세계 인민을 “배반한 소련지도자의 행위”라고 욕설을 퍼부었고 *호루시초프*가 이 조약에 서명한 진짜 목적은 “미국과의 타협으로 한 때의 안일을 구하며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는 오히려 핵무기를 독점해서 군림하려는데 있다”고 단죄했다. 1963년 8월 15일자 「중국 정부서명」 Griffith 앞의 책, p. 348. 또한 중국은 1963년 9월 6일자 《人民日報》의 앞의 논평에서는 이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소련이 미국과 공모해서 핵무기를 독점하고 중국이 미국의 핵 공갈에 저항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소유하는 권리를 빼앗으려고 기도한 것”이라고까지 비난했다.

렬되자 김일성은 흐루시초프의 "수정주의 노선"에 큰 불안을 느끼면서 모택동의 전투적 혁명주의에 점점 동조해 갔던 것이다.

이 조약은 중-소간에 다시 새롭고 격렬한 논쟁을 유발했다. 모택동은 원자 폭탄을 "중이호랑이"로 비웃어 왔지만 이 조약에 대하여 독자적인 핵개발을 서둘렀다. 소련은 빈곤한 중국에서 가장 현명한 정책은 핵무기의 생산이 아니라 경제, 과학, 기술, 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 인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¹⁷⁸⁹⁾ 소련의 핵무기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주의 진영을 방위할 수 있는데 경제력에 한계가 있는 중국이 2~3개의 핵무기를 만들어 보았댔자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중국의 경제만 피폐하게 할 따름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¹⁷⁹⁰⁾ 흐루시초프는 1959년 6월 「중-소 국방신기술 협정」의 파기를 중국에 통고한 얼마 뒤에 "두 사람이 하나의 바지를 나누어 입는 형편인 중국에서 원폭은 사치다"¹⁷⁹¹⁾라는 모욕적인 인사까지 서슴치 않았다고 한다. 소련은 내심 핵확산(核擴散)은 위험하다고 보고 있었고, 특히 중국이 핵폭탄을 소유하는 것을 저지하려 했던 것이다.

소련의 수정주의와 "미(美)제국주의"는 벌써부터 결탁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던 중국으로서는 자국의 방위를 소련의 핵무기에 의존케 하려는 생각이란 있을 수가 없었다. 더욱이 중국의 빈곤을 들어 핵 개발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소련의 주장은 북경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심한 민족적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1963년 9월 1일자, 「중국정부 성명」은 비장한 표현으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소련 지도자가 중국이 뒤떨어져 있다고 조소하는 것은 아직은 이른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백년이 걸려 원자폭탄을 못 만든다고 해도 중국 인민은 소련 지도자의 지휘봉에 머리를 숙이는 일은 없을 것이며 미(美)제국주의의 핵 공갈 앞에 무릎을 꿇는 일도 있을 수 없다.¹⁷⁹²⁾

이렇게 중-소 분쟁은 민족적 감정상의 대립으로 번져나갔다. 그리하여 쌍방 간에는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치열한 국제적 선전전(宣傳戰)이 전개되었다. 투쟁은 아

1789) 1963년 8월 21일자 중국 정부에 대한 「소련정부성명」전문. Griffith, 앞의 책, p. 363.

1790) 위와 같음.

1791) 1972년 1월 26일자 일본의 《毎日新聞》이 중국 측의 발언으로 보도.

1792) Griffith, 앞의 책, p. 374.

직도 *이데올로기* 논쟁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이전투구(泥田鬭狗)라는 것이 실상이었다. 서로 말꼬리를 잡고 상대방을 비방 모략하고 공산주의의 권력투쟁에 특유한 *이데올로기적* 공격 용어와 논리와 비방 방식이 총동원되었다.

제2절 소련의 대(對)북한 원조내막 폭로(暴露)

위의 1963년 10월 28일자 「사설」을 출발점으로 하여 김일성은 북경의 반(反) *모스크바 캅파니아*의 기수(旗手)가 되었다. 「사설」은 그를 북경 일변도로 몰고 간 원인들을 자기변호의 입장에서 일일이 열거하였다. 그 논조는 북경의 주장의 복창(復唱)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 사설에서는 *호루시/초프*를 지칭하였던 “일부 동지(一部 同志)”라는 용어가 “어떤 사람들”이란 것으로 바뀌고 있다. *모스크바*의 “수정주의자들”은 이미 자기들의 “동지”가 아니라는 의미였다. 「사설」은 소련이 원조를 수단으로 하여 북한을 지배하려 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원조를 빙자하여 형제 당, 형제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여 자기의 일방적 의사를 강요하고 있다. ……원조에 대하여 자랑하기만 좋아하며 그것을 정치적 간섭과 경제적 압력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인연이 없는 것이다. ……1793)

이어서 이 「사설」은 “일부 사람들”(소련공산당)이 사회주의 국가들(중국과 북한)의 “자력갱생” 노선을 “민족주의적 편향(民族主義的 偏向)”이요, “폐쇄적인 경제”라는 딱지를 붙이면서 반대하여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사설은 *모스크바*가 사회주의 국가들의 “통합경제”의 창설을 제창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들의 경제적 독립성”을 말살하여 그 나라 민족 경제를 다른 나라 경제에 예속시키려는 간판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요컨대, 이상과 같은 북한의 주장은 *호루시/초프*의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정책은 제국주의자들이 신 식민주의(新植民主義)와 흡사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었다.

1793) 《로동신문》 1963년 10월 28일자 사설.

김일성의 이런 관점은 물론 모택동의 대소(對蘇) 공격의 관점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었다. 김일성은 이런 관점에 따라 소련의 “대국주의적(大國主義的) 방침”에 대항하면서 “주체성”과 자주 의식을 강조했던 것이다.¹⁷⁹⁴⁾

북한에 대한 외국 원조(주로 소련의 원조)는 1958년부터 현저히 줄어들다가 1962년에는 전무에 이르렀다.¹⁷⁹⁵⁾ 그 원인은 북한의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자 소련의 원조를 줄여 갔다는 데도 있지만, 중국에 점점 경사하고 있던 김일성에 대한 흐루시초프의 압력에 원인이 있었다고 추측된다. 1958년 이후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게 되자 모택동을 모방하여 “자력갱생”의 구호를 내세웠고, 1958년 9월 이래로 “천리마운동(千里馬運動)”이 강화되어 갔다. “천리마운동”은 바로 이해 8월 중국이 강행한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과 그 목표, 열의, 혁명 의식의 양양, 군중 동원과 지도 방법에 있어서 너무나 흡사했다.¹⁷⁹⁶⁾

소북한(小北韓)의 대소련(大蘇聯)에 대한 이 무모한 반발은 또 하나의 대국인 중국의 후원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으로서는 흥망을 건 극히 위태로운 싸움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루비콘강(江)을 건넜다. 후퇴는 불가능했다. 드디어 모스크바를 공격할 결전의 날이 왔다. 1964년 6월 16일~23일 평양에서 열린 ‘아세아 경제토론회의(亞細亞經濟討論會議)’¹⁷⁹⁷⁾를 앞에 두고 『로동신문』과 《쁘라우다》는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쁘라우다》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라는 논설로 이 회의를 비방하자 《로동신문》은 ‘왜 평양 아세아 경제 토론회의를 헐뜯으려 하는가?’라는 사실로써 흥분에 찬 반격을 가하면서, 지난날 소련이 북한 경제를 어떻게 가혹하게 착취

1794) 위와 같음.

1795) 한 통계에 의하면 ‘전후복구 3개년계획’이 시작되던 1954년도 북한의 세입에서 외국 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 세입의 33.6%였다. 그러나 이 비율은 1955년에는 21%로, 1956년에는 16%로, 5개년계획 제 1차 연도인 1957년도에는 12%로, 1958년에는 4.2%로, 1959년도에는 2.7%로, 1960년도에는 2.6%로, 7개년 계획이 시작되던 1961년도에는 1.9%로 계속 하강하다가 1962년도에는 0%로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金俊樺 편, 『中共圈의 將來』 서울, 1967년, p. 178 참조.

1796) 이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Yang Ho-Min, 『Mao Zedong's Ideological Influence an Pyongyang and Hanoi : Some Historical Roots Reconsidered』, Robert A. Scalapino and Dalchoong Kim(ed), *Asian Communism : Continuity and Transition*,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y, 1988, pp. 46~65 참조.

1797)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대양주로부터 27명의 대표가 모인 이 ‘토론회의’는 물론 중국이 배후에서 주선한 것이므로 反소련 성격을 띠게 된 것은 당연했다.

하고 약탈해 갔는가의 일부를 뒤늦게나마 다음과 같이 폭로하고 논박했다.

쁘라우다가 보란 듯이 조선 땅에 준 원조의 '모범'으로 지적인 평양방직공장, 홍남비료공장의 일부 직장들을 복구 건설하는데 소련인민들이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 두 공장들과 기타 공장들의 복구건설에 준 원조에서 당신들은 국제시장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설비와 부수강판(不銹鋼板)을 주고 그 대신 우리한테서 수 10톤(屯)의 금과 다량의 고귀한 유색 금속과 원료들을 국제시장 가격보다 훨씬 헐한 값으로 가져갔다. 우리에게 준 원조에 대해 말할 때 당신들은 그 대신 우리 생활이 가장 어려웠던 날에 우리 인민의 간고한 노동으로 이루어진 가치물(價値物)들을 가져간 데 대하여서도 웅당 말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태도가 아니겠는가? 1798)

북한이 이 마지막 말을 하고 난 이상 소련과의 화해의 가능성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였다. 만일 1964년의 *호루시초프*가 1968년의 *브레즈네프*(1968년 8월 20일 *체코슬로바키아* 침공) 1799)였다면 평양에는 소련군이 아마 "형제국"의 군대로써 사회

1798) 《로동신문》 1984년 6월 3일자 사설.

1799) 소련군은 1968년 8월 20일 동유럽 4개국 군대를 이끌고 돌연 *체코슬로바키아*로 진격해 들어갔다. 그것은 "사람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주장하면서 소련으로부터의 독립과 자유화를 주장하는 *두브체크*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람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란 1968년 1월 당 제1서기 노보트니를 몰아내고 당권을 계승한 *두브체크*와 그를 둘러싼 휴머니스트-맑스주의자들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체코슬로바키아*인들이 표현할 때 사용한 말이다.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는 그해 4월 5일에 채택된 「행동강령」에서 천명되었다. 이것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폐기(一黨獨제 포기), 사회와 정치-경제-문화의 "자유화", "민주화", "*휴머니즘*"의 이상을 표방하여 *소비에트-이데올로기*나 毛澤東思想 같은 비민주적인 *레닌주의 이데올로기*를 사실상 부정한 것이었다. 당원 사이에는 이것을 서구의 용어를 사용 "민주주의적 사회주의"라고도 규정했다. 소련은 이것을 "우익 수정주의"라고 비방하는 한편 *체코슬로바키아*가 소련을 이탈하여 서구 민주주의 편으로 넘어 갈 것을 두려워했다. 결국 그해 8월 *브레즈네프*는 무력 침공을 단행했고, 그곳에다 1991년 12월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었다.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행동강령」(1968년)은 *Czechoslovakia's Blueprint for Freedom-Introduction & Analysis* by Paul Ellco, 1968, pp. 89~178 참조. *체코슬로바키아*의 "우익 수정주의"에 대한 *모스크바*의 체계적이고 총괄적 비판은 *두브체크*가 쫓겨난 후에 출판된 *Right-Wing Revisionism Today*, Moscow, 1976 참조.

중국이 소련의 체코 침공을 비난한 것은 결코 *두브체크*의 "자유화"와 "민주화" 노선을 동조해서가 아니었다. *두브체크* 노선은 중국에 있어서도 역시 "현대 수정주의" 노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 수정주의자들이 다른 나라 내정에 무력으로 간섭하는 것(소련 세력의 확장)은 반대했다. 그 진의는 소련이 체코 침공 때와 유사한 구실을 붙여 "制限主權論"을 들고 나와 다른 공산당 국가를 침공하지나 않을까 하는 공포 때문이었다. 중국은 그 후 소련의 행동을 "사회제국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비방했다. 입으로 "사회주의"를 말하고 내용에서는 "제국주의"를 실행하는 것을 *레닌*은 "사회제국주의"라고 불렀다. *레닌*

주의의 진영을 “수호”한다는 구실하에 진군해 들어 왔을 런지도 모른다. 이 아슬아슬한 일이 벌어질 때까지 중-소는 악의에 찬 마구잡이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¹⁸⁰⁰⁾ 그런데 모택동이 최대의 악감을 품고 있던 “현대 수정주의의 두목” 흐루시초프가 이로부터 두 달 후 돌연히 역사의 무대에서 밀려나고 당 지도권은 브레즈네프로 넘어갔다.

은 1920년대 초 영국 ‘노동당’ 당수 맥도널드를 비판할 때 이 말을 처음 사용했다. 중국이 소련에 대해 “사회 제국주의”라고 부른 것은 1968년 8월의 체코 사태 이후의 일이다. 1968년 8월 23일 周恩來는 중국대사관에서의 리셉션에서 소련을 비방하였을 때 이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1800) 1964년 5월 11일 毛澤東은 흐루시초프 체제하의 소련을 “현재의 소련은 부르조아 독재, 대부르조아 독재, 독일식 파시스트의 독재, 히틀러 형의 독재요, 깡패 집단이요, 드골보다도 훨씬 더 나쁘다”고 매도했다(앞의 『毛澤東思想萬歲』(下), 1975年, pp. 136~137). 또한 그는 소련을 “大國 排外主義”, “부르조아 국가”, “반역 집단”, “종이호랑이” 등으로 묘사했고, 이에 대해 소련은 중국을 “대국 배외주의”, “민족주의”, “좌익 모험주의 偏向”, “소부르조아 급진주의”, “반공 반소”, “모택동 우상숭배”, “大漢의 배외주의”라고 비방했다.

소련의 중국 비방 중에서 중요한 비방은 모택동의 핵전쟁 불사론이었다. 1963년 8월 21일자 「소련정부 성명」은 중국 인민의 절반, 인류의 절반이 사멸해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제국주의의 패허 위에다 천배나 높은 문명을 급속히 건설할 수 있다는 중국의 주장에 “증오”를 표명하면서 그런 “야수적인 생각에 반대”한다고 했다(앞의 Griffith의 책, 영역 전문. 이 부분은 pp. 366~367) 이 「聲明」을 반박하는 1963년 9월 1일자 《人民日報》의 논평은 毛澤東이 1957년 가을 모스크바에서 한 말에서 보라는 듯이 공개했다. 즉 “나는 어떤 외국의 정치가와 전쟁문제를 토론한 일이 있다. 그 사람은 원자 전쟁이 일어나면 인간은 사멸해버린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나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세계 27억 인구의 반수가 사망한다고 해도 반수의 사람은 남고 제국주의는 완전히 멸망하고, 전 세계는 사회주의가 된다고 대답하고, 다시 몇 해가 지나면 또 27억이 되며, 틀림없이 그 보다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대답했다”는 부분이다. 毛澤東의 이 말은 같은 책, p. 376. 소련은 모택동의 이 말을 중국이 「회의 의사록」 원문을 수정해서 실었다고 지적하면서 핵무기의 무서운 파괴력, 방사능의 파멸적 오염을 강조했다. 그리고 핵전쟁이 나면 죽는 것은 “제국주의자”와 “독점자본가”들만이 아니라 무수한 노동자, 농민, 인텔리겐차들도 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 했다. 이에 앞선 소련의 이러한 선전전은 70년대에도 계속되고 있었다.

제9장

후루시초프의 실각 이후의 정세변화

제1절 소련공산당 새 지도부의 대북 접근

중국은 공교롭게도 후루시초프의 실각과 때를 같이 하여 핵실험(核實驗)에 성공하자 크게 기세를 올렸다. 여기서 중국은 후루시초프를 밀어내고 들어선 브레즈네프-코시긴의 쌍두마차(雙頭馬車)가 후루시초프 노선을 포기하고 북경에 접근하여 화해할 것을 바랐다.¹⁸⁰¹⁾ 그러나 브레즈네프는 후루시초프의 권좌를 빼앗았지만 그의 평화공존 노선과 대중(對中) 정책을 그대로 답습했다. 중국은 드디어 소련의 새 지도층에 대해 “후루시초프 없는 후루시초프주의(主義)”¹⁸⁰²⁾라고 공격의 막을 올렸다.

1801) 1964년 10월 16일 중국은 毛澤東(당 주석), 유소기(국가 주석), 朱德(인민대표 대회당 위원장), 周恩來(총리)의 공동 명의로 소련의 신 지도부 브레즈네프당 제1서기, 미코얀(최고 소비에트 간부회의 의장), 및 코시긴(수상) 앞으로 취임 축전을 보냈다. 그러나 같은 16일에 발표된 중국의 제1차 원폭실험 성공에 대해 소련이나 東유럽(알바니아 제외) 공산당으로부터는 축전이 오지 않았고 올 수도 없었다(‘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때문). 10월 22일자 《人民日報》의 「핵 독점을 타파하고 핵무기를 소멸시키자」는 사실에서는 실각한 후루시초프도 새 지도층도 일체 언급치 않은 채 미국만을 공격함으로써 소련에 대한 접근의 의향을 비쳤다. 그리고 11월 5일에는 소련의 당과 정부의 초청을 받고 주은래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대표단이 10월 혁명 47주년 축하 식전에 참석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한편 북경에서는 화기에애한 축하 행사가 소련 대사 일행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11월 7일자 《人民日報》의 「위대한 10월 혁명의 기치 밑에 단결하자」는 사실은 “중-소 양국 양당 사이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곤란은, 요컨대 역사의 에피소드에 불과하며 일보일보 해결될 것으로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중-소의 단결은 반드시 회복되며 계속 강화된다”고 하면서 “중-소 양국 인민의 형제적 전투적 우정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다짐했다. 같은 날 팡 진(彭 眞)은 주중 소련대사 주최의 10월혁명 축하 리셉션에서 행한 연설에서 소련과의 단결을 몇 번이고 강조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정은 중-소의 지도자들이 해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1802) 1964년 11월 하순 《紅旗》(第21, 22合併號) 사실, 「후루시초프는 왜 퇴진했는가」에서 중국은 후루시초프의 “수정주의 노선”을 다시 격렬하게 공격함으로써 그의 노선을 답습하는 브레즈네프-코시긴 체제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사실」은 이렇게 쓰고 있다-“후루시초프는 실각했다고 해도 그의 지지자인 미(美)제국주의자, 각국의 반동파, 현대 수정주의 분자는 결코 단념하지 않고 있다. 이 怪神-도깨비 부류들은 지금도 역시 주문을 외면서 후루시초프의 혼백을 불러일으키고, 도처에서 후루시초프의

호루시초프의 실각으로 아슬아슬한 대소(對蘇) 투쟁의 벼랑 끝에 서있던 김일성에게는 여기서 구출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는 브레즈네프-코시긴의 새 지도체제를 침묵으로 관망하고 있었고 북경(北京)처럼 “호루시초프 없는 호루시초프체제” 운운으로 이들을 비난하지 않았다.

한편 모스크바의 새 지도자들도 신중했다. 그들은 김일성의 권위를 억제하거나 모욕하는 대신, 인내심을 견지하면서 평양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다. 이들은 호루시초프가 알바니아를 징계하려다가 실패한 경험을 고려하여 자기들의 극동 요충에 또 하나의 반소적(反蘇的) 알바니아를 만들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 모스크바는 강경정책(強硬政策)으로 북한을 북경 편으로 완전히 몰아넣는 실책을 범하지 않으려 했다. 한편 이에 대하여, 북한은 무엇보다도 7개년계획(1961년부터 시작)이 파탄하지 않도록 외국 원조를 획득하는 동시에 미국에 필적하는 초 대국(超大國)을 배후의 군사 동맹국으로 유지해 두려 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일치 때문에 양 측은 서로 화해를 필요로 했던 것이다.

이런 요인 이외에도 당시 상송일로에 있던 베트남 전쟁은 모스크바와 평양의 상호 접근을 실현케 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1965년 2월 7일에 재개된 미국의 북폭(北爆)으로 아세아의 정세가 긴장하고 있었을 때,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다량의 군-경원조(軍經援助)를 받고 싶어 했을 것이며 소련은 자국의 극동국경의 안전을 위해 북한을 보호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코시긴(Alexei Kosygin) 수상은 1965년 2월 11일 하노이 방문으로부터 귀국하는 도상(途上)에 평양에 기착(寄着)하여 김일성과 일련의 회담을 가졌다.

코시긴의 평양 방문은 그 성격과 목적에 있어서 1954년 5월에 있었던 호루시초프의 벨그라드 방문과 아주 흡사했다. 두 나라는 「공동 커뮤니케」를 발표하면서 1961년 7월 북한-소련 간에 체결된 군사동맹 조약의 의의(意義)와 역할을 재강조하면서, 쌍방이 “상호원조를 제공하여야 할 조약상 의무의 중요성”에 합의하는 동시에, 쌍방간의 “긴밀한 친선의 유대”와 “단합”에 “만족”의 뜻을 표시했던 것이다.¹⁸⁰³⁾

“공헌”과 “공적”이란 것을 선전하며, 지금까지와 같이 호루시초프가 책정한 노선에 따라 일을 해 나가고 있으며 소위 ‘호루시초프 없는 호루시초프주의’가 실행되기를 꿈꾸고 있다”고, 앞의 『중소논전문헌(『九評』及其他)』, p. 528.

1803) 《민주조선》, 1965년 2월 16일자.

이때부터 평양-모스크바의 외교적 한냉(寒冷)의 기상에는 해빙이 찾아왔고 그 후 교역, 경제, 기술, 군사, 문화 대표단들이 빈번히 교환되었다. 이제 평양으로부터는 소련을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김일성은 북한에 소련식 “수정주의”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아마도 양측 간에는 소련은 북한의 내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북한이 반(反)소적 입장을 취하지 않는 한 소련은 북한에 군사-경제 원조를 재개한다는 어떤 암묵의 양해가 성립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 결과는 김일성으로 하여금 중-소분쟁에서 중간적 위치를 유지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자주권을 획득케 하게 되었고 사회주의로의 자기식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했다. 그러므로 그의 정책 전환은 이때까지 북경 일변도였던 북한이 이번에는 모스크바 일변도로 반전한 시계추의 이동 같은 것은 아니었다.

모스크바와의 화해 이래로 김일성은 중-소의 중간에서 자주적 노선을 실천에 옮기는데 애썼다. 그는 중-소간의 심각한 논전(論戰)에 직면하여 자기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중간에 서서 때로는 북경을, 때로는 모스크바를 지지할 수 있는 보다 넓은 행동의 영역이 주어진 것이다.¹⁸⁰⁴⁾ 그러나 북경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역적” 수정주의자들과 “혁명적” 맑스-레닌주의자들과의 투쟁에서 중간이란 용인될 수 없었다. 흐루시초프 형(型)의 “현대 수정주의자”를 계승한 브레즈네프 파와 자기들은 세계적 규모의 이데올로기 전쟁을 전개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전우(戰友)로 간주했던 김일성이 그들 수정주의자와 급속히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놀라움이 아닐 수 없었다.

소련의 현실주의적 대 북한 화해정책(和解政策)에 대응하기 위하여 북경은 자기대로 북한과의 친교를 확대해 보려 했지만 쌍방의 “혈맹의 동지” 관계는 점점 냉담해

1804) 이 무렵 美-英-蘇간에 체결된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동유럽 제국이 *알바니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련을 뒤따라 조인했지만 북한은 조인을 거부함으로써 중국과 동일한 입장을 취했다. 그리고 1965년 3월에 親蘇의 공산주의자들의 「모스크바 협의회」도 보이콧했다. 한편 1968년 8월에 있는 소련군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을 중국은 맹렬히 비난했으나 북한은 중국에 동조하지 않고, 도리어 《로동신문》 1968년 8월 22일자 사설을 통하여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의 “자유화”, “민주화” 투쟁을 호평함으로써 소련을 은근히 지지했다. 1968년 9월에 있는 북한 정권수립 20주년 경축 석상에서 김일성은 소련군의 북한해방은 말하지 않은 채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전만을 찬양했다. 1966년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소련과 동 유럽 제국의 비방을 받고 있을 때 북한은 모택동을 지지하지도 않았고 소련에 共鳴하지도 않으면서 침묵을 지킴으로써 사실은 모택동에게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갔다.¹⁸⁰⁵⁾ 북경으로서는 북한과 소련의 외교 관계에 해빙이 오는데 불안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지만, 김일성으로서는 북경이 말로는 월남의 “민족해방전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도 실질적 원조를 제공치 않고 있었으며, 더욱이 월맹(越盟)에 발송하는 소련의 무기와 장비가 중국 대륙을 거쳐 수송되는 것마저 지연시키고 있던 데에 몹시 실망하면서 중국의 반미(反美)투쟁 구호를 의심케 되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추단(推斷)할 수 있었다. 당시 김일성은 월맹식의 “민족 해방투쟁”으로써 남한을 해방한다는 전략에 매달려 있었지만 모택동의 호응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소련-북한 관계가 현저하게 정상화되고 있을 시작할 무렵, 중국 내부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1966. 5~76. 10)의 돌풍이 불기 시작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은 당 내의 격렬한 정책 논쟁 및 이데올로기 대립을 둘러싼 모택동파와 유소기(劉少奇)파 간의 건곤일척의 일대 권력투쟁이었다.

제2절 중국 대륙 :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회고컨대 모택동은 대약진(大躍進)과 인민공사(人民公社) 운동에 실패하자 1959년 국가 주석(國家主席)의 자리를 유소기에게 물려주고 일단 2선에 물러섰다. 그러나 그 후 모택동은 자기를 시체로 취급하면서 당내의 실권(實權)과 조직을 모두 장악하고 “수정주의의 길”을 걷는 “중국의 흐루시초프” 유소기파에 대한 결전의 신호를 올렸다. 극좌적(極左的) 혁명 구호를 외치면서 홍위병(紅衛兵)을 동원하고, 임 표(林彪)의 군권(軍權)을 배경으로 하여 반격에 나섰던 모택동은 유소기 파 타도를 “소련 수정주의 타도”와 결부시키면서 삼엄하고 소란한 반소(反蘇)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가운데 격렬한 반소 감정(反蘇感情)을 선동했다.

소련은 홍위병(紅衛兵)들의 광신적 난동을 연일 보도하는 한편, 맑스-레닌주의의 혁명 이론을 들고 나와 ‘중국공산당’의 이적(利敵)행위를 날날이 비판했다. 소련에 의

1805) 1965년 10월 北京은 한국전 참전 15주년에 즈음하여 揚 勇 장군을 대표로 파견했다. 양 용은 북한에서 1958년까지 “中國人民志願軍” 최고사령관이었는데, 北京이 그를 파견한 것은 중국군의 희생에 의하여 북한정권이 구출되었음을 김일성에게 상기시키려는 의도에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 용 이후 평양-북경 사이에 중요한 人士 왕래란 거의 없어졌다.

하면 중국의 “문화혁명”이란 모택동의 1인 통치를 확립하기 위한 “군사 쿠데타”¹⁸⁰⁶⁾에 불과한 것이었다. 북경 자체 내의 심각한 혼란과 정치 위기 때문에 모택동은 김일성을 자기편으로 끌어 들일 여력이 없었다. 중국에서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이 일어나고 있을 무렵에 북한에서는 온 사회의 “노동 계급화”와 “온 사회의 혁명화운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 이데올로기적 내용은 모택동의 “문화대혁명”의 그것과 거의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김일성은 중국의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하등의 동조도 표시하지 않고 냉담했다.

왜냐 하면 중국의 “문화대혁명”의 직접적 투쟁 대상이 유소기-등소평 파인 동시에 “소련 수정주의”였던 이상, 김일성으로서는 “문화대혁명”에서 모택동을 지지한다는 것은 곧 지극히 위험한 ‘중국공산당’내부의 권력투쟁과 반소(反蘇) 운동에 뛰어드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바야흐로 개막되고 있을 때 《로동신문》이 앞에서 언급한바 「자주성을 옹호하자」(1966. 8.12)는 사실로 북한의 자주적 입장을 대외적으로 선포했다는 사실은 시기적으로 보아 모택동이 자기의 문화대혁명을 지원하도록 김일성에게 압력을 가했을 것¹⁸⁰⁷⁾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했다.

드디어 모택동의 홍위병(紅衛兵)들은 대자보(大字報)를 통해 1967년 1~2월 동안 김일성을 “수정주의자”라느니, 그가 “군에 의하여 체포되었다”느니 하면서 중상했고¹⁸⁰⁸⁾ 평양의《조선중앙통신》(朝鮮中央通信)이 이에 공식적으로 응수하는¹⁸⁰⁹⁾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윽고 1968년 2월 15일자 광둥의 홍위병(紅衛兵) 신문 《문혁통신》(文革通訊)은 제왕(帝王)을 방불케 하는 김일성의 호화로운 사생활과 북한 내의 관료주의적 부패상을 폭로하는 기사¹⁸¹⁰⁾를 신는 등 관계는 악화되어갔다.

이러한 중국의 선전들은 그 내용의 진위와는 관계없이 모택동 파가 도저히 용인

1806) G. V. Astafyev and A. M. Dubinsky, *From Anti-Imperialism to Anti-Socialism : The Evolution of Peking's Foreign Policy*, Moscow, 1974, p. 15

1807) 毛澤東이 문화혁명 당시 ‘日本共産黨’에 압력을 가하려고 기도했다는 것을 당시 미야모토 겐지(宮本顯治) 서기장은《朝日ジャーナル》(1967. 7. 30)과의 기자 회견에서 시사하고 있다. 북한이 자주노선을 선포했을 때 위의 《로동신문》사설이 “내정 간섭에 반대하고 일관하여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는” ‘일본공산당’의 “정당한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해 왔다”고 쓴 것을 보면 ‘일본공산당’과 ‘조선노동당’이 다 함께 모택동의 압력을 받는 처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08) 『北韓總鑑 (1945~68)』 pp. 248~249.

1809) 1967년 1월 26일 『朝鮮中央通信 聲明』.

1810) 《東亞日報》, 1968년 4월 11일자 참조.

할 수 없는 김일성의 기회주의와 중간(中間) 노선에 대해 품은 증오감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일성은 자기의 입장을 *맑스-레닌주의*의 이름에서 다음과 같이 야유조로 방어하고 있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우리 당을 비롯한 *맑스-레닌주의*의 당들에 대하여 『중간주의』(中間主義), 『절충주의』(折衷主義), 『기회주의』(機會主義) 등의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원칙한 타협의 길』을 택하고 있으며, 『두 결상 사이에 앉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질없는 소리입니다. 우리에게도 자기의 결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자기의 결상을 버리고 남의 두 결상 사이에 불편하게 양 다리를 걸고 앉아 있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자기의 똑바른 *맑스-레닌주의*의 결상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¹⁸¹¹⁾

더욱이 1965년 2월에 있는 *포시긴* 수상(首相)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평양-모스크바 간의 관계가 다시 정상화되는데 북경(北京)은 심한 불만을 품고 북한이 *모스크바*의 편이 되어 '소련공산당'의 노선을 추종하고 있지만 않나 몹시 의심하고 있었던 사실을 김일성의 다음과 같은 야유조(揶揄調)의 말로써 판단할 수 있다.

다른 당들과 연계를 가진다고 하여 덮어 놓고 그 당이 다른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지지한다거나 거기에 추종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남을 의심하는 것은 대국주의(大國主義)와 종파주의(宗派主義)의 특성입니다. 대국주의와 종파주의는 남을 함부로 의심하고, 이 편 저 편으로 갈라놓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도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어느 『편』인가 묻는다면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의 『편』이며 혁명의 『편』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¹⁸¹²⁾

김일성이 중-소의 두 대국(大國) 사이에서 이렇게 독자적 노선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는 당(黨) 내에서 자기의 독재 권력이 이미 굳게 확립되어 있었던 주관적 조건 때문이다. 둘째로는 전(全) 세계 공산주의권 내에서 다원화(多元化) 현상이 일어나 중-소 싸움의 틈바구니에서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객관적 조건 때문이었다.

1811) 《근로자》, 1966년 10월호, pp. 21~22.

1812) 같은 책, p. 22

그런 상황에서는 북경-평양관계는 동요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모택동의 승리로 거의 일단락(一段落)을 지은 1969년 4월경까지 양자의 외교 관계는 형식만이 유지되고 있었다.¹⁸¹³⁾ 이를테면 북한 정권 수립 20주년에 즈음하여 보낸 각국의 축하 중 주은래의 축하가 가장 짧았다. 1969년 4월, 13년 만에 ‘중국공산당’ 9전대회(九全大會=9차 전당대회)가 열렸다. 이것은 유소기(劉少奇)-등소평(鄧小平) 등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당내 실권파”에 대한 모택동-임 표 등 소위 “조반 파(造反派)”의 승리를 과시하는 대회였다.

9전대회에서 「정치보고」에 나선 임 표(林彪)는 “미(美)제국주의”뿐만 아니라 “소련 수정주의 반역집단도 역시 종이호랑이”라고 야유했다. 그는 ‘소련공산당’을 공격하면서 이들은 “국내에서는 소련 인민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자본주의의 전면적 부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美)제국주의와의 결탁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의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¹⁸¹⁴⁾고 규탄했다. 이러한 “소련수정주의” 규탄은 국내에서의 “자본주의 부활”을 경계하고 “미제의 침략” 위협을 강조하고 있던 김일성으로서의 속으로는 안도감을 느꼈을 것이다. 여하튼 모택동이 문화대혁명에서 승리한 후에도 중-소논쟁은 끝없이 계속되었다. 1969년 8월 중-소 국경지대에서 양국군의 유혈(流血) 충돌이 일어난 후부터 논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이에 관한 분석은 본 저서의 한계를 넘는 것임으로 논급하지 않기로 한다.

반대파를 타도하고 권력을 공고화한 모택동은 다시 북한에 손을 뻗칠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다. 조-중 두 당 사이에는 막후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북경-평양 간의 화해를 촉구한 직접적 원인으로는 이 시기에 한-일 간의 제휴가 점차로 긴밀해 지고 있었던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양 측은 “일본군국주의(軍國主義)의 부활”을 반대하는 공통의 입장에서 한-일의 유대에 대하여 다 같이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하여 양자의 “전투적 우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막후의

1813) 그러한 平壤-北京 관계와는 대조적으로 平壤-모스크바 관계는 극히 우호적으로 보였다. 즉 1968년 9월 蘇聯의 정치국원이요, 제1 부수상인 폴리안스키(Dmitrii Poliansky)가 평양을 방문하여 한반도의 공산주의 통일을 격려했고, 1969년 5월 14일에는 소련 최고소비엣 상임위원회 의장(대외적 국가 원수) 포드고르니(Nikolai Podgorny)가 북한 여러 지역을 방문했다. 그리고 이 사이에 數多한 人士들의 왕래가 있었다.

1814) 임 표(林彪), 「中國共產黨 第9回 全國代表大會에서 한 報告」(1969년 4월 17일 채택), 《北京周報》 특별호, 1969년 4월 29일 p. 27.

정지작업(整地作業)을 거친 후 1969년 10월 1일 최용건(崔庸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의 당(黨) 및 정부 대표단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수립 20주년을 경축하기 위해 돌연히 북경을 방문했다. 그의 북경 방문은 아연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북한은 1965년 이후 그런 경축 행사 참가 초청을 *보이코트*해 왔던 때문이다.

한편 1970년 4월 5일에는 주은래가 김일성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계획된 대로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4월 7일에 발표된 「공동 *커뮤니케*」에서 북한 측은 우선 모택동-임 표의 천하가 된 “중국공산당의 영도 밑에 중국 인민이 자본주의를 복귀시키려는 제국주의와 현대 수정주의의 음모를 분쇄하고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축하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김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조선 인민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고 천리마 운동을 힘 있게 벌여 짧은 기간 내에 이룩한 발전”을 축하했다.¹⁸¹⁵⁾ 이로써 양 측은 각각 상대방의 당권(黨權), *이데올로기*의 정통성 및 정책 노선을 정식으로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공동 *커뮤니케*」는 “미(美)제국주의”가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자행한 침략 행위 및 “새로운 *아시아*정책”(*늑스* 독트린)과, “대동아 공영권(大東亞共榮圈)”의 옛 꿈을 실현하려는 “일본 군국주의”를 맹렬히 규탄하면서 “미제(美帝)”와 함께 “일본 군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 투쟁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짐했다.¹⁸¹⁶⁾ 이와 같이 강경한 반미-반일-반한의 입장에서 쌍방은 “피로 맺어진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전투적 우의”와 “친선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재확인하였다.¹⁸¹⁷⁾ 이 ‘공동 *커뮤니케*」는 북경·평양의 재결합을 선언한 것인 동시에 1969년 11월에 발표된 ‘*늑스-사토*(佐藤) 공동성명’¹⁸¹⁸⁾에 대한 *아시아* 공산주의자들의 사실상의 저항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김(金)-주(周)의 ‘공동 *커뮤니케*」는 공격의 표적을 미국,

1815)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 간의 共同커뮤니케」, 『朝鮮中央年鑑』, 1971년 판, P. 552.

1816) 위와 같음.

1817) 위와 같음.

1818) 이 「共同聲明」에서 일본의 사토(佐藤) 수상은 “臺灣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는 일본의 안전을 위하여 극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진술했고, “대한민국의 안전은 일본에게 긴요하다”고 말했다. 북한과 중국은 사토 수상의 이 말을 각각 자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라고 인식하고 “日本軍國主義 復活”을 반대하는 선전전을 전개했던 것이다.

일본, 한국에 국한했고 소련에 대한 직접적 비판이 없었던 것은 북한의 대소(對蘇) 친화 정책이 견지되고 있었음을 뜻했다.

주은래의 평양 방문 이후 쌍방 간에는 고위급 인물들로 구성된 군사-경제-문화 사절단의 상호 방문이 급작스레 활기를 띠어갔다.¹⁸¹⁹⁾ 그러나 이러한 평양-북경 간의 “친선과 피로 맺어진 전투적 우의”의 회복이 곧 북한의 대소(對蘇) 화해의 파국으로 정세를 역전시킨 것은 아니었다. 바로 그해 7월 4일에 마련된 북한의 주소대사(駐蘇大使)와 쵸시긴 수상(首相)과 사이에 있는 “우호적” 회담, 8월 11일의 야콥 말리크(Jacob Malik)의 평양 방문, 8월 28일에 있는 정준택(鄭準澤) 부상의 모스크바 방문 등 일련의 사례들은 북한이 대(對) 중-소 관계에서 다시 균형 정책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819) 예를 들면 朴成哲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의 대표단은 한국전쟁 20주년에 즈음하여 북경을 방문(1970. 5)했고 같은 날 ‘中國人民解放軍’ 총참모장 黃永勝이 평양에 왔다. 이에 대한 답례로 吳振宇 총참모장이 북경에 갔다. 이러한 상호 방문은 군사적 제휴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제10장

북한민주주의주의적경제건설노선

결론 : 주체사상의 본성(本性)

이렇게 김일성은 두 적대적 공산주의 거국 사이에서 우호의 균형을 회복하면서 자기의 “자주노선(自主路線)”을 실천해 나갔다. 그가 “자주노선”을 처음 대외적으로 선언한 것은 앞에서 논급한 바와 같이 1966년 8월이었다. 그것이 실천되어 온 긴 과정을 우리는 스탈린의 사망, 중-소 분쟁의 발발, 조선노동당 내의 권력투쟁 등과의 연관에서 고찰했다. 그 동안에 북한의 당 선전원들은 “현대 수정주의(修正主義)”, “교조주의(敎條主義)”, “종파주의(宗派主義)”, “좌우경 기회주의(左右傾 機會主義)”, “대국주의(大國主義)”, “사대주의(事大主義)”……등등의 “편향”을 더욱 호되게 공격하면서 “자주노선”의 관철을 위한 *이데올로기* 투쟁을 대내-외적으로 전개해 왔다. 그리고 그들은 “자주노선”의 정신적 토대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강조했고, 이 정신으로부터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네 개의 원칙¹⁸²⁰⁾을 세워 김일성이 창시했다는 “주체사상”의 도식(圖式)을 만들어 갔던 것이다. 이 도식은 그 후 “당의 유일사상 체계”로 확립되었다. 김일성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었다.

당의 유일사상(唯一思想)이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우리 당의 혁명사상입니다. 우리 당의 이 사상은 조선혁명을 완성하고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장 올바르게 이끄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맑스-레닌주의*입니다.¹⁸²¹⁾

그리면서 김일성은 자기의 “독창적”인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일체의 사상 요소들은 “반당적(反黨的)”, “기회주의적(機會主義的)”, “반동적(反動的)”이라고 해서

1820) 『김일성저작선집』 4, p. 220. 1965년 4월 이후 이 원칙은 하나의 공식으로 빈번히 반복되어 왔다.

1821) 『김일성동지약전』, 평양, 1972년 판, p. 777에서 인용.

때도 말살했으며 당 내의 반대파를 제거할 때에는 의례히 “당의 유일사상”을 반대했다는 “반당(反黨)”의 낙인(烙印)을 찍어 숙청하는 수법을 구사해 왔다. “당의 유일사상”, 즉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에 있어서의 최고, 유일, 신성, 무오류(無誤謬)의 이념으로 절대화(絶對化)되었으며 모든 진리의 궁극적 근원으로 신비화되어 갔다. 김일성이 북한에서 자기의 “주체사상”을 절대화, 신비화 해온 과정은 곧 자기의 독재 권력의 절대화, 신비화해온 과정과 일치한다. 그가 “주체사상”의 체계적, 종합적 설명을 제시한 것은 대체로 1965년 4월 이래의 일이었다.¹⁸²²⁾ 김일성에 대한 개인미신(개인 숭배)의 풍조가 더욱 널리 퍼져 나감에 따라 북한의 당 역사가들은 “주체사상”을 김일성이 이미 소년시절에, “역사상 최초”로 “창시”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부주의하게도 외국 기자에게 “주체사상”은 “결코 우리가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레닌주의자*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는 이와 같은 사상을 특별히 강조하였을 뿐입니다”¹⁸²³⁾라고 말함으로써 ‘주체사상’은 자기가 “창시”한 자신의 일관한 선전의 허위성을 스스로 입증해버렸다. 그의 말과 같이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 입장”, “자력갱생”, “창조적 노력”을 추구하는 것이 “주체사상”이라면, 그것은 비단 김일성에서 뿐만 아니라 용어는 다르지만 *티토*, *차우셰스쿠* 등의 공산주의자들, 역대의 허다한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팻시스트*, 민주주의자들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는 일반적 현상이며, 결코 김일성에게 특유한 것은 아니었다.

김일성에 있어서는 “주체사상”을 정치 분야에 구현(具現)한 것이 당의 자주노선이다. 「자주성을 옹호하자」는 《로동신문》의 앞의 사설은 *모스크바*나 북경 등 “외부 세력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김일성의 반대파들을 “수정주의자”, “교조주의자” 또는 “사대주의자”라고 공격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공산당들의 상호 관계에서는 “완전한 평등, 자유,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 동지적 협조”라는 규범을 엄격히 준수해야

1822) 1965년 4월 14일 ‘인도네시아 알리 야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한 김일성의 강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가 공표된 것으로서는 주체사상의 거의 최초의 종합적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김일성저작선집』 4, pp. 195~240.

1823) 일본 《毎日新聞》1972년 9월 17일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김일성저작선집』 6, 1974년 판, pp. 268~296.

한다고 누구나 다 하는 말을 유달리 강조했다. 이 사실은 세계 공산당들 사이에서는 어떤 특권적 당도 있을 수 없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큰 당과 작은 당은 있으나 높은 당과 낮은 당, 지도하는 당과 지도받는 당은 있을 수 없다. 누구는 그 어떤 중앙적 지위에서 지시하고 통솔하며 누구는 그 밑에서 복종하고 떠받드는 관계란 허용될 수 없다. 그들은 다 같이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동등한 성원(成員)들이다.¹⁸²⁴⁾

김일성은 언제나 “현대 수정주의”와 “교조주의”를 하나로 묶어 반대하면서 당의 “주체”를 강조했다. 그러나 그의 공격의 주요 표적은 “현대 수정주의”였다. 그가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한 까닭은 그것이 “정세의 변화와 창조적 발전이란 구실”에서 *맑스-레닌주의*를 수정하여 그 혁명적 진수를 거세하고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거부하면서 “계급협조”를 설교하고,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포기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런 작태는 그에 의하면 “*부르조아* 사상”이요, “우경 기회주의”였다.¹⁸²⁵⁾ 이러한 수정주의에 빠져 든 공산당의 국명을 그는 밝히지는 않았으나 소련을 지칭한 것이 명백했으며, “현대 수정주의”에 대한 그의 그러한 비난은 바로 북경(北京)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했다. 김일성은 소련이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평화공존노선을 추구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세칭 “자유화” 정책을 실시해 온 상황에서 자기의 권력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중국을 뒤따라가면서 소련에 대해 *이데올로기* 공세를 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그는 마찬가지로 국명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북경에 대해서는 “좌경 기회주의”라고 비난했다. 그에 의하면 “좌경기회주의”란 “교조주의”요, “소(小) *부르조아* 사상”이다. 그는 북경을 겨냥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현대 수정주의와 함께 좌경 기회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좌경 기회주의는 변화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맑스-레닌주의* 개별적 명제들을 교조주의적으로 되풀이 하며 초(超)혁명적인 구호를 들고 사람들을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끌어 갑니다. 또한 그것은 당을 균중으로부터 이탈시키며 혁명 역량을 분산시키며 주(主)되는 적(敵)에

1824) 《로동신문》, 1966년 8월 12일자 사설.

1825) 「현 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1966년 10월 5일), 『김일성저작선집』 4, 1968년 판, p. 334.

공격을 집중할 수 없게 합니다. ... 좌경 기회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는 반제(反帝) 역량을 단결시켜 제국주의와 성과적으로 투쟁할 수 없으며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도 잘 할 수 없습니다. 1826)

이런 말은 중국의 “문화대혁명”기의 와중에서 바로 모스크바가 북경을 비방했던 때의 논조와 너무나 흡사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당 이론가들은 “주체사상”을 “인간 중심의 세계관” 운운으로 확대, 과장하는데 정력을 쏟아 왔지만 이런 설명은 본래의 주체사상과는 무관한 사후의 창작이므로 여기서는 논의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1826) 같은 책, pp. 334~335.

제11 편

북한에서의 개인숭배(個人崇拜)

제1장 • 개인숭배란 무엇인가?

제2장 • 개인숭배 공방(攻防)속의 소용돌이

제3장 • 평양의 우상화(偶像化) 선풍(旋風): 그 목표 · 구도(構圖) · 전술

제4장 • 계속 부는 평양의 우상화 선풍

제5장 • 장년기의 “수령”에 대한 신격화(神格化)

제6장 • 개인숭배의 세습화(世襲化)

맺는 말 • 강성대국(强盛大國) - 군사적 강국 건설

제1장

개인숭배란 무엇인가?

제1절 “수령 없는” 독재체제의 출범

김일성은 8·15 해방 4개월 후인 1945년 12월 17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책임비서에 정식으로 선임되었다. 이로써 그는 당권을 장악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 강화해 나갔다. 그러나 그에 대한 개인숭배는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었다. 한 예로 미-소 공동위원회의 개막에 즈음하여 1946년 2월 ‘조선공산당 진남포(鎭南浦市)위원회’ 선전부가 발표한 「선전요강」은 신탁통치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서울의 ‘한국민주당’, 김 구(金九), 이승만(李承晩) 등을 비난하면서, 이들을 “민족 파시스트”로 규정하고 비방했다.¹⁸²⁷⁾ 그러나 이들을 아직은 “민족반역자”로까지 몰지는 못하고 간간히 김 구 “선생”이니 이승만 “박사”니 “두 선생”이니 하는 존칭을 붙였다. 이것은 그들의 명성이 그때까지 북한에서 무시할 수 없었다는 증좌였다. 그러면서도 이들에 대한 소위 “우상숭배”를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우리는 … 과거의 진정한 민족 애국지사들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 두 선생의 행동은 민족파시스트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동시에 과거 이 조선적인 우상숭배적인 박사니, 주석이니, 무슨 당 수령이니, 조선독립을 위하여 싸운 해외 대한임시정부 이 따위에 속지 말 것이며…¹⁸²⁸⁾

그러나 이상의 “조선식이며 우상숭배적”이라고 하여 비꼬았던 “주석”이니, “수령”(首領)이라는 존칭을 뒤에 와서 김일성에게 붙인 것은 실로 기괴한 일이었다. 이 「선

1827) 朝鮮共產黨 鎭南浦市 委員會宣傳部, 「上春宣傳要綱」, 國史編纂委員會發行, 『北韓關係史料集 I - 朝鮮勞動黨 I (1945年~1950年)』, 1982年, p. 34~35.

1828) 같은 책, p. 37. 북한이 정치지도자에 대해 “우상숭배”라는 비판적 용어를 만들어 사용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전요강」은 “조선의 완전 해방독립을 위하여 싸운 안도산(安島山=안창호 安昌浩)선생”은 “순결하고 철저한 애국 민족주의자”였으며 “진정한 민주주의자”였다고 격찬했다.¹⁸²⁹⁾ 여기서 이 문건은 “이 분이 살아계셨더라면” 공산당과의 협동, “인민”과의 협동을 주장했을 것이라고 당략적(黨略的) 추측을 내세우면서 “김 구, 이승만은 고(故)안(安)선생의 정신을 배반하고 자기의 정권욕에 의하여 조선민족(의) 단결을 파괴하는 [등] 반(反)민주주의적”이라고 비판하고 “영면(永眠)하신 안창호 선생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¹⁸³⁰⁾ 그러나 그러한 안도산은 뒤에 와서 김일성으로부터 “부르조이 민족주의자” 또는 “민족개량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혀 북한판 민족해방사에서 말살되었다.¹⁸³¹⁾

이 「선전요강」은 이어 “우리는 최후로 이들이 이승만씨, 김 구씨에게 안창호 선생의 민주주의 정신을 백분의 1이라도 배워서 인민을 반대하고 진보정당을 반대하고 자기 1당(黨), 1파(派)의 독재정치를 하려는 꿈을 버리고 인민과 협동하며 진보정당과 손을 잡아 민족통일전선에 참가하도록 다시 한 번 권한다”¹⁸³²⁾고 썼다. 이 말은 해방직후 김 구, 이승만을 공산당이 통일전선에서 제외해야 할 “친일파”, “민족반역자”라는 최종적 심판을 아직 내리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었다. 1950년 대라면 절대로 용납될 수 없었을 이상과 같은 당(黨) 선전부의 지도자 분석은 김일

1829) 위와 같음.

1830) 위와 같음.

1831) 北韓의 1972년 판 『김일성동지각전』(pp. 41~42)은 기록하기를 김일성은 “민족주의 운동의 《지도자》로, 《웅변가》로, 《명성》이 높았던 안창호의 그릇된 이론과 견해에 대하여 원칙적인 비판을 가하시었다”고 하면서 그 예를 들었다. 즉 1927년 2월 [김일성 15세 되던 해] 安昌浩가 上海로부터 吉林에 와서 《조선민족의 장래》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을 때였다. 이때 안창호는 “《각 개인의 자아수양》, 《교육과 산업의 진흥에 의한 국력배양》을 설교하면서 《이 힘의 준비야말로 독립목적 달성의 가장 빠른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일토당토않은 부르조아 민족개량주의 이론을 반박하는 서면질문을 그에게 들이대었다. 그의 질문에 “《열변》을 토로하던 안창호는 말문이 막혀 대답도 못하고 진땀을 흘렸다”고 아우했다. 이 책은 위의 안창호의 주장에 대하여 김일성이 일일이 가했다는 “신랄한 비판”을 소개했으나 이것은 15세의 소년 김일성은 벌써 탁월한 공산주의 이론가였다고 그를偶像化하기 위하여 지어낸 말이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와 같이 김일성 동지께서는 민족주의자들의 개량주의적 이론의 반동적 본질을 밝히시고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시으로써 청년 학생들로 하여금 민족주의자들에게 환상을 가지지 않고 진정한 혁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시었다”고... 이러한 김일성 찬양은 1927년 당시의 김일성이 아니라 이 책이 나온 1970년대에 와서 김일성의 공식화된 민족주의 반대사상의 일단을 표명한 것이었다.

1832) 위와 같음.

성의 우상화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던 시기에 일어난 선전사업의 혼돈상태를 반영한 것이었다.

당(黨) 선전부장 김창만(金昌滿)은 이러한 사실의 일단을 1946년 4월 ‘북조선공산당’ 각 도 선전부장 회의에서도 밝혔다. 그는 당(黨)이 사상적-정치적 통일이 되지 못하고, 종파사상(宗派思想)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김일성의 영도(領導)(지도)가 확립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솔직하게 진술했다.

…종파사상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김일성, 박헌영, 무 정 동무 만세!”의 구호를 쓴 곳이 있다(평북). 당의 영도자 문제인데 조선에는 아직 당수가 없다. 당의 역사가 불과 1년도 못되는 당에 영수가 생겨날 리 없다. 영수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¹⁸³³⁾

김창만은 이 말에 뒤이어 김일성의 영도가 흔들리고 있던 원인을 당내에 “엄중하게” 존재하는 종파(宗派)사상, 영웅사상이 “당의 통일과 영도의 유일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 돌리면서 “일성(日成) 동지를 그 지도자로 하는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의 영도[하]에 더 굳게 단결하여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¹⁸³⁴⁾ 그는 이어서 “당(黨)의 통일은 우선 영도가 통일되어야 하며 뚜렷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고 단결하는데서부터 착수되어야 할 것”¹⁸³⁵⁾이라고 하면서 김일성의 지도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의 이 말은 당시 김일성 개인숭배가 아직은 확립되지 못하고 그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었다.

김창만은 실례를 들어 <평북신보>(平北新報)에는 “안중근(安重根)에 대한 기사와 사진이 대서특필로 기재되었으며 김일성 동무의 사진이 한쪽 구석에 조그맣게 나왔다. 이밖에도 실례가 얼마든지 있다. 이 어찌 공산당원이 하는 일인가?”¹⁸³⁶⁾라고 개탄조로 비판했다. 이밖에도 그는 당시 ‘북조선공산당’은 당(黨) 이데올로기에서 무엇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혼돈을 겪고 있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출판물은 “『프로프까』 『야마가와 히도시(山川均)』 『무정부주의를 연구하라』는 등 … 땅밭이 얼마

1833) 金昌滿, 「北朝鮮共產黨 中央委員會 第二次 各道宣傳部長會議總括報告要旨」(1946. 4), 같은 책, p. 87.

1834) 위와 같음.

1835) 위와 같음.

1836) 같은 책, p. 89.

든지 있다”는 사실을 개탄하고, 출판물에 있어서는 “소련에서 출판된 것은 지방에서 출판해도 좋지만, 지방에서 경성(京城)에서 나온 것은 분국(分局)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¹⁸³⁷⁾고 하면서 이에 대한 통제를 지시했던 것이다.

그 후 김일성의 반일(反日) 유격대 투쟁을 최대로 영웅화-웅대화-우상화-과장화 하는 선전 작업이 사실(史實)의 계속 날조, 또는 왜곡과 함께 계속되어 “인민공화국”을 선포할 때까지에는 그 기본 방향과 골격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무렵 이후부터 김일성의 반일(反日)유격대의 행적기록에는 감동, 흥분, 격찬의 수식어와 수사(修辭)들이 최대한 충동원되었다. 그 한 예로 김두용(金斗鎔)의 논문 「8·15 해방과 조선민족의 반일투쟁」¹⁸³⁸⁾을 들 수 있다. 저자는 자기의 논문에서 김일성이 반일(反日)빨치산투쟁을 시작한 것은 1930년 이전부터라고 하면서 그 전적(戰績)을 엄청나게 과장 또는 날조했다. 그 외에 사실(史實)의 기술도 아주 부정확했다. 논문의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저자의 단평은 [1]안에 삽입했다.

(1) 1931년 9월부터 1936년 6월까지에 김일성이 두만강 및 압록강 대안(對岸) 지방에서 전개한 유격투쟁의 횃수는 23,928회이며, 참가한 유격대원의 수는 136,927명에 달했다. [침소봉대]

(2) 김일성의 유격투쟁은 처참한 상태에 빠진 동만(東滿) 100만의 조선인민들의 생활환경 속에서 중국인민과 공동투쟁을 전개하여 … ‘중국의용군’과 협조하면서 발전 강화되었다. [여기서 ‘중국의용군’이란 중공의 유격대인 ‘동북항일연군’임을 은폐]

(3) 1930년 조선공산당 만주총국(滿洲總局)이 해소된 이후 김일성장군의 무장유격대는 최초에는 장학량(張學良)의 ‘동북군’(東北軍)을, 그 뒤에는 일제(日帝) 군대를 공격하여 괴멸시킨 후 그들의 무기를 탈취하여 그 무기로써 무장하며 장비를 개선하였다. [과장]

(4) 1932년 ‘조선인의용대’와 ‘중국의용대’와 남만(南滿) 유격대는 공동 연합하여 ‘동북인민 반일유격대’를 조직하였다. [날조]

(5) 도시 주변의 인민유격대 지구에서는 [중국]공산당 조직과 당(黨) 지도하에 “반

1837) 위와 같음.

1838) 朝鮮歷史編纂委員會 發行, 『歷史諸問題』(第拾壹輯), 1949년 9월, pp. 12~60에 全文.

제(反帝)청년의용군”, “농민협회”, “농민자위대”, “남녀단체” 등의 민족적 대중조직이 수 10만의 광범한 대중을 결집하고 있었다. [대체로 사실]

(6) 1934년 김일성 장군의 지도하의 유격대는 ‘중국의용군’과 협력하여 산차코 전투에서 일제(日帝)의 무장 시가지를 “무난히 점령하였다”는 것이다. [왜곡]

(7) 1935년 김일성 “장군”은 만주에서 조선인민의 반일(反日)세력을 총집결시키기 위하여 ‘조선인조국광복회’를 조직하였으며 [왜곡], 그의 공작원은 북조선 각도에 파견하여 광범한 형태의 반일 단체들을 조직하였고 1936년에는 갑산(甲山)의 조직과 연락하여 보천보(普天堡)를 습격, 일제 하에 신음하던 조선 인민에게 용기를 고무했다. [과장 왜곡]

(8) 1938~9년에 일제(日帝)의 대소(對蘇) 공격기지인 장고봉(張鼓峯) 노모함에 대하여 김일성 “장군”의 부대는 그 후방을 교란하여 일본군에게 “막대한 손해를 주었다”는 것이다. [과장]

(9) 화북(華北)에서의 ‘조선의용군’의 항일투쟁도 이와 같은 김일성 “장군”의 “빨치산 투쟁의 영향 밑에서 계속되어 왔던 것이다.” [완전날조] 등등이다.

이 저자는 김일성의 반일(反日) 유격전의 “전략적 및 거대한 역사적 의의”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찾았다. 첫째로 “조선의 혁명운동의 전통을 계승하여… 이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켰다”는 점, 둘째로 “민족적 비운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조선민족에 대하여 용기와 신념과 장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고무시켜 주었다”는 점, 셋째로 “조-중 양국 인민들의 공고한 단결의 기초위에서 광범한 반만(反滿)[과외 만주국 반대를 뜻함] 항일통일전선을 고무시켜 준 점”, 넷째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대소(對蘇) 공격을 위한 군사기지를 파괴하고 그 후방을 교란했다는 점, 다섯째로 그는 “국제 반(反)파시스트 전선의 일환”으로써 또한 “국제민주역량과의 혈연적 연관성에서 투쟁함에 있다”는 점(투쟁방법의 나열에 불과) 등이 그것이다.

다른 저자 윤세평(尹世平)도 자기의 논문 「8·15 해방과 김일성장군의 항일 무장투쟁」(1839)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즉

(1) 김일성장군의 영웅적 항일 무장유격대는 1931년 ‘9·18사변’(소위 만주사변)이

1839) 같은 책, pp. 61~75에 全文.

후 만주에서 조선인민의 “최초의 항일 무장대오”로 출발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역사적 단계에서 반일 민족해방 운동을 발전시킨 투쟁 형태로 출현하였다. [과장]

(2) 김일성의 항일(抗日) 무장유격대는 오래지 않아서 “전(全) 만주를 통하여 가장 강력한 중추적 항일 전투부대로 만들었으며 일본제국주의의 가장 큰 공포의 대상으로 되었다”. [황당무계한 과장]

(3) 김일성은 항일무장투쟁의 근거지를 동만의 장백산(長白山)과 송화강(松花江) 유역에 창설하고 이곳을 근거지로 하여 일제(日帝)가 패망할 때까지 10여년의 무장유격 전투를 계속하였대거의 사실. 이것은 “김일성장군의 항일유격 전투가 세계 유격전사(遊擊戰史)에 남긴 불멸의 영웅성” [과장]을 증시(證示)하는 것이다. [황당무계한 과장]

(4) 김일성의 항일 무장유격부대는 코민테른 제7차대회가 반(反)팻쇼 통일전선에 관한 결정을 채택한 이후에는 이에 호응하여 재만 조선인민의 반일세력을 총집결하여 1935년 반일 민족통일전선으로써[사실이나 과장] ‘재만 한인 조국광복회’를 조직했다허언. 그리하여 세계 반(反)팻쇼 전선의 일환을 형성했다.

(5) 김일성의 유격부대는 1937년에 이르러 전 만주를 달렸으며 다시 장백산을 넘고 두만강 압록강을 따라 조선 국내에까지 들어와 국내 동포의 반일(反日)운동을 고무 추동(推動)시켰다. [과장]

(6) 김일성은 [자기가 작성한]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 의거하여[날조]조선에 수립할 주권정권의 성격을 종래의 낡은 “노동자 농민정부”(노-농 소비에트 정부)의 슬로건 대신 통일전선을 기초로 하는 “인민정부” 노선을 내세웠다. “인민정부노선”은 조선민족해방에서 획기적인 정치노선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왜곡·과장]

(7) 김일성의 무장유격부대는 「10대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북만의 김책(金策), 최용건(崔庸健) 등과 연계를 갖고 남만(南滿)의 양서봉(梁瑞鳳) 부대(‘조선혁명군’) 등을 “통합”하여 ‘조선인민군’으로 “무장 통일을 완수하였다.” [허언]

(8) 김일성의 항일 무장유격대는 “조선인민혁명군”으로써 일본군을 상대로 전투를 계속하였대왜곡. 그리하여 1937년 중-일 전선에서 적의 후방을 교란하였고, 1938년의 장고봉(張鼓峯) 사건에 뒤이은 노모한 사건에서 “장군”은 일제(日帝)의 소련 침공군(侵攻軍)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다고 했다. [과장]

여기서 북한의 역사가들은 김일성을 조선의 항일무장투쟁사에서 절세의 영웅적인 지도자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해방 전에 있는 두 개의 사실(史實)을 일관하여 왜곡 또는 날조해 왔다. 즉 하나는 1930년대에 그가 “동만항일유격대”와 “남만항일유격대”를 연합시켜 “조선인민혁명군”(“혁명적 무장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재만 한인] 조국광복회”(혁명적 정치단체)를 “조직”했다는 것을 일관하여 왜곡 주장해 왔다. 이렇게 인위적 방법에 의하여 꾸며진 “조선인민혁명군”과 “재만 한인 조국광복회”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김일성 우상화 선전의 초석이 되고 있다.

제2절 원형(原型) : 스탈린 개인숭배 공격

- 흐루시초프의 “비밀연설”

국제공산주의에서 개인숭배(personality cult)란 용어는 1956년 2월 소련 공산당 제20차대회에서 흐루시초프(Nikita Khrushchev)가 스탈린에 대한 개인 우상화에 대한 비판을 결행하고 나섰을 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된 정치용어이다. 개인숭배는 ‘중국공산당’에서는 처음에는 개인미신(個人迷信)이라고 번역했던 독특한 통치 스타일이다. 공산당에서 최고 지도자의 우상화 현상의 원형(原型)은 스탈린 시대에 형성되고 발전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는 세계의 모든 스탈린주의적 통치체제에서 불치의 풍토병처럼 되어 있었다. 개인숭배란 당의 최고 권력자에 대하여 신(神)에 대한 것과 유사한 인민들의 맹신-숭배-귀의(歸依)를 일상화하며, 최고 권력자는 이것을 이용하여 그들의 복종을 이끌어내는 통치 프로세스를 뜻한다.

개인숭배는 최고 권력자 자신과 그 심복들이 인위적 조작, 역사의 위조, 반대파의 숙청, 매스컴에 의한 광란적 선전 등, 이른바 ‘조신술(造神術)’을 통하여 최고 권력자를 신성불가침화하며 전지전능한 초인간적 존재로 만든다. 여기에 동원되는 수단은 연극, 영화, 음악회, 무용, 실험실, 신문사, 텔레비전, 체육경기, 각 급 학교와 대학, 각종의 기업체 등이다. 그중 정치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은 매스컴이다. 그러나 이것들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개인숭배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불복종자(不服從者), 이탈자들에 대한 폭력적 탄압이다. 그리하여 “스탈린 개

인숭배"라는 개념은 독재자의 신격화(神格化)운동 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수반되는 공포정치-범죄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북한의 개인숭배를 규명하기 위하여서는 소련 안에서 일어난 "스탈린 개인숭배"의 문제를 잠시 회고할 필요가 있다.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개인숭배에 대한 비공개적 비판의 막이 오른 것은, 1956년 2월 24~25일 한밤중에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그가 행한 세칭 "비밀연설"¹⁸⁴⁰⁾에서였다. 이 연설에서 그는 스탈린이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을 비(非) 법적으로 투옥하였으며 헌신적인 당 간부들을 처형한 잔악한 폭정, 1934년에 선출된 당 중앙위원회 3분의 2이상을 말살한 실례, 민중의 대량 숙청, 자기 자신에 대한 엄청난 우상화, 그의 난폭했던 성격, 독-소 전쟁 때 작전을 잘못 지휘하여 초래한 막대한 인명손실들을 폭로, 비판, 규탄했다.

또한 이 "비밀연설"은 1922년 12월 레닌이 당 대회에 보냈던 서한과 1923년 1월 호에 쓴 추신(追伸)에 의거하여 스탈린의 "자질의 부정적 측면"을 길게 설명했다.¹⁸⁴¹⁾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은 요컨대 살아서 신(神)의 지위에 올라있던 독재자를 사후에 무자비한 폭군으로 단죄한 것이었다. 한편 1959년 판 『소련공산당사』는 논조를 약간 약화시켜 소련에서 스탈린에 대한 개인숭배가 발생한 원인을, 첫째로는

1840) 흐루시초프의 「秘密演說」의 내용은 고르바초프가 등장할 때까지 30년 동안이나 러시아 내부에서는 활자(活字)로서는 발표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연설의 원문이 미국 국무성으로 넘어가 전문이 1956년 7월 《뉴욕 타임스》에 실려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드디어는 "사회주의 진영"의 神의 존재였던 최고지도자가 매장됨으로써 역사적 중-소분쟁이 일어나고 '진영'의 단결은 와해되어 단일적 국제공산주의 운동은 무산되고 말았다. 이 「비밀연설」은 Nikita S. Khrushchev, *The Crime of Stalin Era*라는 책제목을 붙인 소책자로 New Leader社 (July 16, 1956)에서 발행되었다. 연설의 한글 역은 이웅희 편역, 『흐루시초프 秘錄(2)』, 어문각, 1971년판의 부록에 들어있다.

1841) 흐루시초프는 레닌이 병석으로부터 1922년 12월 당 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스탈린 동지는 서기장(書記長)이 된 후 무한한 권력을 자기 손에 쥐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이 권력을 항상 아주 신중하게 사용할 수 있을런지에 대하여 믿을 수가 없다"고 한 경고를 인용했다. 그리고 레닌이 1923년 1월초의 「追伸」에서 "스탈린은 자질이 너무나 거칠고 난폭하여 서기장의 직책에 들 수 없으므로 그 보다 우수한 인물로 교체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던 레닌의 의견을 상기시켰다. 이 두 통의 레닌 서한은 스탈린 시대에 발행된 『레닌全集』에는 모두 빠져있었다. 레닌의 스탈린에 대한 냉엄한 비판을 입증하기 위하여 흐루시초프는 스탈린의 불관용성-변덕성-전제적 성격, 반대 의견을 가진 자에 대하여 휘두른 가혹한 폭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말살되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공개했다. 이 부분은 「개인숭배와 그 극복에 대하여」라는 1956년 6월 30일자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정서, 극동문제연구소 발행, 『原典 共產主義大系(下)』, 1984년, pp. 2,288~2,300에도 들어있다.

당시 소련이 처해 있던 가혹한 “특정의 구체적인 역사적 조건”에다 돌렸고, 둘째로는 “스탈린의 약간의 부정적인 개인적 자질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스탈린 개인숭배 발생의 원인을 위와 같은 소련의 “특정의 구체적 조건”이나, 스탈린의 “약간의 부정적 자질”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스탈린 개인숭배는 *레닌*이 사망한 후 경제정책 및 세계혁명 전략상의 대립과 얼크러져 일어난 착잡했던 당내 권력투쟁에서 스탈린이 승리를 거두고 있던 과정에서 촉진되었던 것이다.¹⁸⁴²⁾

아직 “개인숭배”란 용어조차 나오지 않고 있던 1943년 모스크바의 ‘*맑스-엥겔스-레닌 연구소*’는 국정 판 『스탈린 소전(小傳)』을 발행하였는데 그 결말에서 스탈린을 다음과 같이 우상화하였다.¹⁸⁴³⁾

…스탈린이야말로 당의 찬란한 지도자요 스승이며, 사회주의 혁명의 위대한 전략가 이시다. 사회주의의 적들에 대해서 용서가 없으며 주의(主義)에 대해서 신명을 다 바치며, 혁명에 대한 명석한 통찰력과 명확한 목표를 검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목적을 추구하는 데서 확고부동함과 강인성을 간직하고 있고, 총명하고 실제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며 대중과 친근하게 접촉한다. 바로 이것들이 스탈린 스타일의 특색이다. …스탈린의 전 경력은 심오한 이론적 분석력이 혁명투쟁에서의 폭넓고 다양한 실천적 경험과 결합한 실례이다.

1842) 스탈린이 1922년 ‘소련공산당’ 서기국의 서기장이란 지위에 올라 권력의 기반을 쌓기 시작하면서부터 당내에서는 권력투쟁이 벌어졌다. *레닌* 사망 다음해인 1925년 스탈린은 *카메네프*, *지노비예프*와 함께 ‘3頭연맹’을 형성한 후 자기의 최강의 정적인 *트로츠키*를 타도했다. 그런데 그 후 곧 정세가 바뀌어 *트로츠키*와 결탁한 *카메네프*, *지노비예프* 등이 스탈린에 대하여 ‘신 반대파’를 형성하자 스탈린은 *부하린*, *퀴프*, *뭉스키* 등 소위 ‘우익적 반대파’(또는 ‘우익 항복주의파’)를 이용하여 그들을 격파했다. 이렇게 ‘신 반대파’가 무너지자 이번에는 쉽사리 ‘우익적 반대파’를 격파할 수 있었다. 스탈린에 의하여 타도된 10월혁명의 원훈(元勳) 중 *트로츠키*는 당적을 박탈당한 후 1929년 국외로 추방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 소련 내에 그대로 살아남아 있었다. 그런데 1930년 후반 3차에 걸친 정치재판에서 *카메네프*와 *지노비예프*(처형일자 1936년 6월), *트로츠키*派였던 *백야다코프*와 *라테크*(처형일자 1937년 1월), 우익적 반대파의 *부하린*과 *퀴프*(처형일자 1938년 8월) 등은 모두 ‘제국주의의 간첩’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 처형했다. 이어 1940년 10월 *트로츠키*는 망명지 *멕시코*의 자택에서 스탈린이 보낸 자객에 의하여 참살되었다. 이 과정에서 스탈린의 1인 독재 체제는 철벽같이 구축되어 갔으며 그의 권력을 정당화하고 예찬하는 개인숭배의 풍조가 엄청나게 강화되어 갔다.

그러나 *호루시초프*는 스탈린 격하운동의 막을 올렸지만 당 내에 남아있는 스탈린 옹호자들과 *東유럽* 내 스탈린주의자들의 견제 때문에 회생된 혁명 원훈들의 명예회복을 단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비교적 하위급 인물로 추정되는 7,687명만을 스탈린 비판 기사(1956. 2) 이전에 복권시켰다고 한다.

1843) 이 구절은 Frederick L. Schumuan, *Soviet Politics-At Home and Abroad*, Alfred, A. Knoff, 1948, p. 208에서 인용

『소전』(小傳)은 또한 스탈린의 “설득력 있는 불패의 논리”, “대중에 대한 열렬한 신뢰”, “인민에 대한 애정” 등을 예찬하면서 아래와 같이 맺었다.

… 스탈린은 오늘의 레닌이다. 스탈린의 이름은 소비에트 인민의 용기의, 영예의 상징이며, 소비에트 인민을 새로운 광희(狂喜)의 위업으로 부르심이다. … 스탈린의 이름은 소비에트 사회의 정치적 단결 이상의 것의 상징이다. …

흐루시초프 사망 후 미국에서 출판된 그의 『회고록』(1990)에서 증언하기를 스탈린 자신의 말을 들어도 “인민의 적”이라는 낙인이 찍혀 비밀리에 체포 총살되는 일이 날마다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거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당시에 믿기로는] 스탈린이 하는 말은 모두가 옳았다. 그것은 천재의 말이었다. 그가 하는 말은 혁명을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그리고 그 밖의 무엇이든지 중요한 일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뿐이었다”고 그는 술회했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스탈린이 죽었을 때 소련에는 글자 그대로 100만명의 경찰 스파이가 있었다. 한 명의 스파이가 다른 한명의 스파이를 감시하고 보고한다. 사람들은 스파이가 되면, 어떤 활동을 하여 스스로의 존재를 정당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상부에 보고했다. 결과로 모든 일에 관하여 「보고」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죄수들이 형무소에 넘쳐난 데다 모든 스파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다”고 흐루시초프는 회고했다.¹⁸⁴⁴⁾ 최고 권력자의 신비화와 인민에 대한 폭압 장치가 표리관계를 이룬 개인숭배의 작풍은 처음에는 소련 내에 국한되었다가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소련의 동(東)유럽 및 아시아의 소련위성국들로 이식되어 극히 중요한 통치 시스템으로 발전하였다.

스탈린은 동(東)유럽과 북한을 위성국화(衛星國化)하여 지배하는 방식으로, 첫째로는 자신이 파견하여 권력을 쥐어준 지도자들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소련식 개인숭배를 인위적으로 그곳에 이식(移植)하고 조성했다. 김일성은 바로 그런 위성국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다. 다음으로는 공산권 내의 관계에서 모스크바의 통제를 일사불란한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사회주의진영” 안에 인공적인 개인숭배의 사다리를 만들었다. 즉 공산권 내에서 개인숭배 사다리의 정상에 앉은 스탈린은 낮은 가로대

1844) Khrushchev Remembers(The Glasnost Tapes), 1990, Jerrold Schester, pp. 39~40

(段)에 앉은 위성국의 독재자들을 지배했다. 그리고 이들 위성국 독재자들은 스탈린의無比(無比)의 권력과 신임에 의지하여 자국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숭배 사다리의 정상을 차지하고 인민들을 통치했다.

1956년 가을 스탈린 격하(格下) 운동이 전 공산권을 휩쓸고 있던 격동 속에서 한 때 감옥에 있다가 권좌에 복귀한 ‘폴란드 노동당’ 제1서기 고물카(Wladyslaw Gomulka)는 그 해 10월 20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개인숭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극히 명석한 설명을 하였다.

… 개인숭배는 소련에 널리 퍼져 있던 것으로서, 생각건대 각국 공산당에 이식(移植)된 하나의 제도다. 이 제도의 본질은 각개의 위계적(位階的)인 개인숭배의 사다리를 만들어 냈다는 사실에 있다. …사회주의 권내에서는 이 위계적인 개인숭배 사다리의 정상에 자리를 잡은 사람은 다름 아닌 스탈린이었다. 이 사다리의 보다 낮은 가로대에 자리를 잡은 사람은 누구나 스탈린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이렇게 머리를 조아렸던 사람들 가운데는 소련공산당 내의 여러 지도자들과 소련정부 내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공산당 및 노동당의 모든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후자, 즉 개인숭배 사다리의 두 번째 위계를 차지하고 있던 여러 나라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서기들은 그들대로 무오류(無誤謬)와 지혜의 법의(法衣)를 걸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개인숭배가 빛을 방사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그들이 …개인숭배 사다리의 정상을 차지하고 있던 자기 나라 영토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 개인숭배는 반사된 광휘(光輝)요, 빌려온 빛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마치 달이 해를 반사하여 빛을 발(發)하는 것처럼 빛을 발했던 것이다.¹⁸⁴⁵⁾

이상과 같이 김일성 개인숭배는 스탈린의 방식대로 진행되었으며 그가 발(發)하는 개인숭배의 빛은 마치 달이 해를 반사하여 빛을 발하듯이 스탈린의 광휘를 빌려북한 땅에 반사하고 있었던 데에 지나지 않았다.

1845) 《노예 드로가》지, Robert A. Daniels(ed), 「A Documentary History of Communism」, Vol. 2,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1984, p. 231에 수록

제3절 모택동(毛澤東) 개인숭배의 비판

- 등소평의 “역사결의” 방식

한편 중국은 소련의 위성국은 아니었지만 모택동은 스탈린주의적 방식에 따라 사회주의 건설에 착수하고 있었고, 흐루시초프의 대(對)서방 평화공존 정책과 의회를 통한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흐루시초프 수정주의” 노선에 반대하고 있었다. 또한 스탈린식 개인숭배를 중국 안에서 강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탈린의 과오를 부분적으로 시인하면서도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운동에는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¹⁸⁴⁶⁾ 이러한 국내적-국제적 압력 하에 일종의 타협적 고려에서 소련공산당 중앙위는 56년 6월 30일 정치 「결정서」를 채택했을 것이다. 그 후에도 스탈린의 영예는 중국-알바니아-북한 등에서 자당(自黨) 내의 개인숭배의 유지 강화와 “수정주의”에 대한 투쟁을 위하여 전략상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밖의 공산당 국가와 각국 공산당 내에서는 스탈린의 권위는 곧 소멸되어 갔다.

중국에서 모택동이 사망한 것은 1976년 9월 9일이었지만 그의 독선-1인 전제-실정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요했다. 당의 제2인자였던 유소기는 「문화대혁명(「문혁」文革)」의 박해 속에서 1969년 11월에 사망했고 주은래와 주덕(朱德) 등 원로들은 모택동에 앞서 세상을 떠났으며 등소평은 1976년 4월의 제1차 천안문사건 때 모택동에 의하여 축출된 후 연금 상태에 있었다. 이런 가운데 당 주석의 지위는 모택동의 총애를 받고 있던 신진 화국봉(華國鋒)에게 넘어갔고 당 중앙위원회 안에서는 모(毛)의 맹신자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숙청에서 겨우 살아남은 등소평(鄧小平)은 굴욕을 참고 두 차례나 화국봉에 아첨하는 편지를 당(黨) 중앙에 보냄으로써 화국봉과 타협하여 재부활의 길을 찾았다. 그리하여 1977년 7월 당 10기 3중전회(中全會)에서 당(黨) 부주석-국무원 부총리-군총참모장이라는 옛 지위를 모두 회복하면서 부활했다.

등소평의 목표는 자기를 실각시켰던 「문혁」을 전면 부정하고, 유소기(劉少奇)를 비롯한 「문혁」의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모택동이 파국으로 몰아넣었던 정

1846) 「개인숭배자 그 결과의 극복에 대하여」라는 이름으로 된 장문의 「결정서」 전문은 「原典 共產主義 大系-理論과 批判」(F), 1985년, 극동문제연구소 편찬, pp. 2288-2301에 수록.

제를 재건하여 숙망의 4개 현대화를 실현하는 일이었다. 모택동 격하를 뜻하는 그런 목표는 당내의 '문혁출세파'들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인내와 신중과 절묘한 정치수완으로 자기의 권력기반을 강화하면서 드디어 모택동 비판을 단행했다. 모택동에 대하여 당이 우여곡절을 거친 후 최종평가를 내린 것은 1981년 6월 당 제11기 6중전회가 채택한 「건국이래의 당의 약간의 역사적 문제에 관한 결의」(이하 역사결의(歷史決議))에서였다. 「역사결의」는 1957년 이후 모택동이 사망할 때까지의 그의 지도상 과오에는 복잡한 사회적-역사적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상세히 분석했다. 중공당의 「역사결의」는 앞에서 언급한 '소련공산당'의 「결정서」와 스탈린 비판의 여파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작성했을 것이다. 「역사결의」에서 단행한 모택동 비판은 1957년 여름이래의 그의 지나친 '반(反)우파투쟁'(1847), 1958년 여름부터 강행된 인민공사-대약진운동(1848), 특히 1966년 5월부터 10년 동안 중국대륙을 광란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문혁'(1849)에다 중점을 두었다. 한편 그 이전의 합의

1847) 「歷史決議」는 '반 우파투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1957년은 경제 사업에서 건국 이래 최고의 성과를 거둔 해였다.…整風 [1957년 4월에 있는 百花齊放, 百家爭鳴]의 과정 중 극소수 부르조아 우파분자들은 이 기회를 타고…黨과 신생 사회주의 제도를 제멋대로 공격하고 공산당의 지도를 바꿔치우려고 했다. 이러한 공격에 단호히 반격을 가한 것은 아주 정확하고 필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反우파투쟁이 심각하게 확대되어 다수의 지식분자, 黨外 인사와 당내 간부들을 잘못 '우파분자'로 단정해버린 것은 不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고 黨8期 8中全會가 彭德懷 등을 "反黨집단"으로 몰아부친 결의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반 우파투쟁 때문에 "정치면에서는 중앙에서 말단에 이르기까지 당내 민주주의는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경제면에서는 '좌경적' 과오를 시정하는 과정이 중단되어 과오가 오래 연장되었다"고 지적하였다. 「關於建國以來黨的若干歷史決議」(1981. 6. 27). 《紅旗》1981年 第13期, pp. 10~11. 「歷史決議」의 한국어 全譯은 앞의 『原典共產主義大系』(下), pp. 2301~2333에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원문에서 인용하기로 한다.

1848) 경제건설에서 毛澤東이 인민공사-대약진 운동에서 범한 "左的 過誤"에 대한 「역사결의」의 비판은 신랄했다—"…모택동 동지를 비롯한 중앙과 黨의 적지 않은 지도자들이 [1957년까지의] 승리 앞에 오만하고 우쭐해지고, 공을 서두르고, [인간의] 주관적 의지와 주관적 노력의 작용을 과대평가하고, 진지한 조사연구와 시험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1958년 5월 사회주의] 총 노선이 제출되자 곧 경솔하게도 소위 대약진운동과 농촌의 인민공사화 운동을 일으켰던 때문에 높은 지표, 마구잡이 지휘, 허풍, '共產風' 등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는 좌경적 과오가 심각하게 팽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같은 《紅旗》, pp. 10~11.

1849) 「歷史決議」는 "문화대혁명"에 의하여 黨과 국가와 인민은 건국 이래로 가장 심각한 좌절과 손해를 입었다"고 논단하고, "문화대혁명"은 영도자 [毛澤東]이 잘못 일으키고, 反혁명집단 [林彪와 4人幫]에 이용되어 黨, 국가, 각 민족 인민에게 심각한 재난을 갖다 준 내란"이었다고 정의했다. 같은 책, p. 13. 이어 '역사결의'는 劉少奇에 덮여죄워진 '반역자', '적의 첩자'(內奸), '노동귀족'(工賊)이란 것은 임 표, 江 青의 모함이라고 유소기의 冤罪를 사후에 씻어주었다. 같은 책, p. 13.

노선, 즉 모택동이 '과도기의 총 노선'¹⁸⁵⁰⁾(1954년 채택)은 "전적으로 옳은 것¹⁸⁵¹⁾"였다고 여러 실례를 들어 그것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의 실책을 아울러 지적했다. 전지전능한 신으로 절대화 되었던 모택동이 그의 만년에 저지른 과오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위의 「역사결의」는 "소련 수정주의"와 "패권주의(霸權主義)"와의 투쟁에서 모택동은 계급투쟁을 지나치게 확대하게 되었다고 중국혁명의 환경조건을 내세웠다.¹⁸⁵²⁾

모택동은 이러한 계급투쟁의 확대화(擴大化) 때문에 "당 내 동지들의 부동한 의견을...수정주의의 표현으로 간주하여" 그들을 억압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권력이 지나치게 모택동 개인에게 집중하게 되어 "당 내에는 개인의 전단 독단(獨斷)과 개인숭배의 현상이 자라나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된 근본원인을 중국의 "장기간에 이르는 봉건적 전제주의가 사상정치에 미친 해독" 때문이라고 "사회적-역사적 조건"에다 돌렸던 것이다.¹⁸⁵³⁾

「역사결의」는 등소평 파가 설정한 비판기준에 따라 모택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

또한 「歷史決議」는 모택동이 4인방으로 하여금 中共의 권력의 대부분을 장악해 했다고 비판하고 그 결과 "모택동 동지의 개인적 영도 [독재]가 黨中央의 집단적 지도에 대신했고 모택동 동지에 대한 개인숭배가 열광적으로 고취되었다"고 분석했다. 요컨대 "문혁"은 그 실천이 증명하고 있듯이 "어떤 의미에서도 혁명 또는 사회적 진보가 아니었으며 그렇게도 될 수 없었다"고 "문혁"을 가장 철저하게 부정했다. 같은 책, p. 14.

1850) 1953년 8월 毛澤東은 '과도기의 총 노선'을 다음과 같이 定式化했다. -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한 이후부터 사회주의적 개조가 기본적으로 이룩될 때까지 이것은 하나의 과도기다. 이 과도기에 있어서의 黨의 총 노선과 총 임무는 상당히 긴 기간 안에 걸쳐 나라의 공업화와 농업, 수공업, 자본주의적 상공업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집단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毛澤東選集』(中文版), 第五卷, 北京, 1977年, p. 890.

그는 1953년 9월 7일에는 "과도기 전체의 완결, 즉 사회주의적 개조를 기본적으로 완성하기까지에는 3년, 5년으로는 안되며 몇 개의 5개년계획이 필요하다. 이 문제 있어서 그것을 아득히 먼 앞날의 일이라고 보는 생각에 반대하는 동시에 조급하게 폭주하려는 생각도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진술했다. 같은 책, p. 100. 그런데 모택동은 곧 방침을 바꾸어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개조"(집단화)를 강행, 1956년 말까지에는 이것을 거의 끝내고 1958년부터는 사회주의 건설에로 맹진했던 것이다. 「역사결의」에 따르면 모택동은 이때부터 큰 오류를 범한 것이다.

1851) 앞의 《紅旗》誌, p. 16. 그러면서도 1955년 여름이래로 농업, 수공업,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에서 "너무나 공을 서두르고, 사업이 지나치게 조잡하고, 변혁의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고, 형식 또한 지나치게 단순하고 획일적이었음으로 장기간 몇 개의 문제점을 남기게 되었다"고 결함을 지적했다.

1852) 같은 책, p. 16.

1853) 위와 같음.

고 매도함으로써 그를 중국공산당사에서 매장해버리는 방법은 절대로 회피했다.¹⁸⁵⁴⁾ 이것은 소련공산당의 「개인숭배와 그 결과에 대한 결정」이 스탈린 비판에서 그가 당(黨), 인민, 국가 및 국제노동운동에서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고 그의 범죄를 단지 잘못된 권력남用に 돌린 것과 유사했다. 다만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평가에 비하면 모택동의 공적을 높이 찬양한 점에 차이가 있었다. 그리하여 「역사결의」가 내린 최종적 평가는 “모택동 동지의 과오는 중국적으로는 한 위대한 프롤레타리아 혁명가가 범한 과오”¹⁸⁵⁵⁾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논단하였다.

모택동 동지는 위대한 맑스주의자며, 위대한 프롤레타리아 혁명가, 리론가다. 모택동 동지는 10년에 이르는 ‘문화대혁명’에서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고 해도 그의 일생에서 볼 때 중국 혁명에 대한 그의 공적은 제1위적이며 과오는 제2위적이다.¹⁸⁵⁶⁾

모택동이 1958년 이후 실천에 있어서 결정적 오류를 범하였다면 여태까지 절대적 진리로 숭앙되어온 “모택동사상”도 결국은 오류였고, 허위였던가. 등소평 휘하의 이론가들은 몹시 고심한 끝에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렸다. —“모택동사상이란… 맑스-레닌주의의 중국에 있어서의 적용과 발전이요, 실천에 의하여 입증된 중국혁명에 관한 정확한 이론적 원칙과 경험의 총체이며, 중국공산당의 집단적 지혜의 결정(結晶)이다”라고. 그리고 “우리 당의 다수 뛰어난 지도자들이 모두 그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했으며 모택동 동지의 과학적 저작은 그 집중적 개괄”¹⁸⁵⁷⁾이라고 했다. 요컨대 “모택동사상”은 모택동 개인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중국공산당의 “집단적 지혜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모택동의 개인적 과오를 “모택동사상”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모택동사상”에 의하여 지도되어온 당과 국가의 정통성을 훼손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등소평 체제가 내린 교묘한 정치적 해석이었다.

1854) 鄧小平은 논하기를 “모택동 동지가 범한 … 모든 오류에 대해서는 조금도 예매함이 없이 비판하여야 한다 … [그러나] 모택동 동지는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서거하는 날까지 줄곧 우리 黨의 영수였다. 모택동 동지의 오류에 대해서 지나치게 써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쓰게 되면 모택동 동지에도 먹칠을 하게 되며 우리 黨과 우리나라에도 먹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鄧小平文選一九七五—一九八二年』(中文版), 北京, pp. 265~266.

1855) 같은 책, p. 14.

1856) 같은 책, p. 19.

1857) 위와 같음.

그런데 「역사결의」가 채택되기 전인 1980년 10월 25일 전국 당교(黨校) 중국공산당사학토론에서 여개룡(廖蓋隆)(당중앙 당사연구실 부주임)이 당 내부용으로 「보고」를 했다. 이 「보고」는 아직 모택동 비판이 당중앙위원회가 설정한 한계에 의하여 구속을 받지 않았던 때의 것이므로 훨씬 신랄하고 심층적이었다. 이 「보고」에서 그는 모택동이 내세운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란 “과학적이 아니라 공상적”이었으며 “농민의 좌경적 공상적 평균주의의 사회사상”, 즉 “소(小)부르조아적 절대 평균주의적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평했다.¹⁸⁵⁸⁾ 그는 “「문화대혁명」을 본질적으로 잘못된 큰 재난, 암흑”이라는 표현으로 요약하고, 모택동이 소련 “패권주의”를 단호하게 물리친 “역사적 공적”을 인정하면서도 그를 스탈린의 제자-계승자라고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 한편 모택동 동지는 당과 국가의 권력을 개인에게 집중시키는 소련의 제도, 스탈린의 개인적 전단 독단, 개인숭배의 방법을 배우고 계승했다. 그리하여 당내 민주주의도 인민민주주의도 파괴되었기 때문에 「문화대혁명」을 일으킨 한 원인을 발생케 했다.¹⁸⁵⁹⁾

4인방이 체포되고 「역사결의」가 나오기 얼마 전까지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북경의 봄”은 찾아왔다. 대도시에서는 모택동과 그의 비호를 받아 득세한 ‘4인방’-화국봉을 비난하는 대자보, 민간(民刊)(당이 아닌 민간인의 간행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것은 당 밖에서 일어난 지식인들의 밑으로부터의 모택동 격하운동이었다. 그 논조는 처음에는 「문혁」비판, 모택동에 대한 부분적 비판, 주은래-등소평 옹호에서 시작하여 모택동에 대한 전면적 비판, 공산당체제 부정, 구미식 민주주의의 요구로 격렬해졌고, 분석은 예리했다. 이것들은 모택동을 현대의 “진시황(秦始皇)” 또는 “봉건적 파시스트 전제자(專制者)”로, 그리고 모택동 체제를 “진시황 전제국가체제”에 비유하면서 그에 대한 “개인미신”과 “우상숭배”를 “민주의 대적”, “과학의 대적”이라고 공격하

1858) 「歷史的經驗和我們的發展道路」. <匪情日報>, 제24권, 제2기,臺北, p. 97. 이 「보고」는 중국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中國共產黨 내 급진적 개혁파들의 사상-이론을 천명한 이 논문의 내용은 극히 중요하다. 그런데 중국 대륙에서 발행되지 못하였던 이 논문이 臺灣에서 발표되어 햇볕을 보게 된 것은 아주 다행한 일이다.

1859) 같은 책, p. 98.

는가 하면, 우상주의를 역사에 역행하는 “반 과학, 반 진리, 반 인민”적 현상으로, 모택동의 이론을 “조정에 앉은 신의 가르침”이라고 비꼬았다.¹⁸⁶⁰⁾

대자보-민간물들에서 청년 지식인들은 자유-평등-인권-법치주의 등의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로 순교자적 신념에서 토로했다. 이와 함께 문단에서는 「문학」의 박해와 인간의 정신적 상처, 당 간부들의 특권과 부패를 소재로 한 문예작품과 철학논문이 쏟아져 나왔다.¹⁸⁶¹⁾ 그런 청년 지식인들 중 가장 저명한 논객은 홍위병 출신의 위경생(魏京生) (필명은 김 생 金 生)이었다. 그는 등소평이 내세운 4개 현대화에다 “민주화”를 첨부하여 “5개의 현대화”를 주장하고¹⁸⁶²⁾ “어떤 형식의 독재와 전체적 집권주의도 모두 인민에 있어서는 가장 직접적인 그리고 위험한 적”¹⁸⁶³⁾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떡을 그려놓고 주린 배를 채운다”는 중국의 속담을 들어 공산주의의 이상이란 속임수로서 “벽에 그려놓은 떡”에 비유하면서¹⁸⁶⁴⁾ 4개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공산주의의 천국에 다다르게 한다는 등소평의 주장을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그런 종류의 정치 사기꾼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¹⁸⁶⁵⁾고까지 극언했다.

공산당의 1당(黨)지배체제에 도전하는 이런 극단론을 등소평이 그대로 방치해 두지는 않았다. 중국판 현대 계몽주의 사상운동으로 평가를 받아 마땅한 지식인들의 모택동에 대한 전면적 격하운동은 곧 호된 억압을 받게 된다. 공산당의 지배체제를 위협하는 사상적-정치적 혼란 상태에 위기의식을 느낀 등소평은 1979년 3월 30일 “4개의 기본원칙”, 즉 (1) 사회주의의 길의 견지, (2)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의 견지, (3) 공산당의 지도의 견지, (4) 마스-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의 견지를 제시하고¹⁸⁶⁶⁾

1860) 1978년 11월 24일자 천안문 역사박물관 앞의 대자보 「啓蒙社設立宣言」, 『北京之春 1978-1979』, 1983년, 臺北, pp.60-61 참조.

1861) 1976년-80년 사이에 출판된 대표적 작품으로는 劉心武의 『學級擔任』(1977), 廬新華의 『傷痕』(1978), 巴金的 『隨想錄』(1978), 白樺의 『苦戀』(1979), 劉賓雁의 『人妖사이』(1979), 그리고 長詩 葉文福의 『將軍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1979), 陳世旭의 『작은 마을의 將軍』(1979) 등을 들 수 있다. 그중 白樺, 葉文福, 劉賓雁은 그들의 작품 때문에 각각 黨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1862) 魏京生, 「다섯 번째의 현대화-민주와 기타」, 이 논문은 《問題と研究》誌, 1982년 1월호~3월호, 〈中國資料〉欄에 수록되어 있다.

1863) 같은 책, 1982년 1월호, p. 93.

1864) 같은 책, 1982년 3월호, p. 92.

1865) 같은 책, 1982년 1월호, p. 88.

1866) 앞의 『鄧小平文選』, p. 151.

누구나 이 4개 원칙을 뒤흔들려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¹⁸⁶⁷⁾고 선언했다.

등소평은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 중국공산당의 지배를 반대하며 시위에 나선 민주파(民主派)들에 대해 “중국인민에게 요구되는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즉 인민의 민주주의며 *부르조아* 계급의 개인주의적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누구도 넘어서는 안 될 사상의 벽을 쌓았다. 그리고 위의 “4개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서 추상적으로 민주주의를 공론한다면 반드시 극단적 민주주의와 무정부주의가 크게 범람하여 안정 단결이란 정치적 국면은 철저히 파괴될 것이며 4개 현대화가 철저히 파괴될 것”¹⁸⁶⁸⁾이라고 비난했다. 이렇게 경색된 분위기속에서 위정생은 1979년 10월 체포되어 15년 형을 선고받았고 12월에는 북경 서단(西單)의 “민주벽(民主壁)”은 폐쇄되었다. 이렇게 하여 짧은 “북경의 봄”은 뒷서리를 맞고 사라졌다.

1867) 같은 책, p. 159. 鄧은 *호루시초프*처럼 *스탈린* 사후 대규모의 “*스탈린* 격하운동”을 일으키는 일이 없이, 갖가지 방법으로 모택동 비판을 일정한 범위 내에다 제한했다. 그러나 “모택동 격하운동”을 억압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 만년에 이르러 이 운동은 형태를 바꾸어 출현했다. 즉 “모택동의 어떤 면은 칭찬을 받고, 다른 면은 다시 대규모의 심각한 폭로와 공격을 받았다”고 嚴家祺·高舉는 평하고 있다. 嚴·高의 『文化革命十年史』下, 岩派書店, 1997년, p. 267.

1868) 같은 책, pp. 162~163.

제2장

개인숭배 공방(攻防)속의 소용돌이

— 모스크바와 북경(北京)의 대 숙청극

제1절 해빙과 결빙

호루시초프가 스탈린의 폭정을 가차없이 비판한 제20차 당(黨)대회 후 소련 당국은 800~900만 명의 정치범을 복권시켰다. 이로써 그는 스탈린의 피해자들로부터 영웅시되었다. 그러나 그는 국제공산주의운동에 파란을 몰고왔다. 1956년 10월에는 폴란드에서 반(反)스탈린주의 정변이 일어났고 10월~11월에는 헝가리의 반(反)소-반공(反共)동란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소련공산당'내에서 스탈린 격하에 반대하여 호루시초프 타도를 모의하고 있던 몰로토프, 까가노비치, 말렌코프, 보로실로프, 그리고 이들에 가담한 셰필로프(Dmitri Shepilov, 외상 역임) 등이 당 중앙위원회에서 거꾸로 "반당집단"으로 몰려 1957년 6월 당(黨) 간부회의에서 축출되고 그 정부 국가의 모든 요직으로부터 해임되었다.¹⁸⁶⁹⁾ 그러나 스탈린 시대와는 달리 패배자들은 처형되거나 강제노동수용소로 끌려가지는 않고 말단이나마 직장을 얻을 수가 있었다.¹⁸⁷⁰⁾ 이로써 스탈린 시대의 끔찍한 강제 자백, 유혈숙청의 역사는 소련에서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1869) 이 소위 "反黨集團"은 호루시초프와 함께 당 중앙위 간부회 멤버였지만 호루시초프의 경제개혁 정책에 대하여, 특히 몰로토프는 그의 외교정책에 대하여 완강히 반대하였으며 종파를 조직하여 호루시초프를 당 지도부에서 제거하려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반당집단"이라는 상투적인 낙인이 찍혀 추방되었지만 "反國家集團"으로는 몰리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호루시초프派의 단죄 내용은 1957년 6월 29일자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의 「On the Anti-Party Group of G. M. Malenkov, L. M. Kaganovitch and V. M. Malenkov」 참조. Robert V. Daniels(ed) *A Documentary History of Communism*, Vol. J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1984, pp. 333~336, pp. 263~265에 수록.

1870) 몰로토프는 몽골(蒙古) 대사에, 말렌코프는 지방 발전소 소장에, 까가노비치는 공장장에, 그리고 셰필로프는 교육연구소 강사로 추방되었다. 1957년 6월의 "反黨集團" 추방에 관해서는 앞의 Roy Medvedev의 책, pp. 113~120참조.

이렇게 소련 안에서 “반당집단”이 몰락한 후에도 스탈린 문제는 계속 국제공산주의운동 내에서 큰 논쟁거리가 되었다. 스탈린의 전면적 격하를 반대하는 북경과 모스크바 사이에서 분쟁이 절정으로 치솟고 있던 1961년 10월 소련공산당 제22차 대회가 열렸다. 대회에서 흐루시초프는 스탈린 개인숭배를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맹렬히 비판하고 중국공산당을 지지하는 알바니아를 맹공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모택동을 공격했다.¹⁸⁷¹⁾ 그러나 중공대표 주은래는 대회장을 떠나 귀국했다. 대회 후 스탈린의 시체는 *레닌* 묘로부터 이장되었고 지금은 그의 조그마한 동상이 *크렘블린* 언덕 위에 많은 당 간부들의 동상과 함께 초라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다.

이와 함께 스탈린의 다른 동상들은 전국에서 철거되고 공공시설과 도시에 붙었던 그의 이름은 모두 사라졌다. 이런 정치상황 속에서 출판된 것이 소련 내 강제노동수용소 생활을 처음으로 폭로한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1962)였다. 그러나 흐루시초프는 여러 외국공산당들의 압력과 스탈린 비판 후에 일어난 동(東)유럽의 혁명적 사태에 대한 비판에 부딪혀 보수적으로 되어갔으며 더 이상 스탈린의 범죄를 거론하지 못하게 됐다. 따라서 스탈린에 의하여 무고하게 처형된 *부하린*, *지노비예프*, *까메네프*, *뤼쾨프* 등의 국가반역의 죄명은 좀처럼 벗겨지지 않았다. 이들의 명예회복은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지 3년 5개월이 되는 1988년 8월까지 기다려야 했다.

독재국가에서 정치의 “봄”을 예고하는 제비는 흔히 문예의 자유화의 바람을 타고 날아온다. 스탈린 사망 후 문예면에도 “해빙”(解氷)의 징조가 보이자 *소비에트* 체제를 신랄하게 비판한 *두진제프*(Vladimir Dudintsev)의 소설 『*팽 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1956) 등이 위의 *솔제니친*의 단편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에 앞서 출판될

1871) 소련공산당 제22차 대회는 약 4,800명의 자국당대표와 80개의 해외 형제당대표, 그밖에도 몇몇 아프리카나라들의 비공산주의 정당 대표가 내빈으로 참가한 대규모의 대회였다. 대회에서 진술한 「보고」에서 흐루시초프는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과시하고, 中共黨을 지지해온 ‘알바니아 노동당’의 개인숭배를 공격하는 형식으로 중국공산당에 대해 거듭 *이데올로기* 공세를 폈다. 대회는 소련공산당의 「신 강령」을 채택하였는데, “20세기의 공산당선언”이라고 자랑한 이 「신 강령」은 1970년까지 소련은 1인당 생산에서 미국을 따라잡고, 1980년까지는 공업-농업의 높은 생산성을 기초로 하여 공산주의 사회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공산주의 건설의 청사진을 그린 허황하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흐루시초프의 「보고연설」 英譯 초본은 Alexander Dallin(ed), *Diversity in International Communism : A Documentary Record, 1961~1963*, pp. 4~45에 수록.

수 있었다. 그러나 “해빙기”는 얼마 후 다시 결빙기(結氷期)로 바뀌었다. 두진제프의 작품은 “반(反)소적”이라는 낙인이 찍혔으며 *빠스페르나크*의 『의사 지바고』는 소련에서 출판이 금지되어 결국은 외국에서 출판(1957)되었다. 저자는 1958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지만 당(黨)의 강압에 의하여 수상을 거절해야 했다.

한편 중국공산당의 모택동 우상 해체운동은 소련공산당의 스탈린 격하운동과 유사한 권력투쟁을 거쳐야 했지만 그 과정은 훨씬 더 복잡하고 극적이었다. 당 제1부 주석과 국무원 총리직을 겸하고 있던 화국봉(華國鋒)은 왕동흥(汪東興), 진석연(陳錫聯), 기등규(紀登奎), 오 덕(吳 德) 등 노 간부들의 협력을 얻어, 모택동이 숨을 거둔 지 한 달이 되는 1976년 10월 ‘문혁’ 좌파로 알려진 왕홍문(王洪文)－장춘교(張春橋)－강 청(江 青)－요문원(姚文元) 등의 “4인방”(四人邦)을 포함한 30여명을 전격적으로 일망타진했다. 화국봉 등은 ‘문혁’ 우파로 알려진 ‘문혁’ 수혜자(受惠者)들로서 모택동 절대 지지자였다. 4인방 체포사건은 스탈린 사후 말렌코프, 몰로토프 등이 공모하여 *베리야*를 기습 체포했던 사례와 흡사했다. 4인방을 제거한 화국봉은 당주석(黨主席)과 당군사위원회(黨軍事委員會) 주석에 선출됨으로써 당－정－군의 정상을 차지하였다.

화국봉은 ‘문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택동의 총애를 얻어 벼락출세를 했기 때문에 모택동의 신격화된 권위와 ‘문혁’노선을 모(毛)의 사후에도 끝까지 옹호하면서 그의 절대 권위를 빌어 자기 권력의 정통성을 비호하려고 했다.¹⁸⁷²⁾ 이 점에 있어서 그는 흐루시초프와 달랐다. 화국봉은 등소평이 복권될 때까지 계속하며 그의 소위 “우경변 안풍(右傾翻案風)” 당(黨)의 기본노선을 뒤집어엎고 자본주의의 방향으로 끌려가려는 풍조)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등소평이 부활된 직후에도 화국봉은 ‘문혁’ 10년의 재앙에 대한 책임을 모두 “악당 4인방”에 뒤집어씌움으로써 ‘문혁’의 위망(威望)이 손상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¹⁸⁷³⁾

1872) 1976년 10월 24일 북경시 혁명위원회주임(시장) 吳 德은 4인방의 분쇄와 華國鋒의 黨주석 및 당 군사 위주석 취임을 축하하는 北京百萬軍民慶祝大會에서 다음과 같이 연명했다.

“...화국봉 동지는 위대한 모택동 동지가 친히 택한 후계자다. [1976년]4월 30일 毛”주석은 또한 친히 화국봉 동지에게 “자네가 일을 처리하면 나는 안심 일세”(你辦事我放心)라고 써서 화국봉 동지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표시했다...투쟁의 실천은 毛주석의 생전의 결정이 얼마나 영명했는지를 입증하고 있다. 毛주석의 사업에는 후계자가 있으며, 우리 黨은 자신의 지도자 華주석을 가지게 된 것이다. 吳 德 同志「在首都慶祝上的講話」, 《紅旗》, 1976년 제11기, p. 18.

화국붕과는 반대로 등소평의 전략은, ‘문혁’을 철저히 부정함으로써 ‘문혁’의 참혹했던 재앙을 제거하고, 현실주의적 경제정책에 의하여 대약진-인민공사운동에 의하여 파괴된 경제를 재건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전략은 곧 이 운동의 창시자 모택동 비판을 노린 것이었다.

등소평의 모택동 비판은 당내에서 완강히 뻗치고 있던 ‘문혁’수혜자들을 그대로 두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소련공산당’ 안에서 스탈린 비판문제를 놓고 흐루시초프 파와 말렌코프 파 사이에 권력투쟁이 일어났던 것처럼 ‘중국공산당’ 안에서는 등소평 등의 개혁파와 화국붕 주석 등 보수파 사이에서는 모택동 비판문제를 놓고 탈권(奪權) 투쟁이 벌어졌다. 등소평의 모택동비판 투쟁은 (1) 이데올로기의 면(‘문혁’의 철저한 부정), (2) 당(黨) 인사(人事)개편의 면(‘문혁’피해자의 부활), (3) 경제정책의 면(실리주의적 노선으로의 대전환)에서 인내성 있게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그는 1977년 12월 자기의 심복 동지 호요방(胡耀邦)을 우선 당 중앙조직부장에 앉히는데 성공하자 그 주도하에 “진리의 기준” 문제에 관한 전국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1978년 5월 11일자 《광명일보》(光明日報)는 화국붕의 이른바 “두개의 무릇”(“兩個凡是”)—“무릇 모(毛)주석이 결정한 정책이라면 그 모두를 우리는 단호히 수호하며, 무릇 모주석의 지시라면 그 모두를 우리는 시종 변함없이 준수 한다”—이라는 주장에 대항했다. 등소평과는 자기들의 영향 하에 있는 신문에 「실천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논평을 실었다.¹⁸⁷⁴⁾ 이 말이 의도한 바는 “아무리 모주석의 정책과 지시라고 해도 실천에 옮겨본 결과가 나쁘면 그것은 오류”라는 주장을 내세워 범시파(凡是派)의 관점을 비판하려는데 있었다.

등소평은 “실천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원칙의 의미를 “실사구시”(實事求是)란 말과 동일시하면서 “실사구시”의 녀자야말로 “모택동사상의 정수(精髓)”¹⁸⁷⁵⁾

1873) 華國鋒은 1977년 8월의 제11차 전당대회에서 진술한 「정치보고」에서 林彪, 4인방을 劉少奇와 하나로 묶어 일로당토않게 “走資派”라고 공격하고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은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사에서 위대한 創舉로써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그것은 역사의 진보와 더불어 더욱 찬란한 빛을 발할 것”이라 느니, “제1차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은…승리 속에 막을 내렸다”느니 하고 「문혁」을 극구 예찬했다. 화국붕, 「在中國共產黨第11次全國代表大會上的政治報告」, 《紅旗》 1977年 第9期, p. 16.

1874) 1978년 5월 11일자 《光明日報》 평론가의 논문.

1875) 앞의 『鄧小平文選(1975~1982년)』, p. 242. 진리의 기준문제는 당내를 떠들썩하게 했다. 그런데 이 토

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러한 반박으로 “범시파”가 모택동의 문언들을 무오류의 신성 불가침한 진리처럼 내세워 모택동 사후에도 ‘문혁’체제를 유지하고자한데 대해 ‘문혁’노선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그러나 그는 ‘모택동사상’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택동사상”의 이름에서 모택동 격하를 교묘하게 밀고 나갔다. 이때 이후 “실사구시”라는 용어는 세계적으로 지식인들의 유행어가 되었다.

등소평의 투쟁방법은 스탈린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 스탈린 격하운동을 벌였던 흐루시초프의 그것과는 달랐다. “모택동사상”의 해석권이 ‘문혁’ 부정파로 넘어가게 되자 화국봉을 선두로 한 ‘문혁’ 수혜파(受惠派)의 몰락은 시간문제로 되었다. 1978년 10월 10일 오 덕(吳 德)이 북경시(市)혁명위원회 주임 직에서 해임되었고, 11월 15일에는 ‘문혁’의 신평탄이 되었던 『해서파관(海瑞罷官)』의 저자 오 함(吳 晗)이 사 실상 복권되었다.¹⁸⁷⁶⁾ 그리고 11월 16일에는 북경시 당위원회가 등소평을 “반혁명”으로 몰아 실각시켰던 ‘천안문사건’의 판정을 뒤집어엮고, 이 사건을 “완전한 혁명적 행동”으로 역전시켰다. 이것은 등소평의 완전 무죄의 선언인 동시에 모택동의 무오류의 신화를 파괴한 것이었다.

1978년 당(黨) 제11기 3중전회(中全會)에서 주류파가 된 등소평은 「문혁」에서 박해를 받거나 실각했던 진 운(陳 雲), 등영초(鄧穎超)(주은래 부인) 등 노 간부들을 복권, 당(黨) 요직에 진출시키는데 성공했다. 다시 1979년 9월의 당 11기 4중전회(4中全會)에서는 ‘문혁’ 피해자들을 당 중앙위원, 정치국원에 선출했다.¹⁸⁷⁷⁾ 그리고 1980년 2월 허순의 ‘5중전회’의 결정은 “문혁 신(新)4인방”으로 불렸던 왕동홍(汪東興), 기등규(紀登奎), 오 덕(吳 德), 진석연(陳錫聯) 등을 본인들의 “사직원을 승인”하는 형식으로 당 정치국, 국무원, 전국 인민대표대회의 지도적 직무에서 해임했다.¹⁸⁷⁸⁾ 가장

문은 표면상으로는 이론문제에 관한 토론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등소평의 華國鋒에 대한 공개 奪權의 신평탄이었다. 앞의 嚴家祺·高阜 『文化大革命十年史』 下, p. 242.

1876) 1977년 11월 15일자 《光明日報》에 실린 蘇双碧의 논문 「姚文元的『新編歷史劇海瑞罷官』을 평한」은 요문원의 『海瑞罷官』비판의 陰謀性을 지적하고 이것은 명백히 중국에 “팻쇼 독제사상을 실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모택동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1877) 「4中全會」는 王鶴壽, 劉瀾波, 楊尚昆, 周 揚, 陸定一, 彭 真, 薄一波 등 「文革」피해자 12명을 중앙위원회에 보충하고 제11차당대회에서 추인을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趙紫陽과 팽 진을 중앙정치국원에 선출했다.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의 공보」, 《紅旗》1979년 제10기, p. 24, 『中國共產黨最新資料集』 上卷, p. 319.

1878)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의 공보」, 《紅旗》 p. 321.

중요한 사건은 “반혁명 수정주의 집단의 총 두목”으로 몰려 박해 속에서 사망한 유소기가 드디어 “위대한 *맑스주의자*,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혁명가, 당과 국가의 두드러진 지도자의 한 사람”¹⁸⁷⁹⁾으로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이다. “주자파(走資派)” 유소기의 사후 명예회복은 그를 매장했던 모택동 생시의 판정이 광기에 찬 행동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980년 4월에 열린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문혁’의 옹호자 화국봉은 총리직을 사임했고 그 자리는 조자양(趙紫陽)으로 넘어갔다. 화국봉은 그래도 당(黨) 주석의 직위는 유지하고 있었지만 1981년 6월에는 주석직위를 호요방(胡耀邦)에 빼앗기고 부주석으로 강등되었다가 그 위에 1982년 9월 제12차 당(黨)대회에서 주석제가 폐지되자(호요방은 총서기로 유임) 자동 실각하고 겨우 중앙위원의 자리만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때 등소평은 당(黨) 군사위원회 주석 자리에 올랐다. 유소기의 명예회복과 이와 병행한 ‘문혁’ 수혜자들의 계속적 몰락을 통하여 모택동 격하는 진행되고 있었다. 1980년 7월 30일 베이징(北京)의 ‘인민대회당’(人民大會堂)과 혁명역사박물관에 걸려있던 모택동의 거대한 초상화들은 철거되고 의례상 천안문 위에 한 장만이 남게 되었다. 전국 도처에 널려있던 모택동 어록비(語錄碑)와 대소의 초상화도 사라지고 그 자리는 광고판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만인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우상 파괴 모습이었다.

그러나 모택동 우상이 파괴되고 있다고 하여 지식인들의 민주화운동이 이에 만족하여 진정(鎮定)된 것은 아니었다. “1당 독재 체제의 폐지”, “자유와 법치주의”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와 단식투쟁 등이 단속적으로 일어나다가 드디어 1986년 12월에는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런 격동 속에서 급진적 지식인, 일부시민, 학생들의 배후 지도자로 지목되고 있던 호요방은 “부르조이 자유화”의 책임의 일단을 지고 1987년 1월 전격적으로 서기에서 해임되고 그 직무를 대행해오던 조자양(趙紫陽)이 10월 말 총서기가 되었다. 등소평은 당내의 보수적-좌경적 노 간부들의 압력 하에 그들과 타협하기 위하여 호요방을 희생시켰던 것이다. 이 무렵 “중국의 *사하로프*”로 비유되었던 방여지(方勵之 교수, 중국과학기술대학 학장), 왕약망(王若望, 중국작가협

1879)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의 「劉少奇同志の名譽回復に關する決議」, 앞의 책, pp. 287~288.

회 이사), 유빈안(劉賓雁)《인민일보》 등의 저명한 기자, 평론가) 등은 당에서 축출되었다.¹⁸⁸⁰⁾ 이들 중에서 특히 방여지와 왕약망은 “부르조이적 자유화”(‘등소평파’는 이것을 “사회주의 제도의 자본주의 제도로의 교체를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를 선동한다고 하여 등소평으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았다.¹⁸⁸¹⁾ 이런 상황에서 호요방(胡耀邦) 사거(死去)(1989. 4. 15)를 애통해하는 대학생-지식인들의 무저항적 평화적 민주화 시위는 전국적인 “난동”으로 확대되었다. 이른바 “제2 천안문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드디어 1989년 6월 4일을 기하여 이 호요방 애도의 시위는 무참하게 진압되었다. “피의 일요일”로 불리운 이날, 계엄군의 장갑차와 전차부대는 천안문에 군집한 군중에 충격을 가했다. 일설에 의하면 이때 사망자는 약 2,600명, 부상자는 1만명이라고 한다. 이 유형의 아수라장 속에서 온건한 해결책을 시도하던 조자양(趙紫陽)은 실각(1989. 6. 24)하고 방여지, 왕약망, 유빈안, 소소지(蘇紹智), 엄가기(嚴家祺), 이홍림(李洪林), 채 령(塞玲)(女) 등 쟁쟁한 지식인들은 대륙을 빠져나가 외국으로 망명했다. 이와 같이하여 모택동(毛澤東) 개인숭배 비판은 등소평의 기대와는 달리 「제2 천안문사건」이라는 대 동란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비극을 초래한 개인숭배는 왜 발생했을까. 앞에서 설명한대로 흐루시초프는 그 원인을 소련이 처해있던 가혹한 “환경조건”과 스탈린의 “약간의 부정적인 개인적 자질”에서 찾았다. 등소평도 그 원인을 ‘중국공산당’이 직면했던 환경조건과 중국의 “장기간에 이르는 봉건적 전제주의가 사상-정치면에 끼친 해독”, 즉 전통적 정치문화(政治文化)에 돌렸다. 「역사결의」는 이 두 개의 요인을 합쳐 “사회적-역사적 조건”이라고 규정했다. 흐루시초프나 등소평은 개인숭배 현상이 자국의 사회주의 제도 자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숭배는 스탈린주의의 중요한 특징이며 그 원천은 려닌의 “민주적 중앙집권제”라는 당(黨)의 독재적 조직 원칙에까지 소급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중국공산당’의 「역사결의」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었지만 당내의 원로 이론가 요개룽(廖蓋隆)은 이에 관하여 가차 없이 파헤치면서 현대 공산주의의

1880) 方勵之, 王若望, 劉賓雁의 추방 이유가 된 이들의 발언은 《北京周報》(日文版), 1986年 12月 6日號, p. 16 및 1987年 2月 19日號, p. 5 참조.

1881) 「旗幟鮮明地反對資產階級自由化」(1986. 12. 13), 鄧小平著 『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 1987年, 北京, p. 160.

성조(聖祖)인 *레닌*의 권위에까지 비판의 *매스*를 가하였다. 요게룡은 모택동의 과오에 대한 역사적 원인(遠因)으로 오랫동안 중국에 팽배했던 봉건적 전제주의의 정치문화, 즉 “1언당(一言堂)”(오직 한사람의 말이 곧 법), 가부장제의 해독을 부인하지 않는다.¹⁸⁸²⁾ 그렇지만 그가 중국의 정치적 전통 이상으로 중시한 것은 국제공산주의 안에서의 “불건전한 정치 이론과 당 건설 이론의 영향”¹⁸⁸³⁾이다. 즉, 그에 의하면 중국인이 *맑스주의*를 바로 *레닌*과 *스탈린*을 통하여 배운데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요(廖)는 지적하기를 *짜리*전제주의 시대에 형성된 *레닌*의 당 건설 이론은 “집중(集中)만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고 당내 민주주의가 경시되어 있다”는 것, *레닌*의 당(黨) 조직론에 의해서는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후에도 “민주화는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코민테른*이 중앙 집중제(集中制)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각국 당은 *러시아*인과 *러시아* 공산당의 지도하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것은 “명백히 *맑스주의*에 위배 된다”고 했다.¹⁸⁸⁴⁾ 그러면 *레닌*이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 이론에서 민주주의적 측면을 경시하고 초법적인 “폭력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한데서 발생한 결과는 무엇이었단가. 이것은 바로 “당(黨)과 정부의 권력이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집중되고, 최후에는 1人 또는 몇몇 소수의 지도자에 집중되는 현상이다… 소련은 바로 그런 권력집중을 마치 사회주의처럼 오랫동안 생각해 왔다”¹⁸⁸⁵⁾고 그는 분석했다.

요(廖)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위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재는 소수인의 전제 또는 개인 독재로 변하지 않을 수 없으며, *프롤레타리아* 계급전체의 독재의 반대물이 되고 만다”¹⁸⁸⁶⁾고 논단했다. 그 실례로 그는 *스탈린*의 권력 비대화와 권력 남용은 *레닌*의 힘으로도 제어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들면서, 그 원인을 *레닌* 자신의 정치이론-당 건설이론과 그 실천상의 “결함”에서 찾았다.¹⁸⁸⁷⁾ 이와 같은 그의 설명은 *레닌주의*의 오류에 대한 정문(頂門)의 일침(一針)인 동시에, 모택동의 당(黨) 지도체제란 것이 *스탈린*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재체제가

1882) 앞의 논문 「歷史的 經驗和我們的 發展道路」, 《匪情月報》, p. 97.

1883) 같은 책, p. 98.

1884) 위와 같음.

1885) 위와 같음.

1886) 위와 같음.

1887) 위와 같음.

아니라 1인 전체체제였다는 사실을 논증한 것이었다. 그의 *레닌* 비판은 물론 '중국공산당'내에서 거부당했지만 *레닌* 비판의 금지라는 공산주의의 오랜 *터부*를 깨뜨린 점에서 확실히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제3장

평양의 우상화(偶像化) 선풍(旋風) : 그 목표·구도(構圖)·전술

제1절 모스크바 방식을 추종

김일성은 1945년 9월 *시베리아*로부터 귀국한 후 1945년 12월부터 그가 사망한 1994년 7월까지 '북조선공산당'과 후신인 '조선노동당'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차지해 왔다. 또한 그는 한 번도 중단한 일이 없이 1946년 2월 이래로 계속 북한 정권의 수반으로서의 자리를 유지했다. 그는 위대한 “수령”(首領¹⁸⁸⁸)으로서 이렇게 북한의 영토와 인민을 통치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공산권에서는 당(黨)과 정부의 최고위직을 반세기 동안이나 동시에 지켜온 유일한 정치지도자였다. 김일성이 북한을 통치해 온 그 오랜 기간에 북한에서는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個人崇拜)가 인위적으로 조작-보완-강화되었고, 또 도전도 받는 과정에서 계속 상승되어 왔다. 그 결과 김일성은 전체 조선인민의 가장 위대한 민족적 영웅이며 신화화(神話化)된 전능의 공산주의 “수령”으로서 살아서부터 신전(神殿)에 모심을 받고 있었다.

그는 평양 부근 대동군 만경대(滿景臺)에서 태어났으며 14세 때 부친을 따라 만주(滿洲)의 길림(吉林)으로 가서 그곳 육문중학(毓文中學)에 입학했으며 현지의 ‘공산청년동맹(共產靑年同盟)’에 가담했고 얼마 후인 1931년 8월에 공산당에 가입했다고 한다.¹⁸⁸⁹ 김일성은 ‘중국공산당’의 당원으로써 그 산하 군사조직이었던 당(黨)소속 공

1888) 한국인의 語感으로는, 중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首領”이라는 敬稱은 그 의미에 있어서는 *히틀러*에게 붙였던 독일어 *Führer*나 *스탈린*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용하던 *러시아어*의 보즈드(*Vozhd*)와 아주 비슷하다. 아마 한국이 해방된 직후 북한에 주둔했던 蘇聯 軍政당국이 *러시아어*의 *Vozhd*란 말을 “首領”이란 말로 대치하여 金日成에 대한 敬語로 쓴 것 같다. 또는 ‘중국공산당’에서 흔히 지도자, 領袖(우두머리)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首領”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답습했을 수도 있다.

1889) 李羅英, 『朝鮮民族解放鬭爭史』(日譯版), 1960, pp. 391~394

산청년단(공칭)동만특위(東滿特委)에 의하여 안도(安圖)로 파송되어 1932년 4월 25일 정식으로 “안도 유격대”를 조직했다. 1935년 5월에는 이것이 다른 유격대들과 합쳐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으로, 다음해 3월에는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 제2군(軍)으로 확장했다.¹⁸⁹⁰⁾ ‘동북항일연군’이란 중국인과 한국인으로 구성된 혼성 *계렬*라 부대였으며, 김은 중국인 사단장 양정우(楊靖宇) 휘하에 배속되어 있었다. 김은 1932년에 ‘동북항일연군’ 제3사단의 사장(師長)으로 승진했다.¹⁸⁹¹⁾ 그러나 그가 인솔하던 사단의 총 병력은 최대로 200명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주에서 일본군의 토벌작전이 강화됨에 따라 김일성은 1940년 11월 자기 휘하의 일부 ‘항일연군’의 잔존 병력과 함께 *시베리아*로 월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¹⁸⁹²⁾ 소련으로 들어간 김은 *하바로브스크* 부근의 야영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다. 그에게 ‘소련극동군’ 총사령부가 맡긴 임무는 앞으로 있게 될 중-일전쟁을 지연시키기 위해 한반도의 후방지역에 침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공식 출판물들은 아직도 그의 ‘중공 동만특위’ 산하 ‘동북 인민혁명군’-‘동북 항일연군’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의 소련 입국 사실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소련군이 북한을 점령하고 있는 동안 소련의 영향력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북한 사회에 광범위하게 깊숙이 침투해 들어 왔었다.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 군정당국이 북한에서는 권력의 최고 유일한 존재였다. 스탈린 대원수의 소위 “천재적” 영도력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붉은 군대가 수행한 결정적 역할”은 설 새 없이 열광적인 갈채를 받았다.

소련 군정당국은 앞에서 인용한바 “붉은 군대는 조선에 *소비에트* 질서를 설정하거나 조선지역을 얻으려는 그런 목적들을 가지지 않았다”¹⁸⁹³⁾는 정책을 천명하는 성명을 거듭 선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당시 불과 33세 밖에 안 된 김일성의 “영명한” 지도하에 “해방자”(스탈린)의 정책에 따라 이룩고 *불세비키화*(化)의 과정에 들어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소련을 휩쓸고 있던 스탈린 개인숭배 작풍은

1890) 『東北抗日聯軍鬭爭史』, 人民出版社(北京)발행, 1991년, p. 95.

1891) 같은 책, p. 550.

1892) 같은 책, p. 436.

1893) 1945년 10월 12일 「北朝鮮駐屯蘇聯軍 第25司令官 聲明書」, 『朝鮮中央年鑑』, 1949년 版, p. 58에 수록된 全文에서 인용.

처음부터 북한의 정치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그리하여 북한에서는 스탈린 우상화(偶像化)와 나란히 김일성 우상화 운동이 급속히 추진되어 갔다.

돌이켜 보면 김일성 개인숭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배경으로 하여 유래된 것으로 해석된다. 첫째로, 무엇보다도 스탈린은 민족주의 지도자를 압도할 만큼 비중이 큰 공산주의자가 없었던 북조선에서 자신이 수출한 지도자의 권위를 강화시켜 주려는 단호한 목적의식에 따라, 인위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소비에트 식(式) 개인숭배 제도를 북한에 이식시켰다. 물론 해방직후에 남한에서나 북한에서나 이름 있는 토착 공산주의자들이 소수나마 출현하고는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소련의 입장에서 보면 조직력이 허약하고 대부분이 소(小) 부르췌아 출신 인텔리로 사상적으로 신뢰할만한 공산주의자가 못되었다.

둘째로, 스탈린은 소련권(圈) 내의 여러 위성국들에 대해 모스크바의 효율적인 통솔을 실시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신임할 수 있으며 소련에 충성을 다하는 지도자를 선발하여 각자의 나라를 통치케 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스탈린 다음 서열의 우상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셋째로, 김일성과 거의 모든 측근들은 권력욕의 충동에 따라 자기들의 정치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집권자(김일성)를 신격화하였다. 그리고 그의 위력으로 인민을 이끌고 나가는 소비에트형(型) 개인숭배를 모방하고자 했을 것은 물론이다. 특히 그들은 국내에 이렇다 할 큰 추종세력이나 조직을 갖지 못한 소수파의 처지에 있었음으로 더욱 그러했다. 이러한 요인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얹혀 김일성 개인숭배 현상은 거의 아무런 억제도 받지 않고 급속히 만연해갔다. 1945년 10월 북한의 수도 평양에 김일성이 극적으로 모습을 나타내는 정치극을 연출한 이래로, 그는 갑자기 “위대한 민족의 영웅”이라고, “조선 인민의 영명하신 지도자”로 떠받들려왔다. 김일성 개인숭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타성(惰性)에 젖게 되어 계속 공고화되었고, 점점 절정으로 치달았다.

처음부터 김일성의 목소리는 모스크바의 주장을 복창한 것에 불과했다. 심지어는 한국 전쟁에서 김일성과 그의 정권을 파멸로부터 구출해 준 중공군의 영향력으로도 그에 대한 개인숭배를 억제하기는 어려웠다. 김일성은 소련식 논리를 흉내 내어 한국전쟁을 “조국해방전쟁”(스탈린은 독-소전을 “조국전쟁”으로 정의)이라고 규정한

반면, UN군을 “외국간섭군”(外國干涉軍, 레닌은 러시아 내전시의 서방의 침공군을 그렇게 불렀다)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그의 인민군과 중공의 ‘인민지원군’이 한국을 침략했다가 격퇴되었던 사실에 대해서도 16개 ‘외국간섭군’에 대한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찬양했다. 김일성은 한국전쟁 때 패주(敗走)한 전투를 모두 “승리”라고 기꾸로 정의함으로써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英將)”이 되었다.

김일성은 한국전쟁 기간 동안 ‘조선인민군’과 ‘중공인민지원군’을 명목상 모두 지휘하는 최고사령관직을 맡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1950년 말에는 ‘인민군’ 내에서 강력한 경쟁자였던 중공 출신 무 정(武亭)장군을 제거할 수 있었다. 무 정은 연안파(延安派)의 거물이었으며 중국 8로군 포병사단의 창건자로 알려져 있었다. 무 정 장군은 소규모 게릴라 부대를 지휘했던 김일성의 경력에 비하면 훨씬 월등한 명성을 떨쳤던 역전의 혁명 투사였다. 휴전이 성립되자 김일성은 즉각 당시 당(黨)과 내각의 권력 서열상 제2인자였던 박헌영(朴憲永) 지도하의 ‘조선노동당’ 내 국내(남한)파에 대한 숙청에 착수했다. 박헌영은 국내에서는 선배 급 공산주의자이며, 1925년 코민테른의 승인을 받았던 ‘조선공산당’의 창건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

김일성은 이렇게 강화된 자의 권력을 기반으로 삼아 전후의 급진적인 공업화 및 농업협동화 정책을 강제로 추진했다. 1953년 이후 소련과 동(東)유럽에서는 스탈린주의가 퇴조하기 시작했던 때에, 북한에서는 그것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김일성은 사회주의 건설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전후(戰後)인민경제복구발전계획’(1954~1956)과 특히 ‘제1차 5개년경제계획’(1957~1960)을 통해, 전쟁에서 지치고 가난에 쪼들리던 인민들에게 가혹한 채찍질을 가했다. 그가 계속해서 강행한 야심만만한 경제계획들은 그에 대한 인민들의 불평불만과 증오심을 자아냈다.

이러한 때 김일성 개인숭배는 ‘소련공산당’ 제20차 당(黨) 대회에 뒤이어 전개된 비(非)스탈린화 운동에 의하여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었다. 최창익(崔昌益)을 중심으로 한 ‘연안파’가 주동이 되고 당(黨) 지도층 내의 소련 제2세파의 지지를 받은 많은 당(黨) 고위지도자들은 1956년 8월 ‘당(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시도했다. 반김(反金) 연합세력은 중공업에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극빈상태에서 시달리던 대중의 소비 욕구를 억압하는 김일성의 무모한 공업화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또 당시로서는 시기상조요, 비현실적인 것으로 여겨졌

던 김일성의 농업협동화 정책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었던 외에, 소련에서 흐루시초프에 의해 추진되던 비(非)스탈린화(化) 운동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고무되었던 것이 틀림없다.¹⁸⁹⁴⁾ 특히 김일성의 1인 독재하에서 억압과 굴욕을 당하고 있던 당(黨) 간부들이 그러했다.

김일성은 위험이 임박했다고 느끼게 되자, 소련권(蘇聯圈) 내의 국가들을 뒤흔들고 있던 국제적인 개인숭배 반대운동을 역(逆)이용하였다. 즉 그는 교묘하게도, 북한에서 개인숭배사상을 전파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당(黨)의 통일과 단결”을 파괴하려고 획책한 당내 “종파분자들”이었다고 거꾸로 주장했다. 그는 당(黨)의 단결을 고수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그 자신의 권력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는, 자기 추종자들에게 “종파주의와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개인숭배사상을 철저히 청산”하기 위해 싸울 것을 명령했다.¹⁸⁹⁵⁾ 1956년의 세칭 “8월 종파(宗派)” 사건은 당(黨)에 대한 그의 영도권이 부딪친 가장 심각했던 위기였다. 전권을 쥔 독재자가 당(黨)의 공식집회에서 공공연히 공격을 받은 것은 공산권 내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김일성은 반대세력을 굴복시키고, 연안파건 소련파건 ‘반당적-반혁명적 종파분자’들을 철저히 숙청함으로써 마침내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라는 레닌주의식 명분아래 확고부동한 1인 독재체제를 확립했다. 그는 제4차 당(黨) 대회에서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우리 당(黨)은 반당 종파분자들과 그들의 사상여독을 반대하는 굳센 투쟁을 통하여 … 오래 동안 우리나라 노동운동에 커다란 해독을 끼쳐 온 종파를 때려부시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였으며, 조선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을 실현하는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였습니다”¹⁸⁹⁶⁾고 선언하였다. 그 후 그의 우상화는 더욱 가속화(加速化)되었다. 북한 땅 어느 곳에서 열린, 어떠한 대중 집회나 회의나 기념식에서나 김일성의 “가장 정확한 영도”와 “탁월한 역량”에 대한 열광적인 아부가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김일성은 이미 “조선의 스탈린”으로 추앙되었으며, 김일성 개

1894) 그 후 金日成은 이것을 자주 밝혔다. 《노동신문》, 1963년 10월 28일자 社說 참조.

1895) 『김일성선집』, 제4권, 1960, p. 540.

1896) 『김일성저작선집』 3, p. 154.

인승배는 그 규모나 내용이나 강도에 있어서 스탈린 개인숭배가 부러워할 정도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그는 중-소 이념분쟁이 바야흐로 고조되고 있을 무렵, 당(黨)의 “주체”를 선언하는 즉시로 3천2백만 남한 사람들을 포함한 “4천만 조선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라고 떠받들리게 되었다.

제2절 이데올로기의 위치 설정

1945년 이래 당(黨)에 의해 더욱 더 강렬하게 실시되어 온 사상교양사업(思想敎養事業), 즉 이데올로기 교육은 열광적인 김일성 숭배를 중핵으로 하여 각급 당원들과 인민대중의 사상을 개조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북한의 선전에 따르면, 현대 한국의 최대의 반일 민족운동이었던 1919년의 3·1 운동은 “부르조아”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잘못 지도된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모택동이 중국의 5·4운동이 좌절된 직후에 나타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김일성은 3·1운동이 실패로 끝난 후, “우리 인민이 …… 전 민족을 승리로 …… 이끌어 줄 탁월한 영도자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을 때” 바로 나타났다고 했다.¹⁸⁹⁷⁾ 그리하여 “절세의 애국자이며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 몸에 지니시고 조선혁명의 선두에 서시어 *광스-레닌주의*의 불패의 기치 밑에 우리 인민의 투쟁을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이끌어주시었다”고 낮간지럽게 격찬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조선 애국자들의 모든 영예는 만능의 영도력을 지닌 오직 한 사람 김일성에게 귀일(歸一)되었다.

모택동은 손 문(孫 文)이 “부르조아 민주주의적”인 민족운동을 계승하여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켰다고 가끔 주장하곤 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김일성은 자기에 선행한 “부르조아”민족주의운동의 의의(意義)는 일체 무시하고 오직 자기가 벌였다는 항일무장투쟁이 “우리 인민의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루어 놓았습니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강조했다.¹⁸⁹⁸⁾ 그는 조선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운동이나 민족주의

1897) 《로동신문》, 1970년 3월 1일자.

1898) 『김일성저작선집』 4, 1967, p. 284.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독점하려는 야망을 1945년 이래 끈질기게 시도해 왔다. 그가 이러한 야망을 기울여 온 의도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일체 합법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민주적 합법성에 대항하여 자신의 정권의 유일합법성을 주장하며 수호하려는데 있었다. 이에 관해서는 바로 뒤에 다시 언급할 것이다.

김일성은 과거 15년 동안에 걸쳐 싸웠다는 유격대 경력을 하나의 신화처럼 내세웠다. 북한의 민족보위 부상인 한익수(韓益洙)상장(上將)은 이 무렵인 1970년 2월 7일에 거행된 조선인민군 창건 22주년 기념식전에서 “혁명의 뇌수”인 “수령”에게 다음과 같은 최대의 경의와 충성을 표시했다.

조선인민군은 조선혁명의 뇌수이시며 심장이신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보위할 중대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선인민군은 창건된 이후 오늘에 이르는 전 기간 일편단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실하였으며……1899)

한익수는 “수령”에 대한 숭앙심으로 충만한 그의 보고를 통해 ‘남조선혁명’을 적극 지지 성원함으로써 민족의 통일의 업을 이룩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했다.

우리 인민과 군대는 앞으로도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구국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할 것입니다. … 우리는 우리 세대에 조선인민 자신의 힘으로 민족지상의 염원인 조국의 자주적 통일의 혁명위업을 이룩하고자 할 것입니다.¹⁹⁰⁰⁾ (밑줄은 저자)

끊임없이 계속되는 “수령”의 우상화 경향은 자주노선을 선언한 이후 더욱 상승되어갔다. 북한은 공산진영 내부의 관계에서 자주노선의 출발점이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로동신문》1966년 8월 12일자의 「자주성을 옹호하자」는 사설이었다. 이 사설은 분명히 북한의 중공 및 소련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었다. 김일성은 소련의 “현대 수정주의(修正主義)”와 중공의 “교조주의(敎條主義)” 및 양국의 “대국주의(大國主義)”를 계속 공격함으로써 자주노선

1899) *The P'yongyang Times*, 1970년 2월 9일자

1900) 上 同

을 실행하기 위한 운동을 강화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자주노선의 *이데올로기*적 기초로서 점점 더 강조되었다. 이러한 “정신”에서 당(黨)이론가들은 “주체사상”을 이른바 “사상에서의 주체(主體)”, “정치에서의 자주(自主)”, “경제에서의 자립(自立)”, “국방에서의 자위(自衛)”라는 4개 원칙으로 요약 공식화하고 그 내용을 점점 더 보충해 갔다.

이 원칙은 이미 당(黨)의 경제적-군사적-건설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인민을 동원하고 채찍질하기 위한, 어디에도 편재(遍在)하고 있으며, 자나 깨나 반복 강조되는 구호가 되어버렸다. 드디어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은 북한 인민들에 대한 불가오류(不可誤謬)의, 유일한 지도원리의 자리를 차지했다.

김일성은 개발도상 공산국의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자립경제를 정치적 독립을 위한 기초라고 각별히 강조해왔다. 그는 중공업 우선의 자립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한국전쟁 이후 30년 동안 인민을 가혹하게 채찍질해 왔던 것이다. 그의 *비전*이나 정책은 모택동이 추진했던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의 그것과 아주 흡사했다. 그가 계속 추진해온 바, “중공업을 우선으로 보장하는”(중공업제일주의) 연차적 경제계획들은 또한 1920~1930년대에 스탈린 치하의 소련에서 추진되었던 군사적 건설을 본받았는데 그 동기가 있었다.

1966년 10월에 개최된 제2차 당(黨) 대표자회의에서 김일성은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 것”¹⁹⁰¹⁾을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당(黨)의 기본적인 전략적 방침은 이미 1962년에 소집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주로 흐루시초프가 김일성정권에 대한 원조를 중단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 당시 김일성은 중-소분쟁에서 북경(北京) 쪽에 기울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의 7개년계획(1961~1967)은 흐루시초프의 이러한 압력 때문에 거의 풍비박산(風飛雹散)이 되고 말 형편이었다. 그러나 흐루시초프가 실각한 뒤 1965년부터 브레즈네프-코쉬킨 체제에 의해 경제-군사원조가 재개됨에 따라 김일성은 이 7개년계획을 다시 추진할 수 있었으나 그 계획의 수행은 1970년까지 늦추어지고 말았다.

김일성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의 목표가 남한에 대한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려는데

1901) 《근로자》, 1966년 10월호, p. 26.

그 의도가 있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평양의 “평화를 애호 한다”는 공산주의자들로서는 적에 대하여 먼저 공격을 개시하는 일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논리였다. 그들의 도착된 전쟁관의 합리화에 의하면 심지어 한국전쟁까지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남한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전쟁”이었다는 것이다. 완강한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의 “주구들”은 멀지 않아 북한의 “민주기지”를 틀림없이 공격한다는 구실 밑에 김일성은 북한의 군사력을 기를 쓰고 강화했다.

김일성은 제2차 당대표자회의(1966. 10)에서 자기의 보고를 통해 마치 남한이 새로운 전쟁을 곧 일으키려 하고 있는 것처럼 “긴박한 정세”를 논했다. 그리고 그는 소위 “자주적 평화통일”의 기본 방법으로 공산당 지도하의 “남조선 혁명” 및 “남조선 해방”을 공공연히 주창하고, 나아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로 제시했다.

북한의 지원을 받는 남조선인민 스스로에 의한 “남조선 혁명”과 “남조선 해방”이라는 방법에 의하여 조국통일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그의 주장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더욱 불거진 확고한 원칙이었다. 김일성은 1967년 12월 16일 발표한 이른바 「공화국정부의 10대강령」속에서 다음과 같이 그의 종래부터의 통일정책을 재천명했다.

공화국정부는 …… 남조선인민들을 해방하며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북반부 인민들을 항상 남조선인민들의 성스러운 반미구국투쟁을 지원하며 혁명적 대 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세대에 남조선 혁명을 완수하고 조국을 통일하여야 하며……운운. 1902)

김일성의 전술적 어구(語句), 즉 “혁명적 대 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이란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기회가 무르익기만 하면 북한은 남한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행동을 취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전쟁공포심을 일으켜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군사적-정치적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단순하고 공허한 도전적 연사에 그치는 것은 아니었을까. 또는 남조선해방 전쟁의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북조선 인민들을 전시적 경제체제

1902) 『김일성저작선집』 4, 1968, p. 540.

에 총동원하자는 것이었을까. 이상 김일성의 어느 목표도 성공할 수 없었음은 그 결과가 증명했다.

북한의 노동당은 “국방에서의 자위”의 원칙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국토를 요새화(要塞化)하는데 최대한의 물질-인적 자원을 동원해왔다. 김일성은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 “전 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라는 자주 노선에서의 4대 군사 방침을 내 걸고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여 이것을 실천에 옮겨왔다.¹⁹⁰³⁾ 여기에는 엄격한 정치적-사회적 편제화(編制化)가 강행되었으며, 그것이 강행되면 될수록 당(黨)의 “사상사업”도 그만큼 더 강화되었다. 군사적 각국을 지향하는 전체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목표를 향해 인민을 동원하는데 서는 당연히 민족주의적 열광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가 설 새 없이 고취되어야 했다.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은 실제로는 김일성 한 사람을 의미하는 당(黨)의 “하나의 의지” 및 “하나의 사상”의 지배를 받았다. 그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당(黨)과 정부의 절대적 이념이 되었다. 그리고 그가 주장해온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은 이미 자주노선의 사상적 방향을 이끌어주는 지침이었다.

인민들이 자신들의 고달픈 생활에 관해 조금이라도 불평을 말하면 엄중하게 탄압을 받았다. 그의 ‘자주노선’은 본래 ‘수령’에 대한 개인숭배 열을 올리기 위해서만 선언했던 것은 아니었다. 김일성은 모스크바와 북경이라는 양 거대국(巨大國) 사이에서 독자노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한 철통같은 당(黨)의 단결을 필요로 했고, 마침내는 그 자신에 대한 개인숭배를 더욱 필요로 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의 영도력이나 정책에 비판적인 사람은 누구든 간에 “종파분자”, “교조주의자”, “수정주의자”, “사대주의자” 또는 “민족 허무주의자”로 낙인찍혀 가차없이 숙청당했다. 돌이켜 보면 김일성의 ‘자주노선’이 추구한 기본적인 전략은 두 개의 목표, 즉 국제적으로는 하나의 강국이 “사회주의 진영”의 어떤 나라를 지배하지 못하는 다중심주의(多中心主義)(polycentrism)요, 대내적으로는 여러 정파가 각축하면서 당(黨)의 통일과 단결을 깨트릴 수 없게 하는 일사불란(一絲不亂)한 수령의 단일중심주

1903) 김일성이 “혁명적 민주기지”라고 규정한 북한은 휴전 15년 후인 1968년경에 벌써 45만명의 정규군 및 총 수 약 120만명으로 추산된 강력한 민병대, 즉 노동적위대(勞農赤衛隊) 등의 군사력에 의해 철통같이 요새화 되었다. 노동적위대는 그 반수 이상이 120m/m 박격포와 RPD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北韓要覽』, 1968, pp. 134~142.

의(單一中心主義)(monolithism)라는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제3절 우상화의 상승과 확대

김일성 개인숭배는 중단없이 계속 상승해 갔다. 북한의 신문들은 김일성이 일찍이 (그의 나이 불과 15살 때인) 1927년에 ‘반제(反帝)청년동맹’을 조직했다고 되풀이 주장했다. 그리고 이 “동맹”의 구호는 “김일성 원수님의 주체사상과 자력생성의 혁명정신이 철저히 구현된 혁명적이며 반제국적인 투쟁구호로서 조선혁명의 당면목적과 종국적 목적을 밝힌 가장 과학적 *맑스-레닌주의적* 투쟁 강령”(1904)이라고 선전했다. 북한의 신문은 또한 “1930년 봄 길림의 감옥에서 나오신 후…김일성 원수께서는…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었다”(1905)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수령”의 자주노선은 이미 1966년보다 36년이나 앞서서 선언했던 것으로 된다. 모두가 거짓말이다.

김일성 개인숭배에 관한 신파조(新派調) 주장의 한 예로는 그가 불과 21세 밖에 안 되었을 때 감히 *코민테른*의 파견원을 “접견하신 자리”에서 설득했다는 다음과 같은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예시할 수 있다.

1933년 4월 수령께서는 국제공산당 파견원을 접견하신 자리에서 대국주의자들과 사대주의자들의 견해를 단호히 물리치시고 조선혁명로선과 통일전선문제 특히는 조선공산당 창건문제에 대한 주체적이며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금 밝히시었다.(1906)

북한의 당(黨)의 어떤 선전원은 한사람은 만주와 한국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여 북한의 모든 주요 도시들을 해방시킨 것이 소련군이 아니라 김일성의 유격대(이른바 ‘조선인민혁명군’)였던 것처럼 역사적 사실을 대담무쌍하게 창작하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 기술했다.

1904) 《祖國統一》，1969년 12월 10일자.

1905) 간은 新聞, 1969년 10월 8일자.

1906) 위와 같음.

수령님의 명령을 받은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성난 사자와도 같이 일제히 조국에로의 진격을 개시했다. …… 동만을 거쳐 함경북도 남양으로, 동북의 장춘을 거쳐 신의주 방향으로, 서수라, 웅기, 라진, 청진, 원산 등 전 전선에 걸쳐 총 공격을 벌인 조선인민혁명군!……

각 전선에 진격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회령, 청진, 라진, 회문, 함흥, 평양 등의 적 룡군의 중요 거점들과 공군기지들을 점령하고 그 일대를 완전히 해방시켰던 것이다.

원수 놈들을 짓밟으며 폭풍처럼 내달리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강력한 타격 앞에 일제 놈들의 ‘철벽 방어선’은 흠뻑처럼 무너졌으며 100만의 관동군도 거품처럼 사라졌다.¹⁹⁰⁷⁾

이렇게도 철저하게 그리고 파렴치하게 날조된 이야기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이미 이성을 잃었다고 생각될 정도로 김일성 개인숭배가 절정에 이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수년 동안의 수령 신격화(神格化) 과정에서 그의 출생지인 만경대(滿景臺)는 ‘조선혁명의 요람’이라고 칭송되었다. 그의 고향의 초가집은 물론이고 한 그루의 나무, 하나의 바위, 조그마한 마당까지도 그의 어린 애국 소년 시절과 관련시켜 모두 역사적인 유적으로 잘 보존되고 있다. 이 마을은 일 년 내내 국내외로부터 숭한 순례자들이 몰려드는 ‘조선의 맥카’가 된지 오래되었다.

단지 김일성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의 전 가족이 ‘애국적이며 혁명적’이었다고 칭송되었다. 그의 아버지인 김형직(金亨稷) 선생(“동지”가 아님)은 알뜰게도 미국 선교사들이 평양에 세웠던 숭실(崇實)중학에 다녔던 인물로 “우리나라의 민족해방운동의 선구자요 탁월한 지도자”라고 추켜세워지고 있다. 그의 혁명적 생애는 극단적으로 과장되어 왔다. 그는 당시 대체로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싸웠던 수십만 명에 이르는 한국의 젊은이들 가운데의 한 사람이었을 수는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김일성의 조선공산주의 운동 이전에 그가 조직했다는 “지하조직인 조선국민회(朝鮮國民會)가 그 수와 활동의 범위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이었다”는 식의 기술은 역사적으로 전혀 입증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에서 거행된 3·1운동 51주년 기념식에서 백남운(白南雲)은 33인 민족지도자들 중 단 한 사람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김형직에 대해서는 그들의 영문 선전지에서 다음과 같은 얼토당토않은 찬사를 보냈다.

1907) 《祖國統一》，1969년 12월 10일자.

3·1인민봉기를 계기로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이시며 열렬한 애국자이신 김형직 선생께서 뿌리신 반일애국사상과 혁명의 불씨가 도처에서 세차게 타 번지었습니다.¹⁹⁰⁸⁾

“김형직 선생의 애국운동”을 기념하여, 그가 한 때 자라나는 후대에게 ‘애국주의와 신학문’을 가르쳤다는 작은 마을 봉화리에는 그의 동상이 세워졌다. 이 봉화리 역시 북한의 역사적 유적으로 추가되었다. 김일성의 어머니인 강반석(康盤石) 역시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이시며 여성과 가정을 혁명화 하는 본보기”라고 찬양을 받고 있다.¹⁹⁰⁹⁾ 심지어는 김일성의 증조부까지도 1866년 평양까지 항해하여 들어온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 호*(號)를 침몰시키기 위한 투쟁을 지도한 반미(反美) 애국자라고 기록되고 있을 정도이다. 나아가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동생은 물론 외할아버지 외삼촌 까지도 모두 한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애국자들로 열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가문은 대를 이어가며 애국정신을 발휘해 왔다고 진골(眞骨)족보를 만들었다. 그런데 최고 권좌에 오른 김일성이 옥좌를 김정일에게 세습함으로써 진골족보도 성골(聖骨)족보로 격상했다. 김일성 개인숭배는 조상숭배(祖上崇拜)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스탈린이나 모택동 다른 나라 공산당 수뇌와의 경우와는 다르다. 스탈린이나 모택동은 개인숭배를 결코 자기 가족들에게까지 확대시키지는 않았다.

김일성은 “경애하는 수령”으로서 공식적으로는 북한 인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다. 1962년과 1967년의 선거에서 북한 유권자 “100퍼센트”가 그에게 투표했다고 했다. 1970년 3월 10일 실시된 각급 지방선거에서는 해외여행 중인 사람을 제외한 유권자 100퍼센트가 유권자 명부에 자기 이름을 등록했고 또한 100퍼센트가 투표에 참가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 유권자의 100퍼센트가 입후보자들에게 찬성 투표를했다는 것이다. 투표상황에 있어서의 이러한 전체주의적(全體主義的) 작풍(作風)을 그들은 “빛나는 승리”라면서 다음과 같이 격찬했다.

이번 지방주권기관 대의원 선거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전체 당원들과 근

1908) 「Brief History of the Revolutionary Activities of Comrade Kim Il-sung」(1) *The Pyongyang Times*, March 10, 1970.

1909) *The Pyongyang Times*, 1970년 3월 10일자.

로자들은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 의지로 철석같이 뭉친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정당과 전사회의 위대한 정치사상 적 통일을 또다시 내외에 뚜렷이 시위하였으며.....¹⁹¹⁰⁾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김일성 개인숭배의 모든 측면은, 객관적으로 고찰할 때는 실로 불합리하고 어리석고 광신적(狂信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과 그의 측근들은 분명히 사상주입(思想注入) 운동을 열광적으로 몰고나감으로써 남-북한 국민들로 하여금 <수령>의 “헌신적인 애국정신”과 무오류의 전능한 영도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도록 하려고 애썼다. 그들은 김일성의 조선혁명의 가장 정확한 강령인 ‘주체사상’(主體思想)을 창시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조직 지도하였다고 선전했으며, 조국 광복의 염원을 성취시킨 영도자라고 선전해 왔다. 그리고 이 위대한 <수령>은 남한에서 기필코 미(美)제국주의자들을 쳐 부심으로서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 성공할 것이라고 인민들이 확신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4천만 조선인민(남조선인민 포함)의 경애하는 수령”¹⁹¹¹⁾이라는 표현은 이미 김일성이 장차 통일된 한국의 <수령>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김일성에 있어 1930년대의 혁명의 주요 투쟁목표는 일본제국주의였지만, 그가 집권한 이후의 주요 투쟁목표는 미(美)제국주의였다. 그는 한 때 자기는 “남진할 의도가 없으며, 무력으로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습니다”고 전쟁을 거부하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남한에 미국이 남아 있는 상황 아래에서는 평화통일정책도 마찬가지로 거부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를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의 평화적 통일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평화적 통일은 오직 남조선에서 현 괴뢰정권을 뒤집어엎고 진보적 세력이 정권을 쥔 다음에야 실현될 수 있습니다.¹⁹¹²⁾

김일성이 “남조선 해방”이니 “남조선 혁명”이니를 말할 때, 그는 틀림없이 ㅼ트콩형(型)과 아주 유사한 형태의 유격전(遊擊戰)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북한은 남조

1910) 《祖國統一》，1970년 3월 17일자, 社說

1911) 『김일성저작선집』 3, p. 403.

1912) 『김일성저작선집』 5, p. 198.

선의 혁명을 촉진-지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남한에서는 김일성의 주장에 호응하여 미(美) 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낼 정도로 강력해진 어떤 “진보” 세력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은 자기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파괴활동의 임무를 띠고 남한에 파견된 북한의 간첩과 무장특공부대를 모두 ‘남조선 혁명가들’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북한의 선전은 남한의 혁명을 더욱 더 강조함으로써 ‘남조선 인민들’이 “수령”을 무한히 경애하고 있다는 것 같은 인상을 퍼뜨리려고 무척 애를 썼다.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북한의 *매스 미디어*는 끊임없이 남한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 또는 간직한 희망이라는 것을 지어내어, 그것을 남조선 소식이라고 하여 보도했다. 평양의 선전은 소박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도 혁명적 논조의 강도를 늦추지 않았다. 조국통일을 이룩한 위대한 “수령”의 *이미지*는 강철같이 굳세고 백전백승의 혁명 기계(氣機)를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김일성은 인자하고 파스하며 덕성이 높은 민족의 어버이로도 보여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 속에서 언제나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이 그토록 자주 나타났던 것이다.

김일성의 선전원들은 “수령”의 고상한 어버이다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최고의 존칭을 사용했다. “자애로운 어버이”, “인민들에 대한 육친적(肉親的) 배려”, “태양”, “어버이 수령” 등 모두가 김일성 숭배의 한 부분들이었다. “오늘날 남조선 인민들은 김일성 동지의 높은 덕성과 숭고한 인민적 사업작풍에 무한한 흠모의 정을 표시하고 있다”¹⁹¹³⁾는 거짓 선전은 수 10년 동안이나 계속되어 왔다.

김일성은 이른바 “자주성(自主性)”을 선언한 이래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공화국 정부가 일관하게 주장하고 있는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은……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 자신의 손에 의하여……남-북 통일을 실현하는 것입니다”¹⁹¹⁴⁾라고 되풀이 했다. 그는 자신의 말대로 “조선인민과 국제혁명 역량과의 단결을 강화”¹⁹¹⁵⁾하기 위해 국제적 지지를 얻으려고 여러 해 동안 무척 애를 썼고, 외국어 간행물을 통한 자기의 선전활동도 강화해 보았다.

1913) 같은 책, 같은 면.

1914) 『김일성저작선집』 5, p. 198.

1915) 『김일성저작선집』 4, p. 239.

『김일성저작선집』은 이미 1965년에 영어, 러시아어, 독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등으로 번역 출판되었다. 김일성의 갖가지 전기(傳記)(1969)와 『혁명투쟁약사』(革命鬭爭略史)(1970), 그리고 기타 많은 그의 저작물 *판프렛* 들도 여러 나라 말로 출판되었다. 평양에 있는 외국어 간행물 출판사는 이런 종류의 자료들을 만들어 내기에 무척 바빴다. 이 인쇄물 들은 거의 대부분이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과 “주체사상”, 다시 말해서 “수령” 개인숭배를 선전하기 위해 출판되었다. 그리하여 북한의 “사회주의 지상낙원”을 비추고 있는 “민족의 태양”은 마침내 국제적으로도 빛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인도, 파키스탄, 실론, 레바논, 네팔, 쿠바, 시리아와 같은 개발도상 국가들의 몇몇 공산당계의, 또는 친공적(親共的)인 출판사와 신문들이 평양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김일성의 논문과 연설문을 출판-보도하기도 했다. 김일성이야말로 조선의 공산주의 운동과 민족운동의 정통적(正統的) 창시자(創始者)라는 *이미지*를 전(全) 세계에 심어 놓으려는 것이 김일성의 선전 전술이었음은 물론이다. 그는 아마도 그러한 *이미지*를 지녔던 호志明(胡志明)이 *아시아*, *아프리카* 민족독립운동에 동정적이었던 비(非)공산주의 세계의 여론들로 부터도 얼마나 많은 정신적 지지를 받았고 덕을 보았는가 하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심지어 김일성의 어머니의 전기인 『조선의 위대한 수령의 어머니이신 강반석녀사』(The Revolutionary Mother of the Great Heroic Son)까지 *미안파*에서 이미 1970년 1월 초 출판되었다는 사실이다.¹⁹¹⁶⁾

북한은 공산주의자, 비(非)공산주의자를 포함하여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지의 정치인, 예술가, 학자 등 외국 손님을 대대적으로 초청했다. 서구(西歐) 공산당은 거의 다 평양에 사절단을 보냈다. 미국 공산주의자들 역시 여기서 빠지지 않고 1968년 북한을 방문했다. 소수의 미국 학생들도 평양을 방문할 수 있었다. 이들은 북한 체제 중 감시, 여행제한, 인민과의 접촉 금지 등 상당한 제한을 받았다. 그러나 각기 제나라에 돌아가서는 대부분이 북한에 머물러 있던 때의 인상 깊은 이야기를 호의적으로 소개했다. 북한의 재입국 기회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생각건대 김일성은 모택동이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연안(延安)을 방문했던

1916) 《조국통일》, 1970년 1월 21일자.

미국 저널리스트들의 덕분에 의하여 그의 혁명운동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실을 고려했을 것이다. 김일성은 개인숭배 중심의 선전활동을 통해 자기가 조선에서 정당성(正當性)을 지닌 유일한 지도자라는 것과 자기의 민족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동조를 얻으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김일성 개인숭배는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실적으로 고뇌에 빠져있었음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남한의 국민 대중들은 김일성이 민족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정통성을 지닌 민족적 지도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그는 스스로를 유격전의 천재라고 자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시도했던 남한에서의 유격전에서는 번번이 격퇴되어 이렇다 할 성공을 거두지 못했었다.

제4장

북한에서 김일성의 개인숭배(個人崇拜)

계속 부는 평양의 우상화 선풍

제1절 스탈린의 “괴뢰”에서 “민족의 태양”으로

스탈린, 모택동에 대한 개인숭배의 운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김일성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후에 ‘조선로동당’이 어떠한 방법과 내용으로 그를 평가할 것인가에 깊은 관심을 쏟아왔다. 그러나 스탈린이 매장되고 모택동이 격하된 후에도 북한에서의 김일성 개인숭배는 지난 날 소련과 중국에서의 개인숭배를 압도적으로 능가하고 있다. 김일성이 사망하고 3년 상이 끝날 때까지 북한에서는 스탈린 사후의 소련과 모택동 사후의 중국에서와는 거꾸로 김일성 개인숭배는 그의 세습장자 김정일에 이전되어 계속 고조되고 있었다. 김일성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사망했지만 그에 대한 우상화는 여전히 살아서 역동하면서 북한의 정치체제를 정신적으로 떠받들고 있는 것이 오늘날까지의 실상이다.

오늘의 북한 정치체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김일성 개인숭배의 전개 과정과 그 양태(樣態), 그리고 그 의미와 목적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김일성은 1946년 8월(북조선로동당창립)부터 1949년 6월말(남-북조선노동당을 ‘조선로동당’으로 통합)까지의 ‘북조선 노동당’시대였던 짧은 기간 동안 자기의 당권을 형식상 김두봉(金斗奉)에 넘겨주었던 일이 있다. 그러나 실권은 여전히 김일성의 수중에 있었다. 1945년 12월부터 1994년 7월 사망할 때까지 그는 ‘조선로동당’(전신은 ‘북조선공산당’)내에서 최고 권력자의 지위를 고수해 왔으며, 19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출범이래로 단 한 번도 중단된 일 없이 계속 북한의 정권 수반의 자리를 유지해 왔다.

김일성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공산권내에서 당과 정권의 최고위직을 동시에 그렇게도 장기간 지켜온 유일한 권력자였다. 그가 “위대한 수령”으로서 지난 48년 동안

무한대의 독재 권력을 구축하고 북한사회를 통치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개인숭배—우상화는 계획적으로 조작 보장 강화되어 갔고, 이에 반대하는 소위 “종파분자들”의 치열한 도전을 받아왔으며, 이들과의 사활을 건 권력투쟁을 통하여 발전해왔다. 승리한 그는 생전에 이미 신격화된 전지전능한 공산주의 혁명가로서 성전(聖殿)에 모심을 받고 있었다. 그리하여 북한에서 김일성 개인숭배는 지난날의 스탈린 개인숭배나 모택동 개인숭배를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능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의 ‘문혁(文革)’ 때처럼 북한에서는 외교관들마저 일찍부터 독재자의 초상화가 찍힌 *배지*를 가슴에 달고 국제무대에 나서는 것을 영예로 여겨야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혁명적 의지와 철석같은 신념을 안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 최고의 덕성으로 되고 있었다. 1974년 당(黨) 기관지 《근로자》는 김일성의 교시에 대한 “무조건성, 절대성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창하였다.

수령님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수령님의 교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며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사소한 이유와 구실 조건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그것을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다.¹⁹¹⁷⁾

통치자에 대한 이러한 최고도의 봉건 가신적(家臣的) 충성의 서약은 세계 공산주의 운동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며, 최악의 전제주의 제정(帝政)의 경우에서나 엿볼 수 있는 헌사(獻辭)였다. 1974년 2월의 당 중앙위원회 제5기 8차 전원회의 이후, 특히 일본에서는 김일성의 이름 밑에 “주의”(主義)라는 영예를 서슴치 않고 붙여 김정일이 만든 “김일성주의”를 찬양하기에 이르렀다. 본래 “주의”라는 용어는 공산주의 운동에서는 *맑스*와 그리고 뒤에는 *레닌* 한 사람의 이름 이외에는 주어지지 못했던 최고의 영예였다(*맑스주의*, *레닌주의* 또는 *맑스-레닌주의* 등)¹⁹¹⁸⁾.

1917) 《근로자》, 1974년 9호.

1918) *레닌주의*나 *맑스-레닌주의*는 모두 *스탈린*의 조어였다. 한편 “*스탈린주의*”란 *프로츠카*가 이 말을 사용한 이후 非공산주의자들이 *스탈린*체제의 본질을 비판적으로 논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다. 中-소분쟁이 치열했던 시기에 모택동은 *호루시초프*를 중상하기 위하여, 한편 소련은 모택동을 비방하기 위해 각각 “*호루시초프주의*”와 “*모택동주의*”란 말을 사용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브레즈네프*도 모택동

김일성이 사망할 때까지 평양에서 간행된 그에 관한 전기적 자료는 그가 1931년에 만주에서 '중국공산당'에 가입했다는 사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휘하의 유격부대인 '동북 인민혁명군', 그 후신인 '동북 항일연군'에 가담했다가 일본군의 토벌작전에 밀려 1940년 말 몇 명의 잔존병력과 함께 *시베리아*로 도피한 후 그곳에서 소련군 당국의 군조직인 '88국제여단'이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군사훈련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¹⁹¹⁹⁾ 등을 공적으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민족의 “위대한 수령”으로서의 또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로서의 김일성의 영상이 흐려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가장 감동적인 전설로 기술되고 있는 그의 “항일 무장투쟁”의 절정기에도 그가 인솔했던 총병력은 최대의 겨우 2백명 내외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가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 대원으로써 만주에서 싸운 기간은 길어봐야 8~9년 정도였다. 그가 1945년 8월 북한에 진주한 붉은 군대의 뒤를 따라 그해 9월 하순 입북했을 때 그의 나이는 불과 33세였다. 그러므로 그가 민족 해방투쟁에서 수행했다는 혁명경력이란 최대로 평가하더라도 놀랄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북한의 당(黨)선전원들은 김일성의 항일혁명 투쟁기간을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하여 그가 14세 소년시절에 이미 탁월한 혁명이론가였다는 신화를 창작하여야 했다.

공산권내에서의 개인숭배 풍조는 *스탈린* 시대의 정치문화(政治文化)에서는 보편적 특징이었으므로 해방직후부터 *스탈린* 생존기간을 통하여 북한의 주민들은 *스탈린* 대원수의 “천재적” 영도력을 실 새 없이 찬양하도록 교육을 받았다. *스탈린*주의적 1인 독재는 “진보적 민주주의”로, 사상과 문화에 대한 공산당의 숨 막히는 통제는 “자유”로, 경제의 병영식(兵營式) 편제는 “사회주의”로써 고정 관념화되고 이상화되었다. *스탈린*을 신격화하기 위해 선전되고 있던 *맑스-레닌*주의는 인류가 도달한 최

도 자국내에서 자기들을 격상시키려는 의도에서 “*브레즈네프*주의”나 “모택동주의”를 자칭하지 않았다. “김일성주의”라는 호칭은 불려도 좋고 안 불려도 좋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한 조어는 김일성의 권위를 *스탈린*의 권위도 모택동의 권위도 덮고 올라서서 *맑스*와 *레닌*의 그것과 동 열에 또는 그 위에 올려놓으려는 정치적 의도의 표출이었다고 판단된다.

1919) 이에 관해서는 舊 소련, 현 *러시아*의 어떤 기관에서도 밝히지 않고 있다. ‘中國共產黨’의 출판물들은 모택동 사망 후 통제가 완화된 틈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 공표하고 있다. 일예로 『東北抗日聯軍鬭爭史』, 人民日報社 出版, 1991, p. 436, p. 440. 이 책은 김일성이 抗日聯軍 第2方面軍 부대를 인솔하고 소련으로 越境한 것은 1940년 11월로 기록하고 있다.

후의 진리가 되었다. 북한의 소련군정 당국은 김일성을 조선의 소(小)스탈린으로 육성하고 김일성의 “영명한 지도”를 통하여 북한의 *볼셰비키화*-위성국화를 강행했던 것이다.

소련을 휩쓸고 있던 개인숭배 작품은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던 모든 나라의 정치 체제에 처음부터 그대로 이식되었다. 그리하여 북한에서도 스탈린 우상화와 병행하여 김일성우상화 작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스탈린 사망 후, 보다 정확하게는 흐루시초프가 역사적인 스탈린 격하운동의 막을 올린 후 동(東)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스탈린주의자들이 권좌에서 쫓겨나면서 개인숭배의 물결은 급속히 퇴조하기 시작했다. 북한에서도 죽은 스탈린에 대한 개인숭배의 풍조는 점차로 사라졌지만, 반대로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는 오히려 맹렬한 기세로 강화되어 나갔다.

스탈린은 동(東)유럽과 북한을 위성국화(化)하는 방식으로써 첫째로는 자신이 파견하여 권력을 쥐어 준 지도자들의 지위가 위협을 받지 않도록 그들의 권위를 높여 주기 위하여 소련식 개인숭배를 인위적으로 이식하고 조장했다. 북한의 김일성은 바로 그러한 위성국 지도자들 중의 하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음으로 스탈린은 공산권 내의 국가 관계의 틀을 설정할 때, 위성국들에 대한 *모스크바*의 통제를 일사불란하게 하기 위하여 위계적인 개인숭배의 사다리를 만들었다. 즉 소련 권에서 개인숭배의 사다리의 정상에 앉은 스탈린은 낮은 가로대(段)에 앉은 위성국의 독재자들을 지배했다. 그리고 이들은 스탈린의 무비(無比)의 권력과 신임에 의지하여 자국안의 개인숭배 사다리의 정상을 차지하고 자국의 인민들을 지배했다. 이것이 스탈린이 고안해 낸 위성국의 통치방식이었다.

소련군정 당국이 김일성을 처음 대중 앞에 내세운 직후부터 대대적으로 선전한 것은 그의 반일(反日)유격대 투쟁의 업적이었다. 반일유격대 투쟁의 역사는 그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기초가 되었다. 김일성은 1945년 10월 대중 앞에 혜성처럼 등장한 이래로 조선의 공산주의 운동과 민족 해방운동에서 그 정통성을 자기만이 독점하려는 목적을 집요하게 추구해왔다. 이때부터 그는 줄곧 자기의 반일(反日)유격대 투쟁을 선전하다가 드디어 그는 1965년 10월 10일에는 자기의 “항일 무장투쟁은 조선공산주의 운동의 첫 시기에 있었던 본질적 약점들을 이겨내고...우리 인민의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루어놓았다”¹⁹²⁰)고 언명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선전했다.

특히 남북에 두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민족적 정통성(正統性)과 대한민국 정부의 합법성에 대하여 그는 자신의 혁명투쟁만이 유일한 민족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정권이야말로 유일한 민주적 합법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남한에까지 확대하려고 시도했다. 1968년 9월 7일 그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조선 민족은 단일한 민족으로서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정부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조선민족의 유일한 국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며 오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만이 전체 남북조선 인민의 참다운 민족적 이익과 의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이른바 《대한민국정부》는 결코 남조선 인민을 대표할 수 없으며 그 어떤 자주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정권입니다.....1921)

김일성은 이러한 주장의 전제로 다른 그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과거 “15년 동안”에 걸친 항일 유격대 경력을 크게 내세웠다.

.....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자들은 혁명적 폭력과 혁명적 무력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조국의 광복과 조선 인민의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선진적 노동자, 농민, 애국 청년들로서 항일 유격대를 조직하고 15성상에 걸친 영웅적 무장투쟁을 벌였습니다.1922)

북한 내에서 개인숭배의 풍조가 절정에 이르고 있을 때 김일성은 “민족의 태양”으로 불리게 되었지만, 바로 앞의 *고물카*의 말대로 그 역시 *스탈린*의 휘광을 빌어 빛을 북한에 “반사”하고 있었던데 불과했다. *스탈린* 사망 후 북한의 당 선전원들은 김일성을 “주체사상”의 화신(化身)으로 만들기 위하여 18세 때의 그가 “1930년 봄 길림 감옥에서 나오신 후...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 혁명노선을 내놓으시었다”고도 하고,

1920) 『김일성저작선집』 4, 1967년 판, p. 284.

1921)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 반면 김일성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애국적 인민들의 영광스러운 항일 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정권”이라고 했다. 앞의 『김일성 저작선집』 5, 1972년 판, p. 191.

1922) 같은 책, pp. 137~138.

심지어는 1927년 즉, 그 나이 겨우 15세 때에 그가 조직했다는 '반제청년동맹'이 내세운 구호는 "김일성 원수님의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철저히 구현된 혁명적이며 반제국주의적인 투쟁 구호로서 조선 혁명의 당면 목적과 중국적 목적을 밝힌 가장 과학적인 맑스-레닌주의적 투쟁 강령"¹⁹²³⁾이라고 천연스레 썼다.

1966년 8월 중-소분쟁 속에서 노동당이 대외적으로 "자주성"을 선언한 후, 그는 말끝마다 자주성에 위배되는 "대국주의", "민족허무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공격했다. 이에 호응하여 그의 이태우로 그들은 일제 하의 항일무장 투쟁도, 조선의 해방도, 북한에서의 반제-반봉건적 "민주개혁"도,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도 모두 "위대한 수령"이 철두철미 "혁명적 자력갱생의 정신"에 입각하여 이룩한 "고귀한 업적"으로 돌리는 선전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그러나 이들은 1952년 8월 15일 김일성이 《뽕라우다》지에 실렸던 스탈린에 대한 다음과 같은 굴종적(屈從的) 아침을 세계의 공산주의자들은 오랫동안 잊고 있지는 않았었을 것이다.

우리 인민의 성공적 해방투쟁에 있어서 제1차적 의의를 가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형제적 쑸뻬트 인민과 또 쓰팔린 동지가 몸소 우리 공화국에 주신 정신적 정치적 원조이다. 쓰팔린 동지는...우리 인민에게 자부(慈父)와 같은 배려를 베푸시었다. 우리 인민은 쓰팔린 동지를 자기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다.¹⁹²⁴⁾(밑줄은 저자)

제2절 대(大) 숙청과 지도자의 신격화(神格化)

김일성 개인숭배는 그가 1945년 10월 극적으로 평양에 모습을 나타내어 "민족의 위대한 영웅"으로, "조선 민족의 영명한 지도자"로 부각 찬양된 데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점은 이미 논급했다. 이러한 정치극의 연출은 결코 우연히 아니라, 소련군정 당국의 일관된 북조선 정책의 극히 중요한 부분이었다. 김일성과 그 측근자들은 권력 추구를 위하여 자기들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본능적으로 스탈린형(型)

1923) 《祖國統一》, 1969년 10월 8일자 .

1924) 『김일성선집』 4, 1953년 판, p. 230.

개인숭배를 모방하고 싶은 충동을 받았을 것은 물론이다. 특히 국내에서 광범한 조직과 추종 세력을 가지지 못했던 조건에서는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카리스마적 지도자 육성은 일반적으로 권력초기의 형성 단계에는 피치자(被治者)의 충성어린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극히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1당(黨)독재체제에서 개인숭배는, 최고 지도자의 능력과 권위에 대한 다수 인민들의 믿으로부터 자발적 추종과 숭상을 끌어내려는 선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그런 노력의 결과만으로 개인숭배가 정착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숭배의 특징은 지도자에 대한 이상화를 독재권력에 의하여 위로부터 강요하는 한편, 당내외의 이상화 반대파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수반하는 점에 있다. 스탈린과 모택동에 대한 개인숭배의 발전과정은 곧 정적들에 대한 숙청의 과정이기도 했다. 북한에서도 김일성 개인숭배는 당내의 치열한 권력투쟁 속에서 진행되었다. 해방 직후에 있는 오기섭(吳基燮), 정달헌(鄭達憲), 이주하(李舟河) 등이 당내 권력투쟁에서 몰락, 한국전쟁의 아수라장 속에서 자행된 무 정(武亭), 허가의(許哥諱)의 숙청, 휴전 직후에 단행된 박헌영(朴憲永)-이승엽(李承燦) 일파의 소탕, 그리고 1956년 8월 이후의 연안파-소련파의 대 숙청 등은 모두 김일성의 독재 권력과 개인숭배를 공고히 하는 과정이었다.

공산권 내에서의 개인숭배 현상은 가혹한 농업집단화정책(소련과 중국 등), 전쟁(북한), “대약진운동”(중국), 중-소분쟁과 ‘문화대혁명’(중국)과 같은 급격한 경제노선이나 정치적 격동, 또는 군사적 위기에 편승하여 촉발되고 가열화 되어 확대되었다. 6·25 동란을 이용하여 자기의 잠재적 정적들을 제거한 김일성은 일층 강화된 당의 지배체제를 기초로 하여 휴전 후에는 급진적인 중공업화-농업집단화정책을 강행했다. 그는 이른바 “사회주의건설의 기초”를 건설하기 위하여 ‘전후복구 3개년계획’(1954~56)과 특히 ‘5개년계획’(1957~60)을 통하여 전쟁에 지치고 빈곤에 허덕이는 대중들을 노력동원으로 채찍질했다. 인민의 소비생활과 휴식의 필요성을 무시한 김일성 일파의 중공업 우선주의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평불만과 반항이 일어났다. 당(黨)은 이것을 폭력으로 진압하는 한편, “사회주의 낙원”을 건설한다는 만능의 지도자에 대한 신비화운동으로 무마시키고 있었다.

그 후에도 ‘7개년경제계획’(1961~70), ‘6개년계획’(1971~76), 제2차 7개년계획(1978~84),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기간 중에 김일성이 휘두른 초(超)스탈린주

의적 절대 권력은 광란적 우상화운동과 병행하여 더욱 기세를 떨쳐갔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일어나는 당 내외의 비판과 반발을 “수정주의” 또는 “교조주의”라고 하여 가차 없이 억압하는 한편, 신격화된 지도자의 영상을 통하여 인민들로 하여금 그의 정책 노선에 맹종케 하는 통치 방식을 구사해 왔다.

이와 같이 독재자에 대한 개인숭배를 사회주의 건설의 혁명과 수단으로 이용하는 방식은 본래 스탈린의 소련에서 시작되었고 모택동의 중국대륙에서도 동(東)유럽에서도 사용해 왔다. 인민들의 충족되지 못한 물질적 욕구를 정신력, 즉 최고지도자 혁명 이데올로기로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주의 교육”(중국) 또는 “정치교양 사업”(북한)은 건설의 목표가 웅대하면 할수록, 이와는 대조적으로 민생문제가 절박하면 할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강행되었다. 이런 사상교육의 내용은 언제나 최고 지도자의 신비화, 절대화와 그에 대한 무한한 충성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다.

김일성 개인숭배가 최대의 시련에 직면했던 것은 1956년 2월에 개최된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를 시발점으로 한 비(非)스탈린화운동(化運動), 즉 스탈린 격하(格下)운동이 전체 공산권에서 일대 동요를 일으키고 있던 시기였다. 이때 노동당 내의 반(反)김일성 연합세력, 즉 최창익(崔昌益)을 중심으로 한 연안파가 주동이 되고 박창옥(朴昌玉)을 선두로 하는 소련 2세파의 대부분이 합세한 당(黨) 최고위층이 김일성에 도전했다. 이들은 확실히 흐루시초프가 추진하고 있던 스탈린 격하운동으로부터 정신적 격려를 받으면서¹⁹²⁵⁾ 김일성의 맹진적(盲進的) 스탈린식 “사회주의적 개조” 정책과 중공업 우선주의정책, 그리고 그의 개인숭배 작품 등에 반기를 들고 나왔다. 드디어 그들은 56년 8월 당 중앙위원회에서 공공연히 그를 타도하고자 행동에 나섰다.

그러데 이들 반(反) 김일성 파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다수결로 독재자를 제거할 수 있으리라는 치졸한 전술로 말미암아 허무하게 패배하였다. 김일성은 이들을 의례히 당의 “단결과 통일”을 파괴하려고 책동한 “반당적, 반혁명적 종파분자”로 몰아붙이면서 깡그리 숙청했다. 이들의 패배로 말미암아 김일성의 1인 독재체제와 우상화는 천리마(千里馬)운동이라는 대중 동원운동 속에서 더욱 촉진되었던 것이다.

1925) 뒤에 와서 김일성은 이것을 자주 밝혔다. 일례로 《로동신문》, 1963년 10월 28일자 사설. 中國共產黨도 毛澤東과 친근했던 朴一禹가 김일성에 의하여 黨에서 축출된데 충격을 받고 延安派의 김일성 타도 운동에 찬동했던 사실을 란코프 교수는 자신의 상황판단에 의거하여 증언하고 있다. 안드레이 란코프, 『북한 현대정치사』, 1995년, 울음출판사, p. 218.

당시 김일성은 그 이전 10년 동안의 집권을 통하여 정적들을 진압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자기의 지위를 견고하게 구축해 놓았으며, 흐루시초프 등장 이후의 “자유화” 추세에 대처할 정치적 조작방법도 이미 갖추어가고 있었다. 김일성은 국제적인 개인 숭배 반대운동에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여기서 그는 개인숭배의 책임을 이미 숙청된 박헌영 일파의 죄과 탓으로 돌렸다. 즉 그는 개인숭배 사상을 전파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당의 통일과 단결”을 파괴하려고 획책해온 당내 “종파분자들”—박헌영 일파였다고 뒤집어씌웠다. 그는 1956년 4월 노동당 제3차대회에서 변명하기를 김일성 개인숭배 사상은 해방 직후부터 남반부에서 당원들과 간부들이 “박헌영과 그 악당과 기타 종파분자들을 우상화”한데서¹⁹²⁶⁾ 비롯했다는 것이다. 그는 박헌영 개인숭배를 다음과 같이 규탄했다.

…종파의 나쁜 영향에 물젖은 적지 않은 간부들과 당원들은 개인의 역할을 지나치게 우상화하였으며 그 지혜를 대중의 집체적 [集體的 = 集團的] 지혜보다 더 높이 평가하며 그 [박헌영]에게 맹종함으로써 그가 범한 과오를 감각할 수 없었고, 과오조차 좋은 것으로 보며 따라서 그와의 강한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였습니다.¹⁹²⁷⁾

이상의 비판은 곧 김일성 자신에게도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던 목적은 명백했다. 즉 그는 당의 “단결을 고수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종파주의와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개인숭배 사상을 철저히 청산”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외치면서 개인숭배 반대운동을 자기의 권력 강화에 역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1956년의 “8월 종파”¹⁹²⁸⁾ 사건은 박헌영일파를 미제의 고용간첩으로 몰아 모두 숙청한 이후 당내에서 김일성의 영도권이 부딪쳤던 가장 중대한 위기였다. 전권을 장악한 독재자가 ‘당중앙위원회’ 공개회의에서 그렇게도 노골적인 공격을 받았던 사례

1926) 『김일성선집』 4, 1960년 판, pp. 539~540.

1927) 같은 책, p. 539.

1928) 이 사건의 상세한 내막은 많은 부분이 아직까지 연막에 가려져 있다. 러시아 학자 안드레이 란코프가 평양주재 소련 대사관의 상당수 비공개 자료를 토대로 하여 분석한 실상의 주목할 만한 부분은 그의 저서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 현대정치사』(도서출판 오름 발행), 1995년 중 제6장 「1956년 8월 사건과 북한의 행로」에 들어있다. 이 책은 영문 개정판, Andrei Lankov, *From Stalin to Kim Il Sung-The Formation of North Korea 1945~1960*, 2002, Rutgers University Press 중 August Challenge 부분을 참조.

는 그때까지 공산권 내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김일성은 반대세력을 “반당적, 반혁명적 종파분자”라는 판에 박힌 규탄으로 몰아 철저히 숙청함으로써 화를 북으로 역전시켜 마침내 “당의 통일”과 “노동계급의 독재”라는 명분아래 난공불락의 1인 독재체제를 확립했다. 이것은 바로 스탈린, 모택동이 사용한 수법과 흡사했다. 그리하여 1956년 이후 김일성은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이다. 동(東)유럽에서는 스탈린주의가 급격히 퇴조하고 있던 시기에 북한에서는 반대로 그것이 고조하고 있었다. 실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다.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격하(格下)운동 속에서 일어났고 소련, 중국, 동(東)유럽 제국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자유화”의 물결은 “문화대혁명”이니, “네오 스탈리니즘”이다 하는 역류에 의하여 밀려났다. 그리하여 등소평, 고르바초프가 등장할 때까지 이 나라들의 정치체제는 질식 상태에 빠져들어 경직화 된 전제주의적 1인 체제, 또는 과두(寡頭) 독재체제로 되돌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 및 동(東)유럽, 그리고 단명했던 “백가쟁명(百家爭鳴)” 시대의 중국 등은 통치 양식이나, 인민의 사회생활이나, 지적 풍토는 북한의 그것과 비교하여 볼 때 숨 막힐 정도는 아니었다. 이 차이는 그곳에서는 전체주의적 당(黨)이 불완전하게나마 비(非)스탈린화 운동의 세례를 받았지만 북한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8월 종파” 사건에 뒤따라 김일성은 “중앙당 집중지도사업”¹⁹²⁹⁾이라는 공포의 광

1929) “中央黨集中指導”란 “8월 宗派사건”이 일단락을 짓자, 그 여세를 몰아 각처에 잠복해 있던 “延安派”, “蘇聯派”의 잔당을 색출하고, “8월 종파사건”과는 무관한 일체의 불평분자, “不純分子” 등을 적발하여 깡그리 소탕하기 위한 대중적 肅清운동이었다. “집중지도사업”을 총 지휘한 책임자는 김일성의 친동생 金英柱(중앙당 지도부장)이었다. “집중지도사업”은 수개월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1958년 5월 30일 ‘黨常務委員會’에서 채택한 〈反革命분자와의 투쟁을 全 黨的, 全 人民의 운동으로 전개할데 대하여〉라는 「決定」(5·30 결정)을 채택한 후 약 반년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친 다음 1958년 11월에 막이 올랐다. 그리고 1960년말까지는 대체로 끝이 났다. 집중지도 성원에는 中央黨-行政府의 거의 모든 핵심간부와 김일성대학 졸업반 학생의 일부까지 무려 7,000여명이 북한 전역에 배치되어 道-郡-里의 小組(그루뎡)로 細分 조직, 이 숙청사업을 강행했다.

이 “집중지도사업”은 북한주민을 출신 社會階級과 政治性分을 기준으로 하여 미세하게 구분하고 각 도시, 각 지방, 각 기관 안에 잠재해 있는 “反革命分子”를 색출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그 방법은惡의 극치라 할 만큼 실로 교활하고 간악한 것이었다. 집중지도원들은 첫 단계에서는 “寬大政策”이라는 것을 내세워, 누구든 자기가 저지른 罪를 뉘우치고 정직하게 自首하면 일체의 범죄행위도 불문에 부치고 관대하게 처리한다고 선전했다. “관대정책”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害黨행위는 물론 사소한 불평불만까지도 자백했다. 이렇게 하여 수집한 자료들을 기초로 다음 단계에 진행시킨 것이 곧 “公開鬭爭”의 방법이었다. 이 방법은 누구나 자수하면 “관대정책”의 혜택을 받는다는 懷柔의 모형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

풍을 몰고 왔다. 이 “사업”은 1936~38년대 소련에서의 예조프(Nicholai. I. Yezhov)의 대숙청을 방불케 하는 가공할 정적 소탕전이었다. 김일성에 내심 비판적이거나 반대의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까지 살살이 색출하여 인민재판에 회부, 투옥 또는 공개처형했다. 그렇게 하여 당은 드디어 “통일”되었다. 김일성은 ‘노동당 제4차 대회’(1961년 9월)에서 과거를 회고하면서 당은 “반당 종파분자들과 그들의 사상 여독을 반대하는 굳센 투쟁을 통하여…오랫동안 우리나라 노동운동에 커다란 해독을 끼쳐온 종파를 때려 부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였으며 조선 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실현하는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였다”¹⁹³⁰⁾고 1인 독재체제의 확립을 호언했다.

이 말을 신호로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은 당의 유일사상 체계”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했고, 모든 당원들은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여야 한다는 명령을 더욱 더 강조했다. 1968년 4월 22일 당내서열 제3위에 있던 김 일(金 一)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세운다는 것은…정치적 수령의 사상으로 전당(全黨)이 무장하

들을 자수시키는 방법과, 끝내 자수를 거부하는 자(사실은 자수할 것이 없는 자도 포함)는 극형에 처한다는 공포의 본보기를 만드는 방법이었다. “공개투쟁”은 평양 특별시에서는 매 구역마다 20건, 강원도에서는 매 郡마다 5건, 개성 시에서는 20건, 황해도에서는 매 郡마다 10건 정도로 실시되었다. 이 “공개투쟁”의 현장에서는 “公開人民裁判”을 벌이고, 그 즉석에서 총살을 집행하는 “群衆公判” 같은 형식도 동원되었다. 이러한 공개적 시범 총살은 각 道 단위로 5건 정도씩 적용되었다. “중앙당 집중지도사업”에 동원된 경력이 있는 金南植은 간략하지만 온 북한사회를 공포 속에서 전율케 했던 숙청운동의 내막을 폭로하고 공개처형의 목적담을 공표한 일이 있다.(金南植, 『休戰後の北韓社會』, 1965년, 内外問題研究所)

“공개투쟁”의 다음 방법으로는 小組鬭爭(小 그룹투쟁)이라는 것이 있었다. 反革命行爲를 한 단서는 있는데 자수하지 않는 자나 규명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심의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자백에 불응하는 자의 범죄 사실을 날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小그룹투쟁”에 걸려든 심사대상자는 공갈-협박-구타는 물론이요, 물고문, 잠 안 재우기, 마취고문 등이 2~3개월 씩 계속되는 것이 상례였다. 이러한 악랄한 고문으로 사실을 자백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심사대상자는 견디어 낼 수가 없어서 지도요원들이 시키는 대로 허위진술을 했다. 이것을 자료로 하여 허위는 진실로 날조되어 결국 심사대상자는 처형당했다. 中央黨 集中指導事業에서 어마어마한 反革命罪로 몰린 대부분의 사례는 이런 식의 小그룹鬭爭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金南植, 앞의 책, p. 76.) 中央黨集中指導事業의 요령 있는 총체적분석은 北韓研究所 발행, 『北韓總覽』, 1983년, pp. 302~308.

1930) 『김일성저작선집』 3, 1968년, p. 154.

고, 그에 기초하여 모든 당원들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통일을 이룩하며 당의 조직적 의사인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당 중앙수령의 유일적 지도 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진행되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것, 이것은 조선 혁명의 중국적 승리를 위하여 ... 몸바쳐 싸울 것을 결의하여 나선 조선 로동당원들 공산주의자들에 있어서의 최고의 의무이며 가장 선차적인 과업이다. 오직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여야만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조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끝까지 싸울 수 있는 혁명가로 될 수 있다.¹⁹³¹⁾(밑줄은 저자)

북한의 모든 인민의 사고와 행동과 생활을 1인의 최고 권력자애로 몰입시켜 획일화하려는 위의 김 일의 주장은 주체사상을 강조할 때마다 더욱 더 요란하게 퍼져갔다. 그리하여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이것이 다시 “김일성주의”로까지 격상되어 불리운 과정은 곧 김일성 개인숭배의 상승과정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에 대한 “장군” 칭호, 그의 유격대 투쟁 경력의 과장 찬양, “영명한 지도력”의 선전 등은 1945년 10월 중순이래 소련군정 당국에 의하여 체계적,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던 개인숭배 운동의 출발이었다. 그런데 스탈린 격하 이후에는 김일성 자신과 그의 측근들이 소련군정 시대의 그런 출발을 계승하여 그를 살아있는 신(神)의 지위에까지 끌어올렸던 것이다.

제3절 권력에 만취(滿醉)

김일성은 지난 50년 동안 북한 사회를 오직 자기 한 사람의 이름에서 지배해왔다. 따라서 ‘조선로동당’과 인민공화국을 창건한 일, “미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여 “조국해방 전쟁”을 “영광스러운 승리”로 이끈 일,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한 일, 당의 자주노선을 확립한 일, 북한을 “자주적 사회주의 공업국가”로 발전시킨 일,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창안 추진한 일, 사회주의의 “지상낙원”을 건설한 일 등등, 당이 선전하는 모든 “빛나는 업적들”은 그 어느 하나도 김일성 개인의 독창이 아닌 것

1931)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더 잘하기 위한 1958년 인민 경제발전 계획에 대하여」라는 김 일의 보고. 《로동신문》, 1968년 4월 24일자.

은 없는 것으로 되었다. 지나간 근 반세기동안 북한에서 간행된 선전 자료와 당 기록을 훑어보면 당 이론가와 선전요원들이 북조선 인민과 남한의 대중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부각시키고자 한 김일성의 *이미지*(영상)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요약된다. 즉

- ① 김일성은 일제 통치 하의 암흑시대에 민족 해방투쟁에 영웅적으로 헌신 분투한 질세의 민족적 애국자인 동시에 위대한 공산주의자며 탁월한 수령이었다는 것.
- ② 그는 10대 소년 시절에 이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한 “천재적”이론가요, 혁명 전략가요, “백전백승의 영장”이라는 것.
- ③ 그는 상당한 기간 신중한 준비 과정을 거치고, 간고한 항일 혁명투쟁의 경험을 통하여 조선 혁명사상 최초로 진정한 *맑스-레닌주의*의 당을 창건한 혁명의 “천재적” 영도자라는 것.
- ④ 그는 1936년에 이미 민족통일전선 노선에 입각하여 오늘의 공화국 정부의 모체인 “인민정부”를 만주에서 조직했던 역사적 애국자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그의 “인민정부”의 정통적 계승자라는 것.
- ⑤ 그는 민족적 대의(大義)에서 보나 *맑스-레닌주의*의 *이데올로기*에서 보나 남북한을 통하여 정통성을 지닌 유일무이의 영도자라는 것.
- ⑥ 조선은 소련군에 의하여서만 해방된 것이 아니라 주로 김일성 지휘하의 “조선 인민혁명군”의 투쟁에 의하여 해방되었다는 것.
- ⑦ 그는 한국전쟁 때 “미제(美帝)”의 침략군을 격파함으로써 “미제”가 몰락하는 시초를 열어놓았다는 것.
- ⑧ 그는 낙후하고 전쟁에 의하여 파괴되었던 북조선에서 자본주의 국가들이 1세기에 걸려서 이룩한 공업화를 불과 10년에 완수하는 세기적 기적을 창조했다는 것.
- ⑨ 그는 외세의 간섭을 받는 일 없이 소년시절부터 주체성을 견지해 온, 남북을 통하여 가장 “자주적”이며 “독창적”인, 민족적 영도자라는 것.
- ⑩ 그는 “미제”의 침략을 분쇄하고,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독자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식민지-반(半)식민지 나라들이 민족적 독립의 쟁취와 사회

주의 국가건설에서 가장 올바른 방향을 명시해준 “인류의 태양”이라는 것.

- ⑪ 그는 과거에 항일 무장투쟁과 항미(抗美) 구국투쟁을 잇따라 승리로 이끌었던 것처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도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 틀림없다는 것 등등이다.

거짓말이 거의 대부분인 이상의 주장들을 입증하고 객관화시키기 위해 북한의 당 선전일꾼들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을 과장, 왜곡, 삭제, 변조, 창작하면서 그의 소년시절 이래의 경력을 웅대한 *파노라마*로 전개시켜왔고, 그 자신을 가장 감동적인 전설적 영웅으로 만들었다. 그의 “애국적”소년 시절과 유격대 투쟁의 경력은 *빨치산* 동지들의 회상기, 문예일꾼들의 소설, 시, 음악, 연극, 그림, 혁명 가극의 형식으로 예찬해왔다. 그는 해방 이후의 투쟁을 통해서는 “혁명의 영재”로써 또는 *맑스-레닌*주의를 가장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사상가, 이론가로 무오류성(無誤謬性)을 실증해 온 “위대한 수령”으로 우상화 되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수령의 우상화 작업은 1966년 8월 중-소 대립의 와중에서 자주노선을 선포한 후로는 더욱 가속화되어 갔다.

이렇게 북한 사회에서는 전체 인민이 “하나의 사상”, “하나의 의지”에 의하여 통치되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선전해왔고 당 대회, 최고인민회, 군의 행사에서는 물론 이요 그 밖의 어떤 군중집회, 기념식, 회의석상에서도 김일성의 “가장 정확한 영도”와 “뛰어난 정치적 역량”에 대해 최고의 미사여구로 수식된 아첨이 쏟아져 나왔다. 이와 같이 김일성 개인숭배는 날이 갈수록 정밀하게 허구화(虛構化), 의식화(儀式化), 규격화되어 갔던 것이다. 북한의 *매스 미디어*가 그의 한 공식행사 참석광경을 묘사한 것들을 보고 있노라면 사람들로 하여금 고대 *로마*황제의 행차 못지않게 장엄하고, 열광적이며, 극치에 이른 영광의 분위기를 연상케 한다. 한 대표적인 예로 그가 근 40년 전인 1970년 3월 지방 산업일군 대회에 참석했을 때의 장면의 일부를 회상해 보자.

… 대회장 정면에는 우리 당과 사천만 조선인민의 가장 위대한 수령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 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웅이시며, 세계 공산주의 운동과 노동 운동의 탁월한 영도자이신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가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나오시기를 엄숙히 기다리고 있는 동안 전체 회의 참가

자들의 심장은 40여 년간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 몸에 지니시고 몸소 앞장서서 가시덤불 길을 헤치시며 그이의 혁명적 군대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시면서 우리의 혁명을 승리의 한 길로 확고히 영도해 오신 위대하고 영명하신 수령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경모의정과 뜨거운 충성의 정령로 높이 고동치고 있었다....1932)

이와 같은 최대한의 미사여구와 아침에 가득 찬 찬사는 대규모 공식 석상에서 의례히 천편일률적으로 들려 왔지만 그 후에는 다시 이에 더 첨가되어 그를 “희망의 등대”, “우리 시대의 전설적 영웅”, “백두산의 정기를 타고 난 위대한 수령”, “민족의 태양”, “기적의 영도자”, “역사의 거인” 심지어는 “세계 인민의 아버지”라고까지 불리우고 있었다. 드디어 “위대한 수령”이 대회장에 나타나났을 때의 광경을 해설자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 상오 9시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단상에 오르셨다. 이 순간 전체 대회 참가자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의 환호를 더욱 높이면서 장내를 뒤흔드는 우뢰와 같은 박수로서 경애하는 수령을 열렬히 맞이했다. 만세의 환호와 그칠 줄 모르는 박수 속에서 녀성 노동 혁신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에게 대회 참가자들과 전체 전국 지방 산업일군들의 무한한 흠모의 정이 담긴 향기 그윽한 꽃바구니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드렸다....1933)

북한에서는 이미 공식적으로 상용되어온 이러한 헌사(獻辭)는 일찍이 스탈린이나 모택동이 겨우 받아보았을 정도의 절절한 것이었다. 수령에 대해 그런 헌사를 올리 고서야 밥을 먹을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으며, 행복과 생의 보람을 찾을 수 있다면 누가 그것을 가히 “해방”이라고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김일성은 바로 스탈린이나 모택동, 동(東)유럽 독재자들이 권좌에 앉아있을 때에 의례히 그러했듯이, 마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원칙을 조선의 구체적 조건에다 “창조적으로” 적용한 탁월한 전략 전술가로 칭송되어 왔다. “천재적인 이론가”로서 그는 비단 정치문제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경제문제와 문학, 예술, 심지어 언어학에 관해

1932) 《로동신문》, 1970년 3월 2일자.

1933) 위와 같음.

서까지 논문을 발표했다.¹⁹³⁴⁾그런 그가 생전에 스탈린의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이나 또는 모택동의 『모순론』과 『실천론』같은 철학적 저작을 내놓지 못한 것이 오히려 의아스러운 일이다.

북한의 공식 간행물만 보아도 김일성은 스스로를 조선의 스탈린에 한정시키는데 만족하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의 이론가, 역사가들은 그를 조선의 레닌의 지위에까지 끌어올리려고 모든 지혜를 짜냈다. 이들은 제정 러시아에서 레닌이 수행한 역할에 비견할 수 있도록 김일성을 조선 공산주의 운동에서 가장 건실하고, 자주적이며 과학적인 조직자요 참된 프롤레타리아 당의 최초의 창건자라고 주장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북한은 지금까지 수십만 부, 수백만 부의 출판물들을 찍어내어 세계에다 뿌렸다. 이들은 이 나라의 수다한 혁명가들이 전개했던 반일 민족독립 운동을 우리 현대사의 기록에서 거의 다 삭제해버리고 그 공백을 김일성의 소위 “항일무장투쟁”에 관한 사후 창작물로 메웠다. 그리하여 김일성 이전의 한국의 민족주의 혁명가들은 물론이요, 공산주의자들의 이름과 투쟁사까지도 깡그리 무시해버렸다.

김일성과 그 직계 이외의 사람들의 이름은 거의가 비판의 대상으로만 논의된다. 1950년대 후반기 이후 북한에서 출판된 어떤 혁명운동사에도 1925년 조선공산당을 창당했던 선행 공산주의자들의 이름은 차금봉(車今奉)을 제외하고 찾아보기가 어렵다. 북한의 역사책에서는 이 선행자들을 통틀어 당시의 당 조직을 파괴한 “소(小)부르주아 출신의 종파분자들”이라고 공격하는 것이 획일적인 기술 방법이었다. 따라서 조선에 존재해온 진정한 공산주의 정당으로서는 해방 후 김일성이 조직한 ‘조선로동당’ 하나가 있을 뿐이다. 김일성은 자기 이전의 모든 혁명가들의 투쟁 업적을 비방야유함으로써 민중의 존경을 독점하려고 해왔다. 그가 높이 평가하는 선배, 또는 혁명세력으로는 구체적인 지도자나 당 조직의 이름은 기명을 피한 채 단지 “노동계급” 또는 “인민대중”이라는 추상적 존재를 내세울 뿐이다.

1934) 김일성이 썼다는 논문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태제」(1964),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1964), 「혁명적 문학예술을 창작할 데 대하여」(1964), 「사회주의 경제의 몇 가지 이론적 문제에 대하여」(1968),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에 대하여」(1967),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태제」(1977) 등은 모두가 “불후의 고전적 문헌”이 아니면 위대한 “강령적 문헌”으로 최고의 평가를 받아 왔으며, 그중에서 어떤 것은 발표 후 몇 달이 되면 의례히 성대한 기념 보고대회를 열어 “위대한 수령”이 천명한 만고의 진리를 되새겼다.

제5장

장년기의 “수령”에 대한 신격화(神格化)

제1절 인민민주주의의 “세계적 선구자(先驅者)”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열광적으로 찬양되는 분위기 속에서 북한의 당 선전원들은 모택동이 1940년 이래로 도식화(圖式化)했던 “반제-반봉건적 민주혁명”(“신민주주의 혁명”)의 이론도, *코민테른*의 공식적인 통일전선전술도, 멀리는 1930년대 *다미트로프*의 인민전선에서 유래한 전술도, 1945~48년 *스탈린*이 정립한 대전 후의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도, 모택동에게 특유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군중노선”에 의한 지도방법도 모두 김일성에 의하여 창시된 것처럼 주장하는데 서슴치 않았다. 이로써 그들은 세계의 선구적 공산주의자들의 명성을 모욕하기에 이르렀다. 일례로 1970년 9월 《로동신문》의 한 사설은 김일성이 18세던 1930년 여름에 동만(東滿)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을 제시했다고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역사상 처음으로 밝히신 인민 민주주의 혁명 노선은 … 독창적인 혁명 노선이며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준 위대한 강령이었다. 이때로부터 조선혁명은 인민 민주주의혁명의 기치 밑에 통일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혁명운동 역사에서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선구자로 되었다. …(1935)(밑줄은 저자)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18세의 소년 혁명가(?)는 *스탈린*이 1944~45년에야 “인민민주주의 노선”을 처음 구상했던 것보다 적어도 15년을 앞서 그것을 “독창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된다. 이 어이없는 역사의 날조는 자주노선이 한창 고조되던 때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1935) 《로동신문》, 1970년 9월 29일자.

김일성이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당의 “자주성”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앞에서 누누이 언급했던대로 1966년 8월 12일이었지만 그 후 당의 선전 문건들은 수평이 “1930년 봄 길림 감옥에서 나오신 후 더욱 무르익히시었던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혁명노선을 내놓으시었다”¹⁹³⁶⁾고 했다. 그렇다면 그의 자주성은 1966년 8월, 그것을 평양에서 처음 선언했던 때보다도 36년 전에 제시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때 그의 나이는 18세! 이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관해서는 사실 여부를 굳이 논할 필요조차 없다. 또 하나의 황당무계한 이야기는 이미 앞서 인용한 바 제2차 세계대전 말 북한의 회령(會寧), 청진(淸津), 나진(羅南), 함흥(咸興), 평양(平壤) 등의 일대를 일본군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은 다름 아닌 김일성의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었고, “그의 강력한 타격 앞에 일제 놈들의 철벽의 방어선은 흠 답처럼 무너졌으며 100만의 관동군도 거품처럼 사라졌다”는 실로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조롱하는 허언이었다.

이렇게 김일성을 신격화하는 과정에서 그의 출생지인 만경대는 “조선 혁명의 요람”으로 불려 왔으며 그가 살던 초가집은 물론이요, 집 둘레의 한 그루 나무, 한 덩어리의 바위, 조그만 공터까지도 그의 어린 시절의 미담을 전해주는 역사적 유적으로 보존되고 있다. 만경대는 1970년대의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을 포함하여 사시사철 국내외의 빈객들이 안내를 받는 조선 혁명의 *뿌리*가 되었다. 그의 항일 혁명투쟁을 숭상하는 혁명사적관(史蹟館)과 전승(戰勝)기념비는 북한 땅 도처에 퍼져나가고 있으며 그의 아버지, 어머니, 삼촌, 전처 김정숙의 혁명적 애국주의 투쟁을 기념하는 동상, 사적관, 학교 등이 도처에 서있다. 심지어 그의 증조부, 고조부, 조부, 조모, 삼촌, 동생, 외조부, 외숙부들까지 조선에서 제1급의 애국 투사, 혁명가의 명예를 차지했다.

김일성 숭배는 이와 같이 조상 숭배까지 상승하다가 1980년 이후에는 그의 장남이며 권력 상속자인 김정일에까지 하강하여 가족주의화한 면에서 스탈린이나 모택동의 개인숭배와는 아주 판이하다. 김일성의 회갑을 기념하기 위하여 평양의 만경대 언덕 위에는 조선 혁명박물관이 드높이 세워져 붉은 수도의 전모를 한눈에 내려다보고 있다.¹⁹³⁷⁾ 북한의 선전은 이 박물관을 “조선혁명의 위대한 불후의 기념비”라고 구

1936) 《조국통일》지, 1969년 10월 8일자.

가하고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김일성 우상화를 위하여 세운 거창한 건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상징하는 170m의 웅장한 ‘주체사상 탑’과 그의 항일 무장투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거대한 ‘개신문’이 수도 평양에 세워졌다. 스탈린과 모택동, 동(東)유럽의 어떤 독재자에 대한 우상화도 이 오만하고 허영에 찬 작태에 비하면 도리어 겸손한 편이었다.

1960년대 후반 이래로 주목을 끄는 것은 김일성 개인숭배를 북한으로부터 국제적으로 확산시켜온 선전활동이다.¹⁹³⁸⁾ 평양의 ‘외문(外文)출판사’는 김일성에 관한 자료들을 대량으로 간행함으로써 그의 “항일 무장투쟁”과 “주체사상”을 정신적 기초로 한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실 새 없이 제3 세계에 선전해왔다.¹⁹³⁹⁾ 이런 선전활동은 비단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적극화 되어 갔다. 1973년 한 해만 해도 김일성의 “천재적 노작들”은 “세계 수십 개 나라들”에서 “30여개 민족어”로 수천만 부나 번역 출판되었으며 무려 억만 부를 훨씬 넘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 출판물들에 게재되었다는 것을¹⁹⁴⁰⁾ 자랑

1937) 總面積 5만 3천 7백 평방미터의 광활한 지면을 차지하는 이 박물관 내 90개의 전시실에는 金의 “빛나는” 혁명투쟁과 그의 “애국적” 선조들의 1세기에 걸친 家系譜를 과시하기 위해 수다한 기록, 그림, 참고자료, 그 밖의 품목들이 진열되어 있다. 이름은 朝鮮革命博物館이지만 김일성 일가 외의 다른 민족적 선열이나 공산주의자의 이름은 찾아 볼 수 없을뿐더러, 수다한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이 왜곡 아니면 조작되어 있다는 것이 이 박물관의 특징이다. 그리고 진열된 총거리는 무려 4천5백 미터, 즉 10리를 넘고 있다는 것이다. 박물관 정면에는 김일성의 거대한 동상이 서 있고, 동상의 배경으로는 白頭의 靈峰이 묘자이크로 찬란하게 꾸며져 있으며 동상 오른쪽에는 그의 “抗日 武裝闘爭”의 역사를 원편에는 그의 영도하에 이룩되었다는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의 모습을 웅장한 화면으로 그린 대리석 조각이 펼쳐져 있다.

1938) 『김일성저작선집』은 이미 1965년부터 영어, 러시아어, 독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아랍어로 번역되어 세계각처에 살포되어 왔으며 그의 전기(1969)와 『혁명투쟁약사』(1970) 등도 그에 관한 각종 冊子들과 함께 여러 나라 말로 출판되었다. 1973년 초 『저작선집』 제5권이 간행되었을 때 평양의 선전원들은 이것이야말로 조선혁명의 “불멸의 기념비”니,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전략전술을 통합한 百科王書적 문헌으로서 馬스-레닌주의의 寶庫를 풍부케 하고 그것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등 전에 없던 새로운 찬사를 만들어냈다. 1984년 이후로는 현재까지 『김일성저작집』 30여권을 발간하여 이것을 각국어로 번역, 세계 각국에 뿌리고 있다.

1939) 平壤은 알제리아, 이란, 이집트, 시리아, 수단, 콩고(브라자빌), 탄자니아, 인도, 버마, 파키스탄, 레바논, 네팔 등 제3세계에 속한 나라들의 신문사와 출판사로 하여금 김일성의 논문 연설문을 보도 발행케 하는데 막대한 재정을 소모해 온 것을 보면 그들이 대외적 선전활동에 얼마나 정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1940) 《근로자》, 1974년 4호.

했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하고 제3세계가 사실상 소멸함에 따라 이상의 모든 선전 활동들의 효과는 물거품이 되었다.

특히 흥미를 끄는 것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학습하기 위한 국제적 연구소조의 조직사업이었다.¹⁹⁴¹⁾ 1990년 말 현재도 그런 연구소조들은 93개국 877개에 이르고 있었다.¹⁹⁴²⁾ 이밖에도 「전 아프리카 김일성동지 주체사상토론회」(1972. 12), 「중근동 및 아프리카 지역주체사상에 관한 과학토론회」(1973. 11)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 지지를 위한 세계대회」(1977. 3, 1978. 11, 1981. 3, 1984. 3) 등등이 각국에서 열렸다. 이러한 종류의 회의는 시에라리온에서도, 팔리에서도, 벨기에서도, 일본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알제리에서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북한의 “사회주의 지상낙원”을 비추고 있던 “민족의 태양”은 드디어 남한을 제외하고는 온 누리에 찬연한 빛을 뿌리는 그야말로 “인류의 태양”으로 되어갔던 것이다.

이와 함께 김일성은 많은 당-정 간부들을 외국에 파송하고 외국의 빈객들을 평양으로 초청해오는데 막대한 재력을 소모하였다. 공산주의자, 비(非)공산주의자를 포함하여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서유럽-일본-미국 등으로부터 상당수 정치인-언론인-예술인-학자-학생-실업인들이 그동안 북한을 다녀갔다. 외국인들의 북한 방문은 1971년 7월 키신저의 극적인 북경방문으로 미-중간에 해빙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이후 더욱 빈번해졌다. 이른바 “맞불놀이” 대응작전이었다. 1971년 9월에서 1972년 10월 사이에는 일본의 주요 신문기자들의 김일성과 회견의 기회가 허용되었고, 회견 내용은 그의 “주체사상”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그의 “비원(悲願)”, 그리고 남북한 관계의 개선을 위한 그의 “합리적 제안”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러한 외국인들의 북한 내에서의 여행은 엄격히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국 후의 그들의 여행담은 구미의 방문객을 제외한다면 예의상 또는 정치적 고려에서 대개는 표면상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1980~89년 사이에만 해도 북한은 175개국으

1941) 이를테면 ‘김일성동지 노작연구소’,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소’, ‘김일성도서관’, ‘주체사상 국제연구소’, ‘주체사상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아시아지역 주체사상 연구소’, ‘김일성 역사연구소’, ‘주체사상 연구소조’ 등등의 이름을 가진 단체들이 유럽·아프리카·아시아·중남미의 각처에 나타나고 있었다.

1942) 통일원, 『북한개요』, 1990년, p. 395.

로부터 무려 9,429명을 초청했고, 북한도 4,654명이 143개국을 방문케 했다.¹⁹⁴³⁾ 김일성의 이 같은 초청외교는 본질적으로는 개인숭배의 국제적 확산 운동이었다. 또한 이것은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장기적 정치 전략의 일환이었다. 동시에, 자기 자신이야말로 민족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애국적이며, 정통성 있는 유일한 조선의 지도자라는 인상을 전 세계에 퍼뜨리려는 선전사업의 주요한 부분이었다.

김일성은 모택동의 혁명투쟁이 1930년대와 40년대에 그의 혁명근거지를 방문했던 외국(특히 미국의 *애프가 스노우* 등) 기자들에 의하여 극히 동정적으로 광범하게 소개되었다는 사실과, 호지명(Ho Chi Minh)이 그의 “애국적”이며 “소박한” *이/미/자*로 말미암아 각국의 많은 비(非)공산주의 언론으로부터 까지도 정신적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광란적 김일성 개인숭배에 대한 국제적 찬양은 몇몇 광신분자나 또는 평양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정치 *브로커*에 국한되어 있었고, 대다수의 공산국까지도 김일성의 우상화는 조소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북한의 개인숭배 운동은 계속 강화되어 갔다.

제2절 “사회주의 대건설”과 전체주의 폭주(暴走)

1970년 이래의 북한의 동태를 살펴보면, 김일성은 그의 이른바 “3대혁명”, 즉 사상혁명-기술혁명-문화혁명의 과업을 계속 다그치고 있었다.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총체적 방법을 의미하는 이 3대혁명의 급속한 수행을 위하여 그는 “전국 농업대회”(1974년 1월), “전국 공업대회”(1974년 2~3), “선동원 열성자대회”(1974년 4월), “천리마운동 선구자대회”(1982년 11월~12월), “전민 총동원대회”(1987년 7월) 등을 잇따라 열고 매 대회마다 많은 인원을 동원했다. 그런 대회들은 경제 건설의 촉진하기 위한 대회였다. 김일성이 그런 군중대회를 계속 열어온 것은 1971년 8월에 시작된 남북대화이후 남한의 발전상을 목격하고 북한의 경제를 급속히 성장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작태

1943) 같은 책, p. 377.

는 그가 사망할 때까지 그치지 않았다.

남북한의 경제건설 경쟁에서 북한이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곧 한반도의 공산주의 통일을 실현하는 제1차적 조건이라고 휴전 이후 김일성은 일관되게 내세워 왔다. 그것이 김일성의 통일정책의 기본전략이었다. 그는 1970년 11월의 제5차 당(黨)대회에서 6개년 경제계획을 책정하고 이것을 1년 앞당겨 1975년 10월 10일, 즉 노동당 창건 30주년 때까지 조기 달성할 것을 호소하면서 인민들을 소위 “사회주의 대건설”에 총동원했다. 이 방침이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은 1974년 2월 12~13일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놓은 “사회주의 건설의 10대 전망목표”에서였다. 그는 여기서 6개년계획을 2년 앞당겨 조기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건설전선(基本建設戰線), 즉 공업 전선, 농업 전선, 수송 전선, 수산 전선 등 5개 전선을 제시하고 모든 힘을 집중하여 이것을 지원하는 “속도전(速度戰)”, “전격전(電擊戰)”, “총돌격전(總突擊戰)”을 감행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체 인민이 “돌격전”에 동원되어 건설의 속도를 최대한으로 다그쳐야 한다는 것은 스탈린주의적 기본 방식이다. 이 방식은 과거 스탈린의 소련에서도 모택동의 중국에서도 그리고 한국휴전 이후 북한에서도 실시된 것으로 김일성이 이때에 처음 제시한 독창적인 것은 아니었다. 김일성은 위의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인민 경제에 숨어있는 잠재 역량과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모든 부문을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소위 “속도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번잡하게 규정했다.

……속도전은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근로 대중의 혁명적 열의가 생산 발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주체사상과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힘을 믿고 그에 의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데 대한 군중로선의 요구를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는 새 형의 혁명적인 전투 원칙이다.¹⁹⁴⁴⁾

한마디로 속도전이란 건설의 속도를 빨리하는 일이라고 말했으면 되었을 것을 “주체사상”이니 “군중로선(群衆路線)”이니 하는 혁명의 이데올로기로 분장한 것은 “속도전”을 새로운 혁명투쟁으로 이론화시키자는 의도에서였다. “속도전”을 하나의 혁명

1944) 《근로자》, 1974년 3호.

투쟁으로 인식하는 것은 공산주의적 관점에서는 과거에도 흔히 있었던 일이므로 북한에서의 “속도전”이 그들의 주장처럼 소위 “새 형의 혁명적인 전투원칙”으로는 될 수 없었다. 스탈린은 북한보다 이미 수십 년을 앞서 소련에서 속도전을 강행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수행했던 것이다.

제5기 제8차 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김일성이 이상과 같이 “속도전”을 주장하자 북한의 모든 직장과 도시와 농촌은 “속도전”의 구호로 가득 차게 되었다. 당 기관지 《근로자》는 “속도전”을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 나가 최단 기간 안에 양적으로 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는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 전투형식”¹⁹⁴⁵⁾이라고 정의했다. “속도전”이 제창된 직후부터 “새로운 천리마속도”니, “새로운 평양속도”니, 수령에 대한 “충성의 속도”니, “70일 전투속도”니 “200일 전투속도”니 하는 등의 구호가 쏟아져 나왔다. 이것은 종래의 “천리마 속도”에 이중 삼중의 속도가 겹친 가속도를 뜻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속도전”에서는 인민들의 노력동원, 생산경쟁, 노동규율이 전례 없이 강화되었다.

스탈린 이래로 공산주의자들은 건설과 생산에서 속도 문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성패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인식해 왔다. 그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후진성을 그만큼 빨리 극복하여 선진적 자본주의 국가들을 따라잡고 앞설 수 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 의하여 먹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고정관념으로 되어왔다. 이 고정관념은 낙후된 농업국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했을 때 부터였다. ‘소련공산당’은 신생 소비에트공화국이 “자본주의의 포위하에” 있다는 공포의식 속에서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혁명을 밀고 나가야 했던 상황조건에 의하여 속도전의 그러한 고정관념은 형성되었던 것이다.

1931년 2월 4일 스탈린은 「경제 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라는 자기의 연설에서, 건설의 속도에 소련의 사활을 걸면서 다음과 같이 애국심을 호소했다.

속도를 느리게 한다는 것은 뒤떨어지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뒤떨어진 자는 두들겨 맞는다. 그러나 우리는 두들겨 맞기를 원치 않는다. 구 러시아는 몽고의 한(汗)들에 의하여... 터키의 수령들에 의하여... 영국과 프랑스의 자본가들에 의하여... 일본

1945) 《근로자》, 1974년 3호, p. 10.

의 귀족들에 의하여 두들겨 맞았다. 모두 다 러시아가 뒤떨어졌다고 하여 두들겨 쳤다... 뒤떨어진 자와 약한 자를 두들겨 치는 것, 이것이 착취자의 법칙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야수적 법칙인 것이다...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여러분은 최단 시일 내에 조국의 낙후성에 중지부를 찍어야 하며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건설에서 진정한 불세비키적 속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다른 길은 없다...우리가 그 일을 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짓밟아버리든지 할 것이다.

스탈린이 속도 문제를 특히 강조한 것은, 소련은 제정(帝政) 러시아보다 더 뒤떨어져 있으며, “미(美) 제국주의”의 직접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느끼는 공포의식이 공산주의 중국과 북한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모택동의 “대약진”운동도 요컨대 최대의 속도로 사회주의 건설을 밀고 나가자는 것이었다. 모택동이 사회주의 혁명에 승리한 뒤에는 건설의 속도문제가 중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김일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존재했다. 그러므로 김일성도 1953년 이래로 속도를 빨리 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쳐야 한다고 부단히 강조해 왔다. 북한의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 건설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욕 면에서는 중국의 “대약진” 운동과 다를 바가 없었다.

빠른 건설속도에 의하여 선진공업국을 “따라잡고 앞서라”는 스탈린의 구호를 뒤따라 모택동은 공업 건설에서 “15년 동안에 영국을 따라잡고 앞서라”는 목표를 제창한 바 있다. 김일성 역시 공업생산의 속도에서 자본주의 국가를 능가하겠다는 의욕에 충만 되어 전력, 석탄, 강철, 선철, 시멘트 등의 1인당 생산에서 1959년에는 일본에 앞설 것을 장담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욕은 소련에서도 중국에서도 북한에서도 성취하지 못하고 크게 실패했다.

이와 같이 건설의 속도를 다그치는 투쟁은 김일성이 창시한 바도 아니요, 북한에서 처음 시작된 일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가 이때에 새삼 “속도전”을 들고 나온 것은 자본-기술-노동력-설비-노동의 욕의 부족과 대중의 빈곤을 혁명적 열의로 극복하면서 6개년 계획의 목표를 노동력의 최대한의 동원과 최대한의 가동으로 달성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속도전”의 중요한 정책적 특징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긴다.”는 정치적 목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목표를 향하여 달리려면 인민들은 혁명사상에 의해 더욱 힘찬 고무를

받아야 했다.

노동당은 단순한 설득의 방법만으로는 “사회주의 대 건설”에 대한 공감과 자발적 협력을 대중들로부터 얻어낼 수는 없었다. 어떤 공산당 정권하에서도 근로자들의 생활이 극도로 빈곤한 상황에서는 온 사회의 편제화(編制化)와 강권의 발동이 “속도전”에 불가피하게 수반된다. 가혹한 노동, 생활필수품의 결핍, 늘지 않고 있는 식량 배급, 동원 체제의 강화, 당 간부들의 관료화와 특권화, 사회의 계급적 분열이 일반 대중들을 불만과 피로와 공포와 반항 속으로 몰아넣고 있던 부정적 측면들은 김일성이 부단히 직면해 온 시련이었다. 물질적 보수와 정신적 자유를 넉넉히 부여하여 그러한 현상들을 해소시킬 능력이 없는 독재자로서는 인민들을 계속 동원하며 그들의 노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의거할 궁극적인 방법은 강제밖에 없었다.

그러나 강제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통치자는 가능한 한 인민들의 자발적 협력을 얻으려 하고 있으며, 그 상투적인 방법은 인민들의 혁명적 열의를 고취하는 정치선전 교육이다. 지난 40여년 동안 북한에서 김일성의 개인숭배를 구심점으로 한 “사상교양사업”을 날이 갈수록 더욱 강화하여 온 것은 김일성 독재체제가 지닌 취약점을 광적 혁명의식과 당(黨)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의 함양으로 보강하려는 시도였다. 인민들의 불만과 피로와 불평을 물질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해소시켜 줄 능력이 없는 개발도상의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속도가 강조되면 될수록 사상선전 교육과 그 핵심으로서의 개인숭배도 그만큼 더 강화되어 왔던 것이다.

“사회주의 대 건설”을 표방한 “속도전”이 전개되면서 북한에서는 개인숭배 운동이 더욱 더 활발해졌다. 당내의 일체 비판 세력에 대한 탄압을 의미하는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 “관료주의”, “주관주의”, “요령주의”, “형식주의” 등등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 속에서 모든 당원들은 “주체형의 참다운 공산주의 혁명가”, 즉 김일성형의 공산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배워왔다. 그리하여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결행되었던 “세계 최초의 민족해방 혁명전쟁”으로까지 격상되었다. 드디어 그는 “우리 인민의 수천 년 역사에서 처음 맞이한 위대한 수령님”이란 극상의 예찬을 받기에 이르렀다.

당(黨)의 유일사상 체제에 상응하도록 “유일적 영도”라는 용어가 새로 등장하는가

하면, 김일성은 1930년대에는 일제(日帝)를, 1950년대는 미제(美帝)를, 즉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 강적을 물리치신 전설적 영웅”이라는 감동적 표현으로 예찬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천재적 지혜와 능력을 보유하는 절세의 지도자로 절대화-신격화되었다. 벌써 30년 전에 그의 어떤 선전요원은 1974년 《근로자》에서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새로운 양양을 위한 힘의 중요한 원천은 어떤 물질적 객관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령님에 대한 모든 일꾼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충성심에 있다”¹⁹⁴⁶⁾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당원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에게 끝없이 충직한 “친위대”, “결사대”가 되라고 호소했다. 이 잡지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 정책에 대한 절대성의 정신, 무조건성의 원칙을 톡톡히 간직하고 수령님의 명령 지시를 집행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과 혁명적 자각을 가지고 투쟁할 때 사회주의 대 건설에서는 빠른 속도가 창조될 수 있으며 승리가 이룩될 수 있다.¹⁹⁴⁷⁾

이렇게 “속도전”은 수령에 대한 충성심에서 승리의 열쇠를 찾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속도전”이 종교에 흡사한 개인숭배를 매개로하여 전개되어 갔다는 정치 논리를 보여주고 있다. 김일성은 “사회주의 대 건설”을 위하여 5개전선(前線)과 함께 “10대 건설”이라는 “웅장한 목표”를 제시했다. 강철-유색금속-석탄-전력-시멘트-기계가공품-수산물-화학비료-간척지 개간-알곡 등 10개 산업 부문에 걸쳐 거창한 전망 목표를 숫자로 내놓았지만 달성할 시한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앞으로 몇 년 후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또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전망할 수가 없었다. 결국 그의 생전에 그런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는 빈사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의 일관한 정치적 집념이었다. 남한의 경제발전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고 있던 그는 그런 거창한 숫자를 내세워 북한이 경제건설에서 하루 빨리 남한을 능가함으로써 통일에 대비하고자 했다. 그는 계속 그런 목표를 위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면서, 기본적 추동력을 대중의 혁명

1946) 《근로자》, 1974년 3호, p. 38.

1947) 《근로자》, 1974년 9호, p. 2.

정신과 혁명적 투지에서 찾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전”-대중의 혁명적 열의 고취-이데올로기 교육-개인숭배 운동의 광적 연출-조국 통일의 실현이라는 일련의 목표는 서로 유리될 수 없는 하나의 체계적이며 유기적인 정책 노선이 되었다.

김일성 개인숭배는 허황되고 집요한 독재자의 무한대의 권력욕과 밀착되어, 대중 조작의 방법으로써 앞에서 예시한 반이성적-반민주적-유사 종교적 양태를 연출하고 있었음은 재론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권력과 영화 그 자체에만 도취했던 우매한 옛 전제군주의 광란극과는 의미가 다른 측면을 지니고 있었다. 김일성 개인숭배 운동이 권력의 도취에서 조장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동시에 그는 자기의 “주체사상”을 절대화-종교화하고 이로써 근로 대중을 간고한 사회주의 혁명으로 동원하는 힘의 원천으로 삼아야 하며, 지도 원리로 삼아야 한다는 정략적 측면도 철저히 계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제주의적 독재체제는 본질상 개인숭배 작품을 조장할 소지를 지니고 있다. 개인숭배는 사회주의 건설,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목표와는 관계없이 독재자 개인의 영구 집권욕, 자신의 탁월한 능력의 도취, 허영심, 끊임없는 영광에 탐닉하고 싶어 하는 개성 등 심리적 상태와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권력을 상실하면 목숨을 상실하게 되는 전제주의 정치문화에서는 그렇다. 이점이 느슨한 권위주의 체제와는 다르다.

스탈린 비판 이후 대다수의 공산당 국가에서는 전제주의 체제는 털 잔혹한 권위주의 체제와 바뀌었다. 이에 따라 개인숭배 풍조는 구시대의 유물로 소멸되어 갔다. 그런데 후르시츠프 이후 스탈린과 동(東)유럽의 스탈린주의자들의 치참한 몰락을 운명을 목격해온 김일성은 그들처럼 되지 않기 위하여 오히려 자기의 독재 권력을 장자 세습을 강화하는 계획을 밀고 나갔다. 김일성의 측근 고위 간부들은 곧 김일성 개인숭배를 김정일 개인숭배에까지 연장시켜 1인 체제를 유지하는 준비 작업을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물론 그런 시도가 당내에서 상당한 도전에 부딪혔다는 것은 김영주(金英柱)를 비롯한 ‘혁명 제1세대’와 ‘제2세대’의 영락(零落)이 입증하고 있다. 김정일 개인숭배 문제에 관해서는 뒤에 논하고자 한다.

제6장

개인숭배의 세습화(世襲化)

제1절 출생의 수수께끼

1994년 7월 6일 김일성은 사망했다. 공식발표에 의하면 그 원인은 심근경색(心筋梗塞)이었다. 그는 1945년 12일부터 50년 동안이나 당권의 정상에 올라있었다. 이 통치기간을 통하여 그는 개인숭배를 하나의 정치제도로 확립했다. 그의 사망과 함께 그의 권력은 미리부터 오래 동안 계획되고 추진되어온 대로 장남 김정일에게로 세습되었다. 그들이 비방하는 “낡은 부르조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권력의 세습제는 오래전에 사라졌다. 전(前) 근대적인 군주국가(君主國家)의 유물인 이 권력세습제가, 역사상 가장 “진보적”이라고 자랑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타난 것이다. ‘중국공산당’에서는 말년의 모택동이 화국봉(華國鋒)을 자기의 후계자로 지명(사실상의 임명)한 일이 있다. 그의 임명의 근거는 모택동이 써 준 여섯 글자, 즉 ‘니이 판스 위 팡신’(你辦事我放心)(그대가 일을 하면 나는 안심일세)라는 글귀였다. 모택동 사망 후 화국봉은 등소평의 몇 단계에 걸친 투쟁에 의하여 밀려났다. 모택동의 당권후계자 임명은 김일성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모택동의 우상화 바람이 일으킨 망발이었다. 그러나 그런 화국봉도 모택동의 아들은 아니었다.

1980년 가을 중국 《인민일보》에 실린 한 논문¹⁹⁴⁸⁾은 모택동의 이름은 거명하지 않은 채 개인숭배의 풍조와 권력의 “세습제”, “후계자 지명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즉 “개인이 자기선전(宣傳)을 삼가야 한다는 것은 당 중앙위원회의 방침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방침을 여기면서 전횡적(專橫的)인 태도로 개인숭배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였다. 그중 개인숭배 부분은 다음과 같다.

1948) 《人民日報》, 1980년 9월 18~19일자 논문.

… 10년의 재난 [문화대혁명]이 우리들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누구도 두 번 다시 ‘한 사람의 수령’만을 용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개인의 인식능력(認識能力)에는 한계가 있으며 일면성(一面性)을 면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특히 전 당-전국에 관한 큰 사건을 한 사람이 독단-전행한다면 재난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다 …

이어서 이 「논문」은 권력 “종신제(終身制)”와 “후계제(後繼制)”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반박했다.

… 우리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인민이 주인이다. 봉건주의적 종신제와 후계자를 지정하는 제도는 부르주아 계급마저도 내버린 지 오래다. 수령 자신의 권리는 인민이 주는 것이며 수령이 ‘후계자’를 지정할 권리는 없다. 수령의 의자에 그 자신이 앉느냐 아니냐는 인민이 결정하는 것이요, 그 개인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

이 「논문」은 당시 모택동 개인숭배와 그가 화국봉을 후계자로 지명한 데 대한 공박인 것은 틀림없지만 북한의 김일성 부자에게도 그대로 들어맞는 반론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김일성 사후에 그의 우상화를 비판하거나 김정일의 후계를 문제 삼은 소리는 단 한마디도 들려오지 않았다. 적어도 공식적 언론매체에서는… 이것은 김일성-김정일 체제가 오랜 후계 작업을 통하여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으리만큼 견고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일성의 권력 영구화에 대한 집념은 드디어 자기의 장자로 하여금 당과 공화국을 상속케 한다는 결심을 굳히게 했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었지만 권력욕에 마비된 그에게는 그런 사리는 눈에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 밖에 그는 소련에서 신성불가침한 신(神)의 자리에 올랐던 스탈린이 사망한 지 3년 만에 그의 충실한 부하들에 의하여 매장된 사실에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한편 중국에서는 “모택동 동지의 친밀한 전우이며 후계자”라고 당 규약에서까지 보장을 받았던 임 표(林彪)는 1971년 9월 반(反)모택동 쿠데타 음모를 꾸몄다. 이 계획이 발각되어 임 표는 소련으로 도주하던 중 그가 탑승한 비행기가 몽골에 추락하여 그의 처, 아들과 함께 사망한 사건(1949)에 김일성은 크게 놀랐을 것이다. 그는 이러한 야심,

1949) 임 표(林彪) 사건은 오랫동안 그 진상이 미궁에 빠져 있었으나 1981년 1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 최

음모, 배신에 찬 독재 권력의 본질을 관찰하면서 자기의 안녕을 보장할 자는 결국 혈육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을 것이다.

북한의 공식기록에 의하면 김정일은 그의 전처 김정숙(金正淑)과의 사이에서 장남으로 1942년 2월 16일 백두산의 항일유격대 밀영(密營)에서 출생했다고 주장¹⁹⁵⁰⁾한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출생설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그의 출생지는 김일성이 소속됐던 '소련극동방면군 경찰부대 88여단'이 자리 잡고 있던 *시베리아의 브랴츠크*였다.¹⁹⁵¹⁾

그리고 출생일도 1942년 2월 16일이 아니라 그보다 1년 앞선 1941년 2월 16일이었다. '정일'(正一)로 되어 있던 이름도 1980년 10월에는 '정일'(正日)로 바꾸었다.¹⁹⁵²⁾

교인민제판소 판결문에 의하여 일단락을 지었다. 「判書」의 전문은 大田勝洪等編『中國共產黨最新資料集』, 1978년 12월~1981년 5월), 上卷, 東京, 1985년 pp. 491~492.

1950) 金正日이 1942년 2월 16일 抗日 유격기지인 白頭山 密營에서 출생했다는說是 벌써 20년 전부터 정착하기 시작했다. 卓珍外『김정일동지』 제1부, 1984년, 東邦社, p. 5.

1951) 金正日の 출생지가 “白頭山 密營”이 아니라 소련의 *브랴츠크*였다는 것은 많은 자료들이 입증하고 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김정일의 유년-소년기의 유일한 소꿉친구(1943~56)였던 *李새르게이 바실라예프* 교수의 증언이다. 李교수에 의하면 그는 부친 李東華(즉 *李바실라 페드르비치*) 소좌가 1942년부터 제88여단에 근무할 때부터 *유리*(김정일의 *러시아* 이름)와 뒹굴며 놀고 장난치던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 이동화 소좌는 김일성 대위와 함께 1945년 9월 19일 元山港을 통해 입국했고 그 다음해 봄 양가의 가족들도 귀국하여 평양에 정착했다. 두 집안은 평양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내왕했으므로 어린 李교수는 김정일과 많은 시간을 같이 놀게 되면서 우정을 다졌다. 李소좌는 평양에 들어온 후 '북조선로동당' 초대 조직부장을 맡았고 1948년 북한 정부가 수립될 때는 보건성 부상으로 임명되어 김일성의 주치의도 겸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6·25 전쟁은 두 소년을 갈라놓았다. 한 소년은 중국의 *하얼빈*으로, 또한 소년은 *러시아*의 연해주로 피난을 가게 된 것이다. 李교수는 유년-소년시절을 회고하면서 “김정일은 *하바로프스크*에서 80km 떨어진 *브랴츠크* 밀영에서 태어났습니다. *러시아* 군에 입대한 [나의]아버지는 김일성과 함께 *러시아* 군, 중국 항일유격대 연합군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우리 두 가족도 병영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는 중요한 증언을 남겼다. 李새르게이 교수와의 「죽마고우 김정일 회고」 및 「소꿉친구 李새르게이 교수 최초증언」 등. 《世界日報》, 1996년 7월 25일자.

1952) 김현식-손관주 공저 『다큐멘터리 김정일』, 1997. 9. 16. 이 증언은 '조선중앙방송' 1981년과 1982년 2월 초순경까지 2년간 계속한 「지도자 동지의 40회 생일을 맞이하여」라는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김정일의 생일이 1년 늦은 이유는 김일성의 생일과 '썩이는 해'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즉 그렇게 하면 1912년생인 김일성이 70회 생일을 맞이할 때 김정일 자신은 40회, 그리고 김일성이 80회 생일을 맞이할 때는 김정일 자신은 50회 생일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의 이름도 처음에는 '正一'로 썼다가 뒤에는 '正日'로 바꿨다. 그것은 어머니 金正淑의 '正'자와 아버지 金日成의 '日'자를 합성하여 김일성의 유일한 적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이름을 김정일로 바꾼 것은 1980년 10월, 즉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그가 정치국 상무위원-당서기-당 군사위원회위원으로 공식 데뷔한 날이라고 한다. 같은 책, p. 18.

여기에는 이미 우상화된 아버지와 어머니의 찬연한 광휘를 배경으로 삼으려고 하는 깊은 의도가 깔려 있었다.

소년 김정일은 1948년 6월 남산인민학교에 입학(이 무렵인 그 해 가을 생모 김정숙 사망했으나 1950년 6월 6·25 전쟁이 일어나자 삼촌 김영주를 따라 만주 길림성으로 피난하여 '길림학원'에 입학, 2년간 초등학교 과정을 공부했다. 소년은 휴전 후인 1953년에 귀국하여 '만경대혁명학원'을 졸업했고 1954년 9월에는 평양 제1중학교에 입학했으며, 1957년 9월에는 명문의 '평양남산고급중학교'에 편입했다. 그리고 1960년 9월에는 '김일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과에 입학하였다가 1964년 3월에 졸업했다.¹⁹⁵³⁾ 이때부터 그의 정치수업은 시작되었다. 그는 극비리에 권력의 사다리를 한 단계씩 재빨리 올라간 후¹⁹⁵⁴⁾ 1980년 10월 10일에 열린 제6차 당 대회에서는 정치국 상무위원(김일성-김 일-오진우 다음의 당 서열 제4위), 비서국 비서, 당 군사위원회 위원(김일성-오진우 다음의 서열 제3위)에 한꺼번에 선출되었다. 이 사실은 대대적으로 공표되었고 널리 홍보되었다. 그런데 내외의 관심 있는 사람들은 김정일에 관한 우상화 선전을 보고 그의 부권세습을 벌써부터 감지하고 있었다.¹⁹⁵⁵⁾ 어떤

1953) 金正日の 이 官定 敎育 年表는 在日本 朝鮮人 總聯合會 編 『金正日 略傳』, 1995년, 雄山閣, pp. 161~164.

1954) 최근년의 黨 문건은 金正日이 1962년 “쿠박 위기”때 黨 중앙위원회에 영입되었고 1964년 5월 30일에는(22세) 동 위원회의 조직지도 일꾼들에게 당 사업에 관한 “강령적 지시”를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黨 중앙위원회 指導員, 課長을 거쳐 1970년 9월(28세)부터 副部長, 1973년 7월부터 部長, 그 해 9월부터 黨 중앙위원회 비서의 중책을 맡고 활동했다”고 한다. 그가 黨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것은 1972년 10월이라고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역사연구소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 약력』, 평양출판사, 1996년 10월 25일 발행). 이상의 대목은 그의 일본어 역(譯) 『金正日總書記의略歷』, 『月刊朝鮮資料』, 1998년 1월호, p. 32 및 p. 38에서 인용. 김정일은 1974년 2월 13일의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뒤의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때 전원회의는 “위대한 수령의 유일한 후계자로서 높이 추대하는 역사적 결정을 채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金正日總書記의略歷』 ②, 앞의 『月刊朝鮮資料』, p. 26). 그런데 이 후계자 결정 일자는 오늘에는 정설로 되었다. 그러나 그의 약력이란 것은 김일성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우상화의 필요성에 의하여 지의가 과장·날조·왜곡·창작되어 있다.

1955) 1970년대에 들어서자 북한의 宣傳物에서는 김정일을 간접적으로 찬찬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존경하는 지도자동지”, “영광스러운 당중앙”이라는 대리 호칭 등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벌써 1970년 6월 18일에는 「사회주의 현실을 반영한 혁명적 영화를 더 많이 창작하자」는 논문이 그의 이름으로 발표되는가 하면 1974년 4월에는 「주체철학의 이해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글을 자기의 이름으로 발표하여 “주체철학”에 대하여 누구의 비판도 허락치 않는 일가견을 피력했다는 것이다. 공산당 통치하에서는 영화예술론, 철학은 모두가 *이데올로기*의 특히 중요한 구성부분이

공산당 치하에서도 권력세습이란 선례가 없는 반(反)사회주의적인 폭거였다.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한 국내적-국제적 반발을 저지하기 위하여 그 계획은 극비리에 꾸며지고 진행되었던 것이다.

김정일의 세습에 관해서는 설(說)도 구구하고 해석도 다양했다. *브야츠크*의 '제88 여단' 밀영에서 동북항일연군의 간부였던 중국인 진 쉰(陳 雷)(전 흑룡강성 성장. 부인은 이 민(李 敏)이라는 조선족 여성) 부부는 하얼빈에서 *피터* 현(Peter 玄)과 가진 《월간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 문제에 관해 언급했다. 그들 부부는 김일성 부부와는 아주 각별한 사이였고 그들에 대하여 특히 호의적이었다. 진 쉰은 김일성이 아들에게 정권을 물려준 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지금 와서 보면 잘못된 일"이었다고 하면서도 그 책임을 김일성 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자기가 알기로는 최용건, 김 일, 최 현 등이 김정일을 후계자로 세우자고 건의했지만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치국 회의에서 모든 사람들이 강력히 김정일 승계를 주장했을 때에도 "다른 기회로 미루어 토론하자"고 결정을 연기시켰다는 말을 진 쉰은 들었다고 했다. 결국 1980년 노동당 6차대회에 가서야 "다 동의하면 나도 동의한다."는 입장에서 그것(김정일의 권력승계)을 결정했다고 한다.¹⁹⁵⁶⁾

진 쉰의 견해에 정반대되는 것이 황장엽(黃長燁)의 주장이다. 그는 단언하기를 "일부 사람들은 김일성과 함께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원로들이 김정일을 후계자로 내세운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왜냐하면 항일투사 가운데 그런 견해를 내놓을만한 인물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설사 그런 의견을 내놓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일성이 조금이라도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렇게 [세습결정]이 될 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 체제의 중심에서 직접 활동했던 황(黃)의 증언은 간접적 전문에 기초한 어떤 국외자의 견해보다도 정확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의 결론은 아래와 같다.

… 결국 [권력의] 세습승계가 이루어진 것은 1인 독재가 확고해지고 장기화되어 가면

며 당권을 휘두르는 자가 곧 *이태올로기*를 통솔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20대말~30대초의 김정일의 권력기반은 강력해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77년 이후에는 『김정일 말씀집』이라는 그의 어록까지 나왔다.

1956) 「*피터* 玄의 특종 인터뷰」, 《月刊 朝鮮》, 2000년 2월호, pp. 474~475.

서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현대적인 정치 감각이 부족하고 봉건사상이 농후하여 나라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거기에는 김정일 역시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이어받으려는 야심을 가지고 활발히 움직인 것도 작용했다¹⁹⁵⁷⁾.

김정일은 1980년 10월의 제6차 당 대회에서 당 서열 제4위에 올랐지만 그것은 형식상의 지위요, 실질적으로는 제2인자였다. 누구도 그가 김일성을 승계하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가 김일성의 아들이기 때문에 승계할 것이라는 말은 엄금(嚴禁)되어 왔고, 심지어는 누구도 그가 당의 최고 영도자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발설할 수가 없었다. 젊은 김정일이 모든 혁명 선배를 제치고 당의 위계의 드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수령의 권력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지니는 사상-이론의 능력, 인간적 덕성, 뛰어난 지도력 때문이라는 설을 당 선전일꾼들은 간접적으로 퍼뜨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당선전부는 인민들에게 김정일의 소위 『덕성실기』를 학습시키고 그의 석고상(石膏像)을 공공장소에 진열케하고, 그를 향하여 “충성의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그에 대한 숭배의 염(念)을 함양시켰다. 그런데 그의 정치기반을 구축하려면 격찬할만한 업적을 쌓아야 한다. 김일성은 벌써 1973년 2월부터 “3대혁명소조운동”을 발기, 공장-기업소-협동농장-행정기관-군대-문화단체에 파견하여 당시 침체상태에 빠졌던 사상-기술-문화의 영역에 혁명적 쇄신의 바람을 일으키고자 했다. 이 3대혁명을 밀고 나갈 친위대-선봉대-돌격대가 바로 ‘3대혁명소조’였다. 김일성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김정일의 세습체제의 기초를 닦는데 활용할 목적에서, 김정일로 하여금 이 운동을 지도케 했다. 그리고 1975년 12월부터는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전국적으로 일으켜 생산을 늘리고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임무를 김일성 부자에 대한 충성 서약 속에서 수행케 했던 것이다.

1957) 황장엽 회고록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도서출판 한울, 1999년, p. 173.

제2절 김정일 우상화의 취약성(脆弱性)

1980년 10월 김정일이 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비서국 비서-국방위원회 위원이라는 권력의 세 개 관직을 한꺼번에 장악한 후부터 북한의 전체주의체제는 사실상 김일성-김정일의 쌍두마차에 의하여 이끌려가게 되었다. 김일성은無比(無比)의 권위를 지닌 신적(神祕的) 존재로서 체제를 거시적 위치에서 총체적으로 지도했다. 반면 김정일은 많은 부문의 실무자-집행자로서 실권을 휘두르게 되었다. 김일성의 우상화의 기초는 “항일 무장투쟁”이었지만 그런 경력을 갖지 못하는 김정일은 아버지의 권위를 빌려야만 했다. 아버지의 광휘(光輝)가 더욱 찬란하게 비추어져야만 그것을 반사하는 아들의 권위도 그만큼 더 빛을 내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김정일이 권력의 핵심부에 자리를 잡은 이후 김일성의 과거 혁명 업적을 기념하는 현대 건조물들, 이를테면 ‘주체사상탑’, ‘개선문’, ‘인민대학습당’ 등이 솟아 올라갔고 이런 건조물 사업은 아들의 업적으로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의 오늘의 웅대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선전하는 “자연 대 개조사업”이니 “80년도 속도창조운동”이니 하는 경제건설 사업들을 김정일의 참가 하에서 대대적으로 벌였다. 이때에 시작한 “3대혁명소조운동”의 발동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우상화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미쳐야 한다. 그리하여 1974년에 시작된 “김정숙 따라 배우기 운동”에 뒤이어 그녀의 이름을 붙인 군(郡)-학교-탁아소 등이 대거 속출했다.¹⁹⁵⁸⁾ 그리고 1998년에는 김일성(남편)-김정일(장남)과 나란히 김정숙은 “백두 3대장군”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다. 2001년 9월 17일 김정숙군(金正淑郡)에서 거행된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제38차 전원회의는 “백두의 여장군이신 위대한 김정숙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빛내어 나가는 것”의 의의를 크게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김정숙 예찬을 김정일에 대한 충성과 하나로 묶어서 모자 2중 숭배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전원회의는 여성동맹 안에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유일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1958) 이를테면 ‘김정숙군’(신파군, 1981년 개칭), ‘김정숙교원대학’(1972년 개교), ‘김정숙사범대학’(1981년), ‘김정숙여자고등학교’(1981년), ‘김정숙제1고등중학교’(1989년), ‘김정숙탁아소’(1988년), ‘김정숙요양소’(설립연도=?) 등이다.

세우며 위대한 김정숙 동지의 숭고한 모범을 거울로 삼고 세기의 요구에 맞게 ... 강성
대국 건설 위업에 적극 이바지해 나갈 데 대해서 강조했다.¹⁹⁵⁹⁾

한편 김일성의 사망 후에도 그에 대한 예찬은 그치지 않았다. 그 목적은 김정일이
김일성이 발하는 후광을 계속 받아 자신을 찬연하게 비추게 하여 체제의 권위를 강화
하려는 데 있었다. 따라서 김일성을 예찬할 때에는 반드시 김정일에 대한 예찬이 이
에 뒤따르고, 김정일의 업적을 찬양할 때에는 “위대한 수령”이 그 선구자로 등장하여
김정일을 감싸고 정당화한다. 2001년 8·15 광복절 56년을 맞이하여 《로동신문》의
사설은¹⁹⁶⁰⁾ “20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걸출한 위대한 김일성 동지”에 대하여 드높은
감격에 가득 찬 찬사를 열거했다. “우리 민족은 김일성 동지를 높이 모심으로써 세기
에 빛을 뿌리게 된 김일성조선, 김일성민족”이라느니, “역사에는 아직 위대한 수령님
께서 처럼 탁월한 사상 이론과 혁명의 영도로 ... 역사 앞에 만대에 빛날 업적을 쌓
아 올리시고 인민들의 심장 속에 영생하시는 절세의 위인은 없었다”는 등등...(밑줄
은 저자)

이어 「사설」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이끌으심으로써 조국을 찾아주시고
빛내어 나가는 길에서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견결히 옹호 고수되
고 강성대국(強盛大國)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다”고 김정일의 후계 업적을 찬
양했다. 이 「사설」에 의하면 김정일이 최근년에 와서 내세워온 ‘총대 중시사상’, ‘선
군 영도’, ‘선군 혁명영도’ 등은 김일성이 “시원”(始原)을 열어놓은 것들이며, 이것들
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일관하게 계승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이러한
주장이 의도(意圖)하는 바는 김일성-김정일의 완전한 일체성(一體性)이요, 융합이
다. 이 사설은 김일성 개인숭배의 축소판인 동시에 또한 그것을 계승한 김정일 개인
숭배를 압축한 것이다. 「사설」 중 김정일에 관한 몇 구절만을 인용하기로 한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이끄시는 우리 조국은 사회주의 붉은 기치가 영원히 높이
휘날리는 나라이다. ... 사회주의가 없으면 조국도 민족의 번영도 없다. ... 경애하는 김정

1959) 《조선중앙방송》, 2001년 9월 19일 보도.

1960) 《로동신문》 2001년 8월 15일자 社說,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광복 업적은 새 세기에도 빛
날 것이다」.

일 동지는 대를 이어 계승되는 우리식 사회주의 위업의 위대한 영도자이시고 백전백승의 상징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 통찰력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위업이 나아갈 앞날을 훤히 밝혀주시며 무비의 담력과 강철의 의지로 제국주의자들의 도전으로부터 사회주의의 위업을 견결히 수호해 나가고 계신다.

다음은 고대 신정제국(神政帝國)에서나 들을 수 있었던 제왕에 대한 충성의 맹세가 북한에서도 들려온다.

...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깨끗한 양심과 의리를 가지고 진심으로 모시고 살아도 장군님의 품속에서 보람 있게 살고 죽어도 장군님의 품속에서 값있게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장군님께 끝없는 충성을 다해야 한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영도 따라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새 세기의 앞날은 끝없이 휘황찬란하다 ...

김일성 생존 시에 이미 김정일은 권력의 원천인 군(軍)의 중추기관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즉 1990년 5월에는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1991년 12월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1992년 4월에는 원수(元帥) 추대, 1993년 4월에는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의 출세 경력을 신속하게 거쳤다. 드디어 김일성 사후인 1997년 10월에는 아예 형식적인 선거절차도 없이 “추대”의 형식으로 당 총비서라는 권력의 절정에 올랐다. 이에 따라 그의 우상화도 상승해 갔다. 김일성의 경우 그의 우상화는 정적(政敵)들과의 치열한 권력투쟁 속에서 진행되었지만, 김정일의 경우는 이미 조직적-잠재적 반향세력은 거의 모두 소멸했기 때문에 우상화의 진행은 미리 짜 놓은 계획에 따라 탄탄대로를 걸어가듯이 순탄했다. 이것은 김정일 개인숭배 현상의 또 하나의 특색이다.

그렇게 우상화 과정이 평탄하여 정적의 위협이 없다고 해서 김정일 체제가 보타델 가혹하고 상대적으로 독재가 느슨한 것은 아니다. “사상교양사업”(이데올로기 주입교육)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사회적-정치적 통제도 본질적으로 완화된 바가 없다. 1995~96년 2년간의 잇따른 홍수와 1997년의 가뭄은 그렇지 않아도 만성적 식량 부족에 시달려오던 북한의 주민생활을 미증유의 곤경으로 몰아넣었다. 이때 국내 이동과 중국 연변(延邊)지방으로의 월경이 어느 정도 방치되었던 것은, 식량을 구하기 위한 수십만 민중의 무허가 이동이 온 사회를 마비상태에 빠뜨렸기 때문에 단속

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때문이었다.

소련-중국-동(東)유럽 어디의 공산당에도 권력의 세습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최고지도자의 가계까지 우상화한 일은 없었다. 그런데 김일성은 장자를 후계자로 우상화하는 데 적극적인 열의를 보였다. 김정일의 50회 생일인 1992년 2월 16일 김일성은 아들을 찬양하는 다음과 같은 「송시」(頌詩)를 직접 써주었다.

白頭山頂 正日峰 小白水河 碧溪流 / 光明星誕 五十周 皆贊文武 忠孝備 / 萬民稱頌 齊同心 歡呼聲高 震天地(백두산 마루에 정일봉 솟아 있고 소백류 푸른 물은 구비쳐 흐르
누나 / 광명성(金正日) 탄생하여 어느덧 신 똬인가 문무충효 겸비하니 모두 다 우리르
네 / 만민이 칭송하는 그 마음 한결같아 우렁찬 환호소리 하늘 땅을 뒤흔드네.)¹⁹⁶¹⁾

개인숭배를 다지기 위해서는 누구든 당(黨)의 이데올로기 문제에서 최고의 권위를 지녀야 한다. 이미 당의 이데올로기 해석권을 장악한 김정일은 1974년 2월 9일 “김일성주의”라는 용어를 만들어 선전했다. 그에 의하면 “김일성주의”란 ‘주체의 사상, 리론 및 방법의 체계’라고 정의하면서 일본과 그 밖의 외국, 남한 등지에 선전을 확산시키고 있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북한에서는 그 후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그 용어를 내세우지 않고 흐지부지 사라졌다. 그가 종래의 주체사상의 명제들을 계승하여 자기 식으로 정리하여 도식화한 것이 김일성 출생 70주년을 기념하여 발표한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장문의 논문이었다. 물론 이것은 당 선전일꾼들이 작성한 것을 김정일의 이름으로 발표한 것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주체의 혁명관”을 세울 것을 강조하면서 “주체의 혁명관은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에 대하는 관점과 입장이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결연히 싸워나가는 혁명정신”¹⁹⁶²⁾이라고 극히 추상적인 설명을 했다. 인민대중이 모두 로봇(robot)화(化) 한 1인 독재 사회에서 “인민대중중심” 운운하는 것보다 더한 거짓말은 없을 것이다. 그는 “주체의 혁명관에서 핵을 이루는 것은 당(黨)과 수령에 대한 충실

1961) 《로동신문》, 1992년 4월 27일자. 북한은 김일성의 송시(訟詩)를 비석에 새겨 백두산 소백수굴 안에 다 꾸며놓은 김정일 생가 근처에 세워두기까지 했다. 황장엽은 김일성이 이 「송시」를 쓴 것을 “그의 일생에서 아마도 최대의 과오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그가 형편없는 속물이라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가 될 것이다”고 평하고 있다. 황장엽, 앞의 책, p. 244~245.

1962) 「주체사상에 대하여」(전문), 1983년도 『조선중앙년감』, p. 150.

성”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공산주의 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며 당과 수령의 영도 밑에 수행되며, 오직 당(黨)과 수령의 영도를 받아나가야만 승리할 수 있다”¹⁹⁶³⁾는 논리였다. 세칭 “혁명적 수령관”을 중핵으로 하고 있는 그의 이 논문은 1인 독재의 전제주의적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선언문이었다.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하자 북한에는 국가주석도 당의 총비서도 없는 극히 이례적인 대공위(大空位)의 시대가 3년 이상이나 계속되었다. 그 동안 김정일은 “유훈통치”를 막후에서 실시하면서 동양적 효자상을 펴뜨리고 가히 이상적(理想的) 위정자만이 비로소 할 수 있는 “인덕정치”, “광복정치”의 실시를 선전했다. 시일이 흘러 1997년 10월 8일 그가 당 총비서로 재추대되고, 1998년 8월 5일에는 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재추대됨으로써 유훈통치의 시기는 막을 내리고, 김정일 시대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1963) 위와 같음.

맺는 말

강성대국(强盛大國) - 군사적 강국 건설

이상의 김정일 시대가 개막한 후의 북한의 개인숭배는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이 문제에만 국한시켜 간단히 논하고자 한다. 개인숭배 *시스템*이 유지되고 강화되기 위해서는 인민대중에 대한 선전과 억압의 방법만으로는 안 되며, 정치, 경제, 군사, 통일 분야에서 웅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다그쳐야 한다. 김정일은 최대의 임무는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에 대비하여 북한을 강성대국, 정확하게는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强盛大國)으로 건설하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강성대국이란 말이 처음 제창된 것은 1998년 8월 22일이었다. 이 날은 김정일이 로동당 ‘국방위원장’(실질적인 국가원수)에 재추대되어(1998. 9. 5) 그의 시대가 펼쳐지기 며칠 전이었다. 강성대국의 첫 신호가 된 것은 *미사일*의 개발능력을 과시한 ‘광명성 1호’의 발사였다(1998. 8. 31). 강성대국이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강하고 위대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식 사회주의’의 ‘사상 강국’, ‘군사 강국’, ‘경제 강국’을 의미했다. 그런 강국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김일성이 생전에 강조해 왔던 주장들을 압축하고 용어를 바꾼 데 불과했다.

김정일에 와서도 북한은 강력한 군대를 보유할 필요성을 계속 역설하였다. 여기서 소위 ‘총대 중시사상’이란 것이 선전되어 왔는데, 그것은 “총대[무력]만 강하면 천하대적이 텅버들고 그 어떤 정치풍파가 닥쳐와도 두려울 것이 없으며”, “강대한 군력(軍力)의 비호 밑에 우리 공화국은 영영히 승승하고 강성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 말도 표현이 다소 다를 뿐 과거에 빈번히 반복해온 것이다. 김정일정권을 받쳐주고 있는 최강의 힘은 곧 군대다. 이런 현실을 이론적으로 공식화한 것이 ‘선군정치’, ‘선군혁명사상’, ‘선군후노사상(先軍後勞思想)’ 등으로 불리는 군사(軍事)중시사상이다. 김정일이 얼마나 군을 중시하는가는 “군대는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슬로건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말은 이미 북의 ‘인민공화국’은 군대의 존재가

절대화된 군국주의 국가로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강성대국의 경제건설 방법으로 김정일은 1999년 2월 초부터 “제2의 천리마 대 진군”의 새 방침을 내세우고 있었다. ‘천리마운동’이란 1957년부터 김일성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토대로 하여 강행된 거국적 일대 동원체제의 발동을 가리킨다. “제2의 천리마 대진군”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었으나, 1970~80년대에 기세를 떨쳤다가 그 후 수그러진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형태를 취하면서 전인민적 애국충산운동과 유사한 것으로 강행될 것으로 예측되었다.¹⁹⁶⁴⁾ 이같은 김정일정권의 정책노선은 결코 김일성으로부터의 이탈, 그와의 단절 또는 그의 청산이 아니라, 필경은 묵수(墨守) 아니면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다. 김정일 체제의 창조주는 김일성이며, 따라서 전반적 노선 김일성 체제의 복사판이 될 수밖에 없다. 김정일은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 주입교육(사상교양사업), 군사력 강화, 경제건설을 국가발전의 3대 지주로 확신하고 있다.

북한의 당 일꾼들은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책동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침투”를 가장 두려워한다. 이것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을 그들은 ‘사상교양사업’의 강화에서 찾고 있다.

...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상교양사업에 힘을 넣어야 한다. 사상 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는 기초 위에서 경제건설을 다그치는 것, 바로 이것이 제국주의의 평화적 이행전략 [평화적 방법에 의한 당과 정부 전복책동]을 짓부시는 가장 혁명적인 전략이다.¹⁹⁶⁵⁾

1999년 1월 1일자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는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자」라는 제하의 공동사설을 실었다. 여기에는 당의 강성대국 건설의 방략과 투지와 결의를 우렁차게 제창했다. 그러나 이것도 김정일 옹위, 숭배의 만성적 증상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사설」은 군을 향하여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곧 우리 당이고 우리 국가, 우리 군대이며 우리 인민이다. 우리

1964) 《로동신문》1999년 8월 5일자 사설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심화시켜 제2의 천리마 대 진군을 힘차게 다그치자」 참조. 그 후 3개월이 지난 1999년 11월 3일에는 5,000여명의 군중을 동원하여 ‘제2 천리마 대 진군 선구자대회’라는 행사를 진행시켰다.

1965) 《로동신문》과 《근로자》의 1999년 6월 1일자 공동논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 문화적 침투를 배격하자」.

는 김정일 동지를 위하여 한 목숨 서슴없이 바치는 리복형의 육탄 영웅, 김영조 형(형) 자폭용사가 되어야한다”고 호소했다.

6·15공동선언 발표 1주년에 즈음한 2001년 5월 28일 북한에서는 정당-단체의 합동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행한 양형섭(楊亨燮)(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의 「보고」는 「남북공동선언」에 서명한 두 대통령 중 대한민국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위대한 장군님 덕분에 북남 수뇌 상봉이 실현되고 아버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헌장의 내용이 그대로 구현된 북-남 공동선언이 발표된 것은 참으로 민족통일운동사의 중대한 전환이다.”라고 강조했다. 이것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획책하는 “민족공조”의 방식이다. 김일성의 「조국통일 3대헌장」에서는 북한의 남-북 연방제 방안이 중추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남(南)의 ‘국가연합제’는 일언반구 언급되지 않고 완전히 묵살되어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마치 김일성의 연방제방안에 따라 통일할 것을 수락한 것처럼 민족과 세계를 기만하려는 허위 선전전술이었다. 양형섭의 보고는 그들이 ‘통일의 구성(救星)’이라고 떠드는 김정일에게 아래와 같은 아부의 극치를 달리는 송사(頌詞)를 드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버지 수령님의 조국통일 유훈을 받들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높은 사명감, 강철의 의지와 비범한 담력, 한없이 넓으신 포용력과 아량으로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시고 온 겨레를 하나로 묶어세워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민족사적 위업을 진두에서 정력적으로 이끌고 계신다. 1966)

이와 같이 아부의 극치를 보여주는 개인숭배의 반이성적(反理性的), 사교(邪教)의 주문(呪文)처럼 된 독백에 대하여 국외자들은 더 무슨 말을 할 가치가 있을까?

1966) 2001년 5월 29일자, 《조선중앙방송》

제12 편

‘자주적’ 대외정책의 노선(上)

들어가는 말

제1장 • “3대혁명”이란 무엇인가

제2장 •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

제3장 • ‘대약진운동’과 ‘천리마운동’의 공통특징

제4장 • 김일성의 “공산주의”관

제5장 • ‘3대혁명소조(三大革命小組)’의 발기(發起)

제6장 • ‘3대혁명소조’에 대한 평가

들어가는 말

1980년 10월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는 김일성(金日成)의 장남(長男) 김정일(金正日)을 일약 당(黨)중앙위원회위원, 당(黨)중앙위정치국상무위원, 당(黨)비서(당사업전반 담당), 당(黨)중앙위군사위원회위원으로 선출했다. 그리고 당(黨)정치국상무위원으로서 그는 제4위를, 당(黨)비서로는 김일성 다음으로 제2위를, 군사위원회에서는 김일성, 오진우(吳振宇) 다음으로 제3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는 당(黨)권력구조에서 차지한 공식상의 서열을 떠나서 사실상 김일성 다음가는 제2인자가 되었다. 위의 사실들은 곧 당권을 아버지에게 장자(長子)로 넘기자는 북한의 권력세습제가 완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김정일은 제6차 당(黨)대회 이전에도 이미 선전 조직을 담당하는 당서기직을 역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었으나, 그의 지위는 대외적으로는 일체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적어도 북한의 공식 출판물에서는 그의 이름조차 나타난 일이 없었다. 이것은 김정일의 후계자 공작이 대내외적으로 반발을 일으킬 것을 고려하여 당(黨)최고위 층 안에서 극비리에 진행시키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김정일은 1941년에 출생했다. 그가 김일성의 후계자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72년경부터, 즉 그의 연령이 32세 되는 때부터였다. 당시 조총련 내에서는 그가 수령의 “유일한 후계자”로 추대되었음을 밝히는 학습 문서가 나돌았고, 북한 내 여러 가정들에서는 그의 초상화가 김일성의 그것과 나란히 걸려 있는 것이 목격되었다. 이와 더불어 그의 이름 앞에선 “존경하는 지도자동지” 또는 “영광스러운 당중앙(黨中央)”이라는 존칭이 붙기 시작했고, 그의 생모 김정숙(金正淑)에 대한 찬양작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위로부터의 김정일 후계공작이 당내에서 상당한 반항(反抗)을 불러일으켰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왜 그런가. 첫째로 부권(父權)의 장자 세습제는 고대의 제정(帝政), 또는 봉건 왕조시대의 인습이며, 이것은 맑스-레닌주의의 이데올로기나 사회주의 제도와는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이요,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역

사에서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김일성의 후광 밑에서 마치 황태자처럼 안락하고 호화롭게 성장해온 김일성은 하등의 혁명경력도 있을 수 없음은 물론, 6·25전쟁에서도 그 후의 어려운 건설사업에서도 아무런 업적을 쌓을 수 없었으며, 업적을 쌓을 수 있는 연령에 있지도 않았다. 오직 독재자 김일성의 장남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로 하여금 권좌를 계승한다는 것은, 간난신고(艱難辛苦)를 겪으면서 공산주의운동에 투신해온 노선배(老先輩), 혁명 간부들은 물론이요, 일반 당원들도 시인할 수 없는 이변(異變)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과 그 측근 충성분자들은 이 엄청난 반(反)혁명적 권력 세습제를 강행했다. 김정일을 1980년 10월에 열린 제6차 당(黨)대회에서 공식적으로 등장시키기까지에는 10년의 공작 기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후계자 임명만으로 세습제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었다. 부권(父權)을 승계하고 그것을 앞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의 권력 기반의 구축이 절대로 필요했다. 여기서 착안한 것이 바로 '3대혁명 소조운동(小組運動)'이었다. '3대혁명 소조운동'은 당초 김정일의 후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창안된 것은 아니었다. '소조(小組)'는 김일성의 '3대혁명'을 이 끌고 나아갈 전위(前衛), 돌격대(突擊隊)로써의 임무를 지니고 있었다. 김일성은 제6차 당(黨)대회에서 3대혁명 소조운동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3대혁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3대혁명 소조운동을 발기하고 당 핵심들과 청년 인텔리들로 3대혁명 소조를 두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파견하였습니다. 3대혁명 소조운동은 정치 사상적 지도와 과학 기술적 지도를 결합하고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근로 인민대중을 발동하여,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 나가는 새로운 형식의 혁명지도방법입니다.¹⁹⁶⁷⁾

여기서 김일성은 '3대혁명 소조운동'이 김정일의 권력세습과 관련이 있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북한의 그 누구도 어떤 출판물도 결코 그런 말을 비치우지 않았다. 그러나 '3대혁명 소조운동'은 당중앙위원회에 직속되어 있으며, 김정일의 지휘하에서 움직이고 있다. 소조원들은 김정일의 행동대로써, 김정일의 교시(敎示)와 함께 김정일의 "말씀"을 근로자들 속에 침투시켜 교양하며, 그 지시내용에 무조건 복종

1967) 《근로자》, 1980년 10월호, 평양, p. 6.

케 하여 그들 부자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요구했다. 소조원들의 힘은 김일성-김정일을 배경으로 하여 적어도 자기들의 소관부문에서는 막강했다. 그들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행정기관에 파견되어 통제-조절-감독-인사 문제의 간섭 등 독재권을 휘둘렀다. 여기서 김정일의 지시 내용에 불복하는 자는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하여 김정일의 세력은 북한의 모든 생산-행정기관-사회-문화단체에 침투해 들어가 그의 후계체제의 기반을 계속 강화했다. “반항분자파들”이 제거되고, 노(老)간부들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김정일의 권력기반은 난공불락(難攻不落)의 것으로 되어갔다. 그런데 김일성이 사망하여 김정일의 후광이 꺼지게 되어도 아들의 권력기반은 순탄하게 유지될 것인가는 그 당시로써는 북한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김일성은 그 장자에게 권력과 더불어 자신의 “유일사상체계(唯一思想體系)”를 만고의 진리로 경전화(經典化)하여 계승시키려 했고, 아들은 망부(亡父)를 불멸의 *미리*로 만들어놓고 그 신성불가침 권위를 배경으로 절대 권력을 휘둘러왔다.

제1장

“3대혁명”이란 무엇인가

제1절 김일성의 정의(定義)

김일성의 *이데올로기*는 소위 “3대혁명”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북한의 ‘노동당’은 “3대혁명”, 즉 사상혁명-기술혁명-문화혁명의 노선을 이르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이룩하기 위한 기본적 혁명노선이라고 찬양해왔다. 이 세 가지의 혁명노선을 김일성이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가는 1972년 12월에 새로 제정한 「사회주의 헌법」에서 명문화된 것으로서도 알 수 있다. 동 헌법은 이 세 가지 혁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1. 사상혁명(思想革命)에 대해

제11조 : 국가는 내외 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 제도를 보위하며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化)한다.

2. 기술혁명(技術革命)에 관해

제25조 : 국가는 기술혁명을 추진하여 중(重)노동과 경(輕)노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줄인다.

3. 문화혁명(文化革命)에 관해

제36조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자연과 사회에 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든다.¹⁹⁶⁸⁾

1968) 1972년의 북한 헌법(憲法)은 『김일성저작선집』 6, 1974년판, pp. 370~391에 수록되어 있는 것에서 인용했음. 북한의 소위 “사회주의 헌법”의 전문이 김일성의 저작선집에 들어 있다는 것은 이 헌법이 바로 그 개인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북한 측이 공인하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세 가지 혁명은 당(黨)앞에 제기된 중심적 과업으로 된 동시에 일당(一黨)독재권력 체제의 필연적인 논리적 귀결에 따라 소위 “국가활동”의 주요한 내용으로 되었던 것이었다. 이러한 세 가지 혁명을 강행하기 위한 추진세력으로써 1973년 2월에는 “3대 혁명소조”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 파견되었고,¹⁹⁶⁹⁾ 1975년 12월부터는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어 나갔다.

김일성은 권력의 정상에 오른 이래로, 즉 한국전쟁 이전의 이른바 ‘평화적 건설시기’(1947~49), 한국휴전 이후의 ‘전후 복구건설기간’(1954~60), ‘5개년계획기간’(1957~60<61>), ‘7개년계획기간’(1961~67<70>), ‘6개년계획기간’(1971~76<75>), ‘제2차 7개년계획기간’(1978~1984), 그리고 북한에서의 마지막 년차계획인 ‘제3차 7개년계획기간’(1987~93)까지 40년 동안에 6단계의 년차 계획을 거쳐 스탈린의 ‘5개년계획’을 금과옥조로 모범으로 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강행했다.

김일성이 연차 경제계획에서 내세운 구호와 용어와 표현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이 ‘3대혁명 로선’의 내용을 계속하여 강조해 왔으므로 김일성의 주장이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다만 초기에는 극히 미숙하고 조잡하고 산만한 설명으로, 그리고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채 다만 사상-기술-문화의 제고를 제창-강조했던 것이다. 아직도 스탈린시대였던 1947년 8월 28일 그는 북조선 창립 1주년을 맞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당의 목표를 말한 바 있다.

우리 당은 선진적인 맑스-레닌주의 혁명이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이론과 소련공산당과 소련 인민의 풍부한 경험, 세계각국 혁명운동의 경험들을 연구하며, 우리나라의 역사를 연구하는 그러한 교양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선진적 혁명사상으로 무장되고 우수한 기술을 소유한 기술자, 숙련 노동자, 교육자, 군사가, 과학자, 예술가 등을 많이 양성하고 모든 분야에서 그들의 역할을 더욱 높임으로써 우리 인민이 우리 당에 맡긴 독립국가 건설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하여야 한다.¹⁹⁷⁰⁾ (밑줄은 저자 양)

1969) 金日成은 1973년 3월 1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江西郡 확대회의에서의 한 결론, 「思想革命, 技術革命, 文化革命을 더욱 힘 있게 다그치자」에서 “3大革命小組들이 공업 부문과 농업 부문에 나가 사업한지 거의 한 달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3대혁명소조의 활동은 1973년 2월 중순 경이었음이 틀림없다. 같은 책, p. 419.

1970) 『김일성선집』 7, 1964년 판, pp. 363~364.

한반도에 휴전이 성립한 후인 1953년 8월 5일 김일성은 당(黨)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도, 북한의 근로대중이 사상(계급의식)적-기술적-문화적 수준에 있어서 매우 낮은 원인들을 일본의 제국주의 통치와 미(美)제국주의의 침략이라는 근거에서 분석하면서 당(黨) 중앙위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우리 앞에는 근로대중의 모든 낡은 관습, 낡은 의식을 씻어 버리고 그들을 새로운 노동계급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노동계급의 핵심을 육성하여 노동계급의 정치적, 문화적 수준을 높이며 그들의 기능과 기술을 향상시키며 그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을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 노동자들 속에서 정치사상사업과 군중문화사업을 강화하여 공장구락부와 도서실사업을 개선하여 여러가지 기술교육과 기술전습사업을 강력히 진행하며 그들의 생활조건과 생활품수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겠습니다. 노동계급의 의식수준과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에서 커다란 성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¹⁹⁷¹⁾

김일성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던 이와 같은 상식적인 차원의 초기 주장들은, ‘노동당’의 선전간부들이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성장하고 북한사회가 변화해 감에 따라 *이데올로기적(的)*으로 정리되었고 이론화되어 왔으며, 드디어는 김일성의 주체사상(主體思想)의 틀 안에서 “3대혁명노선”(3大革命路線)으로 정식화(定式化)되었다.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문헌들은 이 세 가지 “혁명”에 관한 김일성의 설명내용이 스탈린의 소련과 모택동(毛澤東)의 중국에서도 번번이 내세워온 것들이며, 동일한 이념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스탈린은 “3대혁명”이라는 구호 자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이 구호를 처음 만들어 낸 것은 모택동이었다. (1963년 5월 9일 모택동은 “계급투쟁”-“생산투쟁”-“과학실험”을 3대혁명이라 부르고 중국의 사회주의건설에서의 그 중요성을 제기했다.¹⁹⁷²⁾

“3대혁명”에 관한 김일성의 *이데올로기적(的)* 관점과 노선 설정은 그의 독창도 창

1971) 『김일성선집』 4(1960), p. 54.

1972) 모택동의 「지시」에 기초하여 그 해 5월 20일 ‘당(黨) 중앙위원회’는 당면한 농촌 공작에서의 약간의 문제에 대한 당(黨)중앙의 「결정」, ‘속칭 「전(前)10조(條)」’ 서문을 모택동의 지시에 따라 작성했다. 이 「결정」의 서문에서는 “3대혁명운동”을 제기하고 내용에서는 농촌에서의 ‘계급투쟁’(階級鬭爭)에 역점을 두었던 것이다.

시(創始)도 아니었다. 스탈린과 모택동의 목소리에 가까이 귀를 기울이었던 사람이 라면 거기서 바로 김일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그런데 북한의 당(黨)선전간부들은 김일성의 '3대혁명로선'이 주체사상에 입각한 그의 "독창"임을 아래와 같이 강조하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3대혁명에 관한 탁월한 사상과 이론을 창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 하에서의 혁명문제에 새로운 해명을 주시었으며, 노동계급의 역사적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한 휘황한 앞길을 환히 밝히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주체사상에 기초한 독창적인 3대혁명을 내놓으시고 그 역사적 지위와 본질적 특성, 수행방법 등을 전면적으로 해명하심으로써 노동계급의 역사적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한 계속혁명의 길을 환히 밝혀 주시었다.¹⁹⁷³⁾

김일성 개인숭배에 수반되는 "독창" 병 증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이상의 찬사가 결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본서의 서술과정에서 그때그때 논증될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김일성은 3대혁명을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프롤레타리아의 당(黨)(공산당)이 "수행해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요컨대 3대혁명이란 사상-기술-문화의 세 분야에서 낡은 유물, 낙후성(落後性)을 혁명적인 방법으로 철저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 즉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인 것으로 바꾼다는 것이 북한의 당(黨)이론가, 즉 이데올로그(Ideologue)들의 해명이었다. 그러한 혁명이라면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당권을 장악한 첫날부터 단행해 온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의 시기에 와서 더욱 강력하게 추진했다는 점에 '3대혁명'론의 특징을 간취할 수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혁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고 힘 있게 투쟁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당이 해방 직후부터 3대혁명의 구호를 들지는 않았습시다. 그러나 우리는 해방직후부터 근로자들 속에서 낡은 사상을

1973)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힘차게 전진하자(《로동신문》, 《근로자》의 공동논설)», 《근로자》, 1976, 3호.

뿌리 빼고 그들을 선진 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였으며, 경제 문화분야에서 온갖 낙후성을 없애고 사회주의적 경제와 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당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부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였습니다.¹⁹⁷⁴⁾

제2절 확대되는 “혁명”의 개념

이어 김일성은 이 “세 폭(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근로자들의 지혜와 창발성(創發性)을 적극 동원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양양시켜”¹⁹⁷⁵⁾ 그 결과로 3개년계획은 물론 5개년계획도 7개년계획도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자찬했다(여기서 김일성이 ‘세 폭의 붉은 기치’라고 한 것은, 모택동이 대약진 운동기(運動期)에 만들어 사용했던 ‘삼면홍기’(三面紅旗, 즉 ‘사회주의 총노선’-‘대약진’-‘인민공사’)란 말을 그대로 끌어다가 번역한 것이었다. 그는 노동당 창건 30돐에 즈음하여서는 ‘공업 총생산액’에서 6개년을 1년 앞당겨 완수하는 “빛나는 위훈(偉勳)”을 세웠다고 했다.¹⁹⁷⁶⁾

김일성이 사상-기술-문화혁명을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 더욱 힘차게 벌인 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기 이전의 단계에서는 봉건적 또는 자본주의적 소유에 기초한 낡은 생산관계를 새 것으로 개조(改造)하는 것이 그 시기에 제기되는 주된 혁명과업으로 된 때문이라는 관점에서 오는 것이었다.¹⁹⁷⁷⁾

그러나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생산수단의 국유화 또는 협동화)가 끝난 다음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낡은 것을 철저히 청산하고 새 것을 계속 창조해 나가야 한다. 이때에 제기 되는 혁명의 기본 내용이 바로 사상-기술-문화영역에서의 변혁이라는 것이었다. 이런 변혁이 없이는 사회는 전진할 수 없고 따라서 공산주의를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3대혁

1974) 김일성,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근로자》, 1975, 3호, p. 5.

1975) 같은 책, p. 5.

1976) 김일성, 「조선로동당 30돐에 즈음하여」, 《근로자》, 1975, 11호, p. 10.

1977)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기치(革命旗幟)를 더 높이 추켜들고 힘차게 전진하자」, p. 3.

명”을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설명했다.

어떤 사람들은 낡은 사회제도를 뒤집어 엮고 새로운 사회제도를 세우는 것만 혁명이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상, 기술, 문화분야에서 낡은 것을 새 것
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혁명입니다. 그러므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도 반드시
낡고 침체한 것과의 투쟁을 통해서만 수행될 수 있습니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
화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한 심각한 투쟁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상혁명은 결합 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 빼고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
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간단히 말하여 사상혁명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녹을
벗기는 투쟁이며 기술혁명은 기계에 있는 녹을 벗기는 투쟁이며 문화혁명은 사람들의
생활과 살림집, 공장과 마을에 있는 때를 벗기는 투쟁입니다.1978)

일반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이니 “전투”니 하는 말을 애용해 왔지만 김일성
의 경우는 특히 그러했다. 그는 그의 말년에 이르러 더욱 “혁명”이란 말을 남용했으
며 북한의 출판물들은 “혁명”이란 용어로 가득 차 있다. 그리하여 “혁명”의 내용도
다양다기(多樣多岐)했다. 그에 의하면 ‘미제’(美帝)와 무기를 들고 전쟁하는 것, 남조
선의 ‘반동’들과 투쟁하는 것, 적대계급을 타도하고 공산당의 독재 권력을 수립하는
것 등이 혁명임은 물론이요, 대중의 열광적인 동원도, 헌신적인 노동도, 과학기술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것도, 문예활동을 하는 것도 모두 “혁명”이었다. 그리고 그 자신
이 해석하는 “봉건사상”, “자본주의사상”, “수정주의사상”, “교조주의사상”을 청산하고
그의 ‘주체사상’을 “절대” 신봉하며, “혁명의 천재”인 자신의 최고교시에 “무조건” 복
종하는 소위 “사상개조”도 “혁명”이다.

‘문화혁명’이란 용어는 본래 레닌이 창안한 후1979) 공산주의자들은 빈번히 사용했
지만 그러나 레닌은 ‘기술혁명’이니 ‘사상혁명’이란 말은 하지 않았다. 이것은 스탈린

1978) 『김일성저작선집』 6, p. 421.

1979) 레닌은 대중이 몽매했던 러시아의 사회주의건설에 있어서 문화건설과 문화의 역할을 10월혁명 직후부
터 계속 강조해 왔다. 그리고 「협동조합에 대하여」(1923년 1월 4일과 6일에 구술)라는 논문에서 ‘文化
革命’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전체적 문화혁명 없이는 완전한 協同組合化(사회주의의 기초작업)가 불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전 국민 특히 농민들이 읽고 쓸 수 있도록 하여 문맹과 문화적 후진성을
청산하는) 농민들 사이에서의 문화활동의 ‘완전한 협동조합화’의 필요 불가결의 조건이라고 확신하고
이것을 社會主義革命의 내용의 일부로 간주했던 것이다. Lenin, *Collected Works*, vol.33 (Moscow,
1996), pp. 469~71, pp. 474~75.

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모택동의 중국에서도 기술혁명-문화혁명이란 용어는 김일성보다 먼저 꼭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으나 '사상혁명'이란 말은 거의 하지 않았고 그 대신 '사상혁명'과 마찬가지로 내용을 담은 '정풍운동(整風運動)' 내지 '사회주의 교육운동'이란 술어를 사용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김일성의 "3대혁명"이라는 개념은 그가 처음 만들어 낸 "독창"이 아니다. 김일성의 '3대혁명', 즉 사상-기술-문화혁명은 '모택동사상'에서와 꼭 마찬가지로 자기의 "계속혁명"론의 중심적 부분을 형성하고 있었다.

제2장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

제1절 “계속혁명”론의 논리

“계속혁명”이란 공산주의의 위업이 달성될 때까지는 혁명에 휴식이 있을 수 없고 혁명투쟁은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말로 요약된다. 김일성에 의하면 노동계급(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사회제도를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교체한다고 하여 혁명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반제-반봉건 민주혁명이 끝난 다음에는 지체 없이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해야 하며;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여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에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¹⁹⁸⁰⁾를 이룩하기 위하여 적대계급(敵對階級)의 책동과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腐蝕作用)을 극복하는 동시에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노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혁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때의 혁명이란 사상-기술-문화영역에서의 혁명이며, 이것 없이는 사회주의의

1980) 맑스-레닌주의의 이론에서는 도시와 농촌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을 주장한 다음 부르주아정권을 뒤집었고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토지와 공장 및 금융기관 등의 국-공유화 단행)함으로써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는 과정을 말한다. 사회주의 혁명의 주력 부대는 노동계급이며 지도계급이라고 규정해왔으나, 이때의 “노동계급”이란 실제로는 노동계급의 권위라고 자처하는 “공산당”이다. “공산당”이 지도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의 수립을 지향하지 않는 혁명은 아무리 “사회주의”를 표방해도 결코 “사회주의 혁명”으로는 될 수도 없다고 과거 1세기 동안 그런 이데올로기의 굴레를 씌워왔다. 그 굴레는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공산주의정권이 모두 몰락하고, 등소평의 등장 이후 중국이 과거의 레닌-스탈린주의식 이론을 포기함으로써 북한만을 제외하고는 벗겨지고 말았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란 사회주의가 승리한 후에도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구(旧)사회 유물을 최종적으로 소탕한다는 투쟁, 즉 경제-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사회주의의 승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에 관하여 스탈린, 모택동의 이론에 입각하여 많은 말을 했다. 그 설명이 길고 번잡함으로 여기서는 그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로작용어사적》,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 pp. 299~300의 인용에 의거했다.

물질적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회주의가 “완전한 승리”한 다음에도, 공산주의사회의 실현과 세계적 혁명의 중국적 승리가 이룩되어 자본주의의 복구의 위험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이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요컨대 사회주의-공산주의의 건설을 지향한다는 노동계급(사실은 공산당)은 한 단계의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여 혁명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앞으로의 더 큰 승리를 위한 토대로 삼아 지체 없이 다음 단계의 혁명과업을 내세우고 그것을 수행해 나감으로써만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¹⁹⁸¹⁾

‘계속혁명’에 대한 사상적 착안(着眼)은 본래 맑스와 엥겔스가 『공산당선언』(1848)에서 “독일의 부르조아혁명은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직접적 전주곡으로 될 수밖에 없다”¹⁹⁸²⁾고 한 주장에서 발단한 것이다. 그 후 이들은 수차 ‘영속혁명’(永續革命)을 강조한 바 있고¹⁹⁸³⁾ 레닌은 1905년에 「민주주의혁명에 있어서의 사회민주주의당의 두 개의 전술」이란 논문을 통해 러시아혁명을 부르조아 민주주의혁명과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혁명의 두 단계로 구분하고 제정(帝政) 러시아에서 전제(專制)군주주의를 타도하면서 수립될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독재’ 정권은 계속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정권으로 전화(轉化)해야 한다는 일종의 연속적 혁명의 전술

1981) 『김일성선집』 6, 1960년 판, p. 138. 여기에서 김일성은 근로자들을 “부단혁명(不斷革命)”의 사상으로 교양할 것을 강조했다. 그런데 『김일성저작선집』 2 (1967), p. 264에서는 “不斷革命”이 “斷續革命”으로 개작되어 있다. ‘부단혁명’은 본래 중국에서 사용해 온 용어(소련에서 번역한 한문 용어도 동일)였는데 중공이 이것을 ‘斷續革命’으로 고치자 북한도 재빨리 이에 따랐다. 일본에서는 흔히 ‘連續革命’으로 번역해왔다. 그러나 이 용어들의 의미는 모두 동일하다. 또 유의할 것은 프로크자의 ‘永續革命’(permanent revolution)과 구별하기 위하여 “계속혁명”을 영어에서는 “uninterrupted revolution”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일성은 계속혁명에 관한 견해를 빈번히 발표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김일성저작선집』 5 (1972), pp. 545-547, p. 593과 『김일성저작선집』 4 (1967), pp. 34-37, p. 311 및 『김일성저작선집』 2, pp. 164-175, pp. 453-471을 참조.

1982) Marx und Engels, *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 (Berlin, 1958), p. 49.

1983) 맑스와 엥겔스는 1850년 3월 “우리들의 임무와 우리들의 이익은, 약간이라도 재산을 소유한 모든 계급이 지배적 지위에서 쫓겨나고, 프롤레타리아트가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일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모든 주요국의 프롤레타리아트의 결합이 현저히 진전하여 그 결과로 이 나라들의 프롤레타리아들 서로 사이의 경쟁이 끝나고, 적어도 결정적인 생산력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수중에 집중될 때까지 혁명을 영속시키는 것이다”고 쓰면서 “프롤레타리아트 당(黨)의 투쟁의 합성은 영속혁명이 되어야 한다”고 ‘영속혁명’의 구상을 정립했던 것이다. 『알쿠스코엔겔스全集』, 제7권, (大月書店版), 1961, pp. 252-253, p. 259. 그리고 맑스는 같은 해에 집필한 『프랑스에 있어서의 계급투쟁-1848년에서 1850년까지』에서 ‘혁명의 영속선언’을 역설했다. 같은 책, p. 86.

을 정식화(定式化)했던 것이다.¹⁹⁸⁴⁾ 그리고 프로츠키는 제국주의 시대에서의 2단계 혁명(‘부르조아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과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론’(一國社會主義論)을 부인하고 시계혁명이라는 관점에서 그의 독특한 ‘영속혁명론’¹⁹⁸⁵⁾을 전개하면서 스탈린과 역사적인 일대 권력투쟁을 벌였던 것은 유명한 사건이다. 모택동도 1937년 이래로 그들이 주장하는 혁명의 연속적 전화론(轉化論)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중국에서도 ‘부르조아 민주주의혁명’을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혁명’의 전환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전략과 전술을 정립(定立)했던 것이다.¹⁹⁸⁶⁾

제2절 모택동의 신기축(新機軸) - “사회주의의 총 노선”

중국대륙에서 “계속혁명”론이 대대적으로 강조된 것은 ‘사회주의적 개조’가 끝난 뒤인 1958년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시기부터이다. 미-소관계의 악화와 “반(反)우

1984) 이에 대한 분석은 졸지,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정치』 I (1967), pp. 132~140 참조.

1985) 프로츠키의 “永續革命” 핵심은 다음과 같다. 즉 “자본주의적 발달이 저급한 러시아에서는 부르조아지가 취약하므로 서구의 부르조아지가 수행한 부르조아 민주주의혁명의 임무를 담당할 수 없다. 이런 곳에서는 부르조아지에 앞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있으며, 일단 권력을 장악하면 그들은 혁명을 부르조아적 단계에서 중단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본적 임무(중세의 해소)를 수행하면서 이것을 사회주의적 방향으로 계속시켜 사회주의 혁명과 결부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적·사회적 후진국인 러시아에서만 단독으로 사회주의혁명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과학기술적 낙후성도 있겠지만 정치적 장애(자본주의국가들의 저항)에 부딪쳐 실패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혁명을 서유럽으로 점화(點火)하여 일련의 새로운 혁명을 그 주변에 일으킬 것이다. 그에 의하면 “유럽 프로레타리아트의 직접적인 정치적 지원이 없는 러시아의 노동계급은 그 권력을 유지하고, 그의 일시적 집권을 영속적인 사회주의적 독재로 전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한편 서방의 사회주의혁명은 우리들의 노동계급이 일시적 집권을 직접 사회주의독재로 전화시킬 것을 가능케 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서방의 동지들에게 기대했던 것이다. 요컨대 프로츠키는 서방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의 지원에 의하여 러시아에서의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연속적인 혁명으로 이어 주자는 것이었다. Leon Trotsky, *Permanent Revolution: The Results and Progress* (New York, 1965), pp. 154~195.

1986) 1937년 5월에 벌써 모택동은 “우리는 혁명의 전환론자로서 민주주의혁명이 사회주의의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그는 “모험주의”와 “초급증”(焦急症)을 반대하고 ‘민주공화국’의 모든 필요한 단계를 거쳐 사회주의에 도달할 것을 주장한 점에서 프로츠키주의적 ‘부단혁명’론자가 아님을 명백히 했다. 『毛澤東選集』, 單黨, 本, 人民出版社(北京) 1968, p. 373. 모택동은 비록 “계속혁명”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1939년 3월 『중국혁명과 중국공산당』에서는 “계속혁명”의 이론적 체계를 갖추고 나타냈던 것이다. 같은 책, pp. 427~431, pp. 433~435 참조.

파투쟁"이라는 대내외적 긴장 속에서 모택동은 엉뚱한 정책노선을 구상했다. 즉,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군사적인 동원체제(動員體制)를 통합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 동시에 '인민공사'를 기초로 하여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으로 이행(移行)하는 과정을 단축시키기 위해 새로운 혁명의 임무, 즉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의 임무를 제기했던 것이 이때에 다시 등장한 것이 '계속혁명론'(繼續革命論)이었다. 1968년 5월의 '중국공산당' 제8기 전국대회 제2차 회의에서의 『활동보고』에서 유소기(劉少奇)는 모택동의 지시를 잇달아 강조하면서 '부단혁명'(不斷革命=계속혁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했다.

맑스-엥겔스-레닌은 여러 차례 프로레타리아트의 전투적 구호가 '부단혁명'이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시기를 어기지 말고 새로운 혁명의 임무를 제기하여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증도에서 정제시키지 말며, 인민대중의 혁명적 정열을 혁명의 중단으로 냉각시키지 않고, 당 및 국가의 일꾼들에게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여 자만하는 기풍이나 해이한 기풍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중앙위원회와 모택동 동지는 오랫동안 맑스-레닌주의의 이 부단(계속) 혁명의 이론에 의하여 중국혁명을 지도해 왔다.¹⁹⁸⁷⁾

또한 유소기는 구체적으로 중국에서 '민주주의혁명'이 승리하기 전야에 '당(黨)중앙위원회'는 "신민주주의국가에서 사회주의국가로의 이행(移行)의 임무를 제기"했으며(1949년 3월), 중공정권이 국-공 내전에서 승리한 후 토지개혁이 완수되자 곧 농업면에서의 "호조(互助)-협동화(協同化)"를 통한 집단화의 길을 지시했고(1951년 12월), 다시 1953년에는 농업-수공업사영(私營) 상공업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를 전국 인민에게 대대적으로 선전했으며, 생산수단의 소유제의 면에서 '사회주의혁명'이 기본적으로 승리하자, '당(黨) 중앙위원회'는 사상전선(思想戰線)과 정치전선(政治戰線)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을 제기하고 그것을 수행했다고 했다¹⁹⁸⁸⁾는 것이 공식적 주장이었다. 결국 "이런 일들은 모두 혁명의 시기를 어기지 않고, 혁명을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으로, 하나의 승리에서 다음의 승리로 전진시키는 것"¹⁹⁸⁹⁾이라고 그는

1987) 『劉少奇主要著作集』(日譯), 第4卷, 三一書房, 1960, p. 151. 유소기의 이 중요한 『활동보고』는 모택동 사후, 또는 유소기가 복권된 후에 출판된 1985년판 『劉少奇選集』에는 들어있지 않다. 여기에서는 1960년대의 日本語版을 사용했다.

1988) 같은 책, pp. 151~152.

해명했다.

다음에 전개된 것이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인데, “이것은 우리들(중공당)의 부단히 발전하는 혁명이 이제 또 새로운 단계로 전진하는 것을 필요로 해 왔음을 의미한다”¹⁹⁹⁰⁾는 것이 유소기의 입을 통한 모택동의 설명이었다.

유소기(劉少奇)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서 ‘총노선(전반적 방침)’의 기본점을 ① 모든 적극적인 요인을 동원하여 인민 내부의 모순(矛盾)을 옳게 처리하는 것, ② 사회주의의 전 인민적 소유제와 집단적 소유제를 강화하고 발전시켜 프롤레타리아독제와 프롤레타리아트의 국제적 단결을 강화하는 것, ③ 계속하여 경제전선-정치전선-사상전선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을 완성하는 동시에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일보 일보 실현하는 것, ④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전제에서 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 ⑤ 집중지도(集中指導)와 전면적 계획, 분업과 협업을 전제로 하여 중앙공업과 지방공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 ⑥ 이런 것들을 통하여 될 수 있는 한 빨리 중국을 현대적인 공업과 농업, 현대적인 과학-문화를 그대로 둘 것, 위대한 사회주의국가로 이룩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¹⁹⁹¹⁾ 이것이 모택동의 신기축, 즉 계속혁명의 방법이었다.

이상에서 모택동의 독특한 변증법적 개념인 ①항을 제외한다면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김일성이 때로는 약간 용어를 바꾸었지만 거의 모두 중공당(中共黨)의 주장을 복창해 왔다는 사실을 그의 수다한 저작들은 입증하고 있다. 모택동은 1958년 1월 28일과 30일 ‘최고국무회의’에서 한 강화(講話)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 바 있다.

사회혁명은 역시 매일매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풍(整風)은 역시 계속해야 하며 늦춰서는 안 된다.……계속혁명에 관해 말하고자 한다. 해방 후 토지개혁을 하고, 토지개혁 뒤에는 호조조(互助組)와 합작사(合作社=협동조합)를 하고 1956년에는 공-사(公-私)합영과 수공업의 합작화를 하고 이어서 1957년에는 정풍을 하고, 다시 이어 기술혁명을 하려 한다. 한 가지가 끝나면 또 한 가지가 시작된다. 쇠는 달았을 동안에 두들

1989) 같은 책, p. 152.

1990) 같은 책, p. 152.

1991) 같은 책, p. 153.

기는 것이며, 중간에 냉각기를 두는 것이 아니다.1992)

김일성도 혁명의 열이 식기 전에 하나의 혁명에서 다른 혁명을 계속해 왔으며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는 중국에서처럼 '사상혁명'(북한식 정풍운동) - '기술혁명' - '문화혁명'에 더욱 열을 가하게 되었다. 1976년 9월 모택동이 사망하고 덩소핑(鄧小平)시대가 되자 중국에서 '계속혁명'의 구호는 자취를 감추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히 실패했고, 중국은 문호를 개방하여 미국-일본, 서구의 자본과 기술을 대담하게 도입하면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대대적으로 부활시키는 경제제도를 개혁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일성은 모택동식의 낡은 도식(圖式)에 끝까지 매달리고 있었다. 1986년 5월 31일 그는 느닷없이 「조선노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이라는 제하의 강의를 고급 당(黨)학교에서 했다. 여기서도 그는 '계속혁명'을 새삼 찬양함으로써 그것을 고수할 뜻을 밝혔다.¹⁹⁹³⁾ 김일성 사후에도 이 노선은 바뀌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3절 '대약진' 운동의 질풍 속에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일성은 "혁명"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가 당(黨)의 최고권력을 장악한 이후부터는 "사상-기술-문화혁명"의 세 영역에서의 혁명을 줄곧 강조해 왔다. 그리고 그는 북한에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에는 이 세 가지 혁명이 더욱 필요하다고 체계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1958년 8월 (5개년계획)기간경부터의 일이었다. 1954년에 착수한 농업집단화('협동화')정책은 그때까지는 완료되어 농경지의 94%가 '협동농장'으로 개조되었고 가장 소규모의 개인 상공업까지도 수공업과 더불어 일단은 우선 '협동조합'으로 통합, 개편되었었다.

이러한 변혁은 명목상으로는 강제가 아니라 모두 "자원성(自願性)"의 원칙에 따라

1992) 東京大學近代中國史研究會 譯, 『毛澤東思想萬歲』上, 三一書房, 1974, pp. 214-215.

1993) 《로동신문》, 1986. 6. 1 참조.

다고 했다. 그는 불과 4~5년의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사회주의적 개조’가 끝났다는 사실을 자랑했다.¹⁹⁹⁴⁾ 그러나 이것은 초(超)스탈린주의적 억압정책에 따라, 치열한 “계급투쟁” 속에서 강행되었으며 그 결과로 북한에서는 이른바 “사회주의제도”가 단 시일 안에 수립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중국의 경우 농업-수공업-자본주의적 상공업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에 착수한 것은 1953년 제1차 5개년계획이 시작되면서부터였다. 연대적(年代的)으로 본다면 ‘사회주의적 개조’, 특히 농업의 집단화는 북한과 중국에서 같은 시기에 시작되었으며 완성된 것도 거의 같은 시기였다. 즉, 북한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1958년 8월에는 집단화가 끝났지만, 1956년 2월 현재 전 농토의 65.6%와 경지면적의 61.1%가 이미 농업협동조합(집단농장)에 편입되어있었다.¹⁹⁹⁵⁾ 이것은 집단화하기 어려운 산간벽지를 제외한 거의 전 농촌과 농토가 집단화되었다는 것을 뜻했다. 이에 대해 중국대륙에서는 1956년 말까지 전농가의 93.3%가 집단화되고 수공업의 91.7%가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료했으며,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공-사합영(公-私合營)도 거의 완전하게 달성되었다는 것이 북경(北京)의 공식통계였다.¹⁹⁹⁶⁾

이렇게 볼 때 북한과 중국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대체로 같은 시기에 (중국에서 약간 빨리) 끝났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적 개조’를 끝낸 모택동은 1958년 여름부터 돌연히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의 질풍을 몰고 왔었는데, 이를 뒤따라 북한에서는 1959년 3월부터 “천리마운동(千里馬運動)”을 일으켰다. 북한의 선전문건에 의하면 “천리마운동”을 희미하게나마 착상한 것은 1956년 12월이었다.¹⁹⁹⁷⁾ 그런데 1959년(5개년계획기간 중) 2월 김일성이 평안남도 강선(降仙)제강소를 방문하여 노동자들로 하여금 ‘천리마운동’을 조직케 한 것을 계기로 이 사회주의적 경쟁운동은 통칭 ‘천리마운동’으로 불리게 되었고 그 후 급속히 북한 전(全)지역에 파급되었다.¹⁹⁹⁸⁾

중국의 ‘대약진’운동은 당(黨) ‘제8기 전국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정식 확인을

1994) 『김일성저작선집』 3, 1968년 판, p. 72.

1995) 『김일성선집』 4, 1963년 판, p. 446.

1996) 中國 國家統計局, 編, 『偉大的10年—中華人民共和國經濟文化建設成就的統計』에 의거.

1997) 『김일성동지략전』, 1972, p. 573. 이에 의하면 1956년 12월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천리마운동을 불러일으키는 발단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이 회의가 끝나자 김일성은 “千里馬를 탄 기세로 달리자!”라는 구호를 제기하여 전체 근로자들을 ‘사회주의를 다그치기 위한 투쟁’으로 결기시켰다고 한다.

1998) 같은 책, p. 639.

받은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의 집약적 표현이었다. 이때 「당(黨) 중앙위원회 활동 보고」에 나선 유소기는 사회주의건설의 열의를 유감없이 토로했다. 그는 모택동이 제창해 온 이른바 “15년 안에 영국을 따라잡고 앞서라”는 표어를 내세워 “더욱 많이, 더욱 빨리, 더욱 훌륭히, 더욱 절약하여(多, 快, 好, 省) 사회주의를 건설하라”는 모택동의 슬로건을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을 제기했던 것이다.¹⁹⁹⁹⁾ 요컨대 ‘대약진’운동은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정력”을 총동원하여 모든 부문에서의 생산과 건설에서 비약적(飛躍的) 성과를 이룩하자는 데 그 목표가 있었다. 이것은 북한의 ‘천리마운동’에서도 꼭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대약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계속혁명”이 필요하며 그 내용으로는 기술의 낙후성과 문화의 낙후성을 극복하는 기술혁명-문화혁명이 제기된다는 것이 유소기의 해명이었다.²⁰⁰⁰⁾ 그는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차게 추진시킨다면 중국의 공업은 “15년 또는 그 보다도 짧은 기간에, 강철과 그 밖의 주요공업물의 생산량에 있어서 영국을 따라잡고 앞설 수 있으며”, 그리고 “농업에서는 급속히 자본주의 제국(諸國)을 앞설 수 있다”²⁰⁰¹⁾는 과대한 의욕을 표명했다.

김일성은 이 엄청난 의욕을 부러워하는 양, 북한도 적어도 생산속도와 인구 1인당 생산량에 있어서는 선진 자본주의국가를 따라잡을 수 있음은 물론, 앞서 나아가겠다는 열망을 표명했다. 1958년 11월 20일(‘5개년계획’ 기간 중) 그는 전력, 석탄, 강철, 시멘트 등의 1인당 생산량에 있어서는 영국을 따라잡고 앞설 것이라고 공언하고, 심지어는 “기계공업에서도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²⁰⁰²⁾고까지 호언(豪言)했던 것이다. 김일성은 1958년 봄 이래로 유소기를 따라 복창하듯이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더욱 중시하고 강조하는 말을 계속 되풀이해 왔었다.

김일성은 이어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²⁰⁰³⁾느니 또는 “사회주의제도가 기본적으로 완

1999) 『劉少奇主要著作集』, 제4권, p. 122, p. 137, p. 143.

2000) 같은 책, p. 152.

2001) 같은 책, p. 155.

2002) 『김일성선집』 6, 1963년 판, p. 120.

2003) 『김일성선집』 5, p. 429

성된 조건에서 문화혁명은 매우 긴급한 과제로 제기된다”²⁰⁰⁴⁾느니 하는 견해를 피력했었다. 또한 그는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의 상호관련성을 강조하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문화혁명을 하지 않고서는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²⁰⁰⁵⁾고 설파했다. 이것은 유소기가 앞의 「보고」에서 “기술혁명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는 문화혁명을 동시에 수행하여 경제건설에 봉사하는 문화-교육-위생사업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²⁰⁰⁶⁾고 말한 것과 전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설명이었다.

그리하여 중국의 ‘대약진’ 운동에서와 꼭 마찬가지로 북한의 천리마운동에서도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성패를 결정하는 관건으로 인식되어 왔다.

2004) 같은 책, p. 497.

2005) 『김일성저작선집』 3, p. 108.

2006) 같은 책, p. 194.

0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1011021031041051061071081091101111121131141151161171181191201211221231241251261271281291301311321331341351361371381391401411421431441451461471481491501511521531541551561571581591601611621631641651661671681691701711721731741751761771781791801811821831841851861871881891901911921931941951961971981992002012022032042052062072082092102112122132142152162172182192202212222232242252262272282292302312322332342352362372382392402412422432442452462472482492502512522532542552562572582592602612622632642652662672682692702712722732742752762772782792802812822832842852862872882892902912922932942952962972982993003013023033043053063073083093103113123133143153163173183193203213223233243253263273283293303313323333343353363373383393403413423433443453463473483493503513523533543553563573583593603613623633643653663673683693703713723733743753763773783793803813823833843853863873883893903913923933943953963973983994004014024034044054064074084094104114124134144154164174184194204214224234244254264274284294304314324334344354364374384394404414424434444454464474484494504514524534544554564574584594604614624634644654664674684694704714724734744754764774784794804814824834844854864874884894904914924934944954964974984995005015025035045055065075085095105115125135145155165175185195205215225235245255265275285295305315325335345355365375385395405415425435445455465475485495505515525535545555565575585595605615625635645655665675685695705715725735745755765775785795805815825835845855865875885895905915925935945955965975985996006016026036046056066076086096106116126136146156166176186196206216226236246256266276286296306316326336346356366376386396406416426436446456466476486496506516526536546556566576586596606616626636646656666676686696706716726736746756766776786796806816826836846856866876886896906916926936946956966976986997007017027037047057067077087097107117127137147157167177187197207217227237247257267277287297307317327337347357367377387397407417427437447457467477487497507517527537547557567577587597607617627637647657667677687697707717727737747757767777787797807817827837847857867877887897907917927937947957967977987998008018028038048058068078088098108118128138148158168178188198208218228238248258268278288298308318328338348358368378388398408418428438448458468478488498508518528538548558568578588598608618628638648658668678688698708718728738748758768778788798808818828838848858868878888898908918928938948958968978988999009019029039049059069079089099109119129139149159169179189199209219229239249259269279289299309319329339349359369379389399409419429439449459469479489499509519529539549559569579589599609619629639649659669679689699709719729739749759769779789799809819829839849859869879889899909919929939949959969979989991000100110021003100410051006100710081009101010111012101310141015101610171018101910201021102210231024102510261027102810291030103110321033103410351036103710381039104010411042104310441045104610471048104910501051105210531054105510561057105810591060106110621063106410651066106710681069107010711072107310741075107610771078107910801081108210831084108510861087108810891090109110921093109410951096109710981099110011011102110311041105110611071108110911101111111211131114111511161117111811191120112111221123112411251126112711281129113011311132113311341135113611371138113911401141114211431144114511461147114811491150115111521153115411551156115711581159116011611162116311641165116611671168116911701171117211731174117511761177117811791180118111821183118411851186118711881189119011911192119311941195119611971198119912001201120212031204120512061207120812091210121112121213121412151216121712181219122012211222122312241225122612271228122912301231123212331234123512361237123812391240124112421243124412451246124712481249125012511252125312541255125612571258125912601261126212631264126512661267126812691270127112721273127412751276127712781279128012811282128312841285128612871288128912901291129212931294129512961297129812991300

서부터 착취계급과 착취제도의 모든 잔재를 최후적으로 일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경제면에서 착취계급을 일소하는 것보다도 훨씬 어려운 임무여서, 장기간에 이르는 교육과 투쟁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²⁰⁰⁸⁾

중국에서 ‘대약진’운동이 시작될 무렵부터 김일성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는 부르주아사상잔재를 없애고 그들을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 문제가 중요하다”²⁰⁰⁹⁾는 것을 세삼 강조했다. 그에 의하면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었다고 해도 “사람들의 의식은 아직도 많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으며 그 까닭은 어제까지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 살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개인주의-이기주의의 잔재”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²⁰¹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교양사업을 강화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선다”²⁰¹¹⁾는 것이었다. 그는 해방 직후부터 ‘당(黨) 사상사업’, ‘사상교양사업’, ‘사상개조운동’, ‘당내 계급교양사업’ 등 다양한 이름으로 당(黨)이테올로기 주입운동을 벌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1958년 9월부터는 ‘사상혁명’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그것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 동년 9월 16일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회주의 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두 가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 하나는 사상혁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제도는 개조되었으나 아직까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자본주의 사상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이 낡은 사상 잔재를 뽑아버리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켜야 합니다.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동시에 그들의 문화 기술도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의 생산력을 높이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²⁰¹²⁾

‘천리마운동’이 시작되고 있던 시기에 김일성이 진술한 이상과 같은 말들은 앞서 인용한 유소기(劉少奇)의 ‘정풍운동’에 관한 『보고』 연설문의 표현과, 그리고 사고(思考)의 맥락이 너무나 일치한다. 또한 중국의 ‘대약진’운동과 북한의 ‘천리마운동’은 그

2008) 같은 책, pp. 170~171.

2009) 『김일성저작선집』 2, pp. 180~181.

2010) 같은 책, p. 180.

2011) 위와 같음.

2012) 『김일성선집』 6, 1968년 판, p. 234. 여기서 “사상혁명”은 『김일성선집』 6, 1960년 版에서는 “문화혁명”이라고 되어있다. 김일성은 이 용어를 “사상혁명”과 때로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것들이 다 같이 계획, 강행되고 있는 동안 당 내외의 강한 비판과 반항에 부딪혔다. 이러한 정치적 위기는 '사상교양', 즉 정치적 숙청(肅清)을 수반하는 전국적인 이데올로기(사상)투쟁에 의하여 극복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맑스-레닌주의당(黨)의 논리였다. 그리하여 '정풍운동'(중공)이나 '사상교양사업'(북한)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천리마운동'이 강행되고 있던 동안 김일성은 사상혁명의 대상으로서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사상의 잔재", "소극성", "경험주의", "관료주의", "종파주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주관주의", "수정주의", "기술신비주의" 등의 "온갖 낡은 것"을 지적 공격했다. 이와 병행하여 "사람의 개조" 또는 "사람의 의식개조"를 실재 없이 강조했다. 이러한 "낡은" 사고에 대한 공격과 "새" 인간에로의 개조의 강조는 모두가 북한에 앞서 '대약진' 운동을 신호로 하여 바로 중국에서 계속 진행되어 온 것들이었다.

이것을 요약하면 '천리마운동'은 근로자들에게 "혁명적 열의"와 "계급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이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여 이른바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大高潮)를 이룩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면 '천리마운동'에 의하여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은 어떤 성과를 이룩했는가. 우선 경제건설 중 제1차 5개년계획은 '전후 복구 3개년 계획'(1954-56, 아직은 천리마운동의 준비단계)과 더불어 북한의 일련의 연차 경제 계획 중 비교적 성공한 예이다. '제4차 노동당대회'(1961. 9)에서 김일성은 "1957년부터 1960년까지의 4년 동안에 공업 총생산액은 3.5배로 늘어났고 공업 생산의 연평균 증가 속도는 36.5%에 이르렀다고 했다. 또한 이 기간 중 전력공업은 1.8배, 연료공업은 2.8배, 광석채굴업은 2.6배, 야금공업은 3배, 화학공업은 4.5배, 기계제작공업은 4.7배로 각각 늘어났다는 숫자를 제시했다. 국민소득도 1960년대에는 1956년보다 2.1%가 증가되었고 도시와 농촌에서 근로자들의 주택이 대량으로 건설되었다고 한다. 그 결과로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비록 넉넉하게 잘 살지는 못하지만 자기들의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데 대하여서는 근심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제1차 5개년 계획의 성과를 사실과는 다르게 자랑했다.²⁰¹³⁾ 김일성은 이 모든 성과는 결국 "사회주의 건설의 대 고조속에서, 천리마운동의 발전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자화자찬 했다.²⁰¹⁴⁾ 그러나 이런 통계 숫자는 다른 공산당 국가 모두에서 그랬던

2013) 『김일성 저작선집』 3, 1968년, pp. 75~77, p. 83, p. 90.

것처럼 정치선전의 목적에서 과장된 것으로 봐야 하며 객관적 신빙성은 의문이다.

‘5개년 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8,500만 달러의 무상원조의 제공을 약속한 ‘상품납입에 관한 의정서’의 서명을 얻어냈다.²⁰¹⁵⁾ 그리고 북경정부로부터는 1954년~57년에 걸쳐 80억원(3억2천만 달러)의 무상원조를 제공받기로 약정했다.²⁰¹⁶⁾ 중국 조선족 학자들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북한은 ‘5개년 계획’의 완수를 위하여 소련-중국-동유럽 등 “사회주의 형제국”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유상, 무상원조를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그중 林今淑에 의하면 소련은 1954년~1956년 동안에 연평균 4억 1천 6백 15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한다.²⁰¹⁷⁾ 당시 사회주의 나라들로부터 증여받은 원조총액은 북한 국가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했다는 것이다. 1956년에는 다시 3억 루블(약 4 루블이 1 달러)의 무상원조를 받았다고 한다.²⁰¹⁸⁾

‘7개년계획’(1961~60<70>)) 기간 중에도 공산권 국가들의 대북한 원조는 계속되었다. 즉 소련은 1억9천7백만 달러, 중국은 1억5백만 달러, 동유럽제국은 3천5백만 달러를 약속했었다.²⁰¹⁹⁾ 그러나 1956년 초부터 노골화되기 시작한 중-소분쟁에서 김일성이 백한 양다리 걸치기 정책 때문에 중국은 액수의 삭감, 일시지불 정치 등의 압력을 가했다.

이와 같이 ‘천리마운동’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데는 ‘공산권’으로부터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김일성의 설명은 달랐다. 그는 1961년 9월(‘7개년계획’ 기간 중)에 열린 4차당대회 『보고』에서 “천리마운동은 대중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더욱 발전하여 경제(기술이 관건)-문화-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뒤떨어진 것을 쓸어버리고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며, 사회주의 건설을 비상히 촉진시키는 북반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대 혁명운동으로 되었다”고 자찬했다. 그는 중공당의 개념과 표현을 그대로 빌려다가 “천리마운동은……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黨)의 총노선이 되었다”²⁰²⁰⁾고 선언하기에 이른다.

2014) 같은 책, p. 42.

2015) 『北韓總鑑』(1946~68) 共產黨問題研究所(서울), p. 243.

2016) 같은 책, p. 246.

2017) 今村彌, 『北朝鮮 虚構の經濟』, 集英社, 2005, p. 30.

2018) 위와 같음.

2019) 林今淑, 『朝鮮經濟』, pp. 218. 위의 今村彌의 앞의 책에서 재인용.

2020) 『김일성저작선집』 3, 1968년 판, pp. 101~102.

그리하여 중국의 ‘대약진’운동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천리마운동’에서도 당(黨)의 최고 독재자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그 원동력으로 되었다. ‘천리마운동’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김일성은 “자주성”과는 반대로 중공당(모택동)의 *이데올로기*, 개념, 용어들을 거의 그대로 본 따서 자기의 것으로 내세웠다. 그 후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던 3대혁명이란 ‘천리마운동’의 연장이요 확대판이었지만, ‘천리마운동’의 원류는 이상에서 분석한 대로 모택동의 ‘대약진’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이에 걸맞지 않게 경제건설에서는 앞에서 고찰한 대로 압도적으로 소련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다.

김일성 당시 일련의 저작들을 보면, ‘3대혁명’이란 결국 ‘천리마운동’의 이름을 바꾼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이데올로기*의 구조도, 구체적인 개념과 표현도 마찬가지로 지이다. 다만 약간 다른 것이 있다면 ‘3대혁명운동’에서는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사상’이 더 짙으며, 이미 형성된 이론의 골격에다 계속 살을 붙였으며, ‘3대혁명소조’들을 공장-기업소-협동농장에 파견했다는 점에서 운동 방식이 새로워진다는 것뿐이었다. 그럼으로 ‘3대혁명’노선을 파악하려면 지금까지의 ‘천리마운동’을 분석해야 하며 ‘천리마운동’에다 *이데올로기*와 이론면(理論面)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모택동의 ‘대약진’운동의 본질을 규명해야 한다.

‘천리마운동’은 중국대륙에서는 지금은 거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지만 북한에서는 김일성 사후에도 ‘계속혁명’ 노선에 따라 형식상으로는 여전히 보존되고 있다. 이것은 김정일 시대에도 쓰러져가는 1인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권위의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천리마운동’은 ‘대약진’운동과 마찬가지로 인적 자원의 “인해전술(人海戰術)”적 동원,²⁰²¹⁾ 사회의 엄격한 전시체제적(戰時體制的) 편제화(編制化), 전체주의적 정치교육, 이것과 결부된 생산활동, 열광적인 혁명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건설성과를 위한 경쟁, 게다가 반항분자들에 대한 조직적 탄압을 통해 대중의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그것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객관적인 경제법칙보다는 혁명사상-혁명적 정열을 우선시킴으로써 경제와 정치, 하부구조와 상부

2021) 金日成은 이 점을 후일(1973년 3월 14일)에 와서 부득이 “人海戰術”적 방법이 강행되어 왔음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일부 공장들에서는 당이 내세운 방침대로 기술혁명을 하지 않고 ‘인해전술’을 쓰는 방법으로, 다시 말하여 勞力者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생산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인구가 많고 노력이 남는 나라라면 몰라도 노력 사정이 긴장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생산을 높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6, 1963년 판, p. 416.

구조의 관계를 완전히 전도시키는 주의주의적(主意主義的) 방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근로대중에 대한 당(黨)의 통제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당(黨)의 통제에서 주요한 수단은 심리적, 물리적 강압 이외에도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굴레였다. 그리하여 중국대륙에서처럼 북한에서도 이윽고 모든 사업 가운데서 “정치사업을 앞세운다”는 구호가 “군중노선”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들려왔다. 이 말은 ‘대약진’운동 시기에 중공에서 나온 ‘정치괘수(政治掛帥)’ 즉 정치선행(政治先行)이란 말²⁰²²⁾의 우리말 직역이다.

제2절 “정치선행”과 “군중노선”에 의한 총동원체제

1964년 12월 김일성은 “군중노선에 관한 사업방법”, 다시 말하여 정치를 앞세워 군중을 동원하는 사업방법은 “혁명투쟁에서나 경제건설에서나 다 같이 필요한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경제일꾼들이 경제기술과 실무에만 매달려 정치사업을 등한시한다고 힐책(詰責)했다. 왜냐하면 그에 있어서는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발양(發揚)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²⁰²³⁾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운다.”는 것은 최고권력자인 김일성(오늘은 김정일)의 주체사상을 앞세운다는 것이며, 그의 주체사상—유일사상체계를 앞세우는 것이 ‘정치선행’의 절대적 요구로 되었었다. 이것은 중공에서 “정치를 앞세운다는 것은

2022) 여기서 “정치사업을 앞세운다.”는 김일성의 말은 바로 ‘대약진’운동 시기에 ‘중공당’에서 만들어낸 ‘정치괘수’(=政治先行)라는 용어의 북한식 한글번역이다. “政治掛帥”란 결국 각 生産單位에서 모든 권력을 생산단위 외의 黨 조직들이 장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Franz Schurmann,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1966, p. 206참조). ‘大躍進’運動이 계속되고 있던 1960년 10월 黨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정치공작(사업)의 원칙으로서, 임 표는 ‘思想事業’을 제기했다. 즉, ①무기와 사람의 관계에서는 사람이 제일, ②군의 각종 사업에서는 ‘思想事業’이 제일, ③실무사업과 사상사업의 관계에서는 사상사업이 제일. ④思想事業에 있어서 책 속의 사상과 산 사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산 사상이 제일이라고 “정치사상사업”을 절대로 중요시했다. 이때에 林彪는 毛澤東의 人民公社를 비판하다가 1959년에 실각한 彭德懷에 뒤이어 국방부장직에 등장해 있었다. 그리하여 軍 안에서는 이 ‘四個第一’의 원칙에 기초하여 모택동의 軍事思想에 의한 정치사업이 급속히 강화되었다. 이 ‘四個第一’은 ‘프롤레타리아 文化大革命’ 시기(1966~1969)에 전국 인민의 기본원칙으로 강조되면서 각광을 받았던 것이다.

2023) 『김일성저작선집』 4, p. 226.

모든 사업 중에서 ‘모택동사상’을 앞세우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²⁰²⁴⁾라는 논리와 완전히 일치했다. 그리하여 그 후 3대혁명의 ‘붉은기 쟁취운동’에서는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구호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대약진’ 운동이 시작되자 중국에서는 ‘군중노선(群衆路線)’이란 것이 더욱 강조되고 이것은 모든 활동조직에서 철저하게 적용되었다. 건설을 최대한의 속도로 다그치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리기 위한 전국적 동원체제로서의 ‘대약진’운동의 성패는 당(黨)이 대중을 어떻게 조직하고,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그들에게 혁명사상을 불어넣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 모택동의 사고였다. 유소기는 앞의 『보고』에서 “당의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은 사회주의 건설사업에 대한 당의 군중노선의 적용이요 그 발전”²⁰²⁵⁾이라고 규정했었다. 그런데 “군중노선”은 모택동이 창시한 것이며, 그는 벌써 연안(延安)시대 이래로 ‘중국공산당’의 독특한 대중지도방법(大衆指導方法)으로 이것을 정식화(定式化)했고 실천해 왔었다.²⁰²⁶⁾ 당시 그는 당(黨)이 군중(대중)으로부터 유리되지 않으려면 이들과 결합하고 그들 속에 침투해야 한다는 신념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러면 “군중노선”이란 무엇인가. ‘군중노선’을 일관하는 기본원리는 첫째는 ‘대중 속으로부터 나와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을 모택동은 다음과 같이 알송달송하게 설명했다.

…… 다시 말하면 대중의 의견(분산적이며 체계가 서지 않은 의견)……을 집약하고(역구를 거쳐 집약적이고 체계적인 의견으로 만들어)……다시 대중 속에 들어가 그것을 선전(宣傳) 해설하여 대중의 의견으로 만듦으로써 대중으로 하여금 그것을 견지케 하고 행동에 옮기게 하며 또한 대중의 행동에서 이런 의견의 옳고 그름을 검증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 다음 다시 대중 속에서 의견을 집약하고 또 대중 속에 들어가 견지케한다.……²⁰²⁷⁾ 둘째는 ‘대중 속에 들어가 대중에게서 배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2024) 《人民日報》, 1965. 7. 14 일자 사설.

2025) 『劉少奇主要著作集』, 제4권, p. 165.

2026) 군중노선에 관한 그의 최초의 구상은 「지도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1943. 6. 1)와 「조직하라!」(1943. 11. 23) 등에서 定式化되었다.

2027) 『모택동선집』(한글판) 3, 껌이징, 1968, p. 158.(번역문은 본 저자가 약간 수정)

…… 우리는 대중 속에 들어가 대중에게서 배우며 그들의 경험을 종합하여 그것을 더욱 훌륭하고 체계적인 원칙과 방법으로 되게 한 후 그것을 대중에게 알려 주고(선전) 또 그것을 실천하도록 호소하며 대중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줌으로써 대중으로 하여금 해방과 행복을 얻게 하여야 한다.²⁰²⁸⁾

‘군중노선’의 기본적 요체(要諦)는 일찍이 존 루이스(John Lewis)가 적절하게 정의한 대로 “광범한 대중운동과 결부된 당(黨)의 지도방법”²⁰²⁹⁾이란 말로 요약된다. 모택동이 “군중노선”을 처음 제시한 이래로 이것은 ‘중국공산당’의 조직이론의 원칙으로 되어 왔으며 스탈린식 관료주의나 명령주의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잘못 평가되어 왔다. 김일성도 ‘천리마운동’이 시작된 후, 즉 1960년 봄부터 대중적 운동방법에 관한 자기의 산만한 생각들을 모택동의 “군중노선”의 공식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여 재구성하였다.

그는 모택동과 꼭 마찬가지로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결정적 담보는 인민대중의 열정과 창발성과 재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있다.”²⁰³⁰⁾고 주장했다. 그의 다음 교시에서는 앞에서 인용한 모택동의 목소리가 여실히 들리고 있다.

……지도일꾼들이……군중 속에 들어가 당 정책이 옳게 집행되도록 조직하며 걸린 문제들을 찾아내고 군중의 의견을 들으며 그것을 가지고 올라와서 분석한 다음에 당의 새로운 방침과 새로운 대책을 가지고 다시 군중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군중노선입니다.²⁰³¹⁾

김일성의 ‘군중노선’이 대표적으로 구현된 사례는 그가 1960년 2월 당(黨) 중앙위원들을 이끌고 현지지도를 위해 ‘청산리(靑山里) 협동농장’을 방문한 때의 일이라고 ‘수령’의 선전원들은 예찬했다. 그리하여 청산리는 그의 현지지도에 의하여 기적을 이룩한 감격스러운 모범적 협동농장으로 되었다.²⁰³²⁾ 이때에 그가 “창조”했다는 대

2028) 같은 책, p. 209.

2029) John Wilson Lewis, *Leadership in Communist China*(1996), p. 71.

2030) 『김일성저작선집』 3, 1968년 판, p. 306 ; 『김일성저작선집』 4, 1963년 판, p. 226

2031) 『김일성저작선집』 4, 1963년 판, p. 169.

2032) 『김일성동지략전』, pp. 650~654.

중지도사상, 즉 “청산리정신”과 대중지도방법인 소위 “청산리방법”은 헌법(제12조)에 까지 명기되어 그의 ‘군중노선’의 상징으로 승양되어 왔다. 모택동의 독특한 ‘군중노선’으로부터 대중지도방법과 용어표현까지를 복사한 것이 김일성의 ‘군중노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당(黨) 선전문건들은 이것을 엉뚱하게도 “항일혁명투쟁시 김일성 동지에 의하여 창조되었다”²⁰³³⁾고 격찬했다.

이 같은 왜곡은 김일성 숭배의 또 하나의 면을 드러낸 것에 불과했다. ‘군중노선’은 “3대혁명”에서도 물론 관철되고 있다. 그는 1975년 3월에 열렸던 ‘공업열성자회의’에서 “3대혁명소조원들이 사상혁명을 힘차게 벌인 결과 ‘군중노선’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둔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²⁰³⁴⁾고 했다.

제3절 “기술 신비주의”에 대한 공격

모택동의 ‘대약진’운동과 김일성의 ‘천리마운동’에서 ‘군중노선’과 관련하여 놀랄만큼 공통적인 특징은 이른바 “기술신비주의(技術神秘主義)”에 대한 공격이었다. 전문가, 기술 간부들이 자기들의 과학지식과 기술을 마치 신비한 것인 양 자랑하면서, 대중은 이것들을 함부로 배울 수 없다고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 김일성은 모택동의 ‘중공’ 당국자와 꼭 같이 신랄한 비판을 퍼부었다. ‘대약진’기의 중공내의 사정을 프란츠 셔만(Franz Shurman)은 다음과 같이 선명하게 요약 기술한 바 있다.

……[중국의] 관리인, 경영자, 기술자들은 공격을 받았다. 그 까닭은 이들이 백화제방(百花齊放)·백가쟁명(百家爭鳴) 시기에 [당에 대해] 비판적 언사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군중노선에 열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전문적 지식인들은 자기들의 기술 신비주의 때문에, 다시 말하면 현대의 과학과 기술을 배우는 것은 오직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이 쉽게 할 수 있다는 교만한 확신 때문에 비난을 받았다.……[중국의] 대중들은 ‘기술신비주의’란 하나의 신화이며, 기술은 사회적 엘리트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다.²⁰³⁵⁾

2033) 같은 책, p. 654.

2034) 《근로자》, 1975, 3호, p. 10.

2035) Franz Shurman, 앞의 책, p. 91.

이 시기에 ‘중공당’ 당국이 전문가들의 ‘기술신비주의’를 공격한 것은 대중적 기술 혁명을 촉진하기 위해서였다. ‘중공당’당국은 광범한 대중 사이에서 과학 기술이 습득되고, 향상되지 않고서는 생산과 건설에서 비약적 성과를 이룩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정규(正規)”의 방법을 고수하려는 소위 “부르조아적 전문가”들에 의존해서는 ‘대약진’운동은 실패한다는 것이 모택동의 비전이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강철생산의 비약적 증산에 열을 올리면서 1958년 여름부터 ‘토법고로운동(土法高爐運動)’을 ‘인민공사’운동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일으켰다. ‘토법고로’란 벽돌로 쌓아올린 자가제(自家製)의 재래식 소형 용광로를 말한다. 그는 이 토법생산(土法生産)을 도시 “양법생산(洋法生産)” 즉 현대식 기계설비를 갖춘 공장생산과 결부시켜 급속한 공업화를 이룩하려고 했다.

또한 모택동은 대중에 잠재해 있는 “무한한 창조력”과 공산주의에 대한 “무진장한 열의”를 믿고 그들에 의존하며 그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대(大)-양(洋)-군(群)’과 ‘소(小)-토(土)-군(群)’의 방침, 즉 대규모(大)의 현대식(洋) 기업을 군중노선(群)과 결합시키는 동시에 소규모(小)의 재래식(土) 기업도 군중노선(群)과 결합시켜 병진(竝進)시키는 “두 다리로 걷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때에 정규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은 그러한 ‘군중노선’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면서 자기들의 전문적 권위를 지키려고 했다. 여기에는 ‘중공당’ 당국은 전문가들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 기술은 신비한 것이어서 자기들만이 독점(獨占)할 수 있다고 여기는 “기술신비주의”라고 하여 공격했던 것이다.

북한의 ‘천리마운동’에서는 중국식 토법방식(土法方式)은 시도하지 않았고 현대식 방법을 채택했지만 대중적 기술혁명에 대한 신념에 있어서는 모택동을 그대로 따랐다. 그리하여 김일성도 중국식 견해를 글자 그대로 모방하면서 “기술(또는 기계)신비주의”를 공격했다. 김일성이 기술 또는 기계에 대한 “신비주의”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은 1958년 8월경부터였다. 그는 전문가들이 자기들의 기술을 자부하면서 당(黨)의 지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해 신랄한 비난을 가하고, 이러한 태도는 기술의 혁신과 전진을 싫어하는 자들의 안일한 “소극성(消極性)”과 “보수주의”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면서 대중들은 단호히 이에 반대하라고 교시했다. 그의 말은 아래와 같다.

지금 보수주의는 기계제작부문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혁신과 전진을 싫어하고 편안히 앉아서 뭉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계의 신비성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계란 매우 신비한 것이므로 함부로 다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신비합니까?……물론 기계란 현대적인 노동도구로서 정밀하고 만들기 좀 힘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신비한 것이란 없습니다. 다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²⁰³⁶⁾

김일성은 앞에서 *서민* 교수가 소개한 사례, 즉 고등교육을 받은 과학자들의 소위 “교만한 확신”에 대해 중공당국의 비난과 꼭 같은 내용의 비판을 북한과학자들에게 던졌다.

……[평양의] 과학원의 일부 “선생”들은 과학이 신비하고 기술이 신비하여 함부로 연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신비라는 말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과학도 기술도 다 사람이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신비한 것이란 없습니다.²⁰³⁷⁾

김일성은 ‘중공당(中共黨)’이 강조한 이른바 “기술은 사회적 엘리트의 독점적분야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꼭 같이 강조하면서 북한의 과학자-기술자들을 다음과 같이 공격했다.

또 한 가지 해로운 경향은 일부 학자들과 기술자들이 노동자, 농민들을 무시하다고 업수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아주 옳지 않습니다. 박사, 학사나, 대학을 나온 사람들만이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와 농민의 힘은 천하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비행기도 자동차도 기차도 기선도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노동자의 손으로 만들어 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과학자 기술자들과 공장, 기업소 지배인들이 노동자들의 창발력을 억누르고 그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방해하며 도와주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²⁰³⁸⁾

김일성은 ‘중공공산당’으로부터 도입한 용어와 개념을 답습하여 “기술신비주의”를 공격했다. 그것은 대중만능주의적(大衆萬能主義的) 발상이며, 기술혁명에 적용한 그

2036) 『김일성저작선집』 2, 1968년 판, p. 176.

2037) 『김일성선집』 2, p. 241.

2038) 같은 책, p. 243.

의 ‘군중노선’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술신비주의”는 매서운 공격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 있었다. 김일성이 북한의 과학자-기술자들이 수령의 정치우선주의, *이데올로기* 절대화사상에 소극적으로나마 불복했거나 또는 일반기술혁명이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란 것은 추측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김일성은 이러한 추측과는 반대로 1975년 3월에 영똥하게도 “기술신비주의”는 3대혁명소조원들이 벌인 “대담한 기술혁신투쟁”에 의하여, “발전한 나라들(선진국)에 대한 숭배사상과 더불어 비로소 산산이 깨어졌다”고 공언했다.²⁰³⁹⁾

2039) 《근로자》, 1975, 3호, p. 13.

제4장

김일성의 “공산주의”관

제1절 “두개의 요새”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 북한에서 전개된 사상혁명-기술혁명-문화혁명의 특징은, 이것들을 사회주의의 다음 단계라고 하는 공산주의와 반드시 결부시키고 있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주의의 이상(理想)에 도달하는 것조차도 요원한 장래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단계인 공산주의 사회에로의 이행(移行)을 논하는 것은 레닌, 스탈린, 모택동에 모두 공통된 습성이요 특색이었다. 김일성도 선행자의 이론 제기를 뒤따르고 있었다. 스탈린은 소련의 생활수준과 기술적-문화적 낙후성이 자본주의 나라들에 비하여 아직도 현저했던 1938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사회주의의 건설을 끝내고 공산주의 사회에 점차적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들어섬”²⁰⁴⁰⁾을 처음으로 공언했다.

이어 1939년 3월에 열린 ‘소련공산당’ 제18차 대회에서는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移行)”에 관한 정치 프로그램을 제시한 바였다.²⁰⁴¹⁾ 그러나 그것은 몽상적인 것이었다. 한편 ‘중공당’의 지도층은 ‘대약진’ 운동에서 ‘정치우선’을 전제로 하면서도 “홍”(紅=공산주의사상)과 “전”(專=기술·실무)의 겸비야말로 지식인과 기술자의 나갈 길이요, 각급 당 간부들의 나갈 길이라고 강조했다.²⁰⁴²⁾ 그렇지만 지극히 비현실적인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발성”을 계속하여 외쳤다.

미래의 이상인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김일성의 비전은 고전적 맑스주의가 제기하

2040) History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 Bolsheviks (Short Course), Red star press, London, 1973, p. 346.

2041) 스탈린은 제 18차 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결산보고」 중, 특히 「소련의 국내정세」 부분에서 이것을 개진하였다. 위의 *History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Moscow, 1980년판, p. 543.

2042) 앞의 『劉少奇主要著作集』, 제4권.

고 스탈린주의가 교조주의화였던 비경험적 사변(思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 즉, 그는 첫째,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경제체제가 하나의 ‘전 인민적 소유형태’로 되어야 하며, 결국 ‘협동적 소유형태’가 ‘전 인민적 소유형태’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²⁰⁴³⁾ 둘째, 공산주의 하에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가 없어질 것이며 노동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즐겁고 유쾌한 일로 되며 생활상의 요구로 될 것이라는 것”,²⁰⁴⁴⁾ 셋째, 완전한 공산주의가 실현될 때까지는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아직은 남아있고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도 남아있다는 것”,²⁰⁴⁵⁾ 넷째, 공산주의 하에서는 “물건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받게 된다.”²⁰⁴⁶⁾고 말해온 것 등이 그것이다.

김일성은 이러한 공산주의 사회를 “먼 앞날에 가서만 실현될 수 있는 신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요, 투쟁만 잘 한다면 우리는 멀지 않은 앞날에 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우리의 이상을 현실에 구현할 수 있다.”²⁰⁴⁷⁾고 실로 낭만적인 환상을 북한 인민들에게 퍼뜨리는데 애쓰고 있었다. 이와 함께 “일하기를 싫어하고 놀고먹으려는 착취계급의 사상과 투쟁하면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 때까지는 모두가 다 열성적으로 일해야 한다”²⁰⁴⁸⁾고 수시로 훈시했다. 김일성은 스탈린의 명제를 따라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移行)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 즉 경제적 조건(사회의 물질적 부)과 정치적 조건(대중의 공산주의 의식) 이론을 고스란히 수용하며, 전자를 ‘물질적-기술적 요새(要塞)’로, 후자를 ‘사상적 요새(要塞)’라고 규정했다.²⁰⁴⁹⁾

이 두 “요새”(要塞) 중 김일성이 절대적으로 중요시해온 것은 “사상적 요새”이며,

2043) 『김일성저작선집』 3, 1968년 판, pp. 443~444.

2044) 같은 책, p. 49.

2045) 『김일성저작선집』 4, p. 34.

2046) 『김일성저작선집』 3, p. 206.

2047) 같은 책, p. 209.

2048) 『김일성저작선집』 3, 1968년 판, pp. 211~212.

2049) 김일성 말은 다음과 같았다.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두 개의 요새를 점령하여야 합니다. 하나는 물질 기술적 요새를 점령하는 것인데 그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단일한 공산주의적 소유를 확립하며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생산력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철저히 개조하지 않고서는 공산주의의 물질적 요새도 점령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산주의 사회를 완전히 건설할 수 없습니다.” 김일성,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1969, p. 264

따라서 사상혁명-기술혁명-문화혁명에 있어서 그는 사상혁명의 우위를 부단히 강조해 왔다. 스탈린은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공산주의사회에 이르는 조건으로서 경제적 조건(생산력의 발달 수준)과 정치적 조건(노동계급의 투쟁력)을 동위(同位)에 놓거나, 경제적 조건을 오히려 우위에 두었지만 김일성은 모택동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사상개조-인간개조를 다그치라고 촉구해 왔었다. 그의 이른바 '3대혁명'은 이 두 개의 요소를 점령하기 위한 혁명이라는 것이었다.²⁰⁵⁰⁾

이상 김일성의 주장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논리정연한 듯하다. 그러나 북한에서 사회주의의 기본건설마저 큰 난관에 봉착하여 기술은 정체하고 대중의 물질생활은 극도로 궁핍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혁명을 논함에 있어서 하필이면 "수요에 의해 분배"를 받는다는 공산주의 사회의 아득한 꿈을 마치 눈앞의 현실적 가능성처럼 내세워야 했는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 점에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맑스-레닌주의의 판에 박힌 낙관적 미래사관(未來史觀)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보다는 중국의 '인민공사'운동에서 강한 자극을 받고 그 비전을 답습했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공산주의로 가는 지름길 - '인민공사'의 이상과 환상

"공산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인민공사'는 중국의 농촌에서 "대중의 창익"에 의하여 조직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택동의 개인적 착상과 독선에 의하여 1958년 여름 돌연히 창설되기 시작했다. 이에 뒤따라 당 '중앙정치국'은 1958년 8월 29일 '북대

2050) 김일성은 '3대혁명소조운동'이 시작된 후 자신의 관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은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소와 물질적 요소를 점령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하여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들며 생산수단에 대한 단일한 공산주의적 소유를 확립하고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을 높이 발전시켜야 합니다.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소와 물질적 요소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 있게 벌려야 합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노동계급의 당이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7, 1978년 판, p. 217.

하(北戴河)회의'에서 「농촌에서 인민공사를 설립하는 문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인민공사의 방향을 제시했던 것이다. 이 「결의」를 전후하여 도처에서 소련식 꼴호즈형(型)의 농업합작사(농촌협동조합)들이 대형의 '인민공사'로 급속히 개조되어 갔고 동년 9월말 현재 전국 농가의 98.1%, 1억 2,190여만호가 2만 6,425개의 '인민공사'로 통합되었다.²⁰⁵¹⁾ 그리고 동년 12월 현재 티벳과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 농촌이 인민공사로 조직되고 도시에서도 시험적으로 몇 개의 '인민공사'가 설립되었다.²⁰⁵²⁾

김일성은 1958년 11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공산주의로 가는 도상에서 인민공사가 노는 주요한 역할”을 강조하면서, ‘붉은기 인민공사’가 금년에 전례 없이 많은 농작을 거둔데 대하여 축하²⁰⁵³⁾하는 한편, 당시 중국의 여러 지방에서 인민공사가 조직되고 있는 것에 대해 중국의 “광범한 노동자들 속에서 공산주의의식이 높아 가고 있다”²⁰⁵⁴⁾고 공감을 표명했던 것이다.

김일성의 이러한 공감은 흐루시초프가 ‘인민공사’를 “위험한 실험”이라고 명백히 비판적 입장을 취했던 것과는 극히 대조적이었다. 그의 그런 발언은 당시 고조되고 있던 중-소의 이데올로기 분쟁에서 김일성이 중국 측에 기우려지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북한의 소규모의 농업협동조합을 대규모의 단위로 통합하려는 김일성의 정책이 중국의 소규모 농업합작사를 대규모의 ‘인민공사’로 통합하는 모택동의 정책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았음은 양자의 조직원칙의 유사성과 이념의 공통성에 의하여서도 확증된다.²⁰⁵⁵⁾ 그러나 인민공사(중)와 ‘협동농장’ 양자는 조직상의 대소(大小)와 기구상의 차이²⁰⁵⁶⁾를 가지고 있었음으로 반드시 꼭 같은 것은 아니었다.

2051) 당시의 北京 정부통계. Cheng Chu-yuan, *The People's Commune* (Hong Kong), p. 11.

2052) 1958년 12월10일의 中國共產黨 중앙위원회 앞의 「決議」, 「中國年鑑」, 1959년도 판, p. 462.

2053) 《로동신문》, 1958. 11. 27일자.

2054) 《로동신문》, 1958. 11. 24일자.

2055) 인민공사는 행정의 최말단구역적인 ‘향’(鄉)을 단위로 설정한데 대해, 북한의 농촌협동조합은 역시 행정의 최말단구역인 ‘리’(里)를 단위로 통합되었다. 또한 ‘인민공사’는 종래의 향(鄉) ‘인민위원회’가 처리한 모든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동시에 정권기구와 생산조직의 통합체를 의미하는 소위 “정사회일”(政社合一)의 원칙에 의하여 공(공업)－농(농업)－상(교환)－학(문화 교육)－병(민병 및 인민의 무장)의 업무를 모두 관장케 했다. 이에 대해 북한의 통합된 대규모 농업협동조합(1962년 이후에는 “협동농장”으로 개칭)은 “병”(兵)의 부문만을 제외하고는 인민공사와 관리업무가 동일했던 것이었다. 1958년 12월 10일의 ‘中國共產黨 中央委員會’ 앞의 「決議」, 「中國年鑑」, 1959년도 판, p. 462.

이 과정에서 북한에 압도적 영향을 준 것은 '인민공사'의 공산주의적 전망이었다. 1958년 12월 10일의 '중국공산당' 제8기 중앙위원회 제9회 총회가 채택한 「인민공사의 몇 개의 문제에 대한 결의」에 의하면 인민공사는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면서 지금까지의 농업에서의 "집단적(협동적) 소유제"를 점차로 "전 인민적(국가적) 소유제"로 이행케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분배 원칙도 "노동에 따른 분배"에서 공산주의의 분배원칙인 "수요에 따른 분배"로 바꾸며, 지방에서는 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일으켜 결합시킨다고 했다. 그렇게 하여 구(舊)사회의 잔재인 도시와 농촌의 차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를 점차로 축소시킨다. 국가권력의 대내적(對內的) 기능(정치적 통제)이 점차로 축소됨에 따라 "공산주의에로의 이행(移行)을 준비하는 조건은 성숙하고 [인민공사는 공산주의의] 지역적 거점이 될 것"²⁰⁵⁷⁾이라고 환상적으로 예견했던 것이었다.

이와 동시에 모든 현(縣)의 '인민공사'를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협동(집단적)적 소유제의 '전 인민적 소유제(전면적 국유화)에로의 이행을 한걸음 한걸음 촉진시키기 위하여 '현연합사(縣聯合社)'를 설립할 것을 결정했다.²⁰⁵⁸⁾ '중국공산당'은 이러한 '인민공사'야말로 사회주의 건설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할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그것은 '두개의 이행(移行)', 즉 농촌의 '집단적 소유제'로부터 '전 인민적 소유제'에로의 이행과 '사회주의사회'로부터 '공산주의사회'에로의 이행을 위한 최량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장래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인민공사'는 여전히 사회구성의 기초 단위가 될 것"²⁰⁵⁹⁾을 기대하고 있었다.

2056) '人民公社'가 출현한 후 中國에서는 '鄉'이 폐지되고 '인민공사' 자체가 '鄉'에 대체되었다. 그 결과로 인민공사의 管理委員會가 종전의 鄉人民委員會의 업무까지를 담당하게 되었고 '인민공사의 사장은 폐지된 鄉長이 직위를 사실상 떠맡게 되었다. 즉, '政社合一'이 실현된 셈이다. 한편 북한에서는 대단위 農業協同組合(協同農場)이 조직된 후에도 '里 人民委員會'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런데 정권기관인 '리인민위원회'의 위원장이 생산조직인 협동농장의 관리위원장을 겸임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두 조직이 병존하고 있지만 내용은 '정사합일'에 가까워진 것이다.

2057)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앞의 「결의」, 『中國年鑑』 1959년도 판, pp. 461~467 참조.

2058) 같은 책, p. 464.

2059) 같은 책, p. 463.

제3절 스탈린과 모택동 사이에서

이러한 이념(理念)은 같은 시기에 제정된 ‘칠리영(七里營) 인민공사’의 「사규」에 그대로 구현되었다. 「사규」 제2조는, 이 ‘공사’의 분배원칙으로서 아직은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등급임금제(等級賃金制)를 실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인민대중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각이 높아짐에 따라 일보 일보 공산주의적 요소를 확대하여, 조건이 갖춰질 때는 각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완전히 취득하게 될 분배제도를 실행한다”²⁰⁶⁰⁾고 공산주의 경제생활의 화폭을 그려갔다.

그러나 그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부단히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일으켜 공업화-기계화-전화(電化)를 실현하고 그것에 의하여 공사경제(公社經濟)의 비약적 발전을 촉진한다”²⁰⁶¹⁾고 했다. 한편, 모든 활동의 중심이 되는 “정치사상활동을 통하여 일보 일보 자본주의적 사상을 철저히 제거하며 활동가 및 공사원(公社員)들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각을 높이고 공산주의적 풍격을 세운다”²⁰⁶²⁾는 방침을 제시했던 것이다.

모택동이 농촌의 ‘인민공사’ 조직을 통하여 미래의 공산주의사회의 토대를 구축하려 했던 점은 스탈린의 정책과는 달랐다. 스탈린이 도시의 공장에서 일으킨 사회주의적 경쟁운동, 즉 *스타하노프운동** 운동원들이 발휘하는 문화·기술적 양양, 기술 간부(Cadre)의 급속한 성장, 고도의 노동생산성에 의하여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길을 찾으려 했던 것²⁰⁶³⁾과는 대조적이다. 이 문제에서 김일성이 따른 것은 스탈린보다도 모택동이었다. 중국의 농촌에서 ‘인민공사’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자 북한에서도

2060) 『七里營人民公社規約』(초고), 같은 책, pp. 490~491

2061) 같은 규약, p. 491, 같은 책, 같은 면.

2062) 같은 글, p. 491.

* 1935년 돈바스 탄광의 채탄부 알렉세이 스타하노프가 자발적으로 책정한 기준량(노르마)을 훨씬 웃도는 석탄을 채굴하여 돌연 영웅이 되었다. 이에 격려를 받아 대중적 중산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이 운동은 일종의 ‘돌격대 작업반’ 운동이었다.

2063) 스탈린은 전문기술을 중요시하는 나머지 심지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중한 자본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며 가장 결정적인 자본은 인간인, 기술 까드르(전문기술요원)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스타하노프운동은 우리나라 공업의 장래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운동의 노동생산성의 발전에 최대의 운명을 걸었다. 앞의 *History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 Bolsheviks, Short Course*, p. 337, 338.

도시와 농촌의 차이, 노동계급과 농민들의 차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를 없애고, 협동적 소유를 점차로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화(轉化)시켜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준비해야 할 것과,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촌에서 공산주의 교양사업(사상혁명)-기술혁명-문화혁명을 더욱 다그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²⁰⁶⁴⁾ 그 뒤에 김일성의 단편적 주장을 당(黨) 이론가들이 집대성하여 체계화한 것이 1964년 2월 25일 김일성의 이름으로 발표되고 당(黨) 중앙위원회에서 채택된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태제~~」²⁰⁶⁵⁾였다. 여기에서는 사회주의적 개조가 끝난 후의 농촌에서 기술혁명-문화혁명-사상혁명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과 그 방법이 공산주의에로의 이행문제와의 관련에서 제기되었다. 그런데 북한에서의 특징은 그러한 혁명과업을 떠맡을 지역적 “거점(據點)”으로서 군(郡)이 책정되고 있었던 점이다.

김일성은 1962년 이래로 “군”을 단순한 행정상의 단위가 아니라 농촌(里)과 ‘노동지구(지방공업지구)’를 지도하는 당(黨)과 행정의 “말단 지도단위”요,²⁰⁶⁶⁾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규정하고, ‘군’을 단위로 하며 지방공업을 건설하며 ‘군’으로 하여금 ‘협동농장’과 지방공업을 지도케 했다.²⁰⁶⁷⁾ 그는 ‘군’을 당(黨)정책을 농촌에 침투시키는 정치적 거점으로,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 거점으로, 도시 생산물을 농촌에 보내는 “공급기지(供給基地)”로, “농촌 문화혁명의 기지”로 보고 그러한 ‘군’의 역할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공산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고 전망했던 것이다.²⁰⁶⁸⁾

이러한 전망에서 김일성은 ‘군’의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데

2064) 이 같은 주장을 金日成은 1958년 11월 26일의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 1959년 1월 5일의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적 농업협동조합의 승리와 농촌경리의 금후의 발전에 대하여」, 1959년 9월 4일의 「모든 문제해결에서 중심고리를 튼튼히 틀어잡고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자」, 1960년 2월 8일의 「사회주의 농촌경리의 정확한 운영을 위하여」, 1960년 8월 11일의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할데 대하여」, 그리고 1961년 4월 25일의 「청소년 교양에서의 교육일꾼들의 임무에 대하여」 등이 그것이다. 그의 말들에서 표명된 이론적 토대는 毛澤東의 이론과 거의 같음을 간취할 수 있다.

2065) 『김일성저작선집』 4, 1960년 판, pp. 31~76

2066) 같은 책, p. 62.

2067) 『김일성저작선집』 3, 1968년 판, pp. 333~334.

2068) 같은 책, pp. 334~335.

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²⁰⁶⁹⁾고 강조했다. 요컨대 그는 모택동이 중국의 농촌 ‘인민공사’에 부과했던 것과 동일한 정치상의 임무를 북한의 ‘군(郡)’에 부여했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이 ‘인민공사를 “집단적 소유제”로부터 “전 인민적 소유제”로 이행하는 “최량의 형태”요, 사회주의 사회로부터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최량의 형태”라고 규정했던 것처럼, 김일성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²⁰⁷⁰⁾이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어로 끊임없이 접근시키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²⁰⁷¹⁾라고 모택동의 주장을 모방했다. 또한 그는 여태까지 “군”의 역할을 통해 쌓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길이 공산주의로 가는 정확한 길”²⁰⁷²⁾이라는 확신을 표명했다.

이같은 몽상적 확신에 따라 그는 앞으로 북한이 “공산주의에 들어가서도 군(郡)이 도시와 농촌을 연결시키는 경제적 거점으로,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로 남아있게 될 것”²⁰⁷³⁾이라고 미래를 예언함으로써, ‘인민공사’가 “장래의 공산주의 사회에 있어서도 여전히 사회구성의 기본단위가 될 것”²⁰⁷⁴⁾이라는 모택동의 이론적 범형(範型)을 그대로 답습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리(里) 단위의 협동농장이나 지역적 거점으로서의 ‘군’은 그 형태에 있어서 중국의 ‘인민공사’와는 꼭 같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협동농장’과 ‘군’의 종합적 기능은 중국의 ‘인민공사’의 그것과 너무나 흡사하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移行)과 관련시켜볼 때 양자는 동일했다. “천재적 정식화”(定式化) 또는 “독창적 사상”

2069) 같은 책, p. 335.

2070)北韓의 협동조합경영위원회는 中國의 縣 연합사와 아주 흡사하다. 郡 협동조합경영위원회는 1961년 12월에 창설되어 1962년 1월에 全 북한에서 그 조직이 끝났다. 동 위원회는 경영간부와 기술간부로 구성된 ‘전문적인 농촌지도기관’이며, 그 목적은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술수단(농기계작업소, 농기구공장, 관개관리소 등)과 기술자를 장악하고 협동농장의 경영활동을 현지에서 직접 계획화·조직화하며, 생산을 기술적으로 지도하는데 있다고 한다. 『김일성저작선집』4, 1960년 판, pp. 57-58 참조.

2071) 『김일성저작선집』3, 1968년 판, p. 444.

2072) 같은 책, p. 446.

2073) 같은 책, p. 334.

2074) 그런데 人民公社와 郡의 지역적 생산단위로서의 차이점은, 인민공사에서는 북한의 郡에서처럼 ‘勞動者 區’가 없으며, 군에서는 ‘협동적 소유’와 全 ‘인민적 소유’의 ‘유기적 結合’을 강조하는데 대해, 인민공사에서는 집단적 소유의 全 ‘인민적 소유’에로의 ‘移行’을 더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인민공사의 분배에서는 賃金制와 병행하여 무료‘공급제’(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원칙의 적용)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이다.

으로 격찬되고 있던²⁰⁷⁵⁾ 김일성의 농업이론과 농촌건설방식이 사실은 중국의 ‘인민공사’로부터 절대적 영감을 받고 있음은 이상의 분석적 예증만으로도 명백히 간파할 수 있다.

2075) 朝鮮問題研究所 發行, 月刊 《朝鮮資料》, 1974年 4月號(東京), p. 40.

1880

제1절 “소조”의 은밀한 조직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던가. 그리고 '3대혁명소조운동'은 어떤 양태로 전개되었으며 그 효과는 무엇이었던가. 이러한 일련의 의문을 푸는 가운데서 우리는 김일성 시대의 북한 정치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에 관해서는 오랫동안 많은 것이 비밀에 감추어져 있었다.²⁰⁷⁶⁾ 그렇지만 뒤늦게 공개되었거나²⁰⁷⁷⁾ 또는 총괄적으로 조심스럽게 발표되었던 김일성의 몇 개의 연설²⁰⁷⁸⁾은 '3대혁명소조' 운동을 일으키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일련의 사정을 설명해 주고 있다.

2078) 이 중에서는 1975년 1월 15일 '전국농업대회'에서 한 김일성의 연설, 「모든 힘을 알곡 800만톤 고지 점령을 위하여」, 1975년 3월 3일 공업열성자회의에서 한 김일성의 연설, 「3대혁명용 힘 있게 벌려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그리고 1975년 10월 9일 당 청진 30돐 기념대회에서 한 「보고」, 「조선 노동당건설 30돐에 즈음하여」 등이 중요하다.

김일성은 '3대혁명'을 논할 때 마다 예외 없이 이것을 미래의 공산주의 사회와 관련지어 논하고, 공산주의 사회가 마치 문턱에 다가온 급박한 건설과제인 것 같이 말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이론 전개에서 요청되는 *맑스-레닌주의의 공론(空論)*적 수사에 불과했다. 당시의 북한은 "공산주의 건설"을 논의할 만큼 사회주의 건설이 발전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김일성은 1970년 11월에 열린 제5차 당(黨)대회에서 3년간이나 연장하여 명목상 겨우 달성한 '7개년계획'을 "빛나게 실현하였다"고 자랑하면서 북한은 "현대적 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 공업국가로 전변되었다" ²⁰⁷⁹⁾고 선언했다.

그리고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 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전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는 것" ²⁰⁸⁰⁾을 기본과업으로 하는 6개년계획의 웅대한 구상을 발표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3대기술혁명과업' ²⁰⁸¹⁾의 수행을 목표로 하는 각 분야에서의 기술혁명,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개화 발전시킬 문화혁명, 그리고 온 사회의 혁명화-노동계급화를 힘 있게 밀고 나갈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공산주의의 두 요새인 "물질적 요새"와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기 위해 투쟁을 계속하라고 촉구했다. ²⁰⁸²⁾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중국의 '대약진'운동에서 꼭 마찬가지로 간부들의 사상적 소극성, 근로자들의 노동의욕의 상실, 당 규율의 해이와 사회규범의 문란 등이었다. 이것들은 바로 김일성 자신의 입을 통하여 입증되었다. 그는 공개되는 문서에서는 인민들에 대한 자기 말의 영향을 고려하여 극히 완곡하게 또는 우회적으로 그러한 현상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북한의 실태를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다. 그가 "...하여야 하겠다." "...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적 표현으로 요구해 온 일련의 당위적(當爲的) 사항들을 보면 북한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위대한 성과",

2079) 『김일성저작선집』 5, 1972년 판, p. 418, p. 425.

2080) 같은 책, p. 447.

2081)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은 처음으로 이것을 내세웠다. 그에 의하면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 운동을 널리 벌려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 농업노동과 공업노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여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3대 기술혁명과업"이었다. 같은 책, pp. 453~454.

2082) 같은 책, p. 446 참조.

“빛나는 승리”, “영웅적 투쟁”, “역사적 위업” 등의 찬사와는 달리 얼마나 큰 곤경에서 해매고 형해화(形骸化)－정체화(停滯化)되고 있는지를 누구도 간취할 수 있었다.

1973년 3월 14일 당(黨) 중앙위원회 강서군(江西郡) 확대회의에서 김일성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을 비교적 솔직하게 설명하였다. 그 뒤에도 이 설명의 범위 안에서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실들을 공개했다. 여기서 그는 과거 “당(黨)에서 내놓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과업들이 아직 잘 집행되지 않고 있다”²⁰⁸³⁾고 밝히고, 사상혁명을 선행(先行)시키라는 당(黨)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당(黨) 조직들이 이 호소를 형식적으로 대하였으며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 하기 위한 사업을 힘 있게 밀고 나가지 않았다”²⁰⁸⁴⁾고 힐책(詰責)했다.

김일성은 ‘3대기술혁명’이 6개년계획의 중심과업이라고 강조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아직 ‘3대기술혁명’에서 큰 진전이 없다”²⁰⁸⁵⁾는 것을 시인했다. 또한 “당(黨) 조직들이 ‘사상혁명’과 ‘기술혁명’ 뿐만 아니라 ‘문화혁명’도 잘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 결과 “이미 건설하여 놓은 적지 않은 공장들이 제대로 은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에서도 전진속도가 굼뜨다”²⁰⁸⁶⁾는 사실도 그는 인정했다. 이러한 침체 상태를 타개하고 세 가지 혁명을 수행하는 투쟁을 더욱 힘 있게 전개하기 위하여 당(黨) 중앙위원회는 ‘3대혁명소조’를 공장－기업소－협동농장들에 파견했다는 것이다.²⁰⁸⁷⁾

여기서 김일성은 사상혁명－기술혁명－문화혁명의 수행을 위한 투쟁에 “당(黨) 핵심들과 함께 지식 있는…대학생들로 ‘3대혁명소조’를 조직하여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몇 10명씩 파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²⁰⁸⁸⁾고 설명했다. 그런데 1975년 2월에 그가 밝힌 바로는 “당(黨) 중앙위원회 일군들을 당(黨) 일군들과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 근로단체 일군들, 그리고 과학기술 일군들과 청년 인텔리들을 망라한 ‘3대혁명소

2083) 『김일성저작선집』 6, 1974년 판, p. 415.

2084) 같은 책, p. 416.

2085) 같은 책, p. 416.

2086) 같은 책, p. 416.

2087) 같은 책, p. 416.

2088) 같은 책, p. 419.

조'를 조직했으며, 큰 공장에는 20~30명씩, 기업소에는 한 50명씩 조직 파견했다”²⁰⁸⁹⁾고 했다.

제2절 확장하는 조직망

그리하여 '3대혁명소조'에 망라된 청년 인텔리들은 몇 만 명에 이른다고 했다.²⁰⁹⁰⁾ 요컨대 '3대혁명소조' = 당(黨) 핵심 + 대학생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3대혁명소조' = 당(黨) 중앙위원회 간부 + 당(黨) 간부 + 국가, 경제기관 간부 + 근로단체 간부 + 과학 기술 간부 + 청년 인텔리로 대폭 확대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몇 만 명이 나 되는 '3대혁명소조'가 전 북한의 공장-기업소-협동조합에 파견되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사건이요, 김일성이 가지고 있던 최정예부대의 총동원이라는 것이 명백했다. 한편 1984년 9월 24일 황장엽(黃長燁) 중앙당 서기(그 후 탈북 남하)는 '3대혁명소조대회'에서 '3대혁명소조운동'이 시작된 후 당시에 이르기까지에 위의 각처에 파견된 소조원들의 수는 10만 8천 7백명에 이르고 있으며 '대회' 당시 현재로는 6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²⁰⁹¹⁾

'3대혁명소조'의 역할은-김일성 자신의 말에 의한다면-현지 간부들이 지니고 있는 “보수주의”, “경험주의”, “관료주의”등을 비롯한 “낡은 사상”과 투쟁하는 한편 “수준이 낮은데다가 실무에 빠져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간부들에게 현대 과학 기술을 배워 주며 실천을 통하여 현대 과학의 위력을 보여 주는데 있었던 것”²⁰⁹²⁾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해방 직후의 시기는 고사하고라도 한국전쟁이 끝난 지 20년 동안을 김일성은 당(黨)의 '사상교양사업'을 계속 강화해 왔고 기술혁명-문화혁명을 '군중노선'에 의거하여 전력을 기울여 추진해 왔다.

그런데 당(黨) 중앙에서 이렇게 직접 새로이 '3대혁명소조'라는 특별 행동대를 파견하여 전 생산기관을 독찰하고 “지도”해야 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은 소

2089) 《근로자》, 1975. 3호, p. 7.

2090) 같은 책, p. 10.

2091) 「평양방송」, 1984년 9월 24일.

2092) 앞의 《근로자》, pp. 6-7.

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그동안 결함과 모순(矛盾)이 누적되어 오다가 그것들이 일시에 폭발하고 말았는데 대해 강구한 수습책을 의미했다. 그는 이런 현상을 다음과 같이 완곡(緩曲)하게 인정했다.

지난 기간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 잘 진척되지 않고 공업과 농업부문에 적지 않은 결함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늘과 같이 심각하게 표면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에 내재하는 결함이 초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온도가 섭씨 영도까지 내려가야 물이 얼고 섭씨 100도까지 올라가야 물이 끓는 것과 같이 사업에 내재하는 결함도 일정한 한계에 이르러야 표면에 나타납니다.……이와 마찬가지로 공업과 농업부문에 내재(內在)하는 결함도 처음에는 잘 알 수 없고 그것이 일정한 한계에 이르러야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²⁰⁹³⁾

여태까지 북한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그리고 인민들의 자각적 혁명투쟁을 통해 “사회주의의 지상낙원(地上樂園)”을 이룩했다고 자랑해왔다. 그런데 1970년에 들어서자 공업과 농업부문에서도, 그리고 당(黨) 사업에서도 각종 결함과 혼란과 모순이 더는 견딜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위국(危局)을 타개하기 위하여 김일성이 궁여지책으로 고안해 낸 것이 ‘3혁명소조’였다. 그러나 계획책정의 차질, 계획 수행의 실패, 혁명적열의 해이, 생활규범과 사회기강의 문란, 노동자들의 생산의욕과 속도의 저하 등에 대한 책임을 “혁명의 천재요”, “전지전능한 지도자”라는 김일성 자신이 질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어떤 다른 사람들이 저야 했다.

그리하여 문책 대상에 오른 자들은 현지에서 일하는 지배인-기사장-협동농장관리 위원장을 비롯한 공장-기업소의 ‘지도일꾼들’, 작업반장이나 직장장 같은 “초급일꾼들”이며, 그중에서도 나이를 많이 먹은 “오랜 간부들”이었다. 김일성은 ‘3대혁명소조’의 투쟁대상은 이러한 간부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지니고 있는 ‘낡은 사상’이며, 따라서 소조원들은 이들을 도와주고 받들어 주어 힘을 합침으로서 결함을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겉으로는 의젓하게 말했다. 그러나 한편 이들에 대한 그의 공격은 신랄했다. 그는 이들을 아래와 같이 비난하였다.

2093) 『김일성저작선집』 6, 1974년 판, P. 417.

……지난 기간 일부 공장들에서 적지 않은 지도일꾼들이 당 조직의 통제에서 벗어나 생활하였습니다. 그들은 당 회의에도 잘 참가하지 않았고 아래 사람으로부터 비판도 얼마 받아보지 못하였으며, 학습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도일꾼들이 출신은 노동계급이지만 간부가 된 다음 관료화되었으며, 기술적으로 뒤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적지 않은 지도일꾼들은 이미 낡았습니다.²⁰⁹⁴⁾

김일성의 이 말이 진실을 전하는 것이라면 노동당 간부들의 조직생활은 심히 문란하고 아주 형식화된 것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한 기성 간부들을 오래 그대로 둘 수는 없었으며, 조만간 교체되어야 했다. '3대혁명소조운동'이 북한의 모든 직장에서의 세대교체와 관련이 있음을 그는 다음과 같이 시사했다.

우리의 간부들이 지난 시기 많은 일을 하였고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해방 후 3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제는 나이를 많이 먹었으며, 그들의 수준도 빨리 발전하는 현실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그들이 현실발전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토요학습회, 수요강연회를 비롯한 집체학습체계도 세우고 매해 한 달씩 정규학교에 가서 전문적으로 공부하도록 하는 체계도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나 경제의 규모가 매우 커지고 경제건설의 모든 부문이 현대과학기술을 요구하는 조건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 나갈 수 없으며 당이 요구하는 속도전을 힘 있게 벌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오랜 간부들을 다 떼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아껴야 합니다.²⁰⁹⁵⁾

김일성의 이런 말을 듣고 있노라면 여태까지 “빛나는 성과”를 소리높이 자랑해 왔던 ‘천리마운동’과 ‘3대혁명’은 모두 공전(空轉)하면서 실패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간취할 수 있다.

여기서 자기에게 충성을 다해 온 이러한 구(舊) 간부들의 처우에 대한 김일성의 고충은 이해할 만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비판과 함께 포섭의 아량을 첨가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 일부 오랜 간부들 속에서 보수주의, 경험주의, 기관주의, 관료주의가 나타나고

2094) 같은 책, P. 443.

2095) 《근로자》, 1975, 3호, P. 10.

심한 경우에는 한자리 하였으니 이제는 놀고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안일 해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주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랜 간부들을 떼어버릴 것이 아니라 잘 도와주어 그들이 지난 기간 일을 잘한 것처럼 앞으로도 일을 잘하여 꽃을 계속 피워 나가도록 하여야합니다. 우리 당은 이러한 목적에서……3대혁명소조들을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 파견하였습니다. 2096)

제3절 간부정책(幹部政策)의 딜레마

김일성의 말대로 기성 간부들이 3대혁명의 청년소조원들의 “지도”를 받아 일을 잘하는한, 과거의 공로로 보아 당(黨)에서 “떼어버림”을 당하는 일은 없겠지만 현지의 지도간부의 지위에서 밀려 날 것은 명백했다. 김일성은 지도 간부는 고사하고 작업반장 직장장 같은 초급 간부 가운데서 나이가 많거나 몸이 허약하여 노동에 참가하기 곤란한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로 꾸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들 중 공로가 많은 사람들은 “고문격으로 일하도록 하면 될 것” 이라고 세대교체의 방침을 공언했다. 2097)

김일성 직속하에 있던 ‘3대혁명소조원’들은 오랫동안 공표는 안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김일성의 장남이요, 당권(黨權)의 계승자로 내정되어 있던 김정일(金正日)의 지도하에 있다는 것이 점차로 명백해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3대혁명소조의 중요한 목적은 김정일의 당권 계승을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성 간부들로 이를 대체시키려는 데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요컨대 ‘3대혁명소조’는 북한 경제의 침체 내지 파국을 사상-기술-문화혁명의 강행으로 타개해야 할 임무를 지닌 김일성의 돌격대였다. 동시에 김정일의 정권기반을 구축하는 목적에서 조직된 정치 선봉대(先鋒隊)라는 2중적 임무를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김정일에 관해 말한다면, 그는 1941년에 출생했다는 것이 북한의 기록이다. 그가 아버지 김일성의 후계자로 부상되기 시작한 것은 1972년경부터였다. 1980년 10월에 열린 제6차 당(黨) 중앙위 군사위원회 위원 등의 요직을 모두 차지하고 당 서열 제4

2096) 같은 책, P. 6.

2097) 『김일성저작선집』 6, 1974년 판, P. 444.

위에 올랐다가 그 후에는 제2위로 승격했다. 이때까지 그는 당(黨) 중앙위 선전-선동담당 비서(1973년 9월에 그의 숙부 김영주와 대체) 등의 요직을 이미 거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으나 북한 측은 그것을 공표하지 않았고 비밀에 부쳐지고 있었다. 그러나 1974년 이후부터 그에 대한 개인숭배가 힘차게 진행되었다.

김일성과 그의 충성분자들은 엄청난 반(反)맑스주의적 세습제의 “창시”를 강행했고 ‘3대혁명소조’를 그의 권력기반으로 삼았던 것이다. 알려진 바로는 이에 대한 조직적인 대규모의 저항은 없었다. 북한 사회는 이미 독재자의 지휘봉 하나라도 움직이는 유순한 세상이 된지 오래였다.

한편 김일성은 ‘3대혁명소조’를 조직하는 데서 대학생의 동원을 극히 중요시했다. 그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는 혁명적 세대들”이다. 비록 기술의 깊이는 몰라도 뒤떨어진 기술과 현대적 기술을 분간할 줄 알며, “새 것을 좋아하고 낡은 것을 대담하게 버리는 혁명성이 강하다”(2098)는 것이었다. 마치 ‘문화대혁명’ 시기에 모택동이 홍위병(紅衛兵)들에게 걸었던 기대와 흡사했다. 그 후 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북한사회에서 낡은 간부들이 대거 바뀌면서 세대교체는 급속히 진행되어갔다. 1970년대 이래로 진행되고 있던 ‘3대혁명소조운동’은 단지 3대혁명을 지도할 뿐만 아니라 내일의 새 인텔리 간부들을 현지에서 훈련시키고, 투쟁경력을 키워 주고, 조직화하고, “혁명화”하기 위한 운동이란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1975년 3월 김일성은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3대혁명소조에 망라된 몇 만 명의 청년 인텔리들이 실천투쟁을 통하여 혁명화, 노동계급화된 혁명적 인텔리로 자라난 것은 천냥이나 만냥의 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귀중한 성과이며 우리 당의 커다란 자랑입니다. 청년 인텔리들은 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노동자들과 같이 일하고, 생활하면서 노동계급의 조직성과 견결성, 집단주의 정신을 배웠으며 노동계급의 무진장한 창발성과 힘의 원천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 인텔리들은 노동계급과 힘을 합쳐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였으며 노동계급과 노간부들, 청년 인텔리들이 합심하면 못해 낼 일이 없다는 매우 귀중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나는 3대혁명소조원들이 지금처럼 자신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잘해 나간다면 앞으로 훌륭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건설자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2099)

2098) 같은 책, P. 419.

2099) 『김일성저작선집』 7, 1978년 판, pp. 164~165.

제6장

‘3대혁명소조’에 대한 평가

제1절 ‘위로부터의’ 비판

여기서 김일성은 장남의 세습문제는 아직 감추고 있었다. ‘3대혁명소조’는 이상과 같은 세대교체적 측면과 아울러 처음에는 침체 일로에 있는 경제를 소생시키는 방법으로 사상-기술-문화혁명을 필사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서 조직된 것이었다.

경제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엇보다도 기술혁명을 다그쳤고, 기술혁명을 잘 하려면 먼저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람들의 공산주의 의식수준을 높여야 하고, 문화혁명도 잘하여 인민들의 교육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김일성의 관점이었다. 그런데 “일부” 공장에서는 기술혁명은 하지 않고 “인해전술(人海戰術)”의 방법으로, 즉 노동자의 숫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생산을 높이려고 했으며²¹⁰⁰⁾, 노동력을 얻기 위해 농촌에서는 여성의 노동력을 마구 차출함으로써 농업생산에 큰 지장을 주게 되었다고 김일성은 실토했다.²¹⁰¹⁾ 말하자면 노동관리사업이 난맥을 이루어 “노력예비”가 동원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어떤 공장, 기업소들은 방대한 노력을 낭비하고 있으면서도 노력(노동력)은 내놓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대표적 실례로써 황해도의 은률광산을 들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대혁명 소조’를 파견하기에 앞서 당(黨) 중앙이 파견한 “지도소조(指導小組)”라는 사람들이 공장-기업소에 내려가 한 달 동안이나 투쟁했지만 허사였다고 그는 슬회했다. 이들은 현지의 노동행정사업일꾼들은 “보수주의를 바스고 노력예비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공장에 있는 완고한 [이들] 보수주의자들의 반격을 받고 빈손으로 돌아왔다.”²¹⁰²⁾는 것이 김일성이 말하는 실정이었다. 그 밖

2100) 『김일성저작선집』 6, 1974년 판, p. 416.

2101) 같은 책, p. 417.

에도 그는 공장과 기업소들이 기술혁명은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노동력이나 설비는 끝까지 확보하려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이 배당해 달라고 하는 기관본위주의적(機關本位主義的) 사례들을 들었다.

이 같은 실례 외에도 김일성 자신이 줄잡아 지적인 “결함”들을 보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태만, 소극적 저항, 면중복배(面從腹背), 이기주의, 형식주의, 허탈상태, 물질적 궁핍, 생활의 무질서가 뜻밖에도 컸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다.

김일성에 의하면 ① 당(黨) 조직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교양하는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주체사상”에 관해 “말은 많이 하지만 아직도 그 본질을 톱 톱히 모르고 있다”²¹⁰³⁾는 것, ② 당원들과 근로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③ 당(黨) 사업에서는 해설과 설복을 하는 대신 아직도 명령하고 지시하는 “행정식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④ 일부 기업소의 지배인, 당(黨) 비서들을 비롯한 간부들이 당(黨) 조직생활에 참가하지 않고 대중의 통제를 벗어나 과오를 범하고 있다는 것, 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黨)의 노선과 정책에 의거하여 사고하고 행동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는 사례들을 들었다.

이밖에도 ⑥ 일부 일꾼들은 사회주의적 법규범(法規範)과 규정을 따르지 않고 사회주의 헌법에 대한 학습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 ⑦ 이들은 아직도 사회의 집단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앞에 내세우고 있으며, 심지어는 공장과 협동조합에 있는 버스나 화물자동차를 개인 승용차처럼 타고 다니는 현상이 있다는 것, ⑧ 또한 일부 협동농장 초급간부 중에는 일은 적게 하고도 노동공수(勞働工手)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으며 노동자, 사무원 가운데도 자기가 맡은 일을 다 하지 못하고도 노임과 식량을 제대로 다 타먹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 등이 그가 본 ‘3대혁명’ 이전의 당(黨)사업 작품이었다. 그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상혁명’의 투쟁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²¹⁰⁴⁾

김일성은 또한 일부 일꾼들이 ‘기술혁명’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2102) 같은 책, p. 418

2103) 같은 책, p. 422.

2104) 같은 책, pp. 423~429.

기술혁명을 다그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지 않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기술혁명’의 수행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당면한 “노력의 긴장성(緊張性)”[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기되고 있는 절박한 과업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기술혁명’을 힘차게 밀고 나가자면 여기서 장애가 되는 “보수주의”, “사대주의”,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 등을 없애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중에서 “사대주의”와 “기술신비주의”가 큰 장애라고 했다.²¹⁰⁵⁾ 그는 일례로 농기계를 제작의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일군들의 머릿속에 사대주의와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가 많다보니 새로운 기계를 대답하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과학원과 농기계연구소에 수많은 연구사들이 들어앉아 농기계를 연구한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좋은 농기계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체로 좋은 농기계를 창안, 제작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것을 본파서 만들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여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좋은 농기계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²¹⁰⁶⁾

김일성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은 당(黨)의 “주체사상”을 견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과학자-기술자들은 “주체적 입장”에서 연구사업을 다그쳐 ‘기술혁명’에 필요한 성능 좋은 기계들을 많이 창안-제작하여야 한다고 그는 지시했다.²¹⁰⁷⁾ 이것은 도시의 공장의 상황이다.

제2절 드러난 북한농촌의 빈곤상

‘문화혁명’의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빨리 높여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김일성은 계속 강조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뒤떨어진 곳은 농촌이었다. 그가 솔직히 시인한 바로는 “지금 협동농장들에서는 관리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기술 지식수준이 낮기 때문에 농사를 과학 기술적으

2105) 같은 책, pp. 431~434.

2106) 같은 책, p. 434.

2107) 같은 책, pp. 434~435.

로 짓지 못하고 경험주의에 매여달리고 있다”²¹⁰⁸⁾는 것이었다.

그는 자본주의 국가 또는 몇몇 공산주의 국가의 사영농장에서 농민들이 “경험주의”에 의존하면서도 개인 소득의 자극을 받아 소련이나 동유럽-북한의 집단 농장에서 단위당(單位黨)생산고를 월등히 능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협동농장의 노동의욕-생산의욕의 감퇴를 농민들의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사대주의”, “요령주의”, “형식주의”, “소극성”과 같은 “오구잡탕(烏口雜湯)의 잡귀신”과 지도 일꾼들의 “관료주의”, “주관주의”, “경험주의” 등의 낡은 사업작풍(事業作風)에다 돌렸다. 그러면서 3대혁명소조들이 사상투쟁에 임하여 이것들을 모두 쓸어버렸다는 것을 자부했다.

그렇다면 그런 자부는 ‘3대혁명소조’가 농촌에 파견될 때까지, 즉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끝난 지 근 20년이 다 되도록 농업 그런 “잡귀신”과 낡은 사업장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의 이런 우회적인 말만 들어도 농촌에서 토지와 농기계의 관리가 얼마나 조잡했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농촌의 ‘생활문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농촌 마을을 알뜰하게 빨리 정리하여야 하겠다”느니 “문화 위생적으로 알뜰히 거두도록 하여야 한다”²¹⁰⁹⁾느니 하는 그의 말들은, 이 모든 면에서 농촌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었는가를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이었다. 그는 농촌의 문화적 정리사업에서 ‘사로청’(社勞靑=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원들은 물론 심지어 ‘소년단’원들까지 앞장설 것을 독촉했다. 그리고 고등중학교에 조직된 ‘위생근위대’가 마을을 청소하는 데까지 적극 힘써야 한다고 했다.

또한 김일성의 말은, 농가를 수리할 수 있는 문창호지, 장판지, 도배지가 얼마나 부족하며, 농민들에게 판매할 시멘트가 군(郡)에 의해서 다른 목적에 유용되어 왔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옷, 특히 “늙은이들의 옷”이 모자라고, 우유는 물론 전분, 물엿, 포도당, 과자, 사탕, 간장, 술 등의 식료품 배당이 얼마나 어려운 경로를 통해 입수되어 왔는가를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었다.²¹¹⁰⁾ 공업기업소의 ‘생산문화’와 ‘생활문화’에 관해서도 그는 허다한 결함과 맹점들을 시사하고 있으나 여기서

2108) 같은 책, p. 437.

2109) 같은 책, p. 440.

2110) 같은 책, p. 44.

는 일일이 열거할 여유가 없다.

이상에서 예를 든 당(黨) 간부, 각 기관, 근로자들의 탈선과 무위(無爲)와 결함들과 투쟁하기 위해서는 '3대혁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했고 그 추진의 행동대가 김정일을 중핵(中核)으로 하는 '3대혁명소조'였다. 김일성은 자기의 노선과 교시와 계획이 현지에서 공전(空轉)하고 있는 것을 간취하고 드디어는 "3대혁명"의 구호를 만들어 내면서 그것을 밀고나갈 '3대혁명소조'를 조직했으며 이것들을 각지에 파견했던 것이었다. '3대혁명소조'가 파견되기 시작한 것은 1973년 2월이었지만 그것을 대외적으로는 일체 비밀에 부치고 있었다. '3대혁명'이라는 구호를 들고 나온 것은 같은 해 가을부터였다.²¹¹¹⁾ 2년이 지난 뒤, 즉 1975년 2월에 그는 자기의 연설의 한 부분에서 "3대혁명의 역사적 필연성"이라는 것을 설명했다.²¹¹²⁾

여기서 그는 제국주의 지배하에서 식민지-반(半)식민지로 있던 신생 해방국들은 산업혁명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기술적으로뿐만 아니라 문화적-사상적으로 매우 뒤떨어졌다는 점을 들어 "이런 나라들에서는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기간보다 더 오래 걸리게 된다"고 언명했다. 따라서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제도가 선 다음에도 혁명은 계속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계속 남아있고,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파괴책동"이 여전히 남아 있는 조건에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혁명은 계속해야 한다는 이론을 펴면서 북한을 그런 범주에 적용시켰다.

이와 함께 북한의 특수조건으로서는 "우리나라의 남쪽 절반에는 지주, 자본가들의 제도가 그냥 남아 있으며 미(美)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이 동지를 틀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이들의 "온갖 파괴책동을 물리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상투적인 논리를 내세우고 있었다. 이것은 1930년대의 스탈린과 1950~1960년대의 모택동의 논리와 동일했다. 공산주의자들은 국내의 건설과 혁명이 난국에 빠질 때는 그 원인을 "인재(人災)", 즉 당의 과오가 아니라 의례히 외부(천재 天災)에서 찾는 것이 통례

2111) "3대혁명"의 구호가 黨 기관지 《근로자》에 처음 나타난 것은 1973년 10호(pp. 2~7)이며, 《로동신문》에 크게 나타난 것은 1973년 10월 22일이었다.

2112) 앞의 『김일성작선집』 7, pp. 150~155 참조.

이다.

그런데 김일성이 '3대혁명소조'를 파견하여 3대혁명의 선풍을 일으켜야 했던 것은 새삼스레 위에서 말한 일반론이나 북한의 특수조건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첫째는 무엇보다도 김일성의 '6개년계획'이 큰 차질을 가져 와서 그 결과로 북한의 경제가 상당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 때문이다. 둘째는 1972년 여름 이후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의 북한 측 대표들과 수행원들이 서울을 방문하여 남한의 경제건설과 생활수준을 살피게 된 후 이것과 대결하여 승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이었다. '3대혁명소조'가 조직되고, 각 직장에 파견된 것은 '남북대화'가 시작된 지 얼마 뒤의 일이었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제3절 다그치는 “속도전”(速度戰) - 마지막 탈출구

1974년 2월에 열린 '당(黨)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全員會議)'는 6개년 계획의 조기달성을 위하여 '기본건설전선', '공업전선', '농업전선', '수송전선', '수산전선' 등 5개전선(戰線)을 제시하고 모든 힘을 이에 집중하는 총 돌격전을 전개할 것을 촉구했다. 김일성은 여기서 이러한 “사회주의 대건설사업”을 위해 새로운 형의 혁명적 전투 원칙으로서 ‘속도전’을 제창했다.²¹¹³⁾ ‘속도전’에 관해서는 바로 앞의 제2장 제1절에서 언급했다. 모든 기술-노동력-자본-설비-노동의욕 등 모든 면의 부족을 인력과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의 최대한 동원과 최대한 활용으로 극복함으로써 ‘6개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자는 것이었다.

“속도전”이 제창되자 “새로운 천리마속도”, “새로운 평양속도”니, 수령에 대한 “충성의 속도”니, “70일 전투속도”니 하는 구호가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속도”들은 종래의 “천리마속도”에다 2~3종의 속도가 겹친 가속도를 뜻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근로자들의 노력동원과 노력 가동 및 생산경쟁은 전례 없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김일성은 단순한 설복의 방법만으로는 ‘속도전’에 대한 공감과 근로자들로부터 자발적

2113) 속도전에 관해서는 현준영, 「速度戰은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끄는 위대한 투쟁의 기치」, 《근로자》, 1974, pp. 54~55 참조.

협력을 끌어낼 수는 없었다.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전 사회의 편제화와 강권이 발동이 불가피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고된 노동, 생활필수품의 결핍, 동원체제의 강압, 소위 “당세도”들의 관료화와 특권화, 사회 구성에서의 계층적 분화(分化) 등이 일반 대중들을 불평과 권태, 공포와 저항으로 몰아놓고 있었다. 이런 전체주의적 정치 현상은 김일성이 직면했던 시련이었다. 그러나 인민대중의 열성을 언제까지나 강제적 방법만으로 끌어낼 수도 없었다. 이들의 불만과 노동의욕의 저하가 현저해지고 현지의 지도일꾼들이 이들에 동조 또는 이들을 묵인하는 분위기에서는, 그리고 이들을 풍족한 물질적 보수로 격려할 조건이 없는 한,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를 핵심으로 하는 혁명사상 주입 교육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속도전’이 강행되면서 북한에서는 기술혁명—문화혁명과 더불어 “사상혁명”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개인숭배 작풍이 인간의 이성(離性)을 조소하면서 상승해 갔다. 당(黨) 중앙의 정책과 지시에 대한 비협력, 면종복배 또는 은밀한 조소 등에 대한 당(黨)의 비난을 의미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적 유교사상”, “수정주의”, “주관주의”, “관료주의”, “요령주의”, “형식주의”, “기관본위주의”, “이기주의” 등이 맹렬한 공격을 받았다. 그런 가운데 위대한 수령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무한대로 예찬되었다. 이 과정에서 김일성은 초인간적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절세의 지도자—예언자로 절대화—신격화되어 갔고, 지난날의 그의 “항일무장투쟁”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전개된 “세계 최초의 민족해방혁명전쟁”으로까지 신격화되었다.

모든 지도 간부들은 관료주의적 사업방법을 버리고 청년시대의 김일성의 투쟁을 본받으라는 이른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운동이 일어났다. ‘3대혁명’ 중에서도 ‘사상혁명’이 최우위에 놓였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 하라!”는 표어 밑에 그의 주체사상은 우상화—종교화되었다. 김일성은 ‘사회주의 대건설’을 위하여 ‘5개전선(前線)’과 함께 ‘10대건설목표’를 제시하고, 강철, 유색금속, 석탄, 전력, 시멘트, 기계가공품, 수산물, 화학비료, 간척지 개간, 알곡 등 10개 산업부문에서 달성해야 할 숫자를 제시하면서 경제건설에서 남한을 압도함으로써 남북통일에 대비하자고 했다.

그런 목표의 달성을 위한 ‘속도전’에서 승리를 가져올 열쇠를 김일성의 측근들은 혁명적 정신주의와 수령(首領)에 대한 충성심에서 찾았다. 그리하여 당(黨)의 한 선전원은 서슴지 않고 말하기를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새로운 양양을 위한 힘의 주요한 원천은 어떤 물질적, 객관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령님에 대한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충성심에 있다”고 했다. 그는 “수령님을 절대화”하고 “목숨으로 옹호 보위”하는 충직한 친위대, 결사대가 되라”고 호소했다.²¹¹⁴⁾ 또 다른 당(黨) 선전원은 “절대성의 정신”,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수령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역설했다.²¹¹⁵⁾ 이렇게 ‘3대혁명’의 종착점은 무신론(無神論)적 종교의 경지로 귀의(歸依) 하자는 호소였다.

제4절 맺는 말 : ‘3대혁명 소조운동’이 남겨 놓은 것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대건설’-‘속도전’-‘대중의 혁명적 열의’-‘이태올리기 강화’-‘개인숭배’-‘공산주의에 의한 남북통일’의 목표는 서로 유리될 수 없는, 유기적인 체계로 연결된 정책상의 고리들로 되었다. 이 노선을 힘차게 밀고 나가자는 것이 바로 3대혁명이요, 이 노선의 젊은 선봉세력이 ‘3대혁명소조’였다. 종래의 노후화(老朽化)된 지도방침과 행정체제로서는 위에서 내세운 사회주의 건설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럼으로 ‘3대혁명소조’라는 젊은 돌격대로써, 퇴화한 당(黨)의 지도체계를 활성화하여 침체한 ‘혁명’과 ‘건설’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 그리하여 낡은 당 간부들은 점차로 뒤로 밀어내고 김일성에 직속되어 있던 충성된 청년 ‘소조원’들에다 실권을 넘기게 하였다. 나아가 장차 이들을 당의 골간으로 만들어 김정일의 정치세력으로 삼자는 것이 3대혁명소조의 가장 중요한 일면이었다.

‘3대혁명소조’는 김일성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기사화생시키기 위하여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실패해서는 안 되었다. 김일성은 1975년 1월 ‘전국농업대회’에서 ‘3대혁명소조’가 협동농장에 파견됨으로써 농촌에서 사상-기술-문화혁명

2114) 《근로자》, 1974, 3호, p. 38.

2115) 《근로자》, 1974, 9호, p. 4.

이 얼마나 잘 수행되고 농촌경리가 급속히 발전했다는 경위를 극구 찬양했다.²¹¹⁶⁾ 그리고 '3대혁명소조' 파견 2주년이 막 지나간 1975년 3월 '공업열성자대회'에서 그는 '3대혁명소조'에 의하여 "3대혁명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업과 농업 전반에 걸쳐 총괄하면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를 넘는다고 하고, 북한은 국민소득에서 선진국대열에 들어섰다고 자랑했다.²¹¹⁷⁾ 30년 전의 일이다. 그는 북한의 누구도, 또한 그 자신도 믿지 않는 말을 다음과 같이 태연스럽게 하고 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일자리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먹는 문제는 사실상 공산주의나 다름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쌀을 한 키로그램에 8전씩 받고 공급하므로 그들이 하루만 나가 벌어도 한 달 먹을 수 있는 쌀을 살 수 있습니다.²¹¹⁸⁾

김일성의 황당무계한 이런 선전은 그가 1974년 세금전폐(税金全廢)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북한은 "세계사상 처음으로 세금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중기만 방법이었다. 한편 그는 이러한 자랑과는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말을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했다.

……이러한 조건에서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근로자들을 끊임없이 교양하지 않는다면 그들 속에서 일하기를 싫어하고 놀고먹기를 좋아하며 로동규율을 지키지 않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근로자들을 끊임없이 교양하여야 하며, 로동규율을 철저히 세우고 누구나 다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합니다.²¹¹⁹⁾

요컨대 여기서 그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노동규율'의 확립과 준수였다. 이것을 감시하고 독려하는 것도 역시 '3대혁명소조'의 임무의 하나였다. 3대혁명은 곧 "계속혁명"의 과업으로서 그 질풍은 그 후 오랫동안 북한사회를 휩쓸고 갔다. '3대혁명소조'는 현지의 기성 간부들의 권위를 짓밟고 이들의 반향과 투쟁하면서 김일성의 독

2116) 김일성, 「모든 힘을 알곡 800만톤 고지 점령을 위하여」, 《근로자》, 1975, 2호, pp. 2~13 참조.

2117) 김일성, 「3대혁명을 힘 있게 벌려 사회주의 건설에 더욱 다그치자」, 《근로자》, 1975, 3호, p. 16.

2118) 같은 책, p. 18.

2119) 같은 책, p. 18.

찰대, 전위부대, 근위대, 그리고 김정일의 심복으로써의 권력을 휘둘렀다.

1984년 9월 24일 당시 북한에서 당 활동을 하고 있던 황장엽(黃長燁)은 '3대혁명 소조대회'에서 행한 「보고」에서 "3대혁명소조운동"이 시작된 후 이때까지 각처에 파견된 소조원들의 수는 10만 8,700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 당시 모두 4만 6,000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시 그의 「보고」에 의하면 3대혁명소조운동이 일어난 후 그때까지 '소조'에 망라된 대학생들 중 1만 1,600명이 '노동당'에 입당했고, 4,600명이 김일성 부자(父子)로부터 "대를 이어 길이 전할 귀중한 선물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1명의 공화국 영웅과 23명의 노동영웅이 나왔으며, 1,124명에게는 국기훈장(國旗勳章) 제1급이, 3만 5,400여명에게는 국가표창의 영예가 안겨졌다고 했다.²¹²⁰⁾ 김정일의 정치기반은 이렇게 확대되어 갔던 것이다.

그러면 "3대혁명소조"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조직은 아직도 명목상으로는 살아있다. 김정일 체제가 유지되는 한 그것은 존속할 것이다. 그러나 왕년의 '소조원'들은 이미 노쇠했다. '노동당'의 운명과 봉건적 세습제의 존속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들의 운동이 계속 젊은 세대로 이어져 나가기에는 내외의 정세가 너무나 냉혹해졌다. 앞으로 김정일의 퇴진과 함께 그들도 소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120) 평양방송, 1984. 9. 24.

제13편

‘자주적’ 대외정책의 노선(下)

제1장 • 해소되지 않은 한반도의 냉전

제2장 • ‘자주적 대외정책’ 노선의 원점(原點) : ‘주체사상’

제3장 • 대외정책의 기본원칙

제4장 • 대외정책 범주(範疇)의 확대

제1장

해소되지 않은 한반도의 냉전

- 전사(前史)의 간략한 회고

제1절 세계는 변하고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후 한반도는 분단된 독일이나 또는 대부분의 제3세계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미-소의 냉전장으로 되어버렸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국토의 분단 상태 속에서 북의 공산주의 정권과 이에 대항하는 남의 반공산주의 정부에 의하여 벌어지는 냉전체제는 계속 공고화되고 있었다. 게다가 6·25전쟁의 참화 때문에 대립의 양상은 극한으로 달리고 있었다. 1950년대부터는 미-소간에 핵무기 실험발사 경쟁이 격렬해져갔지만, 그 결과는 어느 편도 핵무기를 독점함으로써 승리할 수는 없다는 상황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핵의 평화적 이용”(미) 또는 “평화공존”(소)의 주장이 본격화되었다.

1959년 10월 소련이 스푸트니크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이후 1960년대에 걸쳐 핵폭탄을 적진에 날려 보낼 수 있는 운반수단, 즉 미사일 개발경쟁으로 말미암아 전 대기권(大氣圈)이 작전권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우주는 새로운 전쟁터로 변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런 가운데 국제적 냉전이 필경은 미-소 공동 멸망의 운명을 불가피하게 할 핵전쟁으로 치달을 것을 예감한 미국과 소련의 지도층은 스탈린이 사망하자 점차로 정치·군사적 긴장상태를 제한된 범위에서 완화해왔다. 그러다가 1985년 3월에 해성같이 등장한 고르바초프 이후부터 양국 간의 군비축소, 소련의 동유럽 주둔군의 삭감 및 쿠바와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철군, 그리고 소련 내 인권과 자유의 상대적 신장 등으로 동-서의 냉전이 급속히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대(對)서방 교류와 협력의 새 시대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현대에 있어서는 전 인류적 가치”를 “계급투쟁과 계급적 이익에 우선시키는 것”이 자기의 “새로운 사고의 핵심”²¹²¹⁾이라는 유명한 명제를 남겼다. 이 말은 냉전을 끝내야한다는 메시지였다. 그는 침체한 소련 경제로서는 미국과의 군비 경쟁을 계속할 수 없으며 소련은 동유럽과 아시아 일대에다 이미 형성해 놓은 방대한 대제국을 더 이상 지탱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있었다. 미-소 간의 냉전 종식은 뜻밖에 중-소간의 냉전 해소를 초래했다. 놀랍게도 맑스-레닌주의 이론에 위배하여, 냉전은 자본주의가 아닌 같은 공산당 국가인 중-소 간에도 일어났던 것이다. 1956년 2월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을 계기로 하여 양국의 공산당들 사이에는 이데올로기 분쟁이 유발되어 이것은 국가 간의 대립으로까지 확대되어 1069년 초에는 진보도(珍寶島: 다만스끼島 중-소 국경 우수리강 한복판에 위치)에서 무력 충돌까지 야기 시켰다. 여기서 모택동은 “미 제국주의”와 “소련 수정주의”를 동시에 적으로 삼고 투쟁하다가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에서 1971년 이후에는 활로를 우선 자본주의 미국과의 화해에서 찾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대담하게 전환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분간 대미 비방은 계속되었다.

모택동 사후(1976. 9) 생사의 몇 고비를 거쳐 1979년에 복권한 덩소평은 ‘4개 현대화’(공업, 농업, 국방, 과학기술)계획을 내세우면서 미국을 위시한 몇 서방강국들과의 협력(자본 및 기술의 획득, 무역신장)을 추진함으로써 미-중의 냉전상태는 기본적으로 소멸되고 말았다. 한편 고르바초프는 중-소의 화해를 위하여 1987년 4월부터 몽고를 방문하고 그곳 주둔 소련군 5개 사단들의 철수를 개시했다. 이어 1989년 5월에는 중국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전격적으로 화해의 길을 열었던 것이다.

한국은 일찍부터 국제정세의 획기적 전환을 예감하고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한편, 갈라진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정책을 구상해 갔다. 1971년 8월 남한의 제의에 의하여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렸고 1972년 여름에는 비밀 특사를 파북(派北), 남-북 ‘7·4 공동성명’에 합의를 이루어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남한의 많은 국민들과 국제사회는 이제 한반도에서 냉전의 코페르니쿠스적

2121) 蘇聯黨 第19回 全國黨協議會에서한 고르바초프 書記長의 報告, 1988年 6月 28日字 『ゴルバチョフ 演説・論文集』Ⅲ, 1989年, 國際文化出版社 p. 212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북한 측의 행동은 그런 기대와는 판이했다. '7·4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3개의 통일원칙을 일방적,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그중 "자주"의 원칙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논리로, "평화"의 원칙을 한국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논리로, "민족적 대단결"의 원칙을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의한 남한 내에서 공산주의 운동(폭력투쟁 포함)을 합법화시키는 논리로써 강경하게 주장했다.

이상 3개의 통일원칙을 김일성의 주장대로 적용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을 내부로부터 해체하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러한 북한의 요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을 한국 측이 수락하지 않자 그들은 '7·4 공동성명'에서 합의, 구성, 운영해 온 뒤 '남북한조절위원회'에 대해 그 "존재의의가 상실되었다"고 하면서 그 폐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로써 '7·4 공동성명'을 휴지화해버렸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의 *이데올로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역대정부는 "미제의 괴뢰정부"에 불과하다. 이 같은 정략적 도식화는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다. 그렇다면 조국통일은 그런 남조선을 해방하는 방법으로 밖에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 입증되었다.

집요한 북한의 정치공세에 한국은 합리적으로 대응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박정희는 1960년대 말부터 주변 열강들 사이의 관계가 대결에서 협력으로 급진전하고 있는 추이에 발맞추어 현실주의적 대내외정책을 단계적으로 추구하기에 이른다. 이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한국 측 대북정책에서는 ① 이산가족 찾기를 위한 적십자회담의 일관된 요구 ② 비정치 분야의 대화와 교류를 통한 점진적 접근(경제회담, 체육회담, 국교회담 등) ③ 남북대화에서는 -남의 다원(多元)사회에 편승한 북의 교란전술을 저지하기 위하여- 대화창구 단일화 고수 ④ 남-북한 교차승인과 UN 동시 가입 추진 ⑤ 북의 내정간섭 불허 등이다. 한편 대외정책에서는 ① 각국 공산당에 대한 문호 개방과 접근, ② 각종 교류와 경제협력의 확대, ③ 소련-동유럽제국들과의 수교교섭 등의 이른바 '북방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대남 정책으로써 ① 남한의 대 공산권 기능주의적(機能主義的) 접근에의 저지와 미군철수의 우선 요구 ② '고려연방제'에 의한 통일 방안의 끈질긴 제안 ③ 남북 교차승인과 UN 동시가입 절대 반대 ④ '남-북 조절위원회'의 사실상의 몰살과 '적십자회담'의 유명무실화 책략 등을 극대화하려 했다. 그리고 대외정

책에 있어서는 ① 소련, 동유럽 및 중국의 대한 남한의 접근 절대 저지 ② 제3계(비동맹국들)와의 국제적 연대성 강화 ③ 한국을 배제한 미국과의 회담에서 휴전협정을 무효화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끈질기게 주장했다.

한국의 ‘북방정책’은 ‘88서울 올림픽’을 호기로 하여 적극 추진되었고, 올림픽 후에는 그 성과를 기초로 하여 가속화되어갔다.

올림픽 4개월 후인 1989년 2월 헝가리와 수교를 필두로 하여 1990년 9월에는 한-소 수교, 1991년 9월에는 남-북한 UN 동시가입, 1992년 8월에는 한-중 수교, 동 12월에는 한-베트남 수교가 실현되었다. ‘북방외교’의 오랜 숙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북한은 국제정세의 조류를 거역하면서 한국의 ‘북방외교’를 기어이 저지하려다가 참담하게 실패하고 말았다. 6공 말기에 매듭진 한국의 북방외교는 통일외교인 동시에 안보·통상·문화의 모든 부문을 포괄하는 대외정책의 성과로써 큰 의의를 지니는 것이었다. 거꾸로 이것은 북한의 공산주의 통일전략에 대해서는 치명적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 현실을 반영하여 1988년 9월 『로동신문』의 한 논평은 「남조선 괴뢰들의 북방정책의 반동적 본질」이라는 제하에서 한국의 북방외교에 대해 실로 절망적인 심정에서 욕설을 퍼부었다.

즉 한국의 북방외교란 “낡은 분열보따리”이며 “1970년대 초부터 분열주의적인 UN 동시가입안과 교착승인론을 들고 나온 남조선 괴뢰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실현해보려고 UN을 비롯한 국제무대에 들고 다니며 추잡하고 비열한 구걸외교를 벌여 왔다”고 비방했다. 이어 남한의 북방외교는 “남조선을 언제까지나 미제의 식민지, 군사기지로 내 말기려는 천추에 용납 못할 매국 배족정책”이라고 단죄했다. 논평은 계속하여 “북방정책의 반동적 본질은 또한 그것이 사회주의 나라들을 분열시키고, 우리 공화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켜보려는 미제의 반공(反共), 반(反)사회주의전략 실현의 도구라는데 있다”고 하면서 “남조선 괴뢰들의 북방정책은 그 반동적 본질로 보아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²¹²²⁾라고 예단(豫斷)했다. 그러나 파탄한 것은 김일성의 잘못들은 미로(迷路)를 방황하는 ‘자주적 대외정책’이었다.

2122) 《로동신문》, 1988년 9월 19일자 논평, 「남조선괴뢰들의 북방정책의 반동적본질」.

제2절 절정을 달리는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과 정치공세

1980년대는 한반도 남-북의 국제관계에 있어 극히 중요한 시기였다. 한국에서는 1979년 10월, 장장 18년 6개월이나 지속해온 박정희 독재정부가 무너지자, 전두환(全斗煥)장군을 선두로 하는 신 군부세력이 정권을 장악했다. 우여곡절을 거친 후, 1980년 12월 27일 '제5공화국헌법'을 공포, 새 공화제를 출범시켰다. 새 정부는 어수선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하여 1971년 이후 '긴급조치'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대학생, 정치인들, 사회단체간부, 종교인, 지식인 등을 복권시켰다. "서울의 봄"이 잠시 동안 새 시대의 도래(到來)를 예고하고 있었지만, "학원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청년 학생, 지식인들의 항의운동은 계속 거세게 일어났고 노사분규도 도처에서 발생했다.

당시의 사회적 혼란상은 4·19의거 이후의 그것과 아주 흡사했다. 그 결과는 치절한 유혈극을 불러일으킨 '광주(光州)사태'였다. 이러한 남한의 혼미상태는 한국으로서는 중대한 위기였지만 김일성으로서는 그지없는 행운이었으며, "남조선혁명"을 위한 절호의 기회였다. 김일성은 자기의 이/미/지를 남한의 "반민족적 군사파쇼 도당"에 대비(對比)하여 "평화에호자", "민족주의적 애국자"로 부각시키려 했다. 이 면에서 그가 상투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실현"이요, 그것을 위한 "남-북 정치협상"이었다. 남한 사회가 신 군부세력의 쿠데타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1960년 4·19이후 간헐적으로 유사한 혼미를 재연하는 상태에 빠져들자 김일성은 남쪽을 향하여 1980년 1월부터 다시 '평화통일 공세'를 대대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1980년 10월 10일, 즉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김일성은 「보고」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 방안"으로써 남북연방제²¹²³⁾안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제시했다. 그의 '연방제'에 관해서는 여태까지 수많은 논저가 국내외에서 출현했음으로 여기서는 새삼 길게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연방제' 논의에서 우선적으로 긴요한 것은 연방제도의 구조나 "시정방침"이 아니라는 점이다. 김일성-김정일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평화적으로 남-북의 참된 민주주의

2123) 김일성이 최초로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한 것은 1960년 8월 14일에 열린, 「8·15해방 15주년 경축 대회」에서 한 「보고」에서였다. 그러나 통일된 연방의 국호(國號)는 붙이지 않았다. 『김일성 선집』(단권본), 서울, 東社社, pp. 396~398.

연방을 창설할 진정한 의사가 그들에게 존재하는지, 아닌지의 여부가 기본적인 문제이다.

선전적 미사여구(美辭麗句), 음모, 술수, 속임수 같은 것으로는 백년하청 통일은 이룩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이 인식하고, 또한 선전하는 남조선은 전두환을 선두로 하는 “파쇼악당”들의 폭압, 만행 하에서 “20세기 말기의 가장 가혹한 인간 생지옥으로 전변되었다”²¹²⁴⁾고 악평했다. 이러한 악평은 집권 후기의 김대중, 노무현을 제외한다면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등 역대 위정자들에게 퍼부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용의 욕설이었다. 벌써부터 “미제의 괴뢰”라고 불리우는 오늘의 이명박 대통령도 동일한 매도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한에서 그간의 정치사회가 그런 꼴이었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 그곳 “생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김일성의 소위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쟁취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내부의 세력은 남조선의 “군사 파쇼도당”이며, 외부 세력은 그들을 비호하고 부추기고 있다는 “미 제국주의”라고 선동해왔다. “미제”는 “두 개 조선”을 조작하는 일을 “대(對) 조선침략의 기본전략”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리고 “미제”의 부추김을 받고 있는 남조선 집권자들은 “UN 동시가입”과 “교차승인”을 떠들면서 “두개 조선”을 조작하기 위하여 미국의 “분열주의노선의 돌격대로 나섰다”고 규탄한다.²¹²⁵⁾ 남한이 과연 그런 곳이라면 그곳 위정자들과 어떻게 민족통일을 협의할 수 있을까. 김일성의 숨김없는 말을 들어보자.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제자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 파쇼통치를 청산하고 조국을 통일함으로써 우리민족의 밝은 앞날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군사파쇼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²¹²⁶⁾

김일성은 이상 자기의 「보고」연설에서는 한국 국민들의 저항감을 자극하지 않도록 “계급”이라는 용어는 숨기고 사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

2124)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한 김일성의 「중앙위원회사업총회보고」, 『김일성저작선집』 8, 1982년판, P. 373

2125) 같은 책, p. 365.

2126) 같은 책, pp. 368~369.

(非)계급적 용어들을 선택했다. 그는 사회의 성원들을 “민족적 해방”을 이룩하려는 “민족통일세력”과 “두 개 조선” 정책을 조작하려는 “분열주의세력”으로 사회성원들을 구분했다. 그 정치적 구분의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즉

- “분열주의 세력”... 군사 파쇼분자들 《두개의 조선》 《교차승인》 《유엔동시가입》을 주장하는 사회 층 등... 이들은 곧 “매국자(노)”다.
- “민족통일세력”... 《두개 조선》을 반대하며 투쟁하는 “애국자”와 “민족주의자”들, 남조선 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하여 《반공법》, 《국가보안법》, 《유신헌법》의 폐기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민주주의자”들의 범주가 그것이다.

1981년 9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북한의 이런 식의 대남 비방선전과 함께 치열한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지대한 관심을 쏟는 가운데 1981년 9월 드디어 ‘1988년 세계올림픽경기’의 서울개최를 의결하였다. 남한의 종북(從北)주의자들은 김일성의 올림픽 외교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하여 1982년 3월 ‘부산 미국문화원’에 불을 지르는데 서슴치 않았다. 이 사건은, 바야흐로 전방위 외교를 펼치면서 동시에 자기들의 “혁명역량”을 과시하기 위하여 자행했던 1985년 5월의 ‘서울미국문화원’ 점거사건 등과 마찬가지로의 섹세서널한 반미투쟁의 일환이었다. 그것은 ‘좌익소아병적’인 맹동주의(盲動主義) 행위였으며 규모로도 크지 않았던 일련의 소요에 불과했다. 그러나 ‘남조선혁명’의 예행연습이었다고 본다면 그 정치적 의미는 중요했다.

제3절 대남정책의 2중 구조

김일성의 이른바 “평화통일”전술은 주변 환경의 빛깔을 따라가면서 자체의 몸 빛깔을 바꾸어가는 카멜레온(cameleon)의 민첩한 움직임과 흡사했다. 소련군부의 신경과민 탓으로 1983년 9월 소련 전투지가 오흐츠크해(Sea of Okhotsk) 상공에서 한국 민항기 KAL기를 격추하는 일대 참사가 일어나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 사건은 한국인으로서 큰 충격이었다. 그러나 김일성에게는 예기치 못했던 횡재였다. 이 사건은 한-미와 소련사이의 관계를 긴장시켜 전쟁발발의 위기를 조성하고, 그 결과

로써 한국의 '북방정책'과 '88년 서울 올림픽'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 측의 신중한 대처로 위기는 해소되었다. 그렇다고 북한이 대남폭력투쟁을 자제한 것은 아니었다.

이로부터 한 달 뒤인 1983년 10월에는 *벼마* 수도 *량군*에서 한국외교사절단이 아웅산 묘소를 참배기 위해 그곳에 이르렀을 때 엄청난 일 대 폭탄 *테러*사건이 터졌다. 수라장으로 변한 묘소현장에서는 4명의 각료급을 포함한 17명의 대한민국 요원들이 순직했다. 북한 공작원들의 계획적 범행이었다. 전(全)대통령은 묘소예로의 출발이 예정보다 늦어졌기 때문에 참화를 모면할 수 있었다.

사건의 전모는 *벼마* 정부 수사당국에 의하여 발표되었는데, 이에 의하여 북한 대사관이 연관되어있다는 사실이 모두 밝혀졌다. 그러나 북한 측은 거꾸로 이 사건을 전두환정권의 "자작극"이라고 뒤집어 씌웠다. 이 사건은 세계외교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잔악무도한 국가 *테러*행위로써 악명을 떨쳤다. 북한이 노린 것은 전두환정권을 붕괴시키고 한국정부가 예의 추진해온 '북방정책'과 제3세계 외교활동 전체를 파탄시키려는데 있었음은 물론이다.

*량군 테러*사건으로 인하여 국제여론이 악화되자 평양은 세계에다 평화의 얼굴을 보여줘야 했다. *량군 테러*사건이 있는 지 겨우 3개월 뒤인 1984년 1월 1일 북한의 정권기관 당국들은 재빨리 '서울 당국'에다 편지를 보냈다. 일종의 위장평화의 *매시*지였다. 이런 행위는 전두환정권(1980. 10~1987. 10)이 쉽사리 무너질 것 같지 않자 시도했던 술책이다. 이 「편지」에서 평양은 북한-미국-한국의 '3자회담'을 제의했다.²¹²⁷⁾ '3자회담'개최 이유는 한반도에서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풀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일성은 회담의 주역을 북-미 양자로 지정했었지만 "서울 당국도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한다."²¹²⁸⁾고 선심을 썼다. 요컨대 회담의 고지(高地)는 끝까지 자기들이 차지하겠다는 의도를 간직하고 있던 것이다.

이 「편지」에서 북한 위정자들은 "이제 조선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2127)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 서울 당국에 보내는 편지」(1984. 10), 앞의 『한반도 평화체제-자료와 해제』, P. 161~162에 전문 수록.

2128) 위와 같음.

“그 전쟁은 지난날과 같은 보통전쟁이 아니라 핵(核)전쟁으로 번져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이 명백하다”²¹²⁹⁾고 합리적인 것 같이 들리는 말을 했다. 이런 말은 긴장 일로를 달리고 있는 정세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였던가, 아니면 상투적인 군사적 위협이었는가. 한-미의 판단을 헛갈리게 했다. 「편지」는 ‘3자회담’에서는 앞으로 북-미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미군과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장비의 철거를 가능케 하는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덧붙였다. 그리고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과 남의 당국을 포함하여 각당, 각파, 각계각층인사를 만화하는 “전민족 대화와 같은 정치협상회가 소집되어야 한다.”²¹³⁰⁾고 기존의 통일전선전략을 반복했다.

북한의 대남정책은 2중구조의 틀 위에 서있었다. 한편에서는 “평화통일”에 대한 민족적 염원을 절절히 호소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반대로 비타협적인 ‘남조선 혁명’을 열렬히 선동하였다. 그들은 「서울 당국에 보내는 편지」를 발송하면서 동시에 대남 혁명투쟁을 위한 행동부대의 조직-강화에 착수했다. 주 ‘서울당국’에다 3자회담의 조속한 소집을 촉구한지 1년 반 뒤인 1985년 7월 27일, 평양의 대남 공작당국은 남한 안에서 지하운동을 하고 있던 종래의 ‘통일혁명당’의 이름을 ‘한국민족민주전선’, 약칭 ‘한민전(韓民戰)’으로 개칭하고, 그해 8월 8일에 이것을 공표했다. 그리고 같은 날 「한국민족자주선언」도 아울러 공표, 최대의 악의와 선동적 논조로 한-미 양국을 비방하면서 “반미 자주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투쟁하라고 호소했다. 이 문건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며 “과거 《만주국》의 현대적 재판”²¹³¹⁾이라고 하면서 전면적인 평화공세를 폈다.

2129) 위와 같음.

2130) 1980년 1월 13일자 23일에는 남한 각계의 재야인사들에게도 유사한 평화통일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 같은 책, p. 162.

이때 북의 평화통일 공세는 북의 이종옥(李鍾玉)정무원 총리가 남의 신현확 국무총리에게 보낸 편지(《로동신문》 1980. 1. 13) 및 김 일(金一)이 의회와 동포 10명에게 보낸 편지(《로동신문》 1980. 1. 23)에서 시작되었다. 이 편지들의 수신인은 김중필, 김영삼, 김 철, 안필수, 윤보선, 김대중, 함석헌, 김수환, 이회성(육군참모총장) 등 거의가 각계각층의 비 여당계 인사들이었다. 한편 해외동포 10명은 재일 ‘민단(民團)장 1명만을 제외하면 모두가 반한-친북활동을 해온 사람들이다. 이러한 배열은 한국 내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당시 평양의 회유책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2131) 평양은 ‘한민전’을 남한 내의 대중적 정치단체로 위장하기 위하여 그 「선언문」이나 「강령」에서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프롤레타리아 독재”나, “맑스-레닌주의 당(黨)”이니 하는 북한식 상용어는 일

‘88 서울올림픽’이 임박해오자 북한은 더욱 조급해졌다. 그는 경기 참가 마감 한 달을 앞두고 대남 혁명투쟁에서 더욱 놀랄만한 승리를 과시하기 위하여 1987년 11월 *벼마 칸다만*(灣) 상공에서 서울행(行) KAL 858기를 공중 폭파하여 승객-승무원 115명 전부를 몰살시켰다. 실로 잔악무도하기 그지없는 악행이었다. 이 폭파사건의 하수인은 김승일(金勝一)과 김현희(金賢姬)임이 *바레인* 수사당국의 조사에 의하여 밝혀졌다. 즉 위조 일본여권을 소지하고 있던 이들은 도중 기착지인 *아부다비*에서 KAL기로부터 내렸다. 이로부터 9시간 뒤에 KAL기는 공중 폭파했다. 이들은 *바레인* 수사관에게 취조를 받고 있던 중 음독자살을 시도했으나 김승일만이 절명했다. 김현희는 서울로 압송되어 사형 판결을 받았으나 유일한 증인이었던 때문에 그 후 특별

체 사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 “민족자주”, “반미”, “민주주의”(간혹사용) 등을 주장했다. 이것은 “사회주의”의 진 단계라고 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에서 철칙으로 강조하는 ‘민족통일전선’의 공작 수법이다. ‘한민전’은 조직이 엄청나게 확장되고 독자적인 방송시설까지 운영하는 본격적인 ‘남조선혁명’의 지휘본부가 되었다. ‘한국민족자주선언’의 원문 ‘10대강령’과 ‘당면강령’ 전문은 『북한대사전』, 북한연구소 발간, 1999년, pp. 1011~1014에 수록.

1985년 7월에는 남한 내의 지하에서 ‘한민전’이 결성되는가 하면, 지상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상호방문이 이루어졌다. 남한 내에서는 ‘대통령 직선개헌 요구 100만 서명운동’이 태동하여 정세는 착잡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김일성은 1986년 1월 1일 「신년사」를 신호로 하여 다시 대남 평화통일 공세를 시작했다. 그의 발언 내용은 거의가 모두 종전의 주장의 반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삼 강조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 (가) “북과 남은 오해와 불신을 풀고 대결상태를 해소해야 한다. …북과 남의 대화를 민족의 분열을 고정화하거나 인민들을 기만하고 사회여론을 호도하여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하여서는 안 된다.”
- (나) 남북대화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려면 대화상대를 반대하는 군사연습을 하지 말아야 한다. (《*타임스피리트* 훈련반대)
- (다) 조선의 평화적 통일에 나서는 근본문제를 해결하려면 북조선-미국-남조선의 “3자회담”을 하여야 한다.
- (라)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두개 조선》 정책을 버려야 하며 우리의 3자회담 안에 응(應)해나서야 한다.

여기까지는 위의 (라)항을 제외한다면 바로 한국의 위정자와 국민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평양이 대리발언을 해준 것이다. 「신년사」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대목은 핵(核)관련 발언이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는 일언반구도 말이 없이 미국과 한국의 들어내 보이고 있다는 핵무기의 위험성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간단했다. 즉, 오늘 핵전쟁의 위험이 가장 짙은 곳은 우선 조선반도입니다. …남조선은 가장 위험한 핵전쟁 발원지로 되고 있으며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십사리 세계적인 열핵(熱核)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조선인민은 남조선에서 핵무기와 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조선반도를 비(非)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투쟁에 한사람 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김일성신년사」 위 이 부분은 앞의 『한반도 평화 체제-자료와 해제』, P. 159.

사면되었다.

재판과정에서 사건의 전모가 들어났다. 이 *테러* 폭발 사건으로 인하여 북한은 그 후 20년 동안이나 국제사회에서 “*테러* 지원국”이라는 악명을 뒤집어써야했다. 김현희의 자백에 의하면 북한은 이 사건을 “88서울올림픽 참가를 방해하기 위해 *칼기*를 폭파하려는” 김정일 친필 지령에 따라 일어났다고 했다. 그리고 한국 내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위기의식을 퍼뜨려 선거전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기 위해 꾸며낸 한국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자백했다. 이렇게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은 상투적인 역선전을 계속해왔다.²¹³²⁾

2132) KAL858기의 공중폭파 *테러*사건은 당시 전 세계를 통하여 선풍적 기세로 보도되었다. 북한은 이 사건을 약화, 무효화시키기 위하여 역선전을 펼쳤다. 그들의 호응해 오던 세계의 좌익 “진보주의자”들은 북한을 성토하는 국제적 대세에 눌려 대체로는 침묵을 지켰다.

제2장

‘자주적 대외정책’ 노선의 원점(原點) : ‘주체사상’

제1절 ‘주체사상’의 정의(定義)와 위상

김일성(金日成)의 소위 “주체사상”(主體思想)은 ‘조선로동당’의 통치 이데올로기인 동시에 국가 이데올로기로 절대화—신비화된 “유일사상체계”(唯一思想體系)이다. 노동당의 현행 규약²¹³³⁾ [1980년 10월 13일 제6차 당(黨)대회에서 개정은 당(黨)의 행동기준을 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압축되어 있다. 즉, (1) 당(黨)은 오직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의해서만 지도된다는 것, (2) 당(黨)은 김일성의 항일투쟁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는 것, (3) 당(黨)은 모든 이데올로기적 편향(偏向)을 배격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한다는 것, (4) 김일성의 깃발 밑에 남북을 통일한다는 것, (5) 주체사상을 당(黨)의 “유일 사상체계”로 확립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당(黨)의 통치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은 이미 1972년 12월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4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

2133) “조선로동당”은 쓰기를 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하여 지도된다.

조선로동당은 항일 혁명투쟁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의해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 발전시킨다.

조선로동당은 자본주의 사상과 마찬가지로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노동계급 운동 안에 나타난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을 당 건설과 당 활동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말줄은 저자) 平和統一研究所, 『北韓概要』, 1986년에 수록된 「北韓勞動黨規」(pp. 339~354)에서 인용. p. 339.

으로 정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²¹³⁴⁾고 규정함으로써 국가 *이데올로기*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주체사상은 북한에서는 누구도 결코 그 정당성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영생불멸”(永生不滅)의 신성하고도 절대적인 권위를 획득했던 것이다. 그러면 주체사상이란 무엇인가. 그 창시자 김일성은 아래와 같이 요약 설명하였다.

주체사상은 [사회적]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화국정부는 정치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힘 있게 다그치며 우리 조국을 주체의 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하겠습니까.²¹³⁵⁾

‘주체사상’이라는 당(黨)의 *이데올로기*가 북한에서 “유일사상체계”로 정립되기까지는 긴 세월의 풍파를 겪어야 했다. 즉 스탈린의 사망, 중-소분쟁에 의한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역사적 분열, 김일성 개인승배에 대한 내외로부터의 도전, 이에 따른 노동당 내의 생사를 건 권력투쟁의 과정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김일성은 살아남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투쟁과정에서 반기를 들었던 당내의 반대파들은 “교조주의자”, “수정주의자”, “기회주의자”, “반당(反黨) 반혁명분자”라는 판에 박힌 낙인이 찍히면서 말살되었다. 당(黨)의 유일사상체계, 즉 주체사상은 이러한 권력투쟁, 탄압, 숙청의 와중에서 북한의 최고, 유일, 무오류의 신성 불가침한 전체주의적 지도이념으로 절대화되었으며, 모든 진리의 궁극적(窮極的) 원천이요 현실정치의 가장 정확한 지침으로 신비화되었다.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가 거친 이러한 절대화(絕對化)-신비화(神秘化)의 과정은 바로 그의 독재권력의 절대화-신비화의 과정과 표리관계에 있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는 그의 ‘유일사상체계’ 이외의 어떠한 사상도 용납되지 않는다. 1986년 5월 31일 74세의 고령이었던 그는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이라는 강의에서 ‘유일사상체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21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김일성저작선집』 6, 1974, p. 370.

2135) 《근로자》, 1982년 5호, p. 6.

당 건설에서 유일사상체제를 세운다는 것은 전 당을 하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영도의 유일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계급은 반드시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조직되고 지도되어야 합니다.……노동계급의 당 안에는 오직 하나의 사상만이 있어야하며, 전 당이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되어야 합니다.……노동계급의 당은 당의 지도사상에 기초한 사상의 일색화를 실현하여 모든 당원들이 오직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 중앙위원회의 유일적 영도 밑에 전당이 하나같이 움직이도록 하여야 합니다.²¹³⁶⁾ (밑줄은 저자)

이상에서 김일성이 “당(黨)”이라고 한 것은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는 그러한 자기의 전체주의 형(型) 유일사상체제와 그것을 토대로 한 1인 독재 권력을 장남 김정일에 계승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김일성의 그런 주체사상은 노동당뿐만 아니라 전(全) 북한사회의 유일한 정치 *이데올로기*이다. 그러면 *이데올로기*(意識形態)를 북한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북한에서는 대중에게 생소한 *이데올로기*라는 외래어를 근년에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사상” 또는 “사상의식”이란 역어(譯語)로 대체하고 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사상의식”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사람들의 요구와 지향, 계급적 이해관계를 반영한 의식을 말한다. 사상 의식은 사람이 자기의 사회적 계급적 처지와 요구, 이해관계를 자각할 때 가지게 된다. 계급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계급의 한 성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 요구와 이해관계는 계급적 성격을 띠며, 따라서 그들의 사상 의식도 계급적 성격을 가진다.……사상의 가장 높은 형태는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다. ²¹³⁷⁾

한마디로 김일성에 있어서 *이데올로기*란 인간의 사회계급적 자기의식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의 설명은 대체로 맑스-레닌주의의 *이데올로기*의 아주 단순화되고 압축된 설명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여기서 그가 자기의 주체사상에다 *이데올로기*의 “가장 높은 형태는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라고 주관적인 부연을 달은 것은 그의 주체사상을 보편적 진리로 만들기 위해서였음을 볼 수 있다. 그의 주체사상의 중심은 바로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라는데 있으며, 그의 대외 관계의 *이데올로기*는 여기

2136) 같은 책, 1986년 6호, p. 14.

213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용어사전』, 1982년, p. 282.

서 도출되었다.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²¹³⁸⁾이라느니, “모든 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케 하는 것이 바로 주체사상의 요구”²¹³⁹⁾라느니,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²¹⁴⁰⁾느니, 또는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²¹⁴¹⁾이라느니 하는 다양한 인간 중심주의적 해석을 해왔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1970년 이후에 와서 비로소 내린 것들이다. 그 목적은 주체사상에 “철학적 원리”와 “사회 역사 원리”를 부여하여 체계화해 보려는 데 있었다.

1당(黨)독재 국가에서는 어디서나 *이데올로기*의 최종적 해석권(解釋權)은 독재자 자신이 장악한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미 김정일이 ‘주체사상’의 정통적 해석권을 장악하고 「주체사상에 대하여」(1982년 3월),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자*」(1974년 4월) 등의 선전문들을 발표했다. 그는 33세 때(1974년 4월 20일 현재) 벌써 당(黨) 이론 선전일꾼들 앞에서 대담하게도 김일성을 *맑스*와 *엥겔스*의 위에다 올려놓는 발언을 했다. 이것이 발표된 것은 무슨 연유였는지 10년 뒤였다.

주체철학은 인간에 대한 견해도 새롭게 밝혔습니다.……*맑스주의*의 고전가들은 인간 문제에 대한 유물변증법적 견해를 밝힘으로써 인간에 대한 철학적 해명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룩하였습니다.……그들은 인간 문제에 대한 유물 변증법적인 견해를 세웠지만 자연과 사회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전면적으로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주체철학은 처음으로 자주성과 독창성, 의식성이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이룬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인간에 대한 완벽한 해명을 주었으며, ……자연과 사회는 사람이 지배하며 사람에 의하여 개조된다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밝힘으로써 인민대중이 자기운명의 주인,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우리 시대의 철학적 과제를 빛나게 해결하였습니다.²¹⁴²⁾

2138) 『김일성저작선집』 6, 1974년, p. 268.

2139) 위의 책, p. 276.

2140) 『김일성저작선집』 7, 1978년, p. 260

2141) 『조선중앙연감』, 1983년 판, p. 44

이상의 알 듯 모를듯한 추상적 설명은 물론 김정일의 이론적 권위를 우상화하기 위해 사후에 조작된 것에 틀림이 없다. 동시에 이것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고전적 맑스주의의 철학을 능가하는 위대한 철학사상으로 부각시키려는 개인숭배 작품의 중요한 측면이었다. 이러한 예찬은 스탈린의 소련에서도 모택동의 중국에서도 그들의 전성기에도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제2절 위성국에서 ‘자주노선’의 선언으로

- 스탈린의 단일중심 지배체제의 붕괴

(가) 그 이후의 도식화(圖式化)된 대외관계

‘주체사상’은 국가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구현하여야 할 지도원칙의 하나로서 ‘정치에서 자주’를 내세운다. ‘정치에서 자주’란 원칙은 이른바 ‘자주노선’으로 실천되어 왔다. ‘자주노선’은 주체사상이 정치 분야에서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주노선은 첫째로 대외 관계에서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어떤 나라의 지배도 받지 않고 “완전한 평등”과 자주적 입장을 견지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대내적으로 혁명과 건설에 있어서 북한의 구체적 현실에 부합되는 독자적인 정책노선을 수립하고 관철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개의 측면은 분리할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으나 본론에서는 그 대외 관계의 측면만을 고찰하기로 한다. 도식화된 대외 관계의 원칙을 북한의 헌법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과 자주권을 행사한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한 자주성, 호상 존중과 내정 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여 그들의 민족해방투쟁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²¹⁴³⁾

2142) 《근로자》, 1984년 4호, pp. 3~4.

2143) 앞의 『김일성저작선집』 6, p. 372. 이 부분은 1970년 9월에 개정 채택된 中華人民共和國憲法前文을 약

위의 규정 중, 그 전반부는 1955년 4월 ‘반둥회의’(Bandung Conference)에서 채택한 ‘평화공존 10원칙’과 1972년 2월의 미-중 상해(上海) ‘공동성명’, 그리고 1972년 9월의 ‘일-중 공동성명’등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들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각국의 대외관계의 보편적 원칙이며, 북한에만 특유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남한이 이 원칙에 반대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한편, 후반부는 공산당국가 간의 관계와 제3세계 나라들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맑스-레닌주의*와 교조주의적, 주관적인 반(反)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가 명시되어 있으며 반미-반한(反韓)적 전략이 깔려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당규약(黨規約)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조선로동당은 자주성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과 국제공산주의 운동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고 세계의 모든 신흥세력나라 인민들과의 친선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反帝) 민족해방 운동과 자본주의 나라들의 노동계급과 그 밖의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지하고 광범한 연합전선을 실시하여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 공동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한다.²¹⁴⁴⁾

이상을 요약하면 북한의 대외관계의 기본목표는 공산당국가들과 단결하며, 국제공산주의 세력, 제3세계 및 자본주의 국가내의 *프롤레타리아트*와의 연대성을 강화하여 반미(反美)혁명투쟁을 감행한다는 것이며, 그 밖의 나라의 지배에도 반대한다는 데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요컨대 세계의 가능한 모든 정치세력과 제휴하여 “미제(美帝)”와 투쟁한다는 것이 북한의 대외정책의 전략적 핵심이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미(美)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미국식민지 통치를 청산하며, 그리고 일본제국주의의 재침 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통일을 이룩”²¹⁴⁵⁾한다는 김일성의 공산주의 통일전략을 일관하고 있는 종래의 기본방침을 재천명한 것이다.

김일성이 “주체”란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은 1955년 12월 28일 당(黨) 선전선동 일꾼

간 표현을 바꾸고 대외 원칙에서 ‘平等共存’을 제외한 것에 불과하다.

2144) 앞의 『北韓概要』, p. 340.

2145) 黨規約, 앞의 『北韓概要』, p. 340.

들 앞에서 당의 사상교육사업을 할 때 “주체를 세워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때였다.²¹⁴⁶⁾ 그 이전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로부터 9년 8개월 뒤인 1965년 4월 *인도네시아의 알리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행한 강의형식의 연설에서는 ‘사상에서의 주체(主體)’, ‘정치에서의 자주(自主)’, ‘경제에서의 자립(自立)’, ‘국방에서의 자위(自衛)’라는 4개 원칙을 내세워 주체사상을 공식화(公式化)했다.²¹⁴⁷⁾ 북한의 대외관계에서 자주노선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1966년 8월 12일자 《로동신문》 사설 「자주성을 옹호하자」에서였다. 40수년전의 일이었다. 이상 김일성의 문언 모두에서 표명된 내용은 미-소, 특히 소련에 종속되었던 나라들에 대한 *이데올로기*와 정치상의 자주적 입장을 강조한 것이었으며, 반미(反美)논조와 그 밖의 나라에 대한 비판적 인사는 수사에 불과했다. 그 후 이 ‘자주노선’은 확대 보장되어 북한의 전반적 대외정책의 이념으로 체계화되어 갔다.

그런데 주목을 끄는 것은, ‘자주노선’의 선언 이래로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이미 그가 15세 소년시절에 주체적인 혁명노선을 내놓았을 때 비롯되었다고 하는 황당무계한 선전이었다. 북한의 출판물들은 지난 40년 동안 이러한 선전이다 막대한 금력과 정력을 쏟아왔다. 1986년 5월 31일에 그는 자신의 입으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서슴지 않고 있었다.

우리가 1926년에 조직한 타도제국주의 동맹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전위조직이었으며,……타도제국주의 동맹의 결성은 우리 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트드」가 결성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조와 결별하고 자주성의 원리에 따라 진보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조선공산주의 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은 정확한 투쟁목표와 전략전술을 가지고 힘차게 전개되었습니다.²¹⁴⁸⁾

이상 그의 발언에 의하면 그는 만14세 때에 (1912년 생) 이미 ‘주체사상’을 견지하고 “자주성의 원칙”에 따라 공산주의 운동을 이끈 것으로 된다. 북한에서 자주성을 정식으로 선포했던 1966년보다 40년 전의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역사의 후안무치

2146) 『김일성저작선집』4, 1960년, pp. 336-337 참조.

2147) 『김일성저작선집』4, 1968년, p. 220.

2148) 《근로자》, 1986년 6호, p. 4.

한 날조²¹⁴⁹⁾는 김일성 개인숭배가 인간의 이성(理性)을 마음대로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나) 위성국(衛星國) 시대의 실상

김일성은 1978년 9월 9일 “공화국정부는 창건 첫날부터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 왔습니다.”²¹⁵⁰⁾라고 인명했다. 그러나 이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소련군 점령하의 동(東)유럽을 보면 알 수 있다. 소련군정 3년 동안(1945~ 1948)에 김일성에게 자주성이 있을 수 없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했다. 그 뒤 1948년 9월 ‘공화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1953년 3월 스탈린이 사망한지 얼마 후까지도 김일성정권은 소련의 전형적 위성정권의 지위에 머물러 있었다. 북한은 소련군에 의하여 해방되었고, 노동당과 정부도 스탈린의 계획과 지원하에 건립될 수가 있었다. 스탈린의 승인이 없었더라면 김일성이 정치권력의 정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스탈린이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하여 철통같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중앙 집권 체제를 수립하여 각국 공산당을 통제하고 있던 상황에서 북한의 자주성이란 존재할 여지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정책노선은 모스크바의 지령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그것으로부터의 이탈이란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였다. 한마디로 북한은 정치-경제-문화-군사 면에서 전적으로 크레믈란에 종속된 소련의 위성국이었다. 이러한 현상을 스탈린은 소위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고 불렀다. 북한의 1948년 헌법은 소련의 스탈린헌법(1936)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으며, 소련인들이 러시아어로 기초(起草)한 것을 조선인 소련 2세들이 중심이 되어 조선어로 번역한 것이었다.²¹⁵¹⁾ 김일

2149) 이것이 날조라는 것은北韓의 오늘의 기록이 과거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69년 12월 10일자 《祖國統一》紙(현재는 폐간)에 의하면 그가 反帝 청년동맹을 조직한 것은 1927년 여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것을 개작하여 1926년에 ‘타도제국주의동맹’(打倒帝國主義同盟)이 조직된 것으로 말하고 있다.

2150) 《근로자》, 1978년 9호, p. 4.

2151) 소련군정 시대에 군정요원으로써 소련군 사령부에서 복무했던 ‘高麗人’(조선계 소련공민) 林 隱(필명)은, 북한의 1948년 헌법초안은 “스티코프, 레베제프, 로마넬코의 지도하에 친킨, 페즈포프, 바라스노프, 쿠리코프의 집필전에 의하여 기초되었고, 許哥諱, 이동초(중화민족) 등의 감독하에 姜미하일, 李奉吉, 朴泰變, 田東赫, 林 河 등이 번역하여 그것을 김일성의 입을 통해서 보고 내지 공포되었던 것이다.”라

성은 1951년 11월 2일 “조선 인민은 위대한 스탈린헌법-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의 영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반영하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²¹⁵²⁾고 말함으로써 이상의 사실을 은연중에 암시했던 것이다.

위성국 시대의 김일성의 대외정책은 스탈린과 소련을 극구 찬양하고, ‘붉은 군대’의 북한 해방과 스탈린의 “사심 없는 원조”에 말끝마다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소련의 대외정책을 맹종하고 있었다. 1950년 3월 17일 김일성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흉악한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공격하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대외 정책은 전(全)세계의 자유애호 인민들과의 평화와 협조의 정신으로 관통되었다.……위대한 소련과의 친선강화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대외 정책의 기초로 된다”라고 선언했다.²¹⁵³⁾ 그리고는 “조선 인민은 위대한 소련을 자기의 가장 믿음성 있는 동맹자로, 가장 친근한 벗으로, 또는 우리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존중하는 진정한 원조자로 보고 있다”²¹⁵⁴⁾고 외전한 대소(對蘇)의존, 추종정책을 공언했던 것이다.

김일성은 더 나아가서 “위대한 소련의 [대외]정책은 민족 자결을 준수하는 정책이며, 타 민족의 독립과 자유와 동등권을 존중하는 정책이며,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 정책”이다, “소련의 이러한 정책은 우리 조선에 대하여 시종일관하게 진행되었으며 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스탈린의 대외정책에 대한 낮간지러운 예찬이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당시의 공산권내 사정을 정반대로 묘사한 허언이었다. 그에 의하면 “타민족의 자주권과 동등권을 존중하는 위대한 소련은 우리 조국에 공화국정부가 수립된 후 조선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의 요청에 의하여 자기 군대를 우리 강토로부터 철거하였다”²¹⁵⁵⁾는 것이다. 그리고 소련정부는 “전체 조선인민(남조선인민 포함)의 총의에 의하여 수립된 우리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을 출선하여 승인하고 우리 공화국과 외교 및 경제적 관계를 설정했다.”²¹⁵⁶⁾고 했다. 이어 그는 스탈린

고 증언하고 있다. 林 隴, 『金日成傳』, 서울, 溪村文化史, 1989년, p. 192.

2152) 『김일성선집』 2, 1953년판, p. 340.

2153) 같은 책, p. 540.

2154) 위와 같음

2155) 같은 책, p. 357.

2156) 위와 같음.

의 대외정책에 감격하면서 소련에 더욱더 의존, 밀착(종속)할 것을 다음처럼 강조했다.

이와 같이 소련 정부의 *쓰딸린*적 대외 정책은 위대한 소련이 진정으로 우리 조선이 통일된 자주 독립국가로 되는 것을 원하며 조선 인민에게 아무런 아심도 없는 진정한 원조를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소련과의 일층 긴밀한 외교적, 경제적, 문화적, 관계를 맺으며 확고부동한 친선 정책을 강화 발전시키는 것만이 민주주의 자주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조선이 승리를 보장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²¹⁵⁷⁾

김일성은 1950년 3월 17일 「조-소 경제, 문화협력협정」체결 1주년에 즈음하여, 이 「협정」에는 “위대한 소련이 다른 인민민주주의 제(諸)국가들과 체결한 협정들에 서와 같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약소민족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대소 국가들이 동등적 입장에 기초한 협조들을 원칙적으로 한 *쓰딸린*적 대외정책이 명백히 표현되어 있다”²¹⁵⁸⁾고 찬사를 보냈다. 그리고는 종전에 한 것과 마찬가지로의 소련 찬양을 되풀이했다. …“위대한 소련 군대는…우리 조국을…일본 제국주의의 악독한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 인민에게 자기 조국을 자기들의 지망대로 재건하며 민주주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온갖 조건들을 지어주었으며 민주주의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조선 인민에게 시종일관한 사심 없는 원조를 계속하여 주었다.”²¹⁵⁹⁾고….

그러나 북한에서 ‘조선인민’이 아니라 *스탈린*이 “자기들의 지망대로” 건설하고 있던 것은 “민주주의 독립국가”가 아니라 바로 소련의 위성국이었다. 이것은 소련군이 진주했던 동(東)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스탈린*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는 이름 하에, 소련의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철권정책에 의하여 *소비에트* 위성체제 안에서 형성된 당시의 주종 관계를 김일성은 “호상 존경과 형제적 협조에 기초한 민주진영의 제(諸)국가 간의 관계”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 역사에서 일찍이 보지 못한 국제 관계의 새로운 형태, 즉 공산주의적 미래의 국제 관계의 원형”²¹⁶⁰⁾이라고

2157) 위와 같음.

2158) 같은 책, p. 526.

2159) 위와 같음.

2160) 『김일성선집』 4, 1953년 판, p. 164.

까지 모스크바 중심의 노골적인 제국주의 지배체제를 극구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김일성이 이른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로 등장한 이후, 이상과 같은 대소(對蘇) 맹종, 찬양 발언은 뒤에 와서 그의 저작에서 모조리 삭제되든가, 아니면 ‘자주노선’에 걸맞도록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 요컨대 이것은 스탈린의 허수아비로서의 자기의 수치스러웠던 과거를 역사에서 말소해 보려는 시도였다.

제3절 ‘자주노선’의 이념설정

김일성에 있어서 당(黨)의 “자주노선”이란 주체사상을 정치 분야에 구현한 것이었다. 그가 자주노선을 내세운 것은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운동을 기점으로(1956. 2) 야기된 중-소분쟁의 격동 속에서였다. 당시의 중-소분쟁은 김일성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으며 두 공산주의 대국이 벌리는 국제적 해계모니투쟁 속에서 그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정권 보존이라는 본능에 따라 양국 사이에서 극히 유동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입장을 취해야 했다. 흐루시초프가 스탈린 개인숭배를 공격하여 그를 만능의 신(神)의 지위로부터 흉악한 폭군의 지위로 끌어내렸을 때, 김일성의 개인숭배와 1인 독재를 혐오하고 있었던 노동당 내의 ‘소련파’와 ‘연안파’는 스탈린 격하운동이라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새 물결에 편승하여 북한의 소(小)스탈린을 제거기 위해 은밀히 획책하고 있었다.

김일성은 흐루시초프가 막을 올린 비(非)스탈린화(化) 캠페인, 미국과의 ‘평화공존’ 제언, 의회주의를 통한 사회주의에로의 “평화적 이행”의 주장 등 이른바 “현대 수정주의”의 폭풍이 자기에게 미칠까봐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은 아직은 사회주의 진영의 중심이었으며 가장 부강한 “사회주의국가”로 간주되고 있었으므로 김일성은 흐루시초프에 당장 반기를 들 수는 없었고, 친소(親蘇) 정책을 유지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보존하려고 힘썼다. 그리하여 그는 1959년 1월의 소련공산당 제21차대회 때까지는 친소 노선을 명백히 하고 있었다. 그때까지는 아직 ‘중-소분쟁’도 표면에까지 악화되지는 않고 있었다. ‘중-소분쟁’은, 1960년 4월 이후 「레닌주의 만세」

라는 '중국공산당' 기관지 《홍기》(紅旗)의 (1960. 4. 16) 논문을 발단으로 하여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서 공개적인 이데올로기투쟁으로 악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일성은 1959년 11월 현재로부터 1966년 8월(자주노선 선언)까지 무려 4차례나 자기의 입장을 바꿔야했다. 즉, 종래의 친 모스크바 노선으로부터 중립 노선으로, 중립 노선에서 친 베이징 노선으로, 친 베이징 노선에서 자주노선으로의 전환이 그것이었다. 그가 도달한 '자주노선'은 사활을 건 당 노선의 결단성과 외교적 신축성에 의하여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유지되고 있었다. 김일성이 중-소 양국 사이에서 격렬한 사상투쟁과 위험한 정치 곡예를 통하여 이끌어 온 그의 '자주노선'은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었다. 1955년 이래로 북한에서 출판된 일련의 당(黨)문헌들을 분석해 보면 그는 중-소분쟁이 빚어낸 대격변 속에서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간섭을 다 같이 거부하고 자기의 독자적 권력의 기반을 구축하며 수호하기 위하여 실로 필사적 투쟁을 벌여야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김일성의 '자주노선'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자주성을 옹호하자」는 《로동신문》사설(1966. 8. 12)에서 체계적으로 서술되었다. 이 사설은 매개(每個) 나라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그 나라의 당(黨)임으로 그 나라의 혁명과 건설은 그 나라의 당(黨)이 책임져야 한다. 다른 나라의 당(黨)의 지배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되고 "자주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당위적인 명제에서 출발한다.²¹⁶¹⁾ 그러므로 그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잘 하려면 남의 머리가 아니라 "자기 머리로 사고"해야 한다. 각국 당(黨)이 독자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을 잃게 되면 "옳고 그른 것을 식별하지 못하고 남이 수정주의를 하면 자기도 수정주의를 하고, 남이 교조주의를 하면 자기도 교조주의를 하게 된다"²¹⁶²⁾고 대국(大國) 맹종주의(盲從主義)로 전락할 위험성을 지적한다. 그러면 '수정주의' 또는 '현대 수정주의'란 무엇인가. 김일성이 1963년 2월 8일에 내린 설명은 다음과 같았다.

수정주의는 노동운동 내에 침습한 부르쥔야 사상입니다. 혁명의 변절자체인 수정주의자들은 교묘하게 맑스-레닌주의의 명제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반동적 본질을 가리우면서 사실상 부르쥔야 사상을 설교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과 노동계급의 리익에 복

2161) 《근로자》, 1966년 8호, p. 3.

2162) 위와 같음.

무하고 있습니다.²¹⁶³⁾

‘현대 수정주의’는 “정세의 변화”와 “창조적 발전”이라는 구실 밑에 *맑스-레닌주의*를 수정하여 그 혁명적 진수를 거세(去勢)합니다. 그것은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거부하고 계급 협조를 설교하며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포기합니다. 현대 수정주의는 또한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며 사회적 및 민족적 해방을 위한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각방으로 방해합니다.²¹⁶⁴⁾

위의 공격은 이름을 들지는 않았지만 *호루시/초프*를 두고 한 것임은 물론이었다. 그리고 그 비판의 논법은 바로 모택동(毛澤東)이 “*호루시/초프* 수정주의”를 비판할 때에 구사한 그것과 일치했다. 한편, ‘교조주의’에 관해 당내 ‘연안파’의 숙청을 계획하면서 1956년 4월 당시 김일성이 시도한 해석은 아래와 같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교조주의라고 하는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데, 교조주의란 별것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기가 처한 구체적 현실 조건을 타산하지 않고 일반 명제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남의 것을 기계적으로 그대로 옮겨놓는 태도입니다. 비유해서 말하면 남의 것을 통째로 삼킨다는 뜻입니다.²¹⁶⁵⁾

김일성은 또한 ‘현대 수정주의’를 ‘우경 기회주의’로 규정하는 한편, ‘교조주의’를 “좌경 기회주의”로 규정하면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공격했다.

.....좌경 기회주의는 변화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맑스-레닌주의*의 개별적 명제들을 교조주의적으로 되풀이하며 초혁명적인 구호를 들고 사람들을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끌어 갑니다. 또한 그것은 당을 군중으로부터 이탈시켜 혁명력을 분열시키며 주된 적에 공격을 집중할 수 없게 합니다.좌경 기회주의를 반대하지 않고는 반제력을 단절시켜 제국주의와 성과적으로 투쟁할 수 없으며,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도 할 수 없습니다.²¹⁶⁶⁾

2163) 「우리의 인민군대는 노동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계급적 정치 교양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김일성저작선집』 3, 1968, 평양, p. 484.

2164) 「현정세와 우리당의 과업.」 『김일성저작선집』 4, 앞의 판, p. 334.

2165) 「평안북도 당단체들의 과업.」 『김일성선집』 4, 1960년 판, p. 398.

2166) 『김일성저작선집』 4, 앞의 판, pp. 334~335.

이러한 논법은 *모스크바*가 모택동의 극좌노선(極左路線), 특히 “문화대혁명”이 시작될 무렵의 노선을 공격할 때의 표현들을 약간 고쳐서 그대로 원용한 것임을 간취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수정주의”와 “교조주의”, “좌경”과 “우경”의 정확한 기준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런 용어들은 모든 공산주의 정당 내의 권력투쟁에서는 반대파에 대한 공격용 은어(隱語)로써 남용되어 온 것이므로, 그 보편적 타당성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당(黨) 정책노선에서 어디까지가 ‘수정주의’요, 어디까지가 ‘교조주의’인가는 어느 나라에서나 *이데올로기*의 해석권을 독점한 당(黨)의 최고 권력자의 주관에 의하여 판정이 내려진다.

스탈린, *티토*, *호루시초프*, 모택동, *고물카*, *드부체크*, *고트발트*, *엔베르 호자도* 모두가 다 판에 박힌 듯이 자기들은 노선상의 우경, 또는 좌경을 극복하고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원칙을 자기들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다 “창조적으로”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당(黨)의 공인을 받았다. 이때에 당내 권력투쟁에서 패배한 자는 예외 없이 “수정주의”, “교조주의”, “우경적” 또는 “좌경적” 오류를 범한 종파분자로 몰리었다. 김일성의 자주노선의 *이데올로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당내의 반대파를 그러한 “종파주의자”로 몰아서 말살해 왔고, 이 “종파분자”들은 소련 또는 중국 등의 대국의 당(黨)을 섬기고 있다고 하여 “사대주의자”로 낙인찍었으며 남의 것만을 숭상하고 자기 나라 것은 무시한다고 하여 “민족허무주의자”라고 비난했다.

김일성이 ‘자주노선’을 대외적으로 선언한 이후로 주장해온 원칙은 각국 공산당간의 “완전한 평등-자주-내정불간섭-동지적 협조”라는 규범이었다. 그에 의하면 “큰 당(黨)과 작은 당(黨)은 있으나 높은 당(黨)과 낮은 당(黨), 지도하는 당(黨)과 지도받는 당(黨)은 있을 수 없다”는 관점을 내세워 그 “어느 당(黨)도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특권적 지위를 요구할 수 없다”²¹⁶⁷⁾고 하면서 중-소에 대하여 *이데올로기* 상의 자기 방위선을 구축하려 했다. 그리고 과거의 *코민테른*처럼 “공산주의운동에서 국제적인 중심을 필요로 했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고 하면서 세계 혁명운동에서의 “중심”을 거부했다.²¹⁶⁸⁾

2167) 《근로자》, 1966년 8호, p. 21.

2168) 위와 같음.

스탈린을 맹종해 온 김일성이 이상과 같이 대담한 발언을 하면서 독자노선을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스탈린 사후에 급속히 조성된 새로운 국내적·국제적 조건에서였다. 즉, 중-소분쟁에 의하여 단일적 국제공산주의 세력권에는 금이 갔고 드디어는 다원화 시대가 열려 각국의 당(黨)이 자주를 내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김일성은 이미 이때까지 당내에서 난공불락의 권력기반을 구축해 놓았던 것이다. '자주노선'의 선언과 더불어 북한에서 김일성 개인숭배는 무한히 치솟고 있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그의 '자주노선'의 전략은, 반대 방향을 지향하는 두 개의 정치목표, 즉 대외적으로는 어느 특정의 나라의 지배도 거부하는 다중심체제(多中心體制, polycentrism)를, 대내적으로는 자기의 권력을 절대화하는 유일중심체제(唯一中心體制, monolithism)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었다.

제3장

북한민주주의주의의기본원칙

대외정책의 기본원칙

제1절 출발점 : “조선혁명의 이익”

김일성은 대(對)중-소관계에서 확정한 자주노선을 비(非)공산주의 세계에 확대 적용하여 자기의 전반적인 대외관계의 기본원칙으로 삼아왔다. 자주성을 견지해온 대외관계의 원칙을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 당은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다른 당,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대외관계의 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언제나 조선혁명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신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자주적으로 풀어나갔습니다.²¹⁶⁹⁾

당(黨) 제6차 대회(1980. 10)에서도 김일성은 앞으로 실시할 북한(黨)의 대외정책을 이상과 똑같은 원칙에 의하여 천명했다.²¹⁷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가 당의 대외관계의 출발점을 “조선혁명의 이익”에다 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에 있어서는 “조선혁명의 이익”이 곧 “민족적 이익”이었다. 그가 말하는 “조선혁명”에는 첫째로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이상으로 “남조선혁명”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다. 이 두 혁명은 분리할 수 없는 동일체(同一體)의 양면이다.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적 민주기지”를 정치·경제·문화·군사적으로 강화하여 남조선혁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위업을 실현한다는 것은 그가 40년 동안을 강조해 온 “조선혁명”의 도식화(圖式化)된 노선이다.

이러한 조국통일의 전략적 목표로서 그는 “3대혁명 역량의 강화”, 즉 북한의 사회주의 역량(革命基地)의 강화, 남조선 혁명역량의 강화, 그리고 국제 혁명역량과의 단

2169) 『김일성저작선집』 7, p. 233.

2170) 『김일성저작선집』 8, 1982년 판, pp. 391~392.

결강화를 빈번히 강조해 왔다.²¹⁷¹⁾ 1964년 2월 27일 김일성은 당중앙위원회(黨中央委員會) 전원회의에서 “3대혁명 강화”에 관하여 간명하게 전략적 도식화를 시도하였다. 그것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우리나라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민족해방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세 가지 혁명력량이 잘 준비되어야 한다. 그 첫째는 북조선의 혁명력량이며, 둘째는 남조선의 혁명력량이며, 셋째는 국제적 혁명력량이다.

(2) 우리 혁명이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국내에서 혁명력량이 강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혁명력량도 더욱 자라야한다. 조선혁명은 세계혁명의 한 고리이다.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국제혁명력량과의 연대성을 더욱 강화하여야하며 미 제국주의를 고립시키며 그 침략정책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역센 투쟁을 벌려야 합니다.

(3) 이를 위하여서는 첫째로 우리는 모든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야 하며 제국주의 예측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을 적극 지지하며 그들과의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의 모든 인민들과 단결하여야 하며 그들의 반미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야 한다. 셋째로 미제국주의자들과 프랑스나 일본 그 밖의 다른 제국주의자들 사이의 갈등과 모순을 리용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국제무대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고립시키며 그들이 세계에 이르는 곳곳마다에서 막다른 골목에 빠지도록 하여야 합니다.²¹⁷²⁾

그중 국제 혁명력량과의 단결강화가 바로 김일성의 대외관계의 기본 지침으로 되었다. 대외 관계에서의 중요성의 우선순위는 첫째가 중-소 등 사회주의 나라들(공산당 국가들), 둘째가 제3세계, 그 중에서도 블록 불가담(不加入) 나라들, 그리고 셋째가 서방의 자본주의 국가들이다. 김일성은 이 모든 나라들의 반미(反美)세력 또는 반미정책과의 연대성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에서 미군을 축출하여 그곳에다 국제적으로 군사적 공백상태를 조성한 후, 공산주의 통일을 실현한다는 것을 휴전이후로부터 그가 사망할 때까지 불변의 전략으로 고수해 왔다.

그는 솔직하게 “조선 문제는 전반적 국제문제의 한 부분이므로 통일문제를 세계 정세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²¹⁷³⁾는 점을 공언해 왔다. 그의 말은 얼른 듣기에

2171) 『김일성저작선집』 4, p. 239.

2172) 앞의 『김일성저작선집』 4, pp. 79-80, p. 81 및 p. 94.

2173) 『김일성저작선집』 7, p. 242.

는 합리적이다. 그렇지만 한국 측이 통일문제를 세계정세와 연결시켜 고찰하는 것은 자주성이 없다고 하여 절대로 반대한다. 그는 ‘7·4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을 때 “우리는 미국이나 그 밖의 어떤 다른 나라에도 의존하지 않고 조선 사람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자주 원칙을 제기하였다”고 하고, “남조선 당국자들도 이 원칙에 동의하였다”²¹⁷⁴⁾고 언명했다. 그러나 그는 ‘자주 원칙’을 부단히 강조하면서도 ‘국제 혁명역량’과의 연대성 강화로써 통일을 달성한다는 주장을 후퇴시킨 일이 없다. 그에 있어서는 남한 측이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여 통일을 달성하려는 것은 “사대주의”요, “매국적” 정책이다. 그는 “우리 혁명”이란 말로 공산주의 통일의 목표를 강조하면서 제6차 당(黨)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국제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그와의 연대성을 튼튼히 하는 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혁명로선입니다. 우리는 대외활동을 적극 벌려 국제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그와의 연대성을 튼튼히 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적 이익과 자주권을 옹호하고 우리 혁명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마련하며 전반적 세계혁명의 승리를 다그쳐나가야 합니다.²¹⁷⁵⁾(밑줄은 저자)

제2절 목표 : ‘남조선혁명’과 ‘남조선해방’

이상에서 김일성이 “우리 혁명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마련한다”는 것은 곧 “남조선혁명”에 유리한 국제적 조건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리고 그 후까지도 김일성은 “자주적 평화통일”의 구호를 내세우면서 한 동안은 좀처럼 “남조선혁명”을 말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그는 “평화통일”을 실 새 없이 선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승리할 때는 이 혁명정권과 북한의 ‘사회주의정권’이 단합하여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한다고 하는, 즉 폭력에 의한 통일의 공식을 내세우는 데서는 하등의 변화가 없었다. 대남 “평화통일” 선전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던 1973년 10월 11일

2174) 위의 책, p. 247.

2175) 앞의 『김일성저작선집』 8, p. 391.

그는 인민군 중대장 및 정치지도원 대회에서 조국통일에 관해 정직하게도 자기의 진의를 다음과 같이 표명했다.

인민군대의 모든 장병들은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완수하며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언제나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조국의 통일 문제는 결국 남조선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우리가 도와주어 남조선 인민들이 정권을 쥐어야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평화통일을 하자고 그저 구호나 불러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민군대가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언제나 만반의 전투준비를 갖추고 있으면 조국의 통일은 더욱 빨리 실현될 것입니다.²¹⁷⁶⁾

그러면 “남조선 혁명”이란 무엇인가. 김일성의 주장에 의하면 “남조선 혁명은 아직도 외래 제국주의의 예속 밑에 있는 우리나라 영토의 절반과 인구의 3분의 2를 해방하기 위한 혁명으로서 전(全)조선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다”²¹⁷⁷⁾는 정의를 내렸다. 이러한 전조선 혁명 즉 남조선 해방에 있어서 최대의 지장은 주한미군이다. 그는 주한미군의 철수 요구를 자기의 대외정책에서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그는 주한미군은 “미제의 침략군”, 남한은 “미제(美帝) 강점하의 식민지”, 역대의 한국정부는 “미제의 괴뢰정권”, 한국군은 “괴뢰군”이라는 편의적인 공식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자의적인 공식을 전제로 하여 그는 북한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기본 원칙은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 자신이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²¹⁷⁸⁾이라는 선전을 지난 40여 년 동안이나 반복해왔다. 그는 조국 통일 문제는 어디까지나 “조선민족의 내부문제이며 민족의 자결권에 속하는 문제”²¹⁷⁹⁾라는 입장에서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라고 비방하면서 남한의 중북주의자들에게는 통쾌하게 들리는 다음과 같은 정치공격을 퍼부었다.

……미군군대의 남조선 강점은 우리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가장 큰 장

2176) 『김일성저작선집』 6, pp. 522~523.

2177) 『김일성저작선집』 4, p. 229.

2178) 《근로자》, 1982년 5호, p. 15.

2179) 위와 같음.

어로 되고 있습니다.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 그대로 두고는 결코 조국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조국의 통일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라면 다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미군철거의 구호를 들고 나와야 합니다.……외세의존은 곧 망국의 길입니다.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결코 민족의 내부문제를 옳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남조선집권자들이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는 외세 의존정책은 다름 아닌 매국 배족행위입니다.²¹⁸⁰⁾

김일성에 있어서 '외세(外勢)'란 종래에는 대한민국의 동맹국인 미국을 가르키고 있었다. 그런데 한-일국교가 정상화되고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의 외교정책을 지지하게 되자 일본까지를 외세에 포함시키고, 일본에서는 이미 "군국주의(軍國主義)"가 재생했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자기의 외세배격론을 확대했다. 그렇지만 북한의 동맹국인 중-소는 외세가 아니라고 책략적이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내세운다.

우리는 소련, 중국과 동맹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소련이나 중국은 우리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소련군대도 없고 중국인민 지원군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며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외세는 바로 미제와 일본의 일부 반동입니다. 그러므로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려면 우리나라 내정에 간섭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야 할 것입니다.²¹⁸¹⁾

요컨대 그의 자주적 통일론에서는 북한은 그 동맹국인 중-소와 단절하고 군사-경제 원조를 받고 국제적 혁명 역량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국제적 연대성은 저지해야하며 국제적 지원으로부터 고립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당연한 전제로 되어있다. 「남북 공동성명」이 외세를 배제하고 자주적으로 통일한다고 썼을 때, 「외세」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했어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 이때 한국 측은 미국을, 북한 측은 중-소를 외세로는 보지 않고 아무 규정도 없이 지나친데서 김일성은 대남 비방의 구실을 찾았던 것이다.

2180) 위의 책, p. 16.

2181) 『김일성저작선집』 6, p. 287.

제3절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견지

조국통일이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김일성의 대(對)중-소정책을 고찰할 때, 이 이대(二大) 공산주의 동맹국들과 우호-협조-상호 원조관계를 강화하면서 단결한다는 것은 그의 대외관계에서 제1차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과제였다. 그리하여 앞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북한의 헌법에서도 당(黨)규약에서도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단결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었다. 한편 중-소도, 동(東)유럽 제국도, 베트남도 모두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표방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의 공개적인 중-소 분열 이후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란 실제로는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았다. 1974년 4월 등소평은 유엔 자원총회(資源總會)에서 한때의 “사회주의 진영”이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선언²¹⁸²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소멸을 공개적으로 확인했던 것이다.

김일성도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내심으로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다만 맑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의 수식적 명분으로써 이 말을 강조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국제공산주의의 분열은 김일성의 반미(反美) 통일전선 전략에다 결정적인 타격을 주어왔다. 이러한 현실을 그는 “국제공산주의 운동 안에 조성된 복잡한 정세”라는 추상적인 문구로 표현했다. 그렇지만 그는 중-소 양국의 공동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맑스-레닌주의 권(圈) 내의 “통일”과 “단결”이란 명분을 계속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객관적 사정은 결코 그가 원하는 대로는 되고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마치 중·소를 타이르듯이 다음과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해왔던 것이다.

오늘 사회주의 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은 의견상이로 하여 통일단결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혁명에서 마땅히 놀아야 할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사회주의 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은 단결을 첫 자리에 놓고 여기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하며, 의견상이를 뒤로 미루고 공통점을 찾아 단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 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은 절대로 형제당, 형제나라들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고 단결을 방해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며 오직 단결에 리롭고 통일에 도움이 되는

2182) 「登小平 中華人民共和國代表集團長の發言」(1974. 4. 10), 『北京週報』, 1974년 15호 참조.

일만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²¹⁸³⁾

김일성의 이상과 같은 원칙적이고 당위적(當爲的)인 발언(1980년 10월)은 절망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을 반영한 것에 불과했다. 당시 중-소의 *이데올로기* 분쟁은 일련의 국경충돌로까지 확대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979년 1월 미-중은 국교를 정상화하여 왕년의 적국에서 우호 협력국(協力國)으로 변전하고 있었다. 이 무렵 미-소는 군비경쟁과 정치투쟁에 의하여 야기된 긴장 속에 있었지만 막후에서는 군비축소 협상을 통한 *테팡쯔*의 추구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소련 편에 서있던 *베트남*이 중국의 비호하에 있던 *캄보디아*를 침공해 들어가(1979. 1) 그곳에다 괴뢰정권을 세웠다. 중국은 그런 *베트남*을 응징하기 위하여 무력공격을 단행했다(1979. 2). 또한 외몽고(外蒙古)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의 국경 위협과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점령(1979. 12)은 중-소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켰다.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이었다.

공산당국가들 상호간에 이와 같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정세 하에서 “형제당”(兄弟黨), “형제 나라”란 것은 공염불에 불과했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 공산당 내에 *유로코뮤니즘*(eurocommunism)이 대두하여 *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동서(東西)유럽의 모든 공산당에다 큰 파동을 몰아와 ‘소련공산당’과 대립하게 되었다. 이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자당(自黨)-자국(自國)의 이기주의를 변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그리하여 김일성이 명분상 강조하고 있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란 실제로는 환상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가 김일성이 바라는 대로 통일, 단결하여 미국과의 전쟁을 각오하면서까지 주한 미군의 축출을 위해서 실제적인 행동을 취할 까닭이 만무했고 그 후에는 더욱 그러했다. 중-소가 할 수 있는 것이란 북한에 대한 조심스러운 외교적 지지 발언뿐이었다.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강조하고 있던 김일성으로서는 세계 공산권의 분열이 결코 중대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그가 원용한 것이 1937년에 발표한 모택동의 『모순론(矛盾論)』이었다. 여기서 모택

2183) 앞의 『김일성저작선집』 8, p. 391.

동은 모순을 “적대적 모순”과 “비적대적 모순”으로 구별했다.²¹⁸⁴⁾ 적대적 모순이란 계급적인 적(敵) 간의 모순이며, 비적대적 모순은 인민 내부의 모순, 즉 “인민의 이익이 근본적으로 일치하는 기초위에서의 모순”²¹⁸⁵⁾이라는 것이었다. 자본주의 사회내의 “적대적 모순”은 “사회주의 혁명”에 의해서만 해결되지만, 사회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비적대적인 인민내부의 모순은 “명령주의적인 태도나 강제적 수단”이 아니라 “민주적 설득과 교육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심과는 달리 점잖게 설교했다.²¹⁸⁶⁾

김일성은 이런 편의주의적 이론을 국제관계에다 적용하여 오늘(당시)의 자본주의 제도와 사회주의 제도(미-중공)간의 대립을 “적대적 모순”으로 규정하는 한편, 사회주의국가 상호간의 대립(“意見相異”로 표현)을 “비(非)적대적 모순”으로 상정(想定)했다. 그는 *박슨의 베이징방문* 8개월 뒤인 1971년 10월 미-중관계의 장래를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미국과 대화를 한다고 하여 중국이 견지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원칙,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그들의 입장이 변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나라이며, 사회주의 제도와 자본주의 제도 사이에는 적대적 모순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 문제에서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지금 사회주의 나라들 사이에는 의견 상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나라들 사이의 이러한 의견 상이를 제도상 모순으로부터 생긴 국가들 사이의 적대적 대립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마스-레닌주의*의 원칙에서 볼 때…사회주의 나라들 사이의 의견 상이는 어디까지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함께 투쟁하는 형제들 사이에 있는 사상상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 나라들 사이의 의견 상이에서 그 무엇을 얻어 보려고 기웃거린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²¹⁸⁷⁾

이상 김일성의 발언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미 허구화된 *이때*을

2184) 『毛澤東選集』(中文版), 單一本, 1969, 北京, p. 308~309참조. 여기서 그는 ‘對抗性的(敵對的) 모순과 ‘非對抗性的(비적대적) 모순으로 나누어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 이론을 다듬어서 1957년 2월 ‘人民內部的 矛盾的 올바른 處理의 問題에 關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했던 것이다.

2185) 『毛澤東選集』 第五卷 (中文版), 1977년, 北京, p. 365.

2186) 위의 책, p. 373, p. 371.

2187) 앞의 『김일성저작선집』 6, pp. 107~110.

로가 매달려 자기의 헛된 희망을 피력한 것에 불과했다. 미국-중국-파키스탄-이란 등이 소련군 점령 하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내의 반(反)정부 회교 게릴라군에 대해 무기를 지원하는가 하면, 공산당국가들 상호간에 전쟁까지 일어났다. 이러한 상태는 자본주의 제도와 사회주의 제도간의 '적대적 모순'(敵對的 矛盾)이나 사회주의 국가 간의 비(非)적대적 대립(對立)이니 운운하는 모택동의 당략적 이론, 특히 '문화대혁명' 시기에 유행했던 그의 낡은 도식(圖式)으로는 절대로 정확하게 해명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김일성이 대(對)중-소관계에서 평등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자주성을 견지하는 한편, 이 두 동맹국과 가급적 우호의 뿔뿔스를 유지하면서 등거리 외교를 추구해 온 현실주의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중-소가 각각 자국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변잡한 이데올로기적 수식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극히 실리주의적인 대미(對美)정책을 추구했다. 그러자 김일성도 중-소 중, 군사-경제 원조를 보다 더 많이 획득할 수 있는 편으로, 그리고 보다 더 침예하게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쪽으로 기울어지곤 했다. 요컨대 군경(軍經)원조와 반미의 기준에서 볼때 어느 편이 더 북한에 유리한가가 김일성의 대(對)중-소관계에서 친소(親蘇)의 바로미터로 되어있었다.

1985년 3월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최고 권력자로 등장한 후 김일성이 중-소 화해를 추구하는 베이징파는 소원해지고 모스크바와는 밀착하게 된 상황에서 그의 그러한 대(對)소련 외교의 바로미터를 읽을 수가 있었다. 등소평(登小平)이 미국 및 서방 동맹국들에다 문호를 개방하고 군사협력까지를 서슴치 않으려던 때, 고르바초프는 적어도 그 초기에는 서방측과 경제-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한편 적극적인 평화공세에 의하여 미국과 확연히 대립하고 있었다. 그런 시점에서, 그리고 중국이 아니라 소련으로부터 군경(軍經)원조를 획득할 가능성이 더 많이 보이는 조건에서 김일성이 잠시 모스크바 측으로 경사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고르바초프는 자기의 권력이 공고화되면서 적극적인 대(對)서방 관계의 개선에 의하여 냉전을 해소하게 되자 모스크바-평양관계는 긴장하게 되었다.

제4절 초(超) 반미주의의 고수

극단적 반미주의(反美主義)의 고수는 북한의 대외정책에서 가장 강경하고 비타협적인 원칙으로 되어있다.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 미제”에 대한 비방과 공격은 그의 *이때올로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같이 그의 공산주의 통일전략과 직접 관련되어 있었다. “미(美)제국주의”에 대한 증상은 대전후 미-소간의 냉전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 특히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던 무렵부터 시작되었다. 그의 반미 구호는 스탈린의 반미정책을 뒤따라가면서 *모스크바*의 구호를 복창한 것이었다.

1946년 3월 1일에만 해도 그는 “소련을 비롯한 연합국 인민은 우리 조선 민족을 해방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 민주주의 국가의 건설을 완성시키려 하고 있다.”²¹⁸⁸⁾ 고 외교적인 찬사를 보냈다. 그리고 3월 23일에는 “일본의 압박으로부터 조선인민을 해방한 위대한 연합제국 만세!”²¹⁸⁹⁾까지 불렀다. 다시 그해 5월 1일 「*매이데이* 기념 연설」에서 그는 대전에서의 소련·미국·영국 등 연합국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직하게 인정했다.

이번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의 군대와 인민의 힘은 미국·영국 등의 연합국과 더불어 결정적인 역할을 놀았다. 즉, 이것은 서방에서는 *쫓겨* 독일을 섬멸하고, 동방에서는 일본제국주의를 격파하여 *짜시즘*의 암흑과 철쇄로부터 인류의 민주주의적 자유를 해방하고 이것을 재건했다.²¹⁹⁰⁾

김일성은 이 연설에서 “조선의 해방이 소련을 선두로 하는 민주주의 진영의 승리에 의하여 이룩되었다”는 것도 시인했다. 그런데 소련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이속고 스탈린의 위성국화 정책이 급속히 강행되어가자 동-서진영 간에는 냉전이 벌어지게 되었고, 한반도에서는 ‘신탁통치’ 문제를 둘러싸고 민족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대립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김일성의 서방측에 대한 비방은 노골화되어 간다. 그

2188) 『金日成選集』, 第一卷, 위의 日譯版, p. 9. 이러한 발언 끝에는 물론 ‘세계인민의 위대한 지도자이며 은인인 스탈린만세!’란 예찬 구호가 붙었다.

2189) 위의 책, p. 15.

2190) 위의 책, p. 28.

는 처칠이 1946년 5월 6일 미국 폴튼(Fulton)시에서 행한 연설에서 소련의 “철의 장막”(동독의 봉쇄)정책을 비난한데 대해 다음과 같이 반격을 가했다.

최근 영국의 전 수상 처칠은 그의 연설에서 이들 파시스트 잔존세력을 조직하여 소련을 비방하고, 민주주의 연합국간의 분열을 책동하면서 제3차 대전 도발의 음모적 선전을 행하고 있다.

…… 이러한 국제 파시스트 잔당들과 호응하여 조선의 반동분자들도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과 더불어 반민주적·반인민적 음모를 꾸미며 민주조선의 건설을 방해하고 있다.

……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은 반동적인 동맹을 날조했다. 외래금융자본을 배경으로 한 민족 파시스트, 반동분자는 반민주적인 국제음모에 호응하여 모스크바 3국외상회의를 반대하며, 반소·반공의 음모, 테러, 방화 등의 모든 추악한 수단에 의하여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민주조선의 건설을 하루라도 늦추려고 발악하고 있다.²¹⁹¹⁾ (밑줄은 저자)

이러한 김일성의 선동적 비방 선전내용의 진부(眞否)여하는 논평할 만한 가치가 없다. 다만 주목할 만한 것은 자기(즉 스탈린)의 한반도 공산화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 모두에 대해서는 “반동분자”, “친일파”, “민족 파시스트”, “민족 반역자”라는 특유한 용어를 만들어내어 낙인을 찍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8·15 광복 2주년 기념대회’ 석상에서는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 가능성을 고려하여서인지 “우리 민족이 오랜 동안의 일본제국주의의 지배에서 해방된 이 역사적인 날을 맞이하여……소련, 미국, 영국의 연합국 인민에게 해방의 감사를 드린다.”²¹⁹²⁾는 말을 형식상 첨부했다. 이때까지 김일성은 “미(美)제국주의”라는 용어의 사용을 회피하고 단지 “미국의 반동파”라는 표현으로 미국을 비난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미-소간의 국제적 냉전이 격화되고 ‘미-소공동위원회’가 완전히 결렬되자 김일성은 “미(美)제국주의”의 대외정책을 맹렬히 공격하기 시작했다. 일본을 격파하고 조선을 해방한 “민주주의 연합국”에서 이 무렵부터 미-영의 이름은 삭제되었다. 1948년 3월 29일 그는 ‘북조선 노동당 제2차 대회’에서 한 「보고」에서 “서구라파를 파시즘의 유린으로부터 해방한 것과 같이 동방에서도 역시 위대한 소비에트 군대의 결

2191) 앞의 책, p. 39.

2192) 앞의 책, p. 233.

정적 승리만이 일본제국주의를 격멸하고, 조선 인민을 해방할 수 있었다.”²¹⁹³⁾(밑줄은 저자)고 자기의 종래의 주장을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스탈린의 세계 위성국체제를 ‘국제 민주진영’²¹⁹⁴⁾이라고 규정했다. 당시의 그의 발언은 스탈린의 반미 선전문의 복사판에 불과했다.

북한의 대외정책은 “미(美)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강렬한 *에토*스로 충만되어 있으며 그의 반미 발언의 분량은 상당한 양에 이르고 있다. 1982년에 발행된 그의 『노작 용어사전』(1982)은 “미(美)제국주의”를 가장 악독한 것으로써 다음과 같이 요약 설명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는 현대의 가장 흉악하고 파렴치한 침략자, 약탈자이고 현재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이며 세계의 모든 진보적 인민들의 첫째가는 공동의 원수를 말한다. 미 제국주의는 국가독점 자본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현대제국주의로서 그의 “세계제패” 야망은 끝이 없다. 미제국주의는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국제헌병이며 현대식민주의의 아성이다.²¹⁹⁵⁾

제5절 동요하는 중 - 소의 대미정책 이용

그러한 “미제”(美帝)의 군대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식민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일성은 대내적으로는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내세우고, 대외 활동에서는 반제역랑과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한 혁명전략으로서 삼았다. 그런데 김일성의 ‘반미 민족해방투쟁’은 입과 붓으로만 하는 선전전은 아니었다. 북한은 휴전 후 전쟁의 상처로부터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가자 간헐적으로 대미(對美) 무장도발을 자행하여 휴전선상에서 긴장을 조성했다. 1962년 12월 로동당(黨)중앙위원회가 정식으로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면서 그는 “전국의 요새화”를 다그쳤다. 이에 따라 만주 빨치산부대 출신의 강경파 군인들이 대거 당-군의 요직으로 부상했다.

2193) 『金日成選集』, 補卷, 앞의 日譯版, p. 19.

2194) 위의 책, p. 10

2195) 앞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용어사전』, p. 229.

호루시초프가 실각한 후 브레즈네프-코쉬긴-뽀드고르니의 3두 마차가 이끄는 소련정부는 1965년부터 호루시초프가 중단했던 대북(對北) 군경(軍經)원조를 재개하여 김일성의 군사력을 강화시켜주었다. 그 후 1968년 1월에는 북한 무장 특공대가 청와대에 대한 기습 공격을 시도하는가 하면, 미국 첩보함 프애블로호(號)가 북한 경비정에 나포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어 미국 전투기 EC-121이 동해상에서 북한 인민군에 의하여 격추되었다. 이런 군사도발은 자기들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미국의 대남한 방위의 의지와 한-미 양국군의 방위력을 시험하자는 것이었다. 1965년부터 미국과 한국은 뽀트남전선에 파병했고 그 병력은 점점 증가하여 휴전선 방어는 위급을 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북한은 이러한 도발로써 북(北)뽀트남을 간접 지원하여 반미투쟁에서 자기들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얼마나 충실한가를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에게 시범코자 했다. 그리고 북(北)뽀트남에 대한 중-소의 원조를 증대시키고 공산주의 전투력을 강화시켜 한-미 양국군에 타격을 가할 것을 기도했었다. 동시에 김일성은 한반도에서 전쟁전야를 방불케 하도록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필요성도 고려했을 것이다. 한반도에는 바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성이 절박해질 때는 사태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다. 주변 대국들은 세계대전을 파하기 위해서 주한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여론을 고의로 미국과 서방제국에 환기시키려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일성이 바라는 것은 중-소가 단결하여 강경하게 미국과 대결하면서 자기의 반미투쟁을 적극 지지해주는 일이었다.

그러나 국제정치의 기상도는 반드시 그가 바라는 대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었다. 미-소는 치열한 냉전 속에서도 핵(核)전쟁에 의한 공동멸망의 운명을 파하기 위하여 끈질기게 군축(軍縮)협상을 벌여 1970년 3월에는 핵확산금지조약(核擴散禁止條約,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The NPT))에 서명했다. 1973년 5월 닉슨의 모스크바 방문 때에는 두 나라 간에 '제1차 전략핵무기제한협정'(戰略武器制限協定 SALT I)을 타결 지었다. 그 결과로써 현안의 ABM조약(미사일 요격 미사일 제한조약)을 이때에 성사시켰고 1975년 6월에는 미-소양국은 핵전쟁이 일어날 상황을 조성하지 않는다는 소위 '핵전쟁방지협정'에 조인했다. 이런 조약-협정들은 대국적으로 보아 미-소간의 냉전이 완화되고 있다는 징조였다.

이렇게 북한의 두 동맹국인 중-소간에는 거꾸로 냉전이 격화되어 두 나라 국경 지대에서 위태로운 군사적 충돌까지 일어나자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사실상 파산하고 말았다. 이 같은 상황변화 속에서 한국전쟁 때에 미국의 교전국이었던 공산주의 중국은 드디어 그 대외정책의 좌표를 근거로부터 수정하여 미국과의 화해를 모색하게 되었다. 1971년 7월 *키신저*의 극적인 북경 비밀방문과 주은래의 *넉슨* 대통령 초청이 공표되자 김일성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에 틀림없다.

‘반미전선’의 기수요 북한과는 서로 “피로 맺어진 혁명적 전우”라던 ‘중국공산당’이 미국의 ‘초(超) 제국주의자’들과 타협을 결단한 것은 북한으로서는 실로 중대한 사태였다. 이에 대한 김일성의 논평은 표면상으로는 *넉슨*이 “백기를 들고” 북경을 찾아오게 된 것은 “승리자의 행진이 아니라 패배자의 행각이며, 미(美)제국주의의 서산낙일(西山落日)의 운명을 반영한 것”²¹⁹⁶⁾이라고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그는 내심으로는 경악과 좌절감 속에서 불안하고 초조해졌다. 그럴수록 “제국주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²¹⁹⁷⁾느니, “제국주의자들은 양면전술에 매달린다”²¹⁹⁸⁾느니 하면서 이미 허상화 된 “혁명적 전우”에 대해 더 요란하게 경종을 울렸다.

력사적 경험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질은 비록 그것이 약화되어도 결코 변하지 않으며 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옛 지위에서 스스로 물러나려 하지 않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궁지에 빠질수록 한 손에는 감남나무 가지를, 한 손에는 총칼을 쥐고 휘두르는 ‘양면전술’에 집요하게 매달리며 ‘평화’의 간판 밑에 침략과 전쟁 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강행하는 법입니다.²¹⁹⁹⁾

이러한 김일성식의 반미 사상은 그가 사망할 때까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망 후는 고스란히 김정일에게 계승되었다. 또한 그는 “미제”를 반대하기 위한 ‘국제적 혁명’ 역량의 강화를 제3세계 나라들에게 열렬히 제창해 왔다. 그러나 그중 거의 모든 나라들은 미국을 위시한 서방 제국과 국교를 맺고 경제-문화교류를 발전시켰다. 한편 이 나라들이 독립 초기에 품고 있던 반미적, 반서구적 감정은 시일의 경과에 따라 현저하게 약화되어 친선-협력의 관계는 깊어지고 있었다. 이런 세계정세의 변

2196) 《로동신문》, 1971년 8월 6일.

2197) 위와 같음.

화 역시 김일성에게는 큰 실망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제국주의에 대해 환상을 갖지 말라고 잇따라 호소로써 이 나라들과 미국 및 서방 제국과의 이간-대립을 정력적으로 획책하고 있었다. 그의 말은 아래와 같았다.

제국주의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제도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 한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은 변할 수도 없고 약화될 수도 없습니다. 제국주의에 있어서 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침략적 본성이 아니라 침략적 수법입니다. 세계 혁명적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변장술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하며, 침략수법의 변화를 제국주의 본성의 변화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²¹⁹⁸⁾

이러한 그의 제국주의 본질론은 다분히 전술적인 주장이었다. 그는 중국과 소련, 비(非)동맹 제국, 그 밖의 제3세계 나라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서방 제국, 특히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고 있는 현실이 자기의 공산주의 통일정책을 파탄시키지 않을까 몹시 우려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 나라들이 “제국주의와 무원칙하게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²¹⁹⁹⁾느니 제국주의자들에게 “혁명의 기본리익을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²¹⁹⁹⁾느니, 또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나라의 리익을 희생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²¹⁹⁹⁾느니 하는 것을 훈시조로 강조했다. 이 같은 김일성의 주장의 심층에는 그 자신의 이익에 반(反)하는 이 나라들의 대(對)서방 정책은 곧 “혁명의 기본리익을 팔아먹는” 행동이라는 극도의 의구심과 불안심리가 깔려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2198) 앞의 『김일성저작선집』 8, p. 387.

2199) 같은 책, pp. 387~388.

NOTES AND REFERENCES

이와 같이 한-일 국교가 정상화될 무렵부터 일본에는 어느새 군국주의가 재생되고 있는 것으로 묘사했다. 독립국이 국방력을 가지는 것은 자명한 상식이며 어떤 나라가 국방력을 가진다는 것과 그 나라가 군국주의화한다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런데 김일성은 자기에 앞서 ‘중국공산당’이 먼저 만들어낸 당시의 대일(對日) 비방용어를 뒤따라가며 외쳤고, 그 후에도 외치고 있었다. 그의 일본 군국주의 공격은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한-일관계를 단절시켜 한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자는 전략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는 1971년 9월~10월 일본 기자들과 가진 「담화」에서 일본군국주의는 “이미 재생되었다”고 단정하고 그 논거로서 “*미쯔야* 작전”(三矢作戰), “*플라잉 드래곤*작전(Flying Dragon)” 등 일본 방위청의 몇 가지 작전계획 시안을 지적 공격했다.²²⁰²⁾

김일성은 이 「담화」에서 그러한 작전계획에 따라 일본군은 “미제 침략군” 및 “남조선 괴뢰군”과 더불어 동해에서 합동 군사연습을 계속 벌여왔다는니, 대북(對北) 침략목적에서 휴전선까지 고속도로를 닦아놓았다는니, 일본무력을 한국에 투입하기 위하여 이것을 관부(關釜) 연락선과 연결시키고 있다는니 하는 등²²⁰³⁾ 허위선전을 벌였다. 그에 의하면 그런 군사연습은 방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조선, 중국, 그리고 소련을 작전지역으로 가상하고 진행한 침략적 군사연습”²²⁰⁴⁾이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일본 군국주의가 재생되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인 만큼 이제는 어떻게 하면 그 침략야망을 꺾어버리고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수호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절박하게 나서고 있다”면서 이것을 반대하는 일본 인민과 *아시아* 인민들의 투쟁을 촉구했다.²²⁰⁵⁾

요컨대 그에 의하면 일본은 한국과 국교도 맺지 말고, 무장도 하지 말고, 작전 계획도 세우지 말아야 하며, 군사연습을 실시해도 안 된다는 것이다. 김일성의 그런 요구에 반하여 일본이 주변의 한국, 중국, *러시아* 등과 외교관계, 경제교류, 군사훈련 등에서 협력한다면 그것은 곧 “군국주의의 재생”이 된다는 논리였다. 일본 재무장에

2201) 『김일성저작선집』 6, 앞의 판, p. 324.

2202) 같은 책, p. 102.

2203) 같은 책, pp. 102~103.

2204) 같은 책, p. 102.

2205) 위의 책, p. 103 참조.

대한 김일성의 우려는 과거 일제의 한반도 침략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볼 때 이해할 수 있는 일같이 보인다. 한국에서는 물론 중국과 소련에서도 동남아 제국에서도 그런 우려는 있었다. 그런 우려는 일본의 경제발전에 병행하여 더욱 민감해졌다. 그런데 김일성은 오히려 과거의 일본 침략사를 구실로 하여 일본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한편, 일본의 “진보”세력에 호소하여 한-일 양국을 이간시키면서 자기들은 일본과의 인사 문화교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전술을 택해왔다.

1972년 9월 17일 김일성은 한-일간의 이간(離間)을 노리면서 일본 기자들을 향하여 “일본군국주의 재생”의 위험성과 대한(對韓) “침략”의 현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즉, ① “일본 반동들이 아직 해외에 파병은 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다른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침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② 지금 그들은 “나라의 군국화를 적극 다그치면서 ‘원조자’의 탈을 쓰고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는 길에 서슴없이 나서고 있다. 그들은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처한 경제적 난관을 리용하여……여러 가지 명목으로 자본 수출을 강화하여 이 나라들의 경제 명맥을 틀어쥐려하고 있으며, “경제원조”에 큰 정치적 부대조건을 붙여 일부 신생 독립국가들을 우경화시키고 반제 전선에서 떼어내려고 책동하고 있다.”²²⁰⁶⁾고

이상에서 김일성이 진정으로 우려한 것은 아시아 신생독립국들의 “우경화”와 “반제(反帝) 전선에서의 이탈”임을 볼 수 있다. 즉, 반미적 세계혁명 세력의 분열이 관심사로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하여 그는 한-일관계에 대해 “특히 일본 반동지배층은 범죄적인 「한-일협정」의 조작을 계기로 하여 남조선에 대한 경제 침투를 본격화하였으며 경제적 침투에 정치, 군사적 침투를 따라 세우면서 남조선을 또다시 자기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려고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일본 독점자본은 일본군국주의를 위하여 해외침략의 길을 닦고 있습니다.”²²⁰⁷⁾라고 공격했다.

김일성은 말을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그런 “일본 독점자본”을 일본 수출입은행을 통하여 끌어들이는데 갖은 노력을 다해 왔으며, 일본 반동 지배층에 속하는 ‘자민당’ 국회의원들까지 초청하여 환대하기에 바빴다. 요컨대 그에 있어서는 “일본 군국

2206) 앞의 책, p. 294.

2207) 앞의 책, p. 294~295.

주의재생”론은 대한민국을 외교적으로 지원하거나 그 안보를 강조하거나, 한국과의 경제교류-문화교류를 추진하는 일본의 정치인·경제인·문화인 등을 규탄하는 이데올로기적 도구라는 것이 그 본질이었다.

제2절 ‘북방 3각 관계’의 불협화(不協和) 활용

“일본 군국주의의 재생”(중국에서는 “부활”)론은 1950년 2월 14일 미국을 가상적으로 하여 「중·소 우호동맹 상호원조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중-소에 의해 제기되었던 문제다.²²⁰⁸⁾ 이 조약체결 이래로 모택동은 일관하여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의 재무장을 반대해왔다. 그리고 한국전쟁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미국의 교전 일방이 되자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한 ‘대일(對日) 평화조약(미-일안보조약 포함)’의 “불법 무효”를 선언했다.²²⁰⁹⁾ 다시 1960년 1월 「미-일 안보조약」이 개정되자 베이징은 이것을 “일본 군국주의가 이미 부활한 징조”²²¹⁰⁾라고 하여 이에 대해 대대적인 반대 캠페인을 벌였다.²²¹¹⁾ 1965년 10월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될 무렵에도,²²¹²⁾ 1969년 11월 미-일(닉슨·佐藤) 공동성명이 나왔을 때도,²²¹³⁾ 1970년 4

2208) 이 「조약」 앞부분은 “일본제국주의의 부활,……어떠한 형식에서든 일본과 결탁하는 타국의 새로운 침략을 공동으로 방지할 결심”을 다짐하였다. 日本國際問題研究所發行, 『新中國資料集成』 第三卷, 資料22, p. 54.

2209) 「サンフランシスコ 對日平和條約調印に關する 周恩來外交部長の聲明」. 이 「성명」에는 “미(美)제국주의를 위하여 복무하는 일본의 지배계급 내부의 반동적 집단이 군국주의의 부활을 망상하여……” 운운의 문구가 들어있다. 같은 책.

2210) 「日・米軍事同盟條約 締結に關する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聲明」. 日本國際問題研究所 現代中國研究部會編, 『國』大躍進政策の展開資料と解説, 下卷, 資料116, pp. 222~223.

2211) 1960년 1월 15일자 《人民日報》社説, 「日-美 군사동맹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同月 24일자 同紙 사설 “일·미반동파의 새로운 전쟁과 침략의 음모를 분쇄하라” 등등.

2212) 한-일조약을 반대하는 1965년 11월 16일자 「中華人民共和國聲明」과 1965년 11월 18일자 「中國人民諸團體의共同聲明」은 다같이 “일본군국주의의 부활”을 규탄했다. 이 두 성명은 中國問題研究所編, 『新中國年鑑』, 東京, 1966년판, pp. 411~413.

2213)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은 1870년 4월 주은래가 평양을 방문하여 9일에 발표한 「中・朝정부공동성명」에서 미-일 공동성명을 염두에 두고 일본 군국주의를 맹렬히 규탄한 부분이다. 여기서는 “美 제국주의의 적극적 비호 하에서 일본 군국주의가 이미 부활하여 아시아의 위험한 침략세력이 되고 있다”고 단정하고, 그 침략 음모를 규탄했다.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에 대해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되며, 어떤 기

월 ‘일-중 비망록(각서)무역회담’ 때에도²²¹⁴⁾, 그리고 1971년 7월 3일 일본공명당(公明黨) 방중 대표단과의 공동성명²²¹⁵⁾에서도 중국은 연속적으로 “일본군국주의 부활”을 규탄했다.

당시 미국은 대만에다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미-일은 모두 ‘중화민국’과의 국교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위에 일본의 사토 수상(1965~1972년 재임)은 단호한 반공정책을 고수하고 있었다. 이때 *췌이징*은 대(對)소관계의 악화로 인하여 군사적 지원을 *모스크바*로부터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정세에 처하여 모택동(毛澤東)은 일본의 재무상과 미-일 군사동맹을 자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느꼈다. 김일성이 *췌이징* 측에 가세하여 “일본 군국주의 재생”을 적극 비방하고 나선 것은 한-일회담의 타결이 모색되고 있던 1960년대 초반부터였다. *췌이징*과 평양은 초(超) 반미주의와 일본 재무장에 대한 위협성의 인식에 있어서 표면상으로는 완전히 일치하였다. 그리고 일본 재무장을 맹렬히 반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민외교”를 위해 일본에 진출하려는 전술에 있어서도 양자는 마찬가지로였다.

일-중국교가 정상화된 1972년 9월 이후 중국은 ‘일본 군국주의 부활론’을 10년동안이나 말하지 않았다. *췌이징*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982년 6월 일본 문부성(文部省) 검정교과서가 일제의 침략사를 왜곡한 것을 발단으로 하여 중국 측은 일본 군국주의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그해 8월

대를 걸어서도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中-朝 쌍방은 “당면한 일본 군국주의와의 반대투쟁은 반미투쟁의 일부이며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수호하는 투쟁이기도 하다”고 주장하고, 반미투쟁과 동시에 “일본 군국주의 반대의 공동투쟁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결의를 표명한다”고 하면서 전투적 결속을 다짐했던 것이다. 『北京周報』, 1970년 15호.

2214) 이 회담의 ‘공동성명’에서 中-日대표 쌍방은 미-일공동성명을 거세게 비난했다. 특히 중국 측은 미-일 반동파(尼克森과 佐藤)가 군사 결탁을 일층 강화하는 목적 중 일부는 “남조선을 영구히 점거하고, 조선의 재통일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을 침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중국 측은 “美제국주의 육성하에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은 이미 *아시아* 인민과 세계 인민 앞에 놓인 엄중한 현실이 되어있다”고 공격했고, 회담 일본 대표 측은 이에 동의했다. 이러한 내용은 평양이 무한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었다. 『北京周報』 1970년 17호. 1971년 3월 1일 「中·日 覺書무역대표회담 公報」에서 중국 측은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비방하고 나서 “일본 반동파가 蔣介石, 朴正熙과 퇴진단과 결탁을 강화하여 동북아시아 新軍事同盟을 만들어” 침략의 예봉을 중공과 북조선에 돌리고 있다고 격렬하게 비난했다. 『北京周報』, 1971년 10호.

2215) 이 ‘성명’에서 중공측은 북한에 대한 ‘미제’의 군사도발을 강하게 비난하고 “미제의 침략과 미-일 반동파에 의한 일본군국주의 부활에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투쟁을 단호히 지지한다”고 그 결의를 표명했다. 일본 측은 이에 공감했다. 『北京周報』, 1971년 26호 참조.

《홍기》(紅旗) 제16기호에서는 「일본 군국주의재생의 위협을 경계하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일본이 자위를 위하여 방위력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소극적으로나마 인정했다. 1984년 봄 중국 외교부장 오학겸(吳學謙)은 뜻밖에도 『리더스 다이제스트』(Leader's Digest)지와 『아시아 위크』(Asia Week)지에서 일본의 방위 정책을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실로 놀라운 변신(變身)이었다.

일본이 독립국으로써 외국의 침략에 대처하기 위하여 방위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국의 국방비를 증가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²²¹⁶⁾

이와 같은 오학겸의 발언은 김일성의 대일(對日)정책과는 대립되는 것이었다. 여기서 김일성의 눈은 모스크바로 향했다. 그는 1984년 3월 31일 소련 「프레스 통신사」사장 일행과의 회견²²¹⁷⁾에서 “지금 일부 제3세계 나라들(중국을 암시)이 일본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고 무엇을 좀 얻어 볼까하여 일본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중국을 간접적으로 비꼬았다. 그리고는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완전히 재생되기 전에 그 위험성에 대하여 세계 인민들에게 잘 알려주어야 한다”고 하고, 『프레스 통신』대표들에게 “미국-일본-남조선 간의 3각 군사동맹의 조작책동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주기 바란다”고 소련과의 공동투쟁의 필요성을 암시했다. 이와 함께 김일성은 “세계평화”를 위한 소련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하여 북한은 ‘일본군국주의 재생’ 문제에서는 급속히 소련과 제휴하게 되었던 것이다.

김일성의 이 회견내용은 그의 방(訪)소(1984. 5. 17)를 앞둔 4월 10일에 발표되었다. 김일성을 위해 배운 5월 24일의 연회석상에서 체르넨코수상은 “일본군국주의” 및 “워싱턴-동경-서울의 3각 군사동맹의 조작책동”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²²¹⁸⁾ 소련이 일본 재무장과 미-일 군사동맹을 반대해 온 것은 멀리는 1950년대부터의 일이었다. 그런데 이날의 체르넨코 발언은, 반일(反日) 공동전선에서 중국이 이탈하여 고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김일성에게는 큰 격려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김(金)은 답례 연설에서 뜻밖에도 “일본군국주의 재생”을 비난하지 않았다.²²¹⁹⁾ 왜냐하면 그가 그

2216) FBIS(Asis/Pacific), April 28, 1984.

2217) 1984년 4월 10일자, 《조선중앙통신》.

2218) 歡迎宴會에서 한 金日成 演說 要旨. 《朝鮮中央放送》, 1984년 5월 24일.

러한 비난을 했더라면 소련 지도자들 앞에서 중국을 공공연히 공격하는 일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여하튼 김일성의 모스크바 방문으로 소련과 북한은 다시 밀월(蜜月)의 시대에 들어섰던 것이다.

체르넨코가 사망(1985. 3. 11)하고 그르바초프가 소련의 최고 권력자로 등장하면서 북한-소련의 밀착은 급진전되었다. 1985년 4월 24일 김영남(金永南)과 그로미코 사이에 발표된 「조(朝)-소공동성명」은 “미국의 침략과 전쟁책동”, “일본의 재 군국화”, 그리고 한-미-일 간의 나토형(型) “새 군사동맹” 체결의 책동을 다시 규탄했다.²²²⁰⁾ 이에 앞서 4월 1일 당(黨)비서 황장엽(黃長燁)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평양을 방문한 ‘소련공산당’ 정치활동가 대표단 앞에서 소련을 “우리의 해방자, 원조자, 동맹자”²²²¹⁾라고 찬양했던 것이다.

30여년 동안이나 “주체의 나라”에서 금기로 되어온 이 대(對)소 찬사의 문구가 정무원 총리, 국가부주석, 당(黨)비서 등에 의하여 강조되다가 드디어는 김일성의 입에서까지 튀어나왔다.²²²²⁾ 1985년 8월 15일 평양에서는 소련군의 조선 해방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해방탑”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알리에프(Geydar A. Aliyev) 소련 부수상은 8·15해방 경축대회에서 “워싱턴-동경-서울 사이의 군국주의적 동맹조작 계획”과 “일본의 재(再) 군국화”를 또다시 비난했다.²²²³⁾ 이러한 김일성의 “일본 군국주의 재생” 반대는 소련의 대북 군사·경제원조와 더불어 잠시 모스크바와 평양의 유착을 가져온 중요한 정치적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제3절 비(非) 동맹운동에 대한 지지 성원

대외관계에 있어서 자주노선을 선언한 후 북한이 정력을 집중해온 지역은 비동맹

2219) 환영연회에서 한 체르넨코의 연설요지, 《朝鮮中央放送》, 1984년 5월 24일.

2220) 《로동신문》, 1985년 4월 25일자 「朝-蘇공표니게」 참조.

2221) 《로동신문》, 1985년 4월 1일.

2222) 1985년 8월 14일 金日成이 그르바초프에게 보낸 「對日 전승축전」, 《로동신문》, 1985년 8월 15일.

2223) 「조국해방 40돐 중앙경축보고대회에서 한 게·아·알리에브 동지의 연설」, 《로동신문》, 1985년 8월 15일.

제국(김일성이 “불력불가담 나라들”이라고 부른 나라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제3세계였다. 김일성은 “불력 불(不)가담 나라들”, “제3세계 나라들”, “신흥세력 나라들”을 대개의 경우 동의어로 번갈아 사용해왔다. 그는 표면상으로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기초하여 “형제적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소는 반드시 그가 바라는 대로 미국과의 전쟁을 각오하면서까지 그의 “혁명적” 반미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려 하지는 않았다. 또한 중-소는 그가 국가이데올로기로 정식화한 ‘주체사상’을 인정한 일이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리하여 김일성은 서방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로 있다가 국가적 독립을 이룩한, 그리고 당연히 반서구적-반미적 감정이 팽배했던 *아시아, 아프리카*의 신생국들과 *라틴 아메리카* 제국(諸國)에다 외교역량을 경주하게 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1970년대에 걸쳐 혁명적 격변이 잇따라 발생했다.²²²⁴⁾ 또한 이 지역은 반미 정서에서 뿐만 아니라, 북한이 1960년대 이래로 추구해온 실리외교의 중요한 고장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제3세계’는 김일성이 반미투쟁, “반제(反帝) 민족해방 투쟁”이라는 면에서 최대의 역점을 두어 온 지역이 되었다. 이 지역의 여러 나라들은 과거 서방제국의 식민지였다는 역사 때문에 김일성이 호소하는 “자주독립”과 “사회혁명”의 이념에 공감

2224) 당시의 ‘제3세계’의 혁명적 격변 지역(1974~1980)

국명	사건	년도
에티오피아	하일리에 셀라시에 왕정 전복	1974. 9.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프놈펜 점령	1975. 4.
베트남	북베트남 / 베트남 사이공 점령	1975. 4.
라오스	파테트 라오 전국 장악	1975. 5.
기니아-비사우	포르투갈에서 독립	1974. 9.
모잠비크	포르투갈에서 독립	1975. 7.
케이프 버드(Cape Verde)	포르투갈에서 독립	1975. 7.
싸오 톰(Sao Tome)	포르투갈에서 독립	1975. 7.
앙골라	포르투갈에서 독립	1975. 11.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 쿠데타	1978. 11.
이란	아야톨라 호메이니 이슬람 혁명으로 실권장악	1979. 2.
그레나다		1979. 3.
니카라과	반디니스타파(派) 마나구와 장악	1979. 7.
짐바웨	영국으로부터 독립	1980. 4.

* Source : Halliday F, *The Making of the Second Cold War*, Verso, 1986, p. 92.

John Baylis, Steve Smith, *The Globalization of the World Politics*, Uxford University, Press, 2001. p. 53에서 인용.

할 수 있는 심리적, 정치적 소지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곳이기도 했다.

김일성의 제3세계에 대한 외교는 이 세력들을 “위대한 반제(反帝)혁명역량”으로 지지 선언하여 국제 혁명역량의 연대성을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이 나라들과 제휴함으로써 중-소에 대한 외교적 의존도를 감소 시키자는데 그 주안점이 있었다. 한편 비동맹국들의 수효는 UN 회원국의 과반수를 훨씬 능가하고 있는데다가, 제 3세계의 인구는 전세계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숫자는 이 지역일대가 인류의 장래 발전을 위한 희망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놀라운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아마도 김일성의 인식이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벌써 1967년 12월 16일에 발표한 전투적인 「공화국정부정강」에서 “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자유와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나라 인민들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그들의 해방투쟁을 적극 지지할 것”²²²⁵⁾을 선언하고 나섰던 것이다.

1976년 3월 김일성은 “우리나라의 외교방침에서 중요한 것은 제3세계 나라들, 블록 불(不)가담 나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²²²⁶⁾이라고 언명한 바 있다. 1975년 8월 *리마*에서 열린 비동맹국 외상회의에서 북한은 비동맹운동의 정식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제 그는 기업을 토하면서 반미(反美)-반한(反韓)운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토대를 획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소의 엄연한 군사동맹국인 북한은 엄밀히 고찰할 때 비동맹 운동의 회원국이 될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회원국으로 수락된 것은 비동맹국 외상회의의 무질서상태, 난맥상을 노정한 것이었다. 김일성은 현시대를 “자주성의 시대이며 반제(反帝) 혁명투쟁의 시대”²²²⁷⁾라고 규정하고 그 “자주-반제”의 방향을 반미운동으로 전회시키는데 안간힘을 기울려왔다.

김일성은 이때부터 비동맹운동의 성격을 “반제(反帝) 자주의 숭고한 이념을 구현하고 있는 진보적 운동”²²²⁸⁾이라고 규정하고, “자주성을 견지하는 것은 블록 불(不)가담 운동의 기본원칙”²²²⁹⁾이라고 더욱 소리 높여 주장하였다. 그리고 바로 이 운동

2225) 앞의 『김일성저작선집』 4, p. 584-585.

2226) 앞의 『김일성저작선집』 7, p. 257.

2227) 같은 책, p. 237.

2228) 앞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p. 8.

이야말로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진보적 운동이며 제국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위력한 혁명역량”²²³⁰⁾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은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불록 불(不)가담 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야 한다”²²³¹⁾는 당위적인 명제를 내세웠다. 그는 “진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고 있었는데 “진보의 표징은 자주성에 있으며, 자주성을 견지하는 나라가 바로 진보적인 나라”²²³²⁾라고 자주를 진보의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김일성은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²²³³⁾이라고 그럴싸한 말은 하고 있었지만 이때의 “자주성”은 반드시 반미적인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의 핵심이었다. 그는 제3세계 나라들이 반제(反帝)－반식민지(反植民地)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론적 근거로써 “제3세계 나라들과 제국주의 나라들 사이에는 의연히 심각한 모순이 있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제국주의 나라들은 지난날 오랫동안 제3세계 나라들을 억압하고 약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들이 민족적 독립을 이룩한 다음에도 신식민지주의적 방법으로 침략하고 약탈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제3세계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약탈이 계속되고 있는 조건에서 이 나라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²²³⁴⁾

과거에 관한 한 그의 위의 말은 대체로 사실과 일치한다. 그러나 시대는 바뀌었다. 제3세계의 현실에 대한 그의 분석은 반드시 사실을 논한 것이 아니다. 그에 의하면 미국과 그 서방동맹국들의 제3세계 정책은 모두가 “침략”이요 “약탈”이며, “신식민주의”로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 못지않게 자주성을 추구하는 그 많은 비동맹국들이 무엇 때문에 서방 제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고, 기술자를 영입하고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있는 것일까. 그가 현(現)시대에 있어서의 국제적 상호 의존관계의 중요

2229) 같은 책, p. 64.

2230) 앞의 『김일성저작선집』 8, p. 388.

2231) 《근로자》, 1982년 5호, p. 17.

2232) 《근로자》, 1978년 9호, p. 17.

2233) 앞의 『김일성저작선집』 7, p. 239.

2234) 같은 책, p. 231.

성을 고의로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제3세계 이론의 근본적인 책략성이 숨어 있다. 이러한 책략성은 제3세계 제국과 빈미 통일전선을 형성하면서, 그 국제적 압력을 또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주한 미군을 철수시킨다는 점에 그의 제3세계전략의 목표가 설정되었던 것이다.

김일성은 비동맹 제국이 반제(反帝) - 자주(自主)의 원칙에서 서로 협력하고 연대성과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무수히 강조해 왔다. 그리고 신흥세력 제국은 “사회제도와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공동의 적을 반대하기 위해 단결을 최우위에 놓고 “모든 것을 여기에 복종시켜야 한다”²²³⁵⁾고 했다. 그의 이런 주장의 목적이 한반도의 공산주의 통일에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의 이러한 목적은 “조선 인민은 불록 불(不)가담 나라를 비롯한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성원 밑에 남조선에서 미제(美帝)침략국을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반드시 이룩하고자 할 것이다”²²³⁶⁾라는 결의에서 표명되어 왔다.

그런데 제3세계, 즉 비동맹제국은 모두가 다 김일성의 요망대로 반미투쟁을 위하여 통일전선을 펴고 그의 조국통일 정책을 지지 성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 안에는 친소, 친중, 친서방, 엄정중립 등의 노선을 지향하는 여러 세력이 있었다. 그리고 종족, 민족, 국경, 정치이념, 종교, 지역적 *해계모니*의 문제를 둘러싸고 끊임없는 분규와 전쟁을 되풀이해 온 것이 제3세계의 비극적 현실이었으며 아직도 마찬가지다. 김일성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 나라들 간의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는 어떻게 하나 저들의 지배권을 유지해 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분열 리간 쟁탈책동”의 산물²²³⁷⁾이라고 하여 모든 책임을 의례 “제국주의자들”에다 돌렸다.

그러면 이러한 분쟁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김일성은 우선 의견 상이와 분쟁문제는 그것이 아무리 심각하다 하더라도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형제들 사이의 내부문제”²²³⁸⁾라고 지극히 비현실적인 해석을 내렸다. 그리고 그는 해결의 묘책으로써 1977년 8월 평양을 방문한 티토 앞에서 제시했던

2235) 《근로자》, 1978년 9호, p. 17.

2236) 앞의 『김일성저작선집』 7, 앞의 판, p. 241.

2237) 앞의 『김일성저작선집』 8, p. 152.

2238) 같은 책, p. 152~153.

자기의 방안, 즉-“민족적 이익과 불록 불(不)가담 운동의 전반적 이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단결을 강화하는 원칙에서 협의(協議)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²²³⁹⁾ -고 하는 해결책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하나한 수식어로 자기 상투적이고 추상적인 원칙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했다. 또한 그는 당시 서방제국과 경제 협력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던 *유고슬라비아*에 대해 몹시 불만을 느끼면서, 그리고 비동맹운동을 자신의 세력권에 끌어들이려는 소련을 아마도 염두에 두고서, *티토*가 일소에 부칠 말을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블록불가담 나라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은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행동통일을 보장하며 비록 일시적인 경제적 난관이 있다하더라도 병 주고 약주는 식의 외래 지배세력 [서방 제국과 소련을 암시]의 원조에 유혹되거나 그들의 리간, 분열책동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²²⁴⁰⁾

제4절 “지배주의(支配主義)” 단호 반대

김일성에 의하면 비동맹 제국, 제3세계 제국들을 이간, 분열시키려는 세력은 제국주의자들뿐만이 아니다. 그는 1978년경부터 여기에다 “지배주의자”들을 첨가시켰다. 그가 자신이 만들어낸 개념인 “지배주의”에 대한 규탄을 체계적으로 전개한 것은 1978년 9·9절 ‘중앙정축대회’에서였다. 그는 지배주의자들을 제국주의자들과 동일애 놓고 “그들은 위협공갈과 회유기만, 전복과 파괴활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교활하고 악랄한 수단으로 신생독립국가들을 정치적으로 예측시키려하고 있으며, 이른바 “원조”와 “후진국 공동개발”의 미명하에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경제 명맥을 틀어쥐려 하고 있다”²²⁴¹⁾고 비난했다. 그리고 그들의 조종과 음모에 의하여 “형제나라들끼리 서로 총질을 하며 싸우는 비극적인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하고,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2239) 『조선중앙연감』 1978년, p. 101.

2240) 위와 같음.

2241) 같은 책, p. 150.

있다”고 강조했다.²²⁴²⁾

김일성이 “지배주의”를 제국주의로부터 일단 분리시켜 1978년 9월에 이것을 특별히 강조한데는 주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는 그 인류를 생전에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발언의 전체 맥락으로 판단할 때 소련, 중국, 공산주의 베트남 등 후진적 공산당국가들의 제3세계에 대한 정책이 “지배주의”라는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간취할 수 있다. 중국이 소련의 팽창주의를 항의(抗議)할 때는 “패권추구” 또는 “사회제국주의”라는 독특한 개념을 사용했다. 소련도 뒤에 와서는 중국의 대외정책을 “패권주의”란 말로 비난했다. 그러나 북한은 중-소분쟁에 휘말려 들어갈 것을 염려하여 “패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지배주의”라는 김일성의 조어(造語)는 “패권”의 대용어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지배주의란 어떠한 것인가. 김일성 자신의 설명을 듣기로 하자.

지배주의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추세에 역행하는 반혁명적 조류이며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공동의 투쟁대상입니다. 지배주의의 본질은 다른 나라의 자주성을 유린하며 다른 민족과 인민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지배주의에는 공공연히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로골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하는 형태도 있으며, 여러 가지 교활한 방법으로 다른 나라에 예측의 올가미를 씌워 지배하고 통제하는 형태도 있습니다.²²⁴³⁾

이상의 설명은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제국주의”와 “신식민주의”의 개념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는 지배주의가 제국주의나 신(新) 식민주의와 구별이 잘 안된다. 중요한 것은 다음의 설명이다.

……지배주의는 큰 나라에도 있고 비교적 작은 나라에도 있으며, 자본주의 나라에도 있고 그 밖의 나라에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나라의 크기와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다른 나라를 통제하려는 나라는 다 지배주의 세력이며 공개적인 방법으로든지, 은폐된 방법으로든지 남을 지배하는 것은 다 지배주의입니다.²²⁴⁴⁾(밑줄은 저자)

2242) 같은 책, p. 150~151.

2243) 앞과 같음.

2244) 앞과 같음.

위의 “비교적 작은 나라”라는 것에는 인도·차이나반도의 지배를 노리는 베트남이 포함될 수 있었고,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그 밖의 나라”의 범주에는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중국이 들어있을 수도 있었다. 그는 지배주의 세력이다 때로는 전통적 제국주의를 포함시키는가 하면, 지배주의와 제국주의를 하나로 묶어서 공격함으로써 양자의 구별을 일부러 모호하게 만드는 논법을 사용했다. 그 까닭은 중-소로부터의 정치적 반격을 피하기 위해서였음을 감지할 수 있다.

김일성은 1978년 10월 일본 《세카이》(世界)지 편집장과의 담화에서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특정한 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지나 않는가 하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표면상으로는 부인하였다.²²⁴⁵⁾ 그러면서도 그는 오래 전부터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정책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그 예로써 그가 혁명투쟁을 시작한 당초부터, 즉 1930년대에 만주에서의 ‘항일유격대’를 시작한 때부터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성을 요구했었다고 하면서, 여기에는 “지배주의에 반대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²²⁴⁶⁾고 주장했다. 그는 이 말로써 1970년대의 지배주의 반대가 과거 소련과 관련이 있음을 은근히 시사했던 것이다. 김일성은 재만(在滿) 항일투쟁 당시 혁명노선에 있어서 소련의 지령을 맹종하는 “사대주의자”들을 단호히 물리쳤다는 것, 그리고 조선의 현실에 부합되는 반제(反帝)·반(反)봉건적 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주체적으로 세웠다는 것 등을 주장했다. 이런 말들은 ‘자주노선’ 선언 이후에 비로소 시도된 일관된 허위 선전에 불과했다.

1978년 6월 통일 베트남은 소련이 주도하는 코메콘에 가입했고, 11월에는 소련-베트남간에 ‘우호협력조약’에 조인함으로써 소련의 준군사동맹국이 되었다. 소-월(越) 동맹관계를 배경으로 하여 1978년 12월에는 베트남군 10~20만명이 중국 후견하에 있던 폴·포트지배하의 캄보디아를 침공하고 그곳을 점령한 후 친월(親越)적인 행·삼린(Heng Samrin)정권을 세웠다. 한편 중국은 베트남에 대한 “응징”으로써 그해 2월에 월남으로 30만 대군을 진군시켰다. 이에 맞서 소련은 1979년 12월 비동맹국이요 자기의 우호국이었던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들어가 괴뢰정권을 세웠다. 자국의 세력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였다.

2245) 『김일성저작선집』 第七卷(日譯版), 1981년, 東京, p. 194.

2246) 앞과 같음.

중국-베트남-캄보디아는 모두 제 3세계에 속해 있었고, 명목상으로는 비동맹 국가였다. 이 크고 작은 공산당 국가들 사이에서, 그리고 비동맹국들 사이에서, “사회주의” 대국과 비동맹 아프가니스탄 사이에서는 “민족 해방”이 터졌다. 꼭 같은 기치를 들고 일어난 이 나라들 간의 일련의 복잡한 침략전쟁은 김일성의 소위 “단결된 비동맹” 운동이다.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다 하는 것이 하나의 환상이었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무엇보다도 김일성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의 선례가 북한에 적용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지배주의”를 더욱 더 비난했을 것이다. 1980년 10월의 제6차 당(黨) 대회는 이러한 엄청난 국제적 격동의 여파 속에서 열렸다. 여기서 김일성은 “오늘 국제무대에서는……반제 자주세력과 지배세력 사이에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배권을 유지 확장하기 위한 렬강들의 침략과 박탈 책동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²²⁴⁷⁾고 하면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규탄했다.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주의세력들은 민족적 독립과 새 사회의 건설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말살하기 위하여 신흥세력 나라들에 대한 무력간섭과 전복, 파괴 활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으며 정의의 해방투쟁에 일떠선 인민들을 공공연히 무력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지배세력들은……특히 주요 자원지대와 군사 전략적 요충지들을 틀어쥐기 위하여 교묘한 압투와 파렴치한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²²⁴⁸⁾

김일성은 이제야 비로소 자본주의파 공산주의자를 막론하고 국제적 권력정치의 냉혹성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은 듯싶었다.

맺는말 : 벽에 부딪힌 “지배주의 반대” 원칙

김일성이 말한 이상의 “지배세력” 안에는 “미제(美帝)”와 서방 자본주의의 국가들 뿐만 아니라, 소련 또는 중국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전체의 문맥에서 파악할 수 있

2247) 같은 책, p. 389.

2248) 앞과 같음.

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말이란 “블럭 불가담 나라들은 제국주의 지배 주의자들의 분열, 리간 책동에 속아 넘어가 서로 반목, 질시하거나 싸우지 말고 굳게 단결하여 지배세력들의 침략과 간섭 책동에 공동으로 맞서야 한다”²²⁴⁹⁾는 빈 말 뿐 이었다. 당시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이상과 같은 말을 한 것은 *아프 가니스탄*과 *인도차이나*반도(印支半島)에서 발생한 청천벽력 같은 전쟁 때문 뿐만은 아니었다. 그가 불구대천의 원수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피로 맺어진 전우”로 믿고 있던 중국이 미국의 준우호국으로 되어가고 있던데 대해 그는 큰 위기감을 느 꼈을 것이다.

한편 북한의 또 하나의 동맹국 소련도 현실외교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접촉을 시도 했다. 이미 1973년 6월 한국 정부는 「6·23선언」에서 공산주의 국가들에 대해 상호 문호개방을 촉구했던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1978년 10월 21일자 일본 《*세카이*》(世界)지 편집장과의 담화에서 김일성은 최근 한국과 소련 관계가 주목을 끌고 있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는 질문에 대하여 그는 자기의 견해를 표명했다. 즉, “그것 은 뒷전에서 나오는 “소문”이며 자기는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시치미를 뻘뻘했다. 이어 그는 “소련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조선 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 적 국가로 맨 먼저 승인한 나라”며, 남조선 “정부”는 미국이 날조한 괴뢰 정부이므로 “정상적인 사고력을 가진 인간이라면 그러한 일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²²⁵⁰⁾고 그 가능성을 단호하게 일축했다.

1982년 12월 3일 김일성은 일본 《*아사히*신문》(朝日新聞) 편집국장으로부터도 “소련이 남조선과의 관계 개선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귀국의 정책을 듣고 싶 다”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그는 “그것은 소련의 개별적 사람들의 소행을 보고 하는 억측이 아닌가 생각 한다”고 하고, “소련이 남조선과의 관계를 개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그 이유로써 그는 역시 소련이 공화국 정부(북한) 을 “조선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제일 먼저 승인했으며, 남조선 당국을 미(美)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괴뢰로 규탄하여 왔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리고 “소련은…… 사회주의 나라로서 형제적 의리와 계급적 원칙을 떠나 남조선 괴뢰들과의 관계 개선

2249) 같은 책, p. 389.

2250) 앞의 『金日成著作集』, 第七卷(日文版), 1981년판, p. 200.

을 모색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밀줄은 저자)이라고 그런 가능성을 역시 일언지하에 부인했다.²²⁵¹⁾ 이것은 그의 국제정치 감각이 그만큼 노련했다는 증거다.

김일성의 위의 발언들에는 소련의 대한(對韓) 정책의 변화 징조에 대한 당연한 반감과 불안감이 깔려 있음이 느껴졌다. 소련의 대한(對韓) 정책마저 이렇게 국익(國益)의 관점에서 변하고 있다면 소련의 비동맹국 정책을 김일성이 불신하고 암암리에 비난한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같은 사건을 눈앞에 보면서 소련을 지명하여 규탄한다는 것은 아직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1982년 10월 26일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묻는 *파키스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실로 모호하고도 기회주의적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 즉, “*아프가니스탄* 문제도 역시 *아프가니스탄* 인민 자신에 의하여 그들의 민족적 염원과 지향에 맞도록 해결되어야 한다”²²⁵²⁾는 추상적이며 공허한 말로써 핵심을 피했다. 그리고는 “북조선은 [*아프가니스탄* 당사자들의 리익과 세계평화 위업에 맞게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어디까지나 공정한 입장에서 도와주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²²⁵³⁾고 하나마나한 말을 했다. 도대체 무엇이 “공정한 입장”이며 어떻게 “도와준다”는 뜻이었을까. 그의 대답은 침묵만도 못한 것이었다.

김일성은 제 3세계의 신생국들에다 정치적 자주, 경제적 자립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그곳의 반제(反帝)·반(反)식민지 감정에 편승하여 반미외교를 강화해 왔다. 그리고 자기의 혁명이론과 사회주의 건설방법, 대외 정책의 방식을 마치 이 나라들이 따라야할 기준인 것처럼 강조해왔다. 그가 이 나라들의 단결을 부단히 설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적 분규는 착잡하기 그지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반미의 가치를 든 정부군 또는 반정부군에다 무기를 팔고 군사 요원을 파견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럴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다.

김일성으로서는 분쟁 관계에 있는 나라들에 중·소가 개입되어 있는 한은 어느 한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못하였다. 다만 “분쟁문제를 당사자들이 평화적으로 해

225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로작』 및 『조선중앙연감』, 1983년, p. 81.

2252) 위의 책, p. 62.

2253) 위와 같음.

결하도록 도와주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²²⁵⁴⁾는 식의 도피적이며, 아무 실효성도 없는 빈말을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분쟁의 원인을 일체 “제국주의자들, 지배주의자들의 책동”에다 돌리면서 자기가 선전하는 “자주”의 이념으로써 외교적 지지 기반을 넓히려는 노력을 계속 집요하게 경주하고 있었다.

2254) 같은 책, p. 36.

제14편

핵(核)무기의 어두운 그림자

— 다가오는 파멸의 위기의식 속에서

들어가는 말

제1장 • 김일성의 야망

제2장 • 벼랑 끝으로 향하는 핵외교(核外交)

제3장 • 햇볕정책과 김정일의 대응

제4장 • 핵위기(核危機)의 종폭

제5장 • '6자회담'으로 가는 길

제6장 • '6자회담'의 명암(明暗)

제7장 • 출구(出口) 안 보이는 북핵(北核)의 미로(迷路)

제8장 • 머나먼 비핵화(非核化)의 길

들어가는 말

1950년 6월 25일 북한 인민군의 기습 남침에 의하여 남-북한은 미증유(未曾有)의 대전란의 참화 속으로 끌려갔다. 3년여의 가열한 공방전 끝에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休戰協定)이 성립되어 포성은 멎었다. 그러나 결코 항구적인 평화가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 휴전은 새로운 위국(危局)의 시작에 불과했다. 그 후 남북 간에는 치열한 정치투쟁이 “민족통일”이라는 명분하에 지속되어 왔으며, 휴전선상에서는 위기일발의 무력충돌이 빈번히 일어났다.

이윽고 남한은 미국과 군사동맹을, 북한은 중-소 양국과 각각 군사동맹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는 세계 3대 핵 국가가 동시에 개입되어 있는 세계 유일한 지역이 되었다. 그리하여 한반도의 남-북 간에는 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평화가 정착되지도 않은, 이른바 “전쟁도 평화도 아닌(neither peace nor war) 상태”, 즉 냉전적(冷戰的) 대립상태가 계속되어왔다. 이런 냉전 상태는 주변 국제정세가 놀랄 만큼 바뀐 지금도 의연히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냉전의 주역이었던 미-소는 핵(核)무기의 가공할 발달로 말미암아 극한적 대립이 결국 핵전쟁으로 치닫는 날이면 두 진영의 공동 멸망과 인류 절멸(絶滅)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공통된 인식과 공포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공포의 균형을 기초로 하여 그들은 평화공존(平和共存)의 방향에서 살길을 찾아 서로 접근해 갔다. 스탈린 사후의 소련과 동(東)유럽권, 모택동(毛澤東) 사후의 중국에서는 공산주의가 상전벽해(桑田碧海)격으로 변화해 갔다. 그러나 김일성은 추호도 변한 것이 없었다. 그는 스탈린주의의 원형을 날(經)로 하고, 자기식의 “주체사상”, “우리식 사회주의”를 씨(緯)로 하여 독특한 전체주의를 만들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미-소, 미-중 간 냉전해소(冷戰解消)의 징후가 뚜렷해지자 한국정부는 세계 추세에 발을 맞추기 위하여 북한에다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이른바 “북방정책”에 뛰어들었다. 결국 ‘남-북적십자회담’(1971)과 ‘7·4공동성명’(1972)의 채택을 일단 성사시켰고 이것은 그 후 오랜 위기일발의 우여곡절(迂餘曲折)들을 거

치면서 오늘의 지루한 남북관계와 착잡한 국제적 핵(核) 회담(6자회담)으로 연장되
었다. 그러나 아직 종점은 시야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본편에서는 험난했던 군사관
계의 논의를 최대한으로 단축하여 단지 1960년대 이후에 조성된 북한 핵의 위기에
서 김일성 부자(父子)가 구사해온 핵(核) 정책과 핵 외교(外交)의 *이데올로기*, 그리
고 그 전술의 *에센스*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의 한반도 핵위기는 60년 전에 결말을 맺었던 한국전쟁의 연장선상에 나타난
비극적 현상이다. 잠시 당시를 회상해보면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절실히 경험했듯이
지상군의 수적(數的) 열세 때문에 몹시 고전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의 방어, 즉
중공(中共)의 세칭 “인해전술”(人海戰術)식 대(大)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원자탄
을 사용해야한다는 이른바 핵무기 사용의 업포(nuclear bluster)를 놓았다. *트루먼*과
아이젠하워 대통령, *딜레스*(J. F. Dulles) 국무장관 등 당시의 미국공화당 정부와 일
부 민주당 지도자들은 모두가 미국의 군사 외교정책의 힘의 근원을 핵무기에서 찾았
다.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어떤 나라도 적성국가(敵性國家)들과의 전쟁에서
종국적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군사력이라는 것을 하나의 공리(公理)로
확신하고 있었다. *아이젠하워*는 언제까지 끌게 될지 모르는 교착의 늪에 빠진 한국
전쟁의 종결을 위해서는 원자폭탄의 사용도 불사한다는 결심을 서슴치 않고 공표함
으로써 1953년 7월 휴전을 가져올 수 있었다.

*아이젠하워*와 *딜레스*는 뒤에 와서 공공연하게 한국전쟁에서 휴전을 실현시키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한 것은 “핵무기의 위협”이었다고 호언(豪言)했다. 한국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때에 임기를 끝낸 *트루먼* 대통령직을 계승한 사람은 *아이젠하워* 장군이였다.
*아이젠하워*는 자기가 당선된다면 한국전쟁을 끝장내겠다는 선거공약이 적어도 부분적
으로는 주효(奏效)하여 1952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판문점에서는 중공-북한군이 미
군 철수를 행어나 하고 기다리면서 휴전회담을 질질 끌고 있어서 많은 사상자를 냈다.
*아이젠하워*는 결단을 내리고, 핵무기의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암시를 1953년 5월 15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그리고 같은 때에 있는 *네루* 수상(중공과 친근)과의 회담에서
도 내비쳤다. 이 밖에도 *아이젠하워*는 한국에서 전쟁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미국의 핵무
기 사용을 “초빙”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직설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다.²²⁵⁵⁾

2255) Michael J. Mazarr, *North Korea and the Bomb*, St. Martin Press, 1995, pp. 15-16 참조.

제1장

김일성의 야망

제1절 소련으로부터의 핵기술 지원

김일성이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 결의를 다졌는지에 관해서는 억측만 구구할 뿐, 아직 자세한 것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 그는 미국의 방대한 물량과 핵무기를 배경으로 하는 무력 앞에서 절망과 무력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여하튼 핵문제 지식에 전무했던 그를 핵 개발계획의 길로 인도한 초창기의 길잡이는 구(舊) 소련이었다.

북한의 핵개발 역사를 더듬어보면 핵 발전은 1950년대, 60년대, 80년대, 90년대로 시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졌고 비약은 없었다. 전쟁이 끝난 지 겨우 2년 8개월 밖에 안 되는 1956년 3월 모스크바-평양 사이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이 맺어졌다.²²⁵⁶⁾ 이어 3년 뒤인 1959년 3월 양자는 「(공장·기업소 확장을 위한) 조-소 기술원조협정」을 조인했다. 이것들을 기초로 하여 양국 사이에서는 각종의 기술에 관한 합의서들이 채택되어 1963년 6월부터 영변의 핵단지(核團地)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해에 소련의 연구용 소 원자로 IRT2000이 건조되었다.²²⁵⁷⁾ 핵단지의 건설공사

2256) 과거 *이즈베스찌야지* 북한특파원으로 있었고 그 후 러시아聯邦共和國 평양대사관의 외교관으로 복무했던 알렉산더 제빈의 연구에 의하면 蘇-朝는 1955년 2월 5일 「朝-蘇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이, 1957년 10월 11일에는 소련 과학아카데미와 조선과학 아카데미 사이의 「과학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Alexander Zhebin, 「A Political History of Soviet-North Korean Nuclear Cooperation」, James Clay Moltz and Alexandre Y. Mansourov(ed),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Security, Strategy, and New Perspectives from Russia*, Routledge, 2000, p. 28.

2257) 1963년 6월 소련-북한의 당사자들은 평양 북방 92km되는 지점에 위치한 영변(寧邊, 북한에서는 냉변)에다 舊소련이 제공한 2MW급 소형 연구용 원자로 'IRT 2000'을 중심으로 하는 핵연구센터를 건설하는데 합의했다. 한 러시아 과학자의 최근년의 설명을 들어보자. 그에 의하면 이 핵연구센터를 모스크바는 공식적으로는 '냉변과학연구소'라고 이름 부쳤고, 평양은 "가공공장"이라는 위장용 익명으로 불

가 대체로 끝이 나고 가동이 시작된 것은 1965년이였다. 1960년대는 김일성이 '4대 군사노선'을 내세우고(1962년 12월 당(黨) 전원회의) 핵전쟁을 예상한 초강경적인 국방건설을 강조하고 있던 때다. 소련제 'IRT2000'의 처음 출력은 2MW에 불과했지만 북한 기술자들은 출력을 그 뒤 비밀리에 5MW로, 다음은 7MW까지 높였다.²²⁵⁸⁾ 여기서 절대적 역할을 한 것은 "영변과학연구소"였다. 이것은 이름을 막연하게 "과학연구소"라고 부쳤지만 실체는 원자력연구소였으며 주변에 여러 관련시설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방대한 핵 단지였다. 연구소의 총 건조비는 당시의 미화 약 5억달러로 추산되었으며 북한과 소련 간에는 협력이 진행되고 있던 전 기간을 통해 300명 이상의 여러 부문 북한 기술자들이 모스크바 일대의 여러 연구시설에서 연수를 받았다고 한다.²²⁵⁹⁾ 또한 일부 핵 전문가들은 두브나(Dubna)와 옴니스크(Obnisk)시(市) 등의 핵 연구단지에서 수련을 쌓았다.²²⁶⁰⁾

영변의 핵원자로 건설이 거의 끝난 후인 1965년 소련의 전문가들은 북한을 떠났다.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강조하기 시작한 바로 그 때였다. 그러나 여러 기술부문과 원자로용 핵원료 제공 등에서 협력은 계속되었다.²²⁶¹⁾ 그렇다고 모스크바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만들려는 의도는 전무했던 것이 틀림없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핵무기가 세계에 널리 확산되는 것을 우려해온 모스크바는 한-미의 군사력과 38선에서 대치하고 있는 자기의 위성국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제공하여 전력난(電力難)을 덜어주는 경제적 목표만을 설정하고 있었다. 구(舊)소련의 위성자들은 자기들이 지원하는 핵물질이 핵무기 제조에 전용(轉用)되지 않고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감시할 수 있어야만 했다.²²⁶²⁾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국제

렸다. 연구소 시설들을 건설하기 위하여 30명의 소비에트 기술자들이 참가했다. 같은 책 pp. 17~18. 'IRT 2000' 연구용 원자로 건설에는 中共도 참가하여 북한의 과학자 핵전문가들에게 훈련을 실시했다고 한다. V. Zhebin 논문. 앞의 책, p. 29.

2258) 같은 책, p. 16.

2259) 같은 책, pp. 16~17.

2260) 북한에다 가장 다양한 핵협력을 제공해온 것은 1956년 모스크바 근교에 설립된 '聯合核研究所'였다. 이 연구소는 사회주의국가들을 위한 국제적 "과학연구소(UINR)"였다. 북한은 창립 회원국으로써 처음부터 그 활동에 계속 참가해왔다. '두브나연합연구소'의 대북 지원과 북한 전문가들의 교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Alexander Zhebin의 앞의 논문, 같은 책 pp. 28~30 참조. 여기에 파견된 평양의 전문가들은 핵연구와 더불어 기밀을 빼내는 2중의 임무를 띠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261) 위와 같음.

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에 가입시켜야 했다.

IAEA는 UN에 준(準)하는 특유한 국제기관(1957년 미국 주도하에 창설)으로써 UN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IAEA의 목적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시키며 원조하는 것이 첫째요, 제공하는 원조가 군사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둘째다. (「협약」 제2조)²²⁶³, 특히 원조가 군사적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조치'(安全措置)조항(「협약」 제12조)을 설정하고 그 적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보장조치는 IAEA와 각국 정부 쌍방이 실시한 요컨대 이것은 핵 물질과 핵 시설의 사용에 대하여서는 IAEA가 치밀하게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²²⁶⁴ IAEA는 "원조"와 "통제"라는 두 개의 상반(相反)되는 기능을 축(軸)으로 하여 운영된다. 북한은 IAEA가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원조를 받고자 1974년 9월 26일 IAEA에 가입했다. 그렇다면 북한은 IAEA의 원조와 함께 감독, 통제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원조는 받지만 통제는 못 받겠다고 거부해온데서 한반도의 핵 위기는 시작된 것이다.

북한은 IAEA에 가입한지 10년이 되던 1985년 12월 12일에 가서야 「핵확산금지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에 서명했다. 소련의 권유에 따라 핵발전소 건설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였다. NPT를 체결하는 국가들(조약당사국)은 이에 따른 의무로써 「핵안전조치협정」(Nuclear Safeguard Agreement, 1968. 6 UN총회에서 채택)을 IAEA와 체결하고 그 사찰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김일성은 NPT가입 18개월 안에 실행해야 하는 「핵안전조치협정」의 비준을 갖가지 구실을 내세워 장장 6년 동안이나 지연시켜 오다가 1972년 1월말에야 서명했다(비준은 다음해 4월). 이때 그가 내세운 주요한 근거는 남한 내 도처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에는 핵무기가 배치되었는데 자기들만 핵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불공평하다는 논리였다. 미국은 곧 주한미군에 배치되었던 단거리 핵폭탄을 모두

2262) 舊소련이 1960년대에 영변에 연구용 원자로를 제공할 당시, 김일성이 핵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사찰할 수 있는 국제적기관은 없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이 UN총회에서 채택된 것은 1968년 6월 13일이었다. UN은 모스크바의 주장에 따라 원자로 IRT 2000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하에 설치하였다. 이것은 핵물질이 무기에 전용되지 않도록 보장받기 위한 편법이었다.

2263) IAEA 「협약」의 한글 譯 全文은 (주)현암사 발행(2000년), 『稅法』에 수록되어 있는 〈附錄集〉에 의거. p. 17 참조.

2264) 같은 책. p. 19 참조.

철거시켰고,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의 핵 부재를 선포했다. 그러나 북한은 자기들의 핵개발을 끝까지 숨기려했다.

영변의 연구용 원자로 'IRT2000'을 가동시키기 위하여 점화의 불꽃이 당겨졌을 무렵 김일성은 핵무기를 만들어야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세우고 있었을 것이다. 당시 중-소의 *이데올로기* 분쟁이 핵전쟁 논쟁으로까지 확대되어 *모스크바*-북경의 두 공산주의 거두들의 분열은 수습 불가능한 상태로 치솟고 있어서 김일성은 이들 동맹국에 자국의 안전을 의지할 수가 없었다. 1964년 10월 중공정권이 드디어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 중공이 원폭 실험에 성공하자 김일성은 이에 주목하고 북경에 사절단을 파견하여, 중공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모택동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²²⁶⁵⁾ 그러나 김일성의 요구는 거절당했다. 1974년에도 다시 북경에 원조를 요청했으나 역시 허사였다.²²⁶⁶⁾ 김일성이 처한 국제 환경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착잡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1981년에 들어서자 그 해 5월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동독 공산당)의 국제국 대표들이 평양을 방문했다. 이때 그들 중의 한 동독 당국자는 "북조선은 원자력 발전소의 수입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한 바 있다. "그들은 [핵무기 개발의 추진을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핵기술의 군사적 이용을 막지 못하도록 하려 했다"고 장시간의 비공식 회담 끝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동독 공산당 정치국에 보냈다. "북조선 대표단 측은 아주 솔직하게 '자기들은 원자탄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표명한 북한측의 열망을 동독 당국자 측은 조심스럽게 「보고서」에 기록했다"는 것이다.²²⁶⁷⁾ 김일성이 처한 국제환경은 이렇게도 미묘하고, 냉혹스러웠다. 그가 핵무기를 가져야 하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상, 돌파구는 단 하나 즉, 자기 자신의 힘으로(자주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2265) 돈 오버도퍼(Don Oberdorfer)가 일본 전문가에게 직접들은 바로는, 김일성은 모택동에게 보낸 친서에서 "전장 터에서 생사를 같이 한 형제국으로써 중국과 조선은 핵 비밀도 또한 나눠가져야 할 것"이라는 *이데올로기적* 명분을 내세웠다고 했다. Don Oberdorfer, 앞의 *The Two Koreas*, p. 252

2266) 같은 책, p. 253.

2267) 같은 책, p. 253.

제2절 김일성의 집념(執念)

김일성이 미국의 가공할 핵폭탄 보유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핵 개발계획에 착수한 것은 한국전쟁(1952~1953)이 끝나고 휴전이 성립된 지 몇 년이 지난 뒤인 1960년대 초부터의 일이었다. 그러나 당시 그것은 아직 국제적 관심사가 되지 못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1964년 6월 소련은 소형의 평화적 발전용(發電用) 원자로 IRT2000의 건설을 김일성에게 지원하였는데, 이것을 기초로 하여 핵개발의 연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미는 물론 소-중-일 등 주변 국가들까지 이 사실을 경시했던 것이 틀림없다. 그런대로 유독 미국의 일부 사람들만은 김일성의 위험한 호전성에 주목하고, 첩보위성으로 1980년 이래 단속적으로 평안북도 영변(寧邊)의 5MW급 원자로 건설의 현장과 핵시설의 동태를 은밀히 촬영해 왔다. 이런 활동을 통하여 북한은 핵폭탄 제조를 위한 핵 개발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단서가 포착되었던 것이다.

북한의 핵 개발의혹이 널리 알려진 것은 1989년 9월 프랑스의 상업위성 'SPOT 2 호'가 촬영한 영변(寧邊)의 핵 관련시설사진이 공개되면서 부터였다. 이때부터 김일성의 핵 개발 의혹은 아연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되었다. 미국은 이 무렵부터 정찰 위성사진에 의하여 김일성이 영변지역에 핵 원자로(原子爐) 및 핵연료와 재(再)처리시설의 건설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북한의 핵 의혹문제는 곧 '국제원자력기구'(IAEA)로 넘어갔다. 당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은 두 개의 쟁점에서 비롯한다. 즉 하나는, IAEA 가입국으로서의 북한이 의무상 IAEA에 신고한 영변(寧邊)의 7개 핵시설 중, 특히 두 개의 시설, 다시 말하면 비밀리에 건설하고 있었던 5메가와트 급 실험용 원자로와, 그리고 그들이 "방사실험실"(放射實驗室)이라고 부르는 곳이 문제가 되었다.

IAEA가 1992년 5월 25일까지 실시한 임시사찰에서 입수, 분석한 플루토늄의 성분은 북한 측이 IAEA에 제시한 보고의 내용과는 "중대한 차이"(significant inconsistencies)가 있었다. IAEA는 이 시설에 들어있는 핵 물질이 핵무기(核武器) 제조 목적에 전용(轉用)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품고 다시 사찰할 것을 요청했다. IAEA 조사단은 1992년 5월 25일 이후 9개월 동안 6차나 '특정사찰'을 실시했다. 그러나 북한 측이 사찰을 앞두고 데이터의 채취 등 일부 항목을 슬그머니 제외시킴

으로써 IAEA와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 IAEA와 체결(1992년 1월 30일)한 「핵안전조치협정」(核保障措置協定)²²⁶⁸⁾에 의하면 북한은 이곳의 사찰을 철저하게 받을 의무가 있었다. 그렇지만 북한 측은 IAEA의 완전한 사찰은 방해해 왔다. 무언가 숨기려 한 것이 분명했다.

또 다른 쟁점은 영변 핵 단지 안에 있는 두 개의 미신고(未申告) 시설이다. IAEA는 이곳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고 난 후의 핵연료”(spent fuel)²²⁶⁹⁾의 저장시설 또는 핵 폐기물질의 저장시설로 추정하고 1993년 2월 9일에 ‘특별사찰’²²⁷⁰⁾을 요청했다. 그러나 북한 측은 이것들이 핵무기와는 전혀 무관한 “순수한 군

2268) ‘안전조치’란 safeguard의 번역으로는 보장조치(保障措置)라고도 한다. 두 나라 사이에 또는 IAEA와의 사이에 체결되는 약정으로서, 핵무기 非보유국이 가지고 있는 핵 물질, 자재, 시설, 특히 평화적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우라늄(uranium)이나 플루토늄(plutonium)이 군사적 무기로 전용되지 않도록 국제적으로 확인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보장조치의 대상은 수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가 많고, 보장의 수단으로서의 주요 원자력 설계의 심사, 핵물질에 관한 기록의 유지 및 보고, 그리고 사찰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찰”이다. 이러한 보장조치를 위하여 NPT에 가입한 非核보유국가들은 IAEA와 ‘핵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고 IAEA의 사찰을 받을 의무를 지녔던 것이다.

2269) “사용하고 난 후의 핵연료”란 원자로에서 약 3~4년 동안 燃焼하고 난 후 밖으로 옮겨온 재(쓰레기)다. 그 안에는 ① 타다 남은 우라늄, ② 플루토늄, ③ 핵분열 할 때 생기는 생성물질 등 세 가지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원자로 속의 연료는 연소와 함께 핵물질의 양이 감소한다. 사용 전의 uranium 235의 농도는 3~4%이지만 연소 후의 쓰레기에도 1%정도가 남아있다. 한편 이 쓰레기에서는 1당 6kg~7kg의 플루토늄 239도 포함되어있다. 이렇게 연소하고 난 후의 uranium 235와 플루토늄 그리고 핵분열이 일어날 때 부차적으로 생산되는 plutonium 239를 끄집어내어 새로운 핵 연료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재처리’(fuel reprocessing)라고 한다. 위의 uranium 235와 plutonium 239는 핵무기 제조에는 절대로 필요한 대표적 물질이다. 이에 관한 쉽고 간결한 설명은 이용준 지음, 『북한 핵·새로운 게임의 법칙』(조선일보사, 2004년), pp. 27~32참조.

2270) IAEA의 사찰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NPT 가맹국인 非핵무기보유국들은 자기나라의 核物質과 그 시설에 관한 정보를 IAEA에 정기적으로 신고하고 査察을 받아야 한다. 약간 부연한다면 IAEA와 ‘핵보장(안전)조치협정’(Safeguards Agreement)을 체결한 나라들(즉 査察 받을 것을 수락한 나라들)은 査察의 대상이 되는 자국 내 核施設의 리스트와 동시에 그 내용을 설명한 ‘最初報告書’를 제출한다. 그러면 IAEA는 그 ‘報告書’ 내용에 들어있는 核施設의 정보와 核物質 보유량 등이 정확한가 아닌가를 검증한다. 이 ‘최초보고서’의 검증작업을 ‘特定査察’이라고 한다. 한편 계속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에 대하여 비디오카메라 설치, IAEA의 사찰요원의 현장검사 등 적시에 사찰을 실시한다. 이것을 通常査察(Routine Inspection)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부의 나라들은 未申告 시설에서 비밀리 핵무기 개발을 진행시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보장조치”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나타났다. IAEA는 비핵보유국이 제공하는 정보나 통상사찰을 통하여 얻은 정보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확신했 때에는 미신고 시설 등 핵 의혹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特別査察”(Special Inspection)을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북한이 그런 ‘특별사찰’을 거부하면서(3월 9일), 1993년 3월 12일 ‘NPT조약’에서의 탈퇴를 선언하자 국제적으로 극심한 파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핵 안

사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 IAEA의 사찰 요구에 대하여 “제국주의자(帝國主義者)들이 우리 공화국을 고립시키고 압살(壓殺)하려는 책동”이라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구실로써 사찰을 완강하게 거부해왔다. 그리고는 IAEA가 기어이 특별사찰을 실시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짓은 온 나라를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는 위험한 도화선(導火線)이 될 것”²²⁷¹⁾이라면서 세칭 “벼랑 끝 외교”²²⁷²⁾로 폭주(暴走)하기 시작했다.

사태는 곧 악화되어 IAEA 정기이사회(定期理事會)의 북한에 대한 특별사찰 수락 촉구 결의 채택(1993. 2. 25) → 이에 맞선 김정일(金正日)의 “준(準)전시상태 선포”(3. 8) → 이어 북한의 ‘핵무기 확산금지조약(NPT) 탈퇴결정 선언(3. 12) → (이에 대항하는) IAEA의 북한 핵문제 UN 안보리(安保理)의 결의를 위하여 그곳으로 회부(4. 1) → 미국과 맞대결 하려는 강성산 총리의 대남 4개 사항 요구 제시(4. 6) → IAEA의 특별사찰요구 불응 시 UN안보리의 대북 징계조치를 채택한다는 결의(5. 11) 등 숨 가쁜 일련의 공방전이 쌍방 간에 벌어졌다. IAEA의 특별사찰에 마치 북한의 존망여부가 달리거나 한 것처럼 위협을 느껴 온 김일성은 1993년 6월 6일 다음과 같은 초강경 담화를 발표했다.

미국은 우리의 두 개의 군사 대상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해 나섬으로써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최고 리익을 지키기 위하여 전국에 준(準) 전시상태를 선포하고 핵무기전파방지조약=핵무기확산 금지조약에서의 탈퇴를 선포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의 핵문제를 유엔

전조치협정의 체결국이 未申告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거부할 때는 UN安保理는 제재조치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2271) 《로동신문》, 1993년 3월 8일자.

2272) “벼랑 끝 외교”(brinkmanship)란 말은 1950년 중반 이후 미-소의 냉전이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덜레스(Jhon Foster Dulles) 국무장관이 추진한 對소 군사전략이었다. “brink”는 본래 벼랑 또는 물가의 가장자리를 뜻하는 개념인데 이 말은 정치현상에 확대하여 전쟁직전의 아슬아슬한 교비(또는 순간)라는 의미로 쓰여져 왔다. 일례로 만일 韓半島, 대만 등지에 국제공산주의 사주 하에 국지분쟁(局地紛爭)이 일어날 경우에는 핵무기를 공갈의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핵 위기를 조성, 핵전쟁 일보직전의 상태에 까지 몰고 나아가면서 자국에 유리한 형태로 해결한다는 정책이었다. 북한에서는 brinkmanship을 접안정책(接岸政策)으로 부르고 있지만 그들의 군사전략에서는 이 개념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핵무기 시대의 북한의 외교수단을 지칭하는 말로써 “벼랑 끝 외교”라는 개념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벼랑 끝 외교의 전술은 자기주장의 절대화, 전쟁 공갈, 허장성세, 호언장담, 대담한 거짓말, 교묘한 유인 책, 회의를 퇴장, 대의명분 강조, 협정탈퇴 등 다양하다.

안전보장 리사회에 끌고 가 우리가 핵무기 전파방지 조약에 복귀하지 않으면 그 무슨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그 어떤 압력과 위협 공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미의 핵 회담에서 절대로 원칙을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²²⁷³⁾

북한이 IAEA의 대북 특별사찰에 응하지 않을 때는 UN안보리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UN의 결의안은 김일성을 외교적 역경으로 몰았다. 그러나 그는 한국, 미국, IAEA, UN 등에 대해 계속 초강경 자세로 반격을 가하면서 대남 정치공세를 더욱 격화시켜나갔다. 매일 몇 차례나 IAEA와 한-미 양국을 비방하는 성명, 담화, 논평이 쏟아져 나왔고 도처에서 군중집회가 열렸다. 한편 북한의 NPT 탈퇴로 국제적 긴장이 격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던 미국의 심리적 약점을 간취(看取)한 김일성은 한편으로는 대미 직접협상을 통해 탈출구를 찾고자 했다. 그 결과로 1993년 6월 2일 뉴욕에서는 제1단계 북-미 고위급 제1차회담이 열렸다. 여기서 북한은 IAEA의 핵사찰 요구를 수락하며, 남-북 대화에도 응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는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 불사용”을 약속 받고, “주권의 상호존중과 내정(內政) 불간섭”의 합의²²⁷⁴⁾를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북한은 IAEA의 사찰을 수락한다는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 비밀리에, 끈질기게 강행하면서 초강수 “벼랑 끝 외교”를 밀고 나갔다. 전쟁 발발에 대한 미국인들의 공포감을 일으켜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최대한의 양보를 받아 내자는 심산이었다. 이렇게 하여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상태는 계속 고조되어 갔다. 6·25 이전과 이후의 양상을 연상케 하는 판에 박힌 북의 대남(對南) 냉전공세는 조금도 바뀌지 않고 있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들은 핵무기를 개발하여 한반도를 종말의 나락으로 떨어트리게 될 낭떠러지를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사실이다.

2273) 『김일성저작집』 44, p. 183

2274) 「북-미 제1단계 회담 (뉴욕)공동발표문」(1993. 6. 11), 「北韓 核問題와 南北關係」, 1994년 4월, 民族統一研究院, pp. 179-180.

제3절 사찰 금지(禁制)의 성역(聖域)

1993년 2월 25일 한국에서는 30년 만에 문민정부(文民政府)가 자유선거를 통하여 수립되었다. 바로 이날은 공교롭게도 IAEA 이사회가 영변의 7개소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결의한 날이었다. IAEA의 북한 핵에 대한 엄격한 불(不)용인 정책 때문에 국제 외교에서 고립상태에 몰린 김일성은 김영삼정권이 출범하기 직전부터 그를 맹렬하게 비방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영삼을 “핵전쟁 책동을 일삼는 미제의 앞잡이 호전광(好戰狂)”이라고 매도했다. 남한이 내부의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이룩한 괄목할 만한 민주화의 진전과 세계의 주목을 끌기 시작한 경제발전에 직면하여 자기들이 경쟁에서 패배하지 않을가 하고 내심 큰 공포를 느끼고 있었을 것에 틀림없다.

1993년 3월 18일자 《조국전선》지는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하여 선동하기를 “당신들의 원수는 북의 동족이 아니라…미제(美帝) 침략자들과 나라와 민족을 등지고 상전(上典)에 빌붙어 조국의 남녘땅을 핵기지로 내 팔긴 매국(賣國)역적들”이라고 규탄했다. 그리고 그들의 “전쟁 책동을 짓부시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할 것을 열렬히 호소한다”²²⁷⁵⁾고 선동하면서 김영삼 정부 타도 결의를 다졌다. 김영삼 정부가 북으로부터의 그런 비난을 모면하기 위하여서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고, 그들의 요구대로 김일성의 조국통일 10대강령²²⁷⁶⁾이라는 ‘통일전선’ 노선을 수락하고, 미군 철수를 결행하고, 안기부(安企部)와 기무사(機務司)를 해체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보안법 사범(事犯)들을 모두 석방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이 북에서 선동하는 대한민국 해체작업에 이용되지 않자 김일성은 그를 응당 타도해야 할 적으로 규정했다. 위의 ‘호소문’이라는 것은 핵무기개발에 열중하고 있던 김일성 부자가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기 위하여 김영삼정권에 싸움을 걸어온 도전장이었다. 이러한 도전 앞에서 1993년 6월 3일 김영삼

2275) 《로동신문》, 1993년 3월 19일자.

2276) 김일성의 「10大綱領」에는 강성산 총리가 부연 발표한 4개의 ‘요구사항’이 들어 있다. 사실은 “10대강령”에서 다음이 핵심이다. ① 외세 의존정책(한·미동맹)의 포기, ②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 ③ 외국 군대와의 합동군사훈련 영원한 포기, ④ 미국의 核雨傘으로부터 벗어날 것 등이다. 이것은 “남조선의 북조선화”를 위한 강령이었다. 강성산은 이 4개항 요구의 수락 여부가 말로 “남조선정권이 자주적 문민정부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멋대로의 판별기준을 설정했다. 《로동신문》, 1993년 4월 11일자.

대통령은 극렬 학생들의 인공기(人共旗)계양 집회와 폭력시위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핵무기를 가진 자와는 악수하지 않겠다”고 의연한 태도를 보이자 북한의 선전은 김영삼 문민정부를 어느새 ‘짜쇼정권’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는 “남조선 현 정권에 있어서 문민은 가짜 얼굴이고 반공 짜쇼독재가 진짜 얼굴”²²⁷⁷⁾이라고 매도(罵倒)했다.

그 후 그들이 만들어낸 정의(定義)에 의하면 한국정부는 과거의 군사 짜쇼보다 더 악질적인 “사대매국(事大賣國) 짜쇼 괴뢰도당”이었다. 이러한 극한적인 대남 비방은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선전이 아니라 곧 ‘노동당’의 대남정책노선의 일환이었다. 사리(事理)는 명료했다. 북한의 정치적 입장이 이러하네 남북대화의 성공이 어떻게 가능하며 평화적인 협상으로써 핵개발을 어떻게 저지한다는 것이었을까. 여기서 잠시 북한의 핵 문제로 되돌아가 그들의 속셈을 간단하게 잡고 넘어가고자 한다. 이미 언급한 대로 그들은 IAEA에 신고하지 않은 영변의 두 개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완강하게 거부해 왔다. 김일성은 1993년 4월 16일 일본의 NHK 및 미국의 CNN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영변의 두 곳 미신고 시설에 관하여 자기가 미국인들에게 했다는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군사 시설에 외국인들을 들어오게 하는 것은 무장해제하는 것이 됨으로 우리는 두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²²⁷⁸⁾

또한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외국인들에게 자기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제조할 생각도 없으며, 운반수단도 없을뿐더러 제조할 기술자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능청을 떨었다. 그의 그런 말은 그가 핵무기 개발에 한참 열을 올리고 있을 때에 부린 엄살이요, 은폐술(隱閉術)이라는 것은 불과 몇 년 후의 역사가 입증했다.

2277) 《평양방송》, 1993년 7월 11일.

2278) 「統一問題に關する金日成主席の發言録」은 『朝鮮資料』1996년 12월호 pp. 4~5에 수록, 이 「發言録」에 실린 김일성의 1993~94년도 인터뷰들의 내용은 『김일성저작집』 44에 실린 것 보다 자세하다. 『김일성저작집』 44, p. 382; 또한 1994년 「신년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對美 비난을 첨가했다. 즉, “미국과 그 추종자들이 떠드는 우리의 ‘핵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미국이 집요하게 추구하는 反사회주의적, 반공화국 책동의 산물입니다. 있지도 않는 ‘북의 핵개발 의혹’을 들고 나온 것도 미국이며, 조선반도에 핵무기를 끌어 들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도 미국입니다.” 위와 같은 책, p. 298.

김일성은 그런 화술로써 초 강대국 미국에 대하여 “자위(自衛)”와 “평화통일”의 대의를 위해 투쟁하는 소국 북조선으로 세계의 동정심을 끌어당기자는 것, 그리고 핵무기 개발의 강행 때문에 자기에게 집중되는 국제적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한 전술이었다.

1994년 4월 21일 김일성은 재미 교포 여류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억살스러운 말을 했다.

...미국이 자꾸 우리가 핵무기를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미국 사람들과 담화하면서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필요도 없고, 그것을 만들 능력도 없다.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어 무엇 하겠는가. 미국이 핵무기를 1만개 이상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한두 개 만들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웃기겠는가.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어서 같은 조선 사람들끼리 죽일 내기를 하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2279)

김일성의 간단한 위의 몇 마디 말은 북한으로서는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아주 그럴듯하게 설명한 그의 선전 중 압권이라고 하겠다.

1992년 1월 이래로 점점 더 뚜렷하게 실체가 들어난 영변의 두 개 핵 의혹 지점에 대한 사찰을 북한은 끝내 거부하고 초강경 정책을 고수했다. 그 때문에 남-북한 간에 조성된 긴장상태는 김일성의 NPT 탈퇴선언(1993. 3. 12)에 의하여 절정에 오르 고 있던 것이다. 그 후 약 1년 반 동안의 한반도 정세는 핵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 감싸여 있었다. 이런 위기에 북-미간에는 고위급회담이 단속적으로 열렸다. 그 결과가 일시적 타협책으로 조인된 1994년 10월 22일의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기본합의」, 약칭 “북-미 기본합의서”(Agreed Framework)이었다. 북-미간의 화해를 예고하는 그런 분위기에서도 김일성은 핵 의혹의 대상이 되어 있는 시설은 끝까지 보여주려 하지 않았다.

당시 한국, 미국, IAEA는 모두가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었는지 아직 못 만들었는지, 만들었으면 몇 개나 만들었는지, 전쟁을 치를 수 있는지 없는지의 실상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가 없어, 미궁(迷宮)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그 사이에 갖가지 억측만이 난무하였다. 그리하여 김일성의 핵카드 놀음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농락을 당했다.

2279) 『김일성저작집』 44, p. 488.

김일성에 의하면 조선반도에서 핵문제 발생의 원인제공자는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 핵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도는 문제 발생의 근원으로 보나, 정치적 군사적 성격으로 보나, 북-미 협상을 통하여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²²⁸⁰⁾이 그의 핵 외교의 기본방향이였다. 이것은 그가 핵카드를 이용하여 미국과의 회담을 끈질기게 지속함으로써 남한으로부터 미국의 세력을 몰아내고 오랜 숙원인 조국의 통일을 완수한다는 전략이였다. 한편 그들은 미-북 회담의 진전에 휘방을 놓는 자는 “남조선 당국자들”이라고 엉뚱하게 책임을 남한에다 전가했다.²²⁸¹⁾ 그러나 “햇볕정책”, “민족공조”를 추구하는 김대중-노무현정권이 출현하면서 “남조선 당국자들”에 대한 비방은 살아졌다. 그 대신 야당인 ‘한나라당’에 모든 비난과 비판이 집중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김정일의 핵무기 개발을 가장 경계, 경고하고 있는 정치세력이었기 때문이다.

구 소련의 해체(1992년)



出典 J. A. S. Grenville 'A History of the World' in Twentieth Century, The Belknap Press, 2000, p.829

2280) 《로동신문》, 1993년 11월 4일자.

2281)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 《로동신문》, 1993년 11월 30일자.

제2장

벼랑 끝으로 향하는 핵외교(核外交)

제1절 개방·교류에 대한 공포

북한은 영변의 두 미(未)신고 시설은 고사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두 의혹시설에 대한 완전한 사찰마저 거부해 왔다. 이때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즉 북한은 이미 NPT로 부터의 탈퇴 결정을 선언했고, 지금은 단지 탈퇴 보류로써 탈퇴효력을 일시 정지시키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NPT에 복귀할 때만 해당되는 전면 사찰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기괴한 궤변으로써 IAEA에 맞서왔다. 이때의 “특수상황”이란 논리는 북한이 아직 탈퇴를 보류하고 있음으로 NPT 조약체결 당사자로서 모든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며, 한편 탈퇴효과가 정지되고 있음으로 전면 사찰은 받을 수 없다는 2중적 기회주의 전술에 불과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핵 안전조치의 연속성 보장”[계속 핵의 안전조치를 유지하는 것]에 필요한 만큼의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사찰, 즉 구체적으로는 감시, 기재(器材)의 필름과 배터리 교환, 봉인상태의 확인만을 허용하는 작업이 전부라는 것이었다. 그런 형식적인 사찰을 IAEA가 거부하고 문제를 UN 안보리에 넘기려 하자 북한은 결국 양보하는 척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한국을 위시하여 IAEA, UN 등 전 세계 여론에 대항하는 북한의 전투적 외교행태는 절벽 위에서 춤추는 이슬이슬한 모험주의가 아닐 수 없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벼랑 끝 외교’라고 번역한 이른바 “브랭크맨십(brinkmanship)외교”다.²²⁸²⁾ 벼랑 끝 외교에서 북한이 필사적으로 고수하고 또 강화하려 한 것은 이데올로기(정치이념)제일주의, 혁명지상주의, 총대(무력)절대주의였다. 이것을 강행하는 전략으로써 노동당 수뇌부(首腦部)는 핵무기 개발에다 전력을 기울여왔던 것이다.

2282) ‘brinkmanship외교’에 관해서는 앞의 註 18) 참조.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1994년 4월 4일 「성명」을 발표하고 자기들에게 의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미국, 한국, IAEA, UN안보리를 싸잡아 공격했다. 이 「성명」은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는” 미국이 막대한 핵무기를 가지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방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IAEA의 재(再)사찰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우리는 한다면 하고 안 한다면 안 한다. … 한번 천명(闡明)한 입장을 변경시킨 전례가 없다”고 그들은 기세 당당한 태도를 과시했다. 이렇게 외교적 위세(威勢)를 부리면서도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입장을 반복 강조하면서 대미(對美) 협상에 대해 은근히 미련을 보였다.²²⁸³⁾ 한편 자기들은 미국과의 회담을 위하여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동결시키고 있던 “핵의 평화적 활동”[사실은 핵무기 제조를 이제는 정상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핵무기 개발의 재개를 시사(示唆)함으로써 미국에다 압력을 가하려 하였다.

여태까지의 북한의 태도로 보아 명백한 것은, 북한이 온갖 자연전술로써 IAEA의 사찰을 피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극비리에 계속 진행해 왔다는 사실이었다. 그런 정책을 포기하라는 국제적 압력에 대해서는 NPT탈퇴와 전쟁 불사의 위협으로 맞서왔다. 이러한 수법은 김일성정권의 대남 전략에서의 *애센스인* 동시에 그 운명을 결정할 도박이기도 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지금은 없어도 앞으로 4~5년 내에 다량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느니 또는 없다느니, 그들의 핵무기 보유는 단지 대미외교협상에 사용하기 위한 “숨겨진 카드”라느니 하는 등 갖가지 설의 진부판별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 하나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도 북한의 핵 의혹이 가시지 않고, *미사일*을 계속해서 쏘아올리고 핵실험을 감행하는 한 남-북관계는 절대로 개선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한국 정부를 극렬하게 비방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긴장을 격화시켰고 바로 그 속에서 활로를 찾아왔다. 1993년 3월 22일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김영삼 정부 집권 1년에 대한 「죄상(罪狀) 고발장」을 발표하고 그를 “추악한 사대 매국노(賣國奴)”, “극악한 꺾쇠 독재자”, “무모한 전쟁 광신자(狂信者)”, “악랄한 분열주의자” 등으로 매도하면서, 이 같은 “반역도당”의 머리 위에 철퇴(鐵槌)를 내리고, “자주적 민주정부”(즉 김일성의 위성정권)를 세우기 위해서 싸울 것을 인민들에

2283) 《중앙방송》, 1994년 4월 4일자.

게 호소했다.²²⁸⁴⁾ 그들에 의하면 김영삼은 취임 후 1년 동안 남북관계를 악화시켰으며 “평화통일을 반대하고 나선 죄(罪)는 죄악 중의 대죄(大罪)”라는 것이었다. 북한의 선전은 자기들의 핵 의혹이 국제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자, 미국은 남한에서 핵전쟁 준비를 다그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대북 핵공격을 감행하려 하고 있다는 모략선전으로 국제 여론의 화살을 남쪽으로 돌려보려는 헛된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직면하여 한-미는 안이한 낙관적 태도로써 과연 평화를 수호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에 봉착하게 되었다. 의견은 구구했다. 고대 로마의 장군이요 위정자였던 베제티우스(Vegetius)는 유명한 고전적 격언(格言)을 남겼다. “그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고... 아무리 핵시대라고 해도 이 상식적인 말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말은 찾기 어렵다. 조지 워싱턴은 이 말을 부연하여 “전쟁에 대비하는 일은 평화를 지키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고 갈파했다.²²⁸⁵⁾ 남북관계에서 화해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주장한다. 핵전쟁의 위기 해소를 위하여서는 대북 경제원조와 정치-문화-인적교류를 확대하여 북한을 내부로부터 개혁, 개방케 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덩소핑과 벵트 남의 “도이 모이”(새신)정책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들이었다.

그러나 그 후 김대중-노무현정권의 “퍼주기 식” 원조를 계속 받으면서도 그런 말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 자는 바로 김일성 부자(父子)였다. 어제의 김일성과 오늘의 김정일은 다 같이 중국처럼 개방, 개혁을 단행했다가는 남쪽에 “흡수통일”(吸收統一)되고 만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그들은 논하기를 “남조선 당국자들은 흡수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혁 개방으로(북조선을) 유도해 보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파산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내심으로는 거꾸로 개혁 개방에 대한 자기들의 공포감을 토로했다. 그들에 의하면 남조선 위정자들이 말하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란, “교류(交流)나 하면서 우리 내부에다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어 인민들의 사상의식(思想意識)을 마비(痲痺)시킨 다음 남북 총선거를 통해서 저들의 제도를 공화국 북반부에까지 확대하려는 것”²²⁸⁶⁾이라고 그들로서는 불길

2284) 《평양방송》, 1993년 3월 22일자.

2285) Robert Strausz-Hupé and Stephan T. Possony, *International Relations*, McGraw-Hill Book Company, INC, p. 592.

2286) 《평양방송》, 1993년 4월 12일.

한 앞날을 노골적으로 예견했다.

북한의 이런 식의 선전에 의하면 변화하고 개방할 곳은 바로 남조선이라고 하면서 말을 다음과 같이 계속했다.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이며, 문민으로 가려진 *파쑈* 독재 사회입니다. … 남조선은 응당 외세의 지배와 예측에서 벗어나 자주화(自主化)를 실현하기 위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 외세에는 모든 것(군사기지, 시장 등)을 다 개방했지만 동족에게는 철저히 장벽을 더 높이 쌓고 있습니다. … [과거처럼] 그들 역시 외세의 힘을 빌어 … 공화국 북반부를 침공하거나 흡수 통일하는 방법으로 승공통일(勝共統一)의 야망을 실현해 보려고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²²⁸⁷⁾… 요컨대 북한은 정권유지를 위해 개혁도 개방도 안하고 그 숨 막히는 60여년 폐쇄 독재정권을 완강하게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한 패배의식에서 김일성-김정일 부자는 핵무기 개발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내부적 붕괴를 막기 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필승 불패”를 외치면서 인민들을 모두 “주체형(主體型) 공산주의자”로 개조하기 위한 사상교육을 쉴 새 없이 강행해 왔던 것이다. 그렇지만 변화는 언젠가는 반드시 북한에 찾아올 것이며, 김정일은 그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소련, 동(東)유럽, 중국 등의 개방의 도미노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영구불변(永久不變)한 폐쇄 독재정권이란 역사상 존재한 일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은 과거의 김일성처럼 김정일이 그때그때 사람들의 심리조작(心理操作)을 위하여 발설하는 전술적 언사(言辭)에 기대를 걸거나 또는 북한의 지엽(枝葉) 말단적인 정책변화(머리 모양, 옷, 언어, 노래 등의 통제 완화 등)를 본질적, 근본적 변화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본질적, 근본적 변화, 즉 당(黨)의 정책노선의 자유의 방향으로의 변화는 김정일의 세습 독재의 전통이 끝나던가, 또는 북한사회가 부분적으로나마 근본적으로 부터의 정책 변경(이를테면 남-북한의 비정치적 상거래의 자유 허용, 이산가족 찾기 운동의 극대화, 인민들의 자유로운 여행 허용 등)을 단행 하지 않았다가는 반드시 파멸하고 만다는 위기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그 가능성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정책변경은 핵무기의 보유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핵무기를 가져보았겠자 자기 멸망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고, 오히려 화(禍)만 자초할 수 있다

2287) 위와 같음.

는 것을 깨달을 때만 핵을 포기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등의 우려에서 남한이 양보만을 거듭한다고 해서 앞으로 김정일이 감복(感服)하여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말로는 ‘채찍’(한-미 공동 군사훈련의 단행, UN의 징계조치, 외교적 고립화 등)을 논하면서 행동으로는 계속 ‘당근’(미-북 회담의 무조건 개최, “퍼주기 식” 경제원조와 각종 지원 사업 등)을 제공한다면 김정일은 더욱 오만, 강경, 방자해져서 이익고는 남조선의 “반동정권”의 해체와 주한 미군의 완전 철수까지를 포함하여 더욱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려 할 것이다. 이른바 *살라미* 전술이 그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들은 대화를 필요로 했고 지금도 필요로 하고 있다. 아직도 그들에 있어서 한국, 미국, 일본과의 대화나 평화적 협상은 필경 “혁명투쟁”의 한 보조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제2절 강경·온건 정책의 사이클

1990년대 초반 이후의 한반도는 군사-외교적으로 지극히 위태롭고 복잡한 시기였다. 1991년 12월 남-북한은 「화해와 불가침,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통칭 「남-북 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합의서」는 아주 합리적으로 씌여진 내용이 공정한 외교문서였다. 분위기가 호전되기 시작하자 1992년 1월 30일 북한은 IAEA와 오래 끌어 온 「핵 안전조치 협정」에 조인하고 북한의 핵시설에 관한 최초의 「보고서」를 IAEA에 제출했다. 비록 연변의 두 곳 핵 관련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는 통상사찰(通常査察)을 받아들이기로 북한은 합의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은 북한이 비난해온 한-미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훈련을 중지했다. 당시로서는 이러한 점들을 희망을 비춰주는 외교적 성과였다.

북한은 동년 5월 4일에는 7개소의 핵시설과 90그램의 핵폭탄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들은 최초의 보고서를 IAEA에 제출했다. 1992년 5월 26일~6월 5일 제1차 IAEA 임시사찰단은 북한에 대한 사찰을 실시하고 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연구소’를 중심으로 두루 조사했다. 그 후 9개월 동안에 IAEA는 9차의

특정사찰을 실시했다. 무언가 문제가 풀리려는 것 같이 보였다. 이것은 밝은 면들이었다.

그러나 1993년 2월부터 사태는 다시 꼬이기 시작했다. IAEA는 영변의 두 곳 핵폐기물 시설에 의문이 남아있음을 간취하고 북한정부에 대하여 '특별사찰'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요청은 거절당했다. 그해 2월 25일, 35개국으로 구성된 IAEA 이사회는 7개소의 핵시설에 대하여 '특별사찰'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으나 중국은 결의 참가를 기권했다. 이것은 북한을 때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만 지지한다는 태도를 표명한 것이었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지금도 견지되고 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톳 스피리트'는 2년 만에 재개되었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력이었다. 93년 3월 8일 김정일 공화국 '국방위원장'은 전국에 준(準)전시체제 발동을 명령했다. 김정일의 이 조치는 한반도에다 제1차 핵위기²²⁸⁸를 조성하는 발단이 되었다. 한반도에 다시 전운이 감돌게 되자 1993년 4월 1일 IAEA는 북핵(北核)의 의혹문제를 UN 안보리에 의탁하는 강경조치를 취했다. 있을 수 있는 김정일의 선제공격을 사전에 제압하자는 것이었다.

김정일은 드디어 1993년 5월 29일 동해를 향하여 「로동 미사일」을 발사했다. 일촉즉발의 위급한 상황이 조성되자 6월 2일 뉴욕에서는 북-미 고위급회담이 열리고 6월 하순에는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부랴부랴 한국을 방문, 비무장지대를 사찰한 후 "만일 북이 핵무기를 사용할 때는 그것은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위협을 가했다. 그리하여 7월 19일에는 제2차 북-미 고위급회담이 열려 북한은 IAEA의 사찰을 전면적으로 받아드리며, 미국은 경수로 원자발전소 2기를 제공한다는, 이른바 "주고 받기식"의 흥정이 벌어졌다. UN총회는 북한이 IAEA의 사찰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

2288) 국제사회에서는 1993년 3월 이래로 한반도의 핵 위기를 제1차와 제2차로 나누어 고찰하는 관점을 띠고 있다. 즉 제1차 위기는 1993년 3월 IAEA 이사회가 영변의 2개 未申告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북한 측이 수락할 것을 결의하자, 북한이 이것을 거부하고 NPT조약에서 탈퇴하는 성명을 낸데서 비롯했다. 이로부터 약 1년 반 동안(1994년 10월까지) 북-미간에 회담이 단속적으로 열리고, IAEA이사회, UN안보리, UN총회가 북한의 NPT탈퇴 재고와 IAEA의 사찰을 수락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채택했으나 북한은 내내 거부했다. 1994년 6월 10일 IAEA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결의를 채택하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6월 13일 IAEA로 부터의 탈퇴를 선언 했다. 이것은 결국 핵무기를 제 마음대로 개발하겠다는 것을 뜻했다. 바로 이때 카터 前 미국대통령이 판문점을 거쳐 평양을 방문했다(6. 15~18). 카터-김일성 간에 양해가 성립되어 1994년 10월 2일 『북-미 기본합의』에 서명함으로써 한 반도의 제1차 핵위기는 일단 외교적으로 수습되어 잠시나마 안도의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 결의에서 찬성은 140, 반대는 북한 1개국뿐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김일성-김정일의 핵 외교가 완전 고립상태에 몰린 것을 의미했다.

1994년 7월 8일 북한 핵정책의 총수였던 김일성이 급사했다. 이로써 그의 아들 김정일 시대가 정식으로 펼쳐지게 되었다. 그리고 남한의 정계에서는 김대중-김정일 시대가 열렸다. 북의 후계자 김정일은 “수령” 사망 후 자기의 담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1996년 9월 18일 우리측 동해안에 북한 잠수함을 잠입시켜 한국의 경비 태세를 시험했다. 1997년 7월 김정일은 탈상을 선언한 후 10월에 총비서에 취임했다. 1998년 8월 31일 그는 3단계식(式) 로켓 ‘대포동 1호’(북한에서는 ‘백두산 1호 운반 로켓’이라고 한다)를 평화의 인상을 퍼뜨리기 위하여 “인공위성”이라는 이름으로 발사했다. 그런데 제2단 로켓이 일본 본토를 넘어 태평양 상에 추락했다. 이 사건은 핵탄두(nuclear warhead)를 장착한 북한의 미사일이 최소한 일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위력을 과시한 것이었다.

핵탄두(核彈頭)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때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핵무기라고 할 때는 핵탄두와 미사일을 하나로 연계시킨 ‘핵무기와 미사일의 발사 시스템’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핵개발과 탄도(彈道) 미사일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미사일 강국은 거의가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도 강력한 핵폭탄과 미사일을 보유하려고 열망하고 있는 나라는 면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대포동 1호’의 발사로 말미암아 북한의 핵폭탄 개발에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국제사회 특히 한-미-일-중은 이제 김정일의 미사일 개발에 심각한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1999년 북한정책 특별조정관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가 5월 평양을 방문했다. 그는 북한 측 요로들에 대하여 미국 정부의 요구를 제시했고, 10월 12일에는 북한에 대한 미국정부의 전략을 개진한 「페리보고서」를 미(美)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東亞太)소위원회에서 공개했다. 클린턴 대통령의 위촉을 받아 작성한 이 「보고서」의 골자는 북한 측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계획을 중지시킬 때는 북-미 관계에서 영구적인 평화의 정착을 포함해 정상화에도 한발 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위협을 제거하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북한의 위협에 대해 봉쇄정책을 단행 한다”는 강온 양면의 전략이었다. 「미국의 북한 정책

의 재검토」라는 제하의 이 「보고서」는 *페리*가 한-일 양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친 후 중국을 방문하여 의견을 조정한 후에 만든 신중한 것이었다.²²⁸⁹⁾

한편 국제정치의 인적요인이란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사건은 1998년 1월 한국에서 대(對)북한 유화파(宥和派)인 김대중이 한국대통령에 취임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2년 뒤 미국에서는 2001년 1월 한국과는 반대로 대북한 강경파로 알려진 부시의 행정부가 출범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 햇볕정책으로 2000년 12월 노벨평화상을 수상했고, 2001년 10월 8일에는 조명록(제1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정일의 특사로 워싱턴을 방문하여 클린턴 대통령과 회담, 2000년 10월 12일에는 양국의 적대관계를 해소한다는 「북-미 공동공표문」²²⁹⁰⁾을 발표했다. 다음해 10월 23일 올브라이트(Albright) 국무부장관이 클린턴의 방북준비를 위하여 평양으로 가서 김정일과 회담했다. 양국의 화해가 실현되어 핵폭탄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허상(虛像)이었다. 2000년 11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부시/후보가 당선되면서 국제정세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었다.

2001년 1월에 출범한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평양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할 때까지는 그들과의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견지해왔다. 왜냐하면 북한은 몇 번이고 핵개발을 동결(중지)한다고 언약했면서도 비밀리에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1994년 5월 초순 북한은 자체의 힘으로 개발한 5㎎가 와트급 시험용 원자로에서 사용 후의 핵연료봉 8천개를 IAEA의 입회 없이 빼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북한의 안하무인적 행동에 대하여 IAEA가 대북 경제제재를 결의하자 북한 외교부는 IAEA로부터의 탈퇴선언으로 맞섰다. 그러면서 김일성은 강경정책에 뒤이어 온건정책을 내세우는 교대(交代)전술을 구사했다. 그는 1992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공정성이 보장되는 조건”이라면 IAEA의 핵사찰을 받아드릴 용의가 있다²²⁹¹⁾는 것을 재천명 한 후, IAEA의 「핵안전조치 협정」²²⁹²⁾에 서명(발표는 1992년 4월

2289) 「페리보고서」의 한글譯 全文은 《연합뉴스》, 1999년 10월 21일자에 실려 있음.

2290) 「북한 발표」 「북-미 공동공표문」 전문은 《자유공론》, 2000년 11월호 pp. 18-19에 수록.

2291) 北韓研究所, 『北韓新年辭分析 1945-1995』, 1996년, p. 234.

2292) 「핵 안전조치협정」(Safeguards Agreement)에 관해서는 NPT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NPT 가입국이 조약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검증(檢證)하기 위하여 국가와 국가, 국가와

10일)하고 핵사찰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북한-미국 관계는 외견상으로는 크게 변화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제3절 「제네바 합의」의 성립과 무산 - 상실한 평화의 기회

이와 때를 같이 하여 1992년 1월 7일 한-미 양국은 북한이 끈질기게 요구해온 합동군사훈련인 *톱 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했다. 서울-평양 간에서는 1992년 1월 20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²²⁹³⁾이 정식으로 조인되고 3월 19일에는 이에 따른 「핵통제공동위원회」의 제1차 회담까지 열렸다. 북한 측이 이렇게 타협적으로 나온 이유는 그들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했던 때문이다. 특히 1991년 9월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했던 전술 핵무기를 모두 철거했고, 이에 호응하여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의 「핵무기 부재 선언」을 발표했다. 북한의 타협적 태도는 한-미가 양보의 태도를 보인 데 대한 반대급부(反對給付)였다. 이렇게 하여 냉랭했던 분위기가 일시 화해의 분위기로 반전하고 있었던 현상은 양국의 표면상의 협력을 보여준 것이었다.

북한은 1992년 말까지 핵 시설에 대해 다섯 차례나 IAEA의 임시사찰을 받았고 남한과의 사이에는 핵통제공동위원회가 13차례나 회담을 열었다. 그러나 IAEA가 요청하는 두 곳의 미(未)신고 시설의 사찰만은 끝까지 용인하려 하지 않았다. 북한이 NPT의 국내 비준을 지연시키면서까지 사찰을 거부하자 화해의 분위기는 다시 반전하여 미국은 1993년도 *톱 스피리트* 훈련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항하여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NPT조약 탈퇴를 성명하자 IAEA는 이 사건을 UN안보리에 회부했다. 그리고 5월 11일 UN안보리는 북한에 대해 강경한 요구를 제시한다

IAEA간에서 체결하는 조약이다. 이 「조치」는 평화적으로 선용하기 위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핵물질이나 자재, 설비 등이 군사적 목적에 전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방법으로 고안된 것이다. NPT에 가입한 비핵보유국들이 IAEA의 사찰을 받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지니고 있다.

2293) 이 「공동선언」에서 남-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配備, 사용을 하지 않는 것”, “핵재처리시험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 “남-북이 선정하고 합의하는 대상에 대하여 사찰을 실시한다는 것” 등을 明文化했다. 「남북합의서」, 통일원 남북대화사무실 발행, 1992년, pp. 19~20.

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쌍방이 맞대결하는 강경책들은 한반도에 제1차 핵 위기를 조성하여 세계를 긴장시켰다.²²⁹⁴⁾

사태가 파국을 향하여 달리자 카터 전(前) 미국 대통령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급히 1994년 6월 18일 평양으로 찾아가 김일성과 만났다. 김일성은 20일 후 급사(7월 8일) 했지만 양자의 회담성과는 지금은 휴지가 되어 버린 1994년 10월 21일자의 「미-북 협상 최종합의문」, 약칭 「제네바 합의」다. 이 합의문을 검토해 보면 북한은 벼랑 끝 강경외교정책을 밀고 나감으로써 결국은 큰 이득을 획득할 수 있을 뻔했다. 이 「합의」를 성사시킨 것은 카터와 김일성 면담 등 북-미간에 조성되고 있던 화해의 기운이었다. 「제네바 합의」의 내용²²⁹⁵⁾에 의하면 IAEA가 제공하기로 한 발전소 건설 지원에서 첫째, 미국은 2003년까지 2,000MW의 경수로를 완공하여 제공한다. 둘째, 미국은 경수로 1호가 완공될 때까지 매년 50만 톤의 대체 에너지²²⁹⁶⁾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북한은 흑연로(黑鉛爐)와 그 관련시설을 동결(凍結)하여 궁극적으로 해체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과거의 핵”에 관해서 이렇다 할 해명을 하지 않고 넘어간 것은 미국의 큰 실책이요, 「제네바 합의」의 맹점이었다. 그런데 북한 측은 정치 경제적으로도 종래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이 보였다. 즉 첫째, 양측은 3개월 이내에 통신과 금융 거래의 제한을 포함하여 무역, 투자의 장벽을 완화한다. 둘째, 영사(領事) 및 그 밖의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도록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교환, 설치한다; 셋째, 공동관심사의 진전에 따라 양국 관계를 대사급 관계로 격상시켜 나간다고 약정했다. 이밖에도 중요한 것은 ①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 불사용을 공식 약속한다. ② 북한은 「NPT 조약」에 잔류하며 「안전조치 협정」을 이행한다. ③ 북한은 경수로 건설의 상당 부분이 완공될 때 그러나 원자력 부품이 인도되기 이전에 북한 내 모든 핵물질에 관한 보고서의 정확성-완전성을 입증하는 문제에서 IAEA와의 안전조치협정을 전면 이행한다고 했다.

2294) 앞의註 34)참조할 것.

2295) 「제네바 합의」(1994. 10. 21)의 영어 원본과 한글 대본은 남찬순, 『평양의 핵 미소』, 도서출판 자작나무, 1995년, pp. 433~439에 수록. 이 밖의 자세한 설명은 김재묵, 『北核협상 드라마』, 도서출판 경당, 1995년, pp. 422~425, 그리고 『東北亞와 南北韓』(年例報告書 1994~1995), 平和研究所 발행, 1995년, pp. 353~357 참조.

만일 북한이 이 「합의」를 준수, 성실하게 실행했다면 한반도의 핵전쟁 위기는 벌써 해소되었을 것이다. 그럴 만큼 이 합의서는 내용이 상당히 충실하고 합리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합의」사항을 준수할 결심이 되어있지 않았다. 한편 미국 으로서는 전쟁의 위험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하여 성급하고 줄속하게 협상을 타결지었다. 결국 한반도의 비핵화 장치는 먼밀하게 고려되었지만 「과거 핵」 처리 문제는 소홀히 취급되었다. 「제네바 합의」에서의 중심적 기관은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The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였다. KEDO는 북한의 흑연감속로(黑鉛減速爐)를 경수로(輕水爐)로 대체 하는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5년 3월 1일, 「제네바 합의」에 입각하여 설립된 국제공동사업체였다. 한-미-일 이외에도 뉴질랜드, 오스트렐리아, 캐나다가 이 기구의 원(原) 가입국으로써 기구의 이사회를 구성했다.

1995년 9월 북한은 KEDO측과 경수로 공급을 위한 예비 접촉에서 새로운 엉뚱한 조건을 내세웠다. 즉 경수로 제공은 모두 무상으로 할 것, 총 30억 달러가 드는 발전소의 부대시설도 무료로 지원해 줄 것 등을 강하게 요구했던 것이다. 이 엄청난 요구는 KEDO를 마치 그 어떤 봉(鳳)으로 여기고 희롱하는 투였다. 그럼에도 북한과 IAEA는 몇 달 동안의 협상을 거쳐 1995년 12월 15일 「경수로 공급협정」을 타결했다. 이 협정에서는 경수로건설에 수반되는 부대시설에 관한 각국 부담액의 대강이 결정되었다. 이에 의하면 지원사업자금의 70%에 해당하는 30여억 달러는 한국이, 10억 달러는 일본이 지출하며, 미국은 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그 대신 경수로 건설기간 동안 중유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처럼의 국제적 합의는 그 후 북한 외무성의 6자회담 무기한 중단과 핵무기 보유선언 등(2005년 2월 10일)이 분규의 발단이 되어 2006년 5월 그 막을 내림으로써 사문화(死文化)되고 말았다. 그만한 정도의 건설사업을 북한이 단독으로 추진한다면 아마도 수 10년이 걸려도 끝내지 못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김정일 일파는 조국의 평화와 안전, 북한 자체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역사적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제3장

햇볕정책과 김정일의 대응

제1절 김대중정권의 출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의혹으로 말미암아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한창 고조되고 있던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는 출범했다. 바로 그 시각에 그는 대북(對北) 정책의 기초를 발표했다. 정책은 처음에는 “햇볕정책”으로 언급되다가 뒤에 와서는 “포용정책”으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그 후 교대로 사용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2월 25일의 취임사에서 대북정책의 원칙으로서 (1) 어떠한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 (2) 북한을 흡수하거나 해칠 생각이 없다는 것, (3)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 등 3개의 원칙을 내세웠다.²²⁹⁶⁾ 그리고 연로(年老)하여 계속 세상을 떠나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상봉문제 해결을 북한 당국에 호소하고, 이와 함께 남-북간의 문화와 학술 교류,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한 경제교류의 확대를 제의했다.

1주일 뒤인 3·1절 제79주년 기념사에서 그는 이산가족의 상봉 내지는 생사 확인만이라도 서둘러야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① 남북한은 상호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떤 불이익을 주는 일도 삼가야 한다, ② 평화 공존, 평화 교류, 장차의 평화통일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이를 위해서는 어떤 수준의 대화에도 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²²⁹⁷⁾ 1998년 8월 15일 김대중은 광복절 제53주년을 맞이하여 “제2의 건국”을 천명하는 자리에서 남-북간의 대결주의 청산, 교류와 협력, 불신 해소를 새삼 강조했다.²²⁹⁸⁾ 이상은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김영삼(金泳三)정권 시대

2296) 「국난 극복과 제도약의 시대를 엮시다」(1998. 2. 25. 대통령 취임사). 『98통일백서』, 통일부, 1999년, pp. 276~277.

2297) 「3·1정신으로 국난을 극복하고 제도약을 이룩합시다」(1998. 3. 9) 같은 책, pp. 281~282.

2298) 「제2건국에 동참합시다」(1998. 8. 15) 같은 책, pp. 290~291.

에 빈번히 내세워 온 온당하고 당위적(當爲的)인 주장들이었으며 그 자체만으로는 하등 나무랄 바가 아니다. “햇볕정책”이란 옛날 그리스의 우화(寓話)에서 따라 붙인 이름이다. 여기에는 냉전의 차가운 강풍으로서의 북한의 두터운 외투를 벗길 수 없고, 그 외투를 벗길 수 있는 것은 따스한 햇볕뿐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었다.

북한의 당(黨) 선전 요원들은 처음 한동안은 김대중이란 이름은 직접 언급하지 않고, “남조선 집권 상층”이니 “남조선 통치배”니 하는 집단명사의 표현으로 김(金)대통령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이미 반(反)국가 단체로 규정되었던 ‘한총연(韓總聯)’의 반(反)정부 대회를 1998년 4월 당국이 원천 봉쇄한 것을 구실로 하여 김대중 정권을 호되게 비난하기 시작했다. 가로되 “남조선에서는 꺾쫘적인 김영삼의 ‘문민정부’를 연상케 하는 폭압의 칼바람이 일고 있다”느니, “한총련에 대한 태도는 애국과 매국, 민주와 꺾쫘, 통일과 분열, 정의와 불의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²²⁹⁹⁾이라느니 등등...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계속되는 폭력시위를 공권력으로 단속하자 평양의 선전기관은 “현 통치배들이야 말로 선행(先行) ‘문민’ 꺾쫘 도당을 찢 찢 먹는 폭압분자들”²³⁰⁰⁾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남조선 인민들은 반(反)인민적 식민지 꺾쫘정권을 청산하고 민주주의 정권을 일으켜 세우는 투쟁에 과감히 펼쳐나서야 할 것”²³⁰¹⁾이라고 정권 타도를 선동하는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 김정일정권은 김대중 정부의 포용정책을 과연 어떻게 인식하였으며, 평가하고 있었을까. 일례로 1998년 6월 4일자 ‘남조선 당국의 포용정책을 해부한다’²³⁰²⁾는 《로동신문》의 논평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신랄하게 공격했다. 그들은 “국민의 정부”가 한결 같이 중요시하고 주장해 온 경제협력의 성격에 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격렬한 어조로 비난했다.

남조선 당국은 이른바 ‘협력교류’로 우리 내부를 흔들어보려 하지만 돈과 정치를 맞바꾸어 보려는 것은 일빠진 것이다... 오늘 또 “한강의 기적”으로 오만을 부리던 남조선 경제가 거품경제로 주저앉는 꼴(IMF의 위기 상황)도 보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국민의

2299) 《로동신문》, 1998년 4월 10일자.

2300) 《조선중앙방송》, 1998년 5월 5일자.

2301) 《평양방송》, 1998년 5월 3일자.

2302) 《로동신문》, 1998년 6월 4일자에 논평의 전문 게재.

정부"에 와서 남조선의 정치도 거품정치로 꺼질 날을 보게 될 것이다.²³⁰³⁾

북한 당국이 남한의 “햇볕정책”에 대한 비방은 날이 갈수록 더욱 난폭해져 갔다. 그들이 햇볕정책을 얼마나 불신하고, 위협시하고, 증오했는가는 이례적인 「외무성 대변인 성명」²³⁰⁴⁾까지 동원하여 이것을 공박하고 나선 데서 잘 볼 수 있다. 이 「성명」은 남조선의 “햇볕정책은… “화해와 협력”이라는 미명 하에 우리를 “개혁 개방”에로 유도하여 저들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 흡수 통일하려는 모략 책동”이라고 규탄했다. 이 「성명」 이후에도 ‘햇볕정책’에 대한 비난은 계속되었다.

1998년 10월 23일에도 《로동신문》의 「논평」은 바로 그 며칠 전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맹렬히 반박하는 가운데서 ‘포용정책’을 거들 공격했다. 이 「논평」은 김대중의 ‘포용정책’이란 “뒤집어 놓은 반(反)공화국 반(反)통일 대결 정책”이라느니, 그가 “공존공영”이요 “화해협력”이요 하고 떠든다고 하여 “미제의 머슴꾼이 되어 북침 핵전쟁 마차를 끄는 자들의 범죄가 가리워질 수는 없다”²³⁰⁵⁾고 악담을 퍼부었다. 이러한 비방 선전은 남으로 부터의 대북지원 사업이 계속 불어나고, 교류와 회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 가열해 졌다.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자의 기세를 꺾고 심리적-정치적으로 우위에 서자는 전술이었다.

대남 정치공세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정부와 협의하여 1천 마리의 소떼를 몰고 극적으로 방북했다. 그가 아직 현지에 체류하고 있던 1998년 6월 22일, 이런 화해의 분위기에 역행하여 한국 영해에 북한 잠수함이 침입했다가 어망에 걸려 포획되어, 함정 내에서 9구의 시체가 발견된 사건이 일어났다. 며칠 후인 7월 12일에는 동해안에서 북한 공작원의 시체와 공작정(工作艇)이 발견되었다. 김(金)대통령은 이것을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항의하고 북한에 사죄와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욕설뿐이었다.

이어 1998년 8월 31일에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대포동 1호’)의 탄두(彈頭) 부분이 일본 동북지방을 넘어 태평양 상에 추락한 사건이 발생하여 한-일의 안전을 위협했다. 이에 우리 경비정은 12월 3일과 17일에는 다대포(多大浦)와 남해의 돌산

2303) 위와 같음.

2304) 《조선중앙통신》, 1998년 8월 17일자.

2305) 《로동신문》, 1999년 10월 23일자. 「통할 수 없는 허튼 나팔」.

도(突山島) 남쪽에서 북한의 반(半)잠수정들의 침입을 포착하여 총격 끝에 격침시켰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그 해 11월 18일부터 금강산 관광사업은 시작되었다. 명산유람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다수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점차로 희미해져갔다.

한편 북한은 김대중정권이 존속하는 동안이나 그 후에도 한국의 “햇볕정책”을 진정한 화해 협력정책으로 인정한 일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것을 오히려 “대북 적대시(敵對視)정책”이라고 비방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햇볕정책의 따스한 분위기를 역이용하여 남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원조를 얻어낸다는 책략을 꾸며왔다. 한국정부 당국의 금강산 관광 허용은 한랭한 남-북 관계를 온화한 그것으로 바꾸려는데 경제적 목적이 있었다. 관광은 북한 당국의 엄중한 통제와 감시 하에서 시작되었지만 반세기 이상이나 고향을 그리던 실향민과 통일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로 크게 붐볐다.

제2절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

그런데 “국민의 정부” 출범 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남-북 정상회담으로서 회담은 예정대로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열렸다. 남-북정상회담의 예정이 발표되자 남한의 많은 사람들은 크게 흥분했다. 그들은 화해와 평화의 시대가 행어나 한반도에 찾아오고 있지 않은가 하고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意義)”를 앞질러 평가하기에 바빴다. 한편 평양은 평양대로 6월 13일 김정일이 순안비행장까지 나가 김대중을 뜨거운 포옹으로 영접했다. 두 사람을 태운 승용차가 영빈관으로 향할 때 연도에서 환호성을 지르며 붉은 조화를 흔들며 이들을 환영하는 60만명(?) 군중들의 광경은 마치 한반도가 떠나갈 듯이 보이는 이변(異變)이었다. 당시 「남북정상회담」은 통일에 대한 민족의 꿈, 열망, 순수성, 애절한 동포애가 명분상의 감동을 자아내는 가운데 열렸다.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남한의 TV는 평양의 광활한 거리-대형의 웅대한 건조물들-호텔-대학-도서관-컴퓨터연구소-사찰(寺刹)에 이르는 문화재의 면면들과 가정의 부엌까지를 소개하여 순진한 사람들의 북한에 대한 기성관념을 흔들어 놓았다.

그 중에서도 놀라운 장면은 김정일의 이른바 “깜짝쇼”였다. 여태까지 *썬*일에 가려져 있던 이 수수께끼의 인물이 드디어 정체를 드러낸 것이다. “활달한 그의 성격”, “거침 없는 그의 변설(辨說)”, “소탈한 인상”, “격식에 매이지 않은 행동” 등 그의 외견상의 모습들은 남한은 물론 세계의 TV 시청자들 사이에 잠시 동안 “김정일 쇼크”를 일으켰다. 김정일을 둘러싼 이 모든 광경은 대중심리 조작(操作)을 위하여 면밀한 기획에 따라 연출된 것은 물론이다. 그들은 이러한 연출에 의하여 북한 사회의 *이미지*를 확보하려 했던 것이다.

남한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6·15선언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자세습(父子世襲)제 독재왕국”, “무장공비”, “3백만의 아사자”, “*테러* 집단”, “꽃제비”, “탈북자”, “마약 수출”, “무고한 외국인 납치” 등의 딱지가 붙었던 이 거대한 “강제수용소”가 돌연히 희망과 동경의 땅인 양 묘사하는 사람들이 소수나마 생겨났다. 이를테면 “평양이 열렸다”, “한반도의 역사를 다시 쓰자”, “반세기의 한을 풀었다”, “두 정상 뜨겁게 손을 잡았다” 하는 것 등등...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6월 15일에 합의, 발표된 「남-북 공동선언」이었다. 이 「공동선언」은 과거의 남-북 관계 합의문서들에서 표기되었던 그럴 듯한 많은 착상과 정책과 개념들을 그대로 수용했다. 그런데 「공동선언」은 「7·4 남-북 공동성명」(1972. 7)이나 「남-북 기본합의서」(1991. 12)에 비하면 내용이 소략(疏略)하며, 막연한 원칙들을 열거했을 뿐 중요한 명제(命題) 또는 명문화(明文化)된 개념에 대한 의미규정(意味規定)이 없다. 「공동선언」에서 가장 모호한 부분은 제2항, 즉 남(南)의 “연합제(聯合制)안”과 북(北)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聯邦制)안” 안에는 “공통점”이 있음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는 대목이다.

여기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무런 설명이나 주석(註釋)도 없다. 1당(一黨) 1인 독재체제를 절대화 하고 모든 생산수단의 집단화(集團化)를 원칙으로 하는 “사회주의” 북한과, 이와는 반대로 다당제(多黨制) 의회민주주의의 정치제도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남한의 두 이질적 제도가 과연 “연합” 또는 “연방”을 구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선행이 세계에 존재한 일이 과연 있었는가. 「공동성명」은 통일된 국가제도와 같은 기본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넘어갔던 것이다.

「6·1 남-북 공동선언」 명기하기를 나라의 통일문제는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민족 자주에 의한 통일을 극구 강조했다. 그렇지만 통일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들어 있지 않았다. 이것이 “민주”를 열렬히 선전하고 있던 김일성 시대와 다른 점이 었다. 그렇게 된 것은 한낱 실수이거나 착오 때문이 아니다. 북한은 통일국가의 구호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고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15선언」이 나오기 전후부터 북한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민주주의”란 말은 최대한 입에 올리 지 않았고, 그 대신 “민족”이란 용어가 남한의 소위 “반(反)통일 매국 역적들”을 공격하는 맥락에서 과잉 남용되어 왔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반세기나 계속되고 있는 애절한 비극, 즉 한국의 국군포로와 피랍 어부들의 송환문제에 관해서도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 “국민의 정부”는 아마도 회담이 무산될까봐 염려한 나머지 당연히 제기할 요구를 제대로 제기하지 못한 채 슬쩍 넘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선의에서 생각할 때만 그러하다. 그 후에도 “국민의 정부”는 정권의 운명이 마치 남-북 대화의 성사여부에 달려 있는 양 초조, 불안, 졸속, 유화, 그리고 계속적 양보로 회담에 임해온 것이 아니었던가. 김정일은 이러한 김대중정권의 약체를 깔보기 시작, 안하무인(眼下無人)격으로 대했다. 그 단적인 예가 김정일의 서울 답방 약속의 목살이었다.

이러한 안이한 한국 정부의 자세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회담」에 뒤따라 정부차원의 각급 회담, 민간차원의 접촉과 회담, 대북지원 사업, 인사(人事)와 물자 교류의 사태(沙汰)가 이어졌다.²³⁰⁶⁾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5년 동안에 김정일은 상당한

2306) 정상회담 직후에 있는 주요한 사례를 보면 1)남북장관급 회담이 1차(00.7.29 서울)에서 6차(02.11.9~14 금강산)까지. 2) 국방장관급회담이 1차(00.9.25~26 제주)에서 2차(00.11 중 연기)까지 3) 남북적십자회담이 1차(00.6.27 금강산)에서 4차(01.4.3~5)까지 열렸다. 이 밖에도 언론사 사장단 방북(00.8.5~12), 조총련동포 고향방문(00.9.22~28), 백두산관광단방북(00.9.22~28), 민족통일대토론회행사(01.6.14~16), 8·15민족통일대축제행사(01.8.15~21),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방북(01.11.26~12.4) 등에 많은 남한사람들이 참가했다. 심지어는 근로단체들의 남북노동절공동행사(01.4.30~5.2 금강산), 남북농민통일대회(01.7.17~19 금강산)까지 열렸다. 그 중에서 그런대로 보람 있는 것은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이 1차(00.8.15~18)에서 3차(01.2.26~28)까지 실시되었고, 이산가족들이 남북에서 각각 300통에 한하여 서신교환을 할 수 있었던 일이다.

이득을 보고 공짜로 막대한 물자와 돈을 얻어냈다.²³⁰⁷⁾ 경제원조는 교역, 정부의 지원, 적십자의 지원, 민간단체의 지원, UN을 통한 지원, 금강산 관광사업을 통한 지원 등으로 분류된다. 금융위기를 겪었던 “국민의 정부”는 IMF 외환위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액의 지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후 정부차원의 지원, 민간차원의 지원, 인도적 지원, 금강산 관광사업, 남-북교역의 증가 등이 급속히 증대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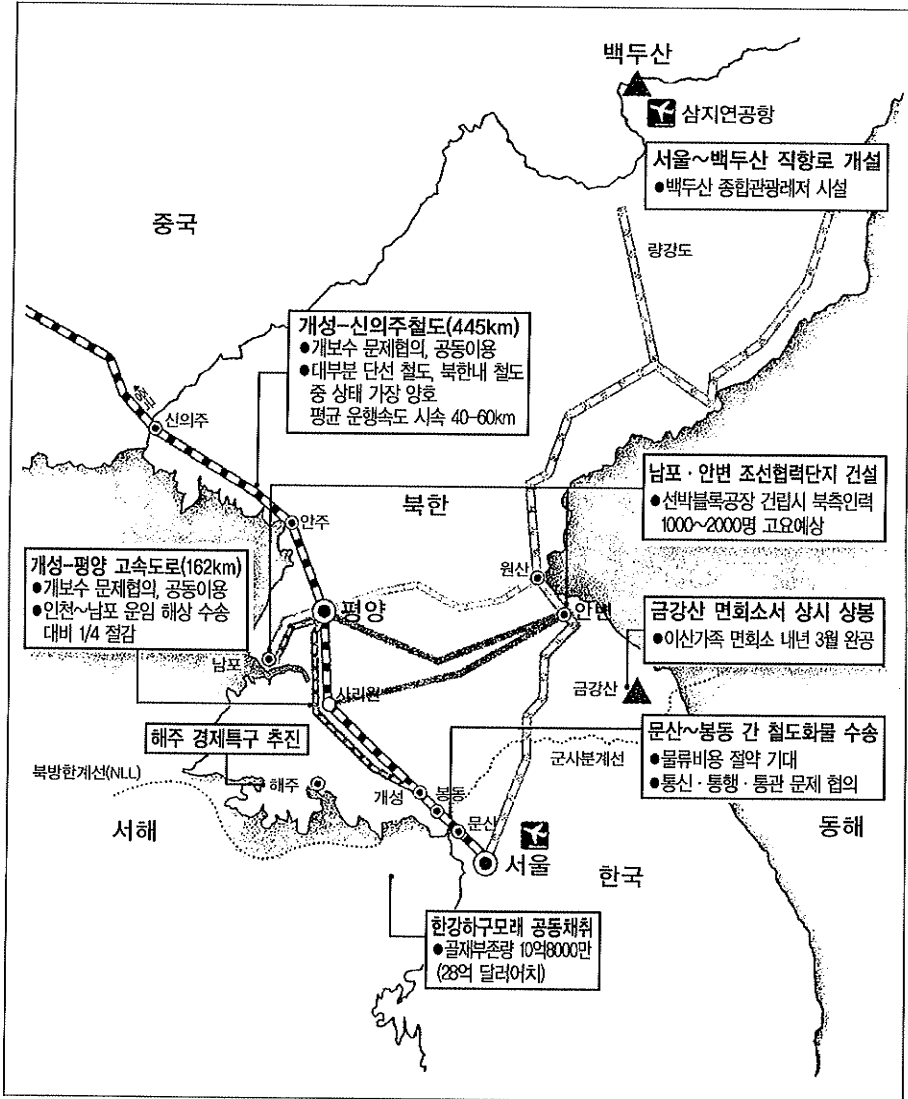
이렇게 놀라운 정치·사회적 변동이 남-북 간에 일어났다고 하여 휴전선상에도 이에 조용하는 평화의 기운이 감돌고 통일의 서풍이 비추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 특히 청년들의 대북관(對北觀)과 통일관, 국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급속히 바뀌어갔다. 김정일정권의 본질도, 핵 개발계획의 위험성도 짚그리 잊어버린 양, 흥분하며 안일한 자세로 감상주의, 또는 무관심 상태에 빠져들어 갔던 것이다.

햇볕정책이 나온 지 얼마 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튼튼한 안보기초 위에서”, “상호주의와 투명성 보장” 등의 말을 잊지 않고 있었지만 뒤에 와서는 그런 말이 차차 들려오지 않았다. 얼마 뒤부터는 그런 발설을 하는 사람은 “보수적” 야당이거나, “극우적 반(反)통일세력”이라고 하여 비판을 받는 상황이 되어갔다. 세계에서 가장 반동적인 세습독재, 전체주의 정권의 본질을 모르고 경망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진보적”으로 불리우는 어이없는 세상이 나타났다. 김대중정권이 선전하는 감상적, 주관주의적, 독단적 햇볕정책이 사람들의 의식을 희미하게 만들고 소위 “안보불감증”이라는 증상(症狀)을 퍼뜨렸던 것이다.

그러면 김정일정권은 어떠한가. 남한에서는 그들 내부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곧 변할 것이라고 몽상에 빠져든 사람들도 있었지만, 김정일 일파의 기본적인 입장은 확고부동했고, 변하지 않았다. 김정일은 북한의 변화를 내심 희구하는 당원들을 향하여 “나에게 어떤 변화도 기대하지 말라”고 단호한 경고를 보냈다. 북한은 식량과 비료를 지원해준 김영삼의 “문민정부”에 대하여서도 집요한 음해 파괴공작을 지속했다. 이런 공작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햇볕정책의 가치를 들고 화해의 신호를 보내는 김대중 정부에 대하여 1999년 6월 북한은 해상도

2307) 통일원 당국의 한 통계에 의하면 김대중 정부 60개월(1993. 3~2003. 2)의 대북 원조(정부 및 민간차원 종합)의 규모는 총 5,990억원(47,625만 달러)에 이른다. 연 평균으로는 9,525만 달러다.

지도로 보는 2007 남북정상선언



출처 통일부

발로 답례했다. 반세기 동안이나 북한의 인정 하에 유지해온 대한민국의 북방한계선(NLL)을 북한 선박이 무단히 넘어 남하를 계속했기 때문에 우리 해군과 충돌하는 사태가 일어났던 것이다. 며칠 뒤인 6월 15일, 한국전쟁 후로는 최대의 전투였던 이른

바 “서해교전”이 발발했던 것이다.²³⁰⁸⁾

제3절 김정일의 신(新) 군사파시즘과 부시의 강경책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의 유화정책을 틈타 계속 핵개발 계획을 밀고나갔다. 그리고 서해 북방한계선에서의 북한의 고의적 도발은 한동안 그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UN군사령부나 한국 국방부가 북한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면, 그런 사태는 “남측의 계획된 전쟁 도발책동에 의해 일어난 것이며 남측은 사죄해야 한다”고 뒤집어씌우는 상투적인 대답뿐이었다. 이것이 김정일의 군사외교방식이었다. 이러한 벼랑 끝 외교 뒤에서 북의 핵 개발계획은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국민의 정부”가 내세우는 햇볕정책은 바뀌지 않았고, 세칭 “퍼주기”식 방만한 대북지원은 지속되었다.²³⁰⁹⁾ 한-미-일 등은 김대중 정부가 베푸는 대북지원에 의하여 김정일을 변화시켜 그를 개혁·개방으로 유도할 수 있거나 않을까 은근히 기대해 보았다. 그러나 그런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다. 김정일은 “반동들이 떠드는 개혁 개방이란 공화국을 안으로부터 전복하여 자본주의 제도를 실시하려는 흉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번 소리높이 강조해 왔다. 남한이 북한에서 실시되기를 바라는 “시장경제”란 물론 자본주의 경제다. 자본주의 경제란 북한의 선전일꾼들에 의하면 한마디로 “마약”이며, “약육강식의 생존원리”요 “인간 증오사상”, “타민

2308) 그 결과로 북한 측의 어뢰정 한척이 격침되고 상당수의 군인이 전사한 것 이외에도 여러 척의 함정이 파손되는 참패를 당했다. 한국 측이 판문점 장성급 회담에서 도발에 항의하자 그들은 처음에는 묵묵부답 하더니 다음에는 “표류” 운운의 변명을 늘어놓다가 나중에는 남한 측이 저지른 “무장 도발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오히려 한국이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국민의정부는 북으로부터의 침투가 있자마자 길으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말하면서도, “정경 분리정책”에 따라 민간인의 대북 투자는 계속 허용한다느니, 햇볕정책의 기초는 계속 유지한다느니 하는 실로 어이없는 대책을 발표했다. 어떤 도발을 받아도 유화정책에 매달리고자 했던 것이다.

2309) 2001년도의 대북정부지원은 7천8만 달러(전년보다 10% 감소), 민간지원은 6천4백만 달러(전년보다 19%증가)에 이른다. 이 밖에도 국제사회가 2001년 8월까지 북한의 경수로(輕水爐)건설에 쏟아 붓은 돈은 6억3천8백만 달러나 되는데 그 중에서 한국의 담당 액은 4억4천7백만 달러(일본은 1억9천100만 달러)나 된다. 미국은 8월 말까지에 증유 30만8천(7천32만 달러에 해당)을 북한에 보냈다. 북한은 핵물질을 추출할 수 있는 원자로인 흑연감속로(黑煙減速爐)의 건설로 벼랑 끝 외교를 벌이면서 그 많은 돈을 공짜로 얻어낸 것이다.

족 배타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고 매도했다. 그러면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주야로 선전, “위대한 장군님”을 중심으로 일심단결하자고 외쳤다.

김정일이 추구하는 목표는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強性大國)”, 즉 전체주의적인 “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총대”(무력), 곧 군사력이다. 따라서 혁명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할 세력은 군대며 군대를 총 지휘하는 총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다. 이것이 선군정치(先軍政治)의 *이데올로기*적 핵심이다. 한마디로 김정일이 지향하는 것은 북한 판 “사회주의”로 포장한 신(新) 군사파시즘이라고 할 것이다²³¹⁰).

이 점을 무시한 김정일 체제의 이해(理解)란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드는 비운을 가져올 것이다. 북한은 전술적으로는 그때그때 시기에 적합한 신축성과 변용(變容)의 기술을 구사하지만 전략적으로는 확고하고 엄격한 일관성을 견지하고 있다. 여기서 궁극적 목표로 삼는 것은 무력(폭력혁명 포함)에 의한 남한의 흡수 통일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최강의 무력은 핵무기임으로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이

2310) 파시즘이란 1920~40년대에는 과격한 민족주의를 국제관계와 문화의 영역에서 제창하면서 단일 독재정당의 힘에 의하여 權威主義사회를 창조할 것을 외치는 *이데올로기*였다(프랑코, 히틀러, 뫼솔리니 등). 그런데 스탈린의 공산주의(맑스-레닌주의)는 파시즘을 맹렬히 반대하면서도 공산당 1黨의 지배체제, 全體主義 사회체제를 수립하고 국민을 통제-지배한 방법은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의 *나치즘*과 너무나 유사했다. 全體主義의 특징으로는 (1) 인간생존의 전 영역을 뒤덮는 하나의 공인 *이데올로기*, (2) 계층적으로 조직되고 단 한 사람의 “독재자”에 의하여 지도되며 주민의 극소수 (10%미만) 狂信徒로 형성된 단일 政黨, (3) 권력에 의한 *매스콤*의 독점, (4) 적대계급과 적대분자의 억압을 위한 공포체제의 확립(비밀경찰, 강제 노동수용소 등), (5) 폭력기구(비밀경찰·군대)의 독점, (6) 경제의 중앙집권적 통제(Carl J. Friedrich and Zbigniew K Brze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Comparative Politics, The Free Press 1963, Part VII, pp.464~474에 수록된 부분에 의거) 등을 例示.

그러나 공산주의는 유물론적 세계관, 계급적 역사관, 계급투쟁, 계급독재를 옹호하는 점에서 여타의 전체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북한의 경우는 1950년대에 “主體思想”을 강조해 온 이후로는 “민족”을 유달리 내세우고, 종래에는 금기(禁忌)로 되어있던 “民族主義”를 공공연히 강조했다. 그리하여 북한에서는 계급투쟁-노동계급독재란 말이 점점 *이데올로기*의 무기고에 감추어지고 있다. 오늘날의 북한 공산주의는 軍의 존재를 절대화하면서 일종의 軍事파시즘의 양상을 지니고 있다. 소위 “선군정치(先軍政治)”나 “총대사상”이니 하는 것은 과거에는 결코 허용될 수 없었던 개념들이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후 “제3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군대의 힘을 수단으로 하여 독재체제를 펴고 있는 정권들이 속속 출현했다. 이러한 나라들의 정치체제나 대전 전의 舊型의 군사독재에 비한다면 북한에서는 숨 막힐 정도로 경직화된 統治 *이데올로기*가 국가와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이 침투해 있다. 인민대중을 옥조어 지배하는 방법도 보통의 권위주의 국가에서처럼 결코 느슨하지 않다. 이 같은 북한의 정치-사회체제를 일반적 파시스트 통치와 구별하는 의미에서 新 군사파시즘이라고 규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런 사상을 기초로 하여 김정일은 핵개발 계획을 강행해온 것이었다. 그리하여 남북 정상회담이 빚어낸 화해의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김정일은 군대에 대하여 무력통일을 준비하라는 준엄한 극비 지시를 내렸다.

김정일은 선언하기를 “나의 통일관은 본질에 있어서 무력통일관”이며 “원썹들과는 반드시 한번 싸워 결판을 내야 한다”고 장담했다. 이어서 그는 “지금 일부 군인들은 정세 변화에 한눈을 팔면서 적(敵)과 평화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 이런 것이 점점 자라면 적을 적으로서가 아니라 벗으로 여기는 청맹과니가 되며 나중에는… 순간에 먹히울 수 있다”²³¹¹⁾고 경고했다. 그에 의하면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은 “미제(美帝), 남조선 괴뢰, 일제(日帝)다. 그리하여 당(黨)이 평화통일의 구호를 높일수록 군대는 총칼을 버려야(준비해야) 한다.”²³¹²⁾고 했다. 자기들은 이렇게 전쟁 불가피론을 엄연히 전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동신 전(前) 한국 국방부장관이 “북한 주적론”을 말하자 평양의 선전원들은 “호전적이며 도발적인 폭언”이니, “세상에서 가장 너절하고 추악한 인간, 자기 민족을 등지고 침략세력에 붙어사는 자” 운운의 욕설을 퍼부었다.

세간에서는 흔히 북한의 태도가 강경해진 것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지나치게 비난하고 특히 2002년 1월 29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그가 한 첫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악(惡)의 축(軸)”으로 호칭한 발언 때문인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북한이 대북 강경론자인 미국의 *부시*정권을 맹렬히 비방하기 시작한 것은 그의 “악의 축” 발언 9개월 이전부터였다.

일례로 2001년 4월 북한은 중상하기를 “*부시*는 집권 후 지금까지 침략과 전쟁을 꿈꾸고 평화를 파괴하며 세계 제패를 노리는 힘의 광신자”다. 그가 말하는 자유란 “미국식 행동의 자유, 다른 나라를 마음대로 침략하고 지배하며 자주권을 유린하는 초대국의 전횡(專橫)을 뜻한다”고 했다. 계속하여 미국의 대북 비판은 “미국 호전광(好戰狂)들의 무분별한 반(反)공화국 소동”이라고 매도하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부시*의 “독단주의”를 싸잡아 공격했다. 그리고 “미국 때문에 (*부시*의 취임 후) 지난 100일 동안 세계는 조용하고 편안한 날이 거의 없었다”고 그를 단죄했다.²³¹³⁾

2311) 「민족의 배신자를 용서할 수 없다」, 《로동신문》, 2001년 4월 30일자 논평.

2312) 북한군 내부 교육용 『학습참고자료(병사, 사관용)』, 주체89년 판 참고.

이 무렵부터 평양의 선전원들은 *부시*에 대한 총공격에 나섰다. 북한의 선전에 의하면 미국은 자기들을 “불량배 국가”의 부류에 집어넣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이야말로 불량배 국가의 왕초”라는 것이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들려오는 북한의 대미 중상은 미국의 대북 비방의 백배도 더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부시*의 미국에 대해 “벼랑 끝 외교”의 곡예를 연출했다. 그들은 김일성 생존 시, 때로는 느슨해졌던 대미 냉전식(冷戰式) 외교의 고삐를 바짝 죄면서 사태를 “벼랑 끝”까지 몰고가는 수법을 구사했다. 이로써 김정일을 달래려는 국제사회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여 왔다. 그런데 김정일의 그런 수법이 *부시*정권에게도 과연 통할 수 있었을까. *부시*는 2000년 2월에 방한했을 때 한-미 정상회담과 도라산(都羅山)역 연설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표면상 적극 지지하면서 미국정부는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확인했다.²³¹⁴⁾ 이와 동시에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미사일*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고 협상의 손짓을 했다.

제4절 대북 유화정책(宥和政策)의 평가

한편 *부시*는 외교적 수사(修辭)도 털어버린 채 북한정권을 “주민들이 굶주림을 방치하는 정권, 투명하지 않고, 외부와 단절된 정권”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는 “어떤 국가도 주민들에게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남북의 한국인 누구도 정권의 한 기계적 부속품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단호하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들이 가장 위험한 무기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종래의 결심을 다시 피력했다.²³¹⁵⁾ 그렇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부시*와는 달랐다. 김 대통령은 김정일이 2001년도 상하이(上海)를 방문하여 첨단산업 시설을 돌아보고 그 발전상에 놀라 “천지개벽”이라고 감탄했다는 사실에 대해, 김정일이 개방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고 하면서 북한도 “나름대로 이 개혁 개방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2313) 《평양방송》, 2001년 4월 30일.

2314) 「*부시* 美 대통령 연설문」(도라산. 모두 연설 《자유공론》, 2002년 3월호, 그중의 p. 96.

2315) 「*부시* 美 대통령 연설문」(도라산역 연설문), 같은 책, p. 101.

분명하다”²³¹⁶⁾고 김정일을 잘못 해석했다.

거꾸로 북한 자신은 자기들의 정책노선이 “개혁 개방”이니 “변화”니 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여러 번 공표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이 계속 변화의 길을 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확인하기를, 자기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은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이 필요하다는 자기의 주장에 “동의했다”고 하면서 북한은 50년에 걸쳐 한결 같이 주장해 오던 주한미군 철수 정책을 이제 공개적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으로 속단했다. 그런데 평양으로부터 그런 소리는 단 한마디도 들려오지 않았고, 들려온다는 것은 “남조선을 강점(強占)한 미제(美帝)의 침략군을 철거시키라”는 대미(對美) 공격 선전뿐이었다. 김정일이 미군철수 문제에 관하여 완전히 거짓 “동의”를 했거나 아니면 김(金)대통령이 그런 말에 속은 것이 분명하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2월, 일본 TSB-TV와의 특별회견에서 김정일에 대해 “판단력과 식견을 상당히 갖춘 지도자”라고 높이 평가했다.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한 말일까. 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7월에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紙)와의 회견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서방의 평가는 크게 왜곡되어 있다. 대화 상대로서 그에게 신뢰감이 생겼다”고 칭찬했고, 다음 8월 광복회원 초청 청와대 오찬 석상에서는 “김 위원장은 북한 지도자 가운데서 가장 개혁을 하려는 사람… 대화가 되는 사람이고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다시 추켜올렸다. 실로 경악할 말이다. 그의 김정일을 보는 눈이 이렇게 흐려져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30여년이나 정력을 쏟아 추진해온 핵무기 개발계획은 보이지 않았으며, 이에 관해서는 함구무언(緘口無言)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돈과 물자를 퍼주고 있었던 것이다.

김대중정권의 대북정책은 일종의 “유화정책”(“宥和政策” appeasement policy)이라는 비판을 많은 국민들로부터 받아왔다. “유화정책”의 본래적 의미는, 간단하게는 “평화를 획득하기 위하여 적의를 품은(hostile) 요구에 양보하는 정책”²³¹⁷⁾이다. 유화정책

2316) 미 기업연구소·외교협회 공동주최 오찬연설, 「한반도 냉전종식과 화해협력의 새 시대를 위하여」, 《자유공론》 2001년 4월호, pp. 28~29 참조.

2317) *The Concise Oxford Dictionary of Politics*, 1996, p. 17. 그중 유명한 사례가 1938년 英國 수상 *첼벌린*과 *히틀러* 사이에 체결된 「*뮌헨協定*」이었다. *첼벌린*은 *獨逸軍*에 의한 *체코슬로바키아*의 영토 병합을 묵인하는 대가로 *유럽*의 평화를 유지해 보려고 했다. 그러나 허망하게 실패하고 말았다. 이것이 20

은 국제정치에서 널리 적용되어온 것으로서 군사력으로 자기의 정치적 야심을 달성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잠재적 침략자 또는 침략국에 대하여 부분적 양보나 일시적인 타협으로 그들을 달래면서 전쟁의 회피를 도모하는 고식적(姑息的) 대외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정권의 경우 대북 유화정책이란 북한에다 돈(경제원조)을 퍼주고 평화를 사보려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위에서 분석한 김정일정권의 대남공세에 비추어 볼 때 그런 유화정책이란 결국 파산을 면치 못할 운명에 있었다. 김대중정권은 자기들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포용정책이 “유화정책”이 아니라고 누누이 변명한 바 있지만 그는 북의 잠수정이 동해를 누비고 남파(南派) 무장공작대가 대한민국의 영토를 제멋대로 침입해도 김정일에 대하여 당연히 해야 할 항의도 못한 채 정상회담만을 하수고대하면서 북의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했다. 정상회담이 있는 후에 남-북관계의 개선에서 팔목할 만한 업적을 거두지 못할까봐 전전긍긍, 계속 퍼주기에 바빴다.

1995년에서 2003년 초까지 한국정부의 대북 경제지원 총액은 총 5억3,496만 달러(5,053억 원)에 이르며 이에다 민간차원의 지원까지 합치면 총 7억8,436만 달러(8,590억 원)이나 된다. 이 거액의 원조를 북에다 퍼부었지만 남-북 관계는 근본적으로는 개선되지 않았고 김정일정권은 미사일 생산과 핵무기개발에 열을 올리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왔다. 김대중의 대북정책이 “유화정책”이 아니라면 무엇이었다고 규정할 수 있을까.

“햇볕정책”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자 김정일의 선전원들은 햇볕정책이 외국의 이/습우화에서 전용(轉用)되었다는 점에 트집을 잡고, 이것은 “남의 옷”을 빌려 입고 나온 꼴이라고 야유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주체의 옷”, “자주의 옷”, “조선의 옷”을 입고 사는데 남조선 당국자들이 입은 옷은 미-일 상전이 만들어 준 “사대 매국의 옷”이라고 멸시조로 풍자했다. 대화상대자에 대한 이러한 경멸적인 풍자는 단지 풍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그들의 정략의 본질이 함축되어 있다. 1999년 11월 14일자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의 「글」로 되어 있는 이 선전문서는 김일성의 소위 “조국통일 3대헌장”(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최고의, 최후의 진리인양

세기 유화정책의 대표적 비극의 예였다.

찬양하면서 햇볕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소위 “혁명적 사상공세”라는 것을 펴고 있었다.

햇볕정책은 이전 소련을 붕괴시킨 미국의 평화적 이행정책(平和的 移行政策)의 모조품이라는 의미에서도 그 (김대중)의 반(反)민족성을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 햇볕논리는 본질에 있어서 대결의 논리이며 낡은 시대의 냉전논리다. … 오늘 남조선의 민심은 위대한 태양(김정일)을 따라 흐르고 있다. 이 태양 앞에서 남조선 당국은 반딧불보다도 못한 가짜 햇볕으로 사람들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 [남조선 당국자들이] 사대매국의 옷을 벗지 않고서는 조선사람의 구실을 할 수 없으며 조선사람의 체모도 깎을 수 없다. 사실 이러한 상대와 함께 민족과 애국을 논할 수 없고 나라의 통일도 논할 수 없다. …²³¹⁸⁾ (밑줄은 필자)

그렇다면 한국의 국민과 정부는 김정일로부터 무슨 말을 더 이상 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남-북 관계에서 돌파구는 열어야 했다. 그간의 지극히 모욕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김대중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차원과 관점과 접근의 방법을 바꾸어 새로운 타개책을 모색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김대중 대통령은 오히려 자기가 제창한 “햇볕정책”이 북한에 의하여 거부될 때는 정권은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내심 우려했다. 이와 함께 역사적인 남-북간이 화해-협력 정책을 기어이 성공시켜 통일로 이끌고 나가야 한다는 정치가로서의 욕망이 뒤섞인 가운데 그 일파는 무모하게 대북지원정책을 추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임 대통령 노무현(盧武鉉)은 누차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알박한 낙관주의의 타성(惰性)에 끌려가던 김대중정권은 퇴진했다. 그의 재임 중 김정일은 서울 답방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걷어치우면서 대한민국에 외교적 치욕을 안겨주었다. 그는 자기의 그런 행동에 대해 형식적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

남-북 정상회담을 돈으로 사기 위하여 김대중정권은 ‘현대아산’을 통하여 5억 달러를 극비리에 외국은행을 통하여 김정일에게로 송금했다. 이밖에도 150억 원의 “현대아산”의 비자금의 행방불명된 채로 남아있다. 정부의 후원을 믿고 대북사업에다가 무리한 투자를 해오다가 파산지경의 이른 ‘현대아산’의 정몽헌(鄭夢憲)회장은 2003년

2318) “누군가 벗어야 하는가” - 햇볕정책 다시 한 번 논함, 1999년 11월 11일자, ‘조평통’ 서기국이 발표한 「글」.
同日字 《조선중앙방송》

8월 4일 의문의 자살로써 생을 마감했다. 이 비극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제4장

핵위기(核危機)의 중폭

제1절 켈리 특사의 평양 방문

앞에서 논급한 바대로 한반도에서의 제1차 핵위기는 1993년 3월 9일 북한이 영변의 7개 핵 시설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을 거부하고 12일에는 드디어 NPT탈퇴를 선언한 사건이 그 발단이 되었다. 이에 맞서 IAEA가 4월 6일 북한 핵의혹 문제를 UN안전보장이사회에 부탁(위탁)하면서 남-북(북-미)의 긴장상태가 극도로 첨예화(尖銳化)되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제2차 위기는 발생했던 것이다. 이 대립은 북-미 간에 잠정적 타협이 이루어져 1994년 10월 *제네바*에서는 「북-미 기본합의」가 조인되고 1995년 3월에는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의 설립을 보게 되었다. 이로써 1년 반이나 지속되어 온 제1차 핵위기는 해결의 가닥이 잡히고 있는 듯 했다. 한반도에는 피상적으로 볼 때는 잠시 평온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배후에서 비밀리에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강경-온건의 외교전술로 미국을 조종하려 들었다.

북한의 핵개발에 깊은 의혹을 품고 있던 미국은 “당근”과 “채찍” 정책을 번갈아 조절해 가면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려 하였다.²³¹⁹⁾ 미국은 1979년경부터 북한이 *파키스탄*에다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우라늄* 농축기술을 입수해온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 사실이 끝내 비밀에 부쳐져 *파키스탄*-북한 간에 핵 밀거래가 계속된다면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는 기만의 문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제네바* 「북-미합의」

2319) 북한의 “벼랑 끝” 초강경 외교는 한-미 양국에 핵 공갈로 핵전쟁의 위협을 가했으나, 그들의 핵무기는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는 사실상의 無用之物이나 다름이 없었다. 한편 미국의 對北 “당근”과 “채찍”정책도 북한이 유혹에 빠지거나(당근), 굴복(채찍)하려 하지 않는 한 그 효과란 극히 미미한 것이다. 양자는 모두 사실상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는 한반도의 평화를 희망하는 사람들 모두가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는 언제, 어떤 계기에 의해 핵폭발력을 분출(噴出)할런지 아무도 모르는 거대한 휴화산(休眠火山)같은 존재에 의하여 위협을 받아왔다.

그런데 가공할 두 번째 핵위기가 급속히 다가오고 있었다. 2002년 10월 3일~5일 미국 대통령 특사로써 평양을 방문한 제임스 켈리(James Kelly, 국무부 아태(亞太) 담당차관보)는 3일과 4일 두 차례에 걸쳐 김계관(金桂寬) 북한 외무성 차관, 그리고 강석주(姜錫柱) 제1외무차관과 협의를 가졌다.²³²⁰⁾ 주요한 부분은 북한의 *우라늄* 개발계획에 관한 양측의 발언 내용이었다. 켈리는 여기서 북한이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정책을 바꾼다면 미국은 북한 인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하여 “긴요한 경제적, 외교적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이른바 “당근”의 제공을 제안했다. 동시에 그는 “하나의 전제조건이 생겼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미국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濃縮) 개발계획을 정력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것은 한반도의 비핵화(非核化)를 약정한 「북-미 기본합의」를 비롯한 몇 개의 국제협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중대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북한 정부는 그 책임을 주의 깊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²³²¹⁾

잠깐 동안의 *커피 브레이크*에서 돌아온 김계관은 “사람이 변한 듯이 켈리에 대하여 공격적 태도로 바뀌었다.” 김은 반박하기를 “그러한 계획은 없다. 적대세력(敵對勢力)에 의한 날조비난(捏造非難)이다”²³²²⁾라고 역습했다. 그는 계속하여 “미국이란 나라는 있지도 않는 것을 있는 듯이 주장한다. 금창리(金倉里) 때도 그렇지 않았는

2320) 켈리가 이 자리에서 이들에게 한 미국의 對北韓 정책의 설명은 공식적 외교문서로는 남아있지는 않다. 그러나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전해 온 바로는 그는 북한의 (1) 대량학살 무기,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미사일* 수출, 재래식 병력의 배치, (2) 북한의 인권탄압과 비참한 인도주의적 상황 등에 관해 언급하고, 이러한 “우려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했으며, 북한이 그렇게 노력할 경우에는 美-北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논의했다고 한다. 특히 켈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 및 수출에 따른 위협을 해결하는 것이 긴급하다”는 미국의 입장을 강조했다. (北韓研究所 발행, 『北韓總覽』(1993~2002), pp. 321~322).

2321) 켈리는 준비된 발언록을 읽듯이 한 마디 한 마디 도박 도박 쉽게 설명했다. 船橋洋一, 『ベニンシェラ・クエション-朝鮮半島 第二次核危機』, 朝日新聞社, 2006年, p. 155. 일본의 저명한 저널리스트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는 당시의 광경을 마치 그 자리에서 목격이나 한 듯이 많은 관계자와의 면담에 의거 자세히, 흥미진진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때 김계관은 혀를 찰린 듯이 약간 동요하는 기색을 보였으나 곧 평정을 되찾고 *커피 브레이크*를 제안했다고 한다.

2322) 같은 책, p. 156.

가. …그렇다면 HEU(고농축우라늄 계획)의 증거를 여기에 내 놓으라”고 다그쳤다. 이에 켈리는 “만일 내가 여기서 모든 [북의] 농축우라늄 핵개발 관련정보를 말해주면, 북한은 그것을 은의하는 일을 더욱 쉽게 할 따름입니다”라고 비꼬아 말하면서 “일인 지하에 거절했다”²³²³⁾는 것이다.

다음 날인 10월 4일 오후 켈리는 강석주(북조선 제1외무차관)과 회담했다. 이야기는 처음부터 격앙되어 갔다. 강(姜)은 “독백(獨白)에 가깝도록” 미국을 강한 어조로 비난한 후, HEU에 언급했다. 켈리는 강(姜)의 말에 관해 자기 측의 오해가 없도록 확인하기 위하여 그가 한 말을 한 번 더 반복하도록 부탁했다. 강(姜)은 응낙을 하고 명백하게 아래와 같이 확인했다.

부시정권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대하여 적대시정책(敵對視政策)을 취하는 이상, 우리가 고농축우라늄 계획을 진행시켜서 무엇이 나쁜가. 이것은 [우리를 공격하려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대한 억제력(抑制力)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²³²⁴⁾

이에 대해 켈리는 “북조선은 부시정권 탄생 훨씬 이전부터 그것(고농축우라늄)을 추구해오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강(姜)은 그의 말을 무시했다. 양자 간에는 여러 번 언쟁이 있었으나 켈리는 북한 측에 결론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제시했다. 즉 켈리의 북한에 대한 요구는 (1) HEU계획을 중단하라, (2) 「북-미 기본합의서」에 따라 플루토늄 재처리의 동결(정지)을 계속한다, (3) 미국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찰과 검증조치를 받아드려야 한다…는 세 가지였다.²³²⁵⁾ 북한이 이것을 수락할 만큼 평화적은 결코 아니었다. 강(姜)은 “「북-미 기본합의」는 미국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무효화 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언명하고, 농축 우라늄은 미국과 자기들 양자가 교섭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그리고 “만일 미국이 북조선에 대한 적시정책(敵視政策)을 포기한다면, 미국이 지니고 있는 우리들의 핵계획에 대한 우려를 제거하는 노력을 해도 좋다”²³²⁶⁾고 북핵

2323) 같은 책, p. 156.

2324) 같은 책, p. 148.

2325) 같은 책, p. 149.

2326) 같은 책, p. 149.

문제를 한-중-일-러 등의 주변국들을 제외하고 미국 하고만 협상함으로써 국제적 지위를 높이겠다는 엉뚱한 야심을 들어냈다.

그러면 북한이 끈질기게 요구하는 부시의 “대(對) 조선 적대시정책의 포기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것은

- 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을 인지(認知)한다.
- 2) 북조선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 3) 북조선의 경제개발을 방해하지 않는다(북조선에 대한 금수(禁輸)를 해제 하고, 일-북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것).
- 4) 경수로의 건설 지연을 보상한다.²³²⁷⁾

강(姜)은 여기서 “최고지도자급의 협의에 의한 해결도 생각할 수 있다”고 회답의 레벨을 높여 무엇을 얻어내려는 기색을 보였다. 이것을 간취한 켈리는 더 이상 회답을 계속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아무 예고도 없이 자리를 떴다. 그리고 5일 순안(順安) 공항에서 남한의 오산(烏山) 기지로 향했다. 서울에 돌아 온 켈리는 주한 미(美) 대사관 직원들과 만나고 한국정부의 요로들과도 회답을 했다. 모두가 그의 입을 쳐다보면서 좋은 소식을 기대했다. 그러나 켈리가 압축해서 한 말, 즉 “북한은 HEU 개발계획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다”(즉 시인했다)는 내용에 모두 놀랐다²³²⁸⁾는 것이다.

켈리의 방북 결과를 보고 받은 부시/행정부는 켈리-강석주 회답 내용의 골자를 “일본-한국 측에 전해주었으나 공표는 하지 않았다.”²³²⁹⁾ 세계의 예민한 관심사는 북한의 핵무기 유무(有無)의 수수께끼였다. 미국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켈리가 강석주에게 북한이 우라늄 고(高)농축장치의 개발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자 북한은 우라늄 농축계획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 서방세계의 광범한 여론이었다.²³³⁰⁾ 이 보도로 말미암아 IAEA는 발각 뒤집혔다. 이 같은 북한의 방약무인

2327) 같은 책, pp. 148~149.

2328) 같은 책, p. 159.

2329) 같은 책, p. 169.

2330) 미국 정부는 정부 대변인과의 회의 성명을 통하여 이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그런데 어떤 외교상의 이유에서인지 증거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進歩派”들이 북한을 감쌀 수 있는 빌미를 주었

(傍若無人)한 행동은 스스로가 조인한 일련의 핵무기 개발금지에 관한 협약을 버젓이 깬다는 것, 요컨대 세계 평화에 대한 배신행위였기 때문이다.

며칠 후부터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하는 논평-성명-UN결의 등이 쏟아져 나왔다. 여기서 북한은 갖가지 비난과 함께,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핵농축 *우라늄* 개발계획의 존재를 모호한 말로 부정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핵 외교의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아니면 미숙한 속임수가 들어난 것이다. 10월 16일 밤에는 미 국무부 보도관 리처드 바우처(Richard Boucher)가 「긴급성명」의 형식으로 북한의 핵농축 *우라늄* 개발계획을 공표했고, 다음 날인 10월 17에는 이례적(異例的)인 일이었지만 미 국무부가 직접 성명을 발표했다. 길지 않은 이 「국무부 성명」은 미국의 기본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중요한 문건이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²³³¹⁾

(1) 미국의 대통령 특사 팀은 북한이 핵 개발에 필요한 *우라늄*을 농축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점을 북한 측에 설명했다. 북한관계자들은 핵무기 개발계획을 시인했다.

(2) 북한은 미국을 비난하려 들었으며 *제네바* 협정이 무효화 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3) 미국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탄 *미사일*의 개발 및 수출, 주변국에 대한 위협, *테러* 지원, 북한 주민에 대한 비참한 처우 등과 같은 현안에 대해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꾼다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경제적·정치적 조치를 제안할 용의가 있다.

(4) 북한의 비밀 핵무기 계획은, *제네바* 협정과 핵 확산금지조치(NPT), IAEA의 합의들,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한 공동선언」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5)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을 준수하며,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핵무기 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된 것이다.

2331) 「미국 국무부 성명」 전문은 박 진 지음 『박 진의 北核 리포트』, 한국경제신문, 2003년, pp. 27~28). 한국의 외교통상부도 미(美) 국무부와 발을 맞추기 위하여 같은 날 북한의 비밀 핵 개발계획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성명은 북한 핵에 관한 모든 문제들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런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김정일이 아니었다. 「한국정부 성명 전문」은 같은 책, p. 26.

(6)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하여 “평화적인 해결”을 희망한다.

제2절 고농축(高濃縮)우라늄 계획 공방(攻防)

북한은 그 동안 발표한 자기들의 입장을 정리하여 2002년 10월 25일, 「외무성대변인 담화」라는 형식으로 발표했다. 이 「담화」는 외교상의 문건이라기보다는 욕설과 규탄과 비방으로 가득 찬, 막말로 내 뺀 일종의 성토문이었다. 그 중에서 북한의 핵 외교정책의 기초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을 추려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²³³²⁾ (이하 인용문 끝 []안의 부분은 저자의 단평)

(1) 변화하는 현 정세 속에서 우리는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털어버리고 “평등한 입장”에서 핵 안전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얼마 전 미국 대통령의 특사 (제임스 켈리)를 받아들였다.[여기서 새삼 “평등한 입장”을 강조한 것은 북한은 남한처럼 미국의 종속국이 아님을 자부한다는 의미].

(2) 그러나 미국은 특사 방문을 통해 우리들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것을 확인케 하였다. 미국특사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우리들이 핵무기 제조를 목적으로 농축 우라늄 계획을 추진하여 “북-미 기본합의문”을 위반하고 있다”고 겹고들면서, 그렇게 되면 북-일관계나, 북-남관계는 파국상태에 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이 말은 미국에 대한 우회적 협박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너무도 일방적이고, 오만무례한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미국 특사들에 대한 비난은 핵문제의 책임을 “교만한” 강대국 미국에 지우려는 궤토라]이다.

(3) 그러나 이러한 “적반하장(賊反荷杖) 격의 강도적(強盜的) 논리가 우리에게 통할 수 없다”[극악무도한 미국에 대한 철저한 항쟁의 의미를 다짐 한 것].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금세기 동안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에 따라 조선(북한) 적대시 정책을 추구하면서 그 주변지역에 방대한 핵무기를 저축해 놓고 작은 나라인 우리나라를 핵무

2332) 「외무성 대변인 담화문」(2002. 10. 25), 전문은 통일연구원 편,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2007년, pp. 118~120.

기로 위협함으로써 진행된 문제다.”[오늘의 한반도의 핵문제는 북한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고, 미(美) 제국주의가 오랜 기간을 통하여 한반도에서 추구해온 “폐권주의적 전략의 산물”이라고 역사를 왜곡했다].

(4) 「조-미 제네바기본합의」의 이행(移行)문제에 있어서 특히 “발전소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전적으로 미국의 탓으로 돌리고 2003년에는 연간 100만 KW의, 다음 해 부터는 연간 200만 KW의 전력 손실을 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IAEA(특히 한-미)가 고의로 저지른 일도 아니었다. 발전소 건설의 지연에는 거의 모든 책임이 북한 측에 있다²³³³].

(5) 미국은 「북-미 기본합의」에서 쌍방은 정치-경제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 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개선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8년 동안 미국은 “대(對) 조선 적대시정책과 경제 제재를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제재는 바로 김정일 일파가 자초한 것이었다.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고, 위조 달러, 마약, 양주, 가짜 담배, 돈 세탁 등을 국가사업으로 밀거래 하다가 들통이 난 김정일 일파의 불법행위는 국제적 규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6) 부시/ 행정부가 우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핵 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로서 “우리의 생존권은 사상 최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 있으리라고 생각했다면, 그보다 더 단순한 사고는 없을 것이다”[이렇게 북한은 결사 투쟁의 각오를 선언하면서, 핵무기 제작의 강행을 암시했다].

(7) 우리는 미국의 “가중되는 핵압살 위협”에 대처하여 우리가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었다.”[여기서 북한은

2333) 북-미는 200MW급 輕水爐의 건설을 2003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에 합의했으나 이것은 “처음부터 정치적인 합의에 의하여 설정된 목표였으며 法的인 완공기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당시 KEDO 사업에 참여했던 한국인 중의 한 간부는 증언하고 있다. 또한 그에 의하면 경수로의 모델을 선정하는 데도 북한의 고집 때문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그 외에 경수로 건설의 부지 내의 항만, 도로, 전기, 수도, 골재 채취장, 근로자의 숙소 등을 모두 건설해야만 했는데 이에 소요된 시간이 결코 적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현지에서 인력과 물자, 장비를 조달하고 반출할 때도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는 등 사소한 일로 소모되는 시간이 너무 많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1996년 6월 북한 잠수함의 강릉 침투사건으로 말미암아 경수로 부지 조사 사업이 “3개월이나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이용준, 『북한핵-새로운 게임의 법칙』, 2004년, 조선일보사, pp. 171-172.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아직 명백히 공언(公言)하지는 않았지만 곧 핵 국가가 되어 미국을 격파한다는 결의(決意)가 역력히 반영되었다.

(8) 우리가 (핵)무장을 놓은(해제한)다음에 협상하자는 미국의 주장은 “매우 비정상적인 논리다” 우리가 “벌거벗고 무엇을 가지고 대항한다는 말인가” 결국 우리보고 굴복하라는 것이다.[이 말은 선전포고 전야의 경고문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9) 미국이…우리에 대한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인한다면 우리도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북한은 이런 말로써 대북 핵공격을 일으키려는 것은 미국이라고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협상의 문을 조금은 열어 놓으려 했다.]

2003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고 물러나면서 노무현정권이 들어섰다. “참여정부”를 자칭한 노무현정권은 김대중정권의 대북 햇볕정책을 답습한다고 언약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은 김대중정권 때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북에 동조하였다. “386세대”로 불리우는 청장년들을 주요 기반으로 하는 노무현정권은 정체가 모호한 “포퓰리즘”(populism, 대중영합주의)과 설익은 “진보”이념에서 상당수의 청년 학생, 서민층의 지지를 받으면서 출범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기성세력을 혐오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정책, 보안법 등을 “보수”, “반동”, “수구”라고 하여 배척했다. “참여정부”는 어느새 반미-친북 인사 및 기회주의적 인물로 채워져갔다. 김정일은 처음에는 이들이 친미정책(親美政策)으로 기울어지지 않을까 의심하여 노무현정권에 강한 정치적 압력과 이데올로기적 비판을 가해왔지만 이들의 반미-친북적 파토스를 감지한 탓인지 얼마 후부터는 퇴입하는 시각(時刻)까지 일체의 비난을 삼가고 있었다.

그렇지만 정권의 어떤 요인(要人)이 대한민국 국방의 중요성이나 미국과의 협력을 말하기만 하면 가차 없이 그를 중상했다. 노 대통령은 “평화”를 위해서라는 명분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을 일부러 모호하게 또는 명시적으로 은근히 두둔하는 발언을 해왔다.²³³⁴⁾ 이에 따라 “퍼주기 식”으로 마구 선심을 쓰는 놀랄만한 액수의 대북

2334)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중 주목을 끄는 중요한 대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金成昱, 『노무현의 亂』, 2007년, 조갑제 닷컴, pp. 185~187. 참조.

-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며 남한의 지원 여부에 따라 핵개발을 계속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2006년 5월 29일 향군지도부 초청 회담. 밑줄은 필자).

경제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그는 임기 말까지 김정일의 거센 비난의 대상은 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다. 노무현의 대북정책의 선구자는 김대중이었다. 이 두 집권자의 재임 기간 중에 사용한 대북 공식 지원액은 총 8조 6,178억 원이나 되는 놀랄만한 숫자다. 그중 김대중 정부의 대북 사업비는 2조 4,744억 원이었지만, 노무현 정부 때에는 거의 두 배 가까이로 뛰어올랐다. 즉 총 4조 5,717억 원에 이르렀다.²³³⁵⁾

이 지원 항목 중 상당부분은 무상(無償)이 아니라 차관형식(이를테면 식량차관, 자재정비차관, 경수로차관 등)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들은 되돌려 받을 수 없는 부실 채권이어서 실제로는 무상원조이다. 이 퍼주기식 지원에서 “투명성”은 거의 명사되어 있지 않고 있다. 핵무기 개발에다 막대한 돈을 쏟아넣어야 하는 김정일은 실로 황제를 한 셈이다. 이 밖에도 ‘현대아산’ 측이 북한 측에게 1999년~2007년(8월) 사이에 금강산 관광 입장료로 지불한 현금액은 무려 4억 6,564만 달러에 이른다. 이렇게 노무현 정부 4년반 동안 남북왕래 인원은 무려 7,000여명으로 늘어났다. 김영삼 정부 때에는 1,733명에 불과했던 숫자에 비하면 실로 격세지감(隔世之感)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의 상황변화는 결코 남-북 간의 긴장완화나 화해, 진정한 협력의 길조(吉兆)는 아니었다. 남-북 교류의 선전이 요란하면 할수록 김정일은 미/사일-핵무기의 개발을 강행해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대통령은 김정일을 옹호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특히 그의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2007년 9

-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북한은 도대체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것은 [회담을] 깨는 것입니다.”(2005년 9월 17일 기자회견)

-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은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6자회담 당사국들, 나아가 전 세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2004년 11월 12일 미국 LA 방문 중. 밀줄은 저자)

- “북한의 핵실험은 아무런 징후나 단서를 갖고 있지 않다.”(2006년 9월 18일 판문도에서. 밀줄은 저자)

2335) 이 숫자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2007년 10월 8일 통일부에서 입수한 對北支援現狀資料를 분석한 것이다. 그런데 대북 지원액에는 통일부 자료에 들어있지 않는 돈까지 합치면 10조원이 훨씬 넘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推算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극비리에 北으로 송금했던 4억5,000만 달러(약 4,150억원)가 빠졌다는 사실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東亞日報》, 2007년 10월 9일자 P.A8기사 “현 정부 북 지원규모 DJ때의 두 배” 및 2008년 1월 10일자 《朝鮮日報》 P.A11 기사, ‘퍼주기 햇볕은 그만...’ 참조. 김영삼 정부 5년 동안의 대북 지원액 8,412억원(남-북 협력기금 사업비 6,098억원 + 인도적 지원 2,314억원)에 비하면 노무현 정부가 같은 5년 동안에 사용한 금액은 김영삼 때의 10배가 넘는 것이다.

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북핵 문제에 대하여 “이미 풀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사태를 거꾸로 설명하고 “북핵폐기가 순조롭게 마무리 될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적 전망을 내보였다. 이어 그는 [이런 때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북핵 이야기 하라는 것은 가서 싸우고 오라는 뜻 아닌가”²³³⁶⁾ 라고 자기의 대북 핵무기 규명 기피의 태도를 밝혔던 것이다.

제3절 제2차 핵 위기의 진감(震撼)

회고컨대 김영삼정권이 지속되고 있던 5년 동안(1993~98) 김일성은 극비리에, 전력을 기우려 *미사일*과 핵폭탄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이어 김대중정권(1998~2003) 말기부터 김정일의 핵무기 제작의 야망은 더욱 불타고 있었다. 이것을 탐지하고 저지하려는 미국이나 IAEA에 대해서는 전쟁불사(戰爭不辭)의 각오로 대들었다. *캘리* 특사가 방북(訪北)하여 김정일의 고농축 *우라늄* 개발계획을 확인한 지 40일 후인 2002년 11월 14일, KEDO 이사회는 이에 맞서 핵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협약을 위배한 북한에 대해 중유 제공을 중단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렇게 하여 북-미의 핵 외교 공방전은 다시 불을 뿜기 시작했다. 미국의 중유제공 중단에 대한 보복으로 그해 12월 21일 북한 당국은 IAEA가 김정일이 핵개발을 숨기지 못하도록 장치했던 영변의 핵시설의 감시 *카메라*의 봉인(封印)을 제거하는가 하면(2002년 12월 21일), 약 8,000개의 핵연료봉(核燃料棒) 재(再)처리 시설인 영변 방사화학연구소(放射化學研究所)를 재가동시켰다. 이어서 다음 2002년 12월 31일에는 IAEA의 사찰요원을 “미국의 앞잡이”라고 비난하면서 전원 북한 땅으로부터 추방해버렸다. 다음 해인 2003년 1월 10일에는 IAEA로부터 완전히 탈퇴하겠다고 엄포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맞서 IAEA는 2003년 2월 12일, 북핵 문제를 ‘안전보장이사회’에 부탁한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와 같이 하여 모처럼의 타결 끝에 체결되었던 「북-미 기본합의」(1994. 10. 21 체결)는 사실상 휴지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남-북간에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

2336) 《東亞日報》, 2007년 9월 12일자 P.A 6 기사 참조.

는 가운데 2005년 2월 10일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자기들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6자회담에는 불참”한다는 결정을 공공연히 선언했다. 이에 앞서 ‘3자회담’이 열렸을 때(2003. 4. 23~25) 북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 대표에 일부러 통보함으로써 경고를 보냈다. 이 선언은 재선된 부시 대통령이 단호하게 천명한 대북정책에 대항하는 초(超) 강경조치였다. 이 사건들을 거치는 동안 한반도에서는 제1차에 이어²³³⁷⁾ 제2차 핵 위기가 고조되어 갔다.²³³⁸⁾

그 후 북한은 2006년 7월 6일에는 ‘대포동2호’를 포함한 7기의 미사일을 일시에 발사하여 전(全)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특히 그 사정거리에 들어있는 준(準) 적성국들(한-일-미)에다 큰 충격을 주었다. 드디어 2006년 10월 9일 북한 외무성은 지하핵실험에 성공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²³³⁹⁾ 이것은 오만하기 그지없는 협박이요, 위협천만한 군사모험주의(軍事冒險主義)였다. 이제 북한의 핵 외교는 더는 나아갈 수 없는 벼랑 끝에서도 그 맨 끝에 다다랐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신격화된 독재자 김정일의 자신감, 착각, 또는 정신착란이 핵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고 주변국들은 지극히 우려했다. 그들의 벼랑 끝 핵외교의 전략과 전술의 기초는 이상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사건들의 전개과정에 비교적 선명하게 나타나, 그것을 간단히

2337) 제1차 核危機는 1993년 3월 북한이 NPT탈퇴를 선언한 후 약 1년 반을 지속되다가 1994년 10월의 「제네바 北-美合意」와 KEDO의 발족으로 일단 해소될 때까지의 극히 위태로웠던 시기를 가리킨다. 그런데 제1기 부시 행정부 때인 2004년 9월~10월 美 上·下院을 통과한 「北韓人權法」(한글 抄譯은 《자유공론》 2004년 11월 호, pp. 35~39에 게재)과 부시 대통령의 제2기 취임 연설(「惡의 軸」 발언), 라이스 국무부장관의 美 上院 인사공청회에서의 증언(북한은 “惡의 前哨基地”) 등이 북한을 분노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핵무기 보유의 공표와 IAEA로부터의 탈퇴선언을 감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었다. 그런데 2005년 2월 10일자 북한 「外務省 聲明」이 몇 차례나 강조한 점은 미국이 북한의 “제도 전복”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앞의 「성명」, 같은 책, p. 148). 이것은 김정일 일파가 당시 북한이 東유럽에서처럼 자기의 권력체계가 붕괴하지나 않을까 하는 절박한 危機心을 가지고 있었다는 면을 보여주고 있다.

2338) 제2차 核危機는 2002년 10월 4일 訪北 중의 제임스 켈리(美대통령 특사)가 북한 외무성의 강석주 제1부장에게 “북한은 高濃縮 우라늄에 의한 核개발계획에 착수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강석주가 高濃縮 핵개발계획의 존재를 시인한데서 시작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고도의 긴장 속에서 KEDO(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는 대북 중유제공을 정지했고, 이에 맞서 김정일은 2003년 1월 10일 다시 NPT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했던 것이다. 위기일발의 긴장 속에서 한반도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는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막후교섭이 벌어졌다. 그 결과로 2005년 9월 17일의 6자회담에서는 타협이 성립되어 위기는 일단 수습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들을 남겼기 때문에 한반도는 언제 다시 폭발 할지 모르는 休眠山같은 존재로 남아 있게 되었다.

2339) 보도 전문은 2006년 10월 9일자, 《조선중앙통신》 참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김정일의 핵 외교는 철저히 비타협적인 반미원리주의(反美原理主義)를 *이데올로기*의 기반으로 삼고 있었다. 핵무기의 보유를 선언한 「외무성 선언」(2005. 2. 10)에서 미국의 대북한 정책을 그들은 “대(對) 조선 고립 압살정책”이라고 비방했다. 요컨대 그것은 “우리제도의 전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선언이란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제도에 대해 “시비질(비난)을 하지 않고 우리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면 [자기들은] 반미(反美)를 하지 않고 우방으로 지낼 것”이라는 타협적 입장을 공언했었지만 평양의 해석에 의하면 미국은 이것을 오해려 “북한의 약점”으로 알고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위의 「선언」은 자기들이 핵무기를 만든 목적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이것은 핵무기를 만들 때까지는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

…미국이 우리를 폭압정권이라고 하면서 전면 부정해 나선 조건에서 미국과 회담할 명분조차 사라졌음으로 이제는 더는 6자회담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다…우리는 이미 *부시* 행정부의 증대되는 대 조선 고립 압살정책에 맞서… 자위를 위하여 핵무기를 만들었다. 우리의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오늘의 현실은 강력한 힘만이 정의를 지키고 진리를 고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²³⁴⁰⁾(필 줄은 저자)

김정일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버젓이 공언하면서 “강력한 힘만이 정의와 진리를 지킬 수 있다”고 한 그의 주장은 냉혹한 권력 정치의 세계에서는 보편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듯이 들린다. 그러나 그의 말의 기초에는 ‘신(新) 군사(軍事)파시즘’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사고(思考)가 깔려있다. 그런 사고는 과거의 역사에서 대-소(大小)의 침략자들의 자기변호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그의 논리는 아주 독특하다. 그에 의하면 군(軍)-인민-국가-당(黨)은 혼연일치된 한 덩어리이며 “수령의 호위”를 최고의 사명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완전한 병영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군=인민=국가=공산당의 4위일체(四位一體)를 공식화한 전체주의는 북한 밖에서는 여태껏 전례가 없는 일이다.

2340) 《조선중앙방송》, 2005년 2월 10일. 《자유공론》, 2005년 3월호에 전문 게재.

둘째로, 그는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하자고 호소한다. 북한에서는 수십 년 이래로 “계급”, “계급투쟁”, “계급혁명”이란 말이 점점 *이데올로기*의 무기그 안에 숨겨지고, 그 대신 이것을 “민족”이란 말로 대용해 왔다. 김일성은 말년에 “계급”이라는 개념만으로는 주민들의 혁명적 열의와 정감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고 느끼고 그 대신 “민족”이라는 오랜 애국적 전통을 가진 말로써 호소해 온 것이 김일성-김정일의 새로운 심리조작 방법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셋째로, 김정일은 김일성과 꼭 마찬가지로 그들이 “사상 의식”이라고 해석하는 *이데올로기*를 절대로 중시한다. 최근년에는 *이데올로기*를 남한에서처럼 “리념(理念)”이라고 번역하여 왔지만, 북한에 있어 “리념”이란, 군대, 당(黨), 정권의 생명이며, 정신이며 활력(活力)이다. 그리고 이것은 반미(反美)-반한(反韓)에다 초점을 맞추어 강렬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므로 동백경화중에 걸린 당(黨)의 *이데올로기*가 변하지 않는 한, 김정일의 핵정책이 스스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에 있어서 *이데올로기*는 일부의 국외자들이 평하듯이 한낱 정치적 장식품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 공세의 무기이며 동시에 자기 자신을 수호하는 방패다. 김정일은 무한한 권력욕에 도취하여 허세, 허풍과 교만을 일삼고 인민에 대한 극한적 통제와 가혹한 통치를 강행해 왔다는 것은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는 다른 한편에서는 파멸에 대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다. 경제적 기반이 지극히 취약하며 인민대중의 빈곤이 극도에 달한 사회에서는 경찰과 군대의 물리력만으로는 체제를 수호하기 어렵다. 정치사상, 독재자 숭앙(崇仰), 혁명정신을 강화(“정치교양사업”등을 강행)하지 않고서는 체제는 곧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²³⁴¹⁾

정치에서 전술은 전략의 하위개념이다, 그러나 양자는 다 같이 비중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²³⁴²⁾ 김정일은 경직화된 전체주의 체제 안에서도 자기의 절대

2341) 김일성은 말년에 와서 “소련이 망한 것은 흐루시초프가 ‘사상혁명’을 하지 않고 경제건설에만 힘을 쏟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었다. 『김일성저작집』 44권, pp. 464-466.

2342) 북한을 구속하고 있는 *맑스-레닌주의*에서는 전략이란 개념은 “주어진 역사적 단계의 주요 임부의 수행을 목표로 하는 黨의 일반노선”이다. 한편 전술이란 곧 “어떤 구체적인 조건에 의하여 규정되는 짧은 기간에 대한 정치노선, 간단하게는 “당면한 정책”을 말한다. *Fundamentals of Marxism-Leninism*, 1963, Moscow, p. 345. 전략과 전술은 원칙상 구별의 한계선은 반드시 분명한 것이 아니어서 빈번히 혼란을 일으켜 왔다. 결정의 기준은 결국 독재자의 그때그때의 생각이다.

권력이 파괴할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신축성 있게 당(黨)-국가사업을 이끌어왔다. 그는 핵 외교(核外交)에서도 어떤 때에는 *프래그마티즘*을 구사하여 위기를 넘겼다. 또한 그는 능청스러운 거짓말을 태연스럽게 하여 남한 동포나 외국인들을 헛갈리게 했다. 그리고 핵외교가 벽에 부딪치면 “국가주권”이니 “자위”나 “민족의 자존”이니 “우리 민족끼리”니 하는 명분을 들고 나와 대중의 애국심에 호소한다. 국외자들도 흔히 북한의 “민족주의”에 관해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통상적인 민족주의와는 전혀 의미와 목적이 다르다. “수령” 숭배-“지도자” 우상화를 핵심으로 하는 “조선민족제일주의”나 “민족공조”나, “민족적자주”나 하는 말들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심리를 조작(操作)하여 전체주의 독재정권을 영구화 할 목적에서 만들어낸 개념들이다.

김정일의 사상은 김일성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낡은 *스탈린주의*에다 국수주의, *파시즘*의 요소까지 가미한 현대 사회과학이론으로 분장한 신정주의(神政主義)적 특색을 지니는 착잡한 혼합체다. 그에 있어서 명백한 것은 종래의 교조주의적(敎條主義的) 계급투쟁의 역사관만으로는 한국의 근대-현대사를 해명할 수 없으므로 “민족”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이때의 “민족”은, 김일성-김정일을 신(神)으로 떠받들고 숭양하는 개인우상화의 작품(作風)을 진작시켜, 전(前) 근대적 세습군주제도를 현대식 전체주의 체제로 합리화(合理化), 공고화하는 정치목적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의 “벼랑 끝 핵외교”라는 초(超)모험주의도 이러한 독재 권력의 영속화(永續化) 전략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다.

제4절 미국 대통령에 대한 내외의 견제

김정일의 “벼랑 끝 핵외교”의 전술은 미국의 *클린턴*과 *부시*의, 그리고 한국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의 역대 정부에 대응하면서 직선적(直線的)으로 또는 나선상(螺旋狀)을 그리면서 상승(上昇)해 왔다. 김정일의 대미 핵외교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정상적인 국가의 외교와는 달리 전쟁 공갈, 협박, 대담한 거짓말, 엄포, 신경전, 노림수, 교활한 심리조작, 환상적인 자신감, 또는 그 반대인 체제 붕괴에 대한 불안감 등이

뒤섞여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벼랑 끝 핵외교”에서 새로이 구사되고 있는 전술은 동-서 냉전시대에 선전하고 있던 “조국의 자주적 통일”이니, “남조선 혁명”이니, “남조선 해방”이니, 또는 이것들을 종합하여 만든 “조국통일 3대혁명의 강화”니 하는 등등과 같은 종래의 공세적-적극적 구호를 표면상 후퇴시켰다. 그 대신 자기들은 다만 “자위(自衛)를 위하여 핵무기를 만들었으며,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공격용이 아니라 미제(美帝)의 침략전쟁을 막기 위한 “억제용”이라고 주장의 초점을 바꾸고 있는데서 간취(看取)할 수 있다.²³⁴³⁾ 이런 주장으로 북한은 핵무기 개발-핵폭탄 보유에 대한 세계의 비난과 도덕적 책임을 모두 강대국 미국에다 뒤집어씌우려고 해왔다. 북한은 핵 실험을 강행한 직후 외무성 대변인의 이름으로 2006년 10월 11일 「담화」²³⁴⁴⁾를 발표했다. 여기서 그들은 핵실험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원인이란 것을 모두 부시 행정부에다 돌렸다. 즉 자기들은 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부시 행정부는 “제재와 봉쇄정책으로 대답했다”는 것이다. 이 「담화」가 시도한 자기변명의 대목을 들어보자.

우리는 미국에 의해 날로 증대되는 전쟁 위협을 막고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불 핵무기 보유를 실효로 증명해 보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조(북)·미 사이에 신뢰가 조성되어 우리가 미국의 위협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된다면 단 한 개의 무기도 필요 없게 될 것이라는데 대해 여러 차례 밝혀왔다.²³⁴⁵⁾

그런데 북한은 위의 「담화」에서 핵실험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발표하자마자 “예정

2343) 북한은 최초의 核實驗(2006. 10. 9)을 앞두고 미리 작성해 두었다가 돌연히 세계에 공표한 「외무성 성명」(2006. 10. 3)에서, 자기들이 NPT를 탈퇴하여 핵무기를 만든 사실에 대해 이것은 “자위적 전쟁억제력(自衛的戰爭抑制力)을 강화하는 새로운 조치”라고 자기辯護를 했다. 「성명」은 주장하기를 “우리의 핵무기는 철두철미 미국의 침략 위협에 맞서 우리 국가의 최고 이익과 우리 민족의 안전을 지키며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믿음직한 전쟁 억제력이 될 것”이라고 자랑했다. 그렇다면 IAEA의 가입과 NPT의 체결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고 자유롭게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더라면 되었을 것이다. 이점에 관해 「성명」은 말이 없다. 「외무성 성명」(2006. 10. 3) 全文은 『북한연감』, 2007년 판, ‘연합 뉴스’ 발행, p. 8에 수록되어 있다.

2344) 이 「담화」 全文은 『북한연감』 2007년 판, p. 9에 게재.

2345) 앞의 「담화」 참조.

대로 미국은 UN안보리를 조종하여 집단적 제재를 가하려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담화」는 일전불사(一戰不辭)의 각오를 아래와 같이 다짐했다.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같이 준비되어 있다. 만일 미국이 우리를 계속 못살게 굴면서 압력을 가중시킨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연이어 물리적인 대응조치를 취해나가게 될 것이다.²³⁴⁶⁾(밑줄은 필자)

그러면 도대체 “물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여 나가게 될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그것은 무력 사용을 말하는 것이다. 김정일의 이와 같은 초강경 정책은 한반도의 핵 위기를 전쟁 일보직전까지 몰고 가려는 아슬아슬한 모험주의의 곡예를 연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분별력과 자제(自制)가 핵전쟁 폭발(暴發)의 위국(危局)을 막아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미국은 소련이 붕괴하자 일약 세계 유일의 초대국이 되었다는 것이 보편적인 국제적 인식으로 되었다. 그렇지만 그런 미국도 그 외교적 역량에는, 내부적으로는 복수정당제에 기인하는 정치적 다원주의(多元主義) 견제가 있는데다 대외적으로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 사이에 미국으로부터의 이탈현상(離脫現象: global alienation from America)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현상의 원인 중의 하나는 부시정권이 “세계 전체의 복리(福利)를 좌우하는 문제에 대하여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 온 것”이라고 미국 민주당계의 원로학자 브래제진스키는 지적한다.²³⁴⁷⁾ 여하튼 대국적으로 볼 때 미국의 어떤 행정부도 항상 반대당의 도전, 의회의 견제, 언론-학계 등 지식인들의 예리한 비판, 노동조합을 비롯한 많은 사회단체, 시민단체들의 부단한 감시와 항의 등 민주주의와 자유에 수반되는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한다.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 미국 주도하의

2346) 앞의 「담화」 참조.

2347) 이를테면 브래제진스키는 국제 온난화방지를 위하여 교토회의(京都會議)에서 173개국과 EU가 채택한 (1997. 12)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 대한 미국의 놀랄만한 “무관심”을 비판했다. 또한 그는 UN의 ‘밀레니움 선언’(2000. 9)의 개발 목표즉 세계의 빈곤, 기아, 질병, 문맹을 박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목표, 세계 189개국 가맹을 달성하는데서 미국이 기여한 바는 극히 미미하며, “1인당 숫자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책, pp. 173~175 참조.

세계질서)의 위세를 떨치고 있는 막강한 미국의 역대정권도 비유컨대 부분적으로는 손발이 묶인 거인(巨人)에 흡사하여 세계를 마음대로 좌지우지(左之右之)하지는 못한다.²³⁴⁸⁾ 미국은 국제정치에서 거목 같은 존재이지만, 한국식 속담을 빌린다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는 격으로 소란한 주변정세에 의하여 항상 흔들리고 때로는 밑둥까지 위태로워진다.²³⁴⁹⁾

동서 냉전 후의 세계에는 새로이 인도, 파키스탄, 리비아, 이란, 이스라엘 등이 신생 핵 국가로 등장하여 국제관계의 큰 변화 요인으로 되었다. 그런데 그중 리비아는 2003년 12월 대량파괴 무기(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계획을 포기했고 2006년 8월에는 「핵(核) 안전조치 추가의정서」에 비준하여 완전한 비(非)핵 국이 되었다. 리비아가 핵국가의 자리를 떠나자 그 자리를 북한이 차지하여 신흥 핵보유국에 끼어들게 되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자멸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감히 한국, 미국, 일본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선제공격을 단행할 수 없다. 그러나 핵보유국의 지위에 오르면서 한반도 정치에서의 발언권을 획득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세

2348) 브레전스키는 앞의 자기 저서에서(2006년 현재로) 美國에 역행하는 地理學上의 주요 추세로써, 10개항을 지목했다. 즉 (1) 이슬람 세계 전체에서 높아가는 서방제국에 대한 敵愾心, (2) 一觸即發의 중동사태, (3) 페르시아灣 유역에서의 이란의 우위, (4) 핵보유국 파키스탄의 변덕스러운 정세, (5) 유럽의 이반, (6) 불만이 거세 가는 러시아, (7) 東아시아 共同體의 설립을 꾀하는 중국, (8) 아시아에서 孤立을 심화시키는 일본, (9) 라틴 아메리카에서 소용돌이치는 포퓰리즘적 反美主義, (10) 核擴散禁止體制의 파탄 등이다. 같은 책, pp. 181~182참조.

이에 관해 브레전스키는 1994년 1월 10일 “북한이 NPT탈퇴를 선언했을 때 미국은 극히 理性的으로 대응했다”고 논평했다. 즉 “미국은 행동의 자유가 최대한 신장되고, 북한이 완전히 고립화되었던 시기에 클린턴정권은 建設的 제안을 제시하면서 海上封鎖 등의 제재조치를 내세우는 일조차 없었다”고 지극히 호의적으로 논평했다. 그리고 [美]CIA의 추계에 의하면 “1993년까지 북한은 12kg의 플루토늄의 抽出을 끝냈다. 이量は 핵폭탄 1~2개분에 해당된다”고 증언했다. Zbigniew Brzezinski, *Second Chance*, 2007, Basic Books, p. 98.

2349) 미국의 지위를 흔들고 있는 중요한 요인은 주로 제3세계 사람들의 “정치적 각성”이라고 브레전스키는 갈파하고 있다. 그는 지금 “정치적 각성”이 전례가 없는 규모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1세기 현재 개발도상국들의 주민대부분은 정치의식의 고조에 요동하고 있다. 그들은 일찍이 없었을 정도로 거세게 퍼져나가는 사회의 不平等을 인식하고, 인간 尊嚴性的의 박탈, 缺如와 선진국들의 搾取에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쓰고 있다(같은 책, p. 202). 그는 라틴 아메리카, 중동지역 등에서 급속히 늘어나는 25세까지의 청년층을 “엄청난 수의 폭발성을 지닌 계층”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에 의하면 세계의 “정치의식의 覺醒”이란 “역사적으로는 反帝國主義요, 정치적으로는 反西方이요, 감정적으로는 反美다”라는 정의를 내리면서 미국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갈파했다. “오늘, 미국은 인간 尊嚴의 전파자를 자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존엄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文化의 多樣性에 대한 敬意에 대한 認識을 깨쳐준다”고...(같은 책, pp. 203~204).

계정치에서의 큰 변화다. 한편 “채찍”이라는 미국의 응징수단도 필경은 복잡한 국제적 힘의 관계에 의하여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는 둔기(鈍器)가 되었다. 그런대로 가장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당근”에 의한 유인책일 수밖에 없다.

군사행동의 감행이 말로만의 엄포에 그치고 내심 사생결단(死生決斷)을 못 내리는 한, 관계국들 간의 외교적 접촉은 계속되는 것이 국제관계의 법칙처럼 되어있다. 그리하여 북한의 핵 선제공격의 위협성을 이른바 “평화적으로”, “협상을 통하여” 해소시키기 위한 외교적 접촉이 한반도의 관계 당사국들, 즉 남-북한, 미-일-중-러 사이에서 간헐적(間歇的)으로 지속되었다. 그 결과가 2003년 8월 27일~29일 사이에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1차 6자회담이었다. 그 후 ‘6자회담’은 6차에 까지 이어지는 몇 차례나 결렬을 거친 후 2007년 2월 13일 6자회담의 제3단계 회의에서 간신히 타결을 보는 듯싶었다.

그러나 6자회담의 막이 오른 지 5년이 되는 시각까지도 소기의 종막(終幕)은 보이지 않고 지루한 막간(幕間)의 쇼만이 열렸다 닫혔다 하고 있다. 김정일은 강온(強穩)의 선전 대사를 읊으면서 벼랑 끝을 기어 올라가는 곡예(曲藝)를 연출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정권의 “햇볕정책”²³⁵⁰⁾을 계승하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을

2350)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의 “햇볕정책”을 잘 설명한 것은 1999년 5월 5일 CNN방송과의 회견 기조연설에서였다. 그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을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그중 중요한 것만을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첫째, “북한이 안심하고 변화와 개방을 추진하여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둘째, “한반도에서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를 통제·제거 하고 군비 통제를 실현해야 한다”……

셋째, “현재의 정전체제를 남-북간의 평화체제로 바꾸어야 한다”……『한반도 평화체제 … 자료와 해제』, 2007년, 통일연구원 발행, p. 201.

이상에서 인용한 김 대통령의 제안은 영리한 정치가라면 누구도 할 수 있는 말이었다. 그는 당시 6만 명의 남한 사람들이 金剛山을 다녀왔고, 3천 300명이 북한을 방문했다는 사실, 1998년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 “개인 소유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등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요소를 도입했다”(같은 책, p. 200)는 보도를 북한 사회의 변화와 남-북 간의 화해의 추세로 보고 싶어 했다. 그런데 북한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운운을 논한 바도 없으며, 그런 용어의 사용은 여전히 禁語로 되어 있었다. 김 대통령의 견해는 皮相의이었다. 한편 그는 “우리는 결코 북한이 善意만을 가지고 대하리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로써 있을 수 있는 사태의 변화에 대비하여 사전의 自己辯護를 하면서…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북 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을 포기하게 하고 북한 스스로 平和共存의 길을 택하게 하는 것입니다(같은 책, p. 200, p. 202)라고 역설했다.

위의 말들은 듣기에는 좋다. 그러나 김정일의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의 문제로 국제사회의 여론이 물 끓듯 하는 가운데 그는 나라의 위국(危局)의 한 복판에 대통령으로써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평화정책”²³⁵¹⁾이라고 부르면서 김대중 때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안이한 대북 유화정책에 도취하고 있었다.

그가 북한의 핵개발에 관해서는 입을 다물고 전쟁을 막겠다는 단호한 각오도, 믿을 수 있는 방책도 보여 주지 못했다.

- 2351) 노무현 대통령의 '平和繁榮政策'(초기의 호칭)은 2003년 2월 25일 그의 대통령 취임사에서 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핵문제에 관한 부분이다. 여기서 그는 (1) “북한의 핵武器 개발 의혹은 한반도를 비롯한 東北亞와 세계의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의 핵 개발은 용인할 수 없다는 것, (2) “북한은 핵개발계획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 (3) “북한이 핵개발계획을 포기한다면 국제사회는 북한이 원하는 많은 것을 제공할 것”, (4)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할 것인지, 체제 안전과 경제 지원을 약속받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것, (5) 우리는 북한의 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는 것, 어떤 형태로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등 북한 핵문제가 대화를 통하여 해결되도록 우리는 미국, 일본과의 共助를 강화할 것, (5) 한-미 동맹은 우리의 안전보장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우리는 韓美 동맹을 소중히 발전시켜 나갈 것 등등이다(같은 책 p. 198). 노 대통령의 이상의 주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군사적 안전을 고려하여 국제적 共助를 역설한 대목이었다. 이상과 같은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정책” 제의는 온당하고 합리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 후 곧 그의 對北政策의 기초는 親北 反美의 방향으로 변질되어 갔다.

제5장

‘6자회담’으로 가는 길

들어가는 말 - 요약된 회고

2007년의 ‘10·3합의’ 이후 북한 영변의 핵시설에 대한 “핵 불능화”작업과 관련한 사항들이 진행되어 왔다. 영변 외에도 여러 곳에 핵시설이 산재하고 있으나 ‘10·3합의’는 영변 이외의 지역은 폐기대상에서 누락시켰다. 영변의 핵시설에 대한 핵불능화 작업은 오랜 시간 지연되어 오면서 북한의 이행 의지가 의심받아 왔다.

북한은 ‘6자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핵 불능화 작업을 성실히 진행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외부에 주기위해 애써왔다. 그 상징적 사건이 2008년 여름에 단행된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 폭파사건이다. 이미 폐물이 다 된 이 냉각탑의 폭파는 북한이 비핵화에 충실하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북한은 2007년 안에 시행하겠다는 핵 신고는 하지 않고 2008년 6월 26일에야 신고서를 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했다. 이는 영변 냉각탑이 폭파되기 하루 전이었다.

핵 불능화 작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핵 활동의 신고요, 신고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 판단하는 ‘검증(verification)’의 과정이다. 북한의 비핵화문제에서 논의는 ‘핵 불능화’와 ‘핵 신고’에 대한 ‘검증’이다. 그러나 6자회담은 2007년 10월 3일 합의가 발표된 지 한동안 열리지 못했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제네바와 싱가포르 등지에서 북미수석대표들이 회동하여 쟁점을 조율하는데 정력을 쏟아왔지만 양자의 기본입장은 바뀌지 않고 전술적인 변화만 보여왔다. 검증을 누가하는가의 검증 주체(主體)의 문제, 무엇을 검증하느냐의 검증대상의 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의 방식의 문제 그리고 얼마동안 하는가의 검증기간의 문제 등은 북핵 문제의 해결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과 협상대상이 되어왔다.

북한은 그중 어떠한 사안을 두고 시간을 끌면서 더 많은 이득을 획득하려 했고,

북한의 비핵화는 공전에 공전을 거듭해 왔다.

외교상의 관행이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승전국인 연합국들은 패전국 독일의 할양을 놓고 1919년 파리 강화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하지만 밤에는 유력한 외교관, 유럽 사교계의 명사, 그리고 이들의 가족들이 운집한 대형의 호화로운 무도회를 열고 현란한 왈츠를 추며 시간을 보냈다. 전승국들이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의도가 약했던 회의였다. 이렇게 회의와 관련하여 문제가 많아지자 이를 풍자한 말들이 들려왔다. “회의는 춤춘다. 그러나 회의에는 진척이 없다”는 식의 야유가….

2008년 7월 10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미국-한국-중국-북한-일본-러시아의 6자회담은 파리 강화회의가 보여준 것처럼 무도회의 일화가 있을 수 없는 긴장한 회의였다. 6자회담에서는 무도회 대신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되었다. 청(淸)제국의 고도(古都)에 자리 잡은 중국정부의 국빈관 조어대(鈞漁垓, 디오 위 타이)는 옛 고궁으로서의 운치가 그윽한 유서 깊은 고장이다. 그러나 파리강화회의는 전승연합국들의 회의였던만큼 비교적 신속히 진행되어 회의(1919. 1. 18~1919. 6. 28) 6개월 만에 440조(條)나 되는 방대한 조약문에 조인하고 회의를 종결지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2008년 7월 중국에서 개최된 ‘6자회담’은 6·25전쟁 때의 휴전회담 즉, 1951년 7월 10일부터 개성-판문점에서 진행되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되기까지 만 2년이 걸린 시간보다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6자회담’은 준비기간을 제외시키더라도, ‘제1차 회담’이 개막된 2003년 8월 27일부터 현재 이르기까지에 무려 7년이상의 시간이 경과되었다.²³⁵²⁾

‘6자회담’에 참여한 국가들은 언제, 어떤 계기에 의하여 핵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으로 인해 불안한 환경에 항상 노출되어 왔다. 따라서 오랜 시간이 경과

2352) 한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회담(多者會談, 즉 5자회담내지는 6자회담)의 착상을 처음 공표한 것은 당시의 국무부장관 파워(Collin Powell)이었다. 그는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길에 잠시 베이징에 들렀다. 이때 그는 베이징이 미국-중국-일본-남·북한을 포함한 다자회담을 조직하고 초청해줄 것을 제안했다. 그는 아시아에서 다자회담 개최가 갖는 장점을 알고 있었다. 2003년 3월초 전기침(錢其琛)이 평양에 가서 이 안을 추진했으나 평양이 5자회담을 거부하자 전기침은 즉시 자신의 안을 수정하여 미국·중국·북한만이 참여하는 ‘3자회담’을 제안했고, 평양은 계속하여 북-미만의 직접 대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뉴욕, 베이징의 채널에서 “밀고 당기는” 협상을 거듭한 끝에 2003년 4월말 베이징에서 3자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된 '6자회담'의 분위기는 항상 긴장감에 가득 차 있었다. 사실 '6자회담'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평화적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는 대원칙에서 출발했다. 대북 경제지원, 핵에너지 제공 혹은 북-미 관계의 정상화는 모두 한반도의 비핵화를 측면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불과하다. 비핵화에서 가장 구체적인 핵심문제는 북한의 핵시설을 어떻게 불능화(不能化)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북한의 핵시설을 불능화하지 못하면, 비핵화에 관한 과거의 모든 정책이 공론화되지 않을 수 있다. 2007년 '2·13합의'(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 '공동성명의 실시를 위한 초기단계의 조치'를 시점으로 하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10월 3일에 도달한 '9·19 공동성명의 실시를 위한 제2단계 조치'였다. 이 '조치' 역시 북한의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하는데다 목적을 둔 합의였다.

북한은 2007년 '2·13합의'에 따라 "불능화"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동년 6월 26일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했다. 북핵시설의 폐쇄와 검증문제를 협의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미국은 오랫동안 북한에 적용해 왔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해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실제로 북한은 2008년 6월 27일 '불능화'조치 작업의 일환으로 세계에 보여주기 위하여 영변(寧邊)의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시켰다. 이로써 '10·3합의' 이후 8개월 이상이나 공전하고 있던 북한의 '핵 폐기 프로그램'이 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세계는 비교적 낙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8년 7월 26일 외무성 대변인은 '영변의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작업)'를 중단하고 원상복구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기서 '성명'이 뜻하는 바는 북한은 그동안 성사시켰던 '2·13합의', '10·3합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북한에서의 핵무기 개발계획을 원상 복구시키겠다는 새로운 대남압박이다. 한반도의 핵 회담은 실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로(迷路)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건 전개에 대하여 북한의 관점이 어떠한가를 중심으로 이하에서 간단히 분석할 것이다.

제1절 전기침(錢其琛)의 은밀한 방북(2003.3.8)

2003년에 들어서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었다. IAEA는 1월 6

일 북한이 이미 강행한 원자력 시설 및 감시 장치의 원상회복, 북한에서 축출된 사찰관의 복귀를 촉구하는 특별이사회회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대하여 평양당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는 초강수를 썼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 포기를 우선하는 조건에서 에너지 및 식량 원조를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그들 특유의 상투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즉 미국은 북한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대북 "불가침"을 확약할 때만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이 치고 받는 정치 투쟁 속에서 휴전선상 북방한계선에 대한 북한 MIG기의 침범(2월 20일), 대함정 미사일 발사 실험(2월 24일, 3월 10일)이 잇따라 자행되었다.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남-북한과 각각 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미국-중국은 북핵문제를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목적에서 '3자회담'을 개최하는데 동의했다. 이 회담은 한반도의 위기에 대처하는 미-중-북한의 전략적 필요성에 의하여 가능했던 것이다. '3자회담'은 2003년 하순(4. 23~25) 베이징(北京)에서 열렸다. 이 짧은 기간의 회담은 앞으로 있을 '6자회담'의 예비단계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북한은 일련의 외교적 정지작업(整地作業)을 거쳐야 했다. 중국은 '3자회담' 자체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미국과의 양자 회담에만 집착해온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끈질기게 설득했다. 2003년 1월 베이징 정부는 외교부 부부장(副部長) 다이빙궈(戴秉國)를 평양에 파견했다. 그는 강석주와 다섯 시간 동안이나 의견을 교환했다.²³⁵³⁾

그러나 그 모든 내용이 물론 공개되지는 않았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중국 측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문제에서 발생한 핵 위기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북한의 진의를 살피는 것이 다이빙궈(戴秉國) 부부장의 평양방문의 목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3자회담'이 열리기 바로 2주일 전인 2003년 3월 8일 아침 뜻밖에도 전기침(錢其琛, 중국의 전 외교부장) 부총리 일행이 백두산기슭 삼지연(三池淵, 휴양지) 공항에 내렸다. 이 일은 당시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전(錢) 일행은 북한의 핵위기 문제의 해결책을 김정일과 직접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의 의향을 살펴보고 아울러

2353) 이에 관한 요령 있는 분석은 유석열(柳錫烈)의 논문 「核보유' 발언, 美·北·中 3자회담 지속-결렬 기로에」, 《자유공론》 2003년 6월호, pp. 34-37. 참조.

중국의 대내외 정책을 설득할 목적에서 삼지연을 방문했던 사실이 삼지연 북-중 회담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김정일은 북한 외무성 제 1부부장 강석주(姜錫柱)를 대동하고 전기침을 영접했다. 회담에서는 주로 세 가지 문제를 논의했다.

제2절 전(錢) - 김(金) 대화의 중심문제

우선 전(錢)은 중국정부로서는 한반도의 비핵화(非核化)를 몹시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김정일에게 알려주는 것과 함께, 북한의 핵문제는 어디까지나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면서 그 방침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개혁-개방의 역사를 이야기했다. 전(錢)은 설득하기를, “개혁·개방에 의하여 중국인민의 생활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이룩하는데는 평화로운 국제환경이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²³⁵⁴⁾고... 북한에게는 김일성 때부터 과거 10년 이상을 들어온 설교였다. 전(錢)은 김정일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몇 마디 말을 덧붙였다. “우리들이 실시하는 방법을 당신들에게 내려 먹이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공유(共有)하였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마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듯이 간명하게 압축된 부정적(否定的) 견해를 피력했다.

...“중국과 북조선은 조건이 전혀 다릅니다. 북조선은 작은, 뒤떨어진 나라입니다... 경제개혁이 중국에서는 틀림없이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중국이 하는 식이 우리에게도 꼭 잘 될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경제발전에는 평화로운 국제환경이 불가결하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선반도에서 미국은 일관하여 우리들에게 적대시정책을 취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번도 평화환경이 주어진 일이란 없습니다. 조선반도에서 평화환경이 없는 것은 미국의 탓이지 우리의 탓이 아닙니다.”²³⁵⁵⁾

이상과 같은 전(錢) 부수상의 온유한 권유에 대해 김정일은 단도직입적으로 거부했던 것이다. 이 밖에도 전기침은 북한의 핵개발 계획, 그중에서도 고농축 우라늄

2354) 船橋洋一, 『ザ・ペニンシュラ・クエスチオン-朝鮮半島 第二次 核危機』, 2006年, 朝日新聞社, p. 424.

2355) 船橋洋一, 위의 책, p. 424.

(HEU) 개발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논의했다. 강석주는 2002년 10월 초 *캘리* 국무차관보가 미국특사로 방북했을 때에 주고받은 말들을 포함하여 김정일에게 자세하게 설명했고 왕 의(王毅, 중국 외교부 부부장)가 이에다 몇 개의 질문을 끼워 이야기를 펼쳐나갔다. 이때 강석주는 과거에는 인정했던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계획을 극구 부인하면서 “미국은 증거를 내보이지 않는다, 증거도 없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다”고 *캘리*를 공박했다.²³⁵⁶⁾ 이와 같은 북한의 완강한 고농축 *우라늄* 계획부인의 입장은 지금까지 바뀐 것이 없다. 이상의 짧은 전기침과 나눈 대화에서 김정일은 북한의 대미 핵외교에서 견지하고 있는 자기의 확고한 태도를 솔직하게 재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윽고 이야기는 본론적인 ‘3자회담’ 문제로 들어갔다. 전기침은 “조선반도에서 핵위기가 심각하게 되어 중국은 우려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은 미국-북조선의 중개자가 되어 ‘3자회담’을 주최하고 싶은데, 장소로서는 *베이징*이 어떠할지, 꼭 참여해주셨으면 한다”²³⁵⁷⁾고 정중히 제의했다. 김정일은 처음에는 난색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전(錢)은 ‘3자’라고 하지만 주역은 미국과 북조선이라고 설득을 계속했다. 김정일은 한반도 핵문제는 그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협상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줄곧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그런데 북-미 양자회담은 틀림없이 열린다는 전(錢)으로부터의 확인을 듣고서야 그는 비로소 “참여하기로 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을 했다.²³⁵⁸⁾ 이렇게 하여 ‘3자회담’은 가능하게 되었고, 그 연장-확대판으로써 앞날의 ‘6자회담’의 길도 열리게 된 것이다.

제3절 ‘3자회담’의 난항

미·중·북의 ‘3자회담’은 예정대로 2003년 4월 23일~25일 정식으로 *베이징*에서 열렸다. 중국 대표는 부 형(傅 螢, 여성, 몽고족 출신)이었고 미국 대표는 2000년 2

2356) 앞의 책, p. 425.

2357) 앞의 책, p. 425.

2358) 앞의 책, p. 425.

월 미국특사로 평양을 다녀온 제임스 켈리(James A. Kelly)였으며 북한 대표는 이 근(李 根, 외무성 미국국장)이었다. 3일 밖에 안 되는 회담 기간의 대좌였지만 여기서 북한과 미국의 기본입장, 외교전술은 압축되어 있어서 재고할만한 가치가 있다. 회담장에는 처음부터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고, 대표의 발언들은(특히 북한의 경우) 가시가 돋쳐 있었다. 북핵 문제는 직접 미국과 대화를 통하여 해결할 것을 주장해 온 평양정권은, 이 문제가 북한이 고립될 것이 확실한 다자회담(多者會談)으로 넘어가서 국제화되는 것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김정일은 미국이 이라크전쟁에서 예상 밖으로 신속히 바그다드를 함락시킨 후로는 한걸음 후퇴하여, 대화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자회담의 “틀거리(틀)”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의향을 시사했다. 이것이 회담 직전에 북한이 견지하고 있던 입장이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북한이 핵을 먼저 포기하는 것만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었다. 한편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담에 참여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핵의 “선(先)핵 포기”만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을 계속 고수했다. ‘3자회담’에서 북-미간의 입장차이가 확연하게 들어났기 때문에, 분위기는 첫날부터 차가울 수밖에 없었다.

회의에서 말을 많이, 그것도 공격적으로 한 사람은 북한 대표 이 근(李 根)이었다. 그는 싸움을 거는 식으로 “핵문제는 미국의 북조선에 대한 적대시 정책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비난하면서 “그것을 철회하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²³⁵⁹⁾ 그는 그 증빙의 근거로써 미국에 대해 북-미 ‘불가침조약’의 체결을 세삼 요구했다.²³⁶⁰⁾ 이에 대해 켈리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에 의해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 핵개발 계획과 플루토늄 형 핵무기 제조 등 모든 핵개발의 “완전하고도 항구적인 폐기”와 동시에, 북한 측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방법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²³⁶¹⁾ 이때 중국대표 부 형(傅 螢)은 북조선의 핵은 조선반도를 “혼돈(混沌)상태로 만들어버린다²³⁶²⁾”는 짧은 말로 북한의 파멸적 핵보유(核保

2359) 앞의 책, p. 526.

2360) 앞의 책, p. 526.

2361) 앞의 책, p. 527.

2362) 앞의 책, p. 527.

有)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다.

이 근의 막말 공세는 끈질겼다. 그는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어나갔다—“3주 전에…뉴욕에서 미국 측에 전한 바대로 우리는 8,000개의 폐연료봉의 재처리를 시작하고 있다. 그것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압살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이다.”²³⁶³⁾ 이 근의 이 말은 곧 북한이 핵폭탄의 제조를 준비하고 있다는 공공연한 공갈이었다. 이 처음 듣는 말에 각국의 모든 대표들은 놀랐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의 상층부는 이 사실을 대외적으로는 숨겼다. 그것은 미국 내의 강경파들이 이것을 이유로 하여 ‘3자회담’을 취소하라고 요구할 것을 우려했던 때문이다.²³⁶⁴⁾

‘3자회담’ 마지막 날(4월 25일)을 기하여 의장국인 중국은 3자에 의한 전체회합을 열고자 시도해 보았다. 그러나 북한대표 이 근은 4월 24일 오후회의에서 북-미 양자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면서, 미국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기들은 차후 ‘3자회담’에 나오지 않겠다고 언명했다. ‘3자회담’을 끝내지도 못하고 도중에 유산된다면 한반도의 핵문제는 새로운 위기에 빠져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미-중의 판단이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을 ‘3자회담’의 틀 안으로 유도하려했다. 이것을 위하여 이조성(李肇星, 당시 중국 외교부장)이 “약간의 외교적 기교(技巧)”를 부렸다. 즉 “‘3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미 회담”이라는 기묘한 방식을…. 이에 관하여 당시 회담에 참가했던 미국 대표였던 찰스 프리처드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베이징은, 만약 북한이 [3자] 회담에 참가하면 회의 중에 미국과의 직접적인 양자 대화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양에 조용히 약속했다. 한편 베이징은, 회담이 북한과 미국의 양자접촉을 갖도록 하는 술책이 아니라, 말 그대로 3자회담이 될 것이라고 미국을 안심시켰다.²³⁶⁵⁾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서는 비밀리에 서로 밀고 당기는 식의 지루한 협상이 성사되어 양자는 그달 말 베이징에서 ‘3자회담’을 여는데 드디어 합의했던 것이다. 이것은 양자 모두가 달리 꿰고 나갈 돌파구가 없어 서로 서둘러 타결지운 실패한 회담

2363) 앞의 책, p. 528.

2364) 앞의 책, p. 528.

2365) 찰스 프리처드, 김연철 옮김, 『실패한 외교』(서울: 세계철, 2007), p. 107 참조.

이었다.

제4절 '3자회담'의 미봉적 타협

'3자회담'에서 세계 많은 나라들(특히 핵보유국들)의 신경을 곤두세운 사건이 일어났다. 미국대표단의 저녁식사 테이블 옆에 앉아있던 북한 대표단의 한 멤버가 갑자기 다음의 말이 아연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들 외무성은 언제나 군부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수석대표의 "발언요령"(talking point)도 문장은 모두 군부가 쓴 것입니다. 외무성은 그것을 통제하지 못합니다"²³⁶⁶⁾고 한 북한 대표의 발언이었다.

국외자들은 종래에는 추측밖에 할 수 없었던 이 놀랄만한 일이 과연 사실일까 하고 여러모로 추리했다. 몇 겹(重)으로 감시를 받고 있는 1당 1인 독재체제 아래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²³⁶⁷⁾ 이 자리에서 이 근은 식사 후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본 뒤 더욱 놀랄만한 말을 영어로 했다. "북조선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물리적(物理的)으로 보여줄 수도 있다. 국외로 이전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²³⁶⁸⁾ 미국대표는 이 근의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한 말을 조선말로 한번 더 반복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것은 앞의 말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북한 측 통역 이선희(李善姬)가 영어로 옮겼다. 이근의 조선말 진술은 다음과 같았다.

... 미국은 알고 있는가. 우리는 핵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물리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국외로 옮길 수도 있다.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닌가는 어디까지나 미국측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다... 본시 우리는 1994년에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 밝혀줬을 터인데... 미국 측은 이 일에 좀 더 주의를 돌려야 했다.²³⁶⁹⁾

2366) 船橋洋一, p. 532

2367) 美國대표 켈리는, 이러한 "솔직한 고백"은 모두 사전에 북한 측이 꼼꼼하게 준비한 결과로 안다"고 평하면서 믿지 않았다. 그에 의하면 "대본에서 떠나 발언을 할 때는 징벌은 엄청나게 엄하다. 북한 외교관의 경우, 자유로운 발언이란 일체 없다"고 봐야한다고 논평했다. 같은 책, p. 532.

2368) 船橋洋一, p. 533.

2369) 船橋洋一, p. 533.

이 근은 미국 대표가 자기 말을 듣고서 상부에 전하도록 일부러 이와 같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언한 것이다. 미국 측은 이근의 “핵무기 보유” 선언을 회담 주최국인 중국에 통고했다. 중국 대표 부영은 북미 양자회담 때 북한 대표 앞에서 “자살할 생각인가”라는 막말로 경고를 보냈다고 했다. 북한은 김일성 이래로 자기들은 “핵무기를 만들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거짓 선전을 일삼아오다가 이제와는 오히려 “핵무기 보유”를 당당하게 과시(誇示)하기 시작했다. 즉 ‘엄살’에서 ‘호언(豪言)’으로 전술을 바꾼 것이다. 북한은 자기들의 고농축 우라늄 개발 계획에 대하여 미국이 크게 우려하는 것을 감지(感知)하고, 그런 우려를 미국의 약점으로 삼아 이용하며, 미국을 북-미 양자회담으로 끌어들이려고 획책해왔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김정일의 위험천만한 “벼랑 끝” 핵외교는 도리어 역효과를 초래하여 국제적 고립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할 수 있다.²³⁷⁰⁾

‘3자회담’장의 낭하에서나마 북한은 명백히 자기들은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고했다. ‘3자회담’ 마지막 날, 북한 측은 핵문제의 관하여 이른바 “북-미 쌍방의 우려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새롭고도 대범한 해결방도”²³⁷¹⁾라는 것을 제시했다. 이 “해결방도”에서는 북-미가 “3단계 동시행동원칙”²³⁷²⁾에 따라 핵문제를 “일괄타결”한다는 것이었다. 그 내용은 미국의 “우려사항”과 북한의 “요구사항”을 하나로 묶어서 “패키지 딜(package deal)을 하자는 안이었다.”

2370)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동조한 나라는 소련의 지도층과 문화대혁명 이후의 중국을 포함하여 전무에 가까웠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관한한 신생 러시아와 세계에서 완전히 고립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국제적 다수국(다자) 사이에(이를테면 ‘UN안전보장이사회’, ‘UN총회’, IAEA 등에서) 한반도의 핵문제가 널리 논의되는 것을 극력 저지, 또는 기피하려 했다. 어떤 국제기관 또는 회의에서 많은 나라들 사이에서 북한 핵문제가 토의된다면 북한은 못매를 맞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황이다.

2371) 이 제안의 도식(圖式)은 『東北亞와 南北韓 2003~2004』(서울: 平和研究院, 2004), p. 249에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다.

2372) 여기서 북한이 제시한 “3단계 동시행동원칙”은 아래와 같다. 즉 제1단계에서는 북한은 미국과의 전면적인 핵합의(1974. 10)를 이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유제공 재개, 경수로의 完工, 과거 조치·지연에 따른 배상 지불 등의 조건에서 북한의 핵시설을 동결(가동정지)한다. 제2단계에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대북 불가침 의사를 문서로 보장하면,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핵사찰을 수용하며, 미사일 시험 동결 및 관련기술 수출을 중단한다.

제3단계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해제, 쌍방 관계정상화 실현 및 경제협을 제공하며 한-일의 대북 경제원조 및 북-일 관계정상화, 그리고 남-북 관계개선을 미국 측이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다. 같은 책, 같은 면 참조.

이때 북한이 제시한 “일괄타결 방도”는 미국이 믿을 수도 수용할 수도 없고, 북한이 절대로 실행할 의사도 없는 일종의 상투적 선전책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그 후에 곧 입증되었다. 당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불신은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고, 한편 북한의 대미(對美) 증오감은 핵전쟁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불타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3자회담’은 ‘6자회담’으로 가는 확대-연장을 예정한 것이었던 만큼 두 회담은 계기적(繼起的)으로 열렸다. ‘3자회담’에 관한 한, ‘6자회담’ 개최의 날짜를 결정한 것 이외에는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막을 내렸던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식자층들과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의 고위 정책 입안자들, 정계요로들, 전문가들, 언론인들 대부분은 ‘3자회담’은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그렇다고 하여 평양이 승리한 것도 물론 아니었다. 양자(兩者) 모두가 패배한 셈이었다.

제6장

XXXXXXXXXXXXXXXXXXXX

‘6자회담’의 명암(明暗)

제1절 회담의 개막

위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듯이 ‘6자회담’을 예비하기 위한 미-중-북(한)의 ‘3자회담’은 미-중-남(한)-일-러의 ‘6자회담’으로 확대, 연장되었다. ‘6자회담’은 제1차(2003. 8. 27~29), 제2차(2004. 2. 25~28), 제3차(2004. 6. 23~26), 제4차(1단계회의 2005. 7. 26~8. 7/8. 8~9. 12까지는 휴회, 2단계회의 9. 13~9. 19), 제5차(1단계회의 2005. 11. 9~11, 2단계회의 2006. 12. 18~22, 3단계회의 2007. 2. 8~13), 제6차(1단계회의 2007. 3. 19~22, 2단계회의 2007. 9. 27~30)까지 열려[※] 6년의 시일이 경과했지만 장래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본서에서는 지면의 제한상 6차회담까지의 중요한 사건들과 문제점들만을 추려내어 간단히 고찰하고자 한다. 중-미는 남·북한 상호비방과 북한의 핵개발 계획으로 인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접촉을 통하여 제6차 6자회담 1단계회의를 성사시킬 수가 있었다.

‘6자회담’이 열리자, 북한을 철저히 의심해온 미국은 핵문제 해결원칙으로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약자)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 원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북한이 진행시키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 계획은 과거에 북한이 핵문제에 관하여 체결한 일체의 약정(約定)에 위배되는 것이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포함한 일체의 핵계획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정책적 기조를 천명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 원칙이 엄격히 준수된다면 북한은 핵무기에 관한 한 완전히 노출되는 신세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북한은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것은 패전국에 대해서 뿐이다”²³⁷³⁾라고 반발했다. 이 CVID란 말의 사

※ ‘6자회담’의 일정이 길어질 때는 전 기간을 몇 단계로 나눠서 휴식기간을 가진 후에 계속했다. 그리하여 ‘6

용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이 별다른 관심을 안 보인데다가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는 정가의 의견을 백악관 상층부가 지지함으로써 「6자공동성명」에서 이 말은 빠지게 되었다. 그 대신 「10·3합의」에서는 “과학적이고 안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또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제1차 6자회담(2003. 8. 23)에서 처음 발언에 나선 사람은 의장국 중국의 수석대표 왕 이(王 毅, 외교부 부부장)였다. 그는 개회사에서 이미 상투어가 된 “조선반도의 비핵화(非核化)”, “(북조선의) 안전의 보장에 대한 우려의 해소”, “대화를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온건한 주장을 폈다.²³⁷⁴⁾ 이외는 대조적으로 북한의 수석대표 김영일(金永日, 외무성 부상)은 처음부터 공세적으로 발언했다.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바꿔 북조선에 대한 위협을 없애면 [우리는] 핵계획을 포기할 수 있으며,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바꾸려면 북-미간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불가침조약의 체결”, “북-미 외교관계의 수립”, 북-미간 및 남-북간의 “경제협력 관계에 대한 방해공작의 정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미국의] “경수로 제공의 지연(遲延)에 의한 전력 손실을 보상”하며, 경수로를 완공(完工)하는 일을 포함하여 “일괄타결 방식”으로 핵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²³⁷⁵⁾ 그 같은 요구는 여태까지 북한이 부분적으로는 빈번히 주장했던 것들을 약간 표현과 순서만을 바꾼데 불과했다. 결코 새로운 제안은 아니었다. 그동안 개최된 6자회담 전부를 통하여 볼 때, 북한을 제외한 각국의 대표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온당하게 피력했다.

제2절 북한대표의 좌충우돌

러시아대표 알렉산드르 로슈코프(Alexandre Losyukov, 러시아 외무성 차관)는

者會談 당사자들은, 회담의 시기를 이르면 ‘제5차 6者會談 3단계회의’라고 명명했다. 영역은 third session of the fifth round of the Six Party Talks라고 했다.

2373) 船橋洋一, 『ザ・ペニンシュラ・クエスチヨン-朝鮮半島 第二次 核危機』, 2006年, 朝日新聞社, p. 562

2374) 중국수석대표의 2003년 8월 27일자 성명 주요부분 임. 찰스 프리처드, 앞의 책, pp. 154~155 참조.

2375) 船橋洋一, p. 544.

자기의 발언에서 “한반도의 비핵화(非核化)는 교섭에 의해서만 유지되며 북한을 비롯한 이 지역에서의 여러 나라의 이해(利害)관계가 보장된다”는 합리적인 국제관을 진술했다.²³⁷⁶⁾ 이에 비교하면 미국의 주장은 구체적이고 명료했다. 켈리 국무차관보는 강조하기를, “미국은 북조선에 위협을 가한다든가, 침략할 의도는 없으며”, 또한 북한 “정권의 변경을 추구할 의도도 없다”는 것, 나아가서 북한이 “핵계획을 검증 가능한,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폐기한다”면 다음 회담에서 북한의 “안전보장상의 우려 등의 문제를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북-미 양자 회담은 추구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그리고는 북한이 “핵폐기”를 한 이후에는 북-미 단계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여 *미사일*, 재래식 무기, 자금세탁, 위조지폐, *테러*, 납치 등에 대한 북-미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미국의 국가안보분야의 전문가이며 부시행정부에서 대북 협상 특사와 KEDO 미국대표를 역임했던 찰스 프리처드는 자기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하여 ‘6자 회담’ 참가국들이 바랐던 결과를 간략하게 밑의 각주에서와 같이 정리한 바 있다.²³⁷⁷⁾

2376) 船橋洋一, p. 545.

2377) 찰스 프리처드, 앞의 책, p. 150.

- | | |
|-----|--|
| 미국 | -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 |
| | - 과거 북한의 합의 위반에 대한 처벌 (?) |
| | - 효과적인 북한의 정권교체 (?) |
| 한국 | - 한반도의 긴장고조 방지 |
| | - 남북한의 화해 진전유지 |
| | -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 |
| 중국 | - 지역의 평화와 안전 유지 |
| | - 6자회담 외부에서의 긴장고조 방지(미국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 행동 저지 등) |
| 일본 | -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접촉유지 |
| | - 북한의 핵무기 확산과 관련하여 미국과의 확고한 동맹관계 유지 |
| 러시아 | - 태평양지역의 참여자로 보여지기를 희망 |
| | - 협상을 통한 해결과정에서 북한에 제공하는 경제적 <i>인센티브</i> 와 관련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자로서의 이익추구 (?) |
| 북한 | - 미국으로부터의 잠재적 손실을 관리하거나 제한 (?) |
| | - 미국과의 직접 협상 추구 |
| | - 미국과 관련된 보적을 추구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 이용 |
| | - 핵무기 프로그램을 양보하는 대가로 [자국의] 안전보장과 경제적 이익 추구 |
- (이상에서) 저자가 (?) 부호를 부친 항목은 현재에는 이미 포기했거나 희미하게 된 목적들이다. 그 밖

‘6자회담’은 국제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외교의 장(場)인만큼 표면상으로는 대체로 온건하지만, 반면 그곳은 사활을 건 남-북한의 국가이익과 주변의 관련 강대국들이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는 각축장이기도 하다. 제1차 회담에서 주목을 끈 것은 북한측 대표 김영일의 언동이었다. 첫날 전체회의가 끝나자 그는 미국대표 켈리에게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미국은 무엇을 해줄 것인가”, “핵을 포기해도 미국은 재래식 전력(戰力)이나, 미사일, 마약, 인권문제를 제기할 것인가”, “미국은 불가침조약을 체결할 생각은 있는가” 하고 따지고 들어갔다. 켈리는 하나하나 대꾸하지 않고 “나의 ‘서두 발언록’을 읽어 보시요”라고 몇 번이고 같은 대답을 했다. 김영일은 화가 치밀은 듯이 “미국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이것은 교섭이 아니다”라고 반발하면서 “우리는 핵 억제력과 운반수단의 물리적 실연(實演)을 할 용의가 있다”²³⁷⁸⁾고 소리를 질렀다. 이 말의 의미는 미사일을 발사해서 핵실험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일종의 위협이었다.

제3절 반(反) 외교적 안하무인의 행동

다음 날(8월 29일)에는 러시아대표 로슈코프가 발언에 나섰다—“부시 미국대통령도 말하고 있듯이 미국은 북조선을 침략할 의도가 없다. 북조선과 다른 나라와의 경제활동까지 반대할 생각은 없다”고 미국을 옹호했다. 그러자 갑자기 김영일의 큰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다—“거짓말쟁이! 당신의 말은 터럽다. 아시아에서는 인간의 가치란 거짓말을 하는가, 어떤가로 결정된다”²³⁷⁹⁾—고, 김영일은 “거짓말” 아닌 주장을 북한 자신의 핵개발에 관해서도 과연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었을까. 김영일의 러시아에 대한 이 같은 격노의 태도는 북-러 관계의 편린(片鱗)을 엿보는 것에 불과했지만, 구소련시대의 양국관계의 실상을 회고할 때 세계가 크게 변하고 있다는 격세의 감을 느끼게 된다.

의 부분은 아직 추구하고 있는 목적들이다.

2378) 船橋洋一, p. 546.

2379) 船橋洋一, p. 547.

김영일은 전체회의에서 일본수석대표 *야부나카 미도리*(藪中 三十二,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의 발언도 물고 늘어져 모욕적 언사로써 공격했다.²³⁸⁰⁾ 그런데 그전 날 북-미 대표가 마주쳤을 때 김영일이 미국측을 향하여 했던 발언, 즉 “핵 억제력과 운반수단의 물리적 실연(實演)을 보여줄 용의가 있다”는 은근한 협박이 미국에 의하여 전체회의에서 공개되었다. 그러자 김영일은 잠시 후에 겁을 주는 보다 더 무서운 공갈로 반격했다 - “[우리는 핵 억제력(핵폭탄)을 늘려서 핵 억제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나아가서는 그것을 실증(實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 다시 말해 핵전쟁의 태세로 돌입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러시아*대표 *로슈코프*는 앞에 있던 부하에게 “자네가 담당하고 있는 나라(북한)는 미쳤다”고 수군댔다. *로슈코프*의 목소리가 미처 *끄지* 못했던 마이크를 통하여 회담장으로 새나가 각국 대표들이 듣게 되었다. 회의장 도처에서는 쑥덕거리기 시작했다. 회담이 끝난 후 *로슈코프* 러시아 대표는 미국대표 켈리에게 “저것이 러시아와 북조선의 특수 관계의 실태”라고 비꼬는 듯이 평(評)하면서 몸을 움츠렸다.²³⁸¹⁾

북한은 이때 핵외교를 내심으로는 적과의 생사를 건 정치투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김정일이 보여준 당시의 외교 스타일은 이판사판식의 행태(行態), 또는 극단적인 정치 니힐리즘에 가까웠다. 아니면 그것이 고도의 회담 전술이었을 것이다. 6자회담은 북한 측의 반대로 말미암아 진전하지 못하였다. 공동성명도 채택하지 못했고 다음 회담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왕 의 의장은 폐막식 때 공동성명을 내지 못한 대신 ‘구두성명’을 자기의 책임하에 발표했다. 그 내용을 논란하려는 북한대표의 발언은 아예 묵살되었다. ‘6자회담’ 막판에 김영일은 “이런 회담은 아무 소용도 없다. 흥미도 없다. 이런 곳에는 차후 나올 생각이 없다”²³⁸²⁾고 막말을 내뱉었다. 왕 의(王義)의 ‘의장성명’ 중 중요한 대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380) 김영일은 *야부나카*(藪中) 일본 수석대표가 “미국은 일-소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한 진술이 아마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다. “일본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한다. 도대체 일본의 과거의 역사가 얼마나 가혹했는지 당신은 알고 있는가”라고 미국에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앞의 책, pp. 547~548

2381) 船橋洋一, p. 548.

2382) 船橋洋一, p. 550.

- 모든 6자회담의 참가자들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적으로 하여, 북한의 안보상의 우려 및 다른 사안들을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 모든 참가국들은 단계적(step by step)으로, 그리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동시 병행(synchronized and parallel)이행을 통하여 핵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을 검토하여 결정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 모든 참가국들은 평화회담 중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어떤 행동이나 말도 하지 않을 것에 합의했다.
- 모든 참가국들은 6자회담이 계속되어야 하고 차기 회담의 일정과 장소는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결정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²³⁸³⁾

제4절 청천벽력의 '2·10선언'(2005년)

'6자회담'을 계속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는 왕 의(王義) 의장 성명의 마무리 말이 나오자 각국 수석대표들은 김영일을 포함하여 전원이 박수를 쳤다. 그런데 그렇게 박수까지 쳤던 김영일은 다음날(30일) 평양행 항공기를 타기 위하여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후 기자단에게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써 전날 자기가 한 말을 뒤집어 엮었다—"이번의 회담은 타상공론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게 백해무일리(百害無一利)한 회담에는 의미도 기대도 가질 수가 없게 되었다"²³⁸⁴⁾고, 이 말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우회적 협박이었다. 한편 「의장성명」에서는 "6자회담 진행 중에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어떤 행동이나 말도 하지 않을 것에 합의한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상황의 악화"에 대한 각 참여국의 정의(定義)는 구구하여 이 말은 한낱 공론이 되고 말았다.²³⁸⁵⁾

2383) 그의 '의장연설'은 船橋의 앞의 책, pp. 550~551; 찰스 프리처드, 앞의 책, pp. 154~155에 실린 전문을 비교참조.

2384) 船橋洋一, p. 550.

2385) '제1차 6자회담'은 제2차(2004. 2. 25~28), 제3차(2004. 6. 23~26)로 이어졌다. 그 중에서 알맹이가 있어 보이는 것은 제3차 6자회담이었다.

회담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도 *부시*-김정일의 대립은 격화되어 서로 상대방을 “폭군”, “압제국가” 등 비방 공방전이 계속되어 오던 중 2005년 2월 10일 북한의 외무성은 뜻밖에도 “6자회담의 무기한 중단”과 “핵무기의 계속 보유”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6자”뿐만 아니라 세계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고 크게 놀랐다. 이 「외무성성명」²³⁸⁶⁾은 자기들의 초강경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종래의 철저한 반미주의 새로운 전투적 *이데올로기*를 혼합하여 부시정권을 맹공격했다.

북한의 「외무성 성명」은 우선 북한이 ‘6자회담’에의 참가를 중단한 첫 번째 이유는 ‘회담 참가의 명분 박탈론’이었다. 즉 미국이 상대방을 전면 부정하는 조건에서는 미국과 회담한 “명분조차 상실했으므로 우리는 6자회담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다”²³⁸⁷⁾는 것이었다. 둘째로 핵무기를 만든 이유는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북한의 제도를 지킬 수 있는 “자위적(自衛的) 핵 억제력을 보유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했다. 북한의 「외무성 성명」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이 핵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우리 제도를 기어이 없애버리겠다는 기도를 명백히 드러낸 이상 우리 인민이 선택할 사상과 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이다. … 우리는 이미 부시 행정부의 대(對) 조선 고립 정책에 맞서… 자위를 위하여 핵무기를 만들었다. 우리의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자위적 핵 억제력(自衛的 核抑制力)으로 남아있을 것이다.²³⁸⁸⁾

제3차 6자회담이 열린 때부터 北韓의 비핵화 방법의 논의는 모든 참가국들, 그중에서도 북한-미국 사이에서 구체성을 띄어갔고, 때에 따라 논쟁은 치열했다. *캘리* 국무차관보는 그해 7월 미국 상원청문회에서 한 증언에서 미국 행정부의 정책을 진술했다. 즉, (1) 북한은 초기단계에서 모든 핵활동 목록을 제출하고, (2) 실제로 모든 핵활동을 중단하고, (3) 모든 핵물질의 안전(安全)과 모든 감시를 허용하고, (4) 모든 핵무기와 핵부품, 원심분리장치(遠心分離裝置)를 공개하고, (5) 핵가동의 불능화(불능화)를 사찰할 것을 허용하고, (6) *우라늄* 농축(濃縮) 프로그램과 핵무기의 존재도 밝

238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로동신문』 2005년 2월 11일.

2387) 위와 같음.

2388) 위와 같음.

해야 하며, (7) 이러한 미국의 제안에는 “북한이 이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는데 따라 다른 6자회담 참여국들이 그에 상응(相應)하는 조치를 취한다” 즉, 대가(보상)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극히 주목을 끄는 대목은 북한이 이상의 “미국 제안에 동의 하더라도 미국은 대북 경수로 지원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단호한 의지를 내보였다는 점이다.²³⁸⁹⁾

한편 북한은 미국의 제안에 다음처럼 응답하였다. “조선 한반도의 비핵화가 우리의 최종 목표임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 포기를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우리는 모든 핵관련 프로그램을 투명하게 철회할 것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미국이 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해체(CVID)요구를 철회하고 우리의 보상 요구를 수용한다는 전제하에 구체적인 핵동결 계획을 밝혔다.”²³⁹⁰⁾

2389) 찰스 프리처드, 앞의 책, p. 159.

2390) 위의 책, pp. 159~160.

제7장

출구(出口) 안 보이는 북핵(北核)의 미로(迷路)

제1절 “미국과는 전쟁상태에 있다”

북한의 “핵무기의(계속) 보유”와 “6자회담 무기한 중단” 의사를 천명한 위의 북한 「외무성 성명」(2005. 2. 10)은 국제사회에다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 이 「2·10성명」에 뒤이어 ‘외무성’ 당국은 세계로부터 비방의 화살을 받고 있던 김정일정권을 엄호하고자 2005년 3월 2일 장문의 「비망록」²³⁹¹⁾을 발표했다. 이 문건은 북한의 핵 정책을 부연 설명하는 것과 함께 그 “정당성”을 철저히 변호하면서 미국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규탄했다. 그 내용의 대부분은 과거에 내세웠던 주장들을 반복한 것이지만 몇 군데에서는 표현을 더욱 더 호전적인 어조로 바꾸고 새로운 논점(論點)을 첨가했다. 즉, 벼랑 끝 외교의 일환으로 첨가되고 있었다. 이 문건을 보면 북한이 과연 ‘6자회담’을 성사시킬 의사가 있는지를 의심케 된다. 그러면 그들의 「외무성 비망록」의 주요 부분을 원문 그대로 살펴보자.

(1) “우리는 미국과 교전관계, 기술적으로는 전쟁상태에 있다.”

(2) “핵무기를 휘두르며 우리를 선제 타격하겠다는 부시 행정부에 정당방위를 위해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었고 또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3) “부시 행정부는 우리의 제도 전복을 궁극적 목적으로 설정하고 강경과 유화(宥和)를 배합한 양면 전술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절대로 평화적으로 공존하지 않으며 무장해제를 통해 우리의 제도전복을 끝까지 추구하겠다는 미국의 본심은 뿌리 깊은 것으로서 언제 한번 달라져 본 적이 없다.”

(4) “부시 행정부가 정권전환 의지도 없이 우리보고 무작정 6자회담에 나오라고

239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비망록」, 조선중앙방송, 2005년 3월 3일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피고석》에 얹혀놓고 핵무기 해체를 실연하여 나중에는 군사적으로 덮치겠다는 술책이다.”²³⁹²⁾

이런 뒤집어 씌우기 선전 공세는 협상하자는 태도가 아니었다. 앞의 「외무성 비망록」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외교 문서라기보다는 일종의 ‘대미 투쟁선언서’였다. 이에 대해서는 일일이 논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 「비망록」은 주장하기를, ‘6자회담’을 중단상태로 몰아넣는 미국이 ‘6자회담’을 재개하여 한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면 그 가능성 여부를 미국이 먼저 “폭정의 종식 운운”의 폭언에 대해 “사죄”를 결단하는데 달려있다는 논리(論理)를 폈다.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 공세에 대해서는, 국제적 핵협정을 유린한 그들의 도전행위를 UN안전보장 이사회에 회부하는 법적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UN의 제재는 “곧 선전포고”라고 반격하면서 계속 초강경 전술로 미국을 위협했던 것이다.

… 우리는 사생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에 대비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으며… 우리는 미국이 오만하고 횡포한 날강도적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땀을 흘려 핵 억제력을 마련해 놓았다… 우리는 결정적 순간에 자기 할 바를 알고 있으며 미국의 강경에는 끝까지 초강경으로 대응할 것이다.²³⁹³⁾

제2절 「9·19 공동성명」의 무지개

북-미간에 벌어진 바로 핵전쟁 전야의 양상을 연상케 하는 이러한 긴장상태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평양은 잇따라 대미 정치 공세를 격화하고 있었지만, 말끝에 가서는 상투적으로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평화적 방법과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적(當爲的) 단서를 부침으로써 선전상의 도피로를 마련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이점에서는 위싱턴도 비슷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략적(政略)

2392) 같은 「외무성비망록」 참조.

2393) 북 외무성 대변인의 핵문제에 관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 조선중앙방송, 2005년 4월 25일자.

的) 타산의 결과에 지나지 않았다. 핵전쟁은 필경은 자멸의 도박임에 틀림없다는 것은 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의 상식적 결론이다.

많은 전쟁에서 광신적 독재자들이 자기의 힘의 만능(萬能)을 믿었던가 또는 극히 오만한 착오에 빠져 먼저 포문을 열은 역사의 선례는 허다하다. 국제사회는 한반도에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해 왔다. 그리하여 미-중-러-일-한 등은 끈질긴 막후 협상을 통하여 2005년 7월 26일 제4차 '6자회담'을 열었고 9월 13일~19일에는 제4차 회담 5단계 회의(8월 27일~9월 12일은 휴회)에서 통칭 '9·19공동성명'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9·19공동성명'은 6자회담이 열린 후 실로 2년 1개월 만에 나온 최초의 합의문서라는 점에 의미가 있었다. 이 '9·19공동성명'²³⁹⁴⁾은 한반도의 비핵화(非核化)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들을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확인했다.

(1)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 조속히 NPT 및 IAEA의 핵 안전조치에 복귀한다.

(2) 미국은 한반도 내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비(配備)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4) 북한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대한 경수로(輕水爐)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했다.²³⁹⁵⁾

2394) 「제4차 6자회담공동성명」 전문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 해제 2007년』,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p. 23~24.; 북한측 대본은 pp. 25~28.

2395) 이상 항목들은 극히 중요하며 향후 중대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었다.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하는데 동의했다"고 '9·19공동성명'은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경수로를 제공한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었다. 그 논의할 "적절한 시기"가 언제쯤 될런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미국은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서」에서 북한의 흑연감속로(黑鉛減速爐)를 철거하는 대가로 경수로형(輕水爐型) 핵발전소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시공에 착수했던 것이다. 당시 미국의 흑연감속로를 경수로로 교체하는데 북한과 합의한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 시점의 원자과학 수준으로서는 흑연로보다 경수로에서 우라늄(핵물질)을 추출(抽出)하기가 훨씬 어려웠던 때문이다. 미국은 북

(5) 북-미는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6)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증진시킬 것을 약속했다.

(7) 중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및 미국은 북한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200만kW의 전력 공급에 관한 2005년 7월 12일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여기의 각 항목 번호는 설명의 편의상 저자가 붙인 것이며 원문에서의 번호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연해둔다.)

제3절 '원조제공'(미)과 '핵무기 포기'(북), 어느 것이 먼저인가

「9·19 공동성명」이 발표되자 국제사회는 핵 위험지대 한반도에는 드디어 평화의 무지개가 떠오른 것처럼 느끼고 크게 환영했다. 이 땅의 최소한 반쪽의 주인인 한국 국민들도 안도의 긴 숨을 내쉬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6자회담'을 회의와 불신의 눈으로 보고 있던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논조도 바뀌고 있었다. 「9·19 공동성명」은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 원칙들을 회담에 참여한 6개국이 마련한 초안이지만 문제를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하는 방안은 아니었다. 그러나 여기에 도달하기까지는 평양정권의 태연한 거짓말, 궤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장광설(長廣舌)의 반복, 권태, 힘겨루기, 욕설, 피로 작전 등등에 의한 공세를 참아내야 했다. 북한의 그런 행동은 '외교활동'이라기보다는 가히 '외교지구전'(外交持久戰)이라고 부를 만 했다.

'6자회담'은 한반도의 비핵화(非核化)를 실현하자는 데에 본래의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 방법, 절차, 북한에 지원할 *에너지*의 종류와 분량, 그

한이 흑연감속로를 핵제조에 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1980년대에 이르러 미국은 그사이에 발달한 핵과학의 성과를 이용하여 경수로에서 우라늄을 추출할 가능성을 발견하고 북한에다 경수로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그 후 오늘날까지 미국은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한다는 그 어떤 말도 한 일이 없다.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미국에 대하여 양국관계에서 "신뢰의 기초"로 되는 경수로를 하루 속히 보내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래야만 북한의 기존 핵시설들을 해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북한의 그런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왔다.

리고 비핵화와 맞물려 있는 북-미 국교정상화와 북-일 수교의 문제점 등에 관한 의견 대립은 불가피했다. 문제해결을 어렵게 한 절대적 원인은 북-미간의 뿌리 깊은 상호 불신에 있었다. 그런데 북한은 「9·19 공동성명」이 나온 바로 그 다음 날인 9월 20일, 돌연 「외무성 대변인 담화」²³⁹⁶⁾를 발표, 다시 정치공세를 폈다. 북한의 핵을 폐지하기 이전에는 미국은 쉽사리 경수로를 제공하지 않으려하는데 대한 반격이었다. 경수로 발전소는 북한의 산업시설 가동과 일상적 민생(民生)에 필요한 흑연갑속로가 철거되게 된 상태에서는 지극히 중요한 시설이다.

‘6자회담’에서는 경수로 발전소의 가동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또는 “원자력의 평화적 활용”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평화적”이란 핵무기 제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그러나 한편 미국은 북한이 경수로를 핵무기 개발에 전용할 수 있다는 의심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일축해왔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전에는 어떤 지원(경제원조, 국교정상화 등)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는 반대로 북한은 “선(先) 경수로 제공”, “후(後) 핵무기 포기”를 완강하게 고집하면서 달콤한 말로 미국을 유인하려 했다.

… 우리는 … 우리에게 신뢰 조성의 기초로 되는 경수로를 제공하는 즉시 NPT에 복귀하여 IAEA와 담보협정(핵안전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이행(移行)할 것이다.…… 조-미 관계가 정상화 되어 신뢰가 조성되고 우리가 미국의 핵위협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는 단 한 개의 핵무기도 필요 없게 될 것이다.²³⁹⁷⁾

그렇지만 북한의 위와 같은 선전의 신빙성에 대한 근거를 허물어버린 것은 그들 자신이었다. 예를 들면 1992년 1월의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과 1993년 6월의 「조-미 공동성명」에서도, 1994년 10월의 「북-미 기본합의문」(「제너바 합의문」)에서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굳게 언약했었다. 그런데 북한은 이러한 중대한 약정 뒤에 숨어서 그런 합의에 위반하여 은밀히 핵무기를 개발해 왔던 것이다. 진실이 이러하네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어떻게 북한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경수로를 좀처럼 제공하지 않으려는 미국을 다음과 같이 위협

2396)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전문은 조선중앙방송, 2005년 9월 20일 방송 참조

2397) 위의 「담화」 참조.

했다.²³⁹⁸⁾

… 신뢰조성인 물리적 담보인 경수로 제공이 없이는 우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 억제력(핵무기체제)을 포기하는 문제에 대하여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 천연 바위처럼 굳어진 우리의 정정당당하고 일관된 입장이다…. 미국이 또다시 “선(先) 핵무기 포기, 후(後) 경수로 제공”의 주장을 고집해 나선다면 조-미 사이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며 그 후에는 심각하고 복잡할 것이다.²³⁹⁹⁾

결론적으로 이 「담화」는 주장하기를, 만일 미국이 이번에 한 약속을 위반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념이며 표대인 선군도 선군로선(先軍路線)”이 가리키는 길로 한치의 틀림도 없이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대언장담(大言壯談)했다. 이 말은 요컨대 미국과의 핵전쟁을 결행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있다는 공갈이었다. 이런 방식이야말로 한반도(사실은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김정일 선전의 진의였다.

제4절 6자회담의 새로운 장애

9·19공동성명 발표 후에 나온 위의 북한 「외무성대변인 성명」은 경수로 지원을 둘러싼 북-미의 타협이 거의 불가능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북한측의 완강한 태도는 위에서 언급했다. 이어 미국측 견해를 들어보면 그들의 입장도 확고부동하다. 제4차 6자회담이 열리고 있던 2005년 8월 7일 미국대표 힐(Hill)은 언급하기를 “[북조선 측은 한국의 통상(通常)적 전력공급제안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서, 경수로만 말하고 있다. 그들은 에너지가 아쉬웠던 것이 아니었던가. 아니, 전력 때문이 아니다. 무엇인가 다른 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은 알지 않으면 안 된다.²⁴⁰⁰⁾” 야유조의 발언이었다. 그러면, 미국이 말하는 북한의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시기”는 도대체 언제인가. 제2차 6자회담 폐막식에서 힐 미

2398) 위와 같음.

2399) 위와 같음.

2400) 船橋洋一, p. 603.

국대표는 “「(9·19)성명」에서 적당한 시기라고 한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검증가능한 형태로 폐기하며, NPT에 재가입, IAEA의 사찰을 받아들인 후부터이다.²⁴⁰¹⁾” 이상 *힐* 대표의 단호한 발언은 평양측이 기어이 경수로를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든가, 아니면 비핵화를 깨버리겠다고 하는 완강한 태도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었다. 양자의 입장이 이렇게 동-서로 갈라지고, 빙탄불상용(氷炭不相容)의 자세를 고수하고 있는데 과연 6자회담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까. 이것은 심오한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평이한 상식의 문제다.

이러한 미해결의 기본문제가 도사리고 있는데다가 돌연 *마카오*의 한 은행, Banko Delta Asia (BDA)의 “돈세탁 문제”가 일어났다.²⁴⁰²⁾ 2005년 9월 미국재무성은 동 은행을 북한과 관련된, 범죄적 무기 수출, 마약 거래, 외화의 위조와 유통 등의 관련을 지적해왔다. 그리고 외화 위조지폐와 관련하여 “자금세탁”의 감시를 받고 있는 곳으로는 이 *뱅크·델타·아시아*를 지목하고 이 은행에 구좌를 개설하고 자금세탁을 하고 있는 북한의 기업체는 무려 50곳에 이른다고 했다.²⁴⁰³⁾ 이 문제는 2005년 11월에 열린 제5차 6자회담에서 최대의 쟁점이 되었다. 북한대표 김계관은 “금융은 혈액 같은 것이다. 그것을 멈추게 되면 심장이 멎는다”고 했다. 북미 2자회담에서도 “금융 제재로 동결된 2,500만 달러를 풀어달라”고 되풀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6자회담에는 금후 참가할 수 없다”고 협박했다.²⁴⁰⁴⁾ 이에 대해 *켈리*는 “(미국) ‘애국법’ 311조는 미국의 금융*센터*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불법 금융 거래를 추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미국은 북한만을 표적으로 삼고 적용하고 있

2401) 船橋洋一, p. 615.

2402) *마카오*의 *뱅크·델타·아시아*의 국제범죄조직과 관련이 있는 구좌개설과 금융거래를 폭로한 것은 UP 통신 발 기사(2005년 8월 28일)였다. 이 기사는 북한은 거명하지 않은 채 범죄단의 활동을 상세히 보도했다. 9월 9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미 수사당국의 *뱅크·델타·아시아*와 북한 불법자금 거래에 관한 조사활동은 미국 ‘애국법’ 제311조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뱅크·델타·아시아*의 자금세탁 문제는 2007년 3월 5차 6자회담에서 격렬한 논쟁점이 되었다. 은행의 금융거래는 정지되었는데, 동결된 북한 관련 구좌의 총액은 2,500만 달러에 이른다는 것이었다. 북한은 이것을 미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제재라고 규탄하면서 ‘6자회담’을 계속 거부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타협할 필요성을 느끼고 2006년 3월 19일 동결한 구좌를 “인도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조건에서 전액을 반환하는데 합의했다. 이렇게 하여 금융장애는 넘을 수가 있었다.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2500만 달러를 받은 과정에 관해서는 *찰스 프리처드*, 앞의 책, pp. 18~21 참조.

2403) 船橋洋一, p. 647.

2404) 船橋洋一, p. 647~648.

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테러*와의 싸움의 일환이며 「방위조치」다”²⁴⁰⁵⁾라고 응수했다. BDA의 북한자금 반환문제는 얼마 후인 2007년 1월부터 북미간의 집중적 협상을 통하여 우여곡절 끝에 그달 6월에야 북한 계좌로 송금되었다.

2405) 船橋洋一, p. 648.

제8장

머나먼 비핵화(非核化)의 길

제1절 북한의 핵실험이 몰고온 충격파

‘9·19공동성명’은 한반도의 하늘에서 잠시나마 무지갯빛 희망으로 비추어졌다. 그러나 북한 측이 ‘*방코 델타 아시아*’에 예치한 불법자금 2,500만 달러를 미국정부가 동결함으로써 김정일은 일대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당시를 회고한다면 이 사건이 불거지자 ‘6자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져들었던 것이다. 드디어 김정일정권은 그들의 상투수단인 “벼랑 끝 전술”로 회귀했다. 2006년 7월 5일 그들은 ‘대포동 2호’ 1기를 비롯하여 ‘노동’ 및 ‘스커드급 미사일’ 6발 등 모두 7발을 쏘아 올렸다. ‘UN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7월 10일 ‘대북결의 1693호’를 채택하고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행위를 비난한다”고 밝혔다.²⁴⁰⁶⁾

그해 2006년 10월 3일 북한은 이에 위축되기는커녕 북한 외무성의 장문의 「성명」을 통하여 “앞으로 핵실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사전통고를 하였다. 이 「성명」은 한반도에서 가중되는 전쟁위험의 책임을 모두 미국에다 돌리면서 미국을 맹렬히 규탄했다. 이 「외무성 성명」은 일종의 도발장 같은 것이었다. 거기에는 증오에 불타고 있는 김정일정권의 반미주의의 *엡센스*가 신랄하게 표명되었다.²⁴⁰⁷⁾

이때까지 싸움은 광란적 선전전의 한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일주일 뒤인 10월 9일 오전 10시 35분 김정일은 기어이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의 핵보유를 반신

2406) 「조선일보」 2006년 7월 17일.

2407) ‘UN안보리 대북결의문 1695호의 한글 번역 전문은 「조선일보」 2006년 7월 17일자에 게재. 이 결의문은 모든 회원국들이 *미사일*과 관련물자, 자재, 상품 및 기술이 북한의 *미사일* 또는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이전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방지할 것을 요청했다. 북한은 의례히 UN안보리의 요청을 거부하고 미국이 추가로 압력을 가할 경우에는 전쟁선포로 간주하겠다는 불퇴전의 태세를 가다듬었다. 북한은 이상 UN안보리의 요청에 관해서는 이하에서 논할 것이다. 「조선일보」 2006년 10월 4일.

반의하고 있던 국제사회는 너무나 놀랐다. 평양의 「조선중앙통신」은 이 보도에다 정치선전 문구를 덧붙였다. 즉, “핵실험은 100% 우리의 지혜와 기술에 의하여 진행된 것으로써 자위적 국방력을 갈망해 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큰 고무와 기쁨을 안겨 준 역사적 사변이다”라고 하였다.²⁴⁰⁸⁾ 여태껏 방만한 “퍼주기식” 대북원조를 해온 노무현 정부는 2006년 10월 10일 “북한이 핵무기 관련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NPT체제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면서 “오관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²⁴⁰⁹⁾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반미친북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던 노무현정권의 그런 형식적인 말은 잠꼬대에 불과했다. 10월 12일 한국 국회도 5개항으로 된 결의안을 채택하여 보다 강경한 원칙을 천명했다. 그런데 가장 단호하고 치밀하며 체계적인 것은 대북 “규탄”, “요구”, “조치” 등의 형식으로써 사실상의 대북 외교적 제재를 주장한 것은 2006년 10월 15일에 채택된 「UN안전보장이사회결의 1718호」였다. 이 결의는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선언하고 UN헌장 제7장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대북제재결의를 단행했다. 북한을 비난한 이 결의안은 UN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북한의 핵계획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²⁴¹⁰⁾ 그렇지만 김정일은 이에 굴종하지 않고 기세를 올리면서 자기들의 핵보유의 절대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²⁴¹¹⁾

2408) 「조선중앙통신」 2006년 10월 9일.

2409) ‘북 핵실험관련 [한국]정부성명’, 《자유공론》, 2006년 11월호, p. 59.

2410) 「UN안보리 결의 1718」은 여태까지 나온 결의 중 가장 강경하고 광범위하며 치밀한 것이다. 그의 중심을 이루는 결의 사항은 북한 핵무기체계의 엄격한 단속과 경제제재조치이다. 그 핵심부분 중 중요한 것은 아래와 같다.

1.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결의한다.

2. 모든 유엔회원국은 전자, 장갑차량, 중화기,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또는 미사일 시스템 일체와 관련된 물품, 부품 등 관련물자와 기타 대량살상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품목의 물질, 장비, 상품, 기술 등이 북한으로 간접적으로 제공되거나 판매, 이관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3. 모든 회원국들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국 내 자금과 기타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결의안 채택일로부터 즉각 동결하며, 북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개인이나 단체도 자국 내 자금이나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4. 모든 회원국은 핵 및 화학 또는 생물무기의 밀거래와 이의 전달수단 및 물질을 막기 위해 북한으로부터의 화물검색 등 필요한 현실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자유공론」 2006년 11월호, pp. 57~58.

2411) 북한 외무성은 핵실험을 단행한지 80일 만인 10월 17일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자기들의 핵개발의 정당성, 당위성을 건강부회의의 논리로 철저히 옹호했다.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제2절 '2·13합의'에서 '10·3합의'으로

'6자회담' 참가국들이 '9·19공동성명'이라는 희망의 무지개를 띄우자마자 한반도에는 또다시 어두운 구름이 엄습해왔다. BDA의 북한에 대한 "돈세탁 우려 기관" 지정과 자금동결조치, 이에 대한 반격으로 김정일의 *미사일*발사와 핵실험 단행, UN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1718호) 등 국면은 다시 전쟁발발 직전으로 다가가는 듯한 양상을 보였다. 6자회담 참가국들, 그중에서도 북-미는 이러한 우려상황들을 잠재울 대책을 세워야 했다. 양자는 다시 접촉했다. 이때 북한은 만성적 식량난과 *에너지* 부족, 일반 생필품부족에 의하여 크게 시달리고 있었다.

한편, 미국은 *부시*행정부의 인기 하락, 중간선거에서의 상하원을 통틀어 공화당의 패배, *이라크*정세의 악화 등으로 말미암아 대북정책의 변경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곤경에 처한 북-미 양자는 각자의 필요에 의하여 협상을 재개했다. 두 나라 대표는 중국의 영향력을 피해 *베이징* 대신 다른 나라에서 회동했다. 먼저, 2007년 4월 16일~18일 북-미 수석대표가 *베를린*에서 회동했다.²⁴¹²⁾ 이들은 2008년 3월 13일에는 다시 *제네바*에서 회동했다.²⁴¹³⁾ 그리고 4월 8일~9일에는 *싱가포르* 회동이 있었다.²⁴¹⁴⁾ 이 회동들은 모두가 '9·19공동성명' 이후의 악화된 북핵문제의 개선을 모

1. 핵개발의 정당성과 당위성 : 우리의 핵실험은 미국의 기증되는 핵전쟁 위협과 제재압력 책동에 대처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생명안전권을 수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어적 대응조치로써 주권국가의 자주적이며 합법적인 권리행사에 속한다...우리의 자주적 권리행사는 범죄시하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운운하는 것은 완전히 공정성을 상실한 비도덕적 처사다.

2. UN안보리 결의는 미국의 각본 : 이번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미국의 각본에 따른 것으로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밖에 달리 볼 수 없다. 우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이번 결의를 단호히 규탄하며 반대한다.

3. 핵무기보유 결단은 천만번정당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번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주권평등과 자결의 원칙을 초석으로 하는 유엔헌장을 짓밟고 미국을 비호하고 묵인한 역사적 책임이 없다할 수 없다. 오늘의 사태발전은 우리인민이 선택한 핵무기보유 결단이 천만번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뚜렷이 입증해 주었다.

2412) 북-미의 2007년 1월 *베를린* 회동에서는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양자가 *베이징* 밖에서 만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양 대표는 회동 후 극히 온건한 논조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도록 기자 질문에 답하는데 그쳤을 뿐 그 밖에 공동성명이나 발표문은 없었다. 다만 제일조총련(在日朝鮮總聯)의 기관지 「조선신보」(2월 11일자)가 단편적으로 북한 측이 흘린 말들을 소개했다.

2413) *할-김*계관의 *제네바* 회동은 아무성과도 거두지 못한 일종의 탐색전 정도며 양면에서 거의 무시되고 있다.

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2007년 2월 13일, 제5차 6자회담 6단계회의는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약칭 2·13합의)'²⁴¹⁵⁾를 채택했다. 이 합의는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의 모든 문제를 포괄하고는 있었으나 한반도의 비핵화가 중심이었다. 여기에서 여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한낱 공론이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2007년 9월 27일~30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는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조치(약칭 10·3 합의)'²⁴¹⁶⁾를 채택했다. 이 두 6자 합의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최종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2·13합의'는 총론에 해당하며 10·3합의는 각론 내지 보충에 해당했다. 한반도의 비핵화의 제1단계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던 일체의 핵시설의 동결, 즉 가동 중지를 의미했다. 이때에 취하는 조치는 “폐쇄”다. 즉 핵시설에 대한 북한의 기술자들이, 이를테면 접근하여 수리 못하도록 하는 조치였다. 두 번째 단계는 핵시설의 핵심부분을 완전히 제거하여 기술적으로 핵 가동을 막는 것, 즉 “불능화”(disablement, 북한은 ‘무력화’

2414) 6자간의 쟁점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북미 수석대표가 싱가포르에서 만나 작성한 “잠정합의”다. 합의문은 공개되지 않았음으로 상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계획 신고문제, 우라늄 농축에 대한 의혹, 플루토늄의 재고량의 주장, 시리아와의 핵 협력 의혹, 대북 제재, 중요지원의 발송 지연 문제에 관한 논의를 보면 싱가포르 회동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도달한 “합의”가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다. 김태우는 이 문제를 거시적으로 간결하게 논한 자기의 논문에서 이것을 “어정정한 잠정합의”라고 정의했다. (『자유공론』 2008년 6월호, “북핵신고문제, 타결인가 미궁인가”, pp. 77~79 참조) 한편의 NHK 중국총국 즈까모드 소오이찌(塚本壯一)는 미시적으로 이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東亞』2008년 2월). 두 논문 숙독의 가치가 있다.

2415) '2·13합의'에서 6자는 불분명한 개념을 사용하여 혼란을 일으켰다. 핵 시설의 “불능화(disablement)”라는 용어를 북한은 “freeze”로 영역하기도 하고 우리말로 “무력화”라고도 주장하기도 했다. 박기택·이상현 공편 『북한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서울: 세종연구소, 2008), pp. 197~198, 및 pp. 221~222 참조. 본서에 수록된 송대성의 논문 제5장 북한 비핵화 쟁점과 전략은 '9·19공동선언' 이후의 비핵화문제를 정연하게 잘 분석하고 있다.

2416) '10·3합의' 전문은 *칼스 프리저드*, 『실패한 외교』, pp. 1~303 참조. 그 간략한 요약은 다음과 같이 추려낼 수 있다.

1. 북한은 모든 현존 핵시설을 금년 내에 모두 불능화하며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완료한다.
2. 북한은 핵물질,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한다.
3. 미국은 미-북관계 정상화 실무자회의를 통해 북-미, 북-일은 각각 국교정상화 노력을 경주한다.
4. 각 국은 '2·13합의'에 따라 중유 100만에 상당하는 경제-에너지-인도적 자원(이미 전달된 중유 10만톤 포함)을 북한에 제공할 것이다.
5.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며,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공약을 상기한다.

라고 한다)다. 마지막은 핵시설의 완전히 해체(dismantle)조치이다. 이상 비핵화의 과정을 쉬운 말로 하자면 처음은 모든 핵시설의 폐쇄요, 다음은 시설의 핵심적 부분을 망가트리는 작업이며, 마지막에는 아예 파기해 버리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불능화”가 절대로 중요하다는 것은 짧은 10·3합의문에서 이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제3절 비핵화는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2007년의 ‘10·3합의’ 이후 북한 영변의 핵시설에서는 그것을 사용치 못하게 하기 위한 “불능화”작업이 계속되어 왔다. 영변 이외에도 여러 곳에 핵시설이 산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10·3합의’에서 그 곳들을 폐기 대상에서 누락시킴으로써 일대 실책을 범했다. 영변의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작업은 오래 지연되어 왔던 것인데 불능화가 실패하면 비핵화의 목표는 허사가 되고 만다. 그리하여 북한은 ‘6자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불능화 작업을 성실히 진행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외부에 주려고 애써왔다. 그 상징적 사건이 2008년 6월 27일 단행된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 폭파사건이다. 이미 폐물이 다 된 이 냉각탑의 폭파는 북한이 비핵화에 충실하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쇼에 불과했다.²⁴¹⁷⁾ 여하튼 ‘10·4합의’에 따라 영변의 핵 시설에서는 불능화 작업이 일단 진행되고 있었다. 북-미관계는 2008년 1월경부터 진전되는 듯한 양상을 보였다.²⁴¹⁸⁾ 그러나 북한정권은 2007년 안에 실행하겠다는 핵 신고는 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 6월 26일에야 신고서를 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했다. 영변 냉각탑이 폭파되기 하루 전의 일이었다.

2417) 북한은 태도를 완화하여 북한 외의 회담 5개국의 당국자들에 의한 현지시찰을 허용하여 핵 불능화 작업의 진척상황을 살피게 했다. 12월에는 실험용 원자로에 장전되어 있는 폐연료봉을 끌어내어 저장고 풀에 옮기는 작업이 시작되었고, 6자회담 참가국의 ‘경제-에너지 지원작업부’의 수석대표회합과 실무 회합이 열렸고 11월 19일부터 이를 동안 뉴욕에서는 북한측의 제의에 의하여 “돈세탁 문제”와 미국 달러화 위조문제를 둘러싼 협의가 있었다. 이것을 근거로 북한측은 자기들이 할 일은 “다했다”고 비핵화 실현에 의욕을 보이는 척했다(『新東亞』 2008年 2月 pp. 63-64).

2418) 당시 『뉴욕 타임스』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냉각탑 폭파 비용으로 북한측 청구액의 반인 250만 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동아일보』 2008년 6월 3일자에 전제

핵 불능화 작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핵 활동의 신고요, 신고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 판단하는 '검증(verification)'의 과정이다. 그리하여 북한의 비(非)핵화 문제에 관한 논의에서는 '불능화'와 그 '신고'에 대한 '검증'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러나 6자회담은 2007년 10월 3일 합의가 발표된 후 오랫동안 열리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제네바와 싱가포르 등지에서 북-미 수석대표들이 회동하여 쟁점을 조율하는데 정력을 쏟아왔지만 양자의 기본 입장은 바뀌지 않고 전술에만 변화를 보여왔다. 여기서, 검증을 누가 하는가의 '검증 주체(主體)의 문제', 무엇을 검증하느냐의 '검증 대상의 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의 '검증 방식의 문제', 그리고 얼마 동안이나 하는가의 '검증 기간의 문제' 등은 북핵의 해결 방안에서 가장 지난한 쟁점과 협상대상이 되었다. 북한은 그중 어떠한 사안을 물고 늘어져 지연작전을 펴면서 더 많은 이득을 양보 받으려는 협상전술을 구상하고 있었다. 앞으로 언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타결되고, 비핵화가 이루어져, 험난한 여정이 끝날지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었다. 그간 6자회담에서 노정된 문제점, 쟁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불능화의 모호한 정의 : 정의에 관해서는 합의된 것이 없다.
- 2) "모든" 핵 프로그램의 문제 : 미국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계획을 반드시 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데 대해 북한은 그런 계획은 처음부터 없다는 불변한 입장을 고수했다.
- 3)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는 문제 : 미국은 북한이 핵 불능화를 끝낸 후에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대해 북한은 핵 불능화의 전제조건으로 그것을 내세웠다.
- 4) 북한의 '적성국 교역법'에의 적용 종료문제 : 미국은 북한의 핵 불능화가 실현될 때야 종료된다는 데 대해, 북한은 이것을 핵 불능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다.
- 5) 평화체제의 수립문제 :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한반도의 평화체제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북핵의 불능화가 실시된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 6) 경수로의 제공문제 : 미국은 이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모든 핵이 북한에서 폐기된 다음에 논할 수 있다는데 대해, 북한은 핵 불능화 이전에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7) *시리아*와의 핵 협력문제 : 미국은 핵무기 기술이 국제 테러집단 또는 반미적 '제3세계'로 확산되는데 신경을 곤두세워왔다. 그리하여 북한-*시리아*의 핵 협력을 끝까지 규명하려고 해왔다. 이에 대해 북한은 그런 사실은 없다고 철저히 부인하고 있다.

이상의 쟁점들은 6자 사이에서, 특히 북-미간에서 흥정의 대상이 되어 서로 교착되어 있었다. 이 쟁점들을 분석, 해명하는 것은 본고의 한계를 초과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다만 그에 관한 추가의 논의는 극히 필요한 것만에 국한시키고자 한다.

제15편

남·북한의 만성적 대결상태는 언제까지 — 50년 냉전에서 얼어붙은 빙벽의 체제

제1장 • 스탈린 사후에 제시된 김일성(金日成)의 민족-계급정책

제2장 • 민족이론의 새로운 포장(包裝)-“전사회의 혁명화”, “전 사회의
로동계급화”란

제3장 • 햇볕정책에 대한 북의 맹공격

제4장 • ‘우리민족끼리’ 함께 미궁(迷宮)으로 가는 길

제5장 • “남조선해방” 전략의 불변성(不變性), 전술의 다양성(多樣性)

제1장

스탈린 사후에 제시된 김일성(金日成)의 민족 - 계급정책

제1절 역사적 전변기(轉變期)의 정책 전환인가

레닌-스탈린의 민족이론은 제국주의 시대에 있어서의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²⁴¹⁹⁾라는 관점에서 전개되었고 그 실천적 과제는 첫째로 러시아 혁명이요, 둘째로는 세계 혁명이었다. 그들은 장차 사회주의 혁명이 전 세계에서 승리하고 그 후 일정한 과도기를 거쳐 공산주의 사회가 실현되면 지금의 개개의 민족들은 하나의 인류라는 공동체 안에 융합될 것으로 상정(想定)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을 아예 “부인”하고 있다는 잘못된 비판을 가해왔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맑스와 레닌 이래로 현존하는 민족 자체를 부인한 일이 결코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과도기적 존재를 중요시하고 피압박민족들의 민족 자결권을 열렬히 주장해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세계 최대의, 그지없이 착잡한 복수민족 국가였던 제정(帝政) 러시아에서 출생하여, 러시아민족과 이들의 지배를 받고 있던 비(非)러시아민족들 사이의 오래고도 뿌리 깊은 갈등을 관찰해온 레닌은 민족문제의 중요성을 명백히 파악하고 있는 동시에, 민족문제 또는 민족주의의 문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다루느냐에 따라 러시아혁명과 세계혁명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임기응변(臨機應變)적 전술로 이 문제에 도전했다.

러시아나 동서(東西) 유럽과는 달리 단일민족으로 형성된 한반도는 남북을 통하여 다수민족과 소수민족 간에 야기되는 민족문제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었다.²⁴²⁰⁾ 남

2419) 레닌의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론은 제5편 제3장 참조할 것.

2420) 한국, 일본 등에서는 여러 종족들이 하나로 뭉쳐 살면서 동일하고 순수한 단일민족을 형성하였다 할 수 있다.

-북간에 민족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분단된 조국 양편의 민족을 어떻게 하나로 통일하느냐 하는 것뿐이었다. 북한에서 소비엣화(化)가 시작된 후 오랫동안 김일성은 자체의 민족이론을 제시한 바가 없었고 할 수도 없었다. 단지 소련에서 공식화(公式化)된 레닌-스탈린의 이론을 추종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스탈린의 세계 혁명정책을 글자 그대로 추종하는 동시에 그 일환으로써의 “조선혁명”을 자기의 실천적 과제로 내세웠던 것이다.

김일성 역시 맑스-레닌주의 이론적 태두리 안에서 민족문제를 중시했고, 이것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다루느냐에 조선혁명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그도 민족주의를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충실할 것을 부단히 역설하였다.

‘조선노동당’의 민족이론은 러시아의 볼셰비키 당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술적인 문제가 아니며 오로지 당(黨)의 당면한 혁명정책의 차원에서 제시되었다. 그리하여 민족 자체에 대한 사회과학적 내지는 인류학적 구명은 지금까지 거의 미개척 상태로 남아있다. 이 점에서 볼 때 북한의 민족이론은 학문적으로 큰 취약점을 보이고 있는 분야다. 북한의 민족이론, 즉 김일성의 민족이론은 엄밀하게는 조선혁명을 위한, 남-북을 연방제하에 통일하려는 민족정책의 이론이다. 이것이 북한에서 본격적으로 제시된 것은 스탈린 사망 후 주체사상(主體思想)을 내세우면서부터였다.²⁴²¹⁾ 주체사상의 제창은 급변(急變)하는 국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김일성의 새로운 생존전략이었다는 점에 그 본질이 있다.

레닌-스탈린 이래로 세계 혁명을 목표로 했던 공산주의자들은 그 민족이론에서 민족주의를 근본적으로 배격하고 국제주의, 즉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옹호했다. 그런데 스탈린 사망 후 그에 대한 평가문제를 놓고 일어난 중-소분쟁은 1960년 이후 계속 악화되어 국제 공산주의는 사분오열(四分五裂)되었고, 이른바 다원화(多元化) 현상이 공산주의 세계의 시대적 조류로 되어 “사회주의 진영”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²⁴²²⁾ 한편 1970년대 중반 인지(印支)반도가 공산주의화(化) 되자

2421) 김일성이 처음으로 “주체사상”을 제시한 것은 1965년 4월이었다. 제9편, 제10장 참조.

2422) “사회진영은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은 1974년 4월 등소평이 UN자원회의에서 중국대표단장으로 참석하여 “세 개의 세계”를 논했을 때 한말이다.

마자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공산당정권은 국경전쟁까지 벌이는 등, 레닌이 상상조차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전통적 이데올로기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제는 이름으로 밖에 존재하지 않는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를 계속 강조하고 있었다. 김일성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당시 북경이 모스크바를 공격할 때는 “부르조아 수정주의”(修正主義), “사회제국주의”, “대국 배타주의”(大國排他主義)(민족주의 중에서도 최악의 것) 등의 딱지를 붙였고, 한편 모스크바가 북경을 공격할 때는 “소(小)부르조아적 급진주의”(急進主義), “교조주의”(教條主義), “좌익 모험주의”(冒險主義), “대한적 배외주의”(大漢的排外主義)[중화민족주의]라는 비방을 던지면서 서로 상대방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배신하고 “민족주의”로 전락했다고 단죄하는 것이 상례였다.²⁴²³⁾ 이러한 논쟁은 중-소가 국제 공산주의운동에서 해계모니를 장악하려는 이데올로기적 투쟁방법의 하나라는 측면을 노정하고 있는 동시에, 각국의 공산당이 맑스-레닌주의에 위배되는 “민족주의적 편향”(偏向)의 길을 걷고 있다는 측면을 아울러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그들의 민족문제에 관한 이론과 정책은 비(非)공산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의 그것과는 엄연히 구별될 뿐만 아니라 크게 대립하고 있었다.

회고컨대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와의 민족문제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현존하는 민족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한 민족의 발생과 생존양식, 그 발전과 미래를 어떻게 인식하고 민족 혁명의 좌표를 어떻게 설정하며, 독립을 성취한 후 민족국가(또는 복수 민족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제도를 어떻게 건설하고, 문화적 전통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느냐에 공산주의자와 일체 비(非)공산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대립해왔다. 공산주의자들이—민족운동에서 그 전술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일관하게 추구해온 목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수행과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라는 이름의 공산당 1당 독재의 확립이었다.

이에 대한 이단(異端)으로써 1960년대 후반부터 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 등 서(西)유럽 내의 공산당들과 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유고슬라비아-폴란드 등 동(東)유럽 공산당 내의 일부 비주류(非主流)파 사이에서 서서히 대두한 것이 유로코뮤니즘(eurocommunism)의 현상이었다. 유로코뮤니즘은 폭력혁명 대신 의회주의 투

2423) 1960년대에 벌어진 마구잡이 설전에 관해서는 제13편 제2장, 제3절 참조.

쟁을, 1당(黨) 제도 대신 자유로운 복수정당 제도를,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 대신 연합정권과 언론-출판-경제-예술-종교에서 다양성 있는 자유를, 권력의 영구적 독점 대신 자유선거를 통한 정권의 평화적 교체를 주장했다.²⁴²⁴⁾ 이것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공산주의운동에서의 역사적 변화의 징조로 간주되었다. 유로콤뮤니즘은 민족주의운동이 아니라 공산주의의 민주화운동이었지만 소련의 지배로부터 이탈하려는 측면에서는 “민족적”이었다.

유로콤뮤니즘이 표방한 위의 주장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이데올로기로 하는 현대 공산주의에서 최소한 레닌주의를 포기하는 이단(異端)이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세계의 정통적 레닌주의국가치고 그런 이상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나라는 전무했다. 그런데 1968년 1월 두브체크가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제1서기로 등장한 후 그런 이상을 공공연히 내세우게 되자 소련을 선두로 한 바르샤바 조약기구 소속 5개국을 소위 “제한주권론(制限主權論)”을 내세워 그해 8월 탱크부대로 체코슬로바키아를 강점하고 두브체크파를 축출한 후 정통적 맑스-레닌주의 정권을 그곳에다 부활시켰다. 요컨대 ‘소련공산당’은 레닌주의를 이탈할 민족적 자유는 허용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점에서는 중국공산당도 마찬가지였다.

현대 민족주의운동은 단일적이거나 동질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 민족주의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도 파시즘과도, 혁명적 급진주의와도 평화적 개혁주의와도, 경제적으로는 보수적 자본주의와도 진보적 사회민주주의(또는 민주적 사회주의)와도, 국제적으로는 우호협조주의와도 배타주의와도 결부될 수 있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어떤 시기에 공산주의와 정책상 제휴한 경우에도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표방하지도 않았고 추구하지도 않았다. 이 점에서 민족주의는 전통적 맑스-레닌주의와는 본질적으로 대립될 수밖에 없다.²⁴²⁵⁾

이 대립은 곧 정치이념의 대립이요, 원천적으로는 세계관의 대립으로 귀착(歸着)된다. 따라서 양자의 대립은, 일시적으로 전술상 공동전선을 펴으로써 화해하는 일

2424) 이에 관해서는 Wolfgang Leonhard, Eurocommunism,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9 (권득주 번역 『유로콤뮤니즘의 정체』, 대왕사, 1984년) 참조

2425) 이 점은 “민족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 또는 “무정부주의자” 등을 공산주의자(레닌주의자)부터 식별하는 기준이 되었다.

도 있지만 결국 양자의 잠재적 대립은 정치투쟁, 권력 투쟁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런 현상은 일제(日帝) 하의 한반도에서도, 오늘의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남한의-민주주의자들(그들은 거의가 다 민주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이다)과의 관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국제 공산주의운동의 다원화(多元化) 또는 다중심화(多中心化) 현상으로 말미암아 코민테른 창설(1919. 3) 이래로 고수해온, 이른바 민족을 초극(超克)한 하나의 계급적 통일체란 의미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관념상으로 밖에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많은 나라의 공산당, 특히 그 안의 반(反)스탈린주의자들은 모스크바-북경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사회주의에로의 독자적인 길”을 걸어가려는 충동이 점점 절실했던 것이다. 이들은 *이태올로지* 상으로는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보편적, 국제주의적 교의(敎義)에 대한 충실성을 계속 강조하면서도 자국의 경제적 특수성, 자기 민족의 고유한 역사, 자국의 이익, *러시아화*(化)의 거부, 최대한의 자립 등을 강조하고 추구하였다. *레몽 아롱*(Raymon Aron)이 일찍이 한 말을 빌린다면 “민족적인 것에 대한 긍정(肯定)”(national affirmation)이라는 획기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북한도 공산주의 나라들에서 나타난 그런 조류를 타고 “주체사상”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인지(印支)반도 공산주의자들의 “반제(反帝) 민족해방전쟁”의 시기로 부터 “해방” 이후에 이르기까지에 발생한 상호간의 국경 분쟁과 국경 전쟁도, 소련과 대결하는 모택동의 급진적 혁명노선도, 동(東)유럽의 탈소(脫蘇)현상도, 중-소분쟁에서 중립을 견지하려는 김일성이나 *차우체스쿠*(Nicolae Ceausescu)의 자주노선도 모두를 일괄하여 “민족주의”의 개념으로 단순화하여 보려는 경향이 비(非)공산주의 세계에서 지적(知的) 유행처럼 된 때가 없지 않았다. 그리하여 모택동에서 호치민(Ho Chi Minn, 胡志明), 티토, *차우체스쿠*, 김일성에 이르는 일련의 공산주의자들을 면밀한 이론적 검토 없이 간단하게 “민족주의자”로 규정하는 사고의 혼란이 일어났다.²⁴²⁶⁾ 자주적 공산주의자들을 민족주의자와 동일시하는 것은 세계사의 전환기에 일어난 인식상(認識上)의 혼선이었다라고 할 것이다. 거시적으로 보아 그들의 정치노선이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그들 자

2426) 이들을 “민족주의”의 계열에 포함시키는 것은 자유이지만, 같은 민족주의자라고 해도 정치적 민주주의(자유선거제)를 신봉하는 사람들과는 엄밀히 구분되어야 한다.

신이 스스로를 민족주의자로 자처한 일이 없었음은 물론, 자국의 정치노선을 민족주의로 규정한 바도 없는데 있었다. *광스-레닌주의의 이해*올로기에서는 민족문제가 극히 중요시되고 있지만 민족주의에 관한 기본적인 관점과 입장에 있어서는 비(非)공산주의적 민족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공산주의자들, 특히 스탈린 일파의 민족이론-민족정책은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비타협적(非妥協的) 사상투쟁, 권력투쟁을 통하여 전개되었던 것이다. 김일성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북한의 민족이론은 곧 김일성의 민족이론이며, 보다 정확하게는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 및 이것과 표리관계에 있는 “남조선혁명”을 위한 민족정책의 이론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은 휴전 후 맹렬한 기세로 강행되었고, “남조선 해방”을 통한 조국통일 전략도 1964년 이후 더욱 연마되어 왔다. 김일성은 1971년 이래의 남북대화 기간 중에도 대화가 중단된 이후에도 남조선혁명 사업을 위해 중단한 일이 없다. 그러나 국내외의 상황이 모두 그의 선전과 희망적 관측대로 전개된 것은 아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에는 중-소분쟁의 외중에서 1960년대 후반 이래로 심각한 차질이 노정되었고 인민민주주의 혁명 형(型) “남조선혁명”에 대해서도 남한의 노동자, 농민, 소시민, 지식인들의 호응은 극소수의 동조자를 빼고는 거의 전무에 가까웠다. 한편 “미제(美帝)”를 고립 파탄시키고자 “미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을 합리화하기 위한 국제적 반미(反美)운동도 결코 김일성이 바라는 대로만 되어가고 있지는 않았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던 *베트남* 전쟁에도 불구하고 세계정세는 크게 전환하고 있는 기운을 보였다. 미-소간의 평화공존 정착, 미-중의 화해 등에 의하여 국제관계의 구조는 서서히 바뀌고 있었다. 특히 1977년 7월 등 소평의 재 부활 이후의 중국은 소련의 “사회제국주의”²⁴²⁷⁾ 침공에 대비, 4개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국-일본-서(西)유럽과 화해를 모색해가고 있었다. 모택동 시대인 1972년 2월 이래의 미-중 제휴는 “수정주의” 소련의 대미(對美) 공존정

2427) 입으로는 사회주의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제국주의를 실행하는 것을 비방하는 용어다. *레닌*은 제2인터내셔널의 R. 맥도널드를 비판할 때 그렇게 말했다. 1969년 中央黨의 林彪가 소련을 비난할 때도 이 말을 사용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1) 제한주권론, (2) 국제독재론, (3) 사회주의 대가장론, (4) 국제분업론 등이다. 소련 사회제국주의 정책의 예로 소련군을 위시한 5개국 군대의 *체코* 침공, 중국영토인 진보도 침입사건이 대표적인 것이다. 1978년 이후 중국은 대소비난용으로는 이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책과는 상당히 다른 역사적 대변화였다. 이렇게 냉전 체제가 사라져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자기의 낡은 교조주의적 혁명 정책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국제공산주의운동 내의 다원화 현상이 단일적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사실상 부인하면서 사회주의 나라들이 자국의 국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던 상황에서, 세계의 공산주의 정당들은 *이데올로기*에 있어서는 여전히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실천에 있어서는 급속히 민족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 환경에 직면하여 김일성은 “주체사상”, “민족의 자주성”, “자력갱생”, “민족적 투쟁”, “민족적 자유”, “민족적 자립경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대주의 반대”, “민족 허무주의 배격”, “민족의식”, “민족적 자부심”, 외세의 간섭 없는 “자주적 통일”등 일련의 주장으로써 민족적인 정감(情感)을 더욱 열렬히 토로해왔다.²⁴²⁸ 그리하여 북한은 “새로운 민족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는 듯한 인상을 대외적으로 펴뜨렸다.

제2절 “*부르조아* 민족주의”냐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냐

그렇지만 민족 문제에 대한 김일성의 *이데올로기*는 “민족주의”, “민족 개량주의”, 또는 “*부르조아* 민족주의”에 대한 일관한 공격 속에서 강화되고 실천되어 왔다. 그는 이러한 비난 용어들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정적들을 비난했다. 여기서 그가 내세우는 것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였다.

노동계급의 계급적 이익은 본래부터 국제적이며 노동계급의 국제적 연대성은 공산주의 위업을 위한 담보로 됩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부르조아* 민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배타주의를 배격하며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밀접히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기 나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사람이라야만 국제노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충실할 수 있으며 또한 진정한 국제주의자가 되어야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계급의

2428) 김일성의 이러한 민족주의 냄새가 나는 용어는 8·15해방 후부터 휴전이 성립된 지 얼마동안은 일제 금기(禁忌)로 되어있었다. 중-소분쟁에 의하여 국제공산주의가 산산이 부서지고 사회주의 나라들이 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자 제각기 “자주”를 부르짖게 되었다.

민족적 임무와 국제적 임무는 통일되어 있습니다.²⁴²⁹⁾

김일성은 심지어 자주성을 가진 사회주의 나라들을 “민족 공산주의”라고 부르는 자본주의 나라 일부 신문들의 논평을 “반동”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주성을 견지한다는 구실 밑에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등을 돌려대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태도가 아니며 그것은 곧 민족 이기주의의 토굴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 한다”²⁴³⁰⁾고 언명했다. 그리고 모스크바를 염두에 두고 “어떤 사람들은 자력갱생(自力更生)이 민족주의라고 시비하는데 그것이 왜 민족주의입니까? 자력갱생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혁명정신입니다. 제 힘으로 혁명을 하고 제 손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이 무엇이 나쁠니까?……이렇게 하는 것이 국제주의에 충실한 것이며 사회주의의 공동 위업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²⁴³¹⁾고 민족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자기의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이상과 같은 김일성의 말이 곧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한 그의 충실성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그는 “국제주의”를 계속 역설함으로써 국제 공산주의운동의 이데올로기적 명분을 유지하며, 아울러 중-소로부터 “형제적 원조”를 얻고자 시도하였다. 여하튼 그의 “자주성”(自主性), “애국주의”(愛國主義), “민족적 자립경제”란 것이 비(非)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민족주의와 본질적으로 얼마나 다른가를 그는 명시하고 있었다. 그는 레닌의 이른바 “부르조아 민족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이것은 민족문제에 있어서……두개의 화해할 수 없는 적대적(敵對的)인 슬로칸”²⁴³²⁾이라는 명제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에서는 “민족”-“민족적인 것”은 더욱더 역설되어 왔지만, 그것을 역설하면 할수록 자기의 민족정책을 민족주의와 엄밀하게 구별하면서 민족주의를 계속 공격하는 이론 투쟁을 벌여왔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민족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에 의하여 실천되고 있었는가.

김일성은 우리 민족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한 “자주적인 민족”으

2429) 『김일성저작선집』 4, pp. 381~382.

2430) 《로동신문》, 1972년 1월 11일.

2431) 『김일성저작선집』 3, 평양, 1968년, pp. 328~329.

2432) Lenin, 앞의 *Collected Works*, Vol. 20, p. 26.

로 개조할 것을 목표로 삼아왔다. 1963년 2월 8일 그는 군(軍)-당(黨)-정권(政權) 기관 간부들 앞에서 개진한 연설에서 자기 식의 “애국주의”와 “민족적 자주성”을 열렬히 토로한 바 있다. 그 일절은 아래와 같다.

우리들에 있어서 자기 조국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민은 나라 없는 식민지 노예의 신세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뼈저리게 체험하였습니다. 조국은 모든 사람의 진정한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자기 조국을 떠나서는 살 수 없으며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조국의 융성 번영을 통해서만 자기의 행복한 앞길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민족해방혁명을 완수해야 할 우리에게 있어서 애국주의 사상은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며 따라서 자기 민족과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희박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적지 않은 경우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이 되고 *로씨야*에 가면 *로씨야* 사람이 되고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²⁴³³⁾

김일성은 위의 이러한 반(反)민족적 현상은 그 원인이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사대주의(事大主義) 사상”과 희박한 민족적 자부심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지금까지 근로자들 속에서 애국주의 교육이 철저하게 진행되지 못한 결함을 들었다. 그러나 그는 그러면서도 애국주의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하여 계속 다음과 같이 완화론을 펴기도 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노동계급에게는 조국이 필요 없는 것같이 생각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가 서로 모순되는 것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서로 뗄 수 없는 통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국제주의의 간판을 내걸고 자기 조국을 배반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옳지 못합니다. 원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는 것은 자주적인 민족들, 국가들 간의 국제주의이지 민족과 국가를 떠난 국제주의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라도 필요 없고 민족도 필요 없고 오직 국제주의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국제주의자의 입장이 아니라 자기 조국과 민족을 잊어버리고 남에게 붙어먹으려는 망국노의 입장입니다.…… 지금과 같이 국경이 있고 제가꿈 자기 나라를 가지고

2433) 앞의 『김일성저작선집』 3, pp. 485~486.

민족별로 살아나가고 있는 조건에서는 자기 조국과 민족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²⁴³⁴⁾

조국과 민족의 가치를 열렬히 토로한 그의 위와 같은 말들은 소박한 일부 민족주의자들의 심정에 호소할 만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강조를 어디까지나 국제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의 일환으로써 전개하고 있었다. 그는 정의하기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사회주의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노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애국주의”라고 하고 “그것은 계급의식과 민족의식을 결합시키고 자기계급과 제도에 대한 사랑을 자기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결합시킨다”²⁴³⁵⁾고 그럴듯이 설명했다. 그의 기회주의적 설명은 계속된다.

김일성은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우리 혁명의 전취물인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과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 민족경제가 있는 사회주의 조국을 사랑하는 사상”²⁴³⁶⁾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국제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고립주의나 민족주의를 철저히 반대한다”²⁴³⁷⁾느니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부르주아 민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배타주의를 배격하며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²⁴³⁸⁾느니 하는 말로 소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민족주의”와의 비타협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근로자들을 애국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는데 있어서 “민족적 자주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중-소를 목시적 대상으로 하여 다음처럼 말했다.

원래 공산주의자들은 온갖 예속을 없애고 자주독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자기의 초보적인 임무로 삼고 있습니다. 정치적 자주성을 부인하고 사대주의를 설교하는 자는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자주성이 없는 사람은 남이 수정주의를 하면 자기도 수정주의를 하고 남이 교조주의를 하면 자기도 교조주의를 하며 남이 투항주의(投降主義)를 하면 자기도 투항주의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바람이 부는 대로 아무 쪽으로나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가 어떻게 자기 나라 혁명을 책임지고 영도하는 공산

2434) 같은 책, pp. 486-487.

2435) 『김일성저작선집』 4, 1968년 판, p. 379.

2436) 『김일성저작선집』 5, 1972년 판, p. 466.

2437) 앞의 『김일성저작선집』 4, p. 352.

2438) 같은 책, p. 382.

주의자로 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 자주성이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따라만 다니는 사람은 제 정신을 못 가진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남의 나라를 예속시키려는 대국주의자들에게 이용되며 자기나라 인민의 이익을 팔아먹는 반역자로까지 굴러 떨어질 수 있습니다.²⁴³⁹⁾ (밑줄은 저자)

북조선 인민들을 이상과 같은 “애국주의”와 “정치적 자주성”을 가진 민족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가 정력을 기울인 것은 곧 “계급 교양사업”을 통하여 사람들을 노동계급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일이었다. 김일성은 계급교양(주입교육)과 결부된 애국주의 교양(주입교육)을 사회주의 건설에로 북한의 인민들을 조직-동원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지만 그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남조선 해방”이란 임무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그의 말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지금 북반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지만 우리 조국이 아직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조선인민들이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민족의 자주독립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민족해방혁명을 끝까지 수행하여야 하며 전국적으로 사회주의혁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민족적 해방과 조국의 자주독립문제를 더 강하게 내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없습니다.²⁴⁴⁰⁾ (밑줄은 저자)

이상 김일성의 일련의 발언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전략적 목표가 바로 “남조선혁명”, 즉 자기의 깃발 밑에 전 한반도를 공산주의화 하는데 있음을 숨김없이 밝힌 것이었다. 그러면 “남조선혁명”의 수행에서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민 대중을 계급적, 민족적으로 의식화(意識化) 하고 정치적으로 각성시키는 일이다.

…혁명은 대중을 각성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민대중을 의식화하지 않고서는 그들을 조직적으로 묶어세울 수도 없으며 대중운동을 발전시킬 수도 없습니다. 남조선 혁명조직들은 로동자, 농민들의 계급의식과 인민대중의 민족의식을 높이고 그들을

2439) 『김일성 저작선집』 3, 1968년판, pp. 487~488.

2440) 같은 책, p. 490.

정치적으로 계몽하며 각성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²⁴⁴¹⁾ (밀 줄은 저자)

남조선 혁명을 완수하자면 “혁명적 민주기지”인 북조선의 인민들을 노동계급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는 정치 교양사업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 사업은 반드시 “당 정책” 교양사업과 “혁명전통” 교양사업을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1961년 9월의 제4차 당(黨) 대회 이래로 유달리 강조해왔다. 여기서 “당 정책”이란 1956년 이래로 그가 치열한 당내 권력투쟁을 통하여 자기의 반대파를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 등의 낙인을 찍어 소탕한 후 확립한 스탈린주의적 정책체계를 뜻한다. 한편 “혁명전통”이란 그가 1930년대에 만주에서 ‘중국공산당’ 산하의 유격대,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의 일원으로 일본군과 싸운 이른바 “항일무장투쟁”에서 자기가 발휘했다고 자랑하는 “혁명사상”, “영도의 혁명성”, “탁월한 전략전술”, “고매한 덕성”, “강인한 의지와 원칙성”,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 작풍” 등을 말한다.

이렇게 북한에서의 “사회적 애국주의”와 “민족적 자주성”에 대한 정치교양사업은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그는 군(軍)-당정(黨政) 간부들 앞에서 진술한 위의 연설에서 “우리가 제정신을 가지고 자기나라 혁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정책과 우리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한다”고 가르쳤다.²⁴⁴²⁾ 그는 자기가 책정한 “우리 당의 정책은 조선의 구체적 실현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맑스-레닌주의며, 우리 당의 행동의 지침”²⁴⁴³⁾이라고 그 정당성을 내세웠다. 그리고 “우리의 혁명전통은 맑스-레닌주의의 기치 밑에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조선혁명을 승리의 길을 개척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英勇적으로 투쟁하는 과정에서 발휘한 불굴의 투쟁정신과 고귀한 경험과 업적”²⁴⁴⁴⁾이라고 자화자찬(自畫自讚)했다.

이어 그는 그러한 “당 정책과 혁명전통으로 무장한 사람에게는 수정주의도 교조주의도 사대주의도 절대로 달라붙을 수 없다”²⁴⁴⁵⁾고 자기의 무오류성(無誤謬性)을

2441) 앞의 『김일성저작선집』 4, p. 397.

2442) 같은 책, p. 492.

2443) 위와 같음.

2444) 위와 같음.

강조하면서 “이런 사람이라야 당적 사상체계가 확고하게 선 진정한 조선의 혁명가라고 말할 수 있다”²⁴⁴⁶⁾고 자기를 모델로 민족의 각 성원들을 개조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여기서 그가 말한 “당적 사상체계”는 뒤에 와서 이것을 절대화하여 “당의 유일 사상체계”라고 정식화(定式化) 했다.

그런데 정치적 자주성은 계급 교양과 애국주의 교양만으로 확립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경제적 자립성이 없이는 정치적 자주성도 보장될 수 없다. 그리하여 김일성은 “어떤 민족이든지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만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고 나라의 부강 발전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고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을 기회 있을 때마다 되풀이해 강조했다. 그의 이러한 민족적 자립 경제의 강조는 그가 중-소분쟁의 소란 속에서 북경 편에 기울어짐에 따라 모스크바/로부터의 원조가 거의 중단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다. 또한 그는 자기의 “정치적 자주성”과 “경제적 자립성”을 남한 사람들에 대한 선전으로 확대 선전해 왔다. 그는 이런 주장들을 통일문제와 결부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남반부 사람들에게 북반부에서 정치적 자주성과 경제적 자립성이 확립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며 그들이 미국이나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정치적 자주와 경제적 자립의 길로 나가도록 계속 고무하여 주어야 합니다. 남조선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도 유엔에 의하여 조국의 통일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무엇 때문에 조선의 통일문제를 조선 사람들끼리 해결하지 못하고 유엔의 힘을 빌어 해결하겠습니까?……우리나라에는 지난날부터 사대주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외세에 의존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에 와서는 남조선의 일부 사람들 속에 남아있는 외세의존사상이 우리의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지장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에게 정치적 자주성에 관한 사상을 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²⁴⁴⁷⁾ (밑줄은 저자)

이와 같은 정치적 자주성은 반드시 계급의식과 밀접하게 결합되어야 한다. 그렇게

2445) 위와 같음.

2446) 위와 같음.

2447) 앞의 『김일성저작선집』 3, pp. 488~489.

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 혁명조직들은 노동자, 농민들의 계급의식과 인민대중의 민족의식을 높이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계몽하며 각성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을”²⁴⁴⁸⁾ 그는 교시했다. 모든 화근은 “미(美)제국주의”에 있다. 따라서 그는 대중 속에서 “미제(美帝)에 대한 환상”과 사대주의사상(事大主義思想)을 극복하고 반공사상을 뿌리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²⁴⁴⁹⁾ 그에 의하면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큰 장애물로 되고 있는 것은 “남조선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을 숭배하며 미국에 의존하여 살려는 사상의 영향”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조선 인민들을 그러한 “반동사상”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는 미(美)제국주의자들의 신 식민정책을 폭로하고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사상”을 반대하고, “민족 주체의식”을 높이고, “외세의존사상(外勢依存思想)”을 반대하고, “자주 자립의 사상”을 선전하고, “민족 허무주의 사상”을 배격하고, “조선 인민의 애국적 민족전통”을 널리 선전하고, “애국 애족의 사상”을 고취하여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남조선 인민들로 하여금 미국 “침략자들”과 용감하게 투쟁하게 하는 길이다.²⁴⁵⁰⁾ 그리고 이러한 모든 반미(反美) 선전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프랑스-레닌주의 사상* 선전과 밀접히 결부되어 진행되어야 한다”²⁴⁵¹⁾는 것을 그는 유달리 강조했다.

2448) 같은 책, p. 397.

2449) 앞의 『김일성저작선집』 4, p. 397.

2450) 같은 책, pp. 397~398.

2451) 같은 책, p. 398.

제2장

민족이론의 새로운 포장(包裝)

—“전사회의 혁명화”, “전 사회의 로동계급화”란

제1절 사람의 개조(人間改造) : “공산주의의 새 인간”으로

김일성에 의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계급적 차이와 함께 민족적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 그러자면 민족적 자립 경제를 건설하여 경제적 낙후성을 극복하고 민족적 번영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⁴⁵²⁾ 그런데 자본주의 하에서는 민족적 평등은 이룩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는 자본주의 시대란 “계급적 착취와 함께 민족적 억압이 지배하는 시대요, 극소수의 민족에 의하여 대다수 민족들의 자유로운 발전이 억제되고 민족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시대”²⁴⁵³⁾이기 때문이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시대적 상황을 현실 그대로 인정하려하지 않았다.

김일성은 스탈린의 분류 방식에 따라 1967년 12월 “사회주의적 민족”을 말하면서 자본주의에서 해방된 민족들을 “사회주의적 민족”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노동당의 임무를 제기했다.²⁴⁵⁴⁾ 그 후 그는 남한의 민족 감정이 반발할 것을 고려하여서 인지 “사회주의적 민족”이라는 표현을 더 이상 정면에 내세우지는 않고 다른 용어를 만들어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는 조선민족을 공산주의라는 최종의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적 민족”으로 만드는데 지대한 정

2452) 같은 책, pp. 538~539. 후일 북한의 당 정책해설가들은 해설하기를 “사회주의적 민족”이란 온갖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민족을 말한다고 하고, “민족을 이루고 있는 모든 근로자들 사이에서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정치사상적 통일을 이루어 낸 민족”이라고 정의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용어사전』,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82년, p. 294.

2453) 같은 책, p. 539.

2454) 같은 책, p. 539.

력을 기울여왔다. 그리고 김일성 우상화가 상승함에 따라 “사회주의적 민족”은 “김일성 민족”으로 되었다가 오늘에는 “김정일 민족”으로까지 불리우는 기괴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김일성이 생각하는 “사회주의적 민족”화(化)란 곧 북한 판의 “인간 개조”요, “민족 개조”였다. 그는 북한 인민들을 개조하는 일을 “사람을 개조하는 사업” 또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만드는 사업”이란 말로도 표현했으며 그 방법의 요체로써 “전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라는 정책으로 공식화했다. 이 두개는 일체(一體)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전사회의 혁명화”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김일성은 이것을 “사람들의 혁명화”라고도 표현했고, 이때의 “사람”이란 곧 농민, *인텔리*를 비롯한 소(小)부르조아 출신자, 아직 공산주의 사상으로 의식화되지 않은 일부 노동자를 가리킨다. 김일성의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자.

사람들을 혁명화 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 리기주의, 개인주의를 비롯한 부르조아사상을 빼고 개인의 리익 보다도 집단과 전체의 리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공산주의 사상의식을 높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여 혁명화 한다는 것은 개인의 리익을 버리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대중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바쳐 싸우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혁명가를 만든다는 것을 말합니다.²⁴⁵⁵⁾

그러면 다음으로 “전 사회의 로동계급화”란 무엇인가. 김일성의 설명은 산만하지만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혁명에 의하여 권력을 장악한 노동계급은 그 독재(*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하에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단행하고, 착취계급을 완전히 숙청하고, 모든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만들으로써 사회주의 제도를 수립한다. 이것이 *프롤레타리아트*의 1차적 임무다.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된 다음에는 모든 근로자들을 “사회경제적 처지와 사상 정신적 풍모에서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계급적 차이를 점차로 없애는 것이다”²⁴⁵⁶⁾ 계급적 차이를 없앤다는 것을 그는 아래와 같이 해명하였다.

2455) 앞의 『김일성선집』 4, p. 416.

2456) 앞의 『김일성선집』 5, p. 432.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자면 생산력을 발전시켜 노동계급과 농민사이의 노동조건의 차이,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의 차이를 없애는 것과 함께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사상과 도덕, 문화와 기술수준에서의 차이도 점차 없애야 합니다.²⁴⁵⁷⁾

김일성에 의하면 착취 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뒤에도 온갖 계급적 차이는 남아있고 낡은 사상적 잔재는 오랜 동안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소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생산력을 발전시켜 노동계급과 농민의 의식면, 문화면에서의 차이, 노동 조건(기계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 생산 수단에 있어서의 소유 형태(협동적 소유와 전 인민적 소유)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 이 말은 스탈린 시대의 소련에서 끊임없이 들어온 교조주의적 설명이다. 그는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으로써 경제조건(사회의 물질적 부)과 정치적 조건(대중의 공산주의의식)을 들고, 전자를 “물질적·기술적 요새”로, 후자를 “사상적 요새”라는 정의를 내렸다.²⁴⁵⁸⁾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농촌의 ‘협동적 소유’(집단적)를 끊임없이 ‘전 인민 소유’(國有)로 접근시키는(사적 부문의 완전몰탈) 동시에 농민들의 뒤떨어진 사상을 노동계급의 선진적 혁명사상으로 개조하는 투쟁(사상혁명)과 함께 농민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노동계급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는 투쟁(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전개해왔다. 그래야만 노동자와 농민간의 계급적 차이가 소멸된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농민은 사유(私有), 자영(自營), 자기경험에 대한 집념이 가장 강한 사회계층이다. 그는 당(黨) 정책에 기꺼이 순응하지 않는 농민들을 계급적 각성이 부족하고, “이기주의”와 “보수주의(保守主義)”, “소극성(消極性)”을 청산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농민들을 혁명화, 노동 계급화하기 위하여 농촌에서의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²⁴⁵⁹⁾

그에 있어서 농민들 못지않게 인간 개조가 어려운 사람들은 비판 정신을 가진 인텔리들이다. 그는 북한의 “인텔리들은 부르쵸아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엄격한 규율 밑에 살기를 싫어하여 남의 통제를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²⁴⁶⁰⁾이라고 특징 지

2457) 앞의 『김일성선집』 4, p. 547.

2458) 김일성,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1969년 판, p. 264.

2459)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앞의 『김일성저작선집』 4, pp. 31~76 참조.

운다. 그리하여 그는 *인텔리* 정책에 세심한 주의를 돌리고 이들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다그쳐왔다. 그에 의하면 “*인텔리*들을 혁명화하고, 노동계급화 한다는 것은 *인텔리*들의 의식(意識) 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없애고 그들을 노동계급의 혁명정신으로,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켜 진정한 노동 계급의 *인텔리*로,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육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⁴⁶¹⁾ 여기서 그는 노동계급이야말로 진리의 파악자며 실천자요, 과오를 범하지 않는 덕성이 높은 혁명계급이요, 의례히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의 유일한 지도계급이란 것을 의심할 수 없는 전제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자라고 해서 앉아 있어도 다 혁명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계급이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 대중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계급이 되고, 농민과 *인텔리*를 자기의 모습대로 개조하여 전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勞動階級化)를 실현하려면 그 자체의 사상성과 문화성과 조직성을 더욱 높여 보다 더 혁명적이며, 문화적인 계급으로 만들어야 한다.²⁴⁶²⁾ 즉, 노동계급의 자기 수련과 자기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 하는 것을 김일성은 착취 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 제도가 승리했다는 북한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중요한 임무”라고 제기하고²⁴⁶³⁾ 그 임무를 수행해 왔다는 것이다.

전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상혁명이다. 사상혁명을 통하여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는 낡은 봉건적, 부르쥬아적 또는 소(小)부르쥬아적 사상 잔재와 이기주의, 개인주의들을 완전히 청산하고 근로자들을 철저히 혁명화 함으로써만 그들의 창조적 열성과 헌신성, 적극성을 더욱 높여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공산주의의 “물질적 요새”를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이 김일성의 *비전*이었다. 요컨대 사상혁명을 통해서만 근로자들을 높은 사상 의식수준을 가진 완전히 노동계급화(化)된 인간, 즉 “공산주의적 새 인간” 즉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중 주체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사상혁명을 최우선적인 혁명과업으로 내세

2460) 앞의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p. 265.

2461) 앞의 『김일성저작선집』 4, p. 372.

2462) 같은 책, p. 548.

2463) 같은 책, p. 547.

워 왔다. 이것이 그의 이른바 모든 사업 중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정책, 즉 정치 선행주의(先行主義)였다.

김일성에 의하면 사상혁명은 사상투쟁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이때의 사상투쟁은 노동계급의 사상과 낡은 부르주아 사상 간의 투쟁이란 의미에서 일종의 “계급투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사상혁명을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된 이후에 있어서의 계급투쟁의 “중요 내용”이라고 규정했다.²⁴⁶⁴⁾ 또한 그는 사상혁명을 “사람들의 의식 영역에까지 자본주의를 종국적으로 없애기 위한 심각한 계급투쟁”²⁴⁶⁵⁾이라고도 정의했다. 그러므로 그는 사상혁명을 철저히 하는가 안하는가의 문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라는 것이다.²⁴⁶⁶⁾

이상과 같은 사상혁명의 중시(重視)는 곧 북한의 혁명적 정신주의, *이데올로기* 우선주의를 의미했다. 자본-기술-물질의 빈곤을 혁명적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대중의 열의와 창발성(創發性)을 동원함으로써 보충하며, 당에 대한 그들의 불평, 반항, 불복종을 혁명정신의 고취(高趣)로 극복하고 이들을 조직화하여 1당 1인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사상혁명의 목표였다. 그리하여 사상혁명의 방법로서는 “공산주의 교양사업”이란 이름으로 당의 *이데올로기*의 주입교육이 집중적으로 강행되어 왔다. 공산주의 교양사업에서는 김일성이 해석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자기의 혁명 전통에 대한 교육이 토대를 이루고 있다. 그 토대위에서 당의 “유일사상체제”, 즉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이라고 하는 당 정책으로 전 인민을 무장시켜 이들을 “당성(黨性)”과 “인민성(人民性)”이 공고한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내세워왔다. 이러한 방법은 김정일(金正日)에 의하여 고스란히 계승되었다.

전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 하는 데는 사상 교양사업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와 함께 엄격한 “조직생활”을 통하여 사상 수련과 혁명적 단련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자기비판과 상호비판”을 습관화하여 자기를 개조하고 동지들을 개조한다는 방식을 택했었다. 동시에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모든 현상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벌리는 한편 당 세포, 초급 근로단체, 작업반, 가정생활에서 혁명적 실천을 통하여 혁명

2464) 앞의 『김일성저작선집』 5, 1972년, p. 172.

2465) 같은 책, p. 463.

2466) 같은 책, p. 464.

적 의지를 단련케 하는 방법으로 혁명화의 과정이 진행되었다. 전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정책은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제11조)에서까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전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의 과정은 곧 북한사회의 전체주의화 과정이며 김일성-김정일의 권력의 절대화 과정이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힘의 원천을 수령(독재자)에 대한 모든 일꾼과 당원들의 절대적 충성심에서 찾았다. 그리하여 25년 전부터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호 보위”하는 충직한 “친위대”, “결사대”²⁴⁶⁷⁾가 되라는 호소가 들려왔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 정책에 대한 절대성의 정신, 무조건성의 원칙을 튼튼히 간직하고 수령님의 명령 지시를 집행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²⁴⁶⁸⁾이 부끄럼 없이 강조되고 있었다. 김일성이 사망하자 이제는 모든 인민은 김정일을 수호하는 “충폭탄(銃爆彈)”이 되라는 불같은 호령이 떨어졌다. 이런 현상은 봉건적 군주제와 현대 전체주의 정치문화의 특징이다.

북한의 인민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하여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개조하는데 있어서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혁명적 문학-예술의 창작이다. 김일성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수법에 따라 “형식에서 민족적이고 내용에서 사회주의적인 참말로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작품 창작에 관하여 수시로 논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란 1934년 소련 작가동맹(作家同盟) 규약(規約)에서 규정된 예술창작 방법으로서, 이에 의하여 소련의 많은 작가 예술가들이 대량 말살되었다. 대전후인 1946~48년에는 *쥬다노브*가 이것을 다시 들고 나와 문예를 통제 획일화 하는 수단으로 이용했지만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에는 그 이론은 소멸하고 말았다.

김일성은 “민족적 형식”, 그중에서도 민족어의 순화(純化), 조선의 선율(旋律)과 감정, 조선적인 것의 바탕, 민족음악, 조선화(朝鮮畵) 등을 빈번히 강조했다. 그리고 “민족 허무주의”(虛無主義)에 빠지지 말고 민족문화를 비판적으로 계승할 것을 역설한다. 그는 벌써부터 미학(美學)과 문학과 언어학에 있어서도 북한 최고의 권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문학-예술에서의 “민족적 형식”과 함께 이른바 “사회주의적 내용”에 대해서도 김

2467) 《근로자》, 1974년, 제3호, p. 38.

2468) 《근로자》, 1974년, 제9호, p. 4.

일성은 여러 차례 교시를 내리고 “혁명적 낙관주의”와 “혁명적 낭만주의”의 정신으로 작품을 만들 것을 강조했다.²⁴⁶⁹⁾ 여기서 “사회주의적 내용”이란 철저한 공산주의 혁명 정신을 담은 내용, 그중에서도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한 작품내용을 말한다. 그는 모든 스탈린주의자들이 그러했듯이 문학-예술을 독재정치의 수단 이상으로는 결코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작품이 자기들의 혁명에 유리 한가 아닌가의 관점에서만 그 가치를 평가했다. 김일성에 의하면 북한의 문학-예술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에 복무할 뿐만 아니라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전 조선인민에 복무하여야 한다²⁴⁷⁰⁾”고 지시하면서 그 구체적 방법까지 하나하나 제시했던 것이다.

제2절 “주체적 민족관”(主體的 民族觀)의 제창

남-북한의 민족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으로서 동(東)유럽의 여러 나라나 소련에서처럼 복잡한 복수 민족들 간의 대결이나 지역과 종교를 기초로 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거의 없다. 남-북한의 민족은 언어, 문자, 의상, 관혼상제, 주택양식, 인간적 정서, 음식, 생활습관 등 생활양식에서는 아직도 거의 변함없는 공통성을 간직하고 있다. 더욱이 동일한 혈통, 혈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는 세계에서 희귀한 민족 중의 하나다. 이러한 특징들은 오랜 역사적 전통 속에서 형성되어 온 것이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민족의 계급적 내용을 보는 정치사상의 문제다.

남한의 경우, 민족 내부에는 오랫동안 사회적 계급-신분이 존재하고 있었고 계급 간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역사적 사실을 당연히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단일의 민족 공동체에 존재하는 특유한 비(非)계급적 측면과 초당파적(超黨派的) 요소를 중시한다. 그리하여 통일 문제도 당파와 계급을 초월한 민족 공동의 이익, 또는 민족적 운명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이 전통적인 경향이다. 반대로 북한에서는 민족의 계급적 내용을, 그것도 공산당의 1당 1인 독재체제 유지 강화라는 목적의식에서 김일성의 민족관(民族觀)을 절대화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지금까지 어느 한 집권자

2469) 앞의 『김일성저작선집』 4, pp. 149~150.

2470) 같은 책, p. 144.

의 민족관을 유일한 진리로 신비화한 일이란 없었고, 있을 수도 없다. 이에 대해 북한에서는 민족문제는 곧 공산당 독재 권력의 확립, 유지, 확대의 문제로 귀결한다.

김일성은 정권 유지에 지장이 있는 한 우리나라의 빛나는 민족주의적 전통과 업적을 깎아내리는 한편, 이에 대한 해석을 *맑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에 부합되도록 왜곡해 왔다. 그리고 남한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과 다른 민족 관을 내세우면 그것은 곧 “*부르조아 민족주의*”요, *부르조아*계급의 지배와 착취를 민족의 이름에서 옹호,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철저히 배격한다. 여기에는 확고부동한 권력의지가 깔려있다. 그들은 김일성 형(型)의 공산주의자만이 진정한 민족의 대표요, 민족의 운명의 개척자며, 통일이 된 후에도 민족 전체를 북한에서처럼 자기들의 1당 독재에 의해 지배할 도덕적 정치적 권리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러한 독단적 우월의식의 밑바닥에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인류가 도달한 최후의 진리요, 조선노동당은 오류를 범할 수 없는 혁명의 전위이며 총참모부라는 철저히 주관주의적 편견이 전제로 되어있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들의 독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서슴없이 민족의 “반역자”로 단정한다. 이와는 반대로 남한의 경우는 민족이념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해석이 공존하고 있는 점에서 북한과 차이가 있다. 그리하여 남한에서는 남북한 문제를 “민족”이라는 보편적 개념의 차원에서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고찰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독재자의 민족이론과 민족정책만이 성역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즉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된 남과 북을 자기들만이 지배하겠다는 일관한 독점적 권력욕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민족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은 김일성에 의하여 책정되고 김정일에 의하여 계승되고 있는 혁명 전략과 전술 전체의 맥락에서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중-소분쟁(中-蘇紛爭)은 단일의 국제 공산주의 진영을 산산이 분열시켜, 현대사의 전환을 촉진하여 동(東)유럽의 소련으로부터의 이탈, 독립하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각국의 자주파(自主派) 공산주의자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나중에는 공개적으로 자주노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환경의 변화 속에서 김일성은 중-소의 공산당, 특히 소련공산당에 대해 당의 “주체” 확립을 내세웠고, 이것은 민족주의적 체취를 풍기는 용어로 분석되어 왔다. 이윽고 그의 입에서는 “민족적 자립경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대주의 배격”, “민족의 자주성”, “민족

허무주의 반대”, “민족적 자부심”, “자주적 통일” 등의 주장이 “주체사상”의 파생물로써 쏟아져 나왔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역사적 물라기에 들어서자 김일성이 살아남기 위한 전술(戰術)로 표명한 이런 주장들은 얼핏 들으면 북한이 마치 통례적인 민족주의로 전환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이상의 개념들을 중심으로 한 당의 계급교양사업은 “민족주의”, “민족 개량주의” 또는 “부르조아 민족주의”에 대한 치열한 공격 속에서 진행되었다. 동시에 김일성은 이미 소멸한 “국제주의”(국제 공산주의)에 충실할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다.

김일성이 내세워 온 일련의 “민족적” 주장들은 소박한 민족주의자의 애국적 심정에 호소할만했다. 형식은 민족적이지만 내용은 철두철미(徹頭徹尾) 당파적인 이러한 주장들을 연결 고리로 한 김일성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즉 “당의 유일 사상체계”는 온 북조선 인민들의 의식과 행동을 철저히 구속하는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로 도식화되어 갔다. 그리하여 그들의 주체사상은 자기들의 전지전능한 독재자를 우상화, 신비화(神祕化) 하려는 당 정책의 초점이 된 것이다.

원래 *맑스-레닌주의*의 민족이론은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종속국(從屬國)에서의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 혁명,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재정권 수립이라는 정치전략으로서 전개된 것이었다. 북한의 공산당정권은 그런 민족이론을 통째로 삼키면서 탄생했다. 김일성은 이것을 분단된 한반도에 적용하여 남북통일의 방침을 세우고 스탈린과 모택동(毛澤東)의 지원하에 동족상잔의 전쟁을 도발했던 것이다. 1985년 6월 이후 *헝가리*를 필두로 시작된 동(東)유럽제국에서의 민주주의 도미노에 의하여 공산당체제가 총 붕괴되고 이어 소련 자체가 와해되었다. 이에 따라 소련을 비롯하여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등의 연방들은 여러 민족국가로 해체되었다. 이와 함께 계급투쟁을 핵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민족 이론도 파산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린 이 낡은 이론에 여전히 매달려 공산주의 남-북 통일에 집착해왔다.

김일성의 민족통일정책의 핵심은, 앞서서도 인용한 바와 같이 “결국 남조선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우리가 도와주어 남조선 인민들이 정권을 쥐어야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²⁴⁷¹⁾ 그의 말에 잘 요약되어 있다. 이러한 “남조선 혁명”을 통해 남조

선을 해방하고 공산주의식 민족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이미 북조선은 해방되었으므로 남조선만 해방되면 전 민족의 해방이 완수된다는 주장이다.

다시 거론하거니와 김일성은 1964년경부터 이 민족해방 혁명의 완수를 위해서는 세 가지 혁명 역량, 즉 ① 북조선의 혁명 역량 ② 남조선의 혁명 역량 ③ 국제적 혁명 역량을 준비해야 한다는 조국통일 전략의 도식을 만들어왔다.²⁴⁷²⁾ 여기서 ③ “국제적 혁명 역량의 준비”는 국제 공산주의의 분열과 소련권의 해체로 한낱 환상으로 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그 밖의 ①, ② 두 전략에 대해서는 여전히 집착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1972년의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후에도, 그 후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북한은 “민족해방 혁명의 완수”를 일관하게 추구해 왔다. 바뀐 것이 있다면 그때그때의 전술뿐이다.

한마디로 남조선의 북조선화(化)가 김일성의 통일 전략의 목표였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주장하는 “자주”의 핵심은 반미(反美)요, 반미는 북한의 통일 정책의 기점이다. 그들이 “민족적 자주성”, “애국주의”, “민족 주체의식”, “반미 구국투쟁”, “자주적 통일” 등을 부단히 선전해왔다. 그것이 노리는 목표는 대한민국을 유사시에 미국의 지원으로부터 고립시킴으로써 공산주의화 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 보자는 데 있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김일성은 그 것을 공개적으로 무수히 공언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남조선에서의 민족해방 혁명은 공산당의 지도하에 노동계급, 농민, 극소수의 지식인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여기서 그들은 민족주의자, 사회 민주주의자, 종교인, 자본가, 자유 민주주의자, “부르조아” 인텔리 등 누구를 가리지 않고 포섭할 수 있는 한 모든 비(非)공산주의 세력을 포섭하여 민족 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 끈질긴 노력을 쏟아왔다. 통일전선을 조직하는데서 공산주의자들은 비(非)공산주의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들을 최대한으로 골라서 한다. 그렇지만 자기들의 독자적 조직, 당성(黨性) 및 *해계모니*의 견지라는 혁명원칙을 절대로 약화시키지 않는 것이 그들의 행동철칙이다.

김일성은 1991년 8월 1일에 진술한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는 담화에서, 자주적 민족 통일을 위해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 대 단결의 기치 아래 조국애와 민

2471) 『김일성저작선집』 6, 1985년, p. 523.

2472) 앞의 『김일성저작선집』 4, pp. 229~240.

족 자주정신에 기초하여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²⁴⁷³⁾고 상투적인 호소를 했다. 여태 까지 민족주의는 물론이요, 자주적인 사회주의 나라들을 “민족공산주의”라고 보는 견 해까지도 강경하게 비판해 왔던 그는 앞의 「담화」에서 뜻밖에도 초기 민족주의는 오히려 “진보적 사상”이라고 옹호했다. 이 말은 민족주의에 대하여 그가 긍정적 발언을 한 최초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초기 민족주의가 나온 후에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자본가 계급이 반동적 지배계급으로 되면서 “민족주의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옹호 하는 사상적 도구로 되었다”는 편이한 주석을 붙이면서 “부르쥬아 민족주의”를 규탄 했다.²⁴⁷⁴⁾

이 「담화」에서 김일성이 종래와는 판이하게도 우리의 “초기 민족주의”는 “부르쥬아 민족주의”와는 배치된다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참다운 민족주의”라고 주장한 것은 실로 큰 이변(異變)이었다. 여기서 그는 “참다운 민족주의”의 대표로 3·1운동을 전후하여 민족주의 운동에 가담한 일 이 있던 자기의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있었음은 틀림이 없다. 그에 의하면 “진정한 민족주의는 곧 애국주의”로 된다고까지 단언했다. 이어서 그는 “참다운 애국자만이 세계 혁명에 충실하고 국제주의자가 될 수 있다”고 *이데올로기*의 탈출구를 만들면서 “이런 의미에서 나는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이고 국제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다”²⁴⁷⁵⁾고 종래에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엉뚱한 말을 했다. 그가 소극적이거나 마 스스로를 민족주의자로 자처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러한 사상적 변용(變容)은 한편으로는 동(東)유럽과 소련에서 공산주의체제가 무너지면서 민족주의적 주권국가들이 속출하고 있던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이론적으로 적응하고자 하는데서 나왔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의 민족주의적 성향의 인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민족통일전선에 끌어들이기 위한 집요한 유인 전 술로써 던진 말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하여 그의 민족관도 계급 투쟁적 어조를 약화 시키면서 민족의 단결과 자주성을 부각시켰다. 즉, “온 민족이 단결하여 민족의 자주 성을 옹호하고 실천하여 민족 공동의 이익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체적

2473) 《근로자》, 1991년 제9호, p. 4.

2474) 같은 책, p. 5.

2475) 위와 같음.

민족관²⁴⁷⁶⁾이라고 했다. 이때에 “민족 공동의 이익”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신이며 민족주의자들을 위시하여 자기 외의 다른 공산주의자들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음은 물을 필요조차 없다.

김일성은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오늘의 남-북에 일시적으로 형성된 제도상의 차이나 사상과 이념의 차이보다는 “민족의 공통성이 더 크다”²⁴⁷⁷⁾고 했다. 그리고 “개별적 계급과 계층의 사상, 이념을 옹호하고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도 더 중요한 것은 민족 공동의 위업인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그럴싸하게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계급과 계층은 민족의 한 부분인 만큼, 이것들은 “민족 공동의 이익을 떠나서는 자기의 이익을 실현할 수 없다”²⁴⁷⁸⁾는 것이다. 더욱이 그는 협소한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계급의 이익을 민족적 이익 위에 두거나 계급투쟁을 통일을 위한 투쟁과 대치시켜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었다.²⁴⁷⁹⁾ 이런 주장은 그의 과거의 언행으로 보아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자기의 과거의 말들과는 정반대되는 이러한 주장은 초계급적, 초당파적 통일을 염원하는 소위 “부르조아 민족주의자”의 말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갈 정도로 책략적이다. 그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조선노동당 깃발 밑의 통일이라는 그의 정책이 절대로 바뀐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는 계속하여 이 담화에서 여전히 “남조선 해방” 전략의 일환인 1국가, 1민족,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를 기초로 한 남-북 연방에 의한 통일을 선전하고 주한미군(駐韓美軍) 철수,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철폐와 남조선 사회의 “민주화”, “자주화”를 요구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그런 투쟁에 껴들 것들을 남한의 정당, 사회단체, 종교인, 해외동포들에게 잇따라 호소하면서 자기의 통일전선(統一戰線) 조직의 확대에다 정력을 쏟고 있었다.

김일성은 자기의 노선에 따라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애국자”라고 칭찬하고 반면 민주주의 통일국가를 이룩하자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외세(미국)와 한 짝이 되어 통일을 반대하고 분열을 영구화하려 하는 매국노(賣國奴)”라고 단죄했다. 그에 있어서 애국과 매국의 기준은 자기의 통일노선을 추종하느냐 않느냐에 있는 것이다.

2476) 같은 책, p. 6.

2477) 같은 책, p. 10.

2478) 위와 같음.

2479) 위와 같음.

그리고 “민족 반역자를 빼놓고 모든 사람들을 대담하게 포섭하는 원칙에서 민족적 대단결을 이루고 해나가야 한다”고 통일 전선의 조직 원칙을 계속 선전했다. 여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문제를 그는 “반(反)통일 세력의 민족분열 영구화 책동과 새 전쟁 도발을 저지 파탄하는 것”²⁴⁸⁰⁾이라고 종래와 꼭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가 도달한 결론은 결국 “이들을 고립시키고 그들의 책동을 짓 부셔버리기 위하여 여러 형태의 공동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²⁴⁸¹⁾는 선동이였다. 이와 같이 그의 민족 통일 정책은 세계 역사의 대 전환기에 처해서도 하등 달라진 바가 없었다.

전체주의적 1인 독재의 *이태올로기*의 일환인 김일성의 이상 “주체적 민족관”에 현혹되어 그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전체주의 독재 권력에 대한 예속의 길을 향해 끌려가는 결과가 된다는 것은 물을 필요조차 없었다. 김일성-김정일과는 달리 모든 민족 성원들의 자유와 인권, 발달한 창조력의 발휘, 당략성(黨略性)을 떠난 이성적 사고, 비판 정신, 자유로운 생업 활동이 두루 보장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사상은 곧 “민주주의적 통일관”이라고 정의(定義)할 수 있다. 민족 통일을 논함에 있어서 먼저 민족 문제에 내재하고 있는 이러한 정치 사상적 입장의 차이를 명백히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이론도 공론(空論)이 되고 정책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될 것이다.

2480) 같은 책, p. 12.

2481) 위와 같음.

제3장

북한경제의 개혁과 개방

햇볕정책에 대한 북의 맹공격

들어가는 말 - 「남-북 공동선언」의 함정

1998년 2월에 출범한 김대중(金大中)정권(‘국민의 정부’)은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교착상태(膠着狀態)에 빠진 남-북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한다는 정책노선을 추진했다. 그가 「햇볕정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북에 호소한 것은 2000년 3월 9일 독일 방문 중에 발표한 「*썸머린* 선언」에서였다. 이 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정책의 기초를 논하고 있었으나 중요한 것은 정부차원의 대북(對北) 경제협력 사업이었다.²⁴⁸²⁾ 「*썸머린* 선언」을 계기로 4월 8일 남-북 특사들이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하자 사태는 빠르게 진전되었다.

2000년 6월 13~15일의 남-북 정상의 상봉을 전후하여 남한의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등은 잇따른 보도, 해설, 논평을 통하여 남북통일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듯이 흥분하였다. 해방 후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적으로 여겨오던 남-북의 지도자들이 처음으로 북한의 수도에서 만난다는 사실은 가히 역사적인 대사건이라고 할 수 있었다.

남-북의 동포는 물론이요 세계가 그 귀추를 주시했다. 북한은 평양 상봉의 광경을 최대의 정치적 효과를 노리면서 치밀하게 연출했다. 점퍼 차림의 김정일(金正日)이 순안비행장에서 김 대통령을 영접하는 광경, 그의 김 대통령과 차량 동승, 연도의 60만 환영 인파의 열광 등은 천지가 뒤집히는 듯한 이변이었다. 무엇보다도 놀란 것은 김정일의 ‘깜짝쇼’였다.

2482) 「宣言」은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① 북한의 도로, 항만, 철도, 전력,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②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을 체결하여 민간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③ 북한의 식량해결을 위한 비료지원, 농기구개량, 관개시설 개선 등 근본적인 농업개선 등을 도울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1 북한연감』, 연합뉴스社, p. 247

지금까지 북한 인민들조차 그의 목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는 ‘경애하는 지도자’, 수수께끼의 베일에 싸여 무한대의 권위를 발산하고 있던 그 인물이 드디어 처음으로 정체를 드러낸 것이었다. 활발한 성격과 거침없는 말투, 쾌활한 몸짓, 유머의 구사는 세계의 TV 시청자들에게 ‘김정일 쇼크’를 일으켜 그를 별안간 자유분방하고, 소탈하고 매력 있는 대중의 영도자로 만들었다. 목적은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이어온 북한의 어두운 *이미지*를 바꾸자는데 있었다.

중요한 것은 6월 15일에 발표된 「남-북 공동선언」²⁴⁸³⁾이다. 선언에서 가장 모호한 부분은 제2항, 즉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는 대목이다. 그러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란 정확하게 어느 수준의 연방제를 말하는 것일까. 남측의 ‘연합제’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아무런 의미 규정이 없다. 이 허점을 구실로 하여 북한은 자기들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과 남측의 ‘연합제’ 안의 공통성을 살려 “연방제 통일을 지향해 나갈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라고 선전한다. 그들에 의하면 「남북공동선언」은 결국 북한의 연방제 방안을 남이 받아들인 것이 된다. 이러한 북한의 왜곡된, 일방적인 선전에 대하여 김대중 정부는 아무런 이론(異論)도 제기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북한이 남북대화를 단절하지나 않을까 겁이 났던 것이다.

「남-북 공동선언」은 명기하기를 나라의 통일문제는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민족자주의 통일을 극구 강조했다. 그러나 통일 국가는 민주주의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는 남한에서는 언필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찬양하고 있었지만 「남-북 공동선언」에서는 그런 뜻은 그림자도 비추지 않았다. 또한 「공동선언」에는 2000년 8월 15일에 즈음하여 이산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한다고 했고,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했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국군포로, 피랍(被拉)어부들에 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다. ‘국민의 정부’는 회답이 무산될까봐 당연히 제기할 요구를 제대로 제기하지

2483) 「남북공동선언」 全文은 앞의 『2001 북한 연감』, p. 248에 수록.

못한 채 어물어물 넘어간 것이 아닐까. 그 후에도 정부는 정권의 운명이 마치 남-북 대화의 성사 여부에 달려있는 양, 초조, 불안, 졸속, 그리고 계속 양보로써 회담에 임한 것을 간취할 수 있다.

이렇게 허약한 우리 정부의 자세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회담에 뒤따라 정부 차원의 각급 회담, 민간 차원의 접촉과 회담, 대북 지원 사업, 인사와 물자 교류의 사태가 뒤따랐다. 정상회담 이후에 계속 열린 주요한 사례들을 보면 ① 남-북장관급회담, ② 국방장관급회담, ③ 남-북적십자회담 등이 열렸다. 이 밖에도 ④ 언론사 사장단 방북(2000. 8. 5~12), ⑤ 조총련 동포 고향방문(2000. 9. 22~28), ⑥ 백두산 관광단 방북(2000. 9. 22~28), ⑦ 민족통일 대토론회 개최(2001. 6. 14~16), ⑧ 8·15민족통일 대축제사(2001. 8. 15~21), ⑨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방북(2001. 11. 26~12. 4) 등에 많은 남한사람들이 참가했다. 심지어는 근로단체들의 남-북 노동절 공동행사(2001. 4. 30~5. 2, 금강산), 남-북 농민통일대회(2001. 7. 17~19, 금강산)까지 열렸다.

그 중에서 그런대로 보람 있는 일은 남-북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이 실시되었고, 이산가족들이 남-북에서 각각 300통에 한하여 서신 교환을 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그런데 북측은 여러가지 구실로 이산가족 방문단의 교환을 중단, 또는 연기하면서 남한에다 초조감을 안겨주었다. 숨어있는 참된 의도는 돈에 있었다는 것이 그 후에 실증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5년 동안에 김정일은 공짜로 많은 물자와 돈을 얻어내어 상당한 틱을 보았다. 경제지원은 교역, 정부의 원조, 적십자의 원조, 민간단체의 원조, UN을 통한 원조, 금강산 관광 사업을 통한 지원 등으로 분류된다. 금융위기를 겪었던 ‘국민의 정부’는 처음부터 다액의 돈을 지불할 수가 없었다. 1998년의 정부차원의 지원은 겨우 1천 1백만 달러(옥수수 3만t, 밀가루 1만t), 1999년은 3천 875만 달러(비료 15만t)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1년에는 7천 45만 달러, 2002년에는 8천 375만 달러로 계속 증가했다.

한편 민간 구호단체들도 속속 출현하여 2003년 2월까지에는 지원 규모가 2억4백 17만 달러(2천5백65억원)에 이르렀다.²⁴⁸⁴⁾ 1998년 이후 5년 동안 정부-민간 차원에서의 대북 지원은 총 2억7천208만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지

2484) 통일부 조사자료에 의거.

원 총액의 약 17%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남북교역은 1998년에는 총 2억2천1백94만원(반출 1억2천9백68만원, 반입 9천2백24만원)에 이르렀고 1999년에는 그 액수가 총 3억3천3백43만원(반출 2억1천1백83만원), 2002년에는 반출 반입을 합치면 20여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당시 동안에 남북을 오고간 양측 방문객은 1998년에서 2002년까지 4년 동안에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하고 3천135명인데 그중 북에서 남을 찾아온 사람은 1천164명에 불과했다.²⁴⁸⁵⁾

제1절 “개혁 - 개방” 정책에 대한 사상적 - 군사적 도전

북한의 핵(核)무기 개발의 의혹으로 인하여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한창 고조되고 있던 1998년 2월 출범한 김대중정권은 ‘국민의 정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하였고 대북정책의 기초를 발표했다. 이것은 처음에는 「햇볕정책」으로 불리오다가 뒤에 와서는 「포용정책」으로 이름을 바꿨다.

김대중 대통령은 2월 25일의 취임사에서 대북정책의 원칙으로서 (1) 어떠한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 (2) 북한을 흡수하거나 해칠 생각이 없다는 것, (3)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3개의 정책을 내세웠다.²⁴⁸⁶⁾ 그리고 연노(年老)하여 계속 세상을 떠나고 있는 이산가족(離散家族)들의 상봉 문제 해결을 북한 당국에 호소하고, 이와 함께 남-북간의 문화와 학술 교류, 그리고 정경 분리의 원칙에 입각한 경제교류의 확대를 제의했다.

1주일 뒤인 3·1절 제79주년 기념사에서 김대통령은 이산가족의 상봉 내지는 생사 확인만이라도 서둘러야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① 남-북한은 상호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떤 불이익을 주는 일도 삼가야 한다, ② 평화공존, 평화교류와 장차의 평화통일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③ 이를 위해서는 어떤 수준의 대화에도 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언명했다.²⁴⁸⁷⁾

2485) 통일부 조사자료에 의거.

2486) 「국난 극복과 재도약의 새 시대를 열시다」(1998.2.25. 대통령 취임사). 『98통일백서』, 통일부, 1999년, pp. 276~277.

2487) 「3·1 정신으로 국난을 극복하고 재도약을 이룩합시다」(1998.3.9) 위의 『98통일백서』, pp. 281~282.

1998년 8월 15일 김대통령은 광복절 제53주년을 맞이하여 '제2의 건국'을 천명하는 자리에서도 남-북간의 대결주의 청산, 교류와 협력, 불신 해소를 세삼 강조했다.²⁴⁸⁸⁾ 이상은 전두환(金斗煥)-노태우(盧泰愚)-김영삼(金泳三)정권 시대에 빈번히 내세워 온 당위적(當爲的)인 주장들이었으며 그 자체만으로는 하등 나무랄 바가 아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햇볕정책」이란 옛날 그리스의 우화(寓話)에서 따다 붙인 이름이다. 여기에는 냉전(冷戰)의 차가운 강풍으로서는 북한의 두터운 외투를 벗길 수 없고, 그 외투를 벗길 수 있는 것은 따스한 햇볕뿐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었다.

그렇다고 김정일정권이 이런 말에 감동하여 호응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북한의 당(黨) 선전요원들은 처음 한동안은 김대중이란 이름은 직접 들지 않고 '남조선 집권 상층'이니 '남조선 통치자배'니 하는 집단명사(集團名詞)의 표현으로 김대통령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이미 반국가 단체로 규정되었던 '한총련(韓總聯)'이 주도하는 반정부대회의 계획을 1998년 4월 당국이 원천 봉쇄한 사건을 구실로 하여 김대중정권을 호되게 비방하기 시작했다. 가로되 "남조선에서는 꺾썩적인 김영삼의 '문민 정부'를 연상케 하는 폭압의 칼바람이 일고 있다"느니, "한총련에 대한 태도는 애국과 매국, 민주와 꺾썩, 통일과 분열, 정의와 불의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²⁴⁸⁹⁾이라느니 등등...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계속되는 폭력시위를 공권력으로 단속하자 평양의 선전기관은 "현 통치배들이야말로 선행(先行) '문민' 꺾썩 도당을 쫓 쫓 먹는 폭압분자들"²⁴⁹⁰⁾이라고 맹비난하는가 하면 "남조선 인민들은 반(反)인민적 식민지 꺾썩정권을 청산하고 민주주의 정권을 일으켜 세우는 투쟁에 과감히 펼쳐나서야 할 것"²⁴⁹¹⁾이라고 정권 타도 선동의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 김정일정권은 김대중 정부의 포용정책을 과연 어떻게 인식하였으며, 평가하고 있었을까. 일례로 1998년 6월 4일자 「남조선 당국의 포용정책을 해부(解部)한다」²⁴⁹²⁾는 《로동신문》의 논평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신랄하게 공격했다. 이 「논평」은

2488) 「제2건국에 동참합시다」(1998.8.15) 같은 책 pp. 290~291.

2489) 《로동신문》, 1998년 4월 10일자.

2490) 《조선중앙방송》, 1998년 5월 5일자.

2491) 《평양방송》, 1998년 5월 3일자.

2492) 《로동신문》, 1998년 6월 4일자에 논평의 전문 게재.

김대중의 경력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그는 상업학교에서 배운 것은 주산(珠算)이며 정계에 들어서서는 서방식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가 되고, 오늘은 오래 전에 남이 제창하던 ‘시장 경제’의 간판을 자기 자신의 정치철학이라고 내걸고 있다”고 야유했다. 이어 「포용정책」의 의도가 북한을 변화으로 유도하려는데 있다고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포용정책의 실상은 한마디로 남조선의 썩어빠진 반(反)인민적 식민지제도를 공화국 북반부에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매도했다. 나아가서 이 「논평」은 “우리에게서 남조선 통치배들이 바라는 그 따위 변화란 언제까지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김대중정권은) “포용정책의 성과니, 변화의 조짐이니 하면서 잊지도 않는 허황한 실적(實績) 조작 노름”을 하고 있다고 비웃었다.²⁴⁹³⁾

‘국민의 정부’가 한결 같이 중요시하고 주장해온 경제협력의 성격에 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격렬한 어조로 비난했다.

남조선당국은 이른바 ‘협력 교류’로 우리 내부를 흔들어보려 하지만 돈과 정치를 맞바꾸어 보려는 것은 얼빠진 짓이다. 정치에도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용해 보려는 것은 황금만능의 사회에서는 통할지 모르나 우리에게서는 절대로 통할 수 없다.…… 오늘 또 《한강의 기적》으로 오만을 부리던 남조선 경제가 거품경제로 주저앉는 꼴(IMF의 위기상황)도 보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국민의 정부》에 와서 남조선의 정치도 거품정치로 꺼질 날을 보게 될 것이다.²⁴⁹⁴⁾

북한 당국이 남한의 햇볕정책에 대한 비방은 날이 갈수록 더욱 난폭해갔다. 그들이 햇볕정책을 얼마나 불신하고, 위협시하고, 배격했는가는 이례적으로 「외무성 대변인 성명」²⁴⁹⁵⁾까지를 통하여 공박하고 나선 데서도 간취(看取)할 수 있다. 이 「성명」은 남조선의 「햇볕정책은… ‘화해와 협력’의 미명하에 우리를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여 저들의 ‘자유민주주의’체제 속에 흡수 통일하려는 모략 책동」이라고 규탄했다. 이 「성명」이후에도 “「햇볕정책」타령은 과대망상이다”, “「햇볕정책」은 대결과 전쟁의 온상”이라느니 하는 등 ‘조선중앙통신’의 선전 기사들을 통해 비난은 계속되었다.

2493) 《로동신문》, 1988년 6월 4일자에 「논평」全文이 게재.

2494) 위와 같음.

2495) 《조선중앙통신》, 1998년 8월 17일자.

1998년 10월 23일에도 《로동신문》의 「논평」은 바로 그 몇 일전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맹렬히 반박하는 가운데서 「포용정책」을 거둬 공격했다. 이 「논평」은 김대중의 “「포용정책」이란 뒤집어 놓은 반(反)공화국 반(反)통일 대결정책”이라느니 그가 ‘공존공영이요’, ‘화해 협력’이요 하고 떠든다고 하여 “미제의 전쟁에 머슴꾼이 되어 북침 핵전쟁 마차를 끄는 자들의 범죄가 가리어질 수는 없다”²⁴⁹⁶⁾고 상투적인 악담을 퍼부었다. 북한의 입장이 도전적인데 김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어떻게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었을까.

전두환(金斗煥)정권 이래로 노태우(盧泰愚)정권, ‘문민(文民)정부’ 등 남한의 역대 정권이 그러했듯이 그 후의 ‘국민의 정부’도 극한적 곤경에 몰린 북한 경제가 활로를 찾기 위하여 자유시장경제로 전환할 것을 은근히 고대해 왔고, 그곳의 영세한 장마당 등에서 시장경제의 싹을 엿보려고 지나치게 기대했다. 그런데 얼마 후 북한을 방문한 한 일본인은 북한의 자유시장이 없어지고 몇 개 상점에 폐쇄된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은 펄쩍 뛰면서 북에는 ‘자유시장’이란 본래부터 없었다고 반박하고, 그런 보도는 북의 주민들이 자유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을 바라거나 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난했다.²⁴⁹⁷⁾

이것은 북한이 여전히 자유시장 경제를 반동시(反動視)하고 공포증을 지니고 있었으며, 따라서 김정일의 시장경제에로의 노선(路線) 변경에 대한 희망이 하나의 허상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북한에서는 등소평(鄧小平)의 중국이 내세워 온 ‘사회주의 시장경제’란 말을 지금까지 발설조차 하지 않았다. 1998년 9월 18일자 《로동신문》과 《근로자》의 극히 중요한 공동 논설,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로선을 끝까지 견지하자」에서는 김정일정권의 경제노선이 가장 극명하게 표명되어 있다.

이 논설은 IMF의 금융위기로 곤경을 겪고 있던 한국 경제의 사례를 그들은 자기들의 “우리식 사회주의 우월성”을 정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그들은 한국 경제를 “대외 의존경제” 또는 “현지의 경제 총독이 조성하는 경제”라고 호되게 비난하고 그 파국의 원인을 제국주의에 대한 예측에 다 돌리면서, 이것과 비교하여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우월성을 열렬히 찬양했던 것이다.

2496) 《로동신문》, 1999년 10월 23일자, 「통할 수 없는 허튼 나발」.

2497) 《연합뉴스》, 1999년 9월 16일, p. 18.

이 논설의 목적은, 자본주의 제도와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에 관한 북한의 경제적 관점들을 집대성하여 요약하면서 김대중정권에 대하여 *이데올로기*상의 선제공격을 가하는데 있었던 것이다.

… 민족의 생명은 자주성에 있다. 남조선에서는 자주정치 그림자마저 찾아볼 수 없다. 정권은 있어도 국권이 없는 것이 오늘의 남조선이다. 매국이 다른 것이 아니다. 남에게 구걸질하면서 사회를 이런 자주권의 불모지로 변전시킨 것이야말로 최대의 매국이며 그 배족이다. 그 죄상은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다…²⁴⁹⁸⁾

이 논설에서 주장의 초점은, 각국의 경제를 세계화(북한에서는 ‘일체화’로 표현)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음모의 폭로와 북한의 개혁 개방의 반대이다 맞추어져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개혁 타령은 ‘사탕발린 독약과 같은 것’이라고 결론지은 이 논설의 중요한 일절을 인용키로 한다.

현대 제국주의의 악랄성은 그 양면주의적인 책동에 있다. 한편으로는 제제의 몽둥이로 다른 나라를 굴복시키고 다른 편으로는 달콤한 말로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는 것, 이것이 미제가 경제의 세계화책동에서 쓰는 상투적인 수법이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일체화된 세계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법》, 《자유개방시장》에 기초하여 하나로 통합된 세계라고 하면서 이 세계에 들어서자면 모든 나라의 문호를 활짝 개방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서방식 가치관과 경제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모든 나라들을 제국주의자들에게 순종하게 하자는 책동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염불처럼 외우는 《개혁》 타령은 사탕 발린 독약과 같은 것이다.²⁴⁹⁹⁾

제2절 군사 절대 우선주의의 천명(闡明)

대남공세(對南攻勢)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정주영(鄭周永) 명예회장이 현지에 아직 체류하고 있던 1998년 6월 22일 한국 영해에 북한 잠수함이 침입했다가

2498) 1998년 9월 18일자 《로동신문》과 《근로자》의 공동 논설,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끝까지 관철하자」.

2499) 위와 같음.

어망에 걸려 포획되었고 함정 내에서는 9구의 시체가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7월 12일에는 동해안에서 북한 공작원의 시체와 공작선이 나포되었다. 김 대통령은 이것을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비난하고 북한의 사죄와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욕설뿐이었다. 8월 31일에는 북한이 발사한 탄두 미사일의 탄도 부분이 일본 동북지방을 넘어 태평양에 착탄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한-일의 안전을 위협했다. 다시 우리 경비정은 12월 3일과 17일에는 다대포(多大浦)와 남해의 돌산도(突山島) 남쪽에서 북한의 반(半)잠수정들의 침입을 포착하고 총격 끝에 격침시켰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11월 18일부터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이미 망각되어가는 사건들을 새삼 다시 들추어내는 것은 햇볕정책에 대한 북한의 대응책의 본질을 상기시키자는데 있다. 북한은 이 시각까지 한국의 햇볕정책을 진정한 화해협력정책으로 인정한 일이 없을뿐더러, 이것을 오히려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비방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햇볕정책을 역이용하여 남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원조를 얻어낸다는 전략을 세워왔다.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주요한 수단은 *이태올로기*에 의한 정치 공세요, 전쟁 위협이요, 욕설이요, 통일전선의 화유 전술이다. 이러한 방법은 김대중 정부 이후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북한 당국의 엄중한 통제와 감시 하에서 시작되었으나 반세기 이상이나 고향을 그리던 실향민과 통일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로 크게 붐볐다. 1998년 11월의 첫 출항으로부터 1999년 6월까지 반년 남짓한 기간에 관광객의 수는 8만 6,140명에 이르렀고²⁵⁰⁰⁾ 그 후 2000년 3월말까지는 무려 20만 7천5백여명을 헤아리게 되었으며²⁵⁰¹⁾ 2001년 12월 말까지 3년 반 동안에는 총 49만 7천여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사업은 시작 후 약 2년 동안 지출은 총 3억 5백 84만여 달러(시설 투자 포함)나 되었지만 수입은 겨우 6천 2백 28만4천 달러에 그쳤다. 이것은 대북사업의 위기를 알리는 첫 신호였다.

한편 김정일정권은 다시 중공업 우선주의를 강조했다. 이것은 1993년 12월에 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책정했던 농업-경공업-무역 제1

2500) 『2000 북한연감』, 연합뉴스社 발행, p. 223.

2501) 『2001 북한연감』, 연합뉴스社 발행, p. 338.

주의 정책²⁵⁰²⁾을 이렇다 할 설명이 없이 슬쩍 포기해 버린 처사였다. 김일성 사망 후 2년에 걸친(1995~1996) 대홍수, 그 뒤의 가뭄(1997)에 더하여 낙후한 기술, 생산 수단의 전면적 국유화의 폐단 때문에 북한은 엄청난 재난을 겪어야 했다. 인재와 천재가 겹친 것이다. 그들은 소위 유훈통치(遺訓統治)시대에는 김일성이 항일무장 투쟁 때 발휘했다고 하는 ‘고난의 행군’²⁵⁰³⁾ 정신으로 이 난국을 돌파하자고 했다가 1998년 1월부터는 슬로건을 ‘사회주의의 강행군’으로 바꾸어 *이데올로기*의 색깔을 선명하게 했다. 그러면 북한이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이었던가.

이 무렵 김정일이 목표로 확정한 것은 북한을 ‘강성대국’(強盛大國), 정확하게는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건설하는 일이었다. ‘강성대국’이란 말을 처음 제창한 것은 1998년 8월 22일이었는데, 이것은 군사력 중시정책을 김정일 시대에 이르러 ‘강성대국’이란 개념으로 논리화하여 세계에 선전하기 시작했다. 그 신호는 곧 바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을 과시한 ‘광명성(光明星) 1호’의 발사(1998. 8. 31)였다. ‘강성대국’이란 보통의 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주의적(全體主義的) ‘사상 강국’, ‘군사 강국’, ‘경제 강국’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강대한 군대를 보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것을 반미투쟁(反美鬭爭)의 관점에서 아래와 같이 강조하였다.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은 《힘》의 전략을 휘두르는 제국주의자들과의 격렬한 계급 투쟁에서 진행된다. 총대가 튼튼치 못하면 나라의 강성을 떨칠 수 없고 민족적 자주권과 나라 자체를 지킬 수가 없다. 오래 전부터《달러와 폭탄, 이것은 세계 제패의 2대 무

2502) 金日成은 사망 바로 5개월 전인 1993년 12월 8일 黨中央 제21차 전원회의에서 내린 결론에서 제3차 7개년 계획이 끝나면 3년 동안은 완충기로 하고 이 기간에 ‘농업 제1주의’, ‘경공업 제1주의’, ‘무역 제1주의’ 방침을 관철하여야겠다고 선언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경공업 제1주의’ 방침을 관철하여 ‘인민 소비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려야하겠다’는 것, 농업 제1주의 방침을 관철하여 “농업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겠다”는 것, 그리고 무역 제1주의 방침을 관철하여 “대외무역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다”는 전략 방침을 내세웠다. 그의 말은 요컨대 그래야만 “인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를 더욱 원만히 풀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면한 사회주의 경제건설 방향에 대하여』와 『신년사』(1994. 1. 1), 『김일성저작집』 44, pp. 280~282 및 p. 294.

2503) 北韓의 선전 일꾼들은 金日成이 1938년 말부터 1939년 봄까지 약 100일 동안 抗日戰에서 萬難을 이겨내면서 日本軍의 공격을 격파했으며 드디어는 滿洲의 江(동강)에서 韓滿-北部 국경일대로 進出했다는 감동적인 무용담을 만들어냈다. 이때에 그가 발휘했다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北韓민국은 金日成 사후 ‘고난의 행군정신’이라고 찬양하면서 1996년 초부터 선전하기 시작했다. 그 목적은 1990년대에도 계속되어 온 경제적 고난을 人民들이 희생정신과 金正日에 대한 충성심에서 극복하도록 독려하는데 있었다.

기다»라는 침략적이고 지배적인 국가전략을 내세우고 오늘도 정의와 진리를 총칼의 《힘》으로 암살하려는 제국주의 초대국과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하는 힘은 강대한 군대를 가지는데 있다.²⁵⁰⁴⁾

이런 논법에서 나온 것이 바로 ‘총대 중시(重視) 사상’이다. 그들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공산주의자들은 총대를 틀어쥐어야만 정권을 쟁취할 수 있고 사회주의의 제도도 수호할 수 있다.… 총대만 강하면 천하대적이 덤벼들고 그 어떤 평지풍파가 닥쳐와도 두려울 것이 없으며 강대한 군력(軍力)의 비호 밑에 우리 공화국은 영원히 승승하고 강성해질 것이다.²⁵⁰⁵⁾

그러한 군사력 만능의 ‘강성대국’을 건설할 수 있는 정신력과 혁명 열의의 원천은 첫째는 영원한 수령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다. 둘째로는 그의 불멸의 권위를 후광으로 하는 ‘광폭정치(廣幅政治)’, ‘인덕정치(人德政治)’, ‘김정일 조선’, ‘충효일심(忠孝一心)’, 심지어는 ‘인류의 태양’ 등의 광란적 선전을 통하여 펼쳐지는 김정일 우상숭배다. 그러나 김정일정권을 물리적으로 떠받들고 있는 힘은 곧 군대며, 이런 현실을 논리화한 것이 선군정치(先軍政治), 선군혁명사상, 선군후로사상(先軍後勞思想)이라는 군사 최우선 사상이다. 김정일정권이 군(軍)을 얼마나 중시하는가는 ‘군대는 곧 당(黨)이고 국가이며 인민’²⁵⁰⁶⁾이라는 구호에 의하여 가장 잘 표현되어 있다.

이런 주장은 이미 북한이 들어 내놓고 군국주의(軍國主義) 국가로 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말이다. ‘강성대국’의 건설을 향하여 김정일정권은 1999년을 ‘강성대국 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라고 규정했고²⁵⁰⁷⁾ 1년 후에는 ‘제2의 천리마대진군’의 구호를 소리높이 내세웠다.²⁵⁰⁸⁾

2504) 「강성대국」, 《로동신문》 정론, 1999년 8월 22일자.

2505) 「총대로 수호되는 우리 공화국」, 1999년 7월 25일, 《조선중앙방송》

2506) 軍隊=黨=國家=人民이라는 이 4位一體의 구호는 빈번히 들려오고 있다. 다시 이런 구호를 뛰어넘어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곧 우리黨이고 우리 국가, 우리 軍隊이며 人民이다’(즉 金正日=國家=黨=軍隊=人民)라는 5位一體의 찬사로 상승하고 있다.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의 1999년 1월 1일자 「공동사설」.

2507) 위와 같음.

2508)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처음 내세운 것은 1999년 1월 1일자 《黨報》, 《軍報》, 《青年報》의 공동사

‘천리마운동’이란 1957년부터 김일성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기초로 하여 강행한 혹독한 전국적 노력동원(勞力動員) 체제의 정책을 가리킨다. 늪 속에 빠져 들어가는 북한의 침체한 경제를 소생시키고자 김정일은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내세웠지만 그 구체적 방법은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마도 1970~80년대에 기세를 떨쳤다가 수그러진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증산 경쟁운동의 한 형식)의 형태를 다시 강행하면서²⁵⁰⁹⁾ 혁명열의에 들끓는 전(全) 인민적 애국적 증산 투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었다.²⁵¹⁰⁾

김정일정권은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처음에는 표면상 ‘남조선 괴뢰정권’과의 대화를 가급적 꺾어차는 듯이 행동하고 있었지만 통일 지향적인 남-북 대화는 환영한다고도 선전해왔다. 그러나 여기에는 선행조건이 붙어 있다. 즉 ‘외세와의 공조와 합동 군사훈련 중지’, ‘국가보안법의 철폐’, 남조선에서의 ‘통일애국단체들과 인사들의 통일 운동과 활동의 자유 보장’ 등이 그것이었다.²⁵¹¹⁾

그들이 남한에 대하여 그런 조건들을 요구했다면 북한에서도 응당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럴 각오가 되어있었을까. 그들에게는 체제 보존상 그런 일이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북한의 요구는 결국, 김정일정권과 타협하려면 한국정부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단절하고(자주), 대한민국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북한의 앞잡이들의 활동을 합법화(민주화)해야 한다는 논법으로 귀결된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마후에서 한국과 은밀히 접촉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있었다. 김정일정권은 대남정책에서 원칙의 일관성을 견지하는 동시에, 전술에 있어서는 고도의 *마키야벨리적*(的) 신축성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 방식으로 한국정부와 사회를 정치적으로 농락하고, 밖으로부터는 가능한 한 최대한의 원조를 끌어내고자 해왔다.

설에서 더욱 강렬하게 호소했다.

2509) 《로동신문》1999년 8월 5일자 社說 「3대 붉은기 쟁취운동을 심화시켜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치자」 참조.

2510) 이것을 우렁차게 예고한 행사가 1999년 11월 3~4일, 6천명이나 동원되어 개막 진행된 ‘제2의 천리마대진군 선구자대회’였다.(이 대회의 ‘혁명적’ 본성과 建設의 ‘애국적’ 사명에 관해서는 黨中央이 ‘제2 천리마대진군 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 보낸 「祝賀文」(1999년 11월 3일자 참조.) 그리고 「呼訴文」은 《조선중앙방송》, 1999년. 11월 3일자. 그러나 그 후 “제2의 천리마대진군”은 구호일 뿐, 하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2511) 1999년 2월 3일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전문. 같은 날짜의 《로동신문》.

그들은 핵개발(核開發)의 위협으로 김영삼 정부로부터 1995년 10월 15만t의 쌀을 얻어내는가 하면 김대중 정부로부터는 이산가족문제를 협의하는 교환조건으로 처음부터 20만t의 비료지원을 요구했던 것이다. 북경(北京)에서 열린 차관급 회담(1999. 6. 22~7. 1)을 통하여 그중 10만t(360억원 상당)을 받아냈다. 한편 김대중 정부의 정경 분리 정책에 편승하여 한국의 기업체와 경제단체들이 북한특수를 크게 기대하고 한때 북으로의 진출을 시도해 보았다. 그러나 투자의 수익성 때문에 그 액수는 아주 미미한 상태에 머물렀다.

이밖에도 비(非)정부기구(NGO)의 인사들, 경제인, 예술인, 체육인들의 입북(入北)도 허용되어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남-북 교류와 화해의 대로를 여는 선구자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김정일정권은 남한 내의 이런 화해분위기를 이용하여 더 많은 교류, 더 빠른 경제협력을 바라는 김대중 정부에 대하여 생색을 내듯이 고자세로 호응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한국정부나 민간인들로부터 더 비싼 대가를 얻어내려 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대하던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서 세계가 칭찬하는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대북 교섭에 관여하고 있었다.

한편 북한은 남한의 일반 대중들에게 자기들이야말로 남-북 교류를 열망하는 듯한 선전을 퍼뜨림으로써 호의를 사고자 했다. 그렇게 하여 남한에서 하층통일전선 형성의 기운을 조성한다는 1석 2조의 계책을 꾸미고 있었다. 김대중정권 출범 후 북한의 대남 경제협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현대그룹과의 금강산 관광사업이었다. 이 사업에서 현대그룹은 관광 대가로 약 3억 달러를 지불했으며 금강산을 독점 사용하는 값으로 그 후 6년 3개월 동안에 총 9억 4천 200만 달러(약 1조 2,240억원)를 평양에다 지불했으며 초기 6개월 동안은 매달 2,500만 달러씩 송금했다.

북한은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전쟁불사 위협과 미사일 발사 시위, 벼랑 끝 외교의 극대화 전술로 상당 양의 경제 원조를 얻어내고, 이에 재미를 붙이고 있었다. 이것은 적(敵)들의 대북 회유정책을 역이용(逆利用)하여 쟁취한 성과였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핵무기 개발의혹 대상에 대하여 사찰을 해야 한다든가, 해상 또는 육로를 통한 대남 도발행위에 대하여 한-미 양군이 항의를 하던가 하면, 그것은 “우리를 고립 압

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라고 뒤집어 씌웠다. 그동안 북한은 휴전선상에서 무수히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해외 도처에서 한국 측 인사들에게 테러를 자행하였다. 그렇지만 한국 측은 이에 대하여 북한의 사실 인정이나 사과를 받은 일이란 단 한 번도 없이 돈, 식량, 그 밖의 물자를 제공했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²⁵¹²⁾

끝으로 이산가족 찾기는 북한 측이 가장 염증을 내고 기피해온 부문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북한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약점의 내막을 너무나 뚜렷이 밖으로 노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한 내의 이산가족은 거의 전부가 북한의 폭정을 피하고자 그곳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다. 따라서 중대한 인도주의적이며, 민족적인 문제가 북한으로서는 그 자체가 결코 심각한 인도적 문제가 아니라 귀찮은 말썽거리일 뿐이었다.

1971년 8월의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린 후 오늘날까지 북한이 취해온 완강한 거부 내지 소극적 태도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남한 거주 이산가족 2~3세대는 약 7백 67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1990년 이후 1999년 8월까지 생사가 확인된 건수는 겨우 1만 4천 7백 21건이며 제3국에서의 상봉은 368건에 불과했다.²⁵¹³⁾

2512) 예를 들면 ① 寧邊의 核發電所 사찰을 둘러싼 韓美-IAEA-UN과의 운명을 건 협상에서 北韓은 KEDO를 통하여 1천 메가와트 급 경수로 2기의 건설 약속을 공짜로 얻어냈고, ② 그중 제1호기의 설치가 완성될 때까지 代替 에너지로써 美國으로부터 매년 중유 50만t(6천 4~5백만 달러)을 무상으로 획득했다. 그리고 ③ 金倉里 지하 핵시설의 사찰 문제를 놓고 1999년 3월 10일까지 무려 4차의 끈질긴 對美 협상을 벌인 끝에 사찰의 대가로써 1999년 내로 '世界食糧機構(WFP)'를 통하여 50만t의 식량(2억 달러)을 제공한다는 약속 받았으며, 국제 NGO를 통하여서는 씨감자 1천과 감자 증산에 투입될 노동력 지원용으로 10만t의 식량을 추가로 획득한 것이다. 이러한 식량 지원에서 韓國측이 줄곧 떠들어 왔던 '透明性' 주장은 어느새 사라져 버리고 韓-美-日 등이 지원해온 식량의 용도는 오늘날까지 불분명한 채로 남게 되었다.

2513) 北韓 밖에 있는 이산가족들이 北韓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이때까지 지원한 금액은 총 77만 7천 200 달러로 우리 統一部는 집계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알려진 사례만이며 실제로는 그 몇 배가 될 것이다. 그간의 막후 交渉에서 北韓 측은 이산가족 찾기 1건당 5만 달러를 요구했다가 2만 달러까지로 할인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大韓民國 국민이 해외여행 시에 지참할 수 있는 외화의 한도는 1만 달러였기 때문에 금액문제의 교섭은 미결상태로 끝어왔다. 金正日정권은 離散家族들이 모두 하루 빨리 사망하여 '이산가족 찾기'라는 말이 아예 사라질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제3절 김대중정권에 대한 “혁명적 사상공세”

「햇볕정책」, 「포용정책」에 대한 관점은 격렬한 전투적 *이데올로기*로 일관해왔다. 김대중정권 발족 반년 후인 1998년 8월부터 북한은 그런 공격을 “혁명적 사상 공세”라고 자부했다. 그들이 해석하는 햇볕정책이란 “미제(美帝)의 식민지 통치를 공화국에까지 연장하겠다는 반(反)공화국 반(反)통일 대결선언”²⁵¹⁴⁾이며, “협력 교류를 통하여 상대방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으로서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의 존재를 부정하는 새로운 대결론”²⁵¹⁵⁾에 지나지 않는다고 공격했다. 다음해에 들어서자 평양의 비방은 더욱 비난의 강도를 높여갔다.

1999년 2월 20일자 《로동신문》에 의하면 김대중정권의 통일정책은 “「햇볕정책」이든 「포용정책」이든… 사이비 통일정책으로서 언제가도 실현될 수 없는 망상중의 망상”이라고 했다. 이러한 비난으로 김정일은 김대중정권의 통일정책을 아예 거세(去勢)해 버리자는 것이었다. 일례로 1999년 7월 9일의 《평양방송》대담 프로에서 남한의 대북 “포용정책은… 한마디로 남조선의 썩어빠진 반인민적 식민지제도를 우리 공화국 북반부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비방하면서, 「햇볕정책」이란 북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라고 단죄(斷罪)했다. 그리고 “남조선 괴뢰들이 이른바 협력 교류로… 우리에게 시장원리를 적용해 보려하지만 그것은 하늘의 무지개를 손으로 잡으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웃었다.

다시 8월 17일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8·15정축사를 공박한 외무성 대변인의 「성명」을 통하여 “남조선 당국자들이 들고 나온 햇볕정책은 한마디로 말하여 미국의 평화이행전략(平和移行戰略)(평화적 방법으로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는 것)의 변종(變種)”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그것은 “화해와 협력의 미명하에 우리를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여 저들의 자유민주주의체제에 흡수 통일하려는 모략 책동”²⁵¹⁶⁾이라고 종전의 비방을 반복하면서 다음과 같이 극한적 매도를 서슴치 않았다.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리와 화해 협력하러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있어서는 그를 가로

2514) 《로동신문》, 1998년 8월 8일자 「논평」

2515) 「조평통서기국」이 김대통령의 대북제안에 보낸 「공개질문장」, 《조선중앙방송》, 1998. 8. 20.

2516) 「조선 외무성 대변인 성명」(1999. 8. 17). 동일자 《조선중앙통신》.

막는 제도적 물리적 장벽들을 더 높이 쌓아올리고 있다. 남조선 당국의 햇볕정책이야말로 가장 악랄한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이며 반북대결적인 모략 책동이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여 주고 있다.²⁵¹⁷⁾

같은 8월 17일자 *《로동신문》* 논평은, 김 대통령이 자기의 「포용정책」은 국가 안보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테 대하여 그것은 ‘북침 통일을 꾀하는 반북(反北) 대결정책’이라고 다시 뒤집어씌우면서 아래와 같이 얼토당토않은 비방을 늘어놓았다.

…더욱 간파할 수 없는 것은 남조선 집권자가 휴지통에 구겨박힌 포용정책을 또 다시 꺼내 흔든 것이다. 그는 *《포용정책》*은 안보를 경시하는 유화정책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것은 *《포용정책》*이 북과의 대결정책, 북침정책이라는 것을 스스로 들어 내놓은 것이다. *《포용정책》*은 본질에 있어서 이른바 *《화해, 협력》*을 통해 그 누구를 포용하겠다는 것으로 북침통일을 꾀하는 반북(反北) 대결 정책이다.…… 남조선 집권자는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에게 실망을 주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포용정책》*을 내둘러 민심을 어지럽히고 반북대결을 고취한테 대해 민중 앞에 사죄하여야 한다.²⁵¹⁸⁾

「포용정책」에 대한 북한의 비난은 끝이 없이 이어졌다. 한국의 안보에 대해서는 ‘남조선 괴뢰들이 떠드는 안보’는 “동족을 반대하는 창(槍)이며 집권유지를 위한 방패”라느니 하는 비방과 중상 그 밖의 야유, 조소, 욕설로써 포용정책의 ‘말장난’, ‘광대놀음’, ‘검은 속셈’, ‘반동적 본질’, ‘기만성’ 등을 폭로하는 맹렬한 정치 공세를 폈다.

왜 그랬을까. 결론을 앞세운다면 북한은 김정일 세대에 와서도 대남 기본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 즉 그동안 국제정세는 급석(今昔)의 감(感)이 있을 정도로 크게 바뀌고, 세계사는 일대 전환기에 들어선지 오래다. 그런데 지난 50년 동안 정권을 휘둘러온 독재자 김일성이 사망한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남-북의 화해라는 면에서 북한의 사고(思考)는 본질적으로 전혀 변화하지 않고 있었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여기서 본질적 변화란 *이데올로기*와 정책을 위시한 당(黨)의 기본노선에 있어서

2517) 위와 같음.

2518) 「식민지 극복의 반통일 뉘etur리」, 1999년 8월 17일자, *《로동신문》* 논평.

의 변화를 가리킨다. 이에 대해 비(非)본질적 변화란 노래, 춤, 옷차림, 머리모양 문화정책에서의 검열 완화 등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나타나는 생활 관습상의 일반적 변화를 말한다. 북한에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김정일이 감미로운 평화선전과는 정반대로 한결 같이 고수하고 있는 것은 공격적인 대남 냉전정책 때문이다. 냉전이란 무엇인가. 평이하게 말하면 냉전이란 열전(熱戰)(무력전)의 방법으로 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대립적인 사상, 즉 *이데올로기*(자유민주주의나, 프롤레타리아계급의 독재나)와 그의 구현인 경제제도(자유 시장경제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나), 생활양식(자유 개방주의나, 통제된 폐쇄주의나)의 면에서 전개되는 가열한 정치투쟁이며, 그것은 곧 인생관-세계관의 투쟁이기도 하다.

이런 투쟁에서는 상대방의 정치적 혼란과 동요, 경제의 마비, 가치관의 파괴, 내부의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모략 선전전이 중심을 이룬다. 이와 함께 상대방 진영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간첩을 끈질기게 침투시키는 등 모든 파괴적 방법이 동원된다. 냉전은 전통적인 정치적 압력과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는 정치투쟁이기는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먼저 적대진영의 정신(사상)을 흔들어 굴복시키려는 사상전, 심리전이 그 대중을 이루고 있다. 북한이 지난 반세기 이상 수행해 온 대남 '평화공세'가 그 대표적인 예다. '평화공세'는 인류의 대다수가 희망하고 있는 평화의 이념을 수단으로 하여 적대 세력에 가하는 정치적 타격이며, 이것으로써 노리는 바는 적대 세력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여 비판적인 대중의 심정을 사로잡아 자기편으로 끌어당기는 일이다.

그런 정치 공세를 가장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강렬하게 펼쳐온 것은 한국전쟁 이전에도 이후에도 중국공산당과 소련으로부터 방법을 배워온 김일성 일파였다. 남한의 민족주의자들은 대체로 열세에 서서, 산발적으로, 비(非)체계적으로, 수동적으로 대응하는데 그쳤다는 것이 공정한 평가일 것이다. 잘못하면 김정일정권은 남한과 미국의 '냉전정책'이란 것을 비난하고 있으나, 이것은 남-북간의 긴장의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려는 또 하나의 냉전방식이다. 그들에 있어서는 남-북 화해에서 절대적 선행 조건이 되는 남-북 대화는 현안의 남-북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도의 탐색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적대적 상대방에다 전개하는 정치 공세의 하나라는 점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김정일의 이러한 대남정책은 김일성의 대남전략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과거 자기에게 편리한 몇 개의 *이데올로기*상의 도식(圖式)을 만들어 냈다. 즉 미국은 제국주의의 괴수며, 남조선은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이며 주한 미군은 침략군이며,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는 괴뢰정부라는 도식이 그것이다. 그러면 오늘의 '조선노동당'(朝鮮勞動黨)정권을 창출해 낸 스탈린의 소련과 북한과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그것은 철두철미 종주국과 속방(屬邦)의 관계였다. 북한을 위시한 소련 위성국들의 대(對) *모스크바* 예속 체제를 김일성은 8·15해방 3주년 「기념보고」²⁵¹⁹⁾에서 “약소민족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며” 그들의 “독립을 옹호”하며 그들에게 “진정한 원조”를 주는 “위대한 소련 군대와 소련 인민”, 그의 위대한 영도자인 스탈린 대원수에게 해방된 민족의 열렬한 감사와 무한한 축복을 드렸다.

1949년 12월 15일에는 '코민포름'회의 종결에 관한 「보고」²⁵²⁰⁾에서 스탈린의 세계공산권에 대한 지배체제를, “세계의 평화와 안전, 민주주의와 진보, 제(諸) 민족의 동등권과 자유와 독립을 존중하는 국제민주진영”이라고 찬양했다. 그는 이 「보고」에서 소련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있던 *유고슬라비아*의 티토를 “부르조아 민족주의로 타락한” 미-영 제국주의의 앞잡이라고 가차 없는 맹공격을 가했던 것이다.

스탈린 사망 후 단일적 국제공산주의 운동이 붕괴되어 사회주의진영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사회주의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얼토당토않게 “*발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국가관계”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이런 사회주의국가들은 공동의 적과 싸우는 전우들로서 동지적인 친선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나라들의 상호관계는 ‘친선과 단결’, ‘호상협조’를 공고화하고 있는 사회주의 진영이라고 묘사했다.²⁵²¹⁾

결국 김일성의 대남정책과 ‘자주적’ 통일정책은 그의 세습 후계자 김정일정권에 그대로 전수되었다. 이들 부자(父子)는 그런 도식을 기초로 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반미 자주화 투쟁”(한-미동맹 관계의 단절)과 “반(反)파쇼 민주화 투쟁”(정보기관 폐쇄, 국가보안법 철폐, 남파간첩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등으로 친북 혁명투쟁

2519) 『김일성선집』 2, 1953년 판, p. 212, 이 소련 찬양 구절은 그 후의 출판물에서는 모조리 삭제했다.

2520) 같은 책, p. 449

252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의 당면과업에 대하여」(1962년 10월 23일), 『김일성저작선집』 3, pp. 418~419 참조.

을 합법화시키는 것)을 결합시켜 쟁취해야 한다고 남조선 인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종래의 입장은 햇볕정책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고 해서 바뀐 것이 결코 아니었다. 주체사상이 가르치는 혁명지상주의(革命至上主義)가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의 대남정책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주체사상은 이미 신(神)의 계시에 필적하는 위엄을 획득한지 오래다. 그들의 혁명지상주의가 승리할 가능성은 전무(全無)한데 불구하고 '조선노동당'은 내부 붕괴를 막기 위하여 끊임없는 정치 선전으로 인민들을 의식화-혁명화 하는 사상교양사업을 다그쳐 왔다. 김일성 부자는 북한이 처한 국제적 고립상태와 이미 한계상황(限界狀況)을 넘어버린 지 오랜, 극심한 경제적 파탄 속에서 활로를 열기 위해서는 대남 혁명투쟁을 선포하여 남-북 사이에서 고도의 긴장분위기를 조성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자기들의 전체주의 독재체제, 병영(兵營)국가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이 남-북 관계의 개선을 근원적으로 가로막아 왔다는 점에 이 나라 통일문제의 비극이 있는 것이다.

여태까지 북한 측은 휴전선상에서, 동해상에서 또는 북방한계선상에서 잇따라 군사적 도발을 자행하여 남-북간의 긴장을 전쟁 직전의 상황에까지 격화시켜왔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모든 사건들을 자기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것들은 의례히 남한 측의 자작극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침략적 도발이라고 항의한다.

이런 식으로 그들에 있어서는 뒤집어씌우기, 생떼, 대담한 거짓말, 잡아떼기, 견강부회(牽強附會), 악담, 전쟁위협, 우롱, 중상모략 등이 남-북 대화에서의 중요한 방식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전두환(全斗煥)정권 이래로 모두가 비(非)정치적 분야의 교류부터 시작하자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왔고 역대 대통령들과 고위 정치지도자들은 제각기 성급하게도 김일성 또는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이란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그 강도는 낮았지만 북한은 김대통령 시절에도 월드컵 축제기간 동안 서해교전을 발발시켰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래로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김정일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김 대통령 역시 남-북 교류(경제적 지원)를 현상 타파의 첫걸음으로 보았거나 또는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햇볕정책에 대한 김정일의 적어도 초기 대답은 무장간첩-잠수정의 침투요, 대한민국의 영해 공격이었다.

냉전 상태의 타파를 위해서는 상호 교류의 촉진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러나 김정일은 소량의 남-북간 무역을 제외하고는 제한된 인적 교류마저 엄격히 통제해왔다. 특히 모든 교류의 첫걸음인 문화교류는 그들 내부의 약점 때문에 전무에 가까웠다. 폐쇄주의를 고수하는 북한은 무상 경제 원조를 예외로 하고는 사람의 왕래, 서신 교환 등을 최대한으로 기피해 왔던 것이다.

제4절 “*부르조아* 사상 문화의 침투를 철저히 막아내”

1999년 6월 1일자 《로동신문》과 《근로자》의 「제국주의자의 사상 문화적 침투를 배격하자」는 제하의 「공동논설」은 김정일정권이 제국주의 나라들(사실은 서방 선진 자본주의나라 전부를 포함)과의 문화교류를 어떻게 고찰하고 있었는지의 관점들을 종합적으로 명료하게 제시하였다.

이 「논설」에 의하면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적 침투는 “협조와 교류의 간판 밑에 감행되는 침략과 간섭의 수단”이며, “원자탄과 달러로 지배하지 못한 세계를 황색(黃色)바람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제국주의자들의 주되는 전략”이라고 규탄했다. 이러한 전제에서 “썩어빠진 *부르조아* 사상 문화”가 사회주의사회에 침습하여 이것을 내부적으로 붕괴시키지 못하도록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다 “모기장을 튼튼히 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위의 「논설」은 *부르조아* 사상 문화의 타락상에 대한 세계 모든 문명비평가들의 비판을 수집하여 그것을 기초로 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방 자본주의 세계는 이미 세기말적인 암흑의 천지가 다 된 양 묘사하였다. 또한 이 「논설」은 ‘제국주의의 사상 문화’라는 개념에다 사실은 목시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나라들 모두의 사상 문화를 포함시키면서 그들은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 배신자들이 떠드는 공개성과 다원주의(多元主義)를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는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자본주의적 기업 방법과 제국주의에 문을 열어주는 “개혁 개방”에 추호도 환상을 가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병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기장을 튼튼히 칠 것을 연거푸 강조했다. 이것은 *고르바초프* 이후의 *러시아*

의 개방과 덩소평(鄧小平)의 중국 개방 이후에 밀려들어온 서방의 영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북한의 선전원들에 의하면 자본주의사회에서 떠드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광대놀음에 불과하며, 서방의 교회들이 대외적으로 벌이는 선교 사업이란 것도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거세하기 위하여… 종교의 탈을 쓴(제국주의자들의: 필자 주)사상 문화적 침투”에 불과한 것이다. 기독교의 영향에 대한 그들의 공포증이 이렇게도 심각한데, 외국의 몇몇 사람의 선교사, 남한의 목사, 종교계 인사들이 인도주의적 구호물자나 보낸다고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 것인가. 북한에는 대외적 전시용(展示用) 교회가 몇 군데 있지만 종교의 자유란 면에서는 불모지대(不毛地帶)이다. 종교의 침습에 대하여 그들은 결코 경계를 누그러트리지 않는다. 북한은 사회주의의 적이 침투해 들어오는 사태를 예방하는 절대, 최선의 방법은 ‘사상 교양사업’(이데올로기 교육)이라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상교양사업에 힘을 넣어야 한다.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는 기초 위에서 경제건설을 다그치는 것, 바로 이것이 제국주의의 평화적 이행전략(평화적 방법에 의한 붕괴책동: 필자 주)을 짓부시는 가장 혁명적인 전략이다.²⁵²²⁾

김정일정권의 관점이 이렇게까지 배타적이며, 철저하며, 폐쇄적이며, 단호한데 어떻게 남-북간에 참다운 문화교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남한에서는 흔히 ‘정경분리의 원칙’을 그 무슨 묘방처럼 생각하고 그 효능이 곧 경제부문 밖으로 전파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북한의 주체철학의 이론에는 본래 정경분리의 개념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사상과 문화를 정치 이데올로기와 유리시켜 고찰한 적이 거의 없다. 자본주의 국가와의 경제교류에서 그들은 이데올로기를 떠나 실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많은 문제에 봉착한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이에 제국주의 사상문화가 묻어 들어오는 것을 더욱 경계한다. 그들에 의하면 제국주의의 사상 문화 침투는 사회주의를 내부로 와해시키는 “트로이의 목마(木馬)”라고 했다.

그런데 이러한 ‘부르조아 사상 문화’의 침투를 철저히 막기 위하여 치는 모기장은 그들의 해석에 의하면 통제나 억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의 운명을 책임지

2522) 《로동신문》, 1999년 6월 1일자, 앞의 社說.

고 이끄는 당(黨)만이 베풀 수 있는 ‘혁명적인 혜택이며 사랑’이라고 자랑한다. 흔히 북한을 폐쇄사회라고 평하지만 위의 「논설」은, 북한을 일반적 폐쇄사회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 완전한 밀폐사회로 만들려하는 金正日정권의 의도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헌데 ‘지구 전체를 콩크리트로 매대기를 친다고 해도 풀은 여전히 돌아난다’는 격언이 있다. 북한사회의 밀폐화(密閉化)는 어느 정도, 언제까지 가능할까. 이것은 역사적 구경꺼리다.

제4장

“우리민족끼리” 함께 미궁(迷宮)으로 가는 길

제1절 3개 신문 「공동사설」이 지향하는 것

매년 평양은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의 3개 신문 「공동사설」을 통하여 지난해의 통치 내용을 총괄하고 앞으로의 정책을 전망하고 있다. 1988년 1월부터 1994년 1월까지 6년까지는 「신년사」의 형식으로 발표해온 당-정(黨-政)의 시책의 방향을 1995년 1월부터, 특히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부터는 위의 3개 신문의 「공동사설」로써 발표했다.

이 「신년사」 또는 「공동사설」을 통해 조선노동당의 그 해의 정책 노선을 어렵게 이어나가 짐작할 수가 있어서 신문의 논조들은 우리들의 주목을 끌만했다. 반면 엄청난 자기자랑, 우렁찬 대언장담(大言壯談), 당의 업적에 대한 무한한 감격의 토로, 내용이 빈 혁명적 空語(phrase) 등으로 꽉 찬 노동당의 주장은 그들의 신빙성을 오히려 떨어뜨려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평양에서 나오는 신년사와 공동사설을 읽고 있노라면 정치성명서인지 호소문인지 또는 격문(檄文)인지를 판별하기가 어렵게 만든다. 북의 당 선전원들은 과거에 수없이 사용해온 미사여구(美辭麗句), 구호, 선동 문구들을 약간씩 손질하며 다른 표현으로 단장한 것이어서 진부하기 그지없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줄 수가 없다. 그들은 똑같은 판에 박힌 주장을 당(黨)의 정책노선이요, 애국충정의 민족적 경륜이라고 하여 달이 바뀌고 해가 가도 천편일률적으로 반복한다. 2006년 공동사설에서도 그런 현상은 그대로 드러났다.

내실(內實)없는 ‘선군정치’의 강조와 김부자(父子) 예찬으로 가득 찬 공동사설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군사, 통일, 문화, 대미정책 등에 광범위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수년과 비교할 때 새로운 시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세계의 누

구도 공명하지 않은 주장들을 공염불(空念佛)처럼 외우고 있다. 「공동사설」의 핵심은 선군혁명사상(先軍革命思想)에 입각하여 북조선을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건설하자고 호소한데 있다. 선군사상이니 강성대국이니 하는 신조어(新造語)들이 처음 나온 것은 김일성의 탈상이 끝난(1997.7)지 몇 달 뒤인 1998년에 들어선 이후의 일이었다. 뒤에 와서 이 조어에다 갖가지 정치적 수식어를 붙여 사용하고 있어서 체계가 치밀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그 의미는 단순하다. 즉 군사(軍事)가 모든 분야에서 우선하고 중시되는 국가정치체제를 말한다. 김정일은 공화국 국방위원장이며, 이미 인민군 최고사령관이란 군의 최고직위를 차지했고 노동당 비서에 올라 공화국의 “영도자”(독재자)로 내정된 인물이었다. 북한은 김일성 생시 때부터 그에게 부권(父權)을 승계시키기 위하여 군(軍)의 통수자로 만드는 공작을 해왔다. 드디어 아버지가 사망한 후 뜻을 이루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의 개정 헌법(1998년)은 국가 주석제(主席制)를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이 실질적인 국가수반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담당케 하고 있다.

「공동사설」은 그러한 김정일이 지난 날 이룩했다는 업적이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찬양했다. 우선 그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 몸에 지니시고 … 인민군대와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을 현지에서 지도해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불후의 정력적인 영도는 지난해가 강성대국 건설 년대기에 위대한 전환의 해로 기록되게 한 근본원칙이었다”고 감읍한다. 그리고는 “우리 인민군을 무적필승의 혁명 강군으로 키우시고 수천 년 민족사에 있어서 보지 못한 세기적 변혁을 이룩하여 김일성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광활한 길을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공적은 후손만대에 빛날 것이다”라고 고대 신정(神政)시대 선지자의 예언을 부끄러움 없이 토로했다.

끝에 가서 「공동사설」은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예찬의 균형을 잡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받들어 모시고 수령님의 강성대국 건설을 빛나게 실현하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성스러운 사명이다”라고 다짐했다. 아침의 극치(極致)를 이루고 있는 이런 예찬은 김정일 부자 우상화 작업의 대표적 특징이다. 북한의 선전은 가장 “진보적”이라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말끝마다 감격적으로 구가(謳歌)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중세적 세습 전제 군주제에다 현대의 파시즘과 군사독재 정치의 특색들을 모두 융합해

만든 기묘한 혼합체이다.

그러면 신년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사회주의”가 실시되고 있는가? 김일성 이래로 노동당은 북한의 정치궤도를 “사회주의”라고도, 뒤에 와서는 “우리식 사회주의”라고도, 최근에는 “주체사회주의”라고도 규정하고 자랑해왔다. “사회주의”란 본래 계급의 존재와 횡포를 타파하고 자유, 평등, 동포애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실현 하려는 이상과 정의 실천운동에서 출발했다.

19세기 중엽 유럽에서는 맑스-엥겔스의 공산주의가 나오고 19~20세기의 제정 러시아에서는 그 나라에 특유한 정치-사회상황에서 레닌의 볼셰비즘(러시아 공산주의)이 파생하면서 사회주의는 몇 갈래로 갈라졌다. 그중 가장 비타협적인 계급투쟁-프로레타리아 혁명-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를 고리로 하는 레닌주의(보통 공산주의라고 불리우는 것) 당, 즉 레닌의 볼셰비키당(黨)(그 후의 “소련공산당”)이 러시아 10월 혁명에서 승리하면서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해석은 레닌주의자(공산주의자)와 민주적 사회주의자(사회민주주의자)사이에서 갈라졌고 따라서 사회주의란 용어도 각각 상이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공산주의자들에 있어서 사회주의란 노동대중의 반(反)자본주의적 계급투쟁에 의해서, 그리고 그 전위당(前衛黨)인 공산당의 지도하에 서만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혁명이 성공한 후에는 공산당이 정치권력을 전담(獨攬)하여 사회주의 궤도를 건설하면서 착취계급이 소멸된 무계급의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0월혁명 후의 러시아에서도 1949년 ‘중국공산당’이 북경정권을 수립한 후에도 역사의 코스는 그런 방향으로 달리기는커녕, 반대의 현상을 만들어냈다. 소련 자체가 붕괴하고 중국이 모택동의 사망 후에 보여주듯이 100년 전의 맑스-레닌주의식 사회주의가 부활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이 결과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거의 파산하고 말았다. 북한 경제의 파탄 징조는 김일성 시대의 말기에서부터 뚜렷이 나타났고 김정일 시대에 들어서서 한때는 심각한 경제 위기설이 나돌았다. 이 위기는 유엔 미국 일본 등의 국제적 원조와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하여 심각한 상태는 넘기고 있는 듯하다. 공동사설은 몇 번이고 금년에도 “농업전선(農業戰線)을 (경제건설에서의) 주공전선(主攻戰線)으로 내세우고” 다시 한 번 농사에 모든 정력을 총동원, 총집중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즉, 만성적 식량 부족을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통일부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2005년도 대북 농업부문 지원은 비료지원(수송비 포함) 등 인도적 지원이 1260억200만원, 민간단체 지원이 57억950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것은 상당한 액수다. 같은 해 한국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불한 액수는 총 4306억200만원이란 막대한 액수였다.

남한으로부터의 이러한 “퍼주기식” 원조가 없었더라면 북한 경제는 벌써 쓰러졌거나 중국에 예속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스탈린주의를 모방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실험이 사실상 파산으로 끝난 것을 뜻한다. 북의 민생경제, 즉 사회주의 복지 시책은 1) 극히 불충분하나마 식량배급제의 가동, 2) 노동자의 상대적 완전고용, 3) 소년, 소녀들의 의무교육 실시, 4) 환자들의 무상진료 실시, 5) 양로원, 고아원 등의 문을 닫지 않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이것들이 명맥을 보존하고 있는 한 사회주의체제는 그런대로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동(東)유럽처럼 민생경제에서 이 4개의 기둥이 무너질 때는 체제의 총체적 위기는 피할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러한 위기는 벌써 김일성 말기부터 나타났다. 산업에 있어서의 중공업 우선주의, 농업집단화의 계속 고수, 자력갱생원칙의 절대화, 이데올로기의 만능주의, 독재자의 신비화 정책이 가져온 결과는 북한의 경제를 황폐화시켰다. 공장 기업소의 반 이상이 문을 닫았고, 에너지 난, 원자재 부족, 외화부족, 수송난, 기술의 열악 등이 인과관계를 형성하여 엄청난 재난을 몰고 왔다. 김일성이 강행해 온 극히 주관적인 “다락발”이나 “주체농법” 등의 강행으로 말미암아 울창했던 산들은 민둥산이 되어 홍수와 가뭄이 교대로 엄습했다.

북한의 비과학적(非科學的)인 생산계획은 농토를 황무지로 만들었다. 1995년 8월부터 2년간은 대홍수의 결과로 250만에서 300만의 아사자가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아사자의 숫자는 감춘 채 국제 사회에다 지원을 호소했다. 그들은 이러한 기근을 일으킨 원인은 천재(天災)(자연재해)에 있다고 선전을 계속했을 뿐, 인재(人災)(이데올로기, 당의 정책, 체제의 잘못 등)에도 원인이 있다는 말은 엄금했다.

또한 신년사에서 반복하는 과거의 정책노선 찬양으로는 경제 소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1958~1957년, 즉 ‘농촌인민공사’를 강행함으로써 3천만명이 굶어죽었다는 보도에 접하여 김정일은 우리는 아직 괜찮다고 그나마 상대적인 위안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 연옥(煉獄)의 비극을 경험하고 난 지금도 김정일정권은 과거에

재난을 몰고 왔던 정책노선을 계속 찬양하면서 그 방침에 따라 북한경제를 빈사상태에서 소생시키려하고 있다. 「공동사설」은 반세기 전 12월 당 중앙(黨中央) 전원회의에서 결정했던 “천리마대고조 운동”을 본받아 “선군 혁명대고조의 불길높이, 21세기 강성대국을 일떠세워야한다”고 외치고 있다. 김일성의 “천리마운동”의 선구자적 모델은 모택동의 대약진운동이었다. 이것들은 모두 실패하여 인민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남겨 놓은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새 지도자 등소평(鄧小平)은 “개혁개방” 정책으로 중국 대륙을 안정과 번영의 길로 이끌었다.

그런데 김정일은 중국에서 실패하여 어둠 속에 매몰된 대약진운동의 쌍둥이적인 천리마운동을 다시 들고 나오고 있다. 이것은 틀림없는 구(舊)시대로의 복귀현상이다. 김정일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개혁 개방이 권력의 통제력을 약화시켜 필경은 자기의 권좌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공포를 느껴왔다. 2002년 7월 1일 북한 당국은 경제력 침체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단행했다. 이 조치는 경제성장에 따른 분배를 강조하고 공장·기업소의 독자적 활동을 크게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곧 물가와 임금의 현실화되고 식량과 생필품의 배급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했다. 2003년 3월 이후부터는 종래의 농민시장(장마당)의 이름을 “종합시장”으로 고치고 식량과 생필품을 음성적 거래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양성적으로 거래하는 자유시장으로 바꾸려 하였다.

그러나 통제의 철폐·자유화에는 시련이 뒤따른다. 정부가 책정해온 물가, 임금은 급속히 현실화되고 공공요금도 비약적으로 상승하였다. 김정일은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외자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외자유치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7·1 ‘경제개선 조치’도 장애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후 식량 배급제가 부활되고 있다는 소식과 더불어 탈북자는 계속 늘어났다. 그런데 내외의 일부 전문가들은 7·1경제조치가 나오자 북한은 마치 시장경제의 문턱에 들어선 것처럼 성급하게도 낙관적인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남한의 누구도 북한의 자유시장과 종합시장의 실태를 자세히 살펴본 사람은 없었다.

제2절 “남조선 보수대연합을 짓부수자”

「공동사설」은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한 6월 15일을 “우리민족끼리의 날”로 삼아 매해 성대하게 기념하자고 제안했다. 우리민족끼리라는 말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했다는 서문의 일절에서 유래했다. 얼른 듣기에는 좋은 말이며 한반도의 사정에 무지한 국외자는 쉽사리 감동할 수 있게끔 쓰여진 말이다. “힘을 합쳐”라는 말은 합작(合作)이란 말의 대응어이다. 남한에서는 과거의 좌우 합작(左右 合作), 중국의 국공 합작(國共 合作) 등의 쓴 경험을 통하여 합작이란 말의 책략성-음모성을 예민하게 경계해왔다. 그리하여 김대중(金大中)정권은 합작이란 말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라는 용어로 대체했던 것이다.

이 말은 *이태올로지*적 성격이 잘 드러나 있는 종래의 “민족통일전선”(民族統一戰線)이란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서 한 말이기도 하다. 북한의 당 선전원들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친다”는 말 대신 민족공조(民族共助)라는 용어를 만들어 남한의 국민들을 유인하려든다. 그들은 우리민족끼리의 하위(下位)실천개념이라고 하여 제시한 것이 “3대공조”다. 즉 ① 민족자주 공조 ② 반전평화공조 ③ 통일에국공조가 그것이다. 북한의 선전원들의 언어의 유희는 그들의 단순한 목적을 복잡한 논리(論理)로 위장하여 대남정책의 핵심을 감추고 있다.

「공동사설」은 자찬하기를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에국의 3대공조를 실현하기 위한 과감한 투쟁을 벌여 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펼쳐놓았다고 했다. 남한에서 일상 일어나는 한 낮의 가두 폭력시위에서부터 야간의 반미(反美) 촛불 *데모*까지, 만성화된 각종 반한(反韓)·반미(反美)운동에서부터 *뺑아터*장군 동상 파괴난동까지의 그 모든 소란은 북이 호소하는 3대공조를 실행하는 방법들이었다. 이러한 행태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일로서 내심 ‘진보’를 자부하는 세력의 출현 후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들이다. 객관적으로 보아 김정일의 3대공조전술은 대한민국 안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중대한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공동사설」은 과거와 똑같이 기고만장하고 자신만만한 천편일률적 논조로 김정일

의 통일노선을 복창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치, 경제, 군사, 사상, 문화,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 관하여 한마디씩 거론하고 있지만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자아 반성과 정책대안은 전무하다. 내용은 말하지 않은 채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모든 당(黨) 조직들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봐주어야 한다”, 또는 무엇 무엇을 “…하여야 한다”,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현대화를 다그쳐야 한다” 등의 당위적(當爲的)인 외마디 주장들을 나열하고 있을 따름이다.

개선할 대상도 개선의 방법도 말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만을 추켜세우고 있다. 한 마디로 무엇인가를 반듯하게 내세울 자신이 없는 것이다. 요컨대 *비전*도 정책도 없이 “혁명”의 기염만을 토하고 있다 할 것이다.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에서 김정일정권이 추구하는 최종적 목표는 민족통일전선(民族統一戰線)의 조직을 무기로 하여 자립적(自立的) 남-북 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 그런데 민족통일전선은 과거 순진한 소위 “부르쉴라 민족주의자-민주주의자”들이 흔히 기대했던 것처럼 사상과 이념과 사회계급을 초월한 민족의 대동단결(大同團結)체가 아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오늘의 ‘계급의 적들’과의 싸움에서 내일의 “계급의 적들”을 과도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들과 일시 연합한다.

북한은 통일전선의 조직과 활동에서 헤게모니는 반드시 공산주의자들을 장악(이른바 당의 영도를 확고히 하는 것)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는다. 이렇게 통일전선을 무기로 하여 공산당(“노동계급”으로 거짓자임)이 정권을 잡으면 자본주의제도-민주주의체제를 뒤집어엮은 후 공산당의 일당독재를(“노동계급의 독재”라고 기만) 실시하여 지금까지 연합하였던 “계급의 적”들을 숙청하면서 소위 “사회주의제도”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통일전선의 전술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민족통일전선이 혁명투쟁의 “전술”이란 점을 특별히 강조한다. 민족통일전선에 의한 단결된 힘으로써 타도하여야 할 적은 국내의 “계급의 적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부추기고 있는 “미 제국주의”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북한은 민족통일전선이란 개념을 “우리민족끼리”라는 쉬운 말로 바꿔 쓰고 있다. “민족공조”도 같은 의미다. 공동사설은 선동하기를 “남북과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공조로 미국의 간섭과 지배를 단호히 배격하며 외세와 야합한 반

(反) 통일세력들의 매국행위(賣國行爲)를 추호도 용납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이다. 이 철저한 반미(反美) 지상주의의 이유로 내세우는 논거란 1945년 9월 이래로 이 나라 강토의 절반을 “강점”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해왔다는 미국의 “지배주의”였다.

요컨대 미국은 제국주의 침략국가요, 전쟁도발 세력이기 때문에 거족적인 미군철수 투쟁으로 이 땅에서 전쟁의 화근을 송두리째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소련의 성원을 받고 있던 이런 식의 선동은 6·25전쟁 이전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진부한 선전전의 일환에 불과함으로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 공동사설은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지 않는다면 “민족의 존재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경고한다.

그리고는 “온 민족은 미제의 새 전쟁도발정책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 총결기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야한다”고 비상한 결의를 촉구한다. 그런데 북한은 그렇게도 지극히 평화를 염려한다면, 민족을 절멸에 몰아넣을 수 있는 자기들의 핵(核)무기 개발에 관해서는 「공동사설」에서 일언반구 말이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2000년의 6·15일자 「남-북 공동선언」이래로 남한의 집권층을 비방하는 언사는 극히 삼가고 있으며 “파쇼정권을 타도하라”, “인민들을 기아로부터 구출하자” 또는 “사대매국 악당”운운하는 등의 악선전도 일체 삼가고 있었다.

그 까닭은 대북 유화정책과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경제적 지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체제 붕괴의 위험으로부터 우선 벗어나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친화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한국 국민들의 안보관을 해이케 하며, 사회 구석구석으로 침투해 들어가 파괴공작을 일삼는 반미(反美) 친북세력을 키우자는데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방 60년 동안에 북한은 대한민국정부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비방과 욕설을 퍼붓고 공작원들을 남파했다. 정부 비판세력에 대해서는 항쟁을 선동하고 대대적으로 격려했다. 그 이유는 재야세력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전술적 의도에 서였다.

김대중정권 시절 김정일의 입장은 대한민국 내의 통칭 “보수 세력”을 쓸어버리는 것을 대남정책의 주요한 목적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반보수대연합(反保守大聯合)”을 이룩하여 친미세력의 집권을 기어이 저지해야 한다

는 것이다. 반면 남한에서 대두하고 있었던 각양의 친북(親北) 정치세력에 대항하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내걸은 “신우파”(新右派) 운동에 대해서 북한은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운동이 확장되는 날이면 그들의 통일전선공작은 수포로 돌아가고 ‘자주적 평화통일’은 메아리 없는 아우성처럼 허공으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공동사설」은 이들을 극악한 표현으로 맹렬히 공격했다.

독초는 제때에 뿌리 뽑아 제거해버려야 한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신보수》의 결탁과 도전을 진보의 대연합으로 짓 부셔버리고 매국반역집단에 중국적 파멸을 안겨야 한다.

이 저주조(呪詛調)의 선전포고는 김정일정권이 남한의 친북세력과의 “민족공조”로써, 대한민국의 국권을 수호하려고 하는 자유민주주의자들을 반드시 격멸시키고야 말겠다는 결의를 천명한 것이었다.

제5장

“남조선해방” 전략의 불변성(不變性), 전술의 다양성(多樣性)

들어가는 말

김대중정권의 대북 햇볕정책은 경제지원 및 인사고료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 후 교류의 종류와 경제지원의 규모, 각종 협력 사업 등은 계속 증대해 갔고, 드디어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로 남-북한 관계에는 실로 경천동지(驚天動地)의 대변화가 일어났다. 숨이 막히도록 밀폐되어 왔던 남-북 사이에는 큰 문이 활짝 열렸다.

이것을 전후로 하여 한국은 북한에다 국력에 걸맞지 않는 방대한 량의 지원을 마구잡이로 제공했다. 그러면 한국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액수를 제공했는가.

‘미(美) 의회조사국’(CRS)이 2005년 여름에 발간한 「외국의 대(對)북한지원」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1995년(김영삼 정부 출범 2년 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한국이 북한에다 비료, 식량 등 각종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총 34억 9,290만 달러(한화 약 3조 5,0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 이 금액은 2003년도 북한의 수출 규모 10억662만 달러의 3배에 해당한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실현된 2000년부터는 년 평균 지원액이 5억9,000만 달러로 급증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권 이전이었던 1998년까지는 한국의 대북 원조는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분담금을 합쳐서 총계 3억 6,200만 달러였지만 김대중이 직접 지원에 나선 이후로는 2000년에 7억 650만 달러, 2001년에 4억 5,320만 달러, 2002년에 5억 8,490만 달러로 증가했다.²⁵²³⁾ 이러한 “퍼주기”식 대북지원은 소위 투

2523) 《統一日報》(在東京), 2005년 6월 29일 보도.

명성에 의한 검증도 그 밖에 필요한 모든 안전조치도 무시한 채 방만하게 마구잡이로 자행되었다.

대북지원은 정부차원, 민간차원의 각종 회담과 협의, 협력사업, 교류와 행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2000년 7월부터 현안의 ‘남북장관급회담’, ‘남북장성급회담’, ‘남북경제협력위원회’가 몇 차례씩이나 열렸다. 그 결과로 남-북 철도·도로 연결에 합의를 보고, 쌀 40만톤의 제공 대북식량차관 제공 등이 실현되는가 하면 개성공단(開城工團) 개발에도 착수하고 대북전력 및 통신 연결에도 합의를 보았다. 남-북주민의 상호방문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학생, 노동자, 농민, 학자, 언론인, 종교인 등 주로 친북단체 소속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북한지역을 방문하고 공동행사를 가졌다. 명심할 것은 이러한 상호방문행사는 모두가 북한의 정치적 목적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었다는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고 이산가족 면회소의 건설도 추진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노리는 것은 자기들의 통일정책 선전이었음으로 6·15선언기념 남-북 공동기념행사, 올림픽경기 때의 남-북 공동입장 같은 프로그램에는 몹시 열을 올렸다.

이러한 상호방문과 공동행사 개최 등에 뒤따른 것은 남쪽의 돈이었다. 북한의 서커스단을 초청하는데도, 교향악단을 초빙하는데도, 미녀옹원단을 데려오는데도 돈을 지불해야 했다. 심지어 남한의 연예인이 평양에 가서 공연을 하는데도 공연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각종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이러한 행태는 북한이 처한 극한적 경제난을 고려할 때 이해가 가는 일이긴 하다. 그러나 문제는 남-북 교류와 협력 사업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위압적이며, 사사 건건 트집을 잡으려하고, 모든 일에 책략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1995년 이후 2004년 말까지 총 5천109억 원 상당의 물량을 민간차원(次元)의 형식으로 북한에 제공했다. 이것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 총액 1조 3천12억 원의 37%의 비율을 차지하는 분량이다.²⁵²⁴⁾

북한은 이러한 지원을 오히려 당연시하고 대한민국의 동맹국인 미국을 계속 비난하면서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었다. 그들의 극한적(極限的) 반미투쟁은 간접적으로는 미국의 동맹국인 대한민국에 대한 투쟁이 된다. 한국정부가 미국과

2524) 『2005 북한연감』, 연합뉴스, p. 294.

의 친선관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강조하는 한 북한은 한-미에 대하여 전쟁의 위협, 강경한 투쟁의지의 선언, 벼랑 끝 외교, 평화에호 선언 등 냉전시대의 수법을 구사하면서 얻은 것은 최대한으로 얻어내어 파탄된 경제를 살려낸다는 데서 활로를 찾고 있다. 그러면 김정일은 김일성이 반세기 동안 쌓아올린 “남조선해방”을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 이것을 바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김일성의 *이데올로기적* 관점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제1절 일관된 투쟁노선

김일성은 분단 직후 “조국의 평화통일”이라는 대남(對南) 평화선전의 연막 뒤에서 예의 군사력을 강화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드디어 “남조선해방전쟁”을 기습적으로 도발했다. 이 국지전쟁에 ‘국제연합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이 참가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북(東北) 아/아에서 냉전의 초점이 되었던 한반도는 돌연 국제적 열전장(熱戰場)으로 바뀌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남-북간의 혈맥을 졸라매고 평화적 통일에 관한 진지한 대화의 가능성을 앗아간 근본적 원인은 바로 한국전쟁에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 전쟁을 공모하여 도발한 스탈린-모택동(毛澤東)-김일성 일파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1953년 7월 휴전이 성립된 직후부터 또다시 “평화통일”이라는 책략적 구호를 내세워왔다. 1953년 8월 5일 그는 6·25직전 때와 꼭 마찬가지로 평화통일의 전제조건으로 “조선 문제는 조선사람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도록 할 것”을 주장하면서 남한으로부터의 미군의 철수를 요구했다.²⁵²⁵⁾

미군 철수의 요구는 1946년 이래로 그가 사망할 때까지 그의 평화통일론의 대 전제로써 일관되어 왔다. 이와 동시에 북한을 남북통일을 위한 ‘민주기지’(民主基地)(후에는 “혁명적 민주주의”로 부름)로 규정하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화한 후, 이곳을 기지로 남한에다 친(親)공산주의 혁명을 유발하여 혁명정권이 수립되면, 이 세력을 북한의 “사회주의 역량”과 “평화적으로”통합하여 남-북 통일을 쟁취한다는 “남조

2525)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의 보고」, 『김일성선집』 4, 1960년 판, p. 6.

선해방”의 전략을 휴전 직후부터 줄곧 제창해왔다.

김일성은 자기의 “남조선혁명”노선을 휴전 이후 그의 집권기 50년 동안 체계적으로 선전해 왔고, 혁명의 전략과 전술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명시했다. 그의 주장에는 모호한 점이 없었다. 그는 “남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反帝) - 반(反)봉건적 민주주의혁명”²⁵²⁶⁾이라고도, 간단하게는 “민주주의 혁명”이라고도 규정해 왔지만, 1968년 9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스무 돌 경축대회’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고 밝혔고²⁵²⁷⁾ 1970년 11월의 제5차 당(黨) 대회에서도 그는 남한에서 세워질 혁명정권도 “인민민주주의 정권”이라고 규정했다.²⁵²⁸⁾

그가 생각하고 기도해 온 “남조선혁명”은 처음부터 북조선 형(型)의 인민민주주의 혁명이었다. 그리하여 인민민주주의는 비단 북한 자체의 통치 이데올로기와 제도를 의미했을 뿐만 아니라, “남조선해방”을 위한 이데올로기요, 남-북 통일을 위한 전략 전술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김일성의 “남조선혁명”노선, 그 위장전술로서 의 “평화통일”노선, 그리고 “평화통일”의 담보로써의 “민주기지”(民主基地)강화노선은 노동당 내의 권력투쟁에서 그가 승리를 거둠으로 하여 당(黨)의 절대 무오류의 진리로써 찬양되어 왔던 것이다.

김일성의 “조국의 평화적 통일”전략의 중심은 “남조선혁명”이었다. 그는 한반도에서 “미(美) 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민족해방혁명을 완수”한다는 것을 “남조선혁명”의 절대적 목표로 삼아왔다. 이러한 “남조선혁명”은 그에 의하면 곧 “민족해방혁명”이었다. 그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즉 “남조선혁명은 미(美)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인 동시에 미제(美帝)의 앞잡이들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들과 그들의 파쇼 통치를 반대하는 인민 민주주의의 혁명”²⁵²⁹⁾이라고 정의했다.

김일성은 1964년 2월말 경부터 이 “민족해방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혁명역량 즉 ① 북조선의 혁명역량 ② 남조선의 혁명역량 ③ 국제적 혁명역량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전략적 도식(圖式)을 자세하게 제시해왔다.²⁵³⁰⁾ 그러나 모스크바와

2526) 같은 책, p. 215.

2527) 《근로자》, 1968년 9월호, p. 40.

2528) 《로동신문》, 1970년 11월 3일자.

2529) 『김일성저작선집』 5, 1972년 판, p. 479.

2530) 『김일성저작선집』 4, 1968년 판, p. 80.

중국의 대립, 소련 및 동(東)유럽의 내부혼란, 많은 신생독립국들의 친(親)서방으로의 전환, 그리고 제3세계 나라들 사이에서 일어난 상호간의 전쟁은 이상의 도식을 한낱 공론(空論)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도식에 매달려 조국의 북반부를 “남반부 인민들을 미(美) 제국주의자들의 억압에서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혁명의 근거지(“혁명적 민주기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계속 외쳤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는 북한에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 이 혁명기지(근거지)를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면에서 백방으로 강화해야 했다. 이것이 ‘북조선의 혁명역량’을 준비하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청사진은 처음에는 선명해보였지만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빛을 잃어갔다. 그는 국내외의 사정이 어떻게 변하든 낡은 혁명의 도식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조선의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공산주의 통일은 실현될 수 없었다. 김일성은 “남조선에서 미(美) 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남조선 인민들이 주동이 되어 일어서서…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통치 제도에 타격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조선의 인민들이 혁명적 봉기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북조선의 인민들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때려 부술 수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남-북 조선에서 혁명역량이 다 같이 준비되어야 하며 남-북 조선 전체 인민이 힘을 합하여 미(美) 제국주의자들에게 타격을 줘야만 민족해방혁명을 승리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²⁵³¹⁾고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혁명의 주력군으로 믿은 것은 혁명적 계급정당인 조선로동당이였다. 그는 가르친다....

무엇보다도 먼저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혁명의 주력군이란 혁명에 동원될 수 있는 기본계급과 그 속에 깊이 뿌리박은 *맑스-레닌주의*의 당(黨)을 의미합니다. *맑스-레닌주의*의 당의 영도 밑에 사회의 기본계급인 노동자 농민이 동원되어야만 혁명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²⁵³²⁾

이런 말은 혁명 열기에 들떠있는 극소수 극좌 모험주의자들에게는 격려와 운동의

2531) 같은 책, pp. 80-81.

2532) 같은 책, p. 89.

지침이 될 수 있었을런지는 몰라도 스탈린의 소련, 모택동의 중국, 또는 이와 유사한 나라들의 엄혹(嚴酷)한 현실을 보아온 사람들을 기만할 수도 매료(魅了)할 수도 없었다.

김일성은 자기의 혁명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내(남북한)의 혁명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혁명역량도 성장시켜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왜냐하면 “조선 혁명은 세계혁명의 한 고리”이며, “미(美) 제국주의는 국제반동의 원흉이며 전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공동의 원수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조선에서의 미제(美帝)의 패망은 전 세계적 범위에서의 그들의 패망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세계혁명 역량이 더욱 강화되어 그들이 세계 도처에서 더욱 더 막다른 골목에 빠져들면 남조선에서의 그들의 지반도 더욱 강화될 것이며 조선혁명의 승리는 더욱 빨리 실현될 것”이라고 설득을 시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국제혁명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²⁵³³⁾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간단하게 쓰러질 만큼 취약하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김일성은 국제적 혁명역량과의 연대성을 강화할 것을 강조해왔고 그 방법으로서 ① 모든 사회주의의 국가인민들과의 단결 강화 ② 제국주의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에 대한 지지와 그들과의 단결의 강화 ③ 그밖에 미(美)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의 모든 인민들과의 단결과 그들의 반미(反美)투쟁 지지라는 정책을 강조했고²⁵³⁴⁾ “제3세계” 나라들, 그 중에서도 비동맹국들에 접근해 갔다.²⁵³⁵⁾ 따라서 북한의 대외활동이 1950년

2533) 같은 책, p. 81.

2534)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1942. 2. 27)같은 책, p. 94 참조.

2535) 第2次 世界大戰 후 아시아-아프리카에서는 많은 지역이 유럽제국, 미국, 일본의 식민지적 지위에서 해방되어 獨立을 획득했다. 이 지역의 國家群은 다른 나라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第3世界라고 불리었다. 제3세계국가들은 西方의 자본주의적 帝國主義에 의하여 정치적 지배를 받아 온데다가 경제적 收奪을 당해온 경험 때문에 그 성격은 反帝國主義, 民族主義였으며, 자본주의 제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강한 反感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나라들은 모두 共產主義를 指向하는 것이었지만 反西方-親社會主義로 기우러진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第3世界”에 대하여 西方의 자본주의 나라들, 즉 상대적으로 부유하며 工業化가 되어있고, 民主主義 제도와 市場經濟를 발전시켜 온 나라들, 이를테면 美國, 西유럽 제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第1世界”라고 불리었다. 한편 蘇聯과 그의 東유럽 동맹국들, 즉 1黨 獨裁體制와 中央集權의 計劃經濟 제도를 특징으로 하는 소위 “社會主義”국가들은 “第2世界”라고 불렸다. “第3世界”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막연하고 양성하게 규정되었던 冷戰시대의 용어였지만 곧 全 世界的으로 사용되었다. “제3세계나라”들은 東-西의 冷戰이 치열해가고 있던 1950년대에 公산권에도 서방진영에도 가담하지 않고 獨自的 입장을

대 중반이후 중점을 두었던 것은 중-소의 두 공산주의 대국을 제외한다면 신생(新生) 독립국가들과의 관계를 수립하고, 연대성을 강화하고²⁵³⁶⁾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²⁵³⁷⁾ 그러나 김일성은 1960년부터는 동서간의 냉전 해소의 추세와 중-

견지하면서 美-蘇의 대립을 교묘히 이용하여 쌍방으로부터 다 같이 援助를 받는 漁父之利를 추구하고 있었다. “제3세계”는 정치-경제-문화면에서 몹시 뒤떨어진 지역이었지만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방대한 面積과 人口, 未開發의 풍부한 天然資源 때문에 國際政治舞臺에서 아연 각광을 받고 發言權을 강화해 갔던 것이다. 김일성은 反美-反韓투쟁의 전략상 곧 “제3세계국가”들, 그 중에서도 非同盟國들에도 기울 어졌다.

- 2536) “第3世界 나라”들 중 西方측(美國-西유럽 제국들)의 同盟國 및 나라(필리핀, 파키스탄 등)를 제외한다면 모두가 非同盟國(북한의 호칭은 “불가맹 나라”)이었다. 非同盟國들은 적대적 관계에 있는 美-蘇의 어느 블록과 軍事同盟을 맺었다가는 공연히 전쟁에 휘말려 들어갈 것을 두려워하면서 美-蘇의 두 블록 밖에 있었다. 김일성은 비동맹국과 중립국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해 왔다. *아시아-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들 사이에서 비동맹 운동은 195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는 시대의 大勢처럼 되었다.

제3세계의 “非同盟運動”이 시작된 것은 *아시아-아프리카*의 29개국 대표들이 植民主義 반대의 전략을 토의하기 위하여 1955년 4월 인도네시아의 반둥(Bandung)에서 개최되었던 제1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로 소급한다. 반둥회의에는 중국의 周恩來 首相, 印度의 네루 수상 등이 참가했고,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스카르노가 주재하여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비동맹운동은, 반둥회의 전년 中-印 간에 확인된 「平和5原則」(평화공존의 원칙 포함)과 반둥회의 최종성명에 명기된 「平和10原則」을 이념으로 하고 있었다. 이 이념의 기초위에서 열린 제1차 “비동맹 수뇌회의”(베오그라드)를 필두로 하여 首腦會議는 제19차(1989년)까지 열렸다. 이 수뇌회의는 세계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근 17억人的 목소리를 집약한 것이었던 때문에 世界史的 大 사건으로 간주되었다. 이 같은 비동맹운동의 주역은 네루, 티토, 나세르의 3巨頭였다. “비동맹수뇌회의”와 병행하여 민간 차원에서는 “아시아-아프리카 人民連帶會議”(1957, 12-1958, 1)가 열렸고, “人民連帶機構”가 설치되어 활발하게 운동을 전개했다.

휴전 후 북한은 망가진 군사력과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中-蘇의 군사, 경제원조가 절실했기 때문에 외교활동을 中共(지원할 능력이 없었다)과 蘇聯 및 東유럽 동맹국들에 사실상 국한한 이른바 “陣營外交”에 집중시켰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부터 거대한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던 비동맹국들과 연대성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미국과 한국을 고립시켜 한반도의 공산주의 통일을 촉진시킨다는 방향으로 전략을 보충했다. 그리하여 김일성은 1958년에 가서는 *알제리아* 및 *가나* 등과 수교를 했다. 그는 西方諸國에 대한 정책에도 차츰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북한에도 多邊外交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 2537) 1960년도부터는 북한의 非同盟國 지도자 招請외교-비동맹국 訪問·巡訪외교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大使級 외교관계 수립-總領事館 개설이 계속 늘어났다. 비동맹국들에 대한 경제원조도 극히 소액이었지만 시작되었다. 김일성은 周恩來가 제3세계에서 닦아놓은 길을 뒤따라가고, 그가 제창한 “平和共存”의 슬로건을 역설하면서 비동맹국들에 적극적으로 접근했던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1960년 이후로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던 中-蘇分爭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들로부터 다 함께 “경제적 원조”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계속 곤경에 빠져들고 있던 국내의 경제적 조건 때문에 제3세계 나라들에게 최소한의 원조라도 제공하여 외교관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김일성의 능력을 초월하는 일이었다.

1945년부터 1962년 사이에 美-蘇의 核對決을 부추긴 것은 軍備競爭이었다. 1962년 10월에는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발생했다.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소련제 비밀 중거리 미사일이 미국의 코앞의 *쿠바*西部에서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국제적 냉전이 熱戰化하는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었으나 양국의 숨 막힐 듯한 회담 끝에 미사일을 소련이 철거하는데 양보함으로써 해결을 보게 되었다. 超大國

소의 대 분열 때문에 거꾸로 세계에서 고립되어 갔다. 이러한 국제적 화해추세는 김일성의 “남조선혁명”전략을 파탄시키고 있었다. 그의 반미(反美)민족해방투쟁-“남조선혁명”투쟁이 승리하려면 먼저 중-소 두 나라가 반미의 차원에서 하나같이 단결하고, 동(東)유럽의 “사회주의 진영”, 그 밖의 아시아 공산주의 세력(정부, 정당, 게릴라 부대 조직들)이 중-소를 중심으로 결속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은 하나도 성숙되지 않았고 그럴 수도 없었다. 김일성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핵(核)전쟁의 위험을 각오하고 미국과 싸울 나라는 없었다. 김일성은 1960년부터는 중-소의 권력투쟁 사이에서 기회주의적 줄타기 외교를 하다가 거꾸로 고립상태에 빠졌다. 비동맹국들의 북한에 대한 “연대성 강화”니 “혁명적 지지”니 하는 말들은 한낱 허식일 뿐이었다.

또한 김일성은 제국주의 상호간의 모순을 이용한다는 레닌-스탈린주의의 공식에 따라 ‘미(美) 제국주의자’들과 프랑스, 일본 등 그 밖의 ‘제국주의자’들 사이의 “갈등과 모순도 이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상 일련의 방법에 의하여 그가 목표로 삼은 것은 “국제무대에서 미(美) 제국주의를 최대한으로 고립시켜 그들이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 막다른 골목에 빠지도록” 하는 데 있었다.²⁵³⁸⁾

그러한 대업(大業)을 해내기에는 북한은 너무나 작고 빈곤하고 뒤떨어진 나라였다. 이 계약 역시 과대망상적인 탁상공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혁명”을 통한 조국통일 전략은 1964년 이후 계속 연마되어 왔다. 그리고 1971년 이래의 남-북 대화 기간 중에도, 대화가 중단된 이후에도, 포기된 일은 없었다. 그러나 국내외 문제가 모두 김일성의 독선적 계획대로 전개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가 인생의 황혼

들 사이의 긴장과 공포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은 미사일을 핵폭탄의 운반수단으로 하는 戰略核武器의 존재였다. 1969년 캐네디를 계승한 닉슨은 키신저의 보좌를 받으며 蘇聯과의 새로운 관계 수립에 착수했는데 그는 자기의 정책을 공식적으로 “대평프”(detente)라고 불렀다. 소련도 같은 용어를 사용했다. 대평프 문제의 교섭에서 중심은 軍備縮小였다. 닉슨은 교섭을 정력적으로 추진시켜 소련과 타협을 본 후 1974년 7월 “戰略核武器制限交渉”(SALT I)에 조인했던 것이다.

美-中관계에도 비록 표면상 긴장은 고조되고 있었지만 배후에서는 화해의 싹이 움트고 있었다. 1971년 여름 키신저가 극비리에 북경을 방문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 뒤이어 1972년 2월 닉슨의 訪中 때에 발표된 「美-中 共同聲明」(Shanghai Communiqué)은 臺灣 문제만은 미결로 남겨두었으나 두 나라간의 역사적 화해는 기본적으로 합의되었다. 이상 美-蘇의 긴장완화, 美-中の 화해추세는 김일성의 “남조선혁명”의 전략을 파탄시키고 있었다.

2538) 같은 책, p. 94.

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에는 심각한 차질이 노정되어 왔고, 인민민주주의 혁명 형(型) '남조선 해방'에 대하여 보낸 남한의 노동자, 농민, 소시민, 지식인들의 호응은 극소수의 맹종분자를 제외하고는 전무에 가까웠다.

한편 '미제(美帝)를 고립 파탄시키기 위한 국제적 반미(反美)투쟁도 결코 김일성이 바라는 대로만 되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흐루시초프의 대미(對美)타협정책("수정주의"라고 비난)에 불안을 느끼고 있던 그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미(美)제국주의자들"과 무원칙하게 타협하고 그들 앞에 투항함으로써 그들의 "침략정책을 고무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온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약화시키는 해독적(害毒的)인 작용을 하고 있다"고 흐루시초프의 소련을 공격했다. 그리고 "혁명적 맑스-레닌주의의 기치와 반제(反帝)민족해방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아가야 하겠다"²⁵³⁹⁾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중국 측에 가담했던 것이다. 이것은 1964년의 일이었다. 이러한 그의 북경정사(北京傾斜) 정책은 흐루시초프의 수정주의의 파도에 대하여 방파제를 구축함으로써 자기의 극좌적인 전체주의 전력을 수호하려는 조치였다. 그런데 1964년 10월 흐루시초프는 크레믈린의 권좌에서 밀려났고 그 후임의 자리는 브레즈네프가 차지했다.

그런데 브레즈네프는 1968년 8월 체코슬로바키아의 자유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소비에트의 탱크부대를 투입하는 등 폭거(暴舉)를 자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관계는 호전되는 기운을 보였다. 미-소간에 「전략무기 삭감교섭」(SALT I, 1972. 5)이 타결되고 「해전 방지협정」이 조인되었다(1973. 6). 이에 의하여 양국의 평화공존은 정착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미-중의 화해추세 등에 의하여 국제관계의 구조는 바뀌어가고 있었다. 특히 등소평(鄧小平) 등장 이후의 중국은 소련의 "사회제국주의"의 침공에 대비, 4개 현대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 일본, 서(西)유럽에 조심스럽게 접근해가고 있었다. 이렇게 국제적 냉전체제의 소멸 징조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자기의 낡은 교조주의적 혁명정책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행어나 하고 기대하고 있었다.

국제공산주의운동 내의 다원화(多元化) 현상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사실상 부인하고, 각국은 국가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상황에서 세계의 공산주의 정

2539) 같은 책, p. 95.

당들은 *이데올로기*에 있어서는 아직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면서도 실천에 있어서는 뿔뿔이 민족화(民族化)의 길을 달리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환경에 직면하여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포함한 일련의 민족적인 정감을 더욱 열렬히 토로 하면서 세계 대세에다 발걸음을 맞추려 했다. 그리하여 북한은 새로운 민족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는 듯한 인상을 세계에 퍼뜨렸다.

그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계속 역설함으로써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이데올로기*적 명분을 유지하는 것과 아울러 서로 대립하고 있던 중-소(中-蘇)로부터 “형제적 원조”를 얻고자 시도하였다. 요컨대 그의 “자주성”, “애국주의”, “자력갱생”이란 것이 “*부르조아* 민족주의자들”, 그 밖의 각 계파 비(非)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 민족주의와 본질적으로 얼마나 다른가를 입증한 것이었다. 북한에서는 *래닌*의 이른바 “*부르조아* 민족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이것은 민족문제에 있어서… 두 개의 화해할 수 없는 적대적인 슬로건”²⁵⁴⁰⁾이라는 명제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민족-민족적인 것은 더욱 더 역설되어 왔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이것을 민족주의와 엄밀하게 구별하려 했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민족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에 의하여 실천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2절 “우리민족끼리”의 허상(虛像)

“남조선혁명”, 이것을 통한 “남조선해방”은 김일성-김정일의 대남정책의 *알짜요 오매가다*. 그런데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한에서는 한냉(寒冷)한 북(北)녘을 녹인다던 햇볕정책이 거꾸로 남에다 열풍을 일으켜 국가안보의식을, 약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마비상태에 빠뜨렸다. 아무 경계심 없이 자기도취에 빠져 공적(功績)만을 서두르는 각종 대북사업과 인적 교류에 머리가 몽롱해진 사람들은 김일성-김정일 체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안광이 흐려졌다.

그 위에 북의 감정을 자극하면 대화를 망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 당국자들은 물론이고 많은 지식인, 정치인들은 북의 실상을 알면서도 말하기를 꺼려했다.

2540) 『Lenin, Collected Works』, Vol. 20, Moscow, 1965, p. 26.

그리하여 전 세계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온 북한의 세습정권, 인권상황, 사회의 실상 등이 남한에서만은 점점 묵인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서방제국들이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유엔에 상정시키려할 때, 이 운동에 앞장서야 할 한국 정부는 이것을 막는데 급급했다. 2005년 6월에는 「남-북 공동선언」 발표 5주년을 기념하는 '통일 대축전'에 한국 측 민간 대표단(295명)과 당국 대표단(80명), 해외동포 대표단(100명)이 참가했다. 이것은 김일성이 그렇게도 강조해온 통일전선 형(型) "전(全) 민족회의"의 전주곡이다.

전국 "통일전선"의 조직은 김일성 부자(父子)의 숙원이었으나 그 이름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난해함으로 김일성은 그 대신 흔히 "정치협상회의"를 제의했다. 1948년 4월 김일성은 남한의 두 민족주의 지도자 김구-김규식을 평양에서 개최하는 '전(全) 조선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약칭 '남-북 연석회의')라는 이름의 정치협상회의에 초청했다. 회의는 북한 측이 작성한 예정표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모든 제안들은 찬-반의 토론도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전형적인 스탈린식 회의였다. "남-북 정치협상"은 김일성에 의하여 철저하게 우롱당했다. 그러나 공산당의 민족통일전선은 계속해온 평화통일 선전의 막후에서 남침전쟁을 준비해오다가 6·25 기습남침이 일어났던 사실 때문에 그 신뢰를 상실했다. 요컨대 남한의 정치풍토는 통일전선의 운동을 위해서는 불모지대(不毛地帶)나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그 후 반세기가 지난 2000년 6월 15일의 「남북공동선언」 때부터 사정은 달라졌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친(親) 북한 반전운동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북으로부터의 남침전쟁의 가능성(주한미군 철수 후)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북한의 선전원들은 이런 분위기를 포착하여 통일전선 조직의 활성화에 착수했다. 그들은 남-북 공동선언에 들어있는 구절, 즉 통일문제는 나라의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했다"를 들고 나왔다.

'노동당'의 선전일꾼들은 지식인을 "민족통일전선"이라는 말을 알기 쉽게 "우리민족끼리"라는 표현 대신 "민족공조"(民族共助)라는 용어로 바꾸어 불렀다. 이들은 민족공조의 하위 실천개념(下位實踐概念)으로서 소위 '3대공조'(共助)라는 것을 제시했다. 즉 ① 민족 자주공조 ② 반전 평화공조 ③ 통일 애국공조가 그것이다. 이러한 언어의 유희는 간단한 주장을 복잡하게 논리화 한 것으로서, 전체 조선인민은 반미투쟁에

충 역량을 집중하여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2006년을 “자주통일 원년”, “미군철수 원년”으로 설정했다.

2005년 “민족공조”라는 구호가 요란하게 들려오는 가운데 ‘8·15민족대축전’이 서울에서 열렸다. 축전 행사장에는 광복 60주년인데도 “광복절”이란 남한식 용어는 아예 사라지고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만이 펴려있다. 이것도 굴욕의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처사였을까. 북한 측 대표단은 분단 후 처음으로 동작동 국립 현충원(顯忠園)을 참배했다느니, 백범(白凡)기념관을 찾았다느니, 국회를 방문했다느니 하는 보도가 퍼져나갔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남-북간의 긴장은 해소되고 화해의 기운이 무르익어 북한에서는 “남조선해방”전략은 포기되었던가. 겉으로는 잠시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이 잘 되어가고 있는 듯이 보였지만, 그것은 허상(虛像)에 지나지 않았다.

김대중-노무현정권의 대북정책은 일종의 “유화정책”(appeasement policy, 宥和政策)이라는 비판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아왔다.²⁵⁴¹⁾ 김대중-노무현정권의 경우 대북 유화정책이란 북한에다 원조를 퍼주고 그 대가로 평화를 사보려는 정책이 아니면 정권 내의 어떤 대북 추종자들의 음흉한 농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제3자의 어떤 설득, 이권 제공, 동포애에의 호소, 또는 유화정책으로도 김정일의 “남조선해방”에 대한 욕망의 제동을 걸지는 못하였다.

2541) “유화정책”은 군사력으로 자기의 정치적 야심을 실현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잠재적 침략자 또는 침략국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양보하거나 일시적인 타협으로 그들을 달래면서 전쟁의 회피를 도모하는 가식적(假飾的) 대외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16편

자유와 평화에 대한 근본적 장애 : 북의 ‘미 제국주의론’ - 그 구조와 목표

들어가는 말

제1장 • *러닌*의 영향 : 제국주의의 도식화(圖式化)

제2장 • 김일성-김정일의 반미원리주의(反美原理主義)

제3장 • 김정일의 “미 제국주의론”의 자체수정

제4장 • 민족의 평화적 통합(統合)은 가능한가?

제5장 • 북한의 변화에 대하여

들어가는 말

북한군정체제의 붕괴와 한반도의 평화

현재 한반도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저지와 기존 핵무기의 폐기문제를 두고 우리는 민족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물리적 심리적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위국(危局)을 타개하기 위하여 한·미·일·중·러·북한 등 6개국이 중국의 주선으로 제1차 6자회담을 연 것은 2003년 8월 27일이었다. 불안하게 이어져 오던 6자회담은 2009년 5월 2일 북한이 두 번째로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한 후 표류하게 되었다. 2009년 6월 12일 UN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화물 검색을 포함)를 의장성명으로 발표하고 만장일치로 결의안(1874호)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6자회담의 보이코트를 선언하고 핵 연료봉의 재처리 재개에 착수했다. 그 후로 제6차 회담은 열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한반도에는 북한의 강경책에 의하여 두 차례나 전쟁전야의 풍운(風雲)을 방불케 하는 핵 위기가 김일성과 그리고 그의 사망 후에는 김정일에 의하여 조성되었던 것이다. 6자회담에서 당사국들은 북한 핵무기의 연내 “불능화(不能化)” 계획에 합의는 하였지만 그것으로 한반도의 핵 위기는 결코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님이 입증되었다. 왜냐하면 김정일은 국제적 협약 같은 것은 필요하다면 언제나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빈번히 예증(例證)해 왔던 것이다.

한반도의 핵 위기를 국제사회와 한국은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왔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이 나라 핵 위기의 근저(根底)에는 김일성·김정일의 극단적인 “미(美)제국주의”관과 정책이 뿌리박혀 있는 것이다.

독단주의적 사고, 증오의 철학, 배타적 감정, 전체주의적 사상, 그리고 무한대의 권력욕으로 응결된 그들의 “미 제국주의”론은 단순한 민족독립 사상이나 자주의식 또는 반 식민주의 발로(發露) 현상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북한식의 반제국주의는 지난날의 공산주의 중국, 베트남, 일부 제3세계 나라 등지에서 한때 볼 수 있었던 전투적 반미주의가 급속히 소멸하고 있는 세계정세의 변천 속에서 퇴색한 “미제타도”의 깃발을 홀로 휘날리고 있다. 이것은 중남미의 반미운동이나 유럽에서 명멸하고 있는

‘반미감정’의 차원을 넘어서 ‘반미원리주의(反美原理主義)’라고 규정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런 ‘반미 원리주의’는 한국전쟁에서도, ‘남조선 혁명투쟁’과 ‘남조선 해방’의 선동에서도, ‘천리마운동’에서도, ‘남북연방제’ 선전에서도, 남북대화에서도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暗黙的)으로 일관되어 있다. 한반도에서의 핵 위기의 원인은 ‘미제(美帝)’에 관한 역사의 왜곡과 객관성을 무시한, 철저한 편견에 뿌리를 박고 있다. 북한의 ‘미 제국주의’의 관점은 반미정책, 대남정책 및 통일문제의 파악에 있어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해방 전, 후 남-북한에서 고수되어온 “미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 사상과 운동은 물론 스탈린의 세계 정책의 일환이었다. 계보상 스탈린의 “반제국주의”는 레닌을 계승했고, 레닌의 이론은 맑스-엥겔스에서 파생한 것이었다. 그러나 본서에서는 방대한 고전적 맑스주의에 관한 분석은 최소화하고 레닌을 중심으로 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한편 맑스의 경제이론의 초석인 “가치론”-노동가치설, 잉여가치론(剩餘價值論),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등 고전파 경제이론들, 특히 데이비드 리카도는 맑스에 절대적 기여를 했다.²⁵⁴²⁾

2542) J·슈페터는 그의 명저 『資本主義, 社會主義, 民主主義』에서 평하기를 “맑스의 경제학의 참된 이해는 이론가로서의 맑스가 리카도의 제자였다는 것을 이해하는데서 비롯한다… 맑스는 상품가치론(價值論)을 자기의 이론구성의 초석으로 삼았지만, 그것은 자기를 그의 시대 및 후 시대의 일반적 경향에 일치시켰던 것에 불과하다. …맑스의 가치론은 리카도 류의 가치론이다. 리카도, 맑스도 다 같이 모든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에 투하된 노동량에 비례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다 같이 노동량을 노동시간으로 측정하며, 이질적(異質的) 노동을 단일기준으로 환원하는데서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서술했다. 슈페터는 맑스에 섰던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을 “古典派 경제학자들”이라고 불렀다. 슈페터의 설명에 의하면 “古典派 經濟學者” 중에서 저명한 인사는 애덤 스미스, 리카도, 맬더스, 존 슈트아트 밀父子 등이라고 했다. Joshep Alois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Third English Edition, Brothers Publishers, 1949, p. 22, p. 23, p. 75

이러한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연구는 상품의 “가치” “노동가치” “교환가치” “잉여가치(剩餘價值)” “사용가치” 등의 이론으로 발전했다. 맑스는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적 모순의 현상형태를 분석하고 이 모순은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사이의 계급적 대립(투쟁)으로 발전하여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붕괴한다는 결론을 유도했던 것이다. 이상에 관한 논의는 분량의 방대함을 고려하여 생략하고 직접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과 정책에 논급할 것이다.

제1장

레닌의 영향 : 제국주의의 도식화(圖式化)²⁵⁴³⁾

제1절 독점자본주의란 무엇인가

맑스, 엥겔스와는 달리 레닌은 고대 로마의 제국주의나 근대의 나폴레옹 제정을 위시한 여타 제국주의 자세한 분석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그의 초기의 연구 대상은 자본주의 시대의 제국주의, 즉 이른바 '독점자본주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독점 자본론 이론에서부터 논의를 시작코자 한다. 레닌의 정의에 의하면 "제국주의란 20세기에 와서 비로소 도달한 자본주의의 최고의 발전단계"며 이것은 경제적 본질에 있어서는 '독점자본주의'²⁵⁴⁴⁾라고 정의했다. 그의 제국주의론은 독점 자본론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독점자본주의란 무엇인가. 범위를 경제 분야에 국한시킨다면 독점자본주

2543) 공산주의에서의 제국주의 이론은 맑스와 엥겔스로부터 레닌-스탈린-모택동-후르시초프-브레즈네프 등에 이르기까지 1세기 이상의 긴 시대를 통하여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이데올로기의 일부로서 형성되어 왔고 드디어는 김일성에게까지 맥을 이었다. 레닌은 맑스 이후에 나타나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현상들을 분석하여 1916년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로서의 제국주의』라는 책을 썼다. 그는 영국의 자유주의적 경제평론가 존 홉슨(John Hobson)의 『제국주의』와 '독일사회민주당' 내의 반(反) 볼셰비키 맑스주의 경제학자 루돌프 힐퍼딩(Rudolf Hilferding)의 『금융자본론』 등을 원용하여 자기의 독특한 이론을 전개했다. 그의 스승인 독일 맑스주의의 태두이며 사민당의 지도자였던 칼 카우츠크(Karl Kautsky)와는 평생의 논쟁으로서 지적 교류가 없었다. '사민당' 내의 좌파경제이론가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와도 상호 비판적이었으며 대립하고 있었다. 그 원인은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 있었다.

레닌의 『제국주의』는 단순한 경제학 연구서가 아니었다. 그는 20세기의 자본주의의 '최고의 단계', 동시에 '최후의 단계'의 특색을 분석하여 이 단계에서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제국주의 전쟁이 필연적이라는 결론을 지었다. 그의 제국주의 분석은 결코 상아탑의 학문적 이론이 아니라 공산주의 세계혁명의 전략전술의 일환으로써 집필한 것이었다. 그는 생전에 러시아 10월혁명에서 승리(1917. 11)함으로써 소련을 세계혁명의 기지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1953년 3월 스탈린이 사망한 후 레닌의 제국주의 전쟁이론의 원형을 해무기 시대에 적응토록 수정하려는 소련의 흐루시초프와 그 원형을 그대로 고수하려는 모택동 사이에 일어난 논쟁은 중·소 분쟁을 격화시키는데 크게 작용했다.

2544) Lenin, *Selected Works*(이하 LSW), Vol. 1, 1967, p. 772.

이란 독점이 시장을 지배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은 그 빈 잡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핵심은 간명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는 자유경쟁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자유경쟁 시대의 자본주의는 자본의 생존 논리(덩어리가 큰 기업체라야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에 의하여 '생산의 집적'(集積, Concentration of capital)을 유발했고 '생산의 집적'은 그 발전의 어떤 단계에서는 독점자본주의로 진화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생산의 집적에 의한 독점의 발생은 자본주의의 현 발전 단계에 있어서는 일반적, 근본적 법칙이라고 요약 설명했다.²⁵⁴⁵⁾ 레닌은 맑스의 견해에 따라 자본가들이 자본의 축적에 몰두하는 두 가지 동인(動因)을 주장하였다. 첫 번째 동인은 잉여가치(이윤)의 추구다. 즉 이윤을 늘려 재투자함으로써 자본을 더 많이 축적하여 공장과 시설을 대규모화하고,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여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더 많은 노동자들을 수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⁵⁴⁶⁾ 자본축적의 두 번째 동인은 자본가들 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는데 있다. 경쟁에서 유리한 지반을 차지하고 있는 개개의 대(大) 자본가들은 취약한 경쟁상대인 소자본가들을 비정하게 말살한다. 동시에 매개의 자본가들은 다투어 기술을 개선하고 생산을 증대시킨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경쟁에서 뒤떨어지며 "뒤떨어진 자는 경쟁상대에게 정복되고 만다."²⁵⁴⁷⁾ 레닌에 의하면 독점은 이렇게 자유경쟁에서 발생했다. 자유경쟁은 "대규모 산업을 만들어내고 소규모 산업을 쫓아내며, 대규모 기업을 더욱 더 큰 규모의 산업으로 대체했다."²⁵⁴⁸⁾고 한다. 이렇게 자본과 생산의 집적²⁵⁴⁹⁾에서 카

2545) Lenin, *Selected Works*, 1967, Vol. 1, p.688; 레닌은 자유경쟁 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로 이행하기까지의 단계를 독일의 경제학자 포겔슈타인(Dr. Riesser), 라이쎈(Raisser), 리프만(Robert Liefmann) 등의 저서에 의거하여 독점체(獨占體)의 발전을 몇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① 1860년~1870년 대는 자유경쟁이 절정에 도달한 시기였으며, 독점은 눈에 띄기는 했지만 아직 태내(胎內)에 있었다. ② 1873년 이후 카르텔('기업연합'이라고 불리운 독점체)이 널리 발전하고는 있었으나 아직은 예외에 불과했다. ③ 19세기 말과 1900년~1903년에 걸쳐 독점자본주의는 완성되었다는 것이며, "이 단계의 기본적인 특징은 자유경쟁은 사라지고 그 대신 독점의 지배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ISW, Vol. 1, 1967, p. 690.

자유경쟁의 단계가 자본주의가 생산의 급속한 집적과 집중의 과정을 거쳐 독점체를 형성해간 과정에 관한 구 소련학자들의 분석은 앞의 *Politische Ökonomie: Lehrbuch*, Diez Berlin, 1955, pp. 257~262.

2546) 앞의 *Politische Ökonomie: Lehrbuch*, p. 160.

2547) ISW, Vol. 1, p. 745.

2548) 위와 같음.

2549) 고전적(古典的) 맑스주의에서는 '자본의 집적(集積)'(concentration of capital)이란 '자본의 축적(蓄

르텔, 신디케이트, 트러스트 및 이것들과 융합하여 막대한 자본을 조종하는 수십여 개의 은행자본이 출현했고, 이것은 독점 자본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²⁵⁵⁰⁾

자본주의의 자유경쟁은 그 정반대 현상인 자본주의적 독점과 대체되었다는 것이 레닌의 결론이었다.

레닌에 의하면 독점 이전의 시대에는 생산은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경쟁이 지배하고 있었으며 독점체²⁵⁵¹⁾라는 것은 없었다. 이때의 자본주의는 비교적 순탄하게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구상에는 광활한 비 점령지역이 남아 있

積)(accumulation of capital)의 별개의 표현에 불과하다. 구 소련의 『경제학과정』(1956년판)에서는 “자본의 집적이란, 그 기업에서 얻은 잉여가치를 축적한 결과로써 자본의 규모가 커지는 현상이다. 자본가는 자기의 것으로 만든 잉여가치의 일부분을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더욱 더 대자본의 지배자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앞의 *Politische Ökonomie: Lehrbuch*, p. 161.

한편 ‘자본의 집중(集中)(centralization of capital)’이란 몇 개의 자본이 하나의 대자본으로 합당한 결과로서 자본의 규모가 커지는 현상이다. 그 방법은 경쟁 속에서 건디어 내지 못한 중소의 기업을 쓰러뜨려 병탄하는 식, 쓰러진 경쟁상대의 기업을 헐값에 매점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기업에 합병함으로써 자기 수중의 자본의 규모를 크게 만드는 식 등이었다. 이와 같이 “자본의 집적과 ‘자본의 집중’은 소수인의 수중에 거대한 부를 모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앞의 『경제학과정』은 설명한다.

그런데 레닌이 사용한 경제용어, 즉 ‘집적’이니, ‘집중’이니 하는 말의 의미는 맑스의 개념과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킨다. 레닌은 맑스에 있어서 ‘집중’에 해당하는 개념에서도 ‘집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레닌은 ‘집적’이란 용어를 넓은 의미로 사용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2550) ‘자유경쟁 자본주의’가 어떻게 ‘독점자본주의’로 바뀌었는가를 그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했다. “자유무역 및 자유경쟁은… 독점, 투자 지역, 원료 원천지 등등의 장악을 지향하려는 활동과 바뀌었다. 자본주의는 봉건제도와외의 투쟁에서는 제(諸)민족의 해방자였지만,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에서는 제 민족의 최대의 억압자로 변했다. 즉 자본주의는 진보적인 것에서 반동적인 것으로 바뀐 것이다.” ICW, Vol. 21, p. 301.

2551) 독점체 : 구소련의 학자들은 정의하기를 독점체란 “상품의 가격을 비싸게 매겨놓고서 높은 이윤을 얻고자, 하나의 부문 또는 몇 개 부문의 상품 생산과 판로를 장악한 자본가들의 협정 또는 연합체를 말한다.”(앞의 *Politische Ökonomie: Lehrbuch*, p. 258.)고 했다.

① 카르텔(Cartel, 기업연합) : 시장 독점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을 결합시키는 협정, 내지는 협정을 기초로 하여 종적 횡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조직 형태다.

② 신디케이트(Syndicate, 카르텔 중 가장 발달한 것) : 카르텔에 결합된 개개 기업들이 직접 판매하지 않고, 중앙기관을 설치하여 이것이 가맹 기업의 상품의 생산을 할당하고 일괄하여 공동판매 할 때 그 중앙기관을 신디케이트라고 부른다.

③ 트러스트(Trust, 기업합동) : 독점을 목적으로 형성된 기업들의 종적-횡적 결합이다. 카르텔과 다른 점은 기업들이 독립성을 포기하고 새로운 기업으로 결합되는 점이다. 트러스트는 카르텔이나 신디케이트보다 훨씬 더 견고한 자본주의적 독점형태다.

④ 콘페른(Konjern, 기업연대) : 콘페른이란 형식상으로는 독립해있는 기업들이 제휴에 의하여 실질적으로는 거의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는 종합체이다. 이것은 독점의 최고 형태로 간주되어 왔다.

있음으로 세계적 규모의 군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자유경쟁은 자본가들의 생사를 걸고 하는 무자비한 투쟁이었다. 그런 경쟁에서 살아남고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자본가들 사이에서는 '자본의 집적과 집중' 현상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서 일부의 대자본 또는 기업이 출현하게 되었다는 분석이 그의 요약이다.

그런데 독점자본주의 시대가 출현하면서 사정은 근본적으로 바뀌어갔다는 것이다. 즉 과학의 발달에 따른 기술의 진보, 자본의 자유로운 수출, 독점체의 발전 등으로 말미암아 후진적 자본주의 국가(미국, 독일, 일본 등)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선진적 자본주의의 수준을 따라잡고 앞설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각 나라 사이의 경쟁은 더욱 격심해진다. 결국 경쟁국들은 식민지를 탈취하여 세계를 재분할하려는 무력 투쟁을 벌리게 된다.

제2절 전쟁과 평화공존의 문제

레닌은 제국주의, 즉 독점자본주의를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이며 “죽어가는 자본주의”라고 정의했다. 왜냐하면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모든 모순을 극한에까지, 즉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한계상황(限界狀況)에까지 격화시키기 때문이다. 스탈린은 레닌주의를 설명하는데서 이 모순을 ① 제국주의 국가 내부에 존재하는 노동(계급)과 자본(계급)의 모순 ② 제국주의 열강 간의 모순 ③ 제국주의 열강과 그 식민지 또는 종속국가들 간의 모순이라고 공식화 했다.²⁵⁵²⁾ 그중 첫 번째 모순은 제국주의 국가 내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두 번째 모순은 제국주의 열강 간의 불가피한 약탈전쟁을, 세 번째 모순은 제국주의 지배국에 대한 식민지 종속국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이 될 것이라고 예시했다. 그런 맥락에서 “제국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사회주의 혁명의 전야”²⁵⁵³⁾라고 단정했던 것이다.

2552) Bruce Franklin(ed), *The Essential Stalin-Major Political Writings 1905-52*, Grocm Helm London, 1973. pp. 92-93.

2553) LCW, Vol. 22, p. 194.

레닌은 근대 현대 제국주의의 완성기를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로 잡고 그 당시의 일련의 전쟁,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을 소재로 하여 자기의 제국주의 이론을 구성했다. 그는 「맑스주의의 만화와 경제적제국주의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제국주의 전쟁은 그것이 아무리 '민족'을 내세운 '애국주의'로 미화된 것이라 해도 독점 자본가집단들이 원료 공급자-판매시장-투자권의 쟁탈을 둘러싸고 일으키는 침략전쟁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독점자본가들의 전쟁에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조국을 위하여' 피를 흘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다. 제국주의 전쟁에서 독점 자본가들이 '조국 옹호'를 부르짖는 것은 기만이며, 자기들의 전쟁을 정당화하려는 술책이라는 것이다. 이외는 반대로 제국주의 열강에 의하여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를테면 식민지 인민)이 '조국을 옹호'한다는 것은 결코 기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²⁵⁵⁴⁾ 그는 제1차 대전 중 '조국 옹호'의 기만성을 여러번 반복하여 강조하면서 "참된 민족전쟁과 기만적인 민족적 슬로건으로 은폐된 제국주의 전쟁을 구별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리하여 그는 제국주의 강대국의 부르조아(자본가계급)가 세계 지배의 욕망에 사로잡혀 자행하는 전쟁은 반동적이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트는 이러한 전쟁에는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외쳤다. 그 뿐만이 아니다. 그런 반동적 전쟁에서는 "혁명적 계급"은 자국 정부의 패망을 바라지 않을 수 없다. 자국의 정부가 군사력으로 패망해야만 그 정부를 타도하는 일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전국 내의 사회주의자들은 '자국' 정부가 패망하고야 만다는 희망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이러한 행동이야말로 바로 제국전쟁을 내란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 활동방침'에 부합하는 일"일 것²⁵⁵⁵⁾이라고 했다.

이렇게 제국주의 전쟁을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기회로 포착한다는 전술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레닌의 제의에 의하여 "제국주의 전쟁을 내란으로" "제국주의 전쟁에서 짜리 정부의 패배를!"이라는 슬로건이 당에서 채택되었고, 이 투쟁전술은 러시아 '10월혁명'에서 실행으로 옮겨졌던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레닌은 제국주의 전쟁에서 '조국방위'라는 호소가 기만이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조국방어'는 곧 사회주의적 프롤레타리아트와 그들의 해방을 위한 투쟁의 관점에서

2554) 「레닌 選集」 6, 大月書店, 1957年, p. 114.

2555) LCW, Vol. 23, p. 85.

당당하게 옹호하고 정당화했다.

한마디로 *레닌*의 전쟁관은 철저한 계급적 전쟁관이었다. 그는 근대·현대의 독점 자본가들이 일으키는 제국주의 전쟁에는 단호하게 반대했지만, 반면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가 사회주의 방어를 위하여 장차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혁명전쟁은 철저히 옹호했던 것이다.²⁵⁵⁶⁾ *레닌*은 전쟁의 성격이 ‘반동적’이나 ‘진보적’이나 하는 기준에 따라 전쟁을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불의)의 전쟁’의 두 가지로 구별했다. 그에 의하면 고대·중세·근대·현대를 통하여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노예화하기 위하여 자행하는 ‘반동적’ 성격의 전쟁은 ‘부정의의 전쟁’이다. 이에 대해 피억압 계급의 해방을 목적으로 억압자들을 타도하기 위한 전쟁은 ‘정의의 전쟁’이었다. 그는 프랑스 대혁명 당시 소위 ‘부르주아 진보파’가 절대주의와 봉건제도를 전복하며 외국의 지배를 몰아내기 위하여 감행한 ‘민족 해방전쟁’은 진보적 성격의 전쟁이라고 하여 공감을 표시했다.

*레닌*은 1917년 가을에 발표한 논문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군사강령」에서 ‘정의의 전쟁’에는 (1) 제국주의 침략에 대하여 항거하는 식민지·반식민지 민족해방전쟁 (2)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내란(계급투쟁이 발전한 것) (3) 한 나라에서 사회주의 승리를 거두었을 때 (4) 그것을 분쇄하기 위하여 자본주의 국가가 침입해 들어올 때, 이에 대항하는 사회주의의 ‘조국옹호’를 위한 전쟁이 있다고 그 종류를 분류했다.²⁵⁵⁷⁾ 그러면 전쟁이란 무엇인가. *레닌*은 *프러시아*의 군사이론가 *클라우제비츠*의 유명한 정의, 즉 “전쟁은 별개의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란 말을 금과옥조처럼 인용했다. 여기에서 *레닌*은 ‘별개의 수단’이란 것은 곧 ‘폭력적 수단’이라는 주석을 달았다.²⁵⁵⁸⁾ 김일성은 이 말을 약간 슬쩍 바꿔 “전쟁은 그 본질에 있어서 특별한 폭력수단에 의한 어떤 계급의 정책의 연장이다”²⁵⁵⁹⁾라고 자기의 말처럼 정의를 내렸다.

*레닌*은 전쟁의 계급적 동기를 절대화하여 현대(그 당시)의 전쟁을 ‘제국주의 전쟁’과 ‘민족해방전쟁’으로 구분하였다.²⁵⁶⁰⁾ 그런데 중요시해야 할 것은 위에서 언급한대

2556) 앞의 ISW, Vol. 1, pp. 778~781에 자세히 설명.

2557) 위와 같은 책, 같은 면 참조.

2558) 『*레닌* 選集』 5, 大月書店, 1957年, p. 146.

2559) 김일성, “우리의 혁명과 인민군대의 과업에 대하여”, p. 1118.

2560) LCW, Vol. 23, p. 33.

로 전쟁의 성격이다. 어느 집단이 먼저 군사적 공격을 해오고, 어느 편이 방어하고 있는가를 따지는 것은 그에 의하면 무의미한 일이다.

레닌에 의한다면 ‘공격전쟁’과 ‘방어전쟁’에 대한 종래의 구별은 잘못된 것이었다. 식민지 또는 피압박 후진국들(모로코, 인도, 페르시아, 중국 등)이 자국을 억압하는 제국주의 열강들(이를테면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했다면 그것은 ‘정의의 전쟁’이요, ‘방어전쟁’이며 누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는 것과는 관계없이 정의의 전쟁이다.²⁵⁶¹⁾ 이러한 관점에서 레닌은 전쟁의 성격이 ‘반동적’인가 ‘혁명적’인가를 식별하는데서 그 기준을 누가 먼저 공격했는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급이 전쟁을 하고 있는가, 또는 어떤 정치가 전쟁을 통하여 계속되고 있는가 하는데서 찾았다.²⁵⁶²⁾ 다시 그에 의하면 맑스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여 지금의 전쟁이 행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같은 기준에서 본다면 김일성-스탈린-모택동이 공모하여 먼저 도발한 6·25전쟁은 ‘미 제국주의’로부터의 ‘민족해방전쟁’이기 때문에 정치 도의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김일성의 선전을 믿지 않는 세계의 여론을 자기편으로 돌려놓기 위하여 ‘미제와 남조선 괴뢰’가 먼저 공격해 왔다는 허위선전을 휴전 후 반세기가 넘도록 계속하고 있다. 김일성이 ‘미 제국주의’를 정식으로 공격하기 시작한 것은 1947년 봄 한반도의 통일을 가져오기 위하여 열렸던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될 무렵부터였다. 그리고 6·25침략전쟁 발발과 함께 ‘미 제국주의’에 대한 군사공격과 더불어 사상적·이론적 공격을 최대한으로 격화시켰다. 1950년 7월 27일 김일성은 프랑스 공산당 기관지 ‘유마니떼’ 기자의 질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명했다.

...미국 군대들은 조선 인민을 노예로 만들며 조선 인민을 미국 독점 자본가들에게
예속시키기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에서의 미국군대는 침략적 ‘부정의
전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²⁵⁶³⁾
(밑줄은 저자)

2561) 『레닌 選集』 5, 大月書店, 1957年, p. 143.

2562) 앞의 LCW, Vol. 23, p. 33

2563) 김일성, 『김일성 선집』 제3권, (1953년도 판), p. 9.

김일성에게는 제국주의 이론이란 것이 없었다. 그는 ‘독점자본주의’, ‘독점자본가’, ‘정의의 전쟁’, ‘민족해방전쟁’ 등등 *모스크바*에서 쏟아져 나오는 선전문구들을 뒤따라 가면서 외우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 후 ‘주체사상’ 선전의 맥락에서 ‘정의의 전쟁’이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선진계급(노동계급)이 수행하는 전쟁”이라고 했다. 그가 말하는 정의의 전쟁을 분류하면 ‘계급해방전쟁’, 식민지 민족해방전쟁, ‘조국해방전쟁’ 등이 있다.²⁵⁶⁴⁾ 김일성은 ‘부정의의 전쟁’에 대해서도 틀에 박힌 소련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부정의의 전쟁이란 세계의 재분할을 위하여 판매시장과 원료공급지의 투자권을 위하여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진행되는 전쟁이며 근로대중의 혁명운동을 반대하며, 자기의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식민지 및 예속국가 인민들을 반대하여 부르조아지가 수행하는 전쟁입니다.²⁵⁶⁵⁾

‘조국해방전쟁’으로 성격이 규정된 6·25의 한국전쟁은 엄연한 침략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상 김일성의 구분법에 의하여 그것은 ‘정의의 전쟁’으로 되었다. 이러한 전쟁의 구분법을 만들어낸 원조는 물론 *러시아*의 공산주의자 *레닌*이었다. 그런데 그의 전쟁이론은 소련이 망한 후에도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있다. 김일성은 제국주의에 관하여 비(非)체계적이기는 하지만 많은 말을 했다. 특히 휴전 얼마 후부터는 반미투쟁과 연계시켜 전쟁의 본성을 논하곤 했다. 그는 “제국주의가 살아있는 한 전쟁의 근원은 사라질 수 없다”²⁵⁶⁶⁾는 것, 왜냐하면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본성”²⁵⁶⁷⁾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

그는 휴전선에서 북과 대치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표적으로 삼아 “미 제국주의는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흉악한 제국주의며,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²⁵⁶⁸⁾라는 비방선전을 한국전쟁이후부터 핵무기 보유국이 된 지금까지 퍼부어왔다.

한편 독점자본주의 시대에는 자본주의 열강 간에는 제국주의 전쟁이 불가피하고

2564) 위와 같은 책, 같은 페이지

2565) 『김일성저작집』 10권, pp. 448~449.

2566) 『김일성저작집』 3권, p. 189.

2567) 『김일성저작집』 5권, pp. 245~246.

2568) 『김일성선집』 5권, p. 248.

그 결과로서 세계제국주의 전선은 약화되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이 레닌의 비전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그의 이론은 자본주의의 '불균등 발전법칙'이었다. '불균등 발전법칙'은 그의 제국주의 이론의 핵심이었다. 레닌은 이 법칙에 의거하여 혁명은 먼저 일국 또는 수 개국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 다른 자본주의 국가로 파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자본주의 하의 경쟁에서는 개개의 산업부문 또는 기업들과 세계 자본주의 나라가 균등하게(골고루) 발전할 수는 없다. 어떤 기업, 어떤 산업부문은 어떤 나라는 뒤떨어지고 다른 나라는 그것을 앞서게 되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 경제가 불균등하게 발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독점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는 ...이미 세계가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분할이 완료되어 있으므로 재분할을 위한 치열한 투쟁이 일어났다. 그 위에 기술이 전례 없이 발달한 결과로 그 성과를 이용하여 새 제국주의 국가들(일본, 독일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구 제국주의 국가를 앞설 수 있게 되었다.

신흥 제국주의 국가들도 시장과 원료의 공급지로서의 식민지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식민지 재분할을 둘러싸고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서 제국주의 전선은 흔들리게 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하여 격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었다. 그리하여 제국주의 전선의 가장 약한 고리에서 이 전선은 격파된다.²⁵⁶⁹⁾고 설명한다.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은 일견 정연하게 보이지만 역사적 사실에 배치되는 일련의 독단들이 내포되어 있다. 첫째로 그는 제국주의를 독점자본주의와 동일시하였으나 제국주의는 독점자본주의 단계 이전에 출현하였다. 한 예로 영국, 프랑스의 경우 식민제국의 건설을 끝낸 것은 국내 경쟁에서 독점적 집적(集積)의 문제가 아직 거의 일어나지도 않았던 시대의 일이었다. 오직 독일만이 독점적 집적화와 제국주의적 진출이 병행했던 것이다.²⁵⁷⁰⁾

2569) 앞의 *Politische Ökonomie: Lehrbuch*, p. 295에서 구 소련 학자들이 시도한 공식 설명에 의함.

2570) Fritz Sternberg, *Capitalism and Socialism on Trial*, 1951, p. 46.

제3절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타당성 재고(再考)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로 전변했고, 경제적 세력권 쟁탈을 위한 투쟁이 제국주의 열강 간에 대 전쟁을 몰고 왔다는 사실은 레닌의 논증을 기다릴 필요 없이 주지되어 있는 상식이다. 많은 공산주의자들은 레닌을 옹호하기 위하여 열강의 자본주의를 독립적 주체로 보지 않고, 제국주의 ‘세계전선’ 또는 ‘세계적 체제’ 등으로 부르면서 마치 이해관계의 통일이나 완전한 운명공동체인 것처럼 인식하려는 번잡한 논리를 전개해왔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아 일체감(一體感)으로 결속된 제국주의 ‘세계전선’이 존재했다면 제국주의자들 사이에 서로 파멸적인 전쟁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각국 자본주의가 상호 의존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서로 견제하는 경쟁 관계에 있었고, 각자가 고리가 되어 연결되는 연쇄체(連鎖體)를 구성한 일은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서방자본주의 국가들은 서로 싸우지 않고 ‘사회주의’ 소련에 대항하여 장기간 결속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독점자본’을 수호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여기에는 민주주의가치, 주권의 수호, 영토보전, 국민대중의 높은 생활수준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들어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공유하는 비(非) 공산주의적 사회주의 정치세력들까지도 서방의 정치체제와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는데서 제휴하고 있었던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레닌은 자기의 이론과 달리 제국주의 국가들의 노동자들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가담하지 않는 현실에 실망했다. 그는 그 원인을 독점자본가가 식민지 종속국을 수탈하여 노동자의 소수 상층부, 이른바 ‘노동귀족’을 매수하여 이들을 기회주의자로 만든다는데서 그 근거를 찾으려 했다.²⁵⁷¹⁾ 레닌에 의하면 전쟁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서유럽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비교적 진보적인 노동법, 사회법이 제정되었고 반자본주의적 노동조합이 사회주의 정당의 힘을 키워 자본주의 세력과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정치적 권리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다.²⁵⁷²⁾

2571) LCW, Vol. 22, p. 281.

2572) 슈테른 베르크는 평하기를 당시 “노동귀족”으로 불리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유럽 대 공업국들의 노동

유럽 노동계급의 제2차 대전 후의 생활수준의 향상에 대하여서도 레닌의 이론은 들어맞지 않는다.²⁵⁷³⁾ 그러면 후진국 러시아 '10월혁명', 볼셰비키 혁명을 가능케 했던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대전 당시의 러시아에는 산업의 미발달로 말미암아 공업노동자는 극소수고, 농민은 인구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서 맑스가 상정했던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혁명은 일어났고 또한 성공했다. 승리의 원인은 4년이나 계속된 대전이 만들어낸 러시아의 정신적, 사회적 혼란, 위기 상황에 대처할 줄 모르는 지배계급의 위신 상실, 케렌스키가 이끄는 임시 정부의 실정, 부패와 무능, 자제력을 상실한 민중의 소란 등을 들 수 있다.

'10월혁명' 8개월 전에 일어난 2월혁명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정권을 담당했으나 민주주의의 중심세력인 중산계급은 취약하고 자유를 위한 감투정신은 결여되어 있었다. 그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은 이러한 러시아의 여건들을 100% 이용한 볼셰비키(레닌주의자들)의 혁명전술이요 투쟁력이었다. 볼셰비키는 멘셰비키(온건파 사회주의자들)이나 사회혁명당(무정부주의적 농촌 사회주의자들)과 비교하여 수적으로 열세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당 생활의 수련, 규율, 조직력, 선전기술, 투쟁전술, 일사불란한 명령체계에 있어서 월등히 우세했다. 그 위에 적위군(전위대)이라는 무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볼셰비키 혁명이 승리한 주관적 조건들이었다.

요컨대 제정 러시아에서 오랜 혁명운동의 전통과 배경에서 볼 때 극단주의적이고 비타협적이며, 지하조직에 능숙하며 선동에 적극적이었던 볼셰비키는 다른 정파들보다 유리한 상황에 있었다. 10월혁명은 맑스주의의 역사발전 법칙이나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과는 관계없이 레닌의 민첩한 혁명전술, 지도력 등 그의 혁명가적 능력에 의하여 승리한 것이다.

레닌 이래로 공산주의자들은 10월혁명의 승리를 맑스주의의 '역사발전법칙', 특히 레닌의 '자본주의 불균등발전법칙'으로 객관화하여 왔으나 이 '불균등발전법칙'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경제발전법칙이 아니다. 이에 관한 레닌의 이론은 노동계급이 국민

계급 전체의 생활수준이 개선되었던 사실을 근거로 하여 레닌의 견해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었다" 했다. 그리고 레닌이 자기의 제국주의에 관한 저서에서 많은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만 대전 때까지 유럽 대 공업국의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의 상승을 다룬 통계는 생략했다는 사실을 아울러 지적하였다. Sternberg, 앞의 책, p. 46 이하 참조.

2573) 위와 같은 책, p. 201.

중의 대다수를 차지하지 못했던 후진국 러시아에서 볼셰비키가 정권을 장악하고 사회주의 정책을 강행하고 있던 사실을 객관화, 합리화하기 위한 이론에 불과했다.²⁵⁷⁴⁾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론에서 오류, 또는 허위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스탈린 시대에서였다. 10월혁명이 승리하여 러시아에서 소비에트정권이 출현하자 세계는 크게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분열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열악했던 신생 러시아 소비에트정권은 자본주의 나라들에 대하여 극히 실리주의 적이요, 현실주의적 외교정책을 택했다. 평화공존의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과 자본주의 나라들 사이에서는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레닌은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외교적 발언이 아닌 당적 이데올로기의 차원에서는 이점을 솔직하게 공언했다. 1919년 3월 그가 한 유명한 말은 다음과 같다.

...소비에트 공화국과 제국주의 나라들이 장기간 나란히 공존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결국 어느 한 편이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종말이 올 때까지에는 소비에트 공화국과 부르주아 국가들과의 사이에서는 여러 차례 무서운 충돌이 일어나는 일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²⁵⁷⁵⁾

(밑줄은 저자)

다음해인 1920년 12월에도 레닌은 비장한 전망을 발표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병존하는 한, 양자는 평화 속에서 살 수는 없다. 어느 한 편이 종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소비에트 공화국이나 또는 세계 자본주의냐”²⁵⁷⁶⁾라고. 회고전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 소련 소위 ‘사회주의 진영’과 미국을 선두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소련에서는 ‘제국주의 진영’이라고 불렀다.) 사이에서는 냉전이 벌어졌다. 스탈린은 서방측의 군비강화를 저지하려는 전술에서 ‘평화운동’을 세계적으로 벌렸다. 레닌에 의하면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제국주의전쟁은 불가피하다. 스탈린은 “전쟁의 불가피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를 전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²⁵⁷⁷⁾는 것이었다.

2574) 레닌의 러시아 혁명론은 한마디로 프롤레타리아트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할 만큼 공산화되지 못한 후진국 러시아에서 볼셰비키의 정권 탈취와 그 투쟁노선을 정당화하는 일종의 전략이론이었다.

2575) LCW, Vol. 29, p. 153.

2576) LCW, Vol. 31, p. 457.

2577) 『스타-린戰後著作集』, 大月書店, p. 246.

이와 관련하여 스탈린은 실로 기괴한 이론을 제시했다. 즉 전쟁은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간에서 보다는 자본주의 나라들 상호 간에, 이를테면 영국-프랑스와 미국 간에, 또는 서독-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예언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대전 후의 세계에서 자본주의 나라들 간의 모순(경제적 대립)은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간의 모순보다는 실제로는 더 강하여 자본주의 나라들 간의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우선 영국-프랑스의 식민지의 원료와 시장은 미국에 의하여 약탈당하고 있음으로 이 나라들의 자본가는 고이운 확보를 위하여 결국은 미국과 충돌할 것이라고 희망적으로 전망했다.

한편 패전국인 서독과 일본도 현재는 '미 제국주의'에 유린당하고 미국의 점령, "제도"(체제)에 의하여 묶여 있었다. 그러나 어제까지 제국주의 대국이었던 이 나라들이 다시 일어나 미국의 점령 제도를 분쇄하고 자주적인 발전의 길에 나서지 않으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적을 믿는 것과 같다"²⁵⁷⁸⁾고 하면서 미국-서독간의 전쟁, 미국-일본 간의 전쟁을 예언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탈린은 소련과 서방자본주의 나라들 간의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었던 소련학자들을 오히려 반박했다.²⁵⁷⁹⁾ 여기서 스탈린이 진심으로 희망했던 것은 '사회주의' 소련과 '자본주의' 미국 간의 전쟁이 아니었다. 자본주의 나라들 서로 간의 대립에 의하여 자본주의 진영 내부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 진단이 아니라 허망한 꿈이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제국이 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마샬플랜 등 군사적, 경제적으로 선례가 있었던 강력한 동맹국으로 결속되어 있던 사실은 스탈린의 기대가 한낱 환상이었다는 것을 그 후의 역사가 증명했다.

그런데 그의 이상의 이론은 그의 생시에는 세계 모든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만고의 진리로 예찬되다가 그가 사망하자 공산권 안에서도 한낱 휴지가 되고 폐기되고 말았다. 그런데 김일성은 스탈린의 이론에 의거하여 세계혁명론을 펴고 있었다.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과 표리관계에 있는 것이 그의 민족이론이다. 레닌의 민족이

2578) J.Stalin, 앞의 *Selected Works*, p. 243.

2579) 위와 같은 책, p. 242.

론은 학문적 이론이라기보다는 세계 공산주의 운동에서의 전략이었다. *레닌*은 식민지 종속국의 피압박 민족들의 민족 자결권을 부여하여 그들을 제국주의의 질곡으로부터 이탈케 해야 한다는 정책은, 100여 개의 복수 민족국가로 구성되어있던 제정 러시아의 혁명운동에서나 국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운동에서나 다수의 민족성원들의 호응을 받아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 일보라고 인식했다. 또한 식민지 종속국 내 피억압의 독립은 제국주의 국가들을 지탱하고 있는 물질적 힘의 원천을 빼앗아 이 나라들을 괴멸로 이끌 수 있다고 그는 확신했다.

이와 같은 *레닌*의 혁명전략에 의하여 유럽의 소수파 공산주의 운동은 10억 아시아 지역의 피억압 민족의 독립운동과 연결되었다. 그리하여 제(諸) 국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운동은 그 주요 무대를 협소한 선진적 자본주의 협소한 유럽의 노동운동에서 광활한 후진적 동양의 민족운동으로 옮겨갔다. 1920년대에 창립된 '중국공산당'이나 '조선공산당'도 당시 식민지 종속국의 피압박 민족들을 매혹시켰던 *레닌*의 민족 이론 및 실제 정책을 구현한 반제국주의 민족자결주의에 의하여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의한 점은 *레닌*의 민족자결주의는 세계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전략의 극히 중요한 초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민족적 독립, 민족자결 그 자체에다 중국적 기치를 부여한 일이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레닌*주의 민족이론의 정략이 숨어있었던 것이다. 김일성도 1930년대에 중국 공산당 산하 '동북항일련군'의 항일투쟁에 참가했던 시기, 그리고 1940년대 *시베리아 비야츠크*의 야영에서 정치군사 훈련을 받고 있던 시기에 *레닌·스탈린*의 제국주의 이론을 학습했을 것이다. 김일성의 '미 제국주의'론은 *레닌*의 이론을, 그것도 *스탈린*이 내린 해석을 100% 맹신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그의 노년의 사고방식이 입증하고 있다.

스탈린 사망 후 반세기가 지났고 소련이 붕괴한지도 20년을 바라보고 있지만 *레닌·스탈린*의 낡은 제국주의론은 북한에서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다. 아직도 북한의 민족이론에서 고수되고 있는 것은 통일전선 전술이다. 회고해보면 구 식민지의 상당수 민족주의자, 민주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 *레닌, 스탈린* 그리고 모택동의 민족이론의 함정을 간파하지 못하고 그들이 선전하는 공산당 지도하의 통일전선에 가담하였다가 철저히 이용된 후 공산당이 집권한 다음 단계에서는 처참하게 말살되었던

역사적 사실들은, 그들의 민족이론이 보여준 엄청난 비극이다. 통일전선에서 매장된 사람들은 상투적으로 ‘부르쉴라 민족주의자’ ‘우익 사회주의자’ ‘기회주의자’ ‘수정주의자’ 또는 ‘미 제국주의 앞잡이’라는 이름으로 단죄를 받았다.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적인 것’은 용인하되 ‘민족주의’는 단호히 배격해왔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인민민주주의(공산화의 전 단계)이론을 가지고서는 ‘남조선 혁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술을 바꿔 ‘민족’을 유달리 강조하고 종래에는 엄격한 금기로 되어 있었던 ‘민족주의’까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 때부터는 정감적인 ‘우리민족끼리’라는 정치 선전을 대대적으로 벌이면서 ‘외세와의 공조’를 거부하고 ‘민족공조’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민족공조’란 비 공산주의자들이 경계하는 ‘민족통일전선’의 대용어로 되고 있는 것이다.

제2장

김일성-김정일의 반미원리주의(反美原理主義)

북한에서의 미 제국주의론은 해방이후부터 60여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오직 *모스크바*의 공식 이론과 정책상의 주장을 추종하는데 그쳤고 자주적 입장이라는 것을 내세우지 못했다. 김일성이 말년에 발표한 견해들을 보면 그는 '미 제국주의' 반대에 강경했던 *스탈린*에 대해서는 만강의 존경심을 표명했고, '수정주의 노선'에 의하여 소련을 망하게 만들었다는 *후르시초프*와 그 후계자 *고르바초프*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비난을 퍼붓고 격렬한 증오감을 표시했다.

이것은 *스탈린*, *후르시초프*, *고르바초프* 등에 대한 세계의 평가와는 크게 어긋나며 어떤 대목에서는 정반대의 입장에 서있다. 요컨대 김일성은 세계의 여론의 대세에 밀려 죽은 *스탈린*을 찬양하지 못했고 *후르시초프*와 *고르바초프*를 비난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구시대의 흘러간 지도자가 되어버린 시점에서 김일성은 그들을 거침없이 호평(*스탈린*) 또는 악평(*후르시초프*, *고르바초프* 등)한다. 김일성은 1993년 12월 *스탈린*을 다음과 같이 찬양했다.

쏘련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꺾뜨독일을 격파한 강대국이었다. 쏘련이 것처럼 강대한 나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쓰팔린*의 올바른 령도가 있었고, 쏘련 당과 인민이 자기 수령의 두리에 단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쓰팔린*은 제2차 대전에서 독일군이 *모스크바* 부근에까지 쳐들어 왔을 때도 *모스크바*를 떠나지 않고 군대와 인민들을 령도하였으며... 전쟁의 어려운 국면을 수습하고 반공격을 조직하여 적들에게 섬멸적 타격을 안겼으며 쏘련의 력사적 승리를 보장하였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위대한 령도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²⁵⁸⁰⁾

2580) 『김일성저작집』 44권, p. 273.

그런데 스탈린 평가와 정반대되는 것이 흐루시초프에 대한 평가였다. 김일성은 말한다.

스탈린이 서거한 후 흐루쇼프(호루시초프)는 음모적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수정주의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는 《개인미신》(개인숭배)을 반대한다는 구실 밑에 스탈린을 헐뜯고 당(黨)을 체계적으로 약화시켰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이데올로기 교육)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혁명성을 무디게 하였습니다. 후르쇼브 이후의 시기에도 역시 당 사상사업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사람들 속에서는 혁명을 하려는 생각은 없어지고 돈과 별장, 자동차밖에 모르는 부르주아 사상, 수정주의 사상이 자라나게 되었으며 사회에 부패 타락한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타락상이 당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그 사상을 변질케 한 현상을 김일성은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지 않으니 경제건설이 잘 될리 없었습니다. 소련에서는 당이 사상적으로 변질되고 당과 국가 활동에서 주관주의, 관료주의가 심하게 나타나다보니 당이 인민대중으로부터 리탈하게 되고 사회에 대한 정치적 령도를 실현할 수 없게 되었으며 결국은 제국주의자들의 반(反) 사회주의 공세 앞에서 사회주의를 지켜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일 소련 공산당이 당을 강화하고 당원들과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켰더라면 당 안에 혁명의 배신자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소련이 그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²⁵⁸¹⁾

김일성의 위의 스탈린 옹호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멸망 직전까지는 그 원인을 논하지 못했다. 객관적으로 통찰할 때 소련이 망한 것은 사회주의 체제 안에 70년 일당 독재의 병폐가 쌓이고 쌓였다가 밖으로 나타난 결과였다. 그런데 중국은 등소평 이후 수정주의를 넘어 사실상 자본주의로 복귀하여 ‘천지개벽’에 비유하는 놀라운 발전을 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 김일성은 생전에 할 말이 없었다.

김일성에 의하면 “소련이 망하는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은 흐루시초프 때였다”²⁵⁸²⁾

258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93년 12월 8일, 위와 같은 책, pp. 273~274.

2582) 『김일성저작집』 44권, p. 464.

고 그 기원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일성은 1994년 6월 *빨치산* 로동당 당수와 한 담화에서 소련이 망한 원인으로서는 수정주의 관료주의 그리고 사상교양사업의 태만을 들었다. 그러면서 *스탈린*은 격찬하고 소련은 *스탈린* 때처럼 사상교양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고 진단하면서 *호루시/초프*를 첫 번째 망국의 원흉으로 꼽고, “그 후 *고르바초프*가 소련을 제국주의자들에게다 팔아먹었다”고 규탄했다. 김일성에 의하면 공산주의 나라에 민주주의적 자유를 가져오는 자는 매국노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북한에서 개혁·개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김일성은 이와 같이 *빨치산* 로동당 당수에 대하여 자기의 미 제국주의론을 새삼 선전했다. 즉 “지금 미국사람들은 우리를 압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들이 사회주의로 나가고 있는 우리를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고립 말살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²⁵⁸³⁾고.

그러면 김일성의 ‘미 제국주의론’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 남조선은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이며 남조선 집권자는 미국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하수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날 일제는 조선에 총독부를 두고 야만적인 무단통치를 실시하였다면 오늘 미국은 남조선에서 저들의 앞잡이를 내세우고 그를 어르기도 하고 위협도 하면서 신(新)식민지통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자주성도 없는 남조선 당국자들과만 대화를 해서는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조국통일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조선 당국자들을 좌지우지하는 실제적인 주인인 미국사람들과 대화를 하여 조미(朝美)관계를 개선하여야 합니다.²⁵⁸⁴⁾

한마디로 미국은 상전이요 대한민국은 그 괴뢰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문제는 대한민국을 제쳐놓고 자기들과 미국이 협상하여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남한에 눌러앉아 나가려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미국의 한반도 점령을 고수하려는 미국의 목적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분석으로써 설명했다.

...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지 남조선에 그냥 남아 있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북조선)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남조선을 저들의 군사기지로 이용하여 중

2583) 위와 같은 책, p. 462.

2584) 위와 같은 책, pp. 403~404.

국과 일본, 러시아를 견제하려는데 있습니다.²⁵⁸⁵⁾

김일성은 계속하여 미국의 세계의 정치의 목표를 아래와 같이 분석했다.

“미국사람들은 구라파에서는 독일과 프랑스를 경쟁자로 보고 있고 아세아에서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를 위협한 경쟁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조선반도가 중국, 일본, 러시아와 린접하고 있기 때문에 남조선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사람들이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 앉아서 경제이득도 좀 얻고자 하지만 그보다도 남조선을 군사기지로 이용하여 중국과 일본,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더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사람들은 남조선을 맛있는 비계덩어리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물고 놓으려하지 않습니다.”²⁵⁸⁶⁾

김일성의 위의 설명은 마치 19세기 말엽에서 1910년대까지 한반도의 국제관계의 양의를 듣는 것 같다. 미국과 일본이라는 나라 이름을 바꿔 놓는다면... 이런 논조는 대전 후 구-미 열강과 한-일 등에서 흔히 볼 수가 있었으며 김일성의 독창적 견해는 아니다.

그런데 그는 미국과 일-러-중의 경쟁만을 강조하고 그 나라들 상호간의 협력 또는 제휴관계는 깡그리 무시했다. 그가 남한을 미국의 단순한 군사기지로만 간주하고 휴전이후의 오랜 동맹관계를 묵살한 것은 그의 ‘미 제국주의’를 신전을 체계화 할 필요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상의 그의 주장은 그런대로 온건한 표현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반미적 경향이 강한 제3세계 나라를 향하여 토로한 그의 ‘미 제국주의’론은 지극히 선동적이며 완강하다.

그의 나이 거의 60을 바라보던 1968년 10월 그는 『프리즌퍼넬라』지(『3대륙』)에 발표한 글에서 “침략과 약탈을 제국주의의 본성”이라는 것,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제국주의에 대한 온갖 환상을 버려야 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끝까지 싸워야한다”는 것, “오직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견결한 반제투쟁을 강화하여야만 피압박 민족들은 자유와 독립을... 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²⁵⁸⁷⁾ 등등의 말로 선동했다.

2585) 위와 같음.

2586) 위와 같음.

이러한 일반론에서 출발하여 김일성은 미국을 구체적으로 격렬하게 규탄한다. 즉 “미 제국주의는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흉악한 제국주의며 세계 제국주의의 우두머리”(밑줄은 저자)²⁵⁸⁸⁾라고 정의하고 “지구상에는 미 제국주의의 침략적 마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미제의 발길이 닿는 곳에는 인민들의 피가 흐르지 않는 데가 없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온 세계를 자기의 예속 밑에 넣으려는 변함없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²⁵⁸⁹⁾고 규탄했다. 그리고 이러한 미제의 침략정책을 분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음처럼 호소했다.

…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세계의 평화를 수호할 수 없으며 민족적 해방과 독립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승리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반미투쟁은 세계의 모든 인민들이 피할 수 없는 공동의 위업이며 가장 선차적인 혁명사업입니다.²⁵⁹⁰⁾(밑줄은 저자)

그런데 ‘미제’의 세계침략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제국주의에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김일성은 말한다. 그에 의하면²⁵⁹¹⁾ “미제의 기본전략은 큰 나라들과는 될 수 있는 한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대결을 회피하면서 작고, 분열된 혁명적인 나라들과 신생독립국가들은 무력으로 각개 격파하려 한다.” 그리고 “사상적으로 나약하고 혁명을 하지 않으려 하며 제국주의와의 무원칙한 공존만 부르짖으면서 인민들 속에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퍼트리며 제국주의와 사이 좋게 살기를 바라는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사상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여 이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김일성의 이상에서 규탄한 오늘의 ‘미 제국주의’는 1880년대 이후 제1차 세계대전 에 이르는 19~20세기의 통칭 ‘제국주의의 시대’에 펼쳐졌던 상황보다도 훨씬 더 무자비하고 가혹하다. 그렇게 ‘미 제국주의’의 정체가 바로 그러한 것이라면, ‘미제’의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침공을 저지하기 위하여 만든 군사조직이라고 자랑해온 ‘버

2587) 『김일성저작집』 5권, p. 246.

2588) 위와 같음.

2589) 위와 같음.

2590) 위와 같음.

2591) 위와 같음.

르샤바조약기구'의 회원국들(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이 소련이 붕괴하자 앞을 다투어 '미제'가 이끄는 NATO에 가입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나라들이 모두 '미제'에 예속을 바라기 때문이었을까. 또한 '미제'가 그렇게도 흉악 잔인하다면 소련권이 소멸하여 통제가 무너지자 아세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등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계 자본을 끌어들이고, 원조를 받기에 급급한 것은 이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미국의 식민지가 되기 위해서일까. 김일성은 스탈린주의적 분석 방법을 그가 사망한지 40년 후에도 그대로 고수하고 있었다. 김일성의 '미제국주의론'의 근본적 모순은 같은 공산주의자들인 흐루시초프와 모택동의 핵전쟁 논쟁에서 이미 드러나 있었다.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흐루시초프는 제국주의 미국과 사회주의 소련간의 "전쟁은 숙명적으로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왜냐하면 핵무기의 공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²⁵⁹²⁾ 이런 이론은 레닌을 거부하는 것이다. 흐루시초프에 대해 모택동은 "원자폭탄은 종이호랑이"라는 선전 속에서 제국주의와의 핵전쟁 불가피론, 대미 핵전쟁불사론(不辭論)을 내세우면서 흐루시초프 식 평화공존론을 공박했다. 모택동은 "제국주의가 존속하는 한 이 세계에서 전쟁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레닌의 명제(命題)를 글자 그대로 고수했다. 당시 '중국공산당'은 '문화대혁명'의 일대 와중(渦中)에 있었다. 그 여파 속에서 임표(林彪)의 광적(狂的)인 '인민전쟁론'²⁵⁹³⁾이 나와 혼란을 가중시켰다.

한편 1970년대의 인도지나(印度支那)반도에서는 독점자본주의가 없는 다같이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같은 붉은 기만을 휘날리는 나라들 간의 전쟁이 일어났다. 즉 베트남-캄보디아전쟁(1979)이, 이에 뒤따른 중국-베트남 전쟁이 일어났다. 이 전쟁들은 레닌의 이론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중대한 사건들이었다. 중국-캄보디아-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은 레닌의 오류를 공언할 수 없었으므로 공산주의자들이 즐겨 쓰던 문구로써 각각 자기를 정당화했다. 그리하여 교전상대국을 '민족팽창주의(民族膨

2592) 한림대학원 총서 37, 『南北韓 체제의 強國化와 대결』, 1996년 中 저자의 논문 「중·소 대립 속의 북한」, p. 209 이하 참조.

2593) 임표(林彪)는 중국 내전에서 구사한 전략(戰畧)을 세계에다 적용하여 '세계의 농촌' 지역(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으로 '세계의 도시'(미국, 서유럽 등 선진 자본주의 지역)를 포위하여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최종적으로 이끈다는 황당한 전략이었다.

脹主義)’니 ‘패권주의(霸權主義)’니, ‘반동정권’이니, ‘배타주의(排他主義)’니 하는 등 서로가 똑같은 욕설로써 상대방을 비방했다.

1975년~1978년에는 캄보디아에서 3개 정권의 지도자들이 ‘민주캄보디아’ 정권을 수립했었지만 정권쟁탈전에서 승리한 폴 포트(Pol Pot)의 광신적 농촌사회주의 건설 노선과 철저한 평등주의(平等主義)에 의하여 200만 주민이 농촌으로 강제이주 당하고, 농촌사회는 ‘인민공산화(化)’되었으며 집단적 식사, 도시로부터의 공업추방, 가족의 해체와 재편성, 화폐제도의 철폐가 강행되었다. 지옥도(地獄圖)를 방불케 하는 아수라장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사라졌다. 지식인들과 도시주민들은 숙청되거나, 모진 학대를 받았다. 이것은 독점자본주의나 ‘미 제국주의’니 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공산주의’(맑스 레닌주의)가 몰고 온 독선과 독재사상의 결과였다.

이러한 ‘사회주의’의 참상에 대하여 김일성은 변호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에 대해서는 몇해 전에 실로 어이없는 거짓말을 해야 했다.

오늘의 복잡한 정세 속에서도 우리 인민은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 하에서 그 어떤 사회정치 불안도, 생활에 대한 근심걱정도 모르고 다 같이 보람 있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으며 온 사회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고락을 같이해나가는 공산주의적 미풍이 더욱 아름답게 꽃 피나고 있습니다.²⁵⁹⁴⁾

2594) 『김일성저작집』 44권, p. 293.

제3장

김정일의 “미 제국주의론”의 자체수정

제국주의에 관한 북한의 *이데올로기*는 김일성 생전에는 그 부자(父子)가 공유하고 있었다가 그가 사망 후에는 권력과 더불어 김정일에게로 계승되었다. 따라서 그들의 이론은 근본에 있어서는 일치하고 있으며 대타가 있을 수가 없다. 다만 몇가지 문제에 있어서만은 부자간의 이론에는 차이가 있다. 김정일의 이름으로 발표된 제국주의 이론 중 그런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최근년의 변천하고 있는 세계자본주의 동제를 분석한 것에는 김정일이 1987년 9월 25일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했다는 담화 「반제투쟁의 가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이하 「담화」로 부르기로 한다)를 들 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건은 1999년 2월에서 10월에 걸쳐 세 차례에 나누어 그의 발언을 녹음한 기록, 즉 「김정일 발언록」(이하 「발언록」)이다.²⁵⁹⁵⁾ 김정일은 위의 「반제투쟁의 가치…」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 ‘미 제국주의’는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자본주의 세계에서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것은 성장하는 사회주의 세력을 견제하고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침략정책에 더욱 더 매달리게 되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본주의 제국에서의 출현한 다국적 자본의 국제화 추진을 지적하고 “자본주의 나라들의 상호관계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²⁵⁹⁶⁾고 했다.

그러면 그 변화란 어떤 것인가. 제1차~2차 대전은 자본주의 열강들의 격화된 모순과 대립을 폭발시켰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자본의 국제화가 촉진됨에 따라 자본주의 열강은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서로 의존하게 되었다고 한다. 즉 자본

2595) 이 「발언록」의 원문은 찾아볼 수가 없어서 『文藝春秋』(東京), 2000년 12월에 실린 일본어 번역판에 의거했다.

2596) 『김일성선집』 9, p. 23~24.

주의 열강의 관계는 서로 결사적으로 물고 뜯는 관계로부터 서로 결탁하여 협력하는 관계로 바뀐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자본주의 세계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로 볼 수 있다고 했다.²⁵⁹⁷⁾ 그의 이 말은 레닌·스탈린의 제국주의 전쟁이론을 부정하는 말이다.

이렇게 ‘미제’를 중심으로 하여 세계제국주의가 결탁하는 방향에서 재조직화 됨으로써 “파멸에 직면하였던 자본주의는 되살아나게 되었으며 경제 기술적으로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²⁵⁹⁸⁾는 것이다. 이렇게 자본주의 열강이 결탁하여 재편성된 이유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사회주의의 운동, 노동운동, 식민지 민족해방의 양양에서 큰 위협을 느끼면서 사회주의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운동·민족해방운동을 무마시키기 위한 정책이었다.²⁵⁹⁹⁾ 제2차 대전의 결과로 민족해방운동이 양양되고 식민지 체제가 무너지자 제국주의자들은 “보다 교활한 새로운 통치수법과 략탈 방법을 고안해 냈다”고 주장한다. 즉 개발도상국들에 명목상 자주권을 인정하고 소위 “원조”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경제적으로 예측시키며 착취와 약탈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이른바 식민지주의(植民地主義)의 정책이요 방법이였다.²⁶⁰⁰⁾

그러나 그런 방식에 의하여 “자본주의의 본 모순은 결코 해결된 것이 아니며 제국주의 약탈적 본성이 변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단정한다. ‘자본의 국제화’ 즉 다국적기업은 세계적 범위에서 자본주의적 착취를 강화하여 제국주의의 지배권을 보장하는 ‘대독점자본의 존재방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²⁶⁰¹⁾ 다국적 기업 이전에는 자본주의의 모순은 국내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다국화 시대에는 그 모순이 국제적 범위로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종래의 국제경제학자들이 오랫동안 분석한 바로써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회주의를 자칭하는 중국을 포함하여 세계의 많은 개발 도상국가들이 선진자본국가의 자본, 기술을 원조 받는 것을 식민지적 예측이 아니라 경제발전과 독립의 첩경이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해석해

2597) 위와 같은 책, p. 25.

2598) 위와 같음.

2599) 위와 같음.

2600) 위와 같음.

2601) 위와 같은 책, p. 27.

야할 것인가. 그 나라들도 “자립경제” 노선에 매달려 있다가 세계의 빈국(貧國)으로 전락한 북한의 길을 따라야 할 것인가.

김정일은 발달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사회적·계급적 구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현실을 솔직히 인정한다. 그는 말하기를 “오늘의 노동계급은 지난날과 같은 무산계급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 그들이 *맑스·엥겔스*가 잃을 것이란 철쇄박에 없다고 한 왕년의 무산계급과는 다르다는 것을 또한 인정한다. 그렇다면 선진자본주의 사회에서 *프로레타리아* 혁명은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담화에서 사람이 기아와 빈궁에 못 이겨서만 혁명에 나선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²⁶⁰²⁾고 하면서 유산자도 자기의 이상에 따라 혁명에 나설 수 있다는 희망을 비쳤다.²⁶⁰³⁾ 이것은 일종의 도피론이다.

그는 현대자본주의 나라들이 변형하고 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자본주의의 기술적 모순은 결코 해결된 것이 아니며 제국주의 약탈적 본성 바뀐 것도 아니다”라고 한다. 그러면서 “현대제국주의가 임종에 가까워 가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며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것은 역사적 필연성”²⁶⁰⁴⁾이라는 신념을 토로했다. 그의 앞의 말과 뒤의 말 중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정일은 홀로 핵 위기에 대처해 나가야 했다. 1994년 10월 *제네바*에서 조인된 「미·북 기본합의서」에 의한 제1차 핵위기는 지나갔고 한반도는 잠시 소강상태(小康狀態)가 간신히 지속되었다. 그러나 한반도는 비유컨대 언제, 어떤 계기에 의하여 핵(核)폭발의 화염이 분출(噴出)할런지 모르는 거대한 휴화산(休火山)같은 존재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었다. 2002년에 방북한 부시 대통령의 특사 제임스 켈리가 북한측에 대하여 한 공개적 발언, 즉 “북한은 고농축(高濃縮) *우라늄*에 의한 핵개발 계획에 착수하고 있다”는 말이 발단이 되어 소위 ‘제2차 핵위기’가 시작되었다.

이 사건 이전에 김정일은 국제적으로 절망적인 고립상태에 놓여 있었고 경제는 파탄지경에서 허덕이고 있었다. 그런데 김정일은 이 모든 원인을 ‘미 제국주의자들’

2602) 위와 같은 책, p. 34.

2603) 위와 같은 책, p. 35.

2604) 위와 같은 책, p. 32.

의 북조선 압살정책에다 돌리고 미국을 더욱 거세게 비방했다. 그는 99년 2월 4일자
의 「발언록」에서 다음과 같이 미국을 공격했다.

…우리는 세계 반동의 원흉인 미제(美帝)와 그 앞잡이 남조선과 직접 대치하여 혁명
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나라의 통일을 이룩되지 못하고 있다……최근의 (미) 제국
주의자들은 반(反) 사회주의운동을 더욱 악랄하게 전개하면서, 퇴폐적인 부르조아 사상
을 널리 퍼뜨리려고 하며 남조선 당국자(김대중)는 이전부터 꿈꿔온 《흡수통일》을 바
라면서 교류의 간판 밑에 공화국 북반부에다 부르조아 자유화의 바람을 불게 하려고 하
고 있다.²⁶⁰⁵⁾

김정일은 이렇게 깊은 대미불신감에 젖어있었고 김대중을 의심했다. 그는 김대중
이 북한에 대하여 햇볕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자 그를 거명(舉名)하여 비방했다. 즉 김
대중은 “미제의 등에 업혀 반(反)사회주의운동에 음양으로 혈안이 되어있다”는 것이
다. 김정일의 비방은 계속된다. “수령님은 김대중을 민족주의자인 동시에 애국주의자
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하여 그리고 수령님의 사랑과 배려,
동지적 신뢰에 대하여 오늘의 김대중은 배신으로 대답하고 있다. 결국 높은 높은 때
문이다”²⁶⁰⁶⁾ 그러면서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김대중을 우두머리로 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자들은 …조국통일을 위한다는 구실하에
갖가지 형태의 ‘햇볕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공화국을 어지럽히기 위한 기
만정책에 지나지 않는다.²⁶⁰⁷⁾

이상의 말은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이 바라는 식의 반제투쟁을 하지 않는데 대
한 실망과 불신에서 나온 비난이었다. 그런데 그 후 8개월이 지난 뒤에 남북정상회
담이 열렸다. 그 대가로 막대한 량의 원조가 북으로 흘러들어갔다. 그 후부터 김정일
의 입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을 비난하는 말도 칭찬하는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서울 답방의 약속도 깡그리 무시해버렸다. 필경 ‘미제의 앞잡이’라고 비방해온 김대

2605) 앞의 『文藝春秋』誌, 2000년 12월 호, pp. 180~181.

2606) 위와 같은 책, p. 187.

2607) 위와 같은 책, p. 182.

중의 이용가치는 1회성으로 끝났던 것이다. 김일성은 ‘바르샤바조약기구’ 해체 후 미국이 동유럽에서의 군사정책이나 만안(灣岸) 전쟁을 보고 북한도 언젠가는 미국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고 위협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유럽주둔 미제침략군을 비롯한 나토의 전략무기는 우리 공화국의 미싸알에다 조준을 맞추고 있다. ...조선반도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위에 앉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냉전 시기에 미제는 미국 본토와 세계 각 지역에 퍼져있는 전략무기는 주로 ‘소련의 위협’에 대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만약 그렇다면 한다면 소련이 해체된 오늘 미국의 전략무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까. 대국들 사이에서는 서로 전략무기의 조준을 맞추지 않으며, 위협도 주지 않으며, 나아가서 핵무기의 일부를 철폐한다는 합의까지 이루어졌다. 이런 조건에서 미제가 그와 같은 방대한 전략무기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미제의) 그 전략무기의 표적은 우리 공화국이다.²⁶⁰⁸⁾

그러면 ‘미제’의 군사적 공격이 가져왔던 한국전쟁 당시의 참상은 어떤 것일까.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 놈들이 감행한 야수적 만행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미제 침략군 강도놈들은 남조선 인민을 짐승사냥 하듯이 닥치는대로 죽이고, 녀성을 릭욕하고 불자를 강탈했다. ‘앵글로색슨 족’ 우월주의를 제창하는 미제는 우리민족을 ‘열등민족’, ‘하등인종’으로 취급했다. 그 위에 ‘들쥐’로까지 비유했다. 이러한 민족적 모독이 어디에 있는가.²⁶⁰⁹⁾

이러한 극악한 비방은 반세기전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자행하고 있던 미-영에 대한 악선전, ‘귀축미영(鬼畜米英)’에 그대로다. (‘들쥐’ 비유만을 뺀다면) 김정일은 북한에서 노동당정권이 붕괴하면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할 것인가를 구(舊) 소련과 동유럽의 사례를 들어 비교적 생생하게 묘사했다. 다소 길지만 그의 「발언록」을 인용하기로 한다.

사회주의가 무너진 결과, 구 소련과 동구 제국(諸國)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정치적

2608) 위와 같은 책, p. 185.

2609) 위와 같은 책, p. 186.

무권리와 빈궁이다.(논평: 그러나 이곳 주민들은 사회주의시대에도 공산당 간부들을 제외하고는 그런 권리를 누려본 일이 없고 인민대중은 빈궁 속에 있었다.)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한 그들은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고 생활의 밑바닥에서 방황하고 있다.(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일반이 아니라 극소수의 구 특권 지배층이다.) 누구도 그들의 운명을 지켜주고 돌봐주려 하지 않는다.²⁶¹⁰⁾

김정일은 사회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바 그 내용은 본 저자가 목격했던 그 당시 소련 및 동유럽 제국(헝가리 체코 등은 형편이 좀 양호) 광경 그대로다.

돈 없는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있고,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공을 세웠다고 해도 추 풍락엽 같은 운명을 면할 수는 없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시기(제2차 세계대전 때) 피를 흘리면서 싸운 사람들이 귀중품으로 보고 정성껏 보관해온 훈장과 메달을 몇 톨의 돈을 받기 위하여 파는가 하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 사회주의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의 길을 열기 위하여 큰 공적을 세운 과학자, 기술자들이 먹고 살아가기 위하여 다른 나라로 떠나가고 있다.²⁶¹¹⁾

김정일은 이밖에도 “행복했던 어린이들이 구두땀이 통을 메고 길모퉁이에 줄서 앉았거나, 자동차 청소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딱한 형편, 무상치료제의 혜택 속에서, 병 치료에 대한 근심을 모르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병이 나도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고 약 한 봉지를 받지 못한 채 숨을 거두고 있는 것이 보통”이라고 묘사했다. 이 말은 북한의 체제가 망하면 어떻게 된다는 경고였다. 그는 미국의 세계적 군사전략, 미사일과 첨단무기 배치상황,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등 군사문제에 관하여 많은 말을 했지만 이 방면의 연구는 근년 우리 학계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으므로 본 논문에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

끝으로 언급하려는 것은 김정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는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그는 말한다. “오늘, 조선반도에서는 미국과 남조선 통치자의 반 사회주의, 반공화국 책동에 의하여 긴장상태가 격화되어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조성되고 있다”고 그 책임을 의례히 미국에다 돌렸다.²⁶¹²⁾ 그러면

2610) 위와 같은 책, p. 186.

2611) 위와 같은.

2612) 위와 같은 책, p. 191.

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김정일은 김일성의 생시의 상투적인 주장대로 미·북간의 평화협정체결에서 찾았다.

우리나라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조-미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 공화국도 미국도 일시적인 정전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의 위험은 없어지지 않은 채로 있다.²⁶¹³⁾

이런 주장에 뒤이어 김정일은 ‘남조선 당국자’(“친일사대 매국행위를 일삼는 역적”이라고 자기가 규탄하는 김대중)에게 마치 죄인에게 관용을 베풀며 설득 회유하는 식의 고자세 발언으로 끝을 맺었다.

이제부터 남조선 당국자가 전 민족의 기대에 부합되도록 오늘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대결정책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실제의 행동으로 긍정적 변화를 보인다면 우리는 그들과 언제나 만나서 민족의 운명에 관한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협의할 것이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들은 남조선 당국자가 어떠한 자세와 입장을 가지며,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지켜보고 있다.²⁶¹⁴⁾

이런 말은 김정일의 ‘미 제국주의’에 관한 근본적 견해와 연계되어 있음은 물론이요, 그 참된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 독재자의 사고와 정책이 이상과 같이 독선적이고, 완고한 한, 소위 북핵(北核)을 제거하기 위한 ‘6자회담’을 비롯하여,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각급 회담은 빈번히 김정일에 의하여 조롱당하면서 파탄의 위험성을 간신히 면할 수가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김정일은 한-미로부터 최대한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려는 계책을 꾸미고 또한 부분적으로는 성공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책임 있는 정치세력들은 남-북 문제에서 그 어떤 기발한 성과를 초조하게 추구하기에 앞서 반드시 김일성의 ‘미 제국주의 관’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검토 하면서 의연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2613) 위와 같음.

2614) 위와 같은 책, p. 193.

제4장

민족의 평화적 통합(統合)은 가능한가?

제1절 재고 : 민족이란 무엇인가?

남북의 민족통일-민족통합의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1946년 2월에 북한에다 김 일성정권을 수립했던 스탈린의 민족이론을 일별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북조선임 시인민위원회’라고 이름 붙이고 토지개혁을 위시한 일련의 ‘반제반봉건적 민주개혁’을 강행했던 김일성정권이 북한에서의 단독정부의 모태(母胎)였다. 이 정권은 1년 뒤에는(1947. 2) ‘북조선인민위원회’로, 2년 뒤에는(1948. 9)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발전했다. 당시 북한에서는 세계 프롤레타리아 혁명 전략의 일환으로 제시한 레닌-스탈린 ‘민족해방’, ‘민족자결권’의 정책을 반미(反美) 투쟁의 관점에서 선전했을 뿐 아직 일정한 민족이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소련공산당 내에서 민족문제에 관한 최고의 이론가는 스탈린이었다. 그는 벌써 1913년 『맑스주의와 민족문제』라는 제목으로 출판한 논문집에 의하여 레닌으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다. 여기서 그는 민족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 민족이란 사람들의 인종적공동체(人種的共同體)가 아니며, 역사적으로 구성된 사람들의 공동체다... 민족이란 언어, 지역, 경제생활 및 문화의 공통성 속에서 나타나는 심리상태(心理狀態, 민족적성격) 등의 공통성을 기초로 하여 발생한 역사적으로 구성된 사람들의 견고한 공동체다.²⁶¹⁵⁾

스탈린의 이 정의는 10월혁명을 전후하여 소련이 붕괴할 때까지 오랫동안 세계 공산주의자들의 민족이론에서 기준이 되어왔다. 북한의 당(黨) 이론가들은 스탈린을

2615) "Marxism and The National Question," 앞의 *The Essential STALIN-Major Theoretical Writings 1905-1959*, pp.57-60.

글자 그대로 뒤따라가면서 민족이란 “언어, 지역, 경제생활, 문화와 심리 등에서 공통성을 가진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²⁶¹⁶⁾이라고 정의했다. 그런데 스탈린은 민족을 본래부터 있는 영속적인 존재가 아니라 일정한 시대의 산물, 즉 자본주의 시대의 산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유럽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설명하기를 “민족은 일정한 시대의 즉 발흥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의 역사적 범주(範疇)이며, 봉건시대가 해체되고 자본주의가 발전해가는 과정은 동시에 사람들을 각 민족으로 구성해가는 과정”²⁶¹⁷⁾이라고 했다.

이러한 설명은 서(西)유럽 나라들의 역사에서는 대체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으나 자본주의가 출현하기 훨씬 이전에 민족과 민족국가를 형성했던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東北)아시아 나라들에는 들어맞지 않는다. 여기서 김일성은 스탈린이 사망한지 10년이 지난 후인 1964년 1월에야 “조선인민은 핏줄과 언어를 같이 하는 하나의 민족”²⁶¹⁸⁾이라고 말을 약간 바꿨다. 1973년경부터는 조선민족의 공통성에다 동일한 ‘혈통’을 첨가시켰다.²⁶¹⁹⁾ 앞서 1970년경 북한이 추종했던 스탈린의 이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우리민족의 공통성의 형성은 자본주의 이전에 “일찍부터 세워진… 봉건적인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통일국가”의 틀 안에서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스탈린의 이론을 한민족의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했다.²⁶²⁰⁾ 민족형성의 시기와 “혈통”만을 예외로 한다면 스탈린의 민족에 관한 규정은 북한에 계승되어 대부분이 살아있다. 그것은 김정일(金正日)의 입을 통하여 내려진 다음과 같은 규정에서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

민족을 형성하는 기본적 표징(表徵)은 핏줄, 언어, 지역의 공통성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언어의 공통성은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다. 민족을 핏줄과 언어 및 지역의 공통성에 의하여 결합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²⁶²¹⁾

2616) 『철학사전』, 사회과학원 출판사, 1970, p. 256.

2617) 앞의 *The Essential STALIN*, p. 65.

2618) 『김일성저작선집』, 4, 1968, p. 1.

2619) 『정치사전』, 사회과학원 출판사, 1937, p. 423.

2620) 앞의 『철학사전』, p. 256.

여기서 주목할 것은 김일성 시대의 민족의 공통성으로 들고 있던 4개 중, “경제생활” 및 “문화와 심리”(민족성)가 탈락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경제제도에서 남한은 자본주의제도를, 북한은 이와는 대립하는 사회주의체제를 택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에서 있어서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북한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생활”, “문화와 심리”(민족성)라는 공통성은 남북의 민족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이념의 대립

이상 민족에 대한 북한의 관점을 그 배후에 숨어 있는 당략성(黨略性)과 혁명전술을 사상(捨象)한다면 남한이 수용 못할 까닭이 없다. 남북한의 민족은 세계를 통하여 희귀한 단일민족(單一民族)으로써 통일된 한반도에서는 동(東)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서처럼 지역, 종교, 혈통의 차이에 기인한 착잡하기 그지없는 복수민족 간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거의 없다. 한(조선)민족은 언어, 문자, 의상, 관혼상제, 주택양식, 가족제도, 인간적 정서, 음식, 생활습관 등에서는 아직도 변함없는 공통성을 간직하고 있다. 더욱이 동일한 혈통, 친족관계를 절대로 중시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오랜 역사적 전통 속에서 형성되어 온 것이다. 그러므로 외견상으로는 남북 민족의 통일·통합은 극히 용이할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치 이념과 이것이 필연적으로 산출한 정치체제의 문제다.

레닌-스탈린의 정식화(定式化)된 민족이론을 글자 그대로 맹종해 왔던 북한의 민족이론·민족정책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형식은 민족적이요, 내용은 사회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그것은 시종일관 ‘민족자결권’, ‘민족해방투쟁’, ‘민족적자유’ 등을 강조해왔으나, 한편 그 내용은 ‘계급투쟁’, ‘계급혁명’, ‘계급독재’ 등 민족의 계급적 내용으로 관철되어 있다. 그리하여 궁극의 목적은 공산당의 1당독재, 최고권력자의 1인독재 권력을 옹호, 유지, 강화, 확대하는데 두게 되었다. 이에 대해 남한에서는 북한에서와는 달리 지금까지 어느 한 집권자, 또는 당파의 민족관(民族觀)을 유일한 진리로 공인하거나 절대화한 일이란 없었고 있을 수도 없었다. 남한에

2621) 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編), 『金正日略傳』, 1995년에 포함되어 있는 ‘語錄’, p. 151.

서는 유물사관(唯物史觀)의 명제들을 금과옥조로 삼는 경향은 거의 없었지만, 우리 민족 내부에서는 사회적 계급·신분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고 계급 간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事實)들을 당연히 인정한다. 이와 동시에 단일한 민족공동체 안에 엄존하고 있는 비(非)계급적 측면과 초당파적 요소도 아울러 중시한다. 그리하여 통일문제도 당파와 계급을 초월한 민족 공동의 이익, 또는 민족공동체라는 시각에서 고찰하는 것이 전통적인 경향이다.

요전대 남한에서는 민족관 또는 민족이념에 대하여 하나의 해석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그리하여 민족의 통일-통합문제도 여러 시각에서 고찰하고 있으며 북한에서처럼 독재자의 민족이론, 민족정책이 진리의 성역을 쌓을 수는 없는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 날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된 남과 북을 자기들이 독점적으로 지배하겠다는 불변의, 집요한 의지를 단련시켜 왔다. 이것은 “노동계급의 독재”(공산당 1당 독재)를 지향하는 그들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민족통일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접근 방법은 김일성에 의하여 설정되고 김정일에 의하여 계승되고 있는 혁명전략 및 전술 전체의 맥락에서 고찰해야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1956년 중-소분쟁을 기점으로 하여 단일적 국제공산주의가 무너지자 ‘사회주의 진영’ 안에서는 각 민족을 기초로 하여 다원화(多元化) 현상, 즉 급속한 민족화(民族化)의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제시하고 ‘민족의 자주성’, ‘민족의 자유’, ‘민족적 자립경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대주의 반대’, ‘민족허무주의 배격’, ‘민족의식’, ‘민족적 자부심’, 외세의 간섭 없는 ‘자주적 민족통일’ 등등 민족적 정감(情感)과 애국충정을 열렬히 토로해 왔다.

그리하여 북한은 새로운 민족주의를 발전시키고 있어서 남한의 민족주의자들(이들 거의가 자유민주주의 신봉)과 쉽게 제휴될 수 있는 듯한 환상을 퍼뜨려왔다. 그러나 민족문제에 관한 김일성의 사고의 틀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충성하면서 ‘부르윌아 민족주의’에 대한 일관된 공격으로 굳어지고 있었다. 그는 레닌의 이른바 “부르윌아 민족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이것은 민족문제에 있어서 두 개의 화해 할 수 없는 적대적(敵對的) 슬로건”²⁶²²⁾이라는 명제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었다.

2622) Lenin, *Collected Works*, vol. 20, 1968, p. 26.

여기서 김일성은 자기가 신봉하는 사상이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에 속한다고 천명하고,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부르조아 민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배타주의를 배격하며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²⁶²³⁾는 말로 자기와 민족주의와의 비타협성을 명백히 했다. 물론 민족주의들도 어떤 시기에 공동의 적에 대항하기 위하여 공산주의와 정책상 제휴한 일이 있었지만 그럴 경우에도 ‘프롤레타리아 혁명’,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결코 표방하지 않았고 공명하지도 않았다. 이 점에서 민족주의(맑스-레닌주의에서는 이에다 “부르조아”라는 형용사를 붙여 계급적 대립성을 표시해 왔다)와 맑스-레닌주의와는 본질적으로 대립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대립은 곧 정치사상의 대립이요, 원천적으로는 세계관의 대립으로 귀착된다. 따라서 양자의 대립은 전술상 일시적으로 공동전선을 펴으로써 화해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양자의 잠재적 대립성은 정치투쟁-권력투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런 현상은 일제 하(日帝下) 한반도의 항일운동에서도, 해방 후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남한의 민족주의자들과의 관계에서도 너무나 빈번히 나타난 역사적 사실이다.

(나) 민족통일과 통합의 차이

이 문제를 규명하기에 앞서 잠시 ‘통일’과 ‘통합’의 개념에 언급할 필요가 있다. 민족통합이란 주제의 연구는 근년 활발하게 진행되어 학문적으로 그 차원을 높여 왔다.²⁶²⁴⁾ 민족통일은 한 영토 안에다(해외 교포는 예외) 여태까지 분열되어 있던 민족성원들을 하나의 전체로 묶어놓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런 통일의 힘은 무엇보다도 정치력(경륜, 수완, 무력, 경제력, 외교역량 등 포함)이다. 이러한 민족통일은 정치적·법적 통일이며, 민족성원들을 묶는 통일은 결국 제도에 의한 통일이다. 민족통일은 갈라진 민족들이 하나로 합쳐 단일한 국가주권 밑에서 살겠다는 열망이 없을 때는 이룩하기 어렵겠지만, 그런 열망이 없어도 같은 민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무

2623) 『김일성저작선집』, 4, p. 382.

2624) 1999년 8월 한림대 민족통합연구소는 「민족통합의 역사와 과제」라는 *새미나*를 개최했고, 제출된 논문들을 모아 2000년 8월 같은 제하의 단행본을 발행했다. 여기에 수록된 민족통합에 관한 논문들은 이론 수준을 한 단계 높인 역작들이었다.

력으로 통일을 강요할 수가 있다. 이때에 실현되는 통일은 민족성원들의 마음의 내면을 사로잡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형식적이며 외관상의 통일이다.

이에 대해 민족통합은 형식적 민족통합을 실질적 통일로, 즉 민족성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내면적 통일로 승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민족통합은 민족성원들의 일체감(一體感, Einsfühlung), 즉 민족은 “운명공동체”라는 인식과, 혈육의 정(情) 같은 동포애 등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 위에 공통된 생활감정, 문화감각,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무르익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같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민족의식’이 강렬해야만 민족적 통합은 이루어질 것이다. 사회가 경제적 강자와 약자로 확연히 갈라지고 문맹자와 지성인의 차가 현격한 상태에서는, 즉 한 민족 안에 이질적(異質的)인 세 민족 또는 네 민족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민족통합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시간상의 순서로 볼 때 민족통일은 민족통합에 선행(先行)하며 때로는 병진(並進)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아직 민족통일도 안된 이 나라에서 민족통일 후에 올 민족통합의 문제를 미세하게 논한다면, 그럴수록 그만큼 더 공론(空論)이 될 것이다.

남-북 통일의 방법은, 그 본질을 가리우는 연막을 걷어내면 간단하다. 하나는 평화적 방법이요, 다른 하나는 무력에 의한 방법이다. 남한에는 6·25전쟁 직전과 휴전 직후의 한 시기 이승만 대통령이 아무 준비도 없이 빈말로 ‘북진통일’을 주장했다가 “호전분자”로 낙인이 찍힌 일이 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제2, 제3, 제4, 제5공화국에서부터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무력통일을 주장하는 정당은 없었고, 표현과 구체적 방안은 달랐지만 모두가 평화통일을 내세워 왔다. 북한은 6·25남침 전쟁 이전부터 평화통일을 열렬히 주장하고 “남북정치 협상회의”까지 개최(1947. 4)하였으나 그것은 전쟁 준비를 가리우기 위한 연막전선에 불과했다.

휴전 후의 치열한 냉전의 공방 속에서 북한의 기본적 통일 전략을 ‘남조선 혁명’을 통한 ‘남조선 해방’이라는 혁명적-무력적 통일전략이요, 이것과 표리관계에 있는 “연방제” 통일 방안이었다. ‘남조선 혁명’을 통한 조국 통일 전략 전술은 1964년 이래로 더욱 연마되어 갔으며 1972년 남북대화 기간 중에도 대화가 중단된 이후에도 포기한 일이 없었다. 그의 민족통일의 정책의 핵심은 아직 7·4 공동성명이 존속하고 있던 1973년 10월 11일, 김일성이 군인들 앞에서 한 다음과 같은 연설에서 가장 선명하게 요약되어 있다. 이 연설 구절은 너무나 중요한, 그의 본심을 토로한 것임으로

재삼 인용코저 한다.

조국의 통일 문제는 결국 남조선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우리가 도와주어 남조선 인민들이 정권을 쥐어야만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평화통일은 하자고 그저 구호나 불러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에 의하여 남조선에는 앞으로 반드시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인민군대가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만반의 전투준비를 갖추고 있으면 조국의 통일은 더욱 빨리 실현될 것입니다.²⁶²⁵⁾

김일성은 1960년 8월 14일부터 부르짖었던 남북연방제를 198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보충하여 내놓았다. 이때 김정일은 공식으로 중앙정치국상무위원·서기·군사위원회 위원에 선출되었다. 그가 '당중앙 군사위원의 위대한 계승자'로 추대된 것은 벌써 1974년 2월 13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의 일이었다.²⁶²⁶⁾ 남북연방제의 토대는 바로 '민족 통일전선'이며, 이것은 사회적 성분을 가리지 않고 비(非)공산주의 세력을 회유 포섭하여 자기들의 수족으로 만든다. 김일성은 통일전선 확대의 실현을 "민족적 대단결을 이룩하자"는 말로 바꾸어 담화를 발표했다. 이 담화에서 그는 "온 민족이 단결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체적 민족관"²⁶²⁷⁾이라고 민족의 초당적, 초계급적 단결을 호소했다. 그러나 "민족반역자"는 제거되어야 한다고 통일전선의 조직원칙을 설명했다.²⁶²⁸⁾ 그는 여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를 "반(反)통일세력의 민족분열 영구화 책동과 새 전쟁 도발을 파탄케하는 것"²⁶²⁹⁾이라고 판에 박힌 주장을 되풀이했다. 결국 그가 도달한 결론은 "이들을 짓부셔버리기 위하여 여러 형태의 공동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²⁶³⁰⁾고 자기의 독재를 따르지 않는 "매국노들"에 대한 선전포고였던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평화통일이 이룩될 수 있을까?

2625) 『김일성저작선집』, 6, 1973, p. 523.

2626) 앞의 『金正日略傳』, p. 53.

2627) 『근로자』, 제9호, 1991, p. 6.

2628) 같은 책, p. 12.

2629) 위와 같음.

2630) 위와 같음.

제2절 김정일정권 하의 민족통합이 뜻하는 것

한반도 통일은 그 방법이 평화적이건 무력적이건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시기에 찾아올 것이다. 우리 민족 전체가 그것을 열망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그 정당성이 강조되지 않는 때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통일 문제의 해결이 몇 세기 동안을 방치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와 정치체제에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남-북한이 대국적 민족의 입장,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여 기적처럼 실현할 수는 없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일 국가의 국호는 새것으로 바뀌겠지만 그 체제는 북한형(型)의 '사회주의'가 아니면 남한형의 '자유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양자를 원만하게 절충하여 중간형으로 만들거나 이것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제3의 형(型)을 고안해 낼 수는 없을 것이다. 독일, *베트남*, *에멘*의 예가 그것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힘"이 강한 편이 약한 다른 편을 끌어들이어 통일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의 역대 정권이 통일을 논할 때는 항상 안보(安保)문제와 결부시켜 경고하고, 김일성-김정일은 '제국주의자들'이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려는 것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에다 북한을 흡수 통일시키려는 "책동"이라고 비난해 왔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을 흡수통일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하고 햇볕정책을 시행하여 김정일정권과의 화해 협력을 추진해 왔고 드디어는 평양을 방문하여(2001년 6월 13일~15일) '남북공동선언'에 서명했다. 통일의 대로가 뚫리는 듯 했다. 그러나 "유화정책"의 꽃이 피고 있었다.²⁶³¹⁾ 김정일은 본래 햇볕정책을 "이전 소련을 붕괴시킨 미국의 평화적 이행(平和的 移行) 정책의 모조품이라는 의미에서 그(김대중)의 반민족성을 엄중시(嚴重視) 하지 않을 수 없다... 햇볕논리는 본질적으로 대결의 논리며 낡은 시대의 냉전논리이다..."²⁶³²⁾고 맹렬히 비난했다.

'남북정상회담' 후 북한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난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그를 호칭할 때는 '남북공동선언'에 써져 있는 직함 하나만을 예외로 하고는 그저 '김

2631) '유화정책'의 본래의 의미는 "평화를 얻기 위하여 적의를 품고 있는(hostile) 요구에 양보하는 정책"이다. *The Concise Oxford Dictionary of Politics*, 1996, p. 17.

2632) 조명록, "누구의 벗인가-햇볕정책 다시 한번 논함," 『조선중앙방송』, 1999년 11월 11일.

대중 대통령'이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붙이지 않았다. 김 대통령을 국적 없는 대통령으로 취급하고 있던 것이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였다. 북한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남북공동선언」 발표 1주년을 기념하는 보고회에서 양형섭은 김대중 대통령은 아예 거명조차 하지 않고 남북공동선언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견지명의 예지와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발표되었다"²⁶³³⁾고 하고, 또는 "위대한 장군님 덕에 북남수뇌 상봉이 실현되고 아버이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 헌장의 내용이 그대로 구현된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고 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은 정녕 절세의 위인이시며 조국해방의 위대한 태양이시다"²⁶³⁴⁾고 개인 숭배의 꽃을 피웠다.

한편 2001년 8·15에 평양에서 있는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남한대표들이 돌아와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건이 일어나자 그들을 체포한 김대중 정부는 '남조선 파쇼 당국'으로 바뀌었다.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북측 본부'의 2001년 11월 7일자 성명은 다음과 같다.

... 범민족 남측 본부들에 대한 남조선 파쇼 당국의 탄압 만행은 6·15 공동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으로 범민련 조직에 대한 말살행위로 낙인하면서 이를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 남조선 당국은 지금의 시각에도 외세와 한 짝이 되어 동족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통일 애국의 선봉에 서서 힘차게 투쟁하는 의(義)로운 통일운동가들을 철창 속에 가두고 박해 탄압하고 있다.²⁶³⁵⁾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에 결정적 지장은 너무나 많다. 주한 미군의 성격 문제, 선군정치(先軍政治)와 '총대 중시'라는 철저한 군사주의, 김정일에 대한 광란적 우상과, 미-일에 대한 새로운 벼랑 끝 투쟁, 반(反)이성적인 북한의 인권 상황 옹호,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종교적 신념 등 김정일 체제와 정책을 일일이 논할 여유가 없다. 다만 결론적으로 외형적 통일 후에 올 민족의 통합, 즉 민족의 완전한 융화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2633) 양형섭, 『조선중앙방송』, 2001년 6월 14일.

2634) 양형섭, 『조선중앙방송』, 2001년 5월 29일. 6·15공동선언 발표 1주년에 즈음한 '정당·단체 합동회의'에서한 양형섭의 논고.

2635) 『조선중앙방송』, 2001년 11월 7일.

첫째는 반세기 이상의 시간을 통하여 대립되는 성격으로 형성되고 굳어지고 민족성원들을 대립시켜온 *이데올로기*의 분열을 지양한다는 것을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둘째로 남과 북이 각각 이질적인 별개의 국가로 존속해온 조건에서 통일이 되었고 할 때 지역감정, 지역적 성격, 지역적 이해관계는 심각한 지역주의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최악의 경우에는 통일이전의 분리주의를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두 지역에 숨겨둔 무기를 들고 나와 내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요컨대 지역적, 사회 계급적 분열 현상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통일국가 안에서 지배민족과 피지배 민족, 일등 국민과 이등 국민으로 갈라져 분류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로 민족 안의 대중을 지도할 정치·경제·사회 층의 분열은 필연적으로 대중을 분열시킬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끈질긴 민족 동질화 교육이 오랫동안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본국인과 해외에서 귀국한 동포들의 위화감은 보다 깊고 심각할 수 있다.

넷째로는 통일의 과도기적 혼란에서 직업을 잃은 사람, 직장에서 도태된 사람, 직장의 소멸로 실업사가 된 사람에게 어떻게 최소한도의 물질생활이나마 보장하고 취업을 돌본다는 것은 막대한 재정과 치밀한 행정력이 요청되는 세기적인 대사업이 될 것이다. 특히 위협시되는 것은 제대한 대량의 군인들의 생계문제다. 무기를 다룰 줄 알고 군사훈련을 받은 이들이 통일에 대한 환멸의 비애를 느끼고 절망할 때는 어떤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

다섯째로 통일이 되면 사람들은 민족적 감격과 희열 속에서 새로운 삶은 구가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수일이 지나면 최대의 관심은 생계문제, 경제로 되돌아 갈 것이다. 북한의 경우 토지개혁 때 토지를 몰수당한 옛 지주 또는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100% 국유화된 국영기업을 민영화할 때 그것을 매입할 수 있는 재력 있는 기업가는 남한 출신자가 될 것이다. 그 결과는 피땀 흘려 북한의 산업 건설에 동원된 근로자들은 계속 피고용자로 남아있게 되고 외부에서 들어온 자본가들이 공장, 기업체의 주인으로 될 때 사회가 조용하며 민족통합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며 이에 준(準)하는 허다한 사례, 사건들이 속출할 것이다. 생각이 이에 미칠 때 민족통합은 지극히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새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제5장

북한의 변화에 대하여

제1절 역사의 드라마

“변하면 변할수록 옛 모양새 그대로다”—이 말은 프랑스 대혁명 당시 정치정세가 조석으로 견잡을 수 없이 바뀌다가 왕정(王廷)으로 회귀하는 것을 보고,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던 유명한 정치적 격언이다. 그 동안 세계 도처에서는 크고 작은 허다한 변화가 일어났다. 북한에서는 내부의 정치체제는 60년간 변함이 없었지만 남-북 관계에는 외형상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옛 모습 그대로다. 이 땅에도 어떤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큰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은 아마 내심으로는 앞의 프랑스혁명 당시의 정치적 격언을 상기할 것이다. 그러면 북한의 현재와 그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이며, 어디로 갈 것인가.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결국 언젠가는 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는 있다.

남북으로 갈라진 협소한 이 땅에는 바야흐로 핵전쟁의 먹구름이 들어우고 있다. 이 위기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한반도에서는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회구하게 된다. 그러나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격동하는 역사의 드라마는 그것이 한참 연출되고 있는 동안은 미리 종막을 알려주지 않는다. 당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종막(終幕)을 모르는 채, 단지 그때그때의 상황에 이끌려가면서 자신의 주관적 목적을 추구할 따름이다.

오늘의 북한도 바로 그러한 예(예)에 속한다. 1994년 7월 4일 김일성은 사망했다. 그는 그 훨씬 이전부터 자기의 장남 김정일에게 부권(父權)을 계승시켜 사망 이후에 대비해왔다. 이 세습화 정책은 일단 성공했다. 그러나 남-북한은 물론이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김일성 이후의 북한은 과연 변할 것인가, 변한다면 어떤 코스를 거칠

것인가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 추측, 예견해 왔다. 최근에는 권력을 김정일의 3남 정은에게로 넘겨주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요컨대 북한에서는 세습적 독재정치의 드라마는 아직도 막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이 죽은 후에도 ‘조-미기본합의문’²⁶³⁶⁾(‘제네바 합의문’, 1994.10) ‘남북정상 회담’(2000.6), 제1차 6자회담 개막(2003.8)을 전후한 ‘금강산 관광사업’, ‘이산가족찾기운동’, 무수한 ‘경제·체육·문화·인사교류’의 번잡한 진행 등은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세계의 사람들로 하여금 ‘북한의 변화’에 대하여 상당한 기대를 걸고 일시나마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한편 일부 인사들은 약간의 단서를 달면서도 크게 찬동했다. 그러나 그 밖의 회의적인 사람들은 무절제한 대북 ‘피주기’식 원조에 대해 의혹과 우려를 느끼고, 그것을 추진해온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게 비판의 눈을 돌리게 되었다. 그러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2대에 걸친 햇볕정책 이후 북한은 얼마나 달라지고 있었는가 또는 안 달라졌는가.

“만물은 유전(流轉)한다”-이 말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Herakleitos)가 기원전 5세기경에 피력한 고전적 명구(名句)이다. 그의 사상은 수세기 동안 고대, 근세, 근대의 많은 신학자, 철학자들의 논쟁, 사색을 거쳐, 헤겔 철학을 토대로 한 맑스주의의 “유물변증법(唯物辯證法)”사상으로 정리되어갔다. 그러나 흔히 오해하듯이 “변증법적 유물론”이란 맑스, 엥겔스 자신의 호칭이 아니라 제정 러시아의 선구적 맑스주의자 플레하노프(Georgii A. Plekhanov, 1866~1918, 볼셰비키 10월 혁명에는 반대)가 붙여준 이름이었다.²⁶³⁷⁾ 레닌의 만년, 특히 스탈린 통치하에서 맑스주의의 변증법적 사상은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정식화(定式化), 당파화되어 독재권력을 비호하는 이론적 무기로 전락했다가 소련 붕괴 후에는 텃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당시의 해석에 의하면 ‘변증법적 유물론’의 핵심은 비단 ‘자연(외부세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사회·정치제도), ‘정신(사상의식)은 고정 불변해 있는 것이

2636) ‘조-미기본합의문’(1994)의 영어 및 한글 원본은 『한반도 평화체제-자료와 해제』, 통일연구원, 2007년, pp. 42~45.

2637) G. 리히트하임 『마르크스主義』, けすくす書房, 1974, p. 22

청년 맑스는 유물론 중에서도 포이어바흐의 종교적소외론(宗教的疎外論) 비판에 심취하고 있었다. 그 후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불리는 철학적 저서를 펴낸 사람은 맑스의 동지 엥겔스였다. 그러나 그들의 철학을 처음으로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부른 것은 플레하노프였다.

아니며, 그 전체는 부단히 운동, 변화,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고 인식하는 점에 있다.²⁶³⁸⁾ 이러한 공산주의 세계관 자체를 따르다면 북한의 ‘주체사상’, ‘우리식 사회주의’, ‘김정일의 세습권력’ 등도 결코 ‘영생불멸’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 햇볕정책 10년의 정당성·정확성이 입증되기를 기다려온 사람들은 변증법과는 관계없이 북한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는, 변했다느니 또는 변화할 것이다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면 “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논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자연계의 협상이 아니라 사상·정치·사회의 영역에 있어서의 변화다. 현실정치에 있어 변화에는 본질적(本質的) 변화와 비(非)본질적 변화(피상적 변화)가 있다고 본다. 어떤 사물의 수(數)와 양(量)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본질적 변화가 아니다. 1980년 이래로만 쳐도 남-북 간의 교류가 그 건수와 종류, 그리고 문화의 접촉, 생활에서 급속한 증가를 보여 왔다. 우선 북한 주민의 말, 옷차림, 정서, 노래, 머리모양, 사고, 가치관 등 일상 생활문화의 분야에서 일어난 변화가 그것이다. 이런 변화의 현상이 누적되어 나가면 주민들의 의식, 사고, 사상에도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견했다. 과거 동독에 대해 서독(西獨)이, 그리고 동유럽에 대해서 서유럽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밖에도 정치문제에 있어서 북한은 직접적 투쟁에서 임기응변적으로 바뀌는 전술의 변화-인적 교류의 점진적 확대, 경제적-문화적 교류의 선별적(選別的) 허용 등을 실시해 왔다. 「6·15남북공동성명」(2000년) 발표이후 북한은 남한이 제시한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호응, 교예단(씨커스단)을 위시하여 평양의 교향악단, “청소년 예술단”의 서울공연을 허용하고, 서울·평양간의 스포츠 교환 경기, 응원단의 남파, 남한 언론사 사장단의 대거 방북도 허락했다. 더욱이 학수고대해 온 이산가족 찾기에서는 2000년 8월부터 2004년 7월까지 10차에 걸친 방문단교환을 통하여 9천 9백 여명의 이산가족들이 각각 서울과 평양에서 상봉할 수가 있었다.

당시의 통계들을 살펴보면 2003년 1년 동안만 해도 남북 간에는 각종 회담이 37 회나 열렸다. 남-북한의 상호 방문객도 1만 5천여명(금강산 관광객 제외)에 이르렀

2638) 엥겔스는 *맑스*와 더불어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 내용으로 된 해설을 남겼던 것이다.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공상으로부터 과학으로의 사회주의』(1880), 『반(反) 유물론』(1878) 등의 계몽서가 있다. 그러나 이 저작들은 당시의 덜 발달했던 자연과학지식에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오늘에 와서는 학문적 가치가 없다.

다.²⁶³⁹⁾ 또한 “미전향 장기수”가 조건 없이 대거 평양으로 송환되었다.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사업도 큰 붐을 불러왔다. 뽕뽕 얼어붙었던 동(東) 아시아의 차가운 냉전시대(冷戰時帶)에 따스한 봄이 찾아온 느낌이었다. 이러한 해빙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변화였다. 그것은 부인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변화에는 또 다른 측면도 있다. 남한 일부 국민, 특히 청소년들의 안보의식의 급속한 해이현상, 소란한 반한(反韓) 친북(親北) 분자들의 수적 증가, 공공연한 반(反)사회적 가두 투쟁 등등이 그것이다. 이런 현상들도 또한 변화하였지만,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남한 체제의 전복을 목표로 하는 부정적 변화의 싹이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긍정적 변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문제는 심각하다. 우선 정치체제상의 변화는 어떠한가. 1인 독재정치 제도와 그것을 정당화는 정치이념, 다시 말해 정치 이데올로기와 그 중핵(中核)을 형성하고 있는 최고 권력자의 절대화-우상화(‘개인숭배’ 작품) 현상은 바뀌지 않고 여전하다. 북한은 이 면에서는 추호의 변화도 없었음은 물론 오히려 그 억압의 도(度)가 상승, 강화되어 왔다. 한편 대남정책에서 볼 때도 그들의 “남조선혁명”의 전술은 일부 수정(“혁명”이란 용어의 일시 후퇴, 남한의 통치 내용에 대한 비방 축소,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에 대한 공개 비방 자체 등)되고 있었지만 기본 전술의 주요한 부분, 이를테면 ‘민족통일전선’의 조직과 허위 선전 등은 여전히 견지되고 있다. 이명박정권이 전임자들의 대북 유화정책을 비교적 치밀한 현실주의 정책으로 바꿔 나가자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그들을 “북남관계의 단절책동”을 획책하는 “역적 패당”이라고 매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비방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김정일 시대에 와서도 그들이 살아있는 한 북한에서 절대로 바뀌지 않았고 또한 바뀔 수 없는 것은 그들의 통치(統治) 이데올로기다.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 강조되면서부터는 이데올로기라는 세계 공용의 정치용어를 “사상의식”으로 (중국에서는 본래부터 “의식형태”, 한국에서는 흔히 “이념”으로) 번역하여 사용해 왔다. 이데올로기의 특성에다 굳이 설명을 붙인다면 그것은 어떤 개인, 집단, 사회, 특히 정치단체에 특유한 사고의 방식과 그 내용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데올로기는 독재정치에서는 황당무계한 유토피아(북한이 자랑하고 있는 “완전한 민주주의”, “세금 없는

2639) ‘통일부’ 조사자료에 의거. 이하 남-북관계통계도 동일.

세계 유일의 나라”, 근로자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집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주의의 지상낙원” 등)라고 거짓 선전을 해왔다. 또한 독재자의 이상화 (“장엄한 항일무장투쟁”의 신화, “백두산 정기를 타고난” 김정일의 거짓 탄생지 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인류의 태양” 찬양 등)를 구성요인으로 하는 선전을 통하여 전개되어 왔다. 지도자 이상화의 간소한 집약은 한마디로 2001년 1월 1일자 북한 3대 신문의 ‘공동사설’²⁶⁴⁰을 통하여 공식화 되었다. 보도에 의하면 김정일을 “인민의 영도자, 행복의 창조자, 정의의 수호자”라고 극구 예찬하면서 “그를 모시고 새 시대를 개척해 온 것”은 “세기의 행운”이라고 감사했다. 여기서 「사설」이 다짐한 것은 “우리는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인민답게… 우리 리념, 우리 식의 정치체제, 우리 식의 혁명방식을 견결히 옹호 고수하여야 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폐쇄적 수구주의의 고수 선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에 전쟁이 없는 한, 아니 전쟁의 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대화는 있을 수밖에 없으며,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 답답한 상황이다. 남한의 어떤 사람들은 북한의 오늘의 현실을 “진보적”이라고 하여 아직도 동조 또는 맹신(盲信)한다. 그들은 김정일 체제 같은 가혹한 전체주의 체제가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민족적 독립이 보장되는 나라로 변화하여 남-북은 통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수구 반통일분자”, “극우 반동”, “팻쇼 악당”, “친미 사대주의자”라고 부르면서 매도하는 *히스테리*를 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히스테리*는 희대의 대폭군 스탈린의 이상화(“전 세계 진보적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는 소련 공산당의 찬양), 독일 나치즘의 “지도자원리”(독일민족의 “천제적 지도자 히틀러는 세계를 지도할 권리가 있다”는 광신에 대한 망론), 군국주의 일본시대의 “아라히도가미”(“現人神 : 천황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현실세계에 나타나 있는 거룩한 신) 숭앙 등 극좌, 극우적 전체주의에 공통된 병리현상으로 나타난다.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는 곧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며, 이것 이외에 어떤 사상도 결코 용인되지 않는 이른바 “유일사상”이다. 그들은 과거 반세기 동안 “사상교양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一色化)하는 주입교육을 강행해왔다. 교육의 내용에서는 철두철미 김일성-김정일의 신격화(神格化)와, 60년

2640)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지의 2001년 1월 1일자 공동사설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자〉. 같은 날짜 「조선중앙통신」참조.

이상을 계속하고 있는 반미-반한선전과 “남조선 해방을 위한 투쟁”의 선동이 그 핵심이다. 그러므로 김정일 체제의 판에 박힌 낡은 혁명의 *이데올로기*가 바뀌지 않는 한 김정일이 남한과 화해하여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면서 공존해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사실은 김정일 자신의 행동이 여러번 예증해 주었다.

김정일 체제가 존속하는 한 북한의 정치사상과 정치 체계는 바뀌지 않으며 그것이 바뀌지 않는 한 북한정치에서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본질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주체사상’은 북한에 있어서는 결코 단순한 정치적 길치레가 아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세계의 영향력의 침습을 막기 위한 자기 방어의 무기인 동시에 이에 도전할 수 있는 공격의 무기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제2절 세습독재정권에 대한 지원(支援)의 함정

- 불변의 대남 초강경정책을 겪어오면서

김일성 사후 2년의 탈상기를 거쳐 김정일은 노동당 총비서의 자리를 정식으로 차지(1997. 10. 8)하고, 이어 11개월 뒤에는 국방위원장(사실상 국가수반)에 다시 추대되었다. 이로써 “유훈통치” 시대는 막을 내리고 김정일 시대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그리하여 북한 땅에서는 옛 종교의 역사에 비유컨대,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라고 불러주는 창조주 김일성 판(版)의 『구약전서』시대는 끝났다. 이어 김일성의 세습장자인 새 구세주(救世主) 김정일 판(版)의 『신약전서』의 시대가,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유산의 기초위에 무신론적 신정국가(神政國家)의 체제를 펼쳐가고 있다.

김정일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유산이란 간단히 요약한다면(1) 공고하게 구축된 옛날 왕조시대 같은 권력세습제, (2) 절대권위를 획득한 전제군주의식 체제, (3) 난공불락의 현대식 전체주의 통치조직, (4) 강력하고 위협적인 군사력의 건설(핵무기 개발의 능력, 중거리 미사일 개발, 생화학무기의 보유 등), (5) “현대의 미신”으로 야유의 대상이 되었던 “개인숭배” 작품의 정치제도화, (6) 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정되어온 생존 전략과 핵무기 카드를 교묘히 활용하는 “벼랑 끝 외교” 전략과 전술, (7) 특히 국제관계를 분석하면서 미국을 신축성 있게 다루는 외교수완 등을 들 수 있다. 이것

들은 김정일이 받은 플러스 유산들이다.

이와 함께 김정일은 플러스 유산과 표리관계에 있는 마이너스 유산도 물려받았다. 예컨대 (1) 경제의 희생을 가로막는 “우리식 사회주의” 노선, (2) 파탄이 증명되고 남은 ‘중공업 제일주의’와 집단농장제도의 완강한 고수 (3) 광신적이며 비현실적인 혁명사상 만능주의 (4) 동맥경화증에 걸려 완전한 타성에 빠진 ‘당사업 방법’(질식화할 “관료주의”, “명령주의”, “요령주의”, “면중복배” 등)이 있다. 그런 주장의 과잉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으로서 (5) 습성화된 호언장담, 업적과장, 실속 없는 허풍(虛風), 태연한 거짓말 보고, 생리화 된 과대망상증, 대남 욕설의 남발(濫發) 등의 상투화된 병폐를 들 수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노태우정권의 ‘북방정책’ 이래로 김대중의 대북 ‘평화정책’, ‘국민의 정부’ 및 노무현의 ‘참여정부’ 등의 햇볕정책을 통하여 형성된 정책을 표방해 왔다. 즉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각 방면에서 계속 교류를 진행해 나가면 북한은 반드시 변하고 남북한은 점차로 동질화되어 평화통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비전*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오랫동안 벗지 않았던 사상의 투구와 갑옷을 남쪽에서 비춰주는 한줄기 따스한 햇볕 정도로 그것들을 그들로부터 벗길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김정일 체제의 정체를 간파하지 못한 얕은 감상주의, 알팍한 이상론, 공허한 낙관주의, 또는 그 어떤 정치적 도박심리에 빠져있는데서 오는 착각이었다.

소련 붕괴이후 국제정치에서 *이데올로기* 대립의 시대는 급속히 퇴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시대적 조류 속에서 자기들의 독재체제의 기초로 되어있는 자신들의 ‘주체사상’ 체계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지니고 “주체사상”을 엄불처럼 소리 높여 외쳐왔다. 그런 방법은 독재권력 *이데올로기*를 계속하여 주입시켜 지배를 비교적 용이하게 했던 것이다.²⁶⁴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역대정부, 즉 “문민정부”(김영삼), “국민의 정부”(김대

2641) 전체주의 체제에서의 *이데올로기*는 “정당성의 원천이며 지도자의 지배 집단의 사명감의 원천”이라고 J. 린스는 주장했다. 이 말은 혁명초기의 상황에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가 혁명 세력이 관료화-특권화하면 이 말은 들어맞지 않는다. 또한 그는 같은 전체주의라고 해도 “*맑스주의*처럼 지적정밀도(精密度)가 높은 *이데올로기* 쪽이 순하고 정서적이며 계다가 지적 견고성이 낮은 *파시즘 이데올로기* 보다는 합리적인 동시에 복합적이라고 우위에다 놓았다. 그러나 “주체사상”이라는 *맑스주의*에는 이 말은 맞지 않는다.

중), “참여정부”(노무현) 모두가 남북 간의 화해·협력·교류를 통하여 북한을 변화시켜 개혁과 개방의 길로 유도한다는 것을 통일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아왔다. 이것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대로다.

그러나 평양은 “개혁”이니 “개방”이니 “변화”니 하는 말만 나와도 병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왔다. 한국에서 말하는 개혁, 개방, 변화란 궁극적으로 북한의 정치민주화와 경제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여 내세우는 정책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오래 전에 (예컨대 1992년 1월) 이에 대해 썰기를 박았다. 그는 다당제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사상의 자유”, “정치에서의 다당제”, “소유의 다양화”(토지, 공장 등 생산수단의 사유 허용)를 전면적으로 반대했다. 그에 의하면 그런 것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는 단언하기를 “다당제 민주주의를 허용하면…계급의 원수들과 반동들이 머리를 쳐들고…로동계급(공산당의 대용어)을 내쫓는 데로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²⁶⁴²⁾

남북의 핵 위기상황에서 화해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수주의자들까지도 북한에 경제원조를 제공하고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들과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북한사회를 내부로부터 개혁, 개방케 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이것은 ‘문화대혁명’의 소란을 수습한 중국 덩소핑의 개혁노선, *베트남*의 ‘도이 모이’(쇄신)정책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들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남한 당국자들의 햇볕정책이란 “실현될 수 없는 망상 중의 망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방법은 “제국주의자들의 음모”라고 규탄했다.

“... 현대 제국주의의 악랄성(惡辣性)은 ... 한편에서는 제재의 몽둥이로 다른 나라를 굴복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달콤한 말로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 것, 이것이 미제가...쓰는 상투적 수법이다. ... 제국주의자들이 엽불처럼 외우는 개혁타령은 사탕 발린 독약과 같은 것이다.”²⁶⁴³⁾

북한의 사고가 이렇게도 완고하고, 개혁을 사갈(蛇蝎) 같이 싫어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을까.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래

2642) 김정일 ‘담화’, ‘사회주의의 역사적 경험 우리당의 총로선’, 『로동신문』, 1992년 2월 14일자.

2643) 1998년 9월 17일자 『로동신문』 론설, 「자립적 민족경제 로선을 끝까지 관철하자」

로 김대중은 정경 분리의 원칙을 내세워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이론은 정경분리 원칙이란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에 있어서 경제는 정치하부구조에 불과하다. 김대중정권이 경제적 지원을 한다고 해서 김정일은 감격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았다. 남조선에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화해도 협력도 할 수 없으며 조국통일은 실현할 수 없다고 김정일은 압력을 가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초기에 내세웠던 주장들, “안보의 튼튼한 기초위에서”라거나, “엄격한 상호주의”나, “투명성 보장”이니 하는 언약들은 점차로 자취를 감췄다.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한 남한의 대북 유화정책에 따라 김정일에게 계속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자 국내외의 여론은 “평화를 돈으로 사려하는 정책”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가해왔다. 남한이 거액의 물자를 퍼주면서 받은 그 대가란 북으로부터의 무장공작원 침투, 잠수정 침입, 북방한계선의 무단 통과 등이었다. 김정일은 2000년 6월의 정상회담 직후 외국기자들과의 회견석상에서 “통일은 내가 마음먹은 때에 한다”고 오만방자한 발언을 하는데 서슴치 않았다.

그 후에도 한-미 공조체제를 강조하는 우리 정부의 각료들에 대해서는 “反(반)민족적, 반통일본자”라는 낙인을 찍었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발표 이후부터 북한은 김대중 정부에 대한 직접적 비판을 중단했다. 그것은 김정일이 돌연히 평화의 사도(使徒)로 변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그동안 김정일이 여러 갈래의 남북회담을 지속 또는 단절시키면서 한국정부를 농락하여 얻어낼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얻어내자는 전술의 변화 때문이었다.

북한은 김대중 정부가 김정일의 서울 답방(答訪)을 마치 가뭄에 단비 기다리는 듯이 몹시 흥분해하는 서울 측의 심리상태를 철저하게 이용했다. 그리하여 남한을 위협(威壓)하는 수법을 통해 자기의 권위를 세계에 선전하고, 아울러 답방의 대가(代價)를 톡톡히 올리려고 했던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때 세계 도처의 많은 사람들은 치밀하게 계획된 김정일의 ‘깜짝쇼’를 TV에서 보고 놀랐다. 일반 주민들이나 외국인에게는 수수께끼로 되어있던 이 “위대한” 은둔의 “장군”이 대중 앞에 모습을 보인 것이다. 두 정상을 환영하는 연도의 인파는 37만명이나 되었다고 평양은 선전했다. 그런데 그는 ‘6·15 남북공동성명’에서 김정일이 서명한 서울 답방의 약속을 그는 지키지 않았다. 이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욕하는 행위였다. 그의 답방 약속

의 이행을 부탁하기 위하여 2003년 1월 27일 평양을 방문한 임동원 대통령 특사를 이틀이나 기다리게 하였다. 둘째 날 그는 “장군님이 지방 현지도에 가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만나 뵈 수 없습니다.”는 통고를 받았다. 임동원 특사는 큰 충격을 받고 문전축객(門前逐客)의 처지가 되어 서울로 돌아왔다.

이 사건은 김정일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의 단적인 기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의 대북 원조는 늘어만 갔다. 1995년에서 2003년 초까지 한국정부의 원조액은 총 5억3496만 달러(5,553억 원)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민간단체 차원의 지원까지 합치면 총 7억8천436만 달러(8,500억 원)나 된다.²⁶⁴⁴ 중진국인 한국으로서 힘에 겨운 거액의 원조를 북에다 퍼부어 왔지만 북한은 달라지지도 않았고 남북 관계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거꾸로 김정일정권은 남쪽을 노리는 미사일의 생산과 핵무기의 개발에 열을 올리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기를 계속 격화시켜왔던 것이다.

김대중-노무현정권은 여전히 햇볕정책을 자화자찬해 왔다. 그런데 김정일의 선전원들은 남한 집권층이 “남의 옷을 빌려 입고 다니는 꼴”이라고 야유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은 “주체의 옷”, “자유 의 옷”, “조선의 옷”을 입고 사는데 남조선 당국자들이 입은 옷은 미-일 상전이 말들어준 “사대 매국의 옷”이라고 멸시조로 풍자했다. 이것은 재미로 하는 단순한 풍자가 아니다. 그 안에는 그들의 대남정책에 대한 소위 “혁명적 사상공세”라는 선전 문구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 일절은 다음과 같다.

“... 햇볕논리(論理)는 본질에 있어서 대결의 논리이며 낡은 시대의 냉전논리다. ... 남조선이 사대매국의 옷을 벗지 않고서는 조선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없으며 조선 사람의 체모는 갓출 수 없다. 사실 이러한 상대와 함께 민족을 논할 수 없고 나라의 통일도 논할 수 없다.”²⁶⁴⁵

2644) 한국정부 통계. 이상의 계수에서는 95년도 쌀 지원(支援)(15만t)을 포함한, 차관 형식의 지원된 '06년' 식량지원(옥수수 20만t) 및 쌀 지원(40만t)을 제외.

2645) 1999년 11월 11일자 「평양방송」 「조평통 서기국」이 발표한 글. 그 날짜 「조선중앙통신」 보도.

제3절 '강성대국(强盛大國)의 논리

이상과 같은 김정일의 입장을 과거 김일성의 입장과 비교해볼 때 과연 변한 것이 있는가.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수다한 경제협력·사회·문화 교류협력·인도적 분야 협력을 위한 회의가 “평화”의 이름으로 남북에서 교대로 열렸고, 일련의 선언문, 합의서 등에 서명했다.²⁶⁴⁶⁾

그런데 그 “평화”의 내용은 일별만 해도 놀랄만하다. 그러면 남북관계에는 평화, 협조 공동 번영, 민족의 동질화를 지향하는 변화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었는가. 그간의 남북대화와 교류의 홍수 속에서 북한이 은밀히 진행해온 것은 *미사일*과 핵무기의 개발이었다. 핵폭탄과 그것을 운반하는 수단인 *미사일*은 민족의 전멸을 자초할 수 있는 가공할 무기다. 핵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던 1993~94년에만 해도 김일성은 세계의 여론이 떠드는 북한의 핵개발을 극구 부인해 왔다. 물론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 중에 능청맞은 거짓말의 압권(壓卷) 한 부분을 소개한다.

“미국이 자꾸 우리가 핵무기를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미국 사람들과 담화하면서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필요도 없고, 그것을 만들 능력도 없다.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어 무엇 하겠는가. 미국이 핵무기를 1만개 이상 가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한 두 개 만들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웃기겠는가.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어서 같은 조선 사람들끼리 죽일 내기를 하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²⁶⁴⁷⁾

그러나 7년 후에 그의 아들 정일은 선언했다. “우리는 자위(自衛)를 위하여 핵무기를 만들었다. 우리의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자위적 핵 억지력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오늘의 현실은 강력한 힘만이 정의를 지키고 진리를 고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²⁶⁴⁸⁾”고, 결과적으로 김일성-김정일 부자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군사력 발전을 시키고자 거의 모든 것을 희생시켜 왔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강성대국”(强盛大國), 정확하게는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건설이

2646) 2007년 10월의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상세한 기록은 『북한연감』(2008년판), 연합뉴스사, ‘특집’ 참조.

2647) 『김일성저작선집』, 1944, p. 468.

2648) 『조선중앙방송』, 2005년 2월 10일자.

다. 강성대국이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98년 8월, 즉 벌써 10여년 전의 일이다. 그 첫 신호가 곧 미사일의 개발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광명성(光明星) 1호”의 발사였다. 북한에서 “강성대국”이라는 것은 일반적 의미의 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주의적 “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이라고 그들은 정의한다. 이러한 선전용 개념들은 김일성 생존 시부터 강조했던 주장들을 김정일에 와서도 그대로 계승하여 압축된 표현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

“강성대국”의 중심은 군사력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일도 강대한 군사력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로부터 “총대사상”이란 것이 나왔다. “총대만 강하면 천하대적이 덤벼들고 그 어떤 평지풍파가 닥쳐와도 두려울 것이 없으며 강대한 군력(軍力)의 비호 밑에 우리 공화국은 영원히 승승하고 강성해질 것”이 북한의 선전이었다.

김정일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힘은 곧 군대다. 이런 현실을 이론적으로 공식화한 것이 “선군정치(先軍政治)”, “선군혁명사상”, “선군후로사상(先軍後勞思想)” 즉, 군대가 혁명의 앞에 서고 노동계급은 뒤따른다는 의미의 군사 최우선주의다. 김정일이 군대를 절대화한 슬로건에는 “군대는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란 말이 있다. 즉 군대=당=국가=인민이란 ‘4위 1체’라는 공식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북한체제가 과거에는 전례가 없었던 내용의 신(新)군사주의로의 변질현상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북한의 변화는 초창기에 스탈린 체제를 거친 후 정통적 공산주의 이론을 이탈하여, 신 군사주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잠정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논급한 바와 같이 북한도 변할 수 있고, 독재자의 자의에 따라 부분적으로 변했던 실례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체제 전반의 본질적 변화는 아니다. 남-북 교류가 한창이던 시절 남한에서는 쌍방관계에 큰 변화가 오면 북한 내부도 곧 변할 것이라는 어느 정도 낙관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이 있었다. 김정일은 북한의 질적 변화를 내심 희구해 마지않는 당원들을 행하여 “나에게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²⁶⁴⁹⁾고 단호하게 경고를 보냈던 것이다. 그런데 남한의 상당수 국민들은 남북관계가 잘 풀리면 핵전쟁의 위기를 넘겨 평화통일의 길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하고 은근히 기대해 왔다. 당연한 바램이었다. 그러나 김정일 자신의 바램은 달랐다. 그는 언젠가 선언하기를 “나의 통일관은 본질에 있어서 무력통일관”이라고 단언하면서 “원수들과

2649) 2000년 9월 카드섹션 3호.

반드시 한번 싸워 결판을 내야한다”고 장담했다. 그의 말을 계속되었다.

…지금 일부 군인들은 정세 변화에 한눈을 팔면서 적(敵)과 평화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 이런 것이 점점 자라면 적을 적으로서가 아니라 벗으로 여기는 청맹관이 되며 나중에는…순식간에 먹힐 수 있다.²⁶⁵⁰⁾

김정일의 사고가 이렇게 완고한 한,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은 거의 절망적이라는 예감을 금할 수 없었다. 북한의 본질적 또는 근본적 변화는, 대중조직과 군의 정책노선의 변화가 김정일의 1인 지배체제와 1당 독재의 악습의 역사를 끝장내던가(“위로부터의 개혁”) 또는 북한사회가 부분적으로나마 “밑으로부터의 개혁”, 즉 정책변경(예컨대 남북간의 비정치적 상행위의 자유허용, 이산가족 찾기의 극대화, 주민들의 자유로운 여행 허용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가는 대중적 욕구불만이 폭발하여 반드시 권력은 붕괴하고 말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정치적 지배층에 널리 퍼져나갈 때 비로소 그 가능성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정책변경의 가능성은 핵무기 문제에 있어서도 거의 마찬가지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 보았됐자 국제적 고립만 심화시키며, 자기 파멸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도 없고, 오히려 화(禍)만 자초할 것이라는 위험성을 절실히 깨달을 때만 *리비아의 가다피*처럼 핵을 포기할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에게 아직 그럴 가능성이란 전무하다. 2006년 10월 9일 김정일은 제1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 6차에 이르는 ‘6자회담’(2003. 8 시작)에 대표를 보냈다. 이 장기간의 회담을 통하여 북한이 보여준 것은 비핵화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여실히 입증한 사실이었다. 그러다가 2009년 4월 5일 감행한 장거리 로켓 발사가 ‘UN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의하여 맹렬한 비난과 제재의 경고를 받자 ‘6자회담’은 사실상 무산되고 말았다. 미국의 오바마 새 행정부와 김정일 사이에 긴장이 격화되는 가운데 북한은 5월 25일 종내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사태를 절망적으까지 악화시켰다. 이것은 그들의 ‘벼랑 끝 외교’가 이제 초위기에 다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²⁶⁵¹⁾

2650) 북한군 내부 교육용, 『학습참고자료(병사, 사관용)』, 주체 89년 판을 참고.

2651)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의 상황은 《조선일보》, 2009년 5월 26일자 A5, A6 참조.

회고컨대 2003년 2월에 출범한 노무현정권은 김대중정권의 햇볕정책을 이어받아 “평화 변영정책”이라고 지칭하고 적극적으로 대북 화해와 평화 통일정책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부시 정부의 이라크 파병에 동조하여 협력함으로써 평양으로부터 “북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움츠러들었다. 이로써 새 북-미관계는 상당한 지장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보다도 북한의 핵 국가 선언은 서울-평양의 당국 관계에도 일대 지장이 되었다. 김정일은 남-북 쌍방이 서로 비방하지 않기로 한 약속에 따라 노무현정권을 직접 비방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한-미 공조를 단절하고 “민족공조”로 돌아오라고 계속 선전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서해교전(西海交戰)을 도발하는가 한편 경의선-동해선의 연결을 위하여 남-북의 관리지역 내의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 등에 협력도 했다. 즉, 강-온 전술로 노무현정권을 농락하려 했던 것이다.

한편 노무현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군사적 합의를 이루기만 하면, 북한은 “망국적 처사”라고 비방하고 “미제 침략군의 철수”를 호령했다. 요컨대 “미제”를 공격함으로써 노무현 정부를 간접적으로 비방하는 방법을 구사하고 있었다. 요컨대 김정일정권은 자기들의 정책을 남쪽이 바라는 개혁, 개방, 자유, 인권존중, 통제완화, 화해, 평화 공존의 방향으로 결코 바꾸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민족 공멸의 위기를 예고하는 핵무기를 계속 개발해왔다. 한-미 측이 발의하는 그 어떤 회담이나, 설득이나, 경제 원조의 제공 등이나 수교의 손짓으로서도 결코 포기하려들지 않을 것임을 보여왔다. 이 점을 망각한 한국-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평화통일정책, 국제사회의 평화제의 등은 결국 좌절되고 말았다.

결론적으로 일언한다. 북한의 변화에 관해 국내외에서 많이들 논의하고 있지만, 북한의 변화는 남한의 변화와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 한반도는 통일신라 이후부터만 언급하더라도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하고 세계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으로 통합되어 동질적 민족 문화권을 형성하면서 1천300여 년 동안을 같이 살아왔다. 완전히 갈라져 산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불과 60여 년 동안이다. 그런 나라가 영구히 분단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통일된다. 그 과정에서 남한의 변화는 북한에 영향을 미치고 북한의 변화는 남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남-북이 언제까지나 단절된 상태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남한이 자유와 평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정의와 인권이 신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그 영향력은 반드시 북한 땅으로 스며들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관계 당국자들은 남으로부터의 영향력의 파급을 차단하는 각종의 역선전 장치와 물리적 폭압 수단을 마련해 왔음으로 남한의 대북 영향력 파급은 그렇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남한이 단념하고 통일운동을 포기한다면 그 정치세력 무관심 지역의 지대는 결국 북한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북한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시적 기회는 있다. 그것은 곧 김정일의 자연사를 포함하여, 어떤 계기로 그가 퇴진할 때에는 그의 부자가 구축해놓은 체제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아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공정히 보아 시간문제다. 정치권력의 세계에서는 영원한, 난공불락의 독재아성이란 역사상 존재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민족통일이 어떤 자동적 변화와 법칙에 의하여 저절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문제는 인간의 의지다. 앞날의 통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우선 강건한 정신을 가진, 그리고 견고한 자위력을 가진, 높은 도덕성을 가진 민족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당면한 시대적 임무라 할 것이다.

찾아보기

- 인명 색인
- 사항 색인

찾아보기

■ 인명 색인

가

강건(姜建) 289, 357
 강경선(康景善) 96
 강경애(姜敬愛) 191
 강달영(姜達永) 114
 강량옥(康良燭) 663
 강량호(姜良好) 19
 姜미하일 1089
 강반석(康盤石) 962
 강상호(姜相鎬) 111
 강석주(姜錫柱) 1175, 1197
 강성산(姜成山) 1141, 1143
 강신태(姜信泰) 289
 강우규(姜宇奎) 101
 강위 290
 강유위(康有爲) 138
 姜進 122
 江靑 943
 게오르규·데지(G.
 Gheorguiu-Dej) 750
 季雲 792
 季淸 291
 고경흠(高景欽) 452
 고평수(高光洙) 115
 고단디엠(Ngo Dinh Diem) 588
 고르바초프(Mikhail S. Gorbachev)
 88, 89, 90, 91, 311, 401, 413,
 425, 833, 930, 942, 976, 1071,
 1072, 1105, 1118, 1275, 1318,
 1320
 고명자(高明子) 115
 고무라 주다로오(小村壽太郎) 150
 고물카(Wladyslaw Gomulka) 351,
 724, 738, 750, 933, 971, 1095
 고영한(高永翰) 665
 高元(또는 高圓) 207
 고이허(高而虛) 189, 190, 210
 고준석(高峻石) 105 119, 196,

198, 295
 고지마 유키치(小島晋治) 136,
 137
 고창범(高昌範) 32
 고틀발트(Klement Gottwald) 351,
 376, 385, 388, 399, 724, 732,
 1095
 高平 187
 高赫 553
 고흥신(高豁信) 215, 222
 공현영(孔憲榮) 254, 256
 곽제기(郭在弼) 101
 구리노(栗野) 153
 구보다(久保田) 587
 瞿秋白 164, 849
 권대형(權大衡) 122
 권득주 1232
 권애라(權愛羅) 94
 권영벽(權永壁) 297
 권오설(權五嵩) 113
 권오직(權五稷) 115, 122
 권창옥(權昌郁) 297
 권태석(權泰錫) 449
 그로자(Petru Groza) 374
 그리고리노프(Grigorinov) 24
 金 미하일 98
 金 아파나시 98
 紀登奎 943, 945
 壽石福 348, 864
 김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金
 Alexandra Petrovna) 24
 김 에브게니
 에브게니에비치(김영웅) 12
 김경석(金京石) 289
 김계관(金桂寬) 1175, 1218, 1222
 김계홍(金啓洪) 266
 김관웅(金寬雄) 190
 김광진(金洸鎭) 339
 김광협(金光俠) 289, 295, 357,
 553
 김구(金九) 170, 368, 450, 451,
 521, 675, 676, 717, 718, 923,
 924

김규식(金奎植) 92~94, 177, 450,
 451, 1297
 김근(金槿) 195, 197, 216
 김남식(金南植) 406, 451, 452,
 464, 490
 김단야(金丹冶) 33, 94, 108, 113,
 115
 김달현(金達鉉) 106
 김대준(金台俊) 359
 김대중(金大中) 601, 609, 1007,
 1076, 1079, 1146, 1149, 1153,
 1154, 1158~1161, 1163~1166,
 1169~1172, 1181~1183, 1187,
 1191, 1192, 1256~1264, 1268,
 1270, 1274, 1283, 1285, 1287,
 1298, 1328, 1331, 1339, 1340,
 1343, 1345, 1348, 1350, 1351,
 1355
 김덕영(金德泳) 452
 김도만(金道滿) 553
 김도희(金道熙) 170
 김동명(金東明) 115, 118, 195,
 196, 300
 김동삼(金東三) 170
 김동천(金東天) 266
 김두봉(金斗奉) 359, 390, 819,
 865, 967
 김두용(金斗鎔) 926
 김두진(金斗鎭) 113
 김두정(金斗禎) 122
 김락준(金洛俊) 104
 김립(金立) 24, 28, 37
 김만겸(金萬謙) 33, 96~98
 김만선(金萬善) 199
 김명시(金明時) 115
 김명식(金明植) 106, 107, 109
 김명하(金明河) 682
 김문거(金文舉) 222
 김문섭 295
 김문형(金文亨) 266
 김병로(金炳魯) 109
 김병연(金炳淵) 705
 김봉환(金奉煥) 191

김사국(金思國) 104, 107, 108,
 114, 194
 김삼룡(金三龍) 122
 김상덕(金尙德) 189
 김생(金生) 939
 김성수(金性洙) 450, 451
 김성욱(金成昱) 1181
 김성주(金成柱) 210, 352
 김성주(金聖柱) 273
 김세연(金世淵) 105, 115
 김세용(金世鎔) 450
 김소리(金篠履) 189
 김수한 1079
 김순기(金舜基, 金順基) 207
 김승일(金勝一) 1080
 김승학(金承學) 187, 189, 201
 김승화(金承化) 21, 24, 207, 348
 김시현(金始顯) 93
 김약수(金若水) 97, 98, 104, 109,
 111, 114
 김연주(金鍊珠) 602
 김연철 1200
 김열(金烈) 348
 김영남(金永南) 1118
 김영삼(金泳三) 1076, 1079, 1143,
 1144, 1148, 1149, 1158, 1159,
 1164, 1182, 1183, 1187, 1260,
 1268, 1287, 1348
 김영선(金永善) 18
 김영일 1205, 1207, 1208, 1209
 김영조 1007
 김영주(金英柱) 601, 604, 609,
 826, 993, 997, 1058
 김옥균(金玉均) 140
 김용구(金容九) 129, 132, 135,
 136, 142, 145, 149, 156, 330
 김용범(金鎔範) 357, 364~366,
 457, 464, 470
 김용원 93
 김웅(金雄) 819
 김원경(金元慶) 93
 김원봉(金元鳳) 101, 451
 김윤호 291

김을규 819
 김응섭(金應燮) 199
 김응순(金應洵) 342
 김이대(金履大) 189
 김일(金一) 108, 977
 김일(金日) 289, 357
 김일룡(金日龍) 553
 김일선(金日善) 280
 김일성(金日成) 3, 4, 5, 37, 80,
 88, 100, 120, 210, 260~262,
 267~280, 282~305, 334~338,
 343, 344, 348~360, 364~369,
 381, 382, 386, 390, 392~394,
 396~399, 415, 429, 440, 450,
 456~459, 462~471, 473~511,
 515~524, 526~569, 571~588,
 591~593, 596, 597, 602,
 608~610, 615, 617~620, 622,
 624, 626, 628, 629, 632~634,
 636~641, 643~645, 647~655,
 658, 663, 667~671, 673~675,
 683, 687~692, 696, 697,
 700~704, 708, 710~718, 721,
 722, 738, 755~759, 808~820,
 822~829, 864~882, 884~887,
 889, 891~893, 896~904,
 908~914, 916~918, 923~929,
 933, 950~1007, 1011~1022,
 1025~1029, 1031~1035,
 1037~1045, 1047~1068,
 1073~1078, 1080, 1082~1114,
 1116~1128, 1133~1139,
 1141~1146, 1148~1150,
 1152~1154, 1156, 1163, 1169,
 1171, 1183, 1186, 1187, 1197,
 1202, 1229~1231, 1233~1255,
 1265~1267, 1271~1274,
 1278~1282, 1289~1297, 1301,
 1303, 1308~1310, 1315, 1316,
 1318~1325, 1327, 1329,
 1331~1339, 1342, 1343, 1346,
 1347, 1352, 1353
 김재묵 1156

김재민(金在民) 266, 381
 김재봉(金在鳳) 97, 99, 113~115
 김재욱(金宰旭) 348, 864
 김정명(金正明) 120, 173, 174,
 185, 195, 197, 200, 201, 206,
 211, 217, 230
 김정숙(金正淑) 984, 996~997,
 1000, 1001, 1011
 김정은 1343
 김정일(金正日) 5, 395, 440, 502,
 503, 507, 529, 533, 566, 641,
 692, 962, 967, 968, 984,
 993~1007, 1011~1013, 1034,
 1036, 1057, 1063, 1066, 1068,
 1075, 1081, 1084~1086, 1110,
 1141, 1146, 1149~1154,
 1157~1159, 1161~1164,
 1166~1172, 1178, 1180~1187,
 1189, 1191, 1196~1199, 1202,
 1208, 1210, 1212, 1217,
 1220~1222, 1244, 1247, 1248,
 1250, 1255~1258, 1260, 1262,
 1264~1268, 1270~1276,
 1279~1286, 1289, 1296, 1298,
 1301, 1318, 1325, 1327~1331,
 1333, 1335, 1338~1340,
 1342~1356
 김조이(金祚伊) 115
 김종명(金鍾鳴) 456
 김종범(金鍾範) 200
 김종진(金宗鎭) 191
 김종필 1079
 김좌진(金佐鎭) 19, 177, 181,
 183, 185, 186, 188, 189, 191,
 201, 212, 213
 김준연(金俊淵) 115
 김준엽(金俊燁) 12, 19, 23, 28,
 92, 97, 104, 105, 107, 111,
 117, 118, 173, 189, 195, 196,
 277, 280, 359, 787
 김집안(金輯安) 190
 김찬(金燦) 104, 108, 111, 113,
 114, 115, 199, 200, 211, 217

김창만(金昌滿) 283, 359, 810, 925
 김창봉(金昌鳳) 19
 김창수(金昌洙) 122,
 김창순(金昌順) 5, 9, 12, 19, 23, 28, 34, 92, 104, 105, 107, 111, 117, 118, 173, 189, 195, 196, 277, 280, 326, 330, 357, 359, 365, 457, 473, 865, 875,
 김채룡(金榮龍) 357
 김채준(金采俊) 680
 김책(金策) 289, 357, 457, 928
 김철(金喆) 197, 216
 김철(金澈) 92
 김철수(金鐵朱) 114, 115, 119, 122, 198, 199
 김철훈(金哲勳) 25, 34, 118, 195
 김철희(金哲熙) 271
 김지명(金治明) 109
 김지정(金致廷) 122
 김태국(金泰國) 296
 김태연(金泰淵) 93
 김태희(金泰禧) 598, 599, 600
 김하구(金河球) 118, 195
 김하석(金夏錫) 34
 김하석(金河錫) 98
 김학만(金學萬, 金學萬) 19, 114, 122
 김한(金翰) 106, 107, 108
 김한길(金翰杰) 231
 김혁(金赫) 273
 김현희(金賢姬) 1080, 1081
 김형직(金亨稷) 268, 277, 961, 962
 김홍선(金弘善) 199
 김홍집(金弘集) 141, 146, 148, 149
 김희산(金希山) 201
 까가노비치(Lazar M. Kaganovich) 49, 884, 941
 까라한(Lev M. Karakhan) 7, 186, 237
 까메네프(Lev B. Kamenev) 931,

942
 까베(Etienne Cabet) 409
 칼레진(Alexei M. Kaledin) 13
 케렌스끼(A. Kerensky) 5
 꼬로보프 682
 꼬르닐로프(Lavr G. Kornilov) 13
 코스토프(T. Kostov) 685, 738
 코시긴(Alexei Kosygin) 543, 753, 754, 907, 908, 912, 915
 콜차크 13, 14, 16, 17
 쿠리코프 1089
 크라뽀트킨(Krapotkin) 146
 키로프 49

나

나니마스 292
 羅瑞卿 872, 889
 나용균(羅容均) 93
 나중보(羅中保) 183
 나지(Ferenc Nagy) 375
 洛甫 851
 남대관(南大觀) 192
 남만춘(南萬春) 98
 남일(南日) 348
 남찬순 1156
 남창일(南昌一) 284
 네루(Pandit Jawaharlal Nehru) 898, 1134, 1293
 네차예프(S. G. Nechaev) 102
 노무현(盧武鉉) 1076, 1146, 1149, 1172, 1181, 1182, 1187, 1191, 1192, 1194, 1221, 1298, 1343, 1345, 1348, 1349, 1351, 1355
 노영상(盧永祥) 162
 노이만(Heinz Neumann) 164, 165, 850
 노태우(盧泰愚) 1076, 1138, 1155, 1158, 1260, 1262, 1348
 니시자와(西澤) 181
 닉슨(Richard Nixon) 593, 594, 595, 914, 1104, 1109, 1110, 1115, 1116, 1294
 羅登賢 265

다

段祺瑞 161, 162, 163
 唐繼堯 162
 唐聚五 250, 252, 253, 258
 戴秉國 1196
 대원군(大院君) 141, 148
 덜레스(J. F. Dulles) 544, 1134, 1141
 데니킨(Anton I. Denikin) 13, 14, 16, 17
 獨孤丘 189
 동기룡(董起龍, 董欽) 200
 董長榮 267
 두브체크(Alexander Dubcek) 905, 1232
 두진제프(Vladimir Dudintsev) 942, 943
 두흠스끼(Dukhovskii) 10
 드골(Charles De Gaulle) 906
 鄧小平 440, 788, 831, 911, 913, 934, 936~940, 943~947, 976, 994, 1021, 1026, 1072, 1102, 1149, 1230, 1234, 1262, 1276, 1282, 1295, 1319, 1349
 鄧穎超 945
 디미트로프(Georgy Dimitrov) 374, 384, 399, 497, 723, 724, 726, 739, 740, 741, 747, 750, 752, 756, 983
 프까체프(P. N. Tkachev) 102
 프라이닌(I. P. Trainin) 728, 730, 733, 734, 747, 748, 762, 770
 트로츠키(Leon Trotsky) 445, 459, 931, 1022, 1023

라

라살르(Ferdinand Lassalle) 409, 410
 라이쎌(Raisser) 1304
 라이크(Laszlo Rajk) 351, 375, 399, 738
 羅中昭 188
 라코시(Matyas Rakosi) 352, 387,

- 399, 724, 741
 란코프(Andrei Lankov) 974, 975
 란트바르프(M. V. Rantbart) 748
 러스크(Dean Rusk) 319, 320
 레닌(V. I. Lenin) 3, 5~8, 12~15, 21, 22, 25, 26, 28, 30, 40~45, 47~56, 67~75, 80~91, 100, 105, 120, 122, 123, 224, 225, 303, 333, 367, 371, 372, 379, 392, 405, 411~414, 416, 417, 418, 425~429, 433~445, 447, 453, 470, 498, 504, 524, 529, 562, 581, 633, 643, 663, 694, 695, 699, 723, 725, 726, 734, 743, 752, 757, 759, 761, 764, 765, 767, 769, 770, 778, 779, 782, 794, 795, 799, 801, 802, 805, 808, 809, 815, 821, 838, 839, 843, 856, 859, 861, 883, 884, 888, 889, 896, 905, 930, 931, 932, 942, 947, 948, 949, 953, 968, 969, 982, 1019, 1021, 1022, 1024, 1042, 1229, 1230, 1231, 1234, 1236, 1280, 1296, 1302~1316, 1323, 1326, 1332, 1334, 1335, 1343
 레바이(Josef Revai) 724, 732, 745, 746, 747
 레베데프(N. G. Lebedev) 325, 346, 347
 로미나제(Besso Rommadze) 164, 849
 로마노프(Alexsei B. Lobanov) 149~151
 로슈코프(Alexander Losyukov) 1205, 1207, 1208
 루뎐안젠프(A. M. Rumyantsev) 805, 806
 루빈슈타인(M. I. Rubinstein) 748
 루이스(John Lewis) 1037
 루즈벨트(T. Roosevelt) 312~316, 731, 840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 70, 73, 74, 422, 445, 1303
 뤼코프 445, 931, 942
 리 블라지미르
 뢰도로비치(李우호) 12
 리프만(Robert Liefmann) 1304
 林河 1089
마
 마루야마마쓰사기(丸山松幸) 136, 137
 마르토프(Yuly O. Martov)
 411마시리크(Thomas. G. Masaryk) 15, 388
 馬占山 250, 253~258
 막쓰오카 요스케(松岡洋右) 239
 만콥스끼(B. S. Mankovskii) 741~743
 말렌코프(Georgy M. Malenkov) 724, 749, 798, 800, 884, 894, 941, 943, 944
 맑스(Karl Marx) 29, 55~67, 74, 75, 108, 408, 409, 410, 413, 415, 417, 418, 436, 438, 725, 778, 779, 808, 883, 896, 968, 969, 1022, 1024, 1085, 1229, 1280, 1302, 1303, 1304, 1313, 1327, 1343, 1344
 메르케르(P. Merker) 738
 맥아더(Douglas MacArthur) 309, 319, 321, 322, 1283
 맥코맥(McComack) 321
 맥클로이(McCloy) 320
 메드베데프(Roy Medvedev) 422, 435, 436
 멘세비키 411, 439, 442
 毛經緯 127
 모리다 호우부(森田芳夫) 340, 342, 682
 毛澤東(모택동) 165, 200, 236, 242, 287, 299, 352, 358, 359, 391, 396, 397, 414, 415, 416, 419, 420, 421, 422, 425, 426, 429, 440, 481, 482, 483, 488, 490, 495, 496, 524, 525, 526, 529, 540, 541, 543, 547, 558, 559, 562, 565, 588, 643, 644, 652, 691, 722, 723, 724, 755, 759, 761~790, 792~802, 804~812, 815, 817, 821, 824, 826, 827, 828, 831, 836, 837, 838, 840~843, 845~861, 864, 865, 871, 875, 876, 878, 882, 883, 887, 888, 890, 891, 894, 900, 902, 904~907, 909, 910, 911, 913, 914, 934~940, 942~949, 955, 957, 962, 965, 967, 968, 969, 973, 974, 976, 981~985, 987, 988, 990, 994, 995, 1016, 1017, 1018, 1020, 1021, 1023~1028, 1034~1039, 1042, 1044, 1045, 1047, 1048, 1049, 1058, 1063, 1072, 1086, 1094, 1095, 1103, 1104, 1105, 1115, 1116, 1133, 1138, 1233, 1234, 1251, 1280, 1282, 1289, 1292, 1303, 1309, 1316, 1323
 몰로토프(Vyacheslav Molotov) 49, 749, 848, 884, 894, 941, 943
 무스타파 케말(Mustapha Kemal) 55
 무정(武亭) 359, 360, 365, 450, 473, 865, 925, 953, 973
 문갑송(文甲松) 197, 216, 230
 문국주(文國柱) 104, 105, 107, 110~114, 119
 문세광(文世光) 601, 610
 미우라 고로(三浦梧樓) 148
 미쯔야 미야마쓰(三矢宮松) 188
 미코얀(Anastas I. Mikoyan) 804, 805, 883, 907
 민궁호(閔肯鎬) 168
 민영환(閔泳煥) 149, 150
 민종식(閔宗植) 168
 민츠(Hilary Minc) 740

민태흥(閔泰興) 108

바

바라사노프 1089

바르가(Evgenii S. Varga) 728,
729, 730, 733, 747, 748, 762,
770, 771

바비프(Francois Noël Babeuf)
409

바우어(Otto Bauer) 70, 71, 79,
445

바우처(Richard Boucher) 1178

박경화(朴景華) 446

박고 851

박군팔(朴君八) 98

박금철(朴金喆) 296, 298, 299

박길남 295

박낙중(朴洛鍾) 105

박달(朴達) 298

박덕산 291

박문규(朴文圭) 449

박봉(朴鳳) 231

박상실(朴尙實) 191

박성철(朴成哲) 290, 295, 357,
603~607

박세진(朴世珍) 199

박세창(朴世昌) 865

박소심(朴素心) 207

박순천(朴順天) 587

박애(朴愛) 24, 37

박열(朴烈) 104

박영빈(朴英彬) 881

박영석(朴永錫) 18, 19, 34

박영순 289

박영출(朴英出) 122

박영효(朴泳孝) 140, 148

박용국(朴容國) 553

박용선(朴容善) 122

박용걸(朴雄傑) 553

박원희(朴元熙) 112

박윤서(朴允瑞) 195, 197, 198,
199

박윤지(朴尹支) 231

박응칠(朴應七) 98

박의완(朴義玩) 348, 819

박이규(朴珥圭) 109

박일병(朴一秉) 108

박일우(朴一禹) 359, 865

박一波 945

박장호(朴長浩) 179

박정애(朴正愛) 357

박정희(朴正熙) 580~587, 590,
591, 595, 596, 598, 601, 608,
609, 891, 1073, 1075, 1076

박제영(朴濟榮) 122

박준규(朴浚圭) 371, 726

박중화(朴重華) 109

박진수(朴振守) 266

박진순(朴鎭淳) 24, 25, 29, 36,
37, 93

박창옥(朴昌玉) 283, 825, 875,
974

박창주(朴昌柱) 865

박태섭(朴泰燮) 1089

박팔양(朴八陽) 365

박현영(朴憲永) 33, 94, 108, 113,
115, 122, 349, 350, 359, 365,
367, 449~456, 458, 459,
461~466, 468~470, 490, 758,
871, 925, 953, 973, 975

박효삼(朴孝三) 359, 865

발라사노프(G. M. Balasanov)
347

方勵之 947

방학세(方學世) 348, 864

배기준(裴基俊) 553

배성룡(裴成龍) 106

백광운(白狂雲) 187

백광흥(白光欸) 110

백남운(白南雲) 961

백학립 295

베네수 375, 379, 388

베닝호프(H. M. Benninghoff)
312

베르나츠키(George Vernadsky)
13

베리아(Lavrentii P. Beriia) 749,
800, 943

변희용(卞熙用) 104

보로실로프 380, 941

보론스키 682

보이웬스끼(Grigori Voitinsky) 97

본스탈(Charles H. Bonsteel) 320,
321

부메디엔느(Houari
Boumedienne) 610

부시(George W. Bush) 1154,
1166, 1168, 1169, 1176, 1177,
1180, 1184, 1185, 1187, 1188,
1189, 1206, 1207, 1210, 1212,
1222, 1327, 1355

부儀 235, 236

부할린(N. BuKhalin) 203

傅蠶 1198, 1199

불가닌(Nikolai A. Bulganin)
749, 884

브레제진스키(Zbigniew
Brzezinski) 389, 672, 686,
687, 723, 726, 738, 744,
1189, 1190

브레즈네프(Leonid I. Brezhnev)
88, 90, 413, 423, 749, 753,
754, 831, 858, 905~909, 968,
969, 1109, 1295, 1303

블랑(Jean-Joseph-Charles-Louis
Blanc) 409

블랑끼(Louis-August Blanqui)
409

비리우조프(S. S. Biriuzov) 374

비스마르크(Otto E. L. von
Bismarck) 409

비신스키(Andrei Vyshtinski) 374

비에루트(Boleslaw Bierut) 352,
399, 724, 726

뱌꾸닌(M. Bakunin) 102

뱌스페르나크(Boris L. Pasternak)
943

뵘잡스끼 328, 682

쁘루동(Pierre Joseph Proudhon)

- 409
 플레하노프(Georgii A. Plekhanov) 1343
- 사**
 사이포(齋藤) 101, 180
 사토(佐藤) 914, 1112, 1115, 1116
 사하로프(G. I. Safarov) 947
 서대숙(Dae-Sook Suh) 18, 19, 30, 34, 35, 114, 120, 123, 206, 280, 420, 428
 서인식(徐寅植) 122
 서일(徐一) 176, 177, 185
 서중식(徐重錫) 452
 서철(徐哲) 289, 291, 295, 357
 서太后 137, 138, 160
 서휘(徐輝) 359, 819
 선우혁(鮮于赫) 92
 셰필로프(Dmitri Shepilov) 941
 셔만(Franz Shuman) 1038
 소병문(蘇炳文) 253, 256, 259
 蘇紹智 947
 소정자(蘇貞子) 659
 손문(孫文) 159, 160, 162, 955
 손영환(孫永煥) 207
 솔제니친(Aleksandr I. Solzhenitsyn) 942
 송교인(宋敎仁) 160
 송남현(宋南憲) 448
 송봉우(宋奉瑀) 104, 113, 114
 송봉옥(宋鳳郁) 357
 송상수(宋相壽) 19
 송상하(宋尙夏) 189
 송진우(宋鎭禹) 448
 송창림(宋昌瀾) 706
 슈미야츠키(Boris Z. Shumiatsky) 31, 32, 97
 스포로파츠키(Pavlo Skoropadski) 47
 스폴린 682
 스노우(Edgar Snow) 987
 스티코프(T. F. Shitikov) 325, 346, 347, 863, 1089
 스탈린(Joseph V. Stalin) 5~7, 9, 47, 51~56, 58, 67~69, 72~74, 79~91, 164, 203, 204, 206, 224, 237, 238, 243, 268, 283, 287, 303, 305, 309, 312~316, 318, 319, 322~324, 326, 327, 329~339, 351, 353, 354, 356, 357, 363, 367, 369~372, 376, 377, 384, 387, 389, 390, 399, 400, 412, 413, 416, 418, 429, 430, 435, 440, 452, 455, 463, 473, 475, 479, 480, 481, 483, 490, 493, 516, 517, 518, 522, 524, 529, 532, 533, 535, 543, 547, 553, 562, 624, 625, 645, 649, 650, 652, 655, 660, 661, 671, 673, 677, 678, 683, 687, 689, 691, 692, 723, 724, 725, 727, 731, 732, 734, 737, 738, 740, 741, 742, 744, 745, 747, 749, 750, 752, 753, 754, 757, 758, 761, 762, 767, 769, 773~780, 782, 783, 795, 797~801, 808, 812~814, 824, 826, 828, 831, 833, 834, 836~840, 843, 845~857, 864, 867~871, 873~881, 891, 894, 895, 896, 916, 929~935, 937~945, 947~955, 957, 962, 967~974, 976, 978, 981~985, 988, 989, 990, 993, 995, 1015~1017, 1019, 1021, 1023, 1042, 1043, 1044, 1047, 1063, 1071, 1072, 1083, 1086, 1089~1092, 1095, 1096, 1106~1108, 1133, 1167, 1229, 1230, 1234, 1243, 1251, 1273, 1289, 1292, 1302, 1303, 1306, 1309, 1314, 1315, 1316, 1318, 1319, 1320, 1326, 1332, 1333, 1334, 1343, 1346, 1353
 스테바노, 이완 738
 스트롱(Anna Louise Strong) 779, 836
 스티븐스(Stevens) 166,
 스티imson(Stimson) 238, 239
 슬란스끼(R. Slansky) 724, 738
 시노다 오사무치(篠田治策) 171, 176
 시체찌닌(B. V. Shchetinin) 347
 시하누크(Norodom Sihanouk) 597
 신규식(申奎植) 5
 신백우(申佰雨) 97, 98, 106, 108, 109, 110
 신석우(申錫禹) 92
 신숙(申肅) 192
 신익희(申翼熙) 450
 신일용(辛日鎔) 119, 198, 199, 200, 217
 신일철(申一澈) 102
 신재호(申在鎬) 666
 신채호(申采浩) 101, 102
 신철(辛鐵) 97
 신현수(申鉉壽) 111
 심지어원(沈志遠) 783
- 아**
 廖蓋隆 938
 아론(Raymon Aron) 1233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883, 887, 894, 1134, 1141
 아파나센코 292
 안광(安廓) 106
 안광천(安光泉) 105, 115, 122
 안광훈(安光勳) 297, 301, 626
 안기성(安基成) 119, 196
 안길(安吉) 289, 291, 864
 안도산(安島山) 924
 안드로포프(Yuri V. Andropov) 831
 안무(安武) 180, 181, 183
 안병익(安秉翼) 32
 안병찬(安秉瓚) 179

안야산(安也山) 192
 안의순(安義淳) 208
 안재홍(安在鴻) 448, 450
 안정근 24
 안준(安浚) 106
 안중근(安重根) 18, 166, 925
 안창호(安昌浩) 27, 924
 안태국(安泰國) 170
 안필수 1079
 안홍(安鴻) 207, 222
 안훈(安勳) 192
 알레나 보로호바(Alena
 Volokhova) 9, 10
 알리예프(Geydar A. Aliyev) 1118
 애틀리(Clement, R. Atlee) 318
 아마가다 아리도모(山縣有朋) 150,
 152
 야부나카 미도리(菰中) 1208
 양건호(梁健浩) 101
 梁鴻超 138
 양기택 24
 楊林(조선인) 246, 265
 양명(梁明) 115, 199
 양벽해(梁碧海, 양서봉, 양세봉)
 190
 楊森 162
 楊尙昆 945
 양서봉(梁瑞鳳) 207, 222, 928
 양세봉(梁世奉, 梁世奉) 189, 190
 양영순(楊永順) 357
 楊勇 910
 楊靖宇 265, 266, 279, 951
 양형섭(楊亨燮) 1007
 어윤중(魚允中) 149
 嚴家祺 940, 945, 947
 엄수명(嚴洙明) 297, 301, 626
 엥겔스(Friedrich Engels) 29,
 55~67, 74, 408, 413, 418,
 436, 438, 778, 808, 843, 931,
 1022, 1024, 1085, 1280, 1302,
 1303, 1327, 1343, 1344
 여운형(呂運亨) 33, 92, 93, 96,
 300, 448, 450, 465

呂準 171
 閻錫山 162, 165
 葉劍英 165
 葉挺 164
 예조프(Nicholai, I. Yezhov) 977
 오광선(吳光鮮) 192
 오기섭(吳琪燮) 357, 360, 364,
 365, 366, 457, 463, 469, 470,
 471, 472, 473, 516, 819, 973
 吳德 943, 945
 오동진(吳東鎭) 188, 201
 오르조니끼제(G. Sergo
 Ordzhonikidze) 51
 오바마(Barack H. Obama) 1354
 오백용 295
 오상근(吳詳根) 106, 107, 109
 오성륜(吳成崙) 278, 296, 297,
 299, 301
 오성묵(吳星默) 98
 오스트로비짜노프(B. V.
 Ostrovityanov) 747, 748
 오영진(吳泳鎭) 332, 339, 341,
 343, 354, 705, 706
 오의성(吳義成) 254
 오진우(吳振宇) 295, 358, 997,
 1011
 吳佩孚 161, 162, 473
 오하묵(吳河默) 25, 34, 35, 185,
 186
 吳學謙 1117
 吳晗 945
 올브라이트(Madeleine Albright)
 1154
 와다 하루끼(和田春樹) 207, 283,
 358, 866
 와실리에프(王新林) 292
 와이데미어(Weydemeier) 725
 王德林 254, 259, 260
 汪東興 943, 945
 王明貴 291
 王鳳閣 252
 王西海 181
 王若望 947

王毅 1198, 1208, 1209
 汪精衛 164, 165, 849
 王鈞 291
 汪兆銘 228
 王鶴壽 945
 王惠德 792
 王洪文 943
 王效明 291, 292
 王明 259, 846, 851, 852
 寥蓋隆 948
 姚文元 943, 945
 요시자와(芳澤) 186
 于珍 188
 울부리트(Water Ulbricht) 153
 워싱턴(George Washington)
 1149
 袁世凱 160, 161, 162
 元友觀 106, 108
 魏京生 939, 940
 魏民生 297
 윌슨(Woodrow Wilson) 30, 55,
 83, 92
 유경수(柳京洙) 289, 295
 劉光弟 792
 유길준(俞吉濬) 149
 유동렬 24
 유동식(柳東植) 199
 유라 996
 劉瀾波 945
 劉文新 290, 358, 866
 柳文華 365
 劉賓雁 947
 유석열(柳錫烈) 1196
 유성철(俞成哲) 293
 유센코프(Lusenkov) 21
 劉少奇 778, 779, 780, 783, 789,
 791~796, 803, 836~840, 854,
 872, 907, 910, 911, 913, 934,
 935, 946, 1024, 1025,
 1028~1031, 1036
 유영익(柳永益) 141
 유인석(柳麟錫) 148, 167, 169,
 170

- 유재일(俞在日) 457
 유진(P. F. Yudin) 741, 757
 유진오(俞鎮午) 587
 유진희(俞鎭熙) 113
 유축운(柳丑運) 819
 陸榮廷 162
 陸定一 854, 945
 윤공흠(尹公欽) 703
 윤기녕(尹基寧) 618
 윤기섭(尹琦燮) 170
 윤덕병(尹德炳) 106, 108, 110, 113
 윤보선(尹潽善) 590, 1079
 윤성좌(尹聖佐) 187
 윤세평(尹世平) 283, 284, 927
 윤자영(尹滋英) 96, 97, 107, 109, 118, 119, 195, 198
 윤평(尹潁) 207
 李 세르게이 바실리에프 996
 이강국(李康國) 449, 451
 이강년(李康年) 167, 168
 이강명(李康明) 122
 이강훈(李康勳) 197, 224
 이정호 291
 이계형(李啓亨) 109
 이관술(李觀述) 122
 이광준(李光俊) 299
 이구영(李求英) 98
 이규풍(李圭豐) 19
 이그나체프(A. M. Ignachev) 347
 이근(李根) 1199~1202,
 이기하(李起夏) 449
 이나영(李羅英) 284, 296, 304
 이남두(李南斗) 108
 이노베(井邊) 682
 이다카기 세이시로(板垣 征四郎) 233
 이동광(李東光) 300
 이동녕(李東寧) 170, 171
 이동백 300
 이동삼(李東三) 199
 이동원(李東元) 591
 이동초 1089
 이동화(李東華) 996
 이동휘(李東輝) 8, 20, 23~31, 33~37, 39, 55, 93, 96, 97, 98, 107, 110, 193, 194
 이두(李杜) 253, 256, 259
 이득연(李得堧) 107
 이프 히로부미(伊藤博文) 166
 이락(李洛) 187
 이명순(李明淳) 177
 이문환(李文煥) 618
 이민(李敏) 998
 李마실리 뢰드르비치 996
 이범석(李範奭) 183
 이범석(李範錫) 598, 600
 이범윤(李範允) 18, 19, 180, 185, 187
 이범진(李範晉) 148
 이봉길(李鳳吉) 108
 이봉길(李奉吉) 1089
 이봉수(李鳳洙) 97, 98, 113, 357
 이부춘(李富春) 788, 792, 798
 이상설(李相尙) 19, 171, 172
 이상용(李相龍) 170, 177
 이상조(李相朝) 359
 이상준(李相俊) 297
 이석중 102
 이선근(李瑄根) 133, 138, 155
 이선희(李善姬) 1201
 이송운(李松雲) 553
 이순근(李舜根) 450
 이승만(李承晩) 27, 28, 369, 450, 451, 521, 530, 531, 547, 567, 568, 569, 575, 576, 580, 582, 675, 676, 717, 718, 923, 924, 1076, 1337
 이승엽(李承燦) 452, 527, 973
 이승희(李承熙) 172
 이시하라 칸지(石原莞爾) 233
 이여성(李如星) 104
 이영(李英) 106, 107, 108, 459
 이영배(李英培) 271
 이영춘(李永春) 207
 이영호(李英鎬) 289
 이와노프 292
 이완용(李完用) 148, 166
 이용(李鎬) 34
 이용준 1140, 1180
 이우직(李友狄) 105
 이웅(李雄) 215, 222
 이웅희(李雄熙) 930
 李遠 229
 이윤희(李裕弼) 342
 이윤희(李維漢) 788, 789
 李毓卿 290, 866
 이을규(李乙圭) 191
 이을설 295
 이인수(李仁秀) 115
 이인영(李麟榮) 167, 168
 이임삼(李立三) 196, 216
 이장녕(李章寧) 177, 185, 192
 이재명(李在明) 166
 이재복 98, 99
 이재섭(李載深) 230
 이재유(李載裕) 122
 이정(李樞, 이재복) 32, 99
 이정록(李廷祿) 254, 265
 이정식(李庭植) 227
 이정윤(李廷允) 114
 이정훈(李鼎薰) 170
 이제순(李濟淳) 296, 298
 이조린(李兆麟) 291, 292
 이조성(李肇星) 1200
 이종락(李鍾洛) 222, 246, 273, 274
 이종옥(李鍾玉) 1079
 이종인(李宗仁) 165
 이주연(李周淵) 357, 386, 619, 889, 900, 901
 이주하(李舟河) 357, 973
 이준태(李準泰) 108
 이진영(李震瀛) 227
 이진탁(李辰卓) 222
 이청원(李清淵) 619
 이청천(李青天) 185, 186, 192
 이태희(李泰熙) 208
 이택암(李澤庵) 198

이필규(李弼圭) 359
 이한업(李漢業) 24
 이현상(李鉉相) 122
 이형건(李亨建) 98
 이호원(李浩源) 179
 이홍광(李紅光) 246, 266
 이홍근(李弘根) 680
 李洪林 947
 李鴻文 250, 264, 267
 李鴻章 134, 139, 145
 이회영(李會榮) 170
 이효순(李孝淳) 298, 900
 이후락(李厚洛) 603~607, 609
 이희성 1079
 인테르손 98
 임경식 22, 24, 34
 林今淑 1033
 임원근(林元根) 94, 113, 115
 林隱 289, 290, 293
 林仲門(張浩) 228
 임춘추(林椿秋) 295, 357
 林彪 869, 910, 913, 914, 935, 995, 1035
 林海 865
 임형관(林亨寬) 11

자

柴世榮 291, 292
 장강호(長江好) 182
 蔣介石 163, 165, 202, 227, 228, 234, 235, 236, 241, 243, 257, 258, 312, 314, 318, 525, 786, 837, 838, 840, 841, 842, 845~849
 장건상(張健相) 93, 96, 97
 장규정(張奎鼎) 122
 장덕수(張德秀) 106~110
 장도명(張道明) 115
 장도빈(張道斌) 106
 장도정(張道政) 98
 장면(張勉) 575, 578, 580
 장문천(張聞天) 851
 장소봉(張小蜂) 273

장수전 290, 292
 장승언(長承彦) 190
 장시우(張時雨) 196, 199, 357, 457
 장응룡(張應龍) 256
 장인환(張仁煥) 166
 張逸仙 162
 장일성 200
 張作霖 161, 163, 180, 188, 196
 張作舟 250
 장전구(張殿九) 256
 장종식(張宗植) 358
 장종식(張鍾植) 618
 장종필(張宗弼) 222
 장철(張徹) 90
 張春橋 943
 張學良 163, 233, 234, 235, 244, 926
 전광(金光) 246, 299, 300
 錢其琛 1194~1198, 1197
 전택원(全德元) 187
 전동혁(田東赫) 1089
 전두환(全斗煥) 1075, 1076, 1078, 1158, 1260, 1262, 1274
 전명운(田明雲) 166
 전일(全一) 24
 전계택(全濟德) 18
 정달헌(鄭達憲) 357, 365, 457, 469, 470, 973
 정백(鄭柏) 108, 449, 450, 452, 455, 456, 459, 461
 정병욱(鄭丙旭) 115
 정순만(鄭淳萬) 171
 정신(鄭信) 191, 192
 정일형(鄭一亨) 578
 정재달(鄭在達) 96~99, 452
 정종명(鄭鍾鳴) 112
 정준택(鄭準澤) 915
 정철매(鄭鐵梅) 252
 정초(丁超) 253, 259
 정태성(鄭泰成) 104
 정태식(鄭泰植) 122
 정태신(鄭泰信) 96

曹錕 161
 조동우(趙東祐) 33, 108, 113, 449, 452
 조두원(趙斗元, 일명 趙一明) 452
 조만식(曹晩植) 332, 339, 341, 348, 380, 381, 383, 385, 386, 388, 450, 451, 617, 665, 759
 조맹선(趙孟善) 168, 179
 조명록 1154, 1339
 조봉암(曹奉岩) 96, 104, 108, 113, 114, 115, 118, 195
 조상지(趙尙志) 292
 조성식(趙誠植) 698, 703
 조성환(曹成煥) 185, 188
 조성희 24
 조영렬(趙永烈) 618
 조용암(曹龍岩) 115
 조원각(趙元珪) 682
 趙毅 253
 趙紫陽 946, 947
 趙恒惕 162
 左宗棠 139
 朱健 198, 199
 朱寧河 357
 朱德 236, 934
 周保中 265, 289~293, 866
 朱世竹 112, 113
 朱霄青 259
 周揚 945
 周恩來 200, 872, 884, 885, 886, 894, 895, 899, 907, 913, 914, 915, 934, 938, 942, 945, 1110, 1115
 周陰人 162
 주종건(朱鍾健) 113
 주진수(朱鎭洙) 170
 추가스빌리(Ekaterina Dzhugashvili) 268
 줌코프(E. Zhukov) 778, 780
 줌다노프(Andrei A. Zhdanov) 326
 曾國藩 134, 139
 池青天 192

陳公木 198, 217
 陳潭秋 228
 陳雷 998
 陳潘秀 865
 秦邦憲 851
 陳錫聯 943, 945
 陳紹禹 851
 陳雲 945
 陳爲人 227
 陳炯明 162
 질라스(Milovon Djilas) 332

차

차광수(車光洙) 216, 271, 272, 273
 차금봉(車今奉) 109, 110, 115, 116, 982
 차도선(車道善) 18, 168
 차우세스쿠(Nicolae Ceausescu) 562, 687, 917
 蔡 그레고리 98
 채규항(蔡奎恒) 122
 寨玲 947
 차칠(Winston Churchill) 312, 314
 체르넨코(Konstatin U. Chernenko) 831, 1117, 1118
 체르노프(V. M. Chernov) 21
 최계립(崔溪立) 193
 최고려(崔高麗) 25, 34, 37
 최광(崔光) 289, 357
 최근우(崔謹愚) 449
 최동순(崔東順) 199
 최동오(崔東杓) 189, 190
 최동익(崔東益) 222
 최동일(崔東日) 199
 최두선(崔斗善) 597
 최명록(崔明祿) 180
 최봉(崔峰, 崔鳳) 207, 208, 209
 최석순(崔碩淳) 187
 최석천(崔石泉) 266, 289, 291
 최영희(崔永禧) 342
 최용건(崔庸健) 283, 289, 290,

295, 357, 381, 382, 386, 388, 577, 619, 759, 914, 928, 998
 최용달(崔容達) 449, 450, 452, 469, 470
 최용석(崔龍錫) 266
 최용진(崔用珍) 289, 295
 최원택(崔元澤) 113, 118, 119, 195, 196
 최윤수(崔伊洙) 98
 최익한(崔益翰) 105, 450, 452, 455, 456, 459, 461
 최장운 11
 최재형(崔在亨) 18
 최진동(崔振東) 181, 185
 최창식(崔昌植) 33
 최창익(崔昌益) 107, 108, 111, 279, 280, 358, 359, 703, 758, 819, 825, 865, 875, 953, 974
 최충국(崔忠國) 289
 최현(崔賢) 289, 291, 295, 357, 998
 최형우(崔衡宇) 200, 273, 274
 최효을(崔孝乙) 273
 추가에프(Chugaev) 51, 53
 치쓰차코프(Ivan Chistiakov) 310
 친킨 1089

카

라텍크(Karl Radeck) 74
 렌너(Karl Lenner) 70
 카가노비치(Lazar M. K. Kaganovich) 894
 카다피(Muammar A. M. al Qaddafi) 1354
 카라일(Thomas Carlyle) 408
 카우츠키(Karl Kautsky) 79, 410, 433, 434, 445, 725, 1303
 카터(Jimmy Carter) 1152, 1156
 케네디(John F. Kennedy) 589, 894, 895, 899, 1294
 케렌스키(Aleksandr F. Kerenskii) 1313
 켈로그(Frank B. Kellogg) 238

켈리(James Kelly) 1175, 1184, 1199, 1327
 콜라츠(W. Kolarz) 8, 9, 10, 12
 콜링우드(Collingwood) 832
 쿠시넨(Otto Kuusinen) 888
 쿤(Bela Kun) 36
 크라스노 쉬피코프 22
 크로체(Benedetto Croce) 832
 클레민티스(V. Clementis) 738
 클린턴(Bill Clinton) 1152, 1153, 1154, 1187, 1190
 키신저(Henry A. Kissinger) 594, 986, 1110

타

클리프(Tony Cliff) 684
 태성수(太成洙) 365, 865
 트루먼(Harry Truman) 734, 847, 1134
 티토(Broz J. Tito) 351, 352, 399, 678, 687, 723, 736, 737, 738, 740, 744, 750, 751, 758, 762, 838, 845, 849, 853, 888, 890, 891, 899, 917, 1095, 1122, 1123, 1233, 1273, 1293
 틸다(Zoltan Tildy) 375

파

파르베로프(N. P. Farberov) 741, 742, 743,
 파우케르(Ana Pauker) 353
 파월(Collin Powell) 1194
 파트라스카누(L. Patrascanu) 738
 판크라토바(A. M. Pankratova) 333
 貝春先 177
 彭德懷 869
 彭眞 889, 907, 945
 페리(William Perry) 1153
 페트코프(Nikola Petkov) 374
 포드고르니(Nikolai Podgorny) 913
 포이에르바흐(Ludwig Feuerbach)

1343
폴 포트(Pol Tot) 184, 1324
폴리안스키(Dmitrii Poliansky)
913
馮國章 161
馮玉祥 165
馮占海 250, 253
馮仲雲 290, 291 292,
프랑코(F. Franco) 742, 1167
프리처드(Charles L. Pritchard)
1200, 1206, 1218
피구르노프(P. K. Figumov) 741
피우스츠끼(Josep. Pilsudski) 73
파이크(Wilhelm Piek) 352

하

하라(原) 테루유키 18, 20
하양천(河仰天) 359
賀龍 872, 889
하지(John R. Hodge) 309
하필원(河弼源) 115
한동찬(韓東燦) 618
한명서(韓明瑞) 97, 98
한명세(韓明世) 12, 96
한복구(韓復榘) 473
한빈(韓斌) 359, 819, 865
한상목(韓相穆) 119, 196
한설야(韓雪野) 276
한승우(韓承牛) 211
한신교(韓愼敎) 107
韓안드레이 32
한위건(韓偉健) 105
한익수(韓益洙) 295, 956
한일광(韓一光) 209
한일무(韓一武) 865
한제덕(韓載德) 276, 340, 341,
352
한진(韓震) 231
한호(韓浩) 231
한희진(韓熙鎭) 618
함석헌(咸錫憲) 1079
하가의(許哥誼) 348, 973
하동찬(許東燦) 207, 208, 270,

272
허봉학(許鳳學) 289
허석선(許錫瑄) 553
許蔭 168
허정 568
허정숙(許貞淑) 112, 359
허향주(許享柱) 266
허현(許憲) 109, 450, 451
허형식(許亨植) 289
헐리(Patrick Hurley) 847, 848
험프리(Hubert Humphrey) 590,
591, 883
헤겔(Georg W. F. Hegel) 63, 64
헬트(Adolf Held) 408
현(Peter 玄) 998
현익철(玄益植) 222
현정건(玄鼎健) 96
현정경(玄正卿) 189, 222, 223
현준영 1064
현준혁(玄俊赫) 341, 357, 383,
457
현철중(玄七鍾) 108
邢占清 250, 253
胡喬木 788, 847, 850
호자(Enver Hoxha) 891, 894,
1095
호계(Koci Xoxhe) 738
胡志明(Ho Chi Minn) 558, 965,
987
홉킨스(Harry Hopkins) 314, 315
홍덕유(洪惠裕) 108, 113
홍명희(洪命熹) 108
홍범도(洪範圖) 18, 168, 177,
178, 181, 183, 185, 187
홍순권(洪淳權) 553
홍이섭(洪以燮) 133, 149, 150,
151, 154
홍중식(洪增植) 107, 113, 115
홍진(洪震) 192
홍파(洪波) 193
華國鋒 831, 934, 943, 944, 945,
994
황석우(黃錫禹) 104

황영승(黃永勝) 915
황원보(黃元輔) 553
황장엽(黃長燁) 998, 999, 1003,
1054, 1068, 1118
황학수(黃學洙) 192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 1175
후지하라(藤原) 181
호루시초프(Nikita S.
Khrushchev) 88, 336, 371,
412, 423, 424, 429, 440, 499,
505, 529, 543, 726, 749,
750~753, 775, 798, 800, 801,
802, 804, 808, 818, 831, 833,
834, 847, 848, 853~861,
873~876, 880~885, 887~896,
899~910, 929~932, 934, 937,
940~945, 947, 954, 957, 968,
970, 974~976, 1045, 1072,
1092, 1094, 1095, 1109, 1186,
1295, 1303, 1318~1320, 1323
히라마쓰 시게오(平松茂雄) 792
히로다 다네오(廣田種雄) 682
히로다(廣田) 237
히틀러(Adolf Hitler) 184, 315,
316, 327, 370, 375, 376, 388,
415, 435, 504, 725, 742, 766,
777, 806, 906, 950, 1167,
1170, 1346
힐(Christopher R. Hill) 1217,
1218, 1222

찾아보기

■ 사항 색인

- 10·3 합의 1223
10대강령 296, 301~305, 928, 958, 1143, 1172
10월 혁명 379, 411, 418, 437, 439, 441~445, 524, 699, 725, 764, 765, 699, 838, 1280, 1307, 1313, 1314, 1332
12월 테제 116, 119, 122, 205, 281, 419, 428, 447, 454, 490
20개조 정강 476, 492, 493, 520, 521, 620, 623, 624~626, 695, 710
28명의 불세미끼(소련 유학생파) 851
2월 혁명 5, 20, 21, 23, 40, 42, 61, 409, 1313
3·1월간 298
3개년계획 496, 823, 873, 973, 1018
3단계 동시행동원칙 1202
3대혁명 978, 987, 999, 1012~1020, 1034~1038, 1044, 1051~1067, 1267
3대혁명 소조운동 999, 1000, 1012, 1066, 1051~1058, 1068
3대혁명 역량의 강화 1097
3대혁명노선 1016, 1017
3반·5반 운동 787
3자회담 1078~1080, 1184, 1196~1204
4·19 549, 550, 568, 569, 575, 578, 583, 1075
43인조 865
4개 요구사항 1143
4개 현대화 935, 939, 940, 1072, 1234, 1295
4대 군사노선 537, 538, 586, 591, 1108, 1136
4성 추수폭동(4省 秋收暴動) 165
4위 일체 1185
5·16 568, 580, 581
5개년계획 798, 818, 823~825, 873, 877, 973, 1015, 1018, 1026~1028, 1032
5족 협화 237
6·23 선인 608, 609
60만세사건 201
7·4 남북공동성명 597
7개년계획 496, 537, 538, 573, 825, 908, 957, 973, 1015, 1018, 1033, 1052
88 서울올림픽 1080, 1081
88특별여단 288, 290, 293
88특별족단 289
8로군 358, 359, 846, 953
8월 종파사건 818, 819, 875
8월 테제 452~455, 490

가
간도(間島)-5·30폭동 8, 35, 117~119, 172, 224, 267
감산파 298
강선제강소 1027
강성대국 1001, 1005, 1006, 1167, 1265, 1266, 1279, 1282, 1346, 1352, 1353
개량주의 88, 418
개성공단 1288
개인 미신 반대 876, 877
개인기업의 창발력 발휘에 대한 결정서 701
개인숭배 288, 295, 305, 354, 474, 496, 555, 558, 749, 758, 800, 818, 853~856, 874~1096, 1240~1347
건국사상 총동원운동 647~652
건준 339~342, 448~451
경민전선(Ploughmen's Front) 374
경성일보 451
경수로-공급협정 1157
경신년대참변-경신참변 184
고농축 우라늄(HEU) 1197
고려공산당 24~39, 93~97, 109~119, 193, 195
고려공산청년회 만주총국 195, 212
고려민주연방공화국 1163, 1338
고려혁명군사관학교 186
고려혁명군정의회(高麗革命軍政議會) 34
고유수 272
고타 강령비판 725
공공회(公共會) 19
공동 커뮤니케 886, 908, 914
공사집교(公私兼顧) 787
공산당선언 29, 57, 58, 895, 1022
공산주의적 세 인간 1244, 1246, 1248
공인직위대 270
공진회(共進會) 19
공정 동만특별구 277
공화국정부정강 1120
과도기의 총노선 788~799
관동군 163, 182, 233~319, 806, 846, 866, 961, 984
관현현(寬甸縣) 169
광명성 1호 1005
광복군 101
광성학교 171
교도여단 292
교조주의 462, 542, 857, 880, 886~918, 956, 972~991, 1094~1240
구 조약 840~842
구미위원부 93
구역국(區域局) 118, 195
국공합작 163, 525
국내 인민전선 461
국내파 공산주의자 458, 467, 866
국민부 189, 190, 200, 207~215, 222~226, 245, 268, 272~274
국민회군 183
국자가 176
국제노동자협회 60, 61
국제연맹 55, 238~240, 243

군사모험주의 164, 563, 1183
 군사파쇼도당 1076
 권업회 21
 그루빠 465, 466
 그루지아 50, 72, 91
 극동공화국 25, 26, 34
 극동계민족 대표회의 96
 극동총국 97
 근우회 112
 글라스노트(Glasnost) 89
 기술신비주의
 길림사위군 253
 길림화원 997
 감대중남치사건 609
 김일성동지작전 207, 273, 305
 김일성장군 개신기 353
 김일성종합대학 997

나

낮은 부르조아 민주주의
 세계혁명 764
 남-북 공존론 530
 남-북 학생회담 578
 남-북상설위원회 566, 567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626,
 656~658, 660
 남만 한인총동맹(南韓靑縋) 207,
 209
 남만연맹참변 207
 남만주(南滿洲) 322
 남만주청년총동맹 194
 남만참변 208, 209
 남-북 공동선언 1162~63,
 1256~57, 1285, 1287, 1296~97
 남북 연방제 방안 567, 581, 1007
 남북적십자회담 602, 1064, 1072
 남북정상회담 1007, 1161~62,
 1317, 1328, 1339, 1343, 1350
 남북조절위원회 601, 609, 610,
 1064, 1072
 남산고급중학교 997
 남산인민학교 997
 남조선 혁명론 528, 538, 542
 남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전평)

451
 남조선해방 494, 545, 593, 597,
 958, 12989, 1290, 1296, 1298
 남창봉기(南昌蜂起) 164
 남침용 땅굴 610, 611
 내선일체(內鮮一體) 167
 내쇼날 파시스트 367, 368
 네르친스크 조약 116, 117, 172
 노동적위대 959
 노동홍군(勞農紅軍) 165, 242
 노동 개조영 787
 노동법령 192, 522, 626,
 647~650, 653~655, 692
 노멘클라투라 443, 445
 농무계(農務契) 168
 농민협회 212, 222, 230, 927
 농업민주주의 61
 농업현물세 634, 641, 642
 농업협동조합 645, 1027, 1045
 농촌위원회 631~633, 638, 639
 니콜스키 11, 21, 33
 님슨 독트린 594, 914

다

다원주의 1185, 1275
 당 군사위원회 997
 당고정전협정 235
 당중앙집중지도사업 875
 대 한민족적 배외주의(大
 漢民族的 排外主義) 806
 대도회 251, 254, 259, 260, 262
 대동단결 201, 332, 341, 354,
 355, 361, 366, 392, 430, 1284
 대동아전쟁 240
 대련중화공학회 227
 대서양헌장 323, 329
 대약진 운동 882, 1018
 대한 시정대강(對韓 施政大綱)
 158
 대한교육청년회 19, 21
 대한국민의회 22
 대한독립군-대한독립단 34~36,
 38, 177, 178, 183, 186, 186
 대한민국 임시정부 27, 28, 92,

93, 100, 177, 448, 456
 대황구역격대 264
 도이 모이 1149, 1349
 독립국가연합(CIS) 89, 91
 독립협회 149, 166
 독일사회주의노동당 409
 둔화현(敦化縣) 198, 199, 265
 돌격대 작업 649
 동3성(東3省) 127, 242
 동4성(東4省) 127
 동경조선고학생동우회 104
 동만주청년총동맹 194
 동만폭동대 247
 동변도(東邊道) 지방 174
 동북민중사위군 252
 동북항일 연군교도대 289
 동북항일연군 278~282, 286,
 288~299, 352, 358, 395, 458,
 866, 875, 926, 951, 969, 998,
 1240
 동북항일의용군 252, 253, 264
 동성(東省) 조선인농민총동맹 210,
 225, 268
 동성한족동향회 213
 동양학원 194, 224
 동제사(同濟社) 5
 동청철도 144, 188, 237
 두 개의 요새(물질적-기술적 요새,
 사상적 요새) 1043, 1044
 두도구 176

라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73, 74,
 411, 439
 레닌주의 3, 8, 29, 37~1336
 로젠-니시(Rosen-西) 협정 151

마

마살플랜 1315
 만-한(滿-韓) 교환론 150
 만경대-만경대혁명학원 277,
 950, 961, 984, 997
 만보산사건 233
 만주국(滿洲國) 101, 128

- 만주빨치산파 358, 360
만주사변 128, 158, 174,
230~233, 237, 243~247, 256,
264, 266, 267, 279, 281, 846,
928
만주성위 214, 217, 218, 226,
228~231, 235, 240, 245~247,
252, 258, 262, 264~267, 271,
275, 284
만주협화회 470
만철(남만주 철도주식회사) 156,
163, 233, 262
맑스-레닌주의 3~88, 270, 272,
301~392, 412~498, 505~581,
626~698, 708~798, 801~894,
909~995, 1011~1095, 1102,
1104, 1230~1295, 1336
맑스주의 24, 54, 56, 62, 70, 72,
84, 103, 104, 108, 109, 111,
114, 121, 202, 224, 331, 373,
408~413, 428, 439, 443, 445,
446, 695, 725, 731, 736, 764,
778, 780, 805, 806, 836, 854,
880, 937, 946, 948, 968,
1042, 1058, 1085, 1086, 1302,
1307, 1309, 1313, 1332, 1343
매일신보 451
매판자본가 430, 505, 551, 560,
768, 1290
멘세비끼 20
명동학교 171
모순론 1103
모스크바 3상회의 312, 323, 337,
385, 386, 475, 476, 491, 517,
520, 521, 617~620, 624
모스크바파 351, 352
모택동 비판문제 944
모택동사상 761, 774, 778, 779,
800, 806, 836, 937, 939, 945,
1020, 1036
목전10대강령 297, 299
몽고인민공화국 863
무산자동맹회 106, 108
무저항정책 255
무한파 228
문화대혁명 440, 529, 858, 910,
911, 913, 914, 919, 934, 937,
938, 973, 976, 995, 1058,
1095, 1105, 1323, 1349
미-중 상해공동성명 594
미제국주의 201, 560, 586, 1098,
1108
민생단 248
민전위원회 392, 396~398
민족 부스러기들 65
민족 파시스트 923, 1107
민족개조 1244
민족공산주의 1253
민족공조 1007, 1146, 1187,
1283, 1284, 1286, 1297, 1298,
1317, 1355
민족대단결에 대하여 486
민족문제 5~7, 54~89, 1229~1231,
1234, 1236, 1250, 1296, 1332,
1335
민족민주주의국가 429
민족반역자 341, 372, 398, 419,
420, 430, 453, 460, 462, 477,
478, 521, 540, 622, 630, 636,
637, 644, 668, 673, 674, 675,
697, 813, 923, 924, 1338
민족연방제 70
민족유일당 189~193, 198~202,
206, 212, 214
민족유일당조직 축성회 189, 192
민족유일당조직 협의회 189, 192
민족자결권 3, 40, 44, 47, 49,
50, 53, 54, 67~70, 72, 74, 75,
79~86, 88, 1229, 1332
민족자결주의 30, 43, 52, 55, 92,
93, 223, 401, 1316
민족자주통일 촉진회 575
민족적 유일전선 201, 202
민족통일전선 전술 394~396, 398,
453, 487, 488, 668
민주개혁 476, 492, 494,
518~528, 617, 626, 650~675,
711, 721, 757, 809~813, 972
민주기지노선 493
민주선거 710, 711, 713, 715
민주적 중앙집중제 447, 509
민주전선-민주주의 민족전선 431
민주주의 연합국 336, 337, 362,
370, 393, 486, 1107
민주구국군 256
밀산-밀산현(密山縣) 172
- 바**
반동관료 551, 1290
반동동맹 898
반둥회의(Bandung Conference)
1087
반미 자주화 505, 542, 565, 588,
1079, 1273
반보수대연합 1285
반봉건적 민주주의 393, 418,
419, 482, 483, 490, 492, 496,
755, 756, 763, 809
반봉건적 민주혁명 304, 397,
482, 528, 541, 567, 569, 620,
632, 752, 817, 822, 983
반석공농의용군 266
반석현(盤石縣)-반석공산당 198,
230, 231, 246
반일유격대 264, 275, 926, 970
반일총대 250
반제연합 260
반파쇼민주화 506
방명운동(放鳴運動) 854
방코 델타아시아(Banko Delta
Asia: BDA) 1220
백군(白軍) 26, 47
백두 3대장군 1000
백련교 251
백위군 13, 34
백초구 176
베를린 선언 1256
베트남 파병 538, 587, 588, 590,
592, 593, 596
벼랑 끝 외교 1141, 1142, 1147,
1166, 1169, 1212, 1268, 1289,
1347, 1354

보천보 927
 불세비키 121, 448, 450, 465
 봉오동 180, 184
 부다페스트 316, 375, 750
 부르조아 객관주의 748
 부르조아 민족주의 29, 39, 42,
 49, 51, 84, 88, 101, 205, 226,
 262, 351, 355, 673, 691, 924,
 1235~1238, 1250~1254, 1273,
 1284, 1296, 1317, 1335, 1336
 부르조아 민주주의 49, 203, 225,
 304, 350, 367, 383, 405,
 411~441, 453, 454, 461, 462,
 481~483, 490, 501, 536, 620,
 623, 630, 631, 643, 645, 655,
 702, 708, 727, 729, 733,
 751~753, 761~771, 775, 785,
 791, 803, 955, 994, 1022, 1023
 부민단(扶民團) 171, 177
 북간도 167, 169, 171, 177, 182
 북계(北計) 169
 북만주 117, 118, 157, 173, 187,
 188, 229, 245
 북만주청년총동맹 194
 북-미 기본합의서 1145, 1176
 북-미 불가침조약 1199, 1205,
 1207
 북방정책 1073, 1074, 1078,
 1133, 1348
 북성회 104~106, 108, 110~112
 북조선 5도행정국 354, 615
 북조선 기독교연맹 712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386, 400,
 473, 476, 491~497, 518~520,
 615~620, 626~630, 634, 647,
 650, 655, 656, 661~667,
 694~699, 711, 721, 755~759,
 809, 810, 967
 북조선 정세보고 341
 북조선분국 360~368, 382,
 463~475, 485, 489, 495,
 515~518, 615, 923
 북조선인민위원회 495, 497, 498,
 1332

북풍화-북풍회파 104, 105, 108,
 109, 112~114, 193, 196, 200
 북한의 핵개발 1135, 1138, 1143,
 1174, 1197, 1204, 1352
 분트(Bund) 71
 불능화 작업 1193, 1224, 1225
 불라고베센스끄 23
 붉은 군대 37, 42, 309, 310, 319,
 324~326, 332~334, 350, 520,
 655, 723, 743, 951, 969, 1090
 브레스트-리톱스끄 조약 13, 16,
 41, 50
 블라지보스톡 9~11, 17~22, 33,
 98, 99, 195
 비밀선언 20
 비밀연설 801, 929, 930
 비야즈크 289, 291, 293, 1316
 비농위원회 632
 빠리강화회의(1919) 223
 페레스트로이까(Perestroika) 89
 포시에프 11, 118, 195
사
 사상교양사업 554, 826, 955, 991,
 1002, 1006, 1031, 1032, 1054,
 1274, 1276, 1319, 1320, 1346
 사상위보 296
 사인방 831, 936, 938, 943, 945
 사회단체위원회 21
 사회정치적 생명체 504
 사회주의 건설의 기초 667, 953
 사회주의 혁명당 14, 439
 사회주의에로의 평화적 이행 795,
 815
 사회주의적 개조 496, 645, 666,
 667, 702~704, 715~717, 745,
 754, 781, 789, 793, 796,
 813~815, 824~828, 974, 1018,
 1023, 1024, 1027, 1031, 1048,
 1062, 1244
 사회주의적 근로자 701, 709,
 817, 828, 1244
 사회주의적 민족-사회주의적
 민족화 81, 82, 91, 415, 1052,

1243, 1244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414,
 422~424, 445, 498, 499, 727,
 940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538, 554,
 673, 959, 1235~1239, 1247,
 1250, 1335, 1336
 사회주의적 평등 415
 사회주의적 협동경리 646
 살라미 전술 387, 1151
 삼면홍기(三面紅旗) 882, 1018
 상해사변 241
 상해파 24, 25, 28, 30~39, 93,
 96~98, 109, 113, 118, 119,
 193~200, 210~213, 217, 218,
 222
 상호방위조약(1945) 543, 595,
 596, 862
 상황설명서(Briefing Book Paper)
 317
 세달少年同盟 268
 새로운 민주주의 336, 405, 414,
 619, 628, 654
 서간도 167, 170, 171, 177
 서금(瑞令) 165, 525, 791, 850,
 852
 서로군정서 177, 179
 서북 5도대회 363, 364, 392,
 459, 465, 489
 서울청년회 38, 107~116, 119
 서울파(派) 24, 32, 38, 193, 468
 서진서숙(瑞進書叔) 171
 서해교전 1274, 1355
 선군정치 5, 1005, 1167, 1266,
 1278, 1340, 1353
 선군후로사상 1266, 1353
 선비(鮮匪) 197
 섬서성 525, 852
 성명회(聲鳴會) 19
 세계장신 63, 64
 소년선봉대 270
 소련 군포 332, 704
 소련 민정관리국 346
 소련군 제25군 319, 324, 327,

328, 330, 485
 소련파 365, 367, 536, 811, 818,
 865, 869, 875-879, 973, 1092
 소부르조아 출신의 종파분자들
 467
 소부르조아적 급진주의 418, 231
 소부르조아적 심리 806
 소비에트 러시아 7, 11, 12, 16,
 25, 26, 28, 40, 42, 45, 46,
 51, 53
 소비에트 민족 7, 73, 90, 91
 소비에트공화국 43, 48, 50, 51,
 53, 68, 726, 850, 1314
 소비에트대회 5, 6, 45, 46
 소비에트화 53, 303, 316, 323,
 332, 334, 339, 347, 350, 351,
 364, 365, 370, 372, 385, 390,
 400, 463, 478, 517, 519, 520,
 525, 617, 619, 623, 625, 639,
 663, 671, 733, 734, 735, 747,
 1230
 소사하 271
 소-일 중립조약 312, 316
 소자산 계급성 637
 수정주의 418, 503, 538, 542,
 553, 554, 562, 565, 754, 784,
 804, 810, 819, 820, 853, 857,
 876, 877, 880, 884, 886, 888,
 890, 891, 893, 895, 896, 899,
 900, 902, 905-907, 909-911,
 913, 914, 916, 918, 919, 934,
 936, 946, 956, 974, 991, 1032,
 1062, 1065, 1072, 1082, 1092,
 1093-1095, 1231, 1234, 1238,
 1240, 1295, 1318, 1319, 1320
 수찬 11, 118, 195
 수풍담 680
 스타하노브운동 692
 스탈린 격하운동 678, 749, 750,
 856, 874, 931, 934, 940, 943,
 945, 970, 974, 1092
 스탈린주의화 323, 332, 351, 399,
 626, 741, 745, 753, 865
 스탈린헌법 344, 1089, 1090

식민지 및 반식민지에서의 테제
 207
 신 강령(신 공산당선언) 895, 896,
 942
 신4군 358, 846
 신간회 105, 189, 206
 신민부 188, 189, 191, 199-201,
 211, 213
 신민주주의 420-422, 482, 486,
 526, 723, 724, 761-763,
 765-767, 770-774, 781-784,
 789, 790, 794, 806
 신사상연구회 38, 108
 신조약 840
 신탁통치안 385
 신한청년당 92
 신한촌 19, 118, 195
 신헌혁명 159
 신흥강습소 170
아
 아웅산 1078
 아이제나하 강령 409, 410
 아즈마 지대 184
 아프가니스탄 1071, 1103, 1105,
 1119, 1125-1128
 안도 유격대 271, 951
 안도현(安圖縣) 181, 270, 271,
 297
 알리아르함 사회과학원 1088
 암살단 19
 애국미 헌납운동 641, 652, 653
 애국적 로동운동 653
 알타회담 314, 315, 323, 329
 에르푸르트 강령 410
 연길항일유격대
 연길현(延吉縣) 117, 118, 171,
 173, 176, 187, 195, 254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
 州) 167
 연안파 280, 358, 359, 360, 365,
 367, 390, 458, 459, 473, 536,
 703, 758, 811, 818, 865, 869,
 875, 876-879, 953, 954, 973,

974, 1092, 1094
 연해주 8-12, 14, 18, 25, 38, 98,
 114, 118, 136, 195, 289, 290,
 294, 319, 325, 327, 862, 863,
 996
 연화리(蓮花里)유격대 267
 영국노동당 410
 영변 1135-1140, 1143-1145, 1139,
 1140, 1143-1145, 1147, 1152,
 1174, 1183, 1193, 1195, 1224
 영안현 188, 191, 213, 296
 예조프의 대숙청 977
 오키나와 320
 완충기 1265
 왕명노선
 왕청 118, 176, 180, 181, 195,
 208, 247, 270, 284, 291
 용정촌(龍井村) 117-119, 171,
 173, 176, 182, 194-197
 우경적 오류 461, 462, 198, 638
 우크라이나 17, 40-51, 53, 73, 90
 우리식 사회주의 503, 507, 1002,
 1005, 1066, 1133, 1150, 1167,
 1262, 1279, 1280-1282, 1284,
 1340, 1344, 1348
 우스리주 9, 10
 우호협력 및 호상 원조협정(1961)
 543
 워싱턴회의(1921) 25, 94
 유럽의 이중혁명 409
 유로코뮤니즘 417, 1231
 유물변증법 226, 415, 1085, 1343
 유물사관 66, 226, 767, 1335
 유일사상-유일사상체계-유일중심
 체계 555, 565, 916, 917, 963,
 977, 978, 991, 1013, 1036,
 1082-1084, 1241, 1247, 1346
 유조호 233, 846
 유하현 삼원보(柳河縣 三源堡)
 168, 179
 유헌통치 1004, 1265, 1347
 육문중학(毓文中學) 277, 950
 움커(Junker) 62
 을미사변 130, 148, 150, 167

- 을사보호조약 130, 155, 168, 172
 의란구(依蘭區)유격대 267
 의열단 101, 102
 이라크 1199, 1222, 1355
 이란 985, 1105, 1119, 1190
 이르꾸즈프-이르꾸즈Rm파(派) 19,
 24, 25, 27, 28, 31~38, 96~98,
 109, 118, 185, 186, 193, 195
 이립삼노선(李立三路線) 851
 이성의 간계(List der Vernunft)
 64
 이스라엘 1190
 인도차이나반도 1127
 인민공사 857, 882, 883, 886,
 910, 935, 944, 1018, 1024,
 1039, 1044~1047, 1049, 1050,
 1281
 인민민주독재-인민민주독재론
 495, 777, 781, 791
 인민민주주의 284, 304, 305, 368,
 387, 399, 414, 421~423, 425,
 428, 429, 446, 481, 483, 490,
 495~497, 505, 526~528, 536,
 538, 540~542, 545, 550, 551,
 558, 562, 563, 619, 625, 667,
 693, 709, 721, 722~763, 768,
 770, 771, 774~778, 781,
 783~786, 788, 791, 793~799,
 801, 804, 806~812, 818,
 821~823, 837, 938, 983, 1080,
 1082, 1091, 1099, 1234, 1290,
 1295, 1317
 인민위원회의 6, 7, 44, 45, 190,
 341, 344, 347~349, 450, 451,
 617, 620, 625, 698, 710, 759,
 810
 인민유일전선 393
 인민의 적 379, 398, 415, 430,
 786, 932
 인민적 민주주의 490, 495, 722,
 756, 757
 인민전선 296, 298, 301, 371,
 372, 393, 431, 461, 486, 489,
 626, 730, 983
 인민정치위원회 329, 340~343,
 345, 355, 380~383, 386, 395,
 485, 488, 665, 679, 704, 705
 인민주권 811, 820
 인민지원군 543, 547, 567, 867,
 869, 870, 885, 953, 1289
 인민해방위원회 351
 일만의정서 236
 일반명령 제1호 309, 319, 321,
 322
 일본곡산회사 664
 일본군국주의 315, 380, 587, 588,
 609, 913, 1101, 1112~1117
 일시동인(一視同仁) 167
 일월회 105
 일진회 168
 일체적 연합 371, 384, 387
 임시정부 5, 12~15, 20, 22, 23,
 27, 28, 42, 43, 44, 92~94,
 100, 101, 159, 160, 177, 266,
 312, 329, 375~377, 448,
 456~477, 491~493, 519~521,
 525, 617~620, 624, 625, 850,
 923
 항일유격대대-왕청현(汪淸縣) 176,
 180, 247
자
 자력갱생 294, 538, 542, 883,
 890, 903, 904, 914, 916, 917,
 957, 960, 972, 983, 1006,
 1018, 1235, 1236, 1267, 1281,
 1284, 1296
 자립적 민족경제 507, 538, 1238,
 1241, 1262, 1263, 1349
 자유대대 34~36, 38, 186
 자유시장 1262, 1282
 자주노선 542, 687, 868, 879,
 911, 916, 917, 956, 957, 959,
 960, 978, 980, 983, 1086,
 1088, 1092, 1093, 1095~1097,
 1118, 1125, 1233, 1250
 자주적 통일론 1101
 자주적 평화통일 542, 548, 562,
 568, 577, 579, 596, 597, 606,
 958, 986, 990, 1075, 1076,
 1079, 1099, 1286
 자주통일 544, 575, 1298
 장고봉 927, 928
 장군락전 277, 278, 296
 장백현(長白縣) 295~299
 장정(長征) 359, 525, 852
 재건파 452, 454~456, 459, 490
 재만농민동맹 199
 재만한인조국광복회 295~299,
 301
 제중국 한인청년동맹 206, 207
 제중한국인 청년총동맹 199
 적군(赤軍) 13, 14, 16, 17, 27,
 34~36, 42, 46, 47, 50, 51,
 185, 186, 222
 적기단 193, 194
 적위대 42, 45, 46, 230, 231,
 246, 266, 270, 351, 381~383,
 959
 전 러시아정부 15
 전 사회의 혁명화 1244, 1246,
 1247
 전 인민적 소유형태 1043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회의 341
 전러공산당 31
 전로한족회 중앙총회(全露韓族會
 中央總會) 22, 23
 전쟁혁기훈장 290
 전후 인민경제복구 발전사업 953
 정미조약 156, 166
 정의단 176, 177
 정의부 187~189, 199, 200, 206,
 207, 211, 274
 장풍운동 1020, 1026, 1030~1032
 제1단계 북-미고위급회담 1142,
 1152
 제1선언 42
 제1차 핵위기 1152, 1174, 1327
 제2선언 43
 제2인터내셔널 5, 121, 225, 410,
 412, 1234
 제2차 핵위기 1327

- 제3선인 43, 610, 1127
제3세계 311, 425, 562, 564, 583, 584, 985, 986, 1071, 1078, 1087, 1098, 1110, 1111, 1117, 1119~1122, 1124, 1126, 1128, 1167, 1190, 1226, 1291~1293, 1301, 1321, 1323
제3의 정치형태 735
제3인터내셔널 25, 412
제4선인 46
제네바합의 1155~1157, 1343
제한주권론 1232, 1234
조공 북조선 분국위원회 365
조국광복회 278, 295~301, 303~305, 398, 626, 927~929
조국통일 3대현장 1007, 1171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392, 611, 817
조국해방전쟁 952, 1310, 1330
조·만(朝滿)교환론 152
조선공산당 4, 92, 98, 99, 108, 109, 111, 113~116, 118~120, 122~124, 193~201, 206, 210~212, 214, 216, 217, 222, 266, 277, 281, 341, 342, 359~366, 368, 369, 382, 383, 390, 392, 397, 398, 406, 419, 450, 452~455, 458, 459, 463~469, 472~475, 485, 486, 489, 490, 495, 515, 517, 615, 866, 923, 925, 926, 950, 953, 960, 967, 982, 1316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118, 119, 124, 193~196, 198, 201, 281, 926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360, 368, 469, 472, 475, 485, 489, 495, 515, 517, 615, 923
조선공산당 재건설만주부 198, 210, 211, 222
조선공산당 재건준비위원회 122, 452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365, 463, 464
조선국민회 961
조선근대혁명운동사 302, 304, 352, 398, 475, 626
조선노동공제회 109, 110
조선노동당 제3차대회 303, 368, 464, 566, 644, 715, 975
조선노동당의 군대 559
조선노동연맹회 110, 111
조선노동총동맹 111, 114
조선독립동맹 280, 358, 359, 389, 458, 865
조선민주당 381~383, 386, 388, 389, 619, 605, 759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347, 495, 571, 585, 631, 755, 885, 887, 914, 917, 971, 979, 981, 1014, 1090, 1127, 1177, 1212, 1216, 1273, 1290, 133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비망록 1212
조선사회당 5
조선신민당 359, 389, 390, 865
조선여성동우회 112
조선연장주의 212
조선인 여결학우회 269
조선인민보 451
조선인민혁명군 269, 276~278, 280, 282~286, 288, 294, 295, 352, 928, 929, 960, 961, 979, 984
조선인민회 19, 657
조선인사회당 24
조선중앙연감 303, 464, 485, 695, 1085, 1123, 1128
조선청년연합회 106, 107, 111, 112, 358
조선청년총동맹 111~114
조선통감부 간도파출소 171
조선통사 37, 273, 276, 284, 296, 301~304, 350, 364, 459, 462, 467, 468, 497, 518, 620, 623~626, 629, 634, 641, 642, 645, 652, 666, 669, 675, 692, 704, 710, 715, 716, 758, 759, 812, 827
조선혁명군·길강지휘부·사령부 190, 192, 193, 215, 222, 246, 269~275, 294, 295, 928
조선혁명당 선언 190, 225
조선혁명선언 101, 102
종파분자 37, 38, 369, 462, 468, 469, 473, 542, 820, 825, 869, 871, 874, 875, 877, 954, 959, 968, 974~977, 982, 1095
좌경 기회주의 918, 919, 1094
좌경적 오류 363, 460, 461, 636, 637
좌익연합 431
주보준전 290, 293
주체사상 271, 276, 294, 295, 305, 415, 505, 510, 566, 624, 867, 869, 870, 916, 917, 919, 957~960, 963, 965, 969, 971, 972, 978, 979, 983, 985, 986, 988, 991, 993, 1000, 1003, 1016, 1017, 1019, 1036, 1055, 1058, 1060, 1061, 1065, 1073, 1082, 1083, 1084~1086, 1088, 1092, 1133, 1136, 1230, 1233, 1235, 1246, 1247, 1249~1251, 1266, 1274, 1296, 1310, 1334, 1335, 1344~1348
주체형 공산주의자 1150
준의(遵義) 852
중·한민족연합가 282
중경(重慶) 143, 312, 448, 865
중공 만성위연당부
중공만주성위 217, 226, 246, 247, 252, 262, 264, 265, 284
중공인민지원군 953
중광단 176
중국공산당·만주성집행위원회·봉천성위원회 221, 227, 228
중국국민당 190, 200, 214, 227, 236, 245, 248, 786
중국동만특별위원회 278, 280, 296
중국의 특수성 781, 805

중소분쟁 832, 848, 868, 890,
891, 892, 896, 897, 909, 930,
957, 968, 972, 973, 1033,
1083, 1092, 1093, 1096, 1124,
1230, 1233, 1234, 1235, 1241,
1250, 1335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 840
중앙라다(Rada) 44, 46, 47
중앙인민위원회 349, 450, 1078
중앙인민의원 450
중요산업 국유화 법령 626,
663-667, 675, 688, 693, 694
중인(中印) 국경분쟁 858, 888,
898, 900
중일전쟁 240, 951
중화인민공화국 127, 495, 761,
774, 776, 780, 785, 788-793,
795, 803, 809, 916, 836, 837,
842, 848, 914, 836, 995, 1115
중산경쟁운동 653
지도소조 1059
지배주의 1087, 1123-1127, 1129,
1285
진보적 민주주의 367, 393, 405,
414, 429, 449, 481, 483, 485,
486, 490, 491, 618, 619, 969
집단농장 508, 644, 645, 660,
716, 814, 1027, 1348
집안현(輯安縣) 167, 187

차
차터스트운동 59
창동학교 171
창의회(彰義會) 18
천리마운동 573, 904, 987, 990,
1006, 1027-1039, 1051, 1056,
1267, 1282, 1302
청구신보(靑邱新報)
청산리대첩 179
청우당 179, 390, 821, 822
추수폭동 165, 203, 850
치파 정부 25, 34
치스차코프 포고문 324, 325

카

카이로선언 310, 312
캄보디아 1126, 1231, 1323, 1324
코메콘 1125
코민테른 12, 24, 25, 27, 29-39,
55, 92, 93, 96-100, 113-116,
120-124, 162-165, 190, 193,
195, 197, 198, 203-206, 210,
211, 221, 223, 225, 226, 243,
244, 259, 263, 264, 266, 269,
277, 281, 283, 286, 295, 296,
305, 316, 323, 352, 355, 363,
365, 371, 372, 374, 393, 416,
419, 428, 435, 447, 454, 455,
462, 463, 486, 490, 532, 626,
677, 734, 737, 769, 771, 775,
805, 846-852, 891, 928, 948,
953, 960, 983, 1095, 1233
콤그룹 452

타

타구대 266
타르사들미 켄물레(Tarsadlmi
Szemle) 745
타호대 787
테프트-가즈라(Taft-桂) 비밀협약
17
테러지원국 1195, 1202, 1223,
1225
토지개혁 378, 398, 424, 476,
477, 492, 494, 516, 518, 519,
522, 525, 528, 540, 588,
620-651, 655, 663, 669, 729,
732, 733, 746, 751, 752, 757,
785, 786, 791, 809, 1024,
1025, 1332, 1341
토지개혁법령 492, 518, 626, 628,
629, 631, 638, 639, 655
토지에 관한 포고 631
통일전선 88, 189, 201, 204, 205,
208, 227, 243, 257-262, 265,
268, 279, 284, 303, 361,
367-371, 374, 381, 382, 386,
391-398, 420, 429-432, 454,

456, 461, 462, 486-490, 494,
508, 515, 541, 551, 566, 581,
587, 629, 645, 712, 715, 717,
730, 743, 745, 754, 757, 759,
768, 771, 776, 784, 785, 788,
790, 793, 802, 809, 811, 812,
816-822, 846, 855, 924, 928,
860, 983, 1102, 1122, 1143,
1252, 1254, 1264, 1284, 1297,
1316, 1338
통일혁명당 504, 558, 1079
통화현(通化縣) 167, 171
트드 1088
트루만 독트린 734
특수어의 157, 158, 163
티토주의 399, 737, 738
팀 스피리트 훈련 1155, 1156

파

파키스탄 965, 985, 1105, 1128,
1174, 1190, 1293
평호열도 143, 313
페리보고서 1153, 1154
평균주의적 사회주의 사상 938
평남인민정치위원회 342, 343,
355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 332,
339
평안남도 치안유지회 339
평안양조회사 664
평양지 705
평화공존 705, 553, 584, 594,
804, 831, 854, 857, 859, 861,
881, 889, 907, 1071, 1087,
1092, 1133, 1234, 1259, 1293,
1295, 1306, 1314
폐업세 702, 703
포수단(砲手團) 168
포용정책 1158-1160, 1171,
1259-1262, 1270, 1271
포즈난 폭동 834
포즈담선언 318, 319
포츠머드 강화조약(Portsmouth
Treaty) 156

폭도대토벌전 168
 풍뢰회 104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54, 304,
 545, 677, 777, 832, 837, 838,
 871, 878, 882, 891, 893, 903,
 1087, 1089, 1091, 1102, 1103,
 1109, 1110, 1119, 1126,
 1230~1233, 1235~1238, 1273,
 1295, 1296, 1335, 1336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49, 418,
 434, 436~438, 441, 442, 444,
 445, 498, 731

하

하바로프스크회의 291, 292
 하바루스끄 24, 118, 193, 195,
 319, 352
 하일빈 18, 33, 145, 146, 187,
 191, 195, 199, 211, 227, 228,
 250, 253, 265, 274, 996, 998
 한교(韓僑) 32, 191
 한국 민족민주전선(민민전) 504,
 505
 한국 병합 158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 1079,
 1080
 한-미 공조체제 1350
 한민학교(韓民學校) 172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1157, 1174, 1184, 1287
 한인사회당 24, 27, 193
 한인신보(韓人新報) 22
 한일기본조약 588, 1112, 1115
 한일의정서 17, 154, 236
 한일합방 조약 17
 한일회담 538, 550, 586~589,
 593, 1112, 1116
 한족노동당 194
 한족자치연합회 192
 한족총연합회 191, 192, 208, 209,
 211~214, 223
 한족회(韓族會) 19, 21, 177, 179
 한흥동(韓興洞) 172
 합판회사 678, 685~687, 842

항일비(抗日匪) 257
 항일연군 279, 281, 286,
 289~293, 297~299, 358, 474,
 886, 951
 해만로 256
 해방일보 451, 489
 핵시설 해체 1224
 핵안전조치협정 1137, 1140
 핵전쟁 불사론 860 906
 핵전쟁방지 공동선언문 608
 핵통제공동위원회 1155
 핵프로그램 신고서 1195
 햇볕정책 1146, 1154, 1158~1161,
 1163, 1164, 1166, 1169, 1171,
 1172, 1181, 1191, 1256,
 1258~1262, 1264, 1270, 1271,
 1274, 1287, 1296, 1328, 1339,
 1343, 1344, 1348, 1349, 1351,
 1355
 향약사(鄉約社) 168
 해켈 63, 64, 409, 1343
 혁명적 민주기지 478, 479, 483,
 484, 524, 526, 528, 534, 537,
 580, 626, 959, 1097, 1240,
 1291
 혁명전통 369, 474, 955, 959,
 970, 971, 1082, 1240, 1247
 현연합사(縣聯合社) 1046
 협동적 소유 666, 1043, 1048~49,
 1245
 형평사 111
 호로군 253, 256
 호조(互助)-협동화(協同化)
 홍(紅)과 전(專)
 홍기(紅旗) 553, 804, 888, 1093,
 1117
 홍창회 251, 254, 259, 260, 262
 화룡현(和龍縣) 181, 183
 화북 조선청년연합회 358
 화염사 201, 202
 화요회(火曜會) 32, 38, 99, 108,
 109, 111~119, 193, 195, 196,
 198~200, 452
 화전민 298, 642

화폐교환 706, 707
 환인현(桓仁縣) 168
 훈춘 참극 179
 훈춘현(琿春縣)-훈춘유격대 247
 휴전협정 17, 373, 588, 716, 1074,
 1133, 1194, 1269
 흑도회(黑濤會) 104
 흑로군정서
 흑우회 104
 흑하(黑河)사변 34, 38, 54
 흡수통일 258, 1149, 1328, 1339
 CVID 1204, 1211
 IAEA 1137, 1139~1145, 1147, 1148,
 1151~1157, 1174, 1177, 1178,
 1180, 1183, 1184, 1188, 1195,
 1202, 1214, 1216, 1218, 1269
 IRT2000 1135, 1136, 1138, 1139
 KAL 858기 1080
 ML과 119, 193, 198, 199,
 206~209, 211~213, 217, 225
 NPT 1109, 1137, 1140~1142, 1145,
 1147, 1148, 1152, 1155, 1156,
 1174, 1178, 1184, 1188, 1190,
 1196, 1214, 1216, 1218, 1221

양호민(民道-梁好民)

(1919. 9. 24 ~ 2010. 3. 17)

■ 약력

평안남도 평양시 출생
日本 中央大學 專門部 法學科 졸업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졸업
대구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중앙대학교 대학원 교수
朝鮮日報 논설위원
思想界지 주간
KBS 이사
韓國論壇 초대 대표이사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석좌교수
방송위원회 위원
아산재단 이사
한림대학교 명예정치학 박사
서울 言論클럽賞, 世宗文化賞, 湖巖賞(언론부문) 외 다수 수상

■ 주요 저서

『共產主義의 理論과 歷史』(1954)
『現代政治의 考察』(1962)
『맑스-레닌주의 비판』(1963)
『北韓의 이데올로기와 政治』Ⅰ(1967)
『北韓의 이데올로기와 政治』Ⅱ(1972)
『社會民主主義』(편저, 1985)
『北韓社會의 再認識 1』(공저, 1987)
『南과 北 어떻게 하나가 되나』(공저, 1992)
『한반도 분단의 재인식(1945~1950)』(공저, 1993)
『한국인의 대미인식』(공저, 1994)
『격랑에 휩쓸려간 나날들』(1995)
『現代共產主義의 概況』(1995)
『한국民族主義와 民主主義의 時論』(1995)
『남북한체제의 強固化와 對決』(공저, 1996)
『平和統一을 위한 南北對決』(공저, 1996)
『민족통합의 역사와 과제』(2000)
『38선에서 휴전선으로』(2004)
其他: 많은 번역서와 학술논문이 있음

한반도의 격동 1세기 반 (下)

권력, 이데올로기, 민족, 국제관계의 교착

인 쇄 : 2010년 4월 20일

발 행 : 2010년 4월 30일

지은이 : 양 호 민

발행인 : 이 영 선

발행처 : 한림대학교 출판부

200-702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한림대학길 39

(출판등록 제48호 : 1983. 3. 10)

전 화 : 033-248-2475~6

팩 스 : 033-248-2879

전자우편 : press@hallym.ac.kr

편집 · 제작 : 정은출판 (T.02-2272-9280)

정가 35,000원

ISBN 978-89-6402-010-4 94910

978-89-6402-008-1 (전 2권)

이 연구는 한림대학교(翰林科學院叢書 123호)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9 788964 020104

ISBN 978-89-6402-010-4
ISBN 978-89-6402-008-1 (전2권)

정가 35,000원